

---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모음집

---

'21. 1.

관계부처 합동







## 【 목 차 】 (발표일순)

정책	발표일	쪽번호
1.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18 (제3차 일자리위)	1
2. 사회통합적 평창동계올림픽 유산(Legacy) 창출 방안	'17.12.22	45
3.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18.2.8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55
4.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18.5.16 (제6차 일자리위)	85
5.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18.7.3 (국무회의)	109
6.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2단계 혁신성장전략	'18.7.5	141
7.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18.7.26	167
8.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 추진방안	'18.7.26	183
9.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18.9.6	209
10.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	'18.11.9 ( '18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239
11.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19.2.19	279
12.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방안	'19.3.21	291
13. 사회적농업 추진전략	'19.3.25	315
14.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19.4.26	329
15.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혁신적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19.9.2 (제12차 일자리위)	343
16. 지역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방안	'19.11.5 (국무회의)	369
17.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19.12.13	403
18.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20.1.15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435
19.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20.3.31 (제18차 협동조합 정책심의회)	461
20.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20.7.22 (제16차 일자리위)	495
21.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방안	'20.8.13 (제13차 비상경제중대본)	519
22.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20.10.1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551
23.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2.28 (사회관계장관회의)	585







---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2017. 10.

일자리위원회 · 관계부처 합동







---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2017. 10.

일자리위원회 · 관계부처 합동



# 순 서

I . 추진배경 .....	5
II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현주소 .....	9
III . 목표 및 발전전략 .....	16
IV .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 .....	18
1. 통합 지원체계 .....	18
2. 금융접근성 제고 .....	19
3. 판로확대 지원 .....	22
4. 인력양성 체계 강화 .....	23
V . 사회적경제 주요 분야별 진출 촉진 .....	26
1. 사회서비스 분야 .....	27
2. 주거환경 분야 .....	30
3. 문화예술 분야 .....	32
4. 프랜차이즈 분야 .....	34
5. 소셜벤처 분야 .....	35
6. 지역기반 연계 분야 .....	37
VI . 기대효과 .....	40



## I. 추진배경

- ◇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
- ◇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경제가 고용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공공부문과 시장경제 부문을 보완

### 1 해외 동향

-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 · 고용불안 ·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
    - UN은 새로운 국제 공동목표로서 포용성 · 보편성 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년)’를 수립\*
    - EU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저성장 · 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해결책으로 평가\*
- \* '09년 EU는 사회적경제 개념인식 · 법적조치 권고 등 48개 항목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관련 정책 수립 · 집행을 강화

⇒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실업 · 빈곤 등 경제 · 사회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어 포용적 성장 실현 가능

- 주요 선진국은 오래된 시민사회 전통 및 사회적경제 정책을 토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
    -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제정\* 및 직 · 간접적인 지원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보장
- \* 사회적경제법 제정 국가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퀘벡주 등
- 특히, 사회투자기금 · 사회성과채권\* · 사회적금융기관 등 사회적금융 육성을 통한 금융접근성 제고에 주력하여 자생력 확충
- \* 민간투자로 공공사업 시행 후, 사회적 성과 달성시 약정에 따라 투자금 및 수익을 상환(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실시중)



## 2 국내 동향

- 우리나라는 '00년 이후 부처별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

\* 사회적기업('07년), 마을기업('11년), 자활기업·협동조합('12년) 등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시범사업 실시, 사회적 인식 확산 등 양적성장 토대를 마련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사례 창출

### ※ 주요 사회적경제기업별 성공사례

- (베어베터 사회적기업)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고용('16년 기준 전체 근로자 225명 중 200명이 발달장애인)하여 인쇄물·커피 등을 제조·판매
- (인천서점 협동조합) 인천지역 동네서점 60여개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공동브랜드 이용·공동홍보·공동구매 등으로 경쟁력 제고

- 정부주도하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양적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EU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미흡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은 1.4%\*로 EU 6.5%의 22% 수준에 불과\*\*('15년 기준)

\* 「사회적경제기본법」상 총 고용인원(25,936천명)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수(368,268명, 복수지위에 따른 중복포함)

\*\* EU는 사회적경제 관련조직에 협동조합·협회·공제회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사회적경제기본법상 조직)보다 범위가 포괄적

-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의 협력성장·포용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질적 성장을 준비할 단계

- 지원정책간 연계 강화, 금융·인력 등 제도적 여건 조성, 장기 비전 제시 등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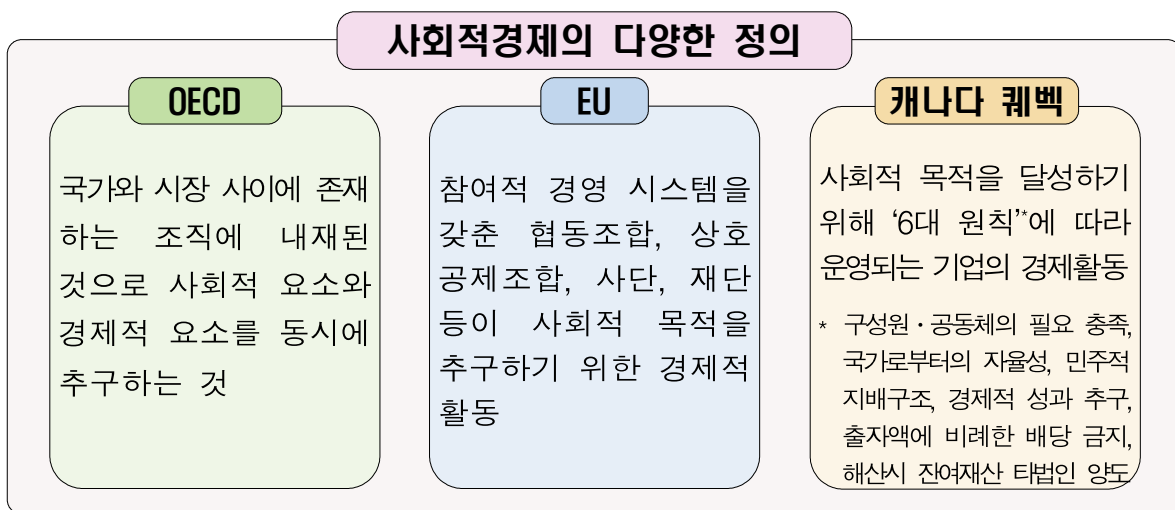


### 3 사회적경제의 개념

① (정의)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 국가·시대별 정의는 다양하나,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시장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 유사 개념 : 제3부문, 비영리섹터, 자발적 영역, 연대경제, 시민경제 등



② (특징)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시장경제와 유사하나 자율·민주, 연대·협력 등의 활동목표에서 차이 존재

- (자율·민주) 효율경영보다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1인1표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원칙으로 조직운영
- (사회통합) 상업적 목표보다는 구성원간 이익공유·취약계층 일자리창출·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
- (연대·협력) 정부 또는 시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계층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 (경쟁·보완) 시장조직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



## 4

## 사회적경제의 순기능

## □ 고용창출 · 고용안정 · 유휴인력 활용 등에 기여

- (고용창출)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으며,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예)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 : 전산업 12.9명, 협동조합 38.2명

\*\* 택시협동조합의 근로일수 대비 수입(월평균)이 일반 택시회사의 1.7배

- (고용안정)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사관계 및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고, 높은 기업생존율\*을 유지

\* 사회적기업(인증 후 3년) 91.8%, 마을기업(정부지원 종료 후) 87%,  
사회적협동조합(등록 후 3년) 99.2% vs 일반기업(창업 후 3년) 38.2%

- 구성원간 인적결합을 중시함에 따라 높은 정규직 비중(협동조합 73.2%, 사회적기업 66.1%) 및 낮은 이직률 특성(협동조합 4.7%)을 보유

- (유휴인력 활용) 경력단절여성 · 은퇴자 등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소득 및 부가가치 창출

## □ 소득양극화 해소 · 사회안전망 강화 · 공동체 복원 등에 기여

- (소득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여 계층간 빈부격차를 완화

\* (예) 경북 영주의 집수리 및 목 생산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노인 중심으로 설립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빈곤 해소에 기여

-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예)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문화소외 지역주민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내 영화관을 설립

- 복지공급주체 다양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도 가능

- (공동체 복원)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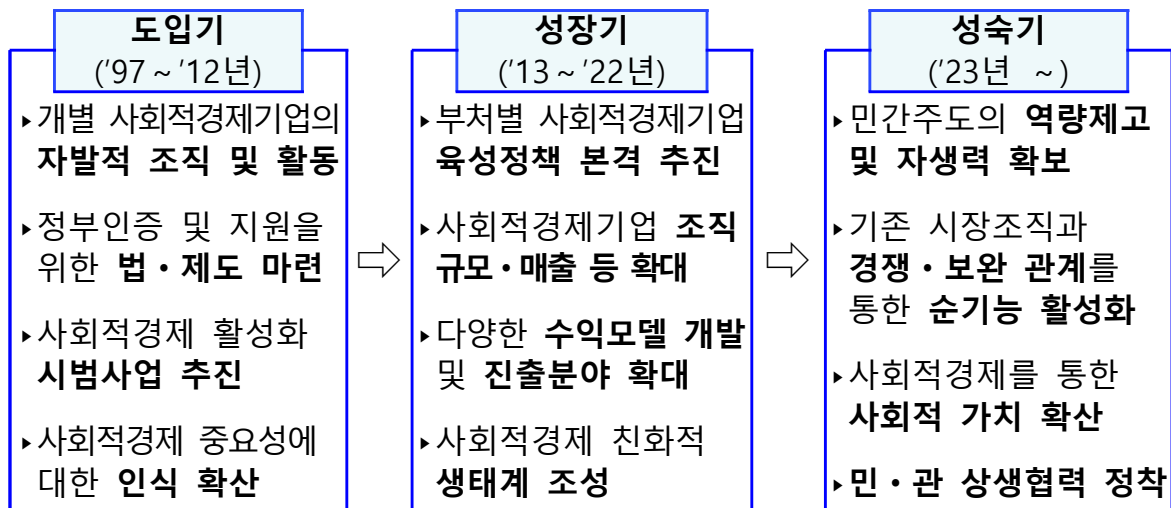


## Ⅱ.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현주소

### 1 사회적경제 현황 진단

- 사회적 인식·제도적 기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 단계에 진입

#### <사회적경제 발전단계>



-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중요성 인식 이후 본격적인 육성정책을 수립·집행 중
-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마련, 시범사업 추진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기반을 구축
  - 지자체·민간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및 투자를 촉진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업수 및 고용·매출규모 등이 양적으로 성장 중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례가 창출
  - 향후 수익모델 개발 및 진출분야 제약해소 등을 통해 다양한 경제주체의 진입확대 및 사회적경제 역량제고가 필요한 상황



## 2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 ① (범위) 「사회적경제기본법」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 사회적경제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8개 개별협동조합을 모두 포함

「사회적경제기본법」상 사회적경제기업		
개별 협동조합	일반 사회적경제기업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기타
농협, 수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중기협, 산림조합, 업연초협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 회사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 센터 등

- 자립지향적이며 상대적으로 비영리성이 강한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14,948개 운영중이며, 총 91,100명을 고용('16년 기준)

조직유형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합계
조직 수(개)	1,713	10,640	1,446	1,149	14,948
고용 인원(명)	37,509	29,861	16,101	7,629	91,100

- ②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영업활동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 일자리 등 제공

\* 배분가능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등의 요건 충족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 (현황) '16년 기준 총 1,713개소(예비사회적기업 포함시 총 2,821개소) 운영 · 총 37,509명 고용 중이나, 최근 다소 성장세 둔화\*

\* 기업수 증가율(%) : ('13) 30.7 → ('14) 23.6 → ('15) 20.4 → ('16) 13.7

- (유형)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별로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이 6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목적 비중(%) : 일자리제공형 69.7, 사회서비스제공형 6.3, 혼합형 10 등



③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 조합원의 고용안정 등 권익향상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 부여(「협동조합기본법」 제6조)

- (현황) '16년 기준 총 10,640개소 운영·총 29,861명(추정) 고용중이며, 성장세는 일반협동조합 둔화·사회적협동조합 지속\*

\* 일반 연간 설립 수 : ('13) 3,042 → ('14) 2,691 → ('15) 2,286 → ('16) 1,961

사회적 연간 설립수 : ('13) 103 → ('14) 122 → ('15) 180 → ('16) 203

- (유형) 일반협동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문제 해결 목적형이 전체의 40%

④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지역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 및 지역 환원\*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의 범위는 읍·면(농촌지역) 또는 구(도시지역)이며, 사업계획서상에 지역사회공헌활동 포함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현황) '16년 기준 총 1,446개소 운영·총 16,101명 고용 중이며, 기업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기업당 평균고용\*\*은 증가 추세

\* 전년대비 증가율(%) : ('13) 42.2 → ('14) 11.6 → ('15) 7.4 → ('16) 7.7

\*\* 기업당 평균고용(명) : ('13) 9 → ('14) 8 → ('15) 8.6 → ('16) 11

- (유형) 일반식품·전통식품 등 지역농산물 가공·판매 업종이 전체의 58.4%(일반식품 42.8%, 전통식품 15.6%)를 차지

⑤ (자활기업)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자활근로 사업 추진 → 취약계층의 탈수급 유도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수급자가 1/3 이상시 자활기업 인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 (현황) '16년 기준 총 1,149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총 7,629명이 자활기업 사업에 참여

- (유형) 전국자활협회 5대 표준화사업(청소소독, 집수리, 간병, 폐자원·음식물 재활용) 중 청소소독이 20.6%로 최고 비중\*

\* 업종별 비중(%) : 청소소독 20.6, 집수리 13.2, 간병돌봄 13.1 등



□ 개별 부처별·사회적경제 유형별로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법 제정·기본계획 수립 등 직·간접 지원정책 마련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경영·재정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시행\*\*

\* 협동조합기본법(기재부), 사회적기업육성법(고용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복지부) 등

\*\* 협동조합 기본계획(기재부),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고용부) 등

#### < 사회적경제 유형별 주요 지원정책 >

구분	직접 지원	간접 지원	
		공통	개별
사회적기업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 개발비	판로지원, 교육 및 홍보, 컨설팅, 창업 및 운영 지원, 정책자금 융자 등	세제(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감면, 기부금 인정 등) 모태펀드 운영 등
협동조합*	-		-
마을기업	사업비		-
자활기업	인건비, 사업비, 창업자금, 컨설팅비용		사업 및 시설자금 융자

\* 자주·자립·자치 등 협동조합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간접지원 중심으로 운영

○ 인건비 지원 등 직접지원과 세제혜택(법인세·소득세 감면 등)\*·공공조달시 우선구매 유도·정책자금 지원 등 간접지원 병행

\* (예)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간 50% 감면

○ 광역·지역별로 중간 지원기관을 설립·운영하여 창업지원·홍보·인력양성·사업모델 발굴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

□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관련 법 제정 추진 중\*

\* 3법 국회계류중(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법)

□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일자리 100일 플랜 13개 과제에 포함)



-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금융·조달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제고 기반도 취약
- ◇ 사회적경제 컨트롤타워 없이 소관부처별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집행에 애로\*
  - \* 부처별·지자체별 전달체계 구축에 따른 중복·비효율 문제 등
- ◇ 설립단계 및 단기 재정지원 정책이 대부분이며 성장기·성숙기 및 실패시 재기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 미비

① (사회적 여건) 사회적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지원 및 사회적 참여가 미흡

① (정책지원) 초기 단계에서 인건비 보조 등 양적성장 중심의 정책 추진 결과, 기술혁신·역량강화 등 경쟁력 향상은 미흡

② (사회적 참여)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인재 유입이 저조하고, 물품·용역에 대한 사회의 선입견으로 판로확대에도 애로

② (지원체계) 부처별로 지원제도가 분산\*되어 있음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비용 유발, 정책연계성 저조, 민·관 협업 부족 등 초래

\*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도입단계에서 부처·지자체가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한 결과 주요 지원사업이 법령별·지원기관별로 운영 중

① 지원정책이 유사하지만 시행기관마다 별도로 요구하는 행정절차로 인해 시간·비용이 소요\*되고, 지원규모\*\*도 상이

\* (예) 사회적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경영공시 등을 소관부처별로 다른 양식으로 이중으로 이행

\*\* (예) 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 최저임금액 및 사회보험료의 30~70%  
(자활기업) 인건비 및 기타수당의 100%(최대 2년, 2~5년은 50%)

② 재정·세제지원 남용을 막기 위한 엄격한 인증기준이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의 장애요인\*이 되어 사회적경제 활동을 위축

\*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지원과 연계되므로 다소 엄격한 인증기준 유지



③ 정책 칸막이 해소·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등 정책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중앙-지자체간 연계도 미흡

- 중앙-지자체·중앙부처간 업무조정, 개별 법령에 따른 중간지원 기관간 연계·협력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④ 민간부문\*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공공-민간간 협업체계는 미비

\* SK는 혁신적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해 교육개발·창업·연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가 센터’를 운영중

③ (금융접근성) 기업별 성장단계에서 금융조달 수요는 높으나, 금융 시장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미흡한 상황

\* 사회적기업 자금조달('15년 고용부): 정부보조금(51.4%), 특수관계인 차입(43.6%)

협동조합(제2차 실태조사): 출자금(70.8%)·부채(29.2%), 금융기관 대출경험(9.2%)

①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사회투자기금·사회성과연계채권·사회적금융 기관 등 성장기 단계에 필요한 사회적금융 기반이 취약

\* (영국) Big Society Capital(6억 파운드), (프랑스) Caisse des Dépôts(5억 유로),

(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10억 달러), (이탈리아) Banca Etica(수신 9.4억·여신 8.0억 유로)

② 대부(미소금융·중소기업정책자금), 신용보증(지역신보·신보), 투자(모태펀드) 등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나 실효성 저조\*

\* 보증한도 미흡, 사회적경제 특성을 배려한 별도의 대출·보증기준 미비 등

####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현황>

구분	지원현황
소액금융사업(미소금융)	총 4,000억 중 사회적기업 대출은 0.24%수준인 9.5억원('16년 기준)
중소기업 정책자금	4.5조원 중 사회적기업 대출은 0.18% 수준인 82억원('16년 기준)
자활기금	조성액 349억 중 62억원 지원('16년 기준)
신용보증한도	신보(협동조합 1억원, 사회적기업 1억원), 지신보(협동조합 5천만원, 사회적기업 4억원)
모태펀드	182억원 규모로 펀드운용 중



④ (판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선구매의 실효성이 저조\* 하며, 민간의 구매촉진을 위한 판로개척에 애로

\* 우선구매 대상 기업별 조달현황('16년) : 중소기업 73.7%, 여성기업 4.2%  
(물품·용역)·3%(공사), 사회적기업 1.8%

①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기준 없이 공공조달 낙찰이 최저가격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 미흡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해외사례

- (EU) 양질의 일자리·사회적 책임 이행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고가치 낙찰' 원칙의 공공조달제도 도입(공공조달 지침, '14년)
- (영국) 사회적 가치 개념을 정의하고, 공공조달시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제도 도입(공공서비스법, '12년)

② 국가·지자체 등은 중소기업·여성기업 등의 제품을 일정 수준 이상 구매해야 하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는 강제성 결여\*

\* 중소기업(50%), (중증)장애기업(1%), 여성기업(물품·용역 3%, 공사 5%) 등은 의무사항, 사회적경제기업은 단순 권고사항

③ 광고비 부족·취약한 영업망·판로개척을 위한 정책지원 부족\* 등으로 소비자 접근성 및 민간부문 수요처 확보 제한

\*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 중이나 지원대상 및 홍보효과는 제한적

⑤ (인력)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인프라가 부족

① 소관부처가 교육과정을 개별 추진함에 따라 체계적·유기적인 인재육성 시스템 및 프로그램은 미비

- 대상별·분야별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하며, 정부지원 교육과정이 창업·운영 교육에 편중\*

\* 미국·영국·프랑스 등은 대학내 사회적기업가 육성과정·대학컨소시엄 지원 창업대회 등 고등교육 단계에서 고급인력 양성체계를 구축·운영

② 기술혁신을 위한 R&D 자체 역량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이 R&D 지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미흡



### Ⅲ. 목표 및 발전전략

◇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Two-Track 발전전략 마련

- ①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
- ② (진출분야 확대) 사회적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 집중 육성

####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협력성장 및 포용성장 견인

##### 목표

사회적경제의  
역량 제고

일자리 창출 등  
성장동력 확보

공동체 복원 등  
사회통합

##### 추진 전략

성장 인프라 구축

진출분야 확대

##### 정책 과제

통합 지원체계 및  
정책방향 확립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확대 지원

인력양성 체계 강화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주거환경 분야 진출

문화예술 분야 진출

프랜차이즈 분야 진출

소셜벤처 분야 진출

지역기반 연계 분야 진출

##### 추진 체계

민관협업 및 지역주도의 추진체계 구축  
공공부문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기초

### ①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확립

#### ① (민간·지자체 역할강화 ← 중앙정부 주도)

- 민관합동 거버넌스 운영 등 민관협치를 통한 정책개발 추진, 현장 반응성이 높은 지자체의 정책집행 역할을 대폭 강화

#### ② (정책대상 확대 ← 농·수·신협 등 배제)

- 농·수·신협 등 정책대상 확대와 사회적가치 강화 여건 조성
- 인증기준 완화 및 등록제 전환 등 진입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③ (맞춤형·간접 지원 ← 창업·홍보·직접 지원 위주)

- 조직의 성장 및 실패시 재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혁신
-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생태계구축을 위한 간접지원을 확충하고, 직접지원(인건비 등)은 사회적가치 실현이 큰 조직에 엄격 적용

#### ④ (컨트롤타워 구축 ← 종합조정 부재)

-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개별 추진하던 정책 종합조정

### ②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대응

#### ① 정부 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 중심으로 사회적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10月)

#### ② 금융(금융위)·인력양성(고용부)·지자체 역할제고(행안부) 등 분야별 중장기 개선과제\* 심층검토 ⇒ 담당 부처별 발표(12月)

\* (금융) 공공·민간 부문의 투자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 금융 생태계 구축 (인력) 부처별 교육 연계 및 실무·이론 통합 등 종합적인 인력양성 체계 정비 (지자체) 중앙정부와 역할분담 및 지자체 중심 수요개발·집행능력 제고 방안

#### ③ 사회적경제 3법\* 입법 ⇒ '17년 하반기

\*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판로지원법

#### ④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5년) 수립 ⇒ '18년 상반기(기재부)



## IV.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

### 1 통합 지원체제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추진하고, 지원정책 방향 확립,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 등 지원체제 재정비

####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정

- ① (사회적경제 기본법)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

\*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 및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고용의 질 등 실태조사 등

- ②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사회적 가치를 국가 운영의 핵심원리로 반영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책무 규정\***

\*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계획 수립 및 사회적가치 성과평가, 사회적가치 평가 지표 개발, 사회적감사 시스템 구축 등

- ③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 2 사회적경제 정책 컨트롤타워 수립

- ① (전담기구)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전) 및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기본법 제정 후)

\*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입법 총괄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 등

\*\*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을 총괄 조정

- ② (기능)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부처간 **정책수립·조정**,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자체간 역할 조율** 등



-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완화, 부처별 지원정책의 중복 조정 등을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중앙·지자체간 협력 증진 및 지자체 담당자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통해 정책 효과성 향상
- 부처별·법령별로 설치된 사회적경제기업 중간 지원기관의 유사 기능(교육·판로지원 등)의 연계 및 협력 방안\* 마련

\* ‘(가칭)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 시·도 단위 통합지원센터 등 활용

## 2 금융접근성 제고

◇ 공적 금융제도 개선, 민간 투자환경 개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기 단계에 필요한 사회적 금융 확대

### 1 공적 금융제도 개선

- ①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여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 등에서 지원(금융위, 중기부)

- 신보·지신보의 보증지원 한도 확대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신보	(현행) 1억원 → (개선) 3억원	
지신보	(현행) 5천만원 → (개선) 3억원	(현행) 4억원 → 유지

- 신보·지신보의 보증지원 적용대상 확대(협동조합·사회적기업 → 마을기업·자활기업 등 포함)

- ② 정책자금 內 총액 대출목표 신설\*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공급 확대(중기부)

\* ('17년 및 '18년 총액 대출목표)

중소기업 정책자금 : ('16) 106억원(실적) → ('17) 200억원 → ('18) 35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 ('16) 15억원(실적) → ('17) 30억원 → ('18) 50억원



### ③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평가모형 마련\*(금융위, 중기부)

\* 고용안정·지역사회 기여·사회적 환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감안하고 ‘사회적가치지표’(17년 고용부) 등을 참고

- 중소기업 정책자금 內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신설, 보증(신보·지신보) 기준 개선 등 공적자금 지원 대상 선정에 적용

## ② 투자환경 개선

### ①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 확대 운용(고용부, 금융위)

\* 정부예산(고용부 모태펀드) 또는 성장사다리펀드 출자(금융위 사회투자펀드)와 민간자금이 결합된 펀드로서 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투자

- (규모\*) 모태펀드 추가조성[100억원(18년 예산) + α(민간자금)] 및 사회투자펀드 신규조성 300억원(17년 중, 성장사다리펀드 출자 100억원)

\* 자금운용 추이에 따라 조성규모 확대 추진(사회투자펀드는 향후 5년간 최대 1천억원 규모, 고용부 모태펀드의 경우 '19년 이후 예산 추가반영 검토)

- (주목적 투자대상 확대) 주목적 투자대상을 사회적경제기업 등(現 : 사회적기업 등)으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하거나 영리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도 투자

\* (예)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총출자의 50% 이상 투자

- (운용방식) 장기투자 유도, 자펀드 규모 확대, 성과보수 기준 조정\*, 전문 운용사 선정 등 적극적 펀드 운용

\*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 : (현행) 4%~5% → (개선) 정부 2% 내외, 민간 4%~5%(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 ②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활용한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행안부)

\* 민간투자자로 공공사업 수행 후, 성과목표 달성시 사업비 및 이자 등을 보전하는 계약을 민간-정부가 체결(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중)

- 근거법 제정 및 지자체의 사업참여를 위한 표준조례 배포

- 운용 매뉴얼 개발(추진절차 및 계약방법, 예산사후지출 방안 등 포함)



③ 사회적기업에 대한 **클라우드펀딩 투자기반 조성**(금융위)

-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업력 제한 기준을 완화**(창업 7년 이내 제한 → 폐지)

\* 사회적기업 개요 및 펀딩 진행상황 등 정보 게재

④ **우호적 조세환경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기재부, 행안부)

- (국세) 사회적기업 대상 **기부금 인정제도\***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

\* 취약계층 고용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에게 기부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지방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감면 조례\*** 확대 유도

\* 서울시 및 자치구 등 일부 지자체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50%·등록면허세 정액 감면 등 지방세감면제도 旣 운영중

- (국유건물)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건물에 입주시 **대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매각시 장기분납(5년) 등 우대 적용**

\*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검토

- (국유물품) 정부의 **불용품**(내구연한 도래 PC, 책상 등) **무상 양여 대상 확대\***(지자체·비영리법인 등 → 사회적경제기업 추가)

\* 「물품관리법」 개정

③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① **신협**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는 **신협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 투자 확대**(금융위)

\* 조합원·비조합원 대상 대출만 허용 → 조합원·비조합원 대상 출자도 허용

② 연구용역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외부투자를 허용하는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방안 검토(기재부)

\* 개인·타 협동조합 등 비조합원이 의결권 없이 출자 허용(협동조합기본법 개정)



### 3 판로확대 지원

◇ 공공조달 원칙에 사회적 가치 반영·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판로를 개척

#### ①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시 사회적책임조달 강화(기재부)

- ①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국가계약법 개정)
- ②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사회적 책임) 조정\* (기재부 예규 개정)
  - \* ‘사회적 책임’ 항목 가점 : (기존) 1점 → (개선) 2점

#### ② 국가·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 ①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물품·용역 입찰에 대한 가점 확대\* (기재부 및 행안부 예규 개정) 및 의무구매제도 도입
  - \* 국가 : (기존) 1.7점 → (개선) 2점, 지자체 : (기존) 0.5점 → (개선) 1점
- ② 취약계층을 일정비율(예: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제도 신설(5천만원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③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우수사례 발굴·공유\*
  - \* 장·차관급 회의체에서 구매실적·구매계획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국가·지자체의 우선구매 참여를 권고

####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개편(기재부, 행안부)

- ①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물품·용역 구매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진('18년도 국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 ②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국가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용 연계·반영



#### ④ 민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 ①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

- 사회적기업 제품 정보제공 사이트(e-store 36.5)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통합온라인 사이트로 확대·개편

##### ② TV 홈쇼핑·백화점 등 기존 유통채널과의 연계\* 강화

- \* 민간 유통채널 발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기획전 개최 지원 등

##### ③ 기업홍보, 상품체험·판매 등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 ④ 상품개선(품질, 디자인 등) 컨설팅, 우수 제품군 선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 지원

- \* 사회적기업진흥원 심사 선정 → 책자홍보·팝업스토어 운영 등 지원

##### ⑤ 사회적경제기업에 주요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평가지 가점 부여 및 공동 해외진출사업 시 우대선정·지원\*\*

-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유망품목·유통망지도 등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

- \*\*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수출컨소시엄을 우대선정, 해외시장 개척 지원

## 4 인력양성 체계 강화

◇ 사회적경제 교육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중심 전문 인력양성 및 청년 창업촉진 기반 조성

#### ① 사회적경제 교육환경 조성(교육부,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인사처, 조달청)

##### ① 초·중등 교육內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 사회적경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및 교원교육을 강화하고 시·도 교육청의 관련 교과목 신설 및 인정 교과서 개발 지원\*

- \* 사회적경제 교육 내용을 개발·제시하고, 인정 도서 개발 절차 등 안내

- \*\* 차기 교육과정 개정시,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 확대·반영

- 사회적경제 체험이 가능한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지원체계 마련

- \* (조합원) 학생·학부모 등, (사업활동) 매점운영·진로·방과후 학습 등



② 노인·경력단절 여성 등의 재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반영**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

③ 공무원 일반\* 및 공공조달 담당자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을 신설·강화**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규·승진자 기본교육에 신규편성, 사이버 교육제작·전파 등

\*\* 조달교육원 계약담당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사회책임조달 등 관련 교과 신설

②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학습시스템 구축**(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① **평생학습 도시, 행복학습센터, 지역경제교육센터, 민간경제교육 단체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확산**

\* 학습모임·강사풀 구성 등 지원, 지역특성화 교육서비스 제공 등

② **도시재생 등 지역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기반의 현장지원 조직\*을 활용한 활동가·주민 등 대상 실무·전문교육\*\* 실시**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 (예)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의 이해, 회계·마케팅 교육 등

③ **지역 학습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강사 인력풀을 구축·제공 하고 우수기업·공동체 탐방 등 현장교육 지원을 확대**

\*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17개), 시도·시군구 단위 공동체지원센터(70여개) 내에 개설된 지역주민 중심의 학습공동체

③ **체계적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교육부, 고용부)

① **사회적 경제 리더·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및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확대**

\* 현행 3개 대학 semi-석사과정(1년 비학위, '17년 124명 수강) 운영중

\*\* 5개 대학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비학위 과정 개설('19)

② **지역 대학·선도기업간 컨소시엄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 지역기반 특화 산업의 훈련수요 발굴 및 공동훈련 지원



- ③ 교육 콘텐츠 고도화, 現개별 교육기관\* 재편 및 전문 교육기관운영 등 체계적인 전문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인력양성 로드맵, '17하반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고용부, 기재부), 마을기업지원센터(17개 권역, 행자부), 광역 자활센터(14개소, 복지부) 등을 통해 교육·컨설팅 사업 시행 중

#### ④ 청년인재 유입을 위한 창업인프라 확충(고용부, 중기부)

- ①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화를 지원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을 확대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차별화

- 해외진출형, 전문기술형 등 창업수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창업실패·경영애로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위한 전문 멘토링 강화

\* (해외진출형) KOICA 등과 연계, (기술기반형) 전문기술 기반 창업 지원

- ② 청년 창업기회 확대를 위해 '소셜캠퍼스 온(溫)'을 추가 조성\*하고 멘토링, 네트워크 지원 등 컨설팅 기능을 강화

\* ('17) 3개소 → ('18) 6개소 → ('19(안)) 9개소

- ③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사업개발비 지원(최대 2년, 연 한도 5천만원)을 공익성이 강한 사회적경제기업까지 확대

- ④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예비창업가를 선발하여 창업아이템별 이론·기술 교육, 멘토링, 사업화비용\* 지원

\* 최대 2천만원(자부담 50%), 소상공인 창업자금도 연계지원(1억원 한도)

#### ⑤ 기술혁신 및 교육 콘텐츠 개발투자 확대(산업부,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 ① 출연(연), 대학 등과 연계를 통한 공동참여 기술개발, 바우처형 기술개발 의뢰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필요한 유형별 R&D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수준에 맞게 공동참여 또는 의뢰방식 선택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지역혁신기관 등을 통한 기술·인프라 등을 매칭

- ② R&D 전단계(기획→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기획능력 향상을 위해 '기획역량강화교육 사업\*' 선정시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 교육 이후 우수 교육생을 선발하여 R&D 기획멘토링, 기술매칭 등 연계과정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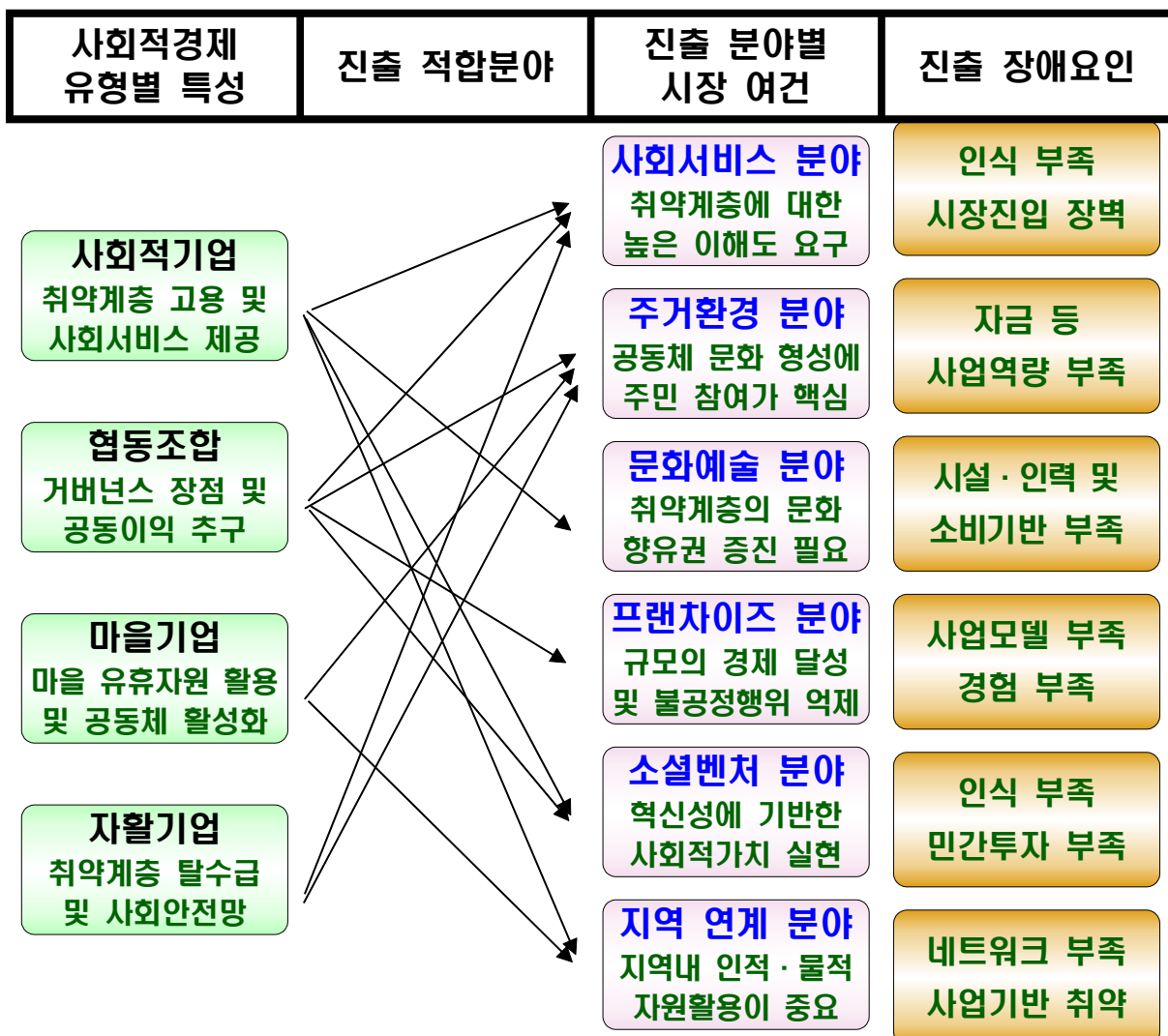
- ③ 국내외 우수 교육과정 벤치마킹 및 학계 협업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포함한 대학창업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 V. 사회적경제 주요 분야별 진출 촉진

- ◇ 사회적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역량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진출분야 확대를 병행하는 입체적 전략 필요
  - ◇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별 특성과 진출분야별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중점 진출분야 선정
  - ◇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요 분야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
- \* (예)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영리기관 중심의 전달체계가 진입장벽으로 작용, 프랜차이즈 분야는 다양한 사업모델 미비로 사업성공 가능성 저하

### < 진출 적합분야 및 장애요인 분석(예시) >





# 1 사회서비스 분야

## 1. 현황

□ (필요성) 사회서비스 분야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 및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서비스 품질제고에 기여

- 사회서비스는 고용흡수력이 높은 분야로서, 특히 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창출을 통해 계층간 양극화를 완화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기존 공급자와의 경쟁을 통해 품질혁신 유도

\*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동질적이며 스스로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개발

※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자활센터의 취약계층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사회서비스 취약계층에게 간병·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

▪ (성과) '16년 기준 309명 일자리 제공,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적기업 중 약 60%가 사회서비스를 제공

□ (문제점) 민간 영리기관 위주의 사회서비스 공급\*,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율 저조\*\*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경우 전체 공급자 중 민간기관이 62% 차지

\*\* 참여율(%) : 장기요양 0.5, 보육 0.1, 바우처 1.3, 장애인활동지원 4.1

-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 특화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에 있어 사회적경제기업들과의 협력 저조



## 2. 개선방안

- ① (진입장벽 해소)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제도정비 및 지원방안 마련
  - ① 담당 공무원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편람(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명시
  - ② 문제법인 수탁 금지 등 업무편람 개정을 통해 서비스질 개선
    - \* 편람에 수탁시 지역사회 사전의견수렴 절차 명시 및 의견수렴의 이행여부를 지자체 평가지표에 반영 추진, 지자체 교육 강화 등도 병행
  - ③ 담당 공무원 인식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 ② (바우처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강화
  - 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확대를 유도\* 하고, 이용자의 제공기관 정보접근성 제고\*\*
    - \* 복지부의 기관 평가체계 개편(사회적가치 창출 항목 포함) 및 기관정보 제공사항 구체화, 이용자에 서비스 이용 안내시 사회적가치 창출 기관 소개 권고 등
    - \*\* 정보제공 채널 확대(온라인→온·오프라인), 이용자 품질평가 실시간 제공 등
  - ② 요양서비스 분야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동일기관 근속기간에 따른 종사자 장려금 지급(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개정)
- ③ (지역복지) 지역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①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에게 자활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
  - ② 지역 복지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활동을 지원
    - \* 지자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등에 참여 중



#### ④ (경쟁력제고)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 · 서비스표준화 등 추진

- ①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촉진하고(17년 11개 지정 → 추가 확대), 지원확대\*\*를 통해 경쟁력 제고

\* (예) 자활기업 특성을 고려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유급 근로자 고용,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의 유연한 적용 허용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 · 컨설팅 등 병행

- ②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등을 유도\*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

\* 교육 · 컨설팅 제공, 전환절차 안내,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에 대한 홍보

\*\* 표준화된 서비스 매뉴얼 개발 · 보급 및 R&D, 공동 마케팅 등 지원

#### ⑤ (新사회서비스\*)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선도적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 · 사업화 등 추진

\* 인구구조변화 · 양극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기능

- ① 지자체 ·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공동으로 지역특화 사회서비스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상시 회의체 구성을 통해 민관협력 강화

\* 지역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모델 참고

- ② 사회서비스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사업비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지원내용) 정책펀드 · 기금, 공동모금회 재원 등 연계 사업비지원, 교육 · 컨설팅,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안내 등 행정지원 등

\*\* (예) 지역 내 의료사회적협동조합 활용, 사회서비스 종사자 등 감정근로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 2 주거환경 분야

### 1. 현황

□ (필요성) 구성원 직접 참여·이익공유·취약계층 배려 등 사회적경제의 특성으로 주거문화 개선의 정책효과성 향상

○ H/W 중심의 기존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참여 기회부족에 따른 갈등 유발\* 등으로 정책효과 반감

\*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경우 주민 간 갈등발생 소지

○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일자리·소득 증대\*, 주거 안정성·공공성 강화(취약계층 입주 확대 등)에 기여

\* 주거개선 사업, 공동시설 관리업체 운영 등에 마을주민 참여 확대

※ (두꺼비하우징)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10호점까지 개설

○ 영국의 사회적기업(민와일 스페이스)은 빈 점포 소유자 - 임대수요자 매칭을 통해 예술공간으로 전환시켜 지역재생 프로젝트에 기여

□ (문제점) 자금사정·사업역량 등이 부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 촉진 및 정책수요자의 정책체감도 제고에 한계

○ (도시재생) 공동시설·미관정비 등 도시외관 재정비에 집중하여 주민참여·도시 공동체 복원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개발에 소홀

○ (임대주택) 자금조달 기반 미흡·사업정보 부족 등으로 공모를 통한 사업참여에 제한\*

\* 최근 LH 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중심의 기업형임대주택 계획이 선정되어 최초사례 창출 기대



## 2. 개선방안

- ① 지역활성화 관련 사업기획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을 강화(국토부)
  - ① (참여조직) 지역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운영지침 수립)
    - \*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규모기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② (네트워크) 건축,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을 제공하여 지자체에 컨설팅, 우수 지역사례도 전파
  - ③ (교육) 주민, 도시재생 전문가, 청년·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역량교육 지원, 도시재생 경제주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 (사업화 지원·역량교육 예산) 17년 추경 약 9.5억원, '18년 정부안 약 32억원
  - ④ (부처연계 강화)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행안부, 고용부)와 연계 강화
- ② 도시재생·임대주택 공급 등 지역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국토부)
  - ① (기금용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기금용자 지원(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개정)
    - (도시재생) 공간조성·조직운영 등 도시재생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용자조건을 개선하고, 용자사업 대상을 확대\*
      - \* 사업대상 : 코워킹커뮤니티 시설조성, 창업시설조성, 상가리모델링 등
    - (임대주택) 지역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를 위한 기금용자 및 보증에 대해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자금조달 지원
      - \* (기금용자) 사업성·수행능력·신용도 평가요건 완화, 토지담보 등 검토  
(보증제공)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매입자금 대출시 대출 원리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급 보증하는 방안 검토
  - ② (사업심사) 도시재생 지역 선정시 주민주도 조직 역량 강화 및 사업참여 여건을 평가항목에 반영(국토부 공모·선정 지침 개정)



## 1. 현황

- (필요성) 노동집약적 특성\*에 따라 일자리창출 기여도가 높으며,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에도 기여

\* 문화예술 분야 취업유발 계수(명/10억원) : (공연예술) 22.9, (산업평균) 12.9

\*\* 소득양극화 및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낮은 지리적 접근성에 기인

- 문화예술 자원(지역의 유휴 문화예술 인력, 공연시설 등)을 활용한 사업모델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창출 가능

\* 마을 오케스트라, 미술·무용단 창단, 지역영화관·미술관 확충 등

- 지역기반 인프라 확충으로 지리적 장애 해소 및 문화소비 증진

※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작은영화관을 개설하여 지역간 문화불균형 해소

▪ (성과) '16년 기준 19개 영화관에서 주민 108만명이 영화를 관람

- 프랑스의 경우 문화예술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요 활동분야 중 하나이며, 문화예술 조직의 약 1/3이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에 해당

- (문제점)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문화예술 활동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지원정책 부족

\* (사회적기업) '08년 11개 → '16년 238개(총 1,713개 중 13.9%)

(협동조합) '13년 77개 → '16년 1,641개(총 10,640개 중 15.4%)

- 문화예술 분야에 중요한 안정적 공간확보,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전문인력의 양성, 소비기반 확대 등 정책적 배려 필요



## 2. 개선방안

### ① 창작활동 기반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정책을 실시(문체부, 행안부)

- ① 재원조달, 홍보·판로지원, 수요기반 사업개발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진입 여건을 조성
- ② 문화예술 창작·공연·사업운영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희·공공시설 지원

- 지자체 공유재산 임대료 할인지역 확대\*, 공간 사용료 할인, 공간 우선 사용권 부여 등을 위해 지자체 참여 유도

\* 서울시·대구시 사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임대료 부과기준 완화 적용(재산평정 가격의 5% 이상 → 1% 이상)

### ②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문화공간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 관광·체육 진흥사업을 활성화(문체부)

- ① (문화시설) 지자체 문화시설·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위탁기관 선정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가점부여 및 홍보·컨설팅 등 지원
- ② (지역관광) 지역주민 참여형 협동조합 중심으로 지역관광전문인력(관광두레 PD) 및 주민사업체 선발, 자금·교육 등 지원
- ③ (생활체육) 지자체 생활체육시설 및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연계 추진
- ④ (행사·공연) 정부·공공기관·지역문화재단 등의 행사·공연 위탁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유도\*

\* (예)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행사 개최 시 설립 3년 이내 협동조합의 위탁기관 선정대상에 포함



## 1. 현황

- (필요성) 본점·지점간 이익공유\*, 상생·협력기반의 사회적경제 기업 특성상 프랜차이즈 단점 보완 및 사업성공 가능성 제고

\*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공동 소유하는 수평적 조직으로, 분쟁 소지가 없음

- 규모의 경제를 통해 양질의 창업환경을 제공하고, 기존 프랜차이즈 모델의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다양한 분야 일자리 창출

※ (와플대학 협동조합) 와플 판매 노점에서 시작하여 협동조합으로 성장, 초과수익을 본점과 가맹점이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운영  
 ▪ (성과) '13년 12개 매장에서 '17.上 전국 43개 매장으로 확대

- 프랑스의 경우는 소매점포의 30% 이상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프랜차이즈 분야 참여가 활발

- (문제점) 불공정행위 억제 등 상생모델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진출분야 편중\*·경험부족 등으로 활성화 제약

\* 외식업 73%, 교육·미용·세탁 등 서비스업 18% 등

- 외식업종 편중 현상 극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 모델 개발, 전문인력 및 네트워크 확보 등 필요

## 2. 개선방안

-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영성과 달성이 용이하고 기존 프랜차이즈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중기부)

\* 사업자들(점주)이 공동으로 가맹본부를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하거나, 기존 협동조합이 가맹점주(조합원·비조합원)와 프랜차이즈 형태로 사업운영



① (공모사업)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이 적합하면서 소경영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의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

\* 소상공인, 음식사업자, 제과점주, 숙박업자, 운송사업자 등

-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구축 컨설팅, 브랜드 개발, IT 환경(모바일·웹페이지) 구축 등 지원

② (기반조성) 업종별로 적합한 공동사업 모형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확산 기반을 마련

- 국내·외 사례 검토, 규모화, 사업영역 개발, 전문인력 확충 등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5 소셜벤처 분야

### 1. 현황

□ (필요성)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소셜벤처 활성화 및 창업 촉진

○ 소셜벤처는 경제적 가치 창출과 동시에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문제점) 소셜벤처는 태동기인 만큼 창업·성장 등을 지원하는 민간 중심의 생태계가 미성숙

○ 민간의 임팩트(Impact) 투자\* 기관이 적고, 소셜벤처 투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소셜벤처 발굴·육성의 기반이 부족

\* 재무적 수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 2. 개선방안

### ① 임팩트(Impact) 투자펀드 조성(중기부)

- 모태펀드에서 출자하여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Impact 투자펀드' 신설('18년)
  -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Two-track으로 펀드를 운영
- (i) 민간 벤처캐피탈(이하 VC)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모태펀드와 민간이 8:2로 출자하여 펀드 결성 후 VC가 펀드를 운영
- (ii) 임팩트투자기관 등의 투자촉진을 위해 엔젤 투자자 등이 소셜벤처 등에 先투자 後신청을 하면, 先투자금액에 매칭 투자
  - \* 美 중기청(SBA)은 민간출자의 2배를 매칭하는 임팩트펀드 운용('11~'15, 10억\$)

### ②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신규 팁스(TIPS\*) 운영사 선정(중기부)

-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 민간투자-정부R&D를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촉진
- TIPS 프로그램을 통해 소셜벤처에 중점 투자하는 운영사를 신규 선정(가점 부여)하여, 우수 소셜벤처 육성\*('18년)
  - \* 운영사에게 소셜벤처 등 연간 5~10개 내외의 창업팀 추천권 TO를 배정하고, 최종 선정된 창업팀은 정부 R&D자금(5억원), 사업화·마케팅(2억원) 등 최대 10억원 지원
- 등록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41개) 등을 대상으로 참여의사 및 투자실적 조사 후 추진('18)

### ③ 민간의 임팩트 투자 활성화 지원(중기부)

- 「(가칭) 소셜벤처 활성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18)하여 민간투자의 저변을 확대
  - \* 중기부, VC, 한국벤처투자, 소셜벤처 기업인, 전문가 등 10인 내외
- 소셜벤처 평가모형 개발·보급, 성공사례 공유·확산, 투자애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등 임팩트 투자 활성화 지원



#### ④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보 제공(중기부)

- 창업정보 종합플랫폼\*(K-startup)을 활용하여 지원정책, 관련정보 등을 종합 제공

\* www.k-startup.go.kr : 창업진흥원은 창업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의 창업지원정보(104개 기관)를 한 곳에 모아 제공 중('14~)

- 소셜벤처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정보제공 메뉴신설, 정기 메일링 서비스 등으로 맞춤형 창업지원 정보 제공

## 6 지역기반 연계 분야

### 1. 현황

- (필요성)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인적·물적자원 활용이 중요

- 지역내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에도 기여
- 사회적경제가 발전한 주요 국가의 경우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역사회 내에 뿌리내려 성장한 경우가 다수

\* (예) 캐나다 퀘벡주는 이민자 공동체가 생산·소비 등을 공유하면서 형성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대표적 국가

- (문제점) 농·수협 등 지역별 지원기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법에 따라 인건비·사업비 등 보조금 중심으로 지원 확대

- 지역별 네트워크 활용·사업기반 강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보다는 자금지원을 통한 양적 성장만을 유도



## 2. 개선방안

### ① 지자체 연계 사회적경제 활성화(행안부)

#### ① (마을기업) 지역주민 중심의 마을기업 집중 육성

- '22년까지 600개 마을기업 추가 설립\* 및 6,6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을기업 발전방안 마련\*\*

\* 인증 확대를 통한 마을기업 창출: ('16년) 1,446개 → ('22년) 2,046개

\*\* 청년 전문경영인 발굴·육성, 관광·문화 등 업종 다변화 등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업기획·경영컨설팅 등 인큐베이팅 지원을 위한 예비마을기업\* 제도 확산

\* '16년 기준 경기·광주·세종 등 6개 시·도에서 시행중

#### ② (공유재산) 유희 공유재산 대부를 위한 지역영향평가\*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0.5~1점, 공유재산운영기준 개정)

\* 종합평가 = 능력평가(재무상태·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70%) + 가격평가(입찰가격, 30%)

### ② 농·어촌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농림부, 해수부)

#### ① 농·어촌 특화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농업 분야) 농업활동을 토대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프로그램을 지원\*

\* 「(가칭)사회적 농업법」 제정을 통해 사업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

- (수산업 분야) 어촌지역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산분야 진입\* 활성화

\* 어촌계 이중 가입제도 개선 등 신규 어업인 어촌 진입장벽 완화 추진



## ② 농협·수협을 통한 자금지원 강화 및 판로확대

- (수협자금) 담보 및 신용대출 적격성 심사시 신용등급·자금용도 등을 별도로 고려하고, 우대금리를 적용
- (농협자금) '농촌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클라우드 펀딩 활용 등을 통한 자금확보 지원

\* 지자체가 기금조성 시 농협이 적극 참여

- (판로지원) 공영홈쇼핑 방영지원(수수료율 인하), 농협·수협 판매장 내 입점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

## ③ 지역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산업부, 농림부)

### ① (에너지연계형) 마을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 제시·확산

- (지원센터)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17.7월 개소) 기능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추진 지원\* 및 애로해소 추진

\* 사전 사업성 검토, 업체 계약, 자금 조달, 조합지원 등 추진지원

-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추진

\* 저수지 등 활용시 5,966MW(원전 6기) 용량 확보 가능(3만5천명 일자리 창출)

### ② (맞춤형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

- (기술지원) 기술혁신 수요분석·유형화, 공통기술개발·이전
- (판로) 유통, 관광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하여 판로 지원

\* 지역박람회, 코리아세일페스타, 소비재대전 등과 연계

- (홍보) 지역희망박람회 개최시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전시관 별도 마련

### ③ (지역별 중점 육성분야) 시도별 중점 육성 분야\*를 선정,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지원

\*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긍정적 이미지(안심, 안전), 지역자원 활용성(에너지, 연고자원), 사회적 가치(취약계층, 복지) 등 분야의 지역의 자율적 선정

\*\* 사회적경제 중간조직, 지역혁신기관, 대학, 출연연 등



## VI. 기대효과

성 숙 기 도 약 기 반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생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li> </ul> </li> <li>▶ 진출분야 확대를 통한 순기능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장애요인 극복 및 사회적경제 파급효과 극대화</li> </ul> </li> </ul>
	성장 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 고용환경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창출 및 근로여건 개선(임금수준·근속기간 등) 병행</li> </ul> </li> <li>▶ 유휴인력 고용확대 등 노동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소외계층의 고용시장 진입으로 저출산·고령화 대비</li> </ul> </li> </ul>
	사회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고용창출 등 소득양극화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저소득계층 등 고용 취약계층 소득창출 기회제공</li> </ul> </li> <li>▶ 복지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외계층의 복지 접근성 제고 등 사회안전망 보완</li> </ul> </li> <li>▶ 지역공동체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기반·주민직접참여 등 공동체 구성원 삶의 질 향상</li> </ul> </li> </ul>
포 용 성 장 견 인	사회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의 위상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의 인식과 중요성이 확대</li> </ul> </li> <li>▶ 사회적가치 공감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신뢰·가치를 우리 사회의 주요 운영원리로 격상</li> </ul> </li> </ul>
	지속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협력 기반구축으로 상생협력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li> </ul> </li> <li>▶ 정의롭고 따뜻한 성장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의 효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포용적성장으로 전환</li> </ul> </li> </ul>



## 별첨

## 과제별 추진일정

연번	정책과제(10개 분야, 88개 과제)	일정	부처
<b>① 통합 지원체계 (2개 과제)</b>			
1-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3법 제정	'17.下	기재부 고용부
1-2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및 사회적경제발전위 설치	'17.下~	기재부
<b>② 금융접근성 제고 (13개 과제)</b>			
2-1	신보·지신보의 보증지원 한도 확대	'17.下	금융위 중기부
2-2	신보·지신보의 보증지원 적용대상 확대	'17.下	금융위 중기부
2-3	정책자금 內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 신설	'17.下	중기부
2-4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평가모형 마련	'18.上	금융위 중기부 고용부
2-5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 확대 운용	'17.下	금융위
2-6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 (근거법 제정, 표준조례 배포, 운용 매뉴얼 개발)	'18.下	행안부
2-7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기반 조성	'18.上	금융위
2-8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제도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	'18.上	기재부
2-9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감면 조례 확대 유도	'17.下~	행안부
2-10	사회적경제기업 국유건물 입주시 우대(국유재산특례법 개정)	'18.上	기재부
2-11	정부 불용품 무상양여 대상 확대(물품관리법 개정)	'18.上	기재부
2-12	신협외 대출 외 출자 허용	'18.上	금융위
2-13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18.下	기재부
<b>③ 판로확대 지원 (12개 과제)</b>			
3-1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 신설 (국가계약법 개정)	'18.下	기재부
3-2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 조정 (기재부 예규 개정)	'18.上	기재부
3-3	물품·용역 입찰 가점 확대 (기재부 예규 및 행자부 예규 개정)	'18.上	기재부 행안부
3-4	수의계약 제도 신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18.上	기재부 행안부
3-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우수사례 발굴·공유	'18.上	기재부 고용부



연번	정책과제(10개 분야, 88개 과제)	일정	부처
3-6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개편 (국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정)	'17.下	기재부 행안부
3-7	통합온라인 사이트 확대·개편 (예산안 반영)	'18.上	고용부
3-8	기존 유통채널 연계 강화 (예산안 반영)	'18.上	고용부
3-9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예산안 반영)	'18.上	고용부
3-10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 (예산안 반영)	'18.上	고용부
3-11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기업 평가시 가점 부여	'18.上	산업부
3-12	공동 해외진출사업 시 우대선정 및 지원	'18.上	중기부

#### 4 인력양성 체계 강화 (19개 과제)

4-1	사회적경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18.下	교육부
4-2	시·도 교육청의 교과목 신설 및 인정 교과서 개발 지원	'18.下	교육부
4-3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마련	'17.下~	교육부
4-4	노인·경력단절 여성 등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에 사회적 경제 교육 보급·확대	'18.上	여성부 복지부 행안부
4-5	공무원, 공공조달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 신설	'18.上	조달청
4-6	평생학습 도시, 행복학습센터 활용한 교육 확산	'18.上	교육부
4-7	지역 현장조직을 활용한 실무·전문교육 실시	'18.上	행안부
4-8	강사 인력풀 구축, 현장교육 지원 확대	'18.上	행안부
4-9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확대 운영	'18.上~	고용부
4-10	사회적경제 관련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확대	'18.上	교육부
4-11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18.上	고용부
4-12	체계적인 전문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18.上	고용부
4-13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확대 (예산안 반영)	'18.上~	고용부
4-14	'소셜캠퍼스 온' 조성·운영	'18.上~	고용부
4-15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확대	'18.上~	고용부
4-16	창업 아이템별 교육, 멘토링, 사업화 비용 지원	'18.上~	중기부
4-17	출연(연), 대학 등과 연계한 R&D서비스 및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요 유형별 R&D 지원	'18.上~ 19.上~	산업부 과기부
4-18	기획역량강화교육 사업 선정시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18.上~	중기부
4-19	국내외 우수 교육과정 벤치마킹을 통한 대학창업교육 콘텐츠 제작	'18.上~	교육부



연번	정책과제(10개 분야, 88개 과제)	일정	부처
----	----------------------	----	----

**5 사회서비스 분야 (11개 과제)**

5-1	사회적협동조합 인식 개선 (업무편람 개정)	'17.下	복지부
5-2	수탁자 선정시 문제법인 수탁금지 (업무편람 개정)	'19.上~	복지부
5-3	워크숍 개최 및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마련 (업무편람 개정)	'18.上	복지부
5-4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이용확대 유도 및 정보접근성 제고	'18.下~	복지부
5-5	요양서비스분야 종사자 고용안정화 (고시 개정)	'17.下	복지부
5-6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강화 (업무편람 개정)	'18.下	복지부
5-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및 활동 지원 (업무편람 개정)	'18.上	복지부
5-8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완화 (지침 개정)	'18.下	복지부
5-9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유도	'18.下~	복지부
5-10	지역특화 사회서비스 개발 · 운영	'18.上~	복지부
5-11	사업비 · 행정적 지원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 (예산안 반영)	'18.下~	복지부

**6 주거환경 분야 (6개 과제)**

6-1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 (운영지침 수립)	'17.下	국토부
6-2	지역내 전문가 매칭지원 및 타사업 공유	'17.下~	국토부
6-3	역량교육 실시 및 1:1 컨설팅 제공	'17.下~	국토부
6-4	도시재생비용 융자조건 · 사업대상 확대 (기금운용계획 개정)	'17.下~	국토부
6-5	임대주택 기금융자 및 보증 기준 마련 (기금운용계획 개정)	'17.下	국토부
6-6	도시재생사업 공모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17.下	국토부

**7 문화예술 분야 (6개 과제)**

7-1	시장진입 여건 조성방안 마련	'18.上~	문체부
7-2	유희 · 공공시설 지원 (지자체 조례 개정 및 지침 마련)	'18.上	문체부 행안부
7-3	문화시설 · 프로그램 위탁기관 선정시 참여 유도 (예산안 반영)	'18.上	문체부
7-4	관광두레 육성사업 지원 (예산안 반영)	'18.上	문체부
7-5	생활체육시설 및 스포츠클럽 확충 (예산안 반영)	'18.上	문체부



연번	정책과제(10개 분야, 88개 과제)	일정	부처
7-6	행사·공연 위탁시 참여 유도 (예산안 반영)	'18.上	문체부
<b>Ⅷ 프랜차이즈 분야 (2개 과제)</b>			
8-1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 (예산안 반영)	'17.下~	중기부
8-2	과제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예산안 반영)	'17.下~	중기부
<b>Ⅸ 소셜벤처 분야 (4개 과제)</b>			
9-1	임팩트(Impact) 투자펀드 조성	'18.上	중기부
9-2	TIPS 운영사 선정	'18.上	중기부
9-3	(가칭) 소셜벤처 활성화 민관협의체 구성	'18.上	중기부
9-4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보 제공	'18.上	중기부
<b>Ⅹ 지역기반 연계 분야 (13개 과제)</b>			
10-1	마을기업 발전방안 마련 (예산안 반영)	'17.下	행안부
10-2	예비마을기업 제도 확산 (예산안 반영)	'18.下	행안부
10-3	공유재산 대부 관련 지역영향평가지 가점부여 (운영기준 개정)	'18.上	행안부
10-4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회적 농업법 제정, 예산안 반영)	'18.下	농림부
10-5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표준규약 제정)	'18.上	해수부
10-6	수협 담보·신용대출 적격성 심사 별도 기준 마련	'18.上	해수부
10-7	농협이 기금·클라우드펀딩 등을 통한 자금지원	'18.下~	농림부
10-8	농·수협 온·오프라인 판로를 통한 판매지원	'17.下~	농림부 해수부
10-9	컨소시엄 구성·운영을 통한 성장지원 (예산안 반영)	'17.下~	산업부
10-10	마을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 확산	'18.上~	산업부
10-11	유통, 관광 등 주요행사와 연계한 판로지원 (예산안 반영)	'17.下~	산업부 농림부
10-12	지역희망박람회 별도 전시관 마련 (예산안 반영)	'17.下~	산업부
10-13	사회적경제 기술 지원 (예산안 반영)	'17.下~	산업부



---

# 사회통합적 평창동계올림픽 유산(Legacy) 창출 방안

---

2017. 12.

관계부처 합동







---

# 사회통합적 평창동계올림픽 유산(Legacy) 창출 방안

---

2017. 12.

관계부처 합동



# 사회통합적 평창동계올림픽 유산(Legacy) 창출 방안

※ (주요내용) 공감과 치유(소외계층 참여확대 등), 상생과 협력(사회적경제 연계 등), 지역혁신(대회경기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 평화와 화합(북한참가 등 평화올림픽 개최)의 올림픽 추진

## 1. 추진 배경

- 최근 개최국민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 통합의 도모, 개최지역의 지역발전 등 올림픽 개최과정에서 창출되는 올림픽 유산\*의 중요성이 부각

\* 올림픽 유산(Olympic Legacy) : 대회개최 준비, 개최과정을 통해 축적된 유무형의 자산을 의미

- IOC 또한 대회 개최 비용을 정당화하고 대회 유치 및 개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으로 올림픽 유산을 강조\*

\* IOC헌장 제2조 14항, "올림픽 대회가 개최도시와 개최국에 긍정적 유산을 남기도록 장려한다"

■ (2012 런던올림픽)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골자로 하는 "올림픽 유산" 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공감대를 조성하고 유치 반대여론을 극복

\* ① 대회 후 재사용계획을 포함한 시설투자, ② 슬럼가인 런던 동북부 지역경제 재건, ③ 지속가능한 친환경 올림픽, ④ 대회운영에 소외계층 참여 확대 등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사회통합적 유산' 창출 계기로 활용

- 사회적 계층, 경제적 빈부, 지역에 따른 갈등이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올림픽 개최는 사회통합을 이룰 기회
- 올림픽 개최를 통해 취약계층 사회참여, 경제적 파급효과의 지역사회 선순환 등 개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유산을 창출



## 2. 추진 방안

### ◇ 사회통합과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평창올림픽 유산 창출

- ① (공감과 치유) 소외계층 참여 확대, 사회통합 인식 교육, 청년·퇴직자 경력개발 지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올림픽 개최
- ② (상생과 협력) 판매공간 조성 및 대회 관련 물품조달 등 사회적 경제·지역경제의 올림픽 참여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경제구조 확산
- ③ (지역혁신) 대회시설 사후활용,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유산 창출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조성 및 지역혁신 달성
- ④ (평화와 화합) 남과 북, 동계스포츠 변방국이 함께하는 올림픽 추진을 통해 인류화합과 평화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 구현

### (1) 공감과 치유 -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올림픽 개최

#### □ 사회적소외계층 및 지역주민의 대회참여 기회 확대

- (자원봉사) 장애인 등 사회적소외계층을 포함한 대회 자원봉사 선발\* 및 성화봉송 주자에 소외계층 참여\*\* 추진

\* 선발 현황(완료) : 총 20,840명 (장애인 71명, 외국인 1222명 / 20-30대 청년층 17,849명(85.6%))

\*\* (올림픽) 7,500명(10% 이상을 사회적소외계층으로 구성) / (패럴림픽) 800명(소외계층 포함 주자 선발예정)

- (대회관람지원) 공공기관·기업의 사회공헌사업 및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소외계층·지역주민 등에 관람 기회 제공

※ 사례 ① (지자체) 자체예산을 활용, 지역 내 소외계층 등에 입장권 우선 배분 예정  
② (현대백화점) 순직경찰관·소방관 유자녀 160여명 대상 올림픽경기 관람지원  
③ (대한장애인체육회) 17개 시도 교통약자 특별 수송 및 경기 관람프로그램 운영 예정

#### □ 올림픽 계기 사회통합 인식 제고

- (접근성개선) 패럴림픽 계기 개최도시 민간시설(숙식업소·공중화장실) 장애인 접근성 개선 및 이동편의 지원(저상버스 등) 등 무장애관광도시 유산 창출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연계) 패럴림픽 개최 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 발표\*, 사회통합에 대한 정부 의지를 표명하고 대회 홍보

\*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 등 사회통합적 비전 및 새정부의 장애인정책 로드맵 제시

- (인식교육) 패럴림픽 홍보를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에 포함하고, 패럴림픽 및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공동 홍보 추진(조직위-장애인개발원)



## □ 장애인·퇴직인력 등 경력개발 지원

- (퇴직인력참여) 만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평창올림픽과 연계하여, 대회운영 등 지원\*

\* 참여수당(시간당 2천원)을 지급받음에 따라 조직위 단기고용 인력 등 자원봉사자와 역할차별화

- (능력개발) 대회 봉사활동을 통해 습득한 경험·노하우와 연계된 직업 능력개발 훈련과정 수업을 지원\*

\* (대상) 올림픽패럴림픽 자원봉사자 / (내용) 훈련 상담 및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훈련비 지원 등

## [2] 상생과 협력 - 올림픽과 통한 사회적경제 · 지역경제 활성화

### □ 사회적경제기업, 지역기업 홍보 및 판매공간 조성

- (팔도장터명품관) 대회 기간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우수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팔도장터 명품관 운영(강릉·평창 각 1개소 / 2,100여개 품목)
- (사회적경제상품관) 대회 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 상품관을 운영하여 제품 전시·판매 및 사후 판로개척 지원(강릉 1개소 / 200여개 품목)
- (시·도의 날) 대회기간 지역별 문화예술공연 및 홍보관, 대회 집중 관람 등 16개 시·도가 올림픽에 참여하는 '시·도의 날' 행사 개최

### □ 올림픽과 사회적경제·지역경제 연계 확대

- (공공조달) 올림픽대회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로컬푸드 납품을 추진하여 제품 홍보 및 인지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실적) 대회인력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도시락 납품(700명), 강원도 특산품 8종(오대쌀, 횡성·평창한우, 인삼, 감자, 영월·정선사과, 솔레원 와인) 공식서포터스로 참여 등
  - (계획) 메밀차 한과 등 식품서비스 참여 추진 조달공고 시 사회적경제 및 지역기업 우선 사용 권고 등
- (스폰서연계) 대회후원사와 연계한 사회적기업 라이선싱 상품 제조 참여를 통해 후원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증대
  - ※ 참여업체(3개) : 공공공간(서울 포장용보자기), 만들레누비(경남, 패션잡화), 쿠키아(전남, 두부과자)



### [3] 지역혁신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조성

#### □ 올림픽 계기 지역발전 모색

- (시설사후활용) 관계기관 TF를 운영, 지역 생활체육 시설 등 대회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사후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지역맞춤형일자리) 대회 이후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 사후활용 일자리 제안(지자체, 18년도 사업공모 시) → 선정 후 실무교육, 취업연계 등 구직자 지원

- (후원사 사회공헌) 대회후원사 중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한 기업을 지속가능 파트너로 선정하여 지속적 사회공헌 유도(추가 마케팅권 부여, 홍보 실시 등)

※ (사례) ① KT : 산간오지(평창)에 기가인터넷 인프라 구축 및 IT기기 활용강좌 제공

② 코카콜라 : 평창 삼정호 일대 습지 생태계 유지사업 지원

③ 삼성화재 : 강릉 주영초등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 □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유산 창출

- (관광인프라) 올림픽 계기 지역 교통인프라(표지판, 터미널 등) 및 숙박업소 (메뉴, 안내판 등) 정비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 및 지속가능한 관광유산 창출
- (공정여행) 올림픽과 연계한 취약계층 공정여행프로그램을 기획·운영(사회적기업진흥원 TF구성)하여 사회적가치 창출

※ 공공·민간기업 CSR 네트워크 연계 추진 (CSR 프로그램을 활용한 티켓 기부 등)

- (농촌관광) 대회 개최지역 연계 농촌여행상품 운영\*(12종) 및 농어촌 민박 홍보 및 개선\*\*을 통해 내·외국 관광객 대상 농촌관광 활성화

\* 내국인 기차여행상품 3종, 외국인 여행상품 9종 운영 중

\*\* 우수 농어촌민박시설 소개, 농어촌민박 시설개선(16년 50개소 완료, 17년 330개소) 추진 중

### [4] 평화와 화합 - 평화증진과 인류화합의 올림픽정신 구현

- (지자체서포터즈) 동계스포츠가 생소한 출전국의 선수단과 지자체 결연을 통해 선수단 환영, 경기응원, 결연국가 시·도초청 등 서포터즈 활동 추진

※ 현재 92개국 사전신청, 시도 수요조사 후 약 30개국 선정 및 지자체 매칭 예정(17.12)

- (평화올림픽) IOC 등 국제기구와 지속 협력, 북한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해 노력하여 평화올림픽 실현



## 참고

## 세부 과제별 주요내용 및 일정

연번	정책과제(4개분야 21개 세부과제)	일정	기관
----	---------------------	----	----

### ① 공감과 치유 -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올림픽 개최

1-1	자원봉사자 및 성화봉송 주자에 소외계층 참여 - (내용)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자원봉사자 선발, 성화봉송 주자의 10%이상을 소외계층으로 구성	'18.2~'18.3	행안부
1-2	소외계층·지역주민 등 대회관람 지원 - (내용) 지자체별 입장권 단체구매, 사회공헌사업 연계 등을 통한 소외계층 대회관람기회 제공	'17.9~'18.3	행안부
1-3	개최도시 장애인접근성 개선 - (내용)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숙박업소 및 대중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경사로, 자동문 등)	~'17.12	강원도
1-4	패럴림픽 계기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 (내용) 패럴림픽을 앞두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사회통합 메시지를 전달하고 패럴림픽 홍보	'17.11~'18.3	복지부
1-5	장애인식교육과 패럴림픽 홍보 연계 - (내용) 기 추진 중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패럴림픽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대회성공 및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	'18.2	복지부
1-7	퇴직전문인력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연계 - (내용) 만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올림픽 대회 운영 및 부대행사 지원	'17.11~'18.3	고용부
1-8	자원봉사자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지원 - (내용) 대회자원봉사자에 대해 활동과 연계된 직업개발 훈련과정 수강을 지원(훈련상담, 훈련비 등)	'18.2~'18.6	고용부

### ② 상생과 협력 - 사회적경제 및 지역경제 연계

2-1	팔도장터명품관 운영 - (내용)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우수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명품관 운영(평창, 강릉 / 2,100개 품목)	'18.1~'18.3	강원도
2-2	사회적경제상품관 운영 - (내용) 전국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판매 및 홍보하고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상품관 운영(강릉 / 200개 품목)	'18.1~'18.3	강원도
2-3	시·도의 날 개최 - (내용) 시도 홍보관, 문화예술공연, 특산품관, 지역별 대회 집중 관람 등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도의날' 개최	'17.9~'18.3	행안부



연번	정책과제(4개분야 21개 세부과제)	일정	기관
2-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로컬푸드 공공조달 - (내용) 올림픽 행사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로컬푸드 납품 추진(사무용품, 식음료 등)	~'18.3	조직위 강원도
2-5	대회스폰서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 (내용) 대회 라이선싱 상품 제조 등 대회후원사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추진	~'18.3	조직위 강원도

### ③ 지역혁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조성

3-1	대회시설 사후활용을 통한 개최도시 유산창출 - (내용) 관계기관 TF를 통해 대회시설 사후활용방안을 도출하여 스포츠시설 등 대회 유산 창출	~'18.3	강원도 등
3-2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사업 지원 - (내용) 기 추진 중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올림픽시설을 활용한 사업 제안시, 적극 선정하여 지원	'18.3~	고용부
3-3	대회후원기업 사회공헌사업 장려 - (내용) 개최지역 사회공헌사업 실시 후원사에 '지속가능 파트너' 자격을 부여하여 추가 홍보 등 인센티브 제공	'18.3~'18.12	조직위
3-4	지역 관광인프라 정비(교통인프라, 숙박업소 등) - (내용) 올림픽을 계기로 숙박(간판, 메뉴판 등), 교통인프라(표지판, 도로시설물 등) 및 도시경관 일제 정비	~'17.12	강원도
3-5	취약계층 대상 올림픽연계 공정여행프로그램 운영 - (내용) 공정여행 사회적기업과 연계, 다양한 취약계층대상으로 올림픽을 관람하고 지역문화를 체험하는 여행프로그램 운영	'17.11~'18.2	사회적기업 진흥원
3-6	개최지역 연계 농촌여행상품 운영 및 농어촌민박 홍보 - (내용) 농촌관광상품(12종) 운영 및 농어촌민박 시설개선	'17.10~'18.2	농식품부 강원도

### ④ 평화와 화합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조성

4-1	동계스포츠 변방국 대상 지자체 서포터즈 활동 - (내용) 대회 참가선수단과 지자체 1대1 결연을 통해 선수단 응원, 지역 초청 등 서포터즈 활동 추진	'18.2~'18.3	행안부
4-2	북한 참가 등 평화올림픽 개최 - (내용) 국제공조를 통한 참가 독려 등 북한선수단의 올림픽 참여 추진	'18.11~	문체부 등







---

#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

2018. 2. 8

관계부처 합동







---

#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

2018. 2. 8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I.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지원체계 .....	59
II. 사회적금융의 개념·현황 및 평가 .....	61
III. 사회적금융 해외사례 .....	65
IV.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방안 .....	68
1. 기본 방향 .....	68
2.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 .....	70
3. 사회적금융 공급확대 .....	73
4.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	80
V. 추진 일정 .....	83



## I.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지원체계

- 사회적경제는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경제적 활동을 의미
  -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와 유사하나, **연대와 협력,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점에서 차이
  - **일자리 부족, 양극화 확대, 복지수요 증대** 등 정부가 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민간 스스로 해결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주요한 법·제도적 체계 등을 갖추는 도입기를 지나 고용·매출 등 **양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진입
  - 개별 부처별로 취약계층 고용확대, 자활지원 등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하여 다양한 지원을 실시중
  - 정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책자금·보증을 제공하고 법인세 등 세제 혜택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부여

###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현황>

구 분 (시 행)	사회적기업 (2007년)	협동조합* (2012년)	자활기업 (2012년)	마을기업 (2010년)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목 적	취약계층 고용 창출, 서비스 제공	조합원 권익 향상, 지역 사회 공헌	수급권자 등의 자활 지원	지역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근거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기초생활보장법	행안부 지침
개수('16末)	1,713개	10,640개	1,149개	1,446개

\* 농협, 수협, 신협, 생협 등 특별법에 의한 8개 개별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기업 범주에 포함

- 사회적경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참고)을 마련·발표
  -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번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을 마련



## 참고

## 사회적경제 활성화 목표 및 발전전략

- ◇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Two-Track 발전전략 마련
- ①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
  - ② (진출분야 확대) 사회적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 집중 육성

###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협력성장 및 포용성장 견인

#### 목표

사회적경제의  
역량 제고

일자리 창출 등  
성장동력 확보

공동체 복원 등  
사회통합

#### 추진 전략

성장 인프라 구축

진출분야 확대

#### 정책 과제

통합 지원체계 및  
정책방향 확립

\* 기본법 제정 및 컨트롤타워 구축

금융접근성 제고

\* 공적금융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

판로확대 지원

\* 공공조달 확대 및 판로개척

인력양성 체계 강화

\*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등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주거환경 분야 진출

문화예술 분야 진출

프랜차이즈 분야 진출

소셜벤처 분야 진출

지역기반 연계 분야 진출

#### 추진 체계

민관협업 및 지역주도의 추진체계 구축  
공공부문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



## II. 사회적금융의 개념 · 현황 및 평가

### 1 사회적금융 개념

□ 사회적금융(Social Finance)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실현을 재무적 이익(Financial Return)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

○ 협의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및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경제활동(공공성이 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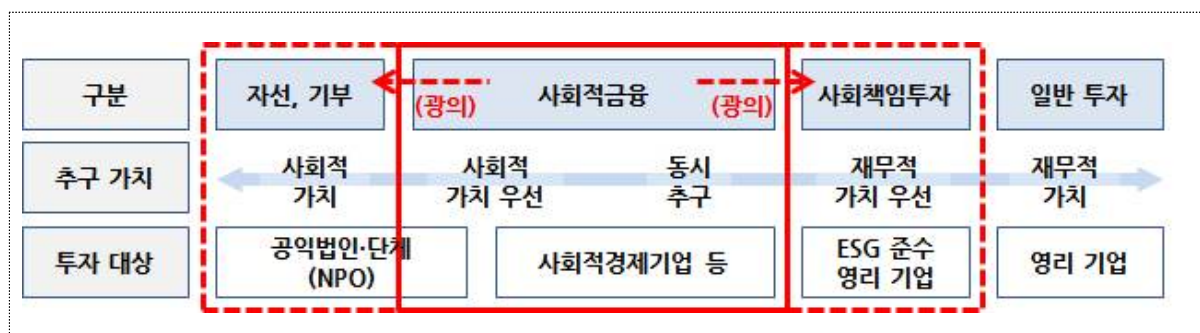
- 임팩트투자(Impact Investing)는 상업성에 기반을 두고 투자 방식으로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비교적 발전된 형태를 의미

○ 광의로는 추후 회수를 전제로 하는 투자·융자·보증뿐 아니라 보조금(Grant)과 자선행위(Philanthropy)도 포함하거나

- 사회적 가치를 넓게 적용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까지 포괄

➡ 금번 방안은 사회문제의 효율적·효과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에 중점

#### <사회적금융 개념>





□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적금융은 정부·공공재원을 중심으로 기존 중소기업·서민 정책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수행중(☞참고)

○ 미소금융\*과 중소기업정책자금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에 대출 ('16년중 각각 9.5억원, 106억원)

\* 미소금융은 민간사업수행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출 실행

○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실시중이며, 서울시의 경우 별도기금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저리융자 ('16년중 207억원)

○ 신보와 지역신보에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일반기업에 비해 보증비율을 높인 특례보증 제공 ('16년중 각각 46억원·94억원)

○ 투자방식으로는 모태펀드內 사회적기업 펀드를 별도조성하여 민간 자금과 매칭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투자 ('16년중 15.5억원)

□ 민간재원을 활용한 자발적인 사회적금융은 다양한 시도가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음

○ 특정 대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과 함께 사회적금융 관련 사업을 실시

\* '13년 KAIST 사회적기업가 MBA 과정 신설 등

○ 일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공공자금外 민간부문에서 재원을 조달 하여 상업적 원리에 기반한 임팩트투자를 수행\*

\* 자금지원뿐 아니라 재무·회계, 경영, 마케팅 등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

○ 사회적경제단체가 공제형태의 자조기금을 조성하여 회원사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존재



## 참고

## 사회적금융 관련 공공부문 사업현황

구분	사업명	내용	사업구조
대부	서민금융진흥원 (‘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에 임대차보증금, 시설·운영자금 등을 대출</li> <li>(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li> <li>(한도) 1억 / (금리) 2~4.5%(사업수행기관별 상이)</li> <li>(상환) 원리금 분할상환(사업수행기관별 상이)</li> <li>(규모) ‘16년 9.5억원 (‘08~16년간 204억원)</li> </ul>	
	중소기업정책자금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사회적기업 포함)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 / (대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li> <li>(한도) 45억원(수도권 이외 기업은 50억원)</li> <li>(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에 연동(약 3%대)</li> <li>(절차) 중진공 접수 및 대상 결정 → 중진공(직접) 또는 금융기관(대리) 신용·담보부 대출</li> <li>(규모) ‘16년 106억원 (‘10~16년간 304억원)</li> </ul>	
	서울시 사회투자 기금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융자 프로그램 운영</li> <li>(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li> <li>(한도) 2억 / (금리) 2% / (기간) 최대 5년</li> <li>(사후관리) 반기마다 재무·사회지표 모니터링</li> <li>(규모) ‘16년 207억원 (총기금규모 703억원)</li> </ul> <p>※ 기금 재원으로 사회적기업 융자 외 소셜하우징 융자,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사회적 프로젝트 융자 프로그램도 운영</p>	
신용 보증	정책성 특례보증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li> <li>(대상) (예비)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li> <li>(한도) 1억원 이내 / (상환) 5년 이상</li> <li>(보증비율) 100% / (보증요율) 연 0.5%</li> <li>(규모) ‘16년 46억원 (‘12~16년간 211억원)</li> </ul>	
	사회적 기업전용 특례보증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에 특화된 특별보증 운용</li> <li>(대상/한도) 사회적기업(4억원), 협동조합(5천만원)</li> <li>(보증비율) 영리 기업·조합 90%, 비영리 기업·조합 100% / (보증요율) 연 0.5% 이내</li> <li>(상환)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li> <li>(규모) ‘16년 94억원 (‘12~16년간 309억원)</li> </ul>	
투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에 투자</li> <li>(규모) 제1호 조합(42억원, ‘11년~, 투자종료), 제2호 조합(40억원, ‘12년~, 투자종료), 제3호 조합(60억원, ‘13년~, 투자종료), 제4호 조합(40억원, ‘15년~)</li> <li>(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청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가자 등</li> <li>(규모) ‘16년 15.5억원</li> </ul>	



□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①태동단계로서 ②절대적인 자금 공급량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③관련 생태계도 미형성된 상황

① 사회적금융시장이 구축된 英·美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태동단계(“조화되지 않은 혁신”☞참고)에 해당

② 성장기에 들어선 사회적경제의 발전정도\*(자금수요)에 비해 금융 공급이 부족한 사회적금융의 과소공급 상태가 지속\*\*

\* 사회적기업 평균 매출액(억원) : ('13) 11.7 → ('14) 12.0 → ('15) 13.4 → ('16) 15.8

\*\* 사회적기업 자금조달('15, 고용부): 정부보조금(51.4%), 특수관계인 차입(43.6%)

-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사회적경제의 자금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만기(인내자본 회망), 지원 수단(융자·보증에 편중) 등에서 수급간 미스매치도 발생

③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등 생태계 구축이 미흡하고, 사회적 성과 평가 등 관련 시장 인프라도 미비(→거래·정보비용이 큼)

- 사회적금융을 복지제도로 혼동하거나 기대수익이 낮은 반면 위험은 높다는 인식 등으로 민간의 자율적 참여가 저조

#### ※ (참고) 사회적금융시장의 발전단계

조화되지 않은 혁신 (우리나라)	시장 구축 (英·美)	시장가치의 포착 (英·美의 5~10년후)	시장 성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요구와 정책 인센티브에 반응하여 산발적인 기업활동이 발생</li> <li>◦ 언뜻 보면 성숙된 시장에서 각각의 혁신가들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추구</li> <li>◦ 시장의 상단을 제외하면 시장경쟁이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의 중심이 발현하기 시작</li> <li>◦ 거래비용을 낮추고 더 많은 활동을 지원하는 시장 인프라가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시장참가자가 사회투자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성장이 일어남</li> <li>◦ 시장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 인프라에 투자한 고정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li> <li>◦ 조직들이 보다 전문화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이 정상상태에 도달, 성장이 둔화</li> <li>◦ 일부에서는 활동의 축소가 일어나기도 함</li> </ul>

\*

출처: Monitor Institute(2009), "Investing for Social & Environmental Impact"



### III. 사회적금융 해외 사례

- ◆ 영국·미국·일본 등에서는 정부재정 및 공공재원(휴면예금)을 바탕으로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참고)
- ◆ 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는 민간 중심의 사회적금융 지원체계가 자생적으로 발달

#### 1. 정부재정 · 공공재원(휴면예금) 중심의 지원체계

##### 가.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BSC”)

- 지속가능한 사회투자시장을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12년 사회투자도매은행(Social Investment Wholesaler)인 BSC를 설립
    - 휴면예금 4억£와 4대 대형은행의 2억£출자로 재원(6억£)을 조성하고, 정부 관여를 최소화\*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
- \* 최대주주인 Big Society Trust의 이사회(이사 8인으로 구성, 영국 내각부 이사 1인 포함)는 BSC 규정(보수·인사규정) 개정과 이사 선임권만 행사
- BSC는 민간자금과 매칭투자를 전제로 사회적금융중개기관(SIFIs)을 통해 간접지원 → 생태계 구축 및 시장조성 기능 수행

##### 나.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 (CDFI Fund)

- 재정으로 기금(CDFI Fund)을 조성, 기금에서 인증받은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을 통해 저소득지역 개발\*을 간접 지원(‘95~)
- \* ① CDFI 프로그램: CDFI를 통해 교부금, 대출, 지분투자 등 집행, ② BEA(Bank Enterprise Award): 은행의 CDFI 투자액 일부를 보전, ③ 세제지원(NMTC) 등
- CDFI는 민간자금 매칭방안 등을 마련하여 CDFI 프로그램에 응모 → 기금은 엄격한 경쟁을 통해 지원대상 CDFI를 선정

##### 다. 일본의 휴면예금을 활용한 공익사업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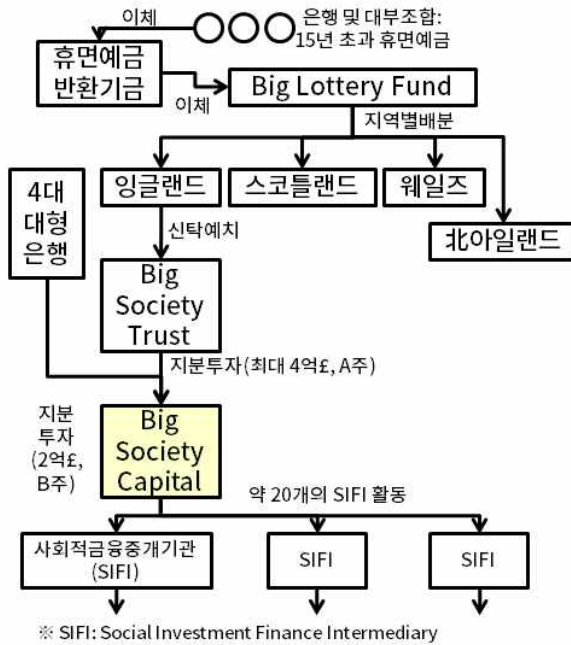
- 일본은 최근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비영리재단을 통해 사회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중(‘16년 법제정 → ‘19년 지원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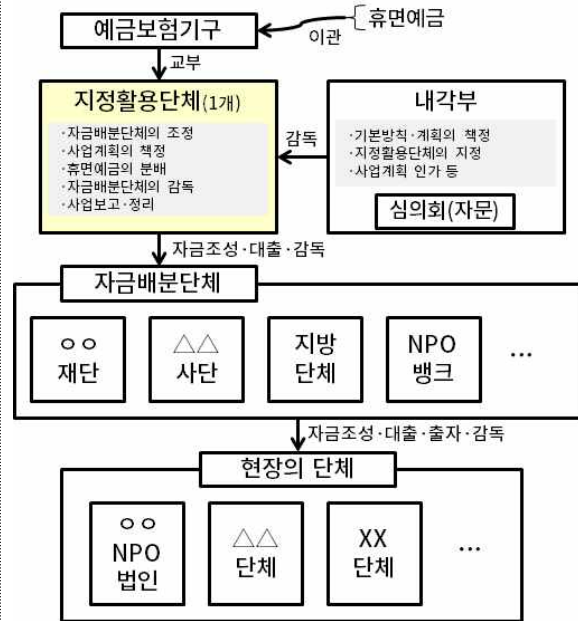
## 참고

## 영국 · 일본 · 미국의 사회적금융 지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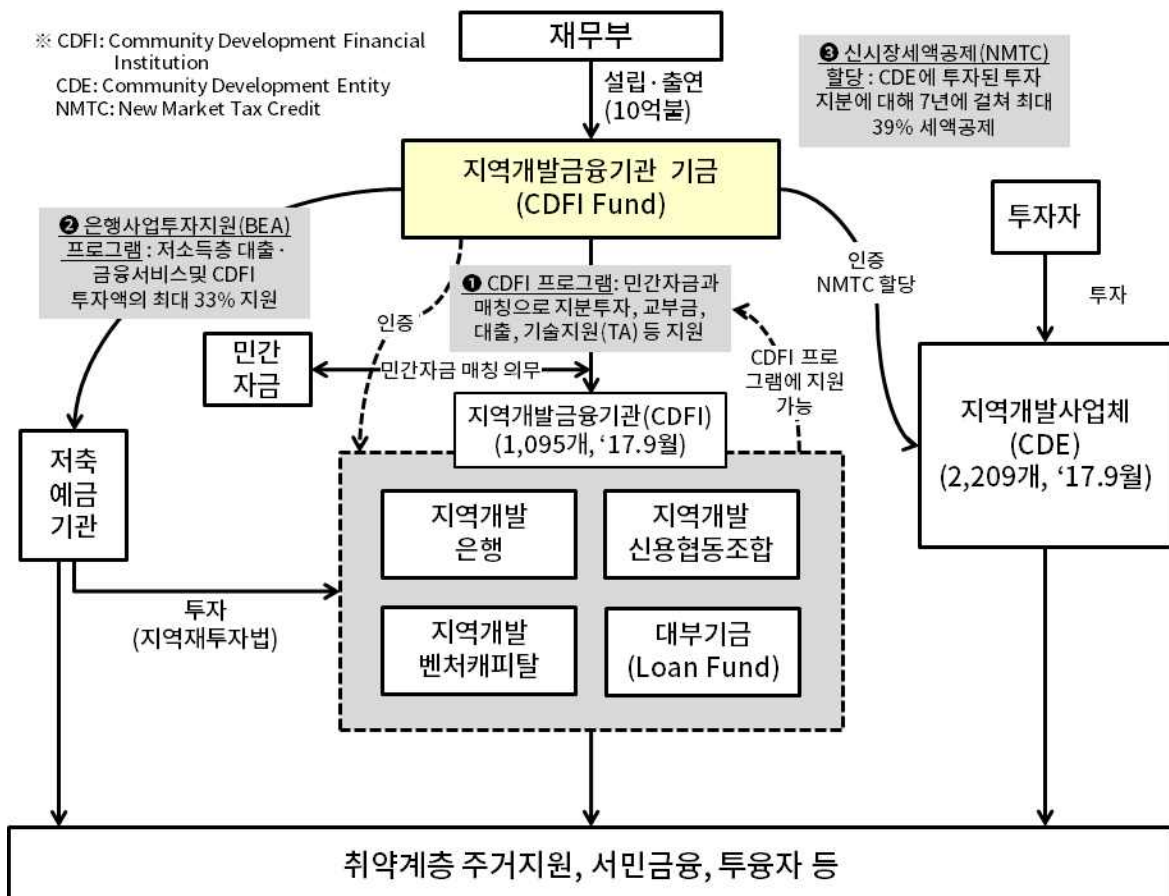
###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 <일본 휴면예금 활용 구조>



### <미국의 CDFI Fund의 구조>





## 2. 민간 기반의 자금지원

### 가. 협동조합금융 방식

□ 협동조합이 발달한 캐나다·스페인 등에서는 **신용협동조합**(협동조합 은행), **협동조합 연대기금** 등의 금융지원체계가 발달

① (加) 데잘랭그룹\*은 **연대경제금고**(Caisse d'économie solidaire, '71)를 설립하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사회적금융을 제공

\* 1900년 신용협동조합인 인민금고에서 출발, 금고간 연합·합병, 보험·신탁 등 사업다각화(40's~) 및 금융그룹화('90s~)를 거쳐 성장한 총자산 2,584억\$의 신탁금융그룹

② (西) 몬드라곤 협동조합그룹의 **라보랄쿠차**(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신탁, '59)는 그룹내 조합간 자금 재분배 및 사업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

### 나. 사회적은행 방식

□ 네덜란드·이탈리아 등에서는 예금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적기업 등에 투융자하는 **사회적은행**이 활동

① (蘭) 트리오도스은행(Triodos Bank)은 은행업 인가를 받아('80), 저리로 조달한 예금으로 사회적기업, 환경기업 등에 신용을 제공

\* 총자산 91억€, 예수금 80억€, 대출 57억€, 세전이익 0.4억€('16末 기준)

② (伊) 방카에티카(Banca Popolare Ethica, 신탁, '99)는 엄격한 윤리성을 갖춘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경제를 대상으로 신용을 제공

### 다. 기타

□ 소액 다수의 투자자(기부자)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프로젝트 등을 중개하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지원체계가 존재\*

\* 미 KIVA, 영 SSE(Social Stock Exchange) 등이 이에 해당

□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에 경영 지원 및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벤처자선가**\*도 활동중

\* 전통적인 기부·후원 등 비영리금융 수단부터 대출·투자·메짜닌, 구조화 금융까지 다양한 금융수단 제공 → 영국의 Impetus-PEF, 일본의 일본벤처자선기금(JVPF) 등



## IV.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방안

### 1

### 기본 방향

- ①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자금의 도매공급 기관인 사회가치기금(가칭, Social Benefit Fund) 설립을 지원
  - ‘자금공급→매출액↑→자금회수→자금공급↑’ 등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자금공급과 인프라 구축에 중추적 역할 수행
  - 민간이 중심이 되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취지를 감안, 민간주도로 설립·운영되도록 하고 정부는 간접 지원
- ② 투자자-사회적경제기업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금융과 사회 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육성
  - \* 1) 투자자와 사회적경제기업간 사이에서 거래·정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중개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2) 투자대상 발굴, 3) 관련 금융상품 개발 등 수행
  - 사회가치기금은 객관·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중개기관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
  - 기존 중개기관의 역량강화와 신규 중개기관의 출현을 위해 체계적인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방안 마련·추진
- ③ 엄격한 선관주의의무 준수가 필요한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사회·재무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평가체계 마련
  - 여타 투자기회에 비해 낮은 기대수익률\*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
  - \* 투자자는 사회적경제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자신의 투자수익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회적금융의 기대수익률이 낮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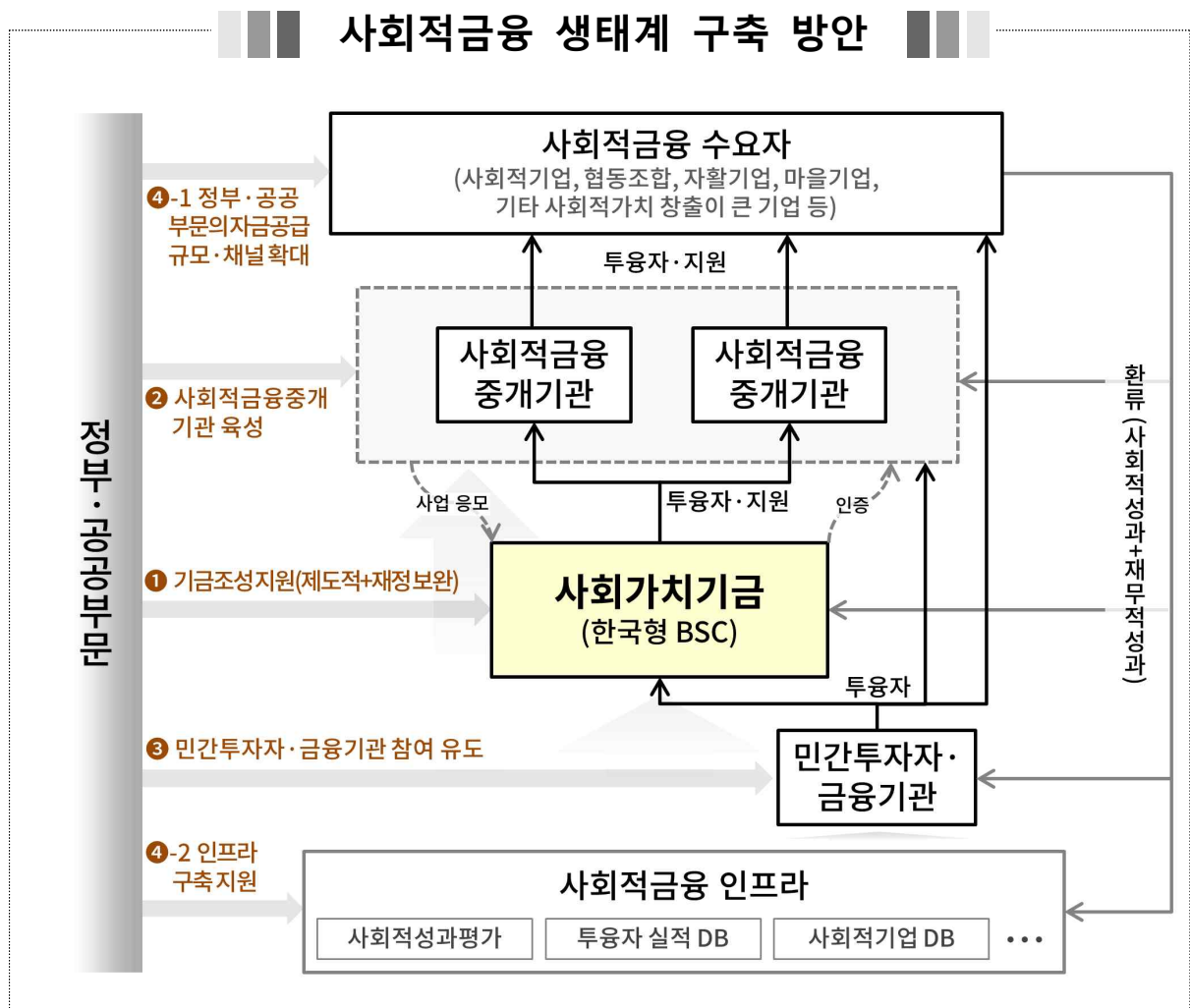
④ 사회적금융시장 구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 우선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

-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지원채널과 규모를 확충하고 신협·새마을금고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

- 투자·대출·보증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확보하여 성장단계에 맞게 자금을 지원하되, 추후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 정부·공공부문의 자금공급 과정에서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투융자실적 DB 등 인프라 구축 병행 추진

⑤ 사회적경제 성장·발달을 위해 인력·판로·보조금 등 여타 지원방안과 사회적금융 방안의 유기적 연계강화 추진





◆ 사회적금융시장의 3대 플레이어로서 ②사회가치기금의 조성, 사회적 금융중개기관 육성 및 민간투자자·금융기관 참여 확대 추진

### 가. 사회가치기금(가칭, Social Benefit Fund, “한국형 BSC”) 설립 지원

#### □ 민간 자율적으로 사회적금융 민간기금\* 설립 추진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가치기금의 법적 설립근거 명시

-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출자 및 기부 등으로 주요 재원 확보
- 기금 운영주체는 출자·대출·출연·보증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형태를 채택
- 정부로부터 독립성, 투명성, 책임성,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의 기금운용 원칙과 소유·지배구조 마련

#### □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등 도매기금(wholesaler)으로서 역할을 수행

-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주로 투·융자하되,
- 일정한도내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이 큰 일반 중소기업,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도 투·융자대상에 포함

####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의 규모·자금수요,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5년간 3천억 규모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

- 성급한 규모 확대보다는 공급·회수 등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

#### □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가치기금이 자율적으로 설립·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및 재정 보완을 지원



- 정부·지자체에서 사회가치기금에 출연을 추진\*하고 미소금융 재원에서도 출자·출연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법 개정\*\* 추진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지자체의 사회가치기금 출연·출자 근거 마련

\*\* ❶ 법률의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명시, ❷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민간기금에 출연·출자)을 업무로 규정

- 사회가치기금의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정부·지자체에서의 출연·출자는 민간재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허용
- 정부·지자체 등에서 시행중인 사회적 금융 관련 기존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사회가치기금에 이양 추진
- 기금설립·운영에 필요한 제도마련, 민간재원 확보 및 다양한 지원 수단 활용 등을 위한 인센티브 강구 등

□ 민간의 자율적인 논의와 자금모집 등을 통해 기금설립을 추진해 나가되, 정부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설립 지원

- 민간주도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추진단」 설립
- 사회적경제 연합단체 추천자, 사회적경제 금융기관\*, 사회적금융 전문가, 투자역사가 있는 기관 대표자, 법률가 등으로 구성

\* 예)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 정부(기재부 등)는 추진단 요청시 논의에 참석
- 추진단은 사회가치기금 설립을 위한 세부사항 검토, 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자금 모집 등의 활동 전개

- 국제 임팩트투자 민간협의체(GSG\*) 가입 지원을 통해 미국·영국 등의 사회적금융 선진사례를 도입·자문하는 창구로 활용

\* **Global Social Impact Investment Steering Group** : '13. G8 정상회의시 영국주도로 설립한 임팩트투자 활성화 민간협의체(16개국 가입중), 우리나라에서는 GSG 가입을 위한 민간의 임팩트투자자문위원회가 출범('18.2월)할 예정

□ 올해안에 사회가치기금 설립·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

- 2월초 사회가치기금 추진단 출범과 운영을 적극 지원



## 나.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Certification)제도 도입

- 사회가치기금은 금융중개기관의 사회적금융 지원경험·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

\* 인증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회적금융협의회에서 구축한 중개기관 DB를 활용하고, 이후에는 매년 중개기관 현황을 조사하여 업데이트

- 인증대상은 사회적금융을 주로 수행하는 중개기관뿐 아니라 사회적금융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일반 금융기관\*도 포함

\* 사회적금융에 전문성 또는 의지가 있는 신기술사, 벤처캐피탈(VC), 신탁 등

- 인증요건은 법적형태, 소유구조, 사회적금융 경험·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

- 사회가치기금은 인증받은 사회적금융기관에게 다양한 사회적금융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 사회적금융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이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여 민간기금에 대해 자금지원\* 요청도 가능

\* (예시) 사회적금융 관련 투융자를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사회가치기금의 보증,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시 이에 상응한 기금의 출자지원 등

- 사회가치기금은 중개기관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미인증 중개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운영

\* 중개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금융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재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가치기금이 중개기관을 지원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동법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금융기관 및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 지정제도와 운영상 연계 강화

## 다.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 민간기반의 사회적금융 사례분석 등 연구용역을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수성·다양성 등을 고려한 세제지원 등 지원방안 마련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역금융 강화를 위해 도입예정인 지역재투자제도 도입과정에서 사회적금융 관련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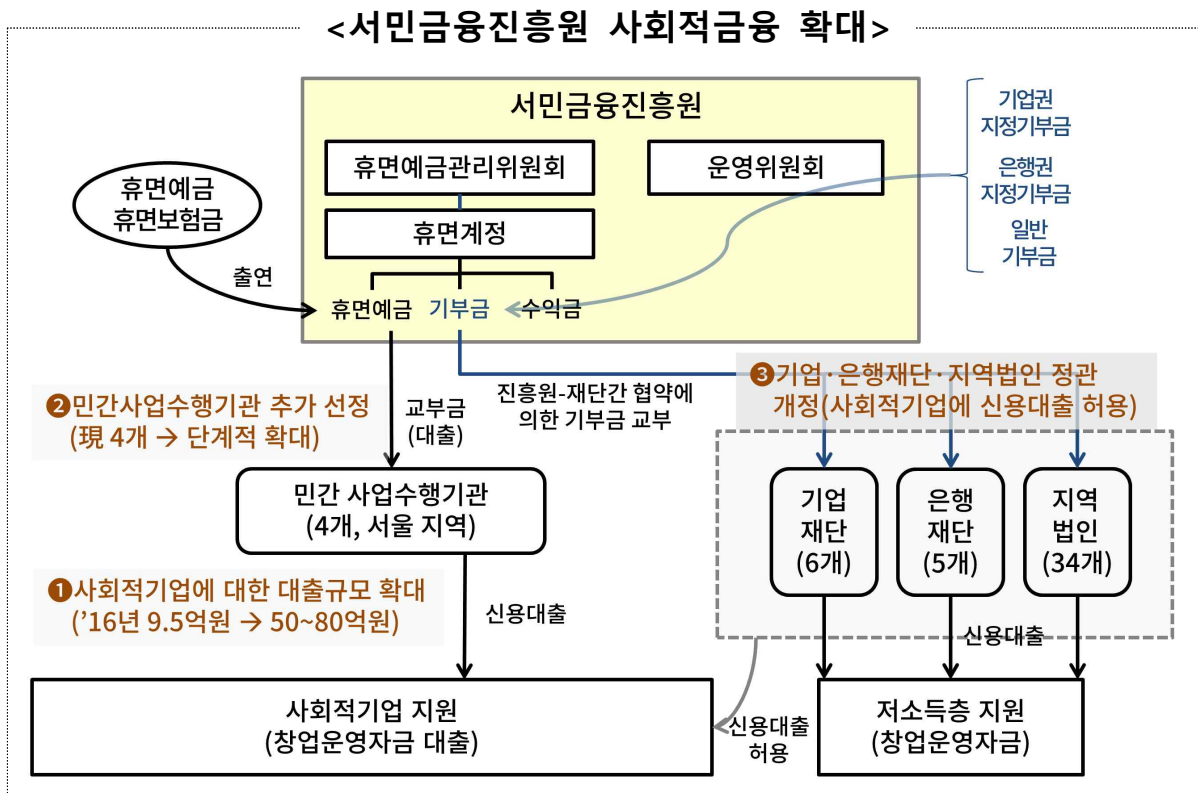


- ◆ 사회적금융에 대한 투자경험을 축적하고 성공사례의 발굴·확산을 위해 정부·공공재원의 공급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 가. 대출 확대

### ①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단계적으로 연 50~80억원까지 확대)

- 휴면예금 재원을 활용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예비)사회적기업 대출 한도를 연간 50~80억원 규모까지 확대('16년 9.5억원 지원)
  - 사업역량 및 지역적 배분 등을 감안하여 민간사업수행기관을 추가 선정(現 서울 4개→서울 외 지역포함 단계적 확대)
- 별도 기부금으로 운영중인 진흥원의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이 사회적기업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관개정 협의 추진
  -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이 서민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대출시에도 기존 서민금융과 유사한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





##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확대('18년 400억원)

### ○ 사회적경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2.0~3.35%)·장기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

-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지원 확대('17년 200억원 → '18년중 350억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창업, 성장, 긴급경영안정 및 재도약 등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금 지원

- 시설자금(10년, 45억원 이내), 운전자금(5년, 5억원 이내) 융자지원

### ○ 사회적경제 관련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 '18년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사회적경제조직 전용자금으로 50억원 신규편성(자금수요에 따라 필요시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

-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대출 평가모형을 개발\* ('18년 상반기)하고,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18년 하반기)

\* '18년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해 적용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수요를 고려하여 자금 구성 및 지원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조건(안) >

구 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출한도	2억원	1억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상환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나. 보증 확대

### ①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확대('17년 66억원 → '18년 400억원)

-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계정을 신설하고 재정 등 지원을 통해 향후 5년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 공급 추진
- 별도 지원계정 신설前에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 운영('18년중 400억원 신규 보증공급)
- 현재 운영중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사업의 기업당 보증 한도, 운전자금 한도사정 특례\* 등을 확대

\* 매출액 등 재무지표가 부족하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구분		현행	개선
기업당 보증한도		1억원	3억원
한도사정	사회적기업	5천만원	1억원
특례	협동조합	3천만원	5천만원

- 마을기업·자활기업에 대한 보증 신상품\*을 도입·운영

\* (보증한도) 1억원, (한도사정특례) 3천만원 이하

-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우대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맞춤형 평가체계를 운영

\*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항목, 신용등급현금흐름 등 신용도취약 항목 적용 배제 등

### ②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확대('17년 97억원 → '18년 150억원)

- 현행 사회적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자활기업까지 특례 보증 대상을 확대
- 보증한도는 조합·기업당 최대 4억원 이내로, 보증비율은 100% 전액 보증으로 운영하고 보증요율은 연 0.5%로 우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각 지역신보의 특례보증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함\*으로써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

\* 평가결과는 중앙회의 재보증료 차등화 등에 반영



## 다. 투자 확대

### ① 성장사다리펀드 內 '사회투자펀드' 조성('18년 300억원)

- 성장사다리펀드 출자 및 민간·공공자금 매칭을 통해 우선 300억원 규모로 1차 조성('18년 상반기)

\* '17.11.28 사회투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 '사회적기업 투자 분야' 펀드는 위탁운용사 선정 완료('17.12.20), '임팩트 투자 분야'는 위탁운용사 접수중

- 투자 집행 상황을 보아가며 향후 5년간 최대 1,000억원까지 단계적 확충 추진

- 펀드 결성금액의 일정비율(60~70%)을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지닌 기업에 투자

- 인증을 받거나 외부 민간전문기관의 '사회적성과 평가'를 거쳐 사회적 성과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정

- 일반 펀드 대비, 기준수익률은 낮추고 성과수익률은 높여\* 운용사의 적극적인 투자 및 사회적가치 제고 활동 유도

\* 운용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을 차등 적용  
(예 : 성장사다리펀드 2% 내외, 민간 4% 내외)

- 사회적기업의 성숙도·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투자 방식과 대출 방식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성장사다리 또는 희망출자자 출자금의 일정 비율(예: 50%, 30%) 이 내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하여 민간출자자 부담을 경감

- 인내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펀드 존속기한을 장기(10년 내외)로 설정



## ②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추가 조성('18년 75억+α)

\* '11년부터 '15년까지 4차에 걸쳐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182억원 조성

- '18년 예산 75억원과 민간출자금(α)\*으로 펀드를 조성·운용하고, '19년 이후에는 예산에 추가 반영을 검토

\* 민간출자금은 총 출자금(예산 75억+α)의 30% 이상 모집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뿐 아니라 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으로 투자대상을 확대
-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대상에 투자하고, 나머지도 가급적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일반 중소기업 등에 투자
- 펀드 재원별로 기준수익률을 차등화하여 민간출자 활성화 및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  
(기준수익률 : 모태펀드 출자 0%, 민간 7%)

## ③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임팩트펀드 조성·운용('18년 1,000억원)

\* 재무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기업

- 총 1,000억원 내외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캐피탈(VC) 등이 펀드를 운용
- 모태펀드에서 펀드에 80%를 출자(800억원 내외)하고, VC 등 운용사가 나머지 20%를 민간 투자자로부터 모집
- 운용사 선정 시, 운용사가 투자기업의 사회적 성과(공공성)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토록 할 예정
- 성과창출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투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펀드 존속기한을 장기로 설정
- 모태펀드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및 민간투자자에 대해 콜옵션을 부여\*하여 민간의 투자 참여확대를 유도
- \* 이익발생시 민간투자자에게 모태펀드지분 매입권(콜옵션)을 부여



※ (참고) 사회투자펀드·사회적기업 모태펀드·임팩트 펀드 비교

구 분	사회투자펀드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임팩트투자 펀드
주 재 원	성장사다리	모태펀드(고용부)	모태펀드(중기부)
투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등	소셜벤처
조성규모	'18년 300억원(5년내 최대 1,000억원 확대 검토)	'18년 75+α억원(모태 75억원, 민간 α)	총 1,000억원(모태 800억원, 민간 200억원)
존속기간	10년 내외	8년	10년 내외
특 징	투자 및 대출 혼용	지분, 전환사채 등 투자	지분 투자

4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도 제고

- 사회적기업이 '업력제한\*' 없이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현행 크라우드펀딩은 업력 7년 이내의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예외)만 참여 가능 → 상당수 사회적기업이 인증기간 소요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 유망 사회적기업의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시 초기단계에서 투자하는 '마중물 펀드'를 마련·지원(성장사다리펀드, '18년중 50억원 규모)

- 아울러, 중개업자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 사회적기업 전용 별도 페이지('사회적기업 전용관') 마련을 유도

- 예탁결제원-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 발굴 프로젝트'를 개최\*하여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도모

\* 예탁결제원 나눔재단을 통해 중개업자의 실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50% 지원을 추진 (→연간 50개 내외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상)

- '사회투자펀드'의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중개실적이 우수한 중개업자를 포함 (⇒중개업자 기업발굴 노력 유도)



## 라. 협동·지역금융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 ①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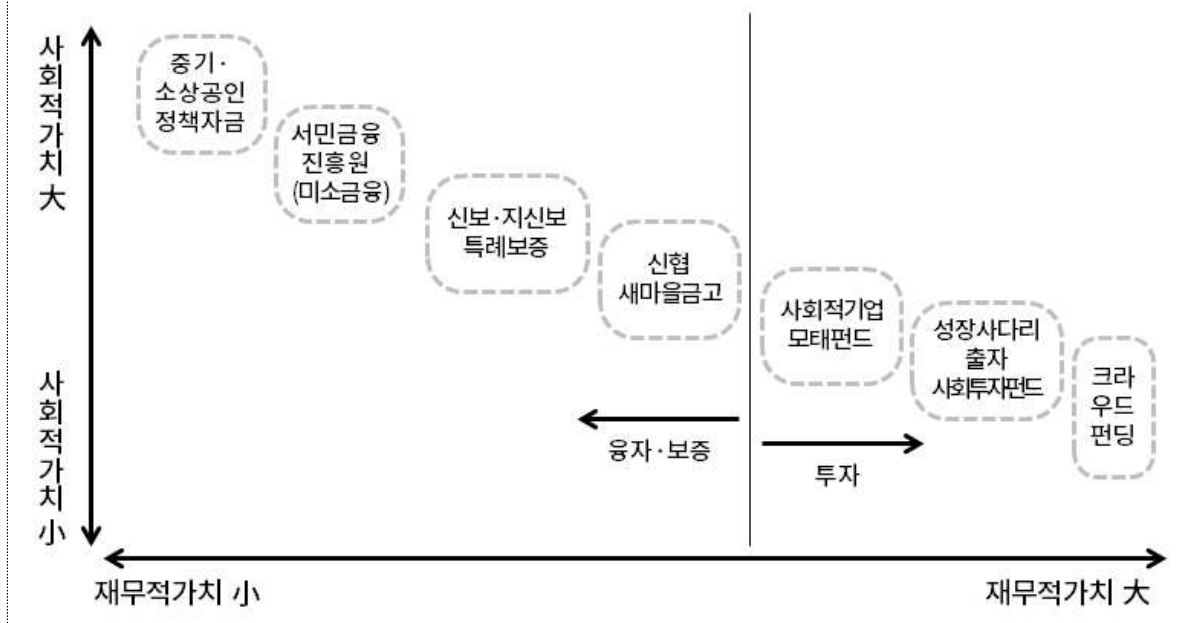
- 신협중앙회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기금을 설치 (年 100억원 규모)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
  - 전용상품 및 별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신협을 통해 지원하되, 거액의 경우에는 중앙회가 직접 심사·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 신협의 사회적기업 등 他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사회적경제기업의 신협 법인조합원 가입유도 등 상호유대 강화

\* 신협이 他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협법 개정을 추진

### ② **새마을금고**의 지역·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 지자체-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지신보와 연계하여 보증부대출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실시
- \* 단, 지역내에서 보증부대출을 취급하는 금고의 범위를 제한하고, 해당 금고가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심사역량을 내재화하도록 유도
- 새마을금고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내규 개정

#### ※ (참고) 사회적금융 사업주체별 중점 자금지원 대상





◆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확대과정에서 심사·평가 및 전달체계 등 인프라 구축을 병행·추진

### 가. 사회적금융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 ① 사회적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운영

- '사회적금융협의회'에는 관계부처, 담당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여 상호 연계·협력을 강화

\* 서민금융진흥원,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 신보.지신보, 신협, 새마을금고 등

-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간 지원 연계 강화\*, 지원정보 공유, 인프라 공동조성, 사후관리방안 등을 협의

\* 사회적경제기업의 인큐베이팅·창업단계에서 성장·재기단계까지 유기적 연계

- 정부보조금사업·인력·판로지원사업 등과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과 기타 사업담당기관간 협력도 강화

#### ② 사회적금융 유관기관간 대출·보증·투자 등 정보공유 확대

- 지원내용·실적과 재무·사업 등 기업정보를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간 공유하여 중복지원 방지와 심사·평가방법 개선에 활용

-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은 주기적으로 세부 금융지원 실적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금융지원의 투명성 제고

- 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기업정보투자마당내(IBK) 전용페이지를 개설하고, 유망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를 게재

#### ③ 기업마당\*내 사회적금융 지원메뉴를 개설하여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지원 상품·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공시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한 곳에 모아 알기 쉽게 제공하는 정책포털사이트([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나.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 ①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 서민금융진흥원의 민간 사업수행기관을 사업역량 및 지역적 배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선정(현재는 서울지역에만 4개)
  - 서민금융진흥원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사회적기업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수행기관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동 위원회에서 민간 사업수행기관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 운영비 지원, 교부금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
- 사회투자펀드 등 사회적금융 관련 투자자금 운용시도 일반 운용사 외에 사회적금융에 전문성을 갖춘 중개기관의 참여 확대
- 신보·지신보 보증 및 기타 정책자금 운용에 있어서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 ② 사회적금융중개기관과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간 연계 강화

- 중개기관의 법적형태 및 지원실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기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 중개기관 DB를 구축·운용
  - \* 대출 중심 중개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투자 중심 중개기관은 성장사다리펀드에서 담당
  - 중개기관 DB는 사회적금융협의회 공동의 자산으로 구축하여 위탁 기관 및 지원 대상 선정 등에 활용
  - 사회가치기금 설치 이후에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중개기관이 사회적금융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업계의견 전달 및 네트워크·파트너십 형성을 촉진



## 다.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마련 등

### ① 사회적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 마련 → 금융지원에 활용

- 우선,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별로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기여도 등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평가체계\* 구축·운영

\* 고용부의 '사회적가치지표' 등을 참고하여 고용안정, 지역사회 기여, 사회적 환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재무적 특성과의 적정 가중치를 설정

- 추후,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마련

- 고용부 등 현재 사회적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과 공동 작업으로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평가체계의 수용성을 제고
- 성과 측정시 자의성을 배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량 가능한 성과(outcome) 위주의 평가체계를 마련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면서 측정대상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각각 객관적 측정방법을 마련

-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도를 등급으로 평가·표시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 등급제로 발전시키는 방안 검토

### ② 정부·공공재원의 사회적금융 선별기능 보완

- 정부·공공재원으로 지원시 민간자금과의 매칭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선별기능 보완을 추진

- 신보과 지역신보의 보증에 있어서도 부분보증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선별기능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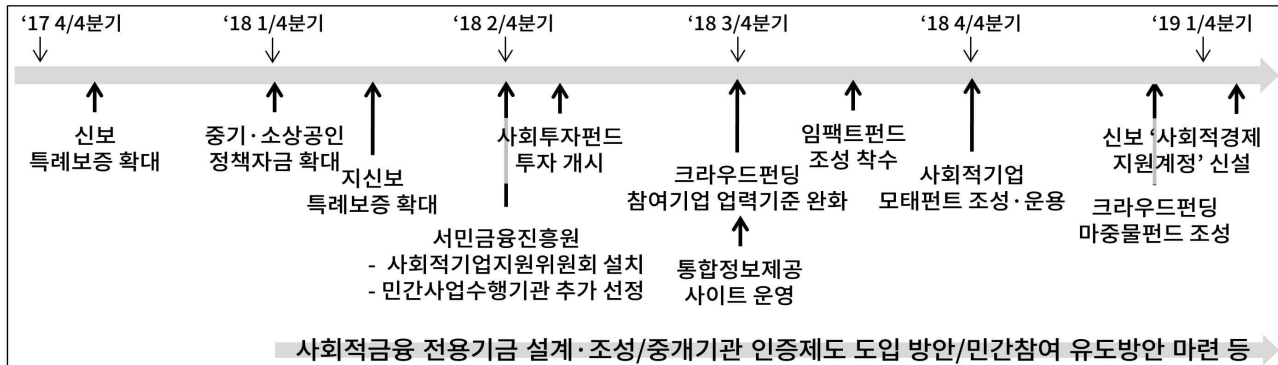
※ 이러한 시장의 선별 기능의 활용은 민간의 사회적금융 투융자 경험을 확대 시키는 효과도 존재

### ③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별로 사회적금융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성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외부 공개



## V. 향후 추진 일정

- '18년중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1천억원 이상의 금융지원(대출 450억원, 보증 550억원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 개별 정책과제는 다음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사회적금융 협의회를 통해 이행 현황 및 성과를 관리

### <과제별 추진 일정>

정책과제	조치사항	일정 · 부처	
1.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			
① 사회적금융 전용기금 조성		'18년중	기재부
②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제도 도입		'18년중	기재부
③ 민간자금 ·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18년중	기재부
2.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			
가. 대출 확대			
① 미소금융 금융지원 확대	▶ 미소금융 재원 활용 확대	'18.2분기	금융위
	▶ 기업·은행재단 등 정관 개정	'18.2분기	금융위
② 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 중기 정책자금 확대	'18.1월	중기부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18.1월	중기부
나. 보증 확대			
① 신보 보증지원 확대	▶ 사회적경제 지원계정 신설	'19년	금융위
	▶ 특례보증 지원 확대	'17.10월	금융위
② 지신보 보증지원 확대	▶ 특례보증지원 확대	'18.2월	중기부



## 다. 투자 확대

① 사회투자펀드 조성	▶ 사회투자펀드 조성·운용	'18.2분기	금융위
②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조성·운용	'18.4분기	고용부
③ 임팩트펀드 조성	▶ 임팩트펀드 조성·운용	'18.하반기	중기부
④ 크라우드펀딩 활용도 제고	▶ 참여기업 업력기준 완화	'18.6월	금융위
	▶ 마중물 펀드 조성·운용	'18.12월	금융위
	▶ 사회적기업 발굴 프로젝트	'18.상반기	금융위

## 다. 협동·지역금융 역할 강화

① 신협·의 역할 강화	▶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기금 설치	'18년중	금융위
	▶ 신협·의 타법인 출자 허용	'18년중	금융위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상품 마련	'18.6월	금융위
② 새마을금고 역할 강화	▶ 새마을금고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18년중	행안부
	▶ 지자체 시범사례 발굴	'18년중	행안부
	▶ 새마을금고의 사회적경제기업 출자 허용	'18년중	행안부

## 3.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 가. 사회적금융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①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	▶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운용	'18년중	금융위
②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확대	▶ 세부 금융지원 실적 공개	'18.하반기	관계부처
	▶ 기관간 지원실적 등 공유 확대	'18.하반기	관계부처
	▶ 기업·마을·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정보 게재	'18.6월	중기부

### 나.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①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 민간사업수행기관 추가 선정	'18.2분기	금융위
	▶ 기타 중개기관 활용 확대 검토	'18년중	금융위/중기부
② 사회적금융중개기관과 유관기관간 연계 강화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실태조사	'18.하반기	협의회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협의회 참여	'18.하반기	협의회

### 다.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마련 등

①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마련	▶ 담당기관별 맞춤형 평가체계 운영	'18년중	관계부처
	▶ 표준 평가체계 마련	'19년	협의회
② 정부공공재원의 선별기능 보완	▶ 신보·지신보 선별기능 보완방안 검토	'19년	금융위/중기부
③ 성과보고서 작성·공개	▶ 담당기관별 성과보고서 작성·공개	'19년	관계부처



---

#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2018. 5. 16

관계부처 합동







---

#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2018. 5. 16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I. 추진배경 .....	89
II. 소셜벤처 현주소 .....	90
III. 기본방향 .....	91
IV. 추진방안 .....	92
1. 소셜벤처 판별 및 가치평가체계 구축 .....	92
2. 청년 소셜벤처 HUB 구축 .....	96
3.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	98
4. 소셜벤처 성장 촉진 .....	100
V. 향후 추진일정 .....	105
<참고> 소셜벤처 국내외 성공사례 .....	106



## I. 추진배경

### □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부각

- 유럽 등은 사회적경제가 이미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월)'을 계기로 본격 추진중

\* 사회적경제의 고용비중('15년) : (EU) 6.5%, (한국) 1.4%

- 다만,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아직 부족

\* 사회적기업 영업이익 발생기업 비중(% , 노동부) : ('14) 20.8 → ('15) 24.4 → ('16) 50.1

### □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소셜벤처가 청년들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출현중

- 성수동을 중심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높은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 등이 모여 Open Innovation을 실현하는 소셜밸리 형성

\* 헤이그라운드, 소셜캠퍼스 溫 등에 약 250여개 소셜벤처 기업, 투자·지원 기관 입주

### □ 청년 일자리창출 잠재력과 성장성이 큰 소셜벤처 활성화 여건조성 필요

- 소셜벤처는 ① 청년고용 비중이 높고, ② 창업에 따라 고용창출 기대

① 소셜벤처 대표 20개사('18) : 창업당시 대표자 평균연령 30.3세, 근로자중 청년 비중은 81.2% (전체 근로자수 469명, 청년 381명, 업체당 19.1명)

② 소셜벤처 경연대회 평균경쟁률('13 ~ '17) : 28.2대1 (183팀 수상에 5,163팀 지원)

- 혁신적 제품 생산과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소셜벤처의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일부 기업은 매출증가\* 시연

\* 소셜벤처 대표 20개사 평균 매출액(억원) : ('15) 4.1 → ('16) 6.8 (68.6% 증가)

#### 사례

• **(주)루미르('14. 창업)** 적정기술을 활용, 폐식용유, 양초 등 저가 자원을 이용하는 고효율 램프 개발(기존 태양광 램프 대비 50% 이상 저렴), 저개발국 보급 및 판매  
→ 대표 나이 29세, 청년고용비중 100%(전체 9명)



• **토도웍스('16. 창업)** 수동휠체어에 대해 전동 조작이 가능하도록 토도드라이브 개발, 큰 개조없이 간단하고 저렴하게 장착 가능(전동휠체어 가격 약 700만원→토도드라이브 176만원),  
→ 대표 나이 43세, 청년고용비중 54.5%(11명중 6명)





## II. 소셜벤처 현주소

□ 민간의 자생적 움직임을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정책·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수준

- ① (개념·인식)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사회적기업과 혼동하는 등 소셜벤처의 혁신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

**일반인** "소셜벤처요? 사회적기업과 같은 건가요?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소셜벤처 기업가** "사람들이 소셜벤처를 잘 모르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게 인정 해주지 않네요. 그렇다고 굳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싶지는 않고요"

- ② (가치평가) 기업가치 평가에 재무적 성과만이 반영되고 계량화가 어려운 사회적 가치는 제외되어 소셜벤처의 실질가치가 저평가

- 반면, 영국·미국 등은 GIIRS, SROI 등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모형이 통용되어 유망 소셜벤처 발굴 및 투자에 널리 활용

\* GIIRS(사회적기업 평가모형) : 분석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기업 성과 평가 및 비교분석  
SROI(사회적 투자수익률) : 금융투자 대비 사회적·환경적 순이익을 화폐가치로 환산·측정

- ③ (자금) 투자·용자 등 외부자금조달이 어렵고, 소셜벤처에 적합한 수단인 임팩트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 ('15년 540억원)

\* 재무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추구하는 투자를 의미

세계 임팩트투자 규모(조원) : ('14)10.5→('15)15.2→('16)22.1→('17) 25.9

**소셜벤처 기업가** "일반 VC들에게 우리는 수익성이 낮고 회수에 장기가 소요되어 투자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창출하는 사회성과도 함께 고려해주고,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해 줄 수 있는 투자자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④ (판로) 브랜드의 낮은 인지도, 취약한 영업망 등으로 국내외 판로 확보가 제한적이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음



### Ⅲ. 기본방향

#### 지속성장 가능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소셜벤처  
집중지원 HUB 구축



소셜벤처  
청년창업 활성화



금융·기술개발·판로 등  
분야별 특화지원

#### 소셜벤처 개념 명확화 및 가치평가체계 확산

#### 《참고 : 기존 정책대상과 차이점》

구분	벤처기업 (3만5천여개)	사회적기업 (1,937개)	소셜벤처기업 (500여개 추정)
법적정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없음
정책대상 판별기준	<b>확인서 발급</b> * 벤처기업에 금융을 공급하는 기관이 선별·확인	<b>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b> *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 등 인증요건 충족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판별
추구가치	<b>사회성《혁신성</b> * 신기술기반 고수익 창출	<b>사회성《혁신성</b> *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b>사회성&amp;혁신성 동시 추구</b> * 혁신기반 사회가치 창출



## IV. 추진방안

### 1 소셜벤처 판별 및 가치평가체계 구축

#### ① 민간 주도의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마련

- 소셜벤처 개념 명확화와 소셜벤처 여부 판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유연한 판별 가이드라인(Guide line) 제시('18.하)
  - 인증제는 진출분야의 다양성 및 자율성을 저해하고 해외(미국, 영국 등) 역시 획일적 기준을 도입하지 않는 점을 고려, 소셜벤처 저변 확대를 위해 유연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

##### < 광의의 소셜벤처(예시) >

사회성 판단기준(1개 이상 충족)	혁신성 판단기준(1개 이상 충족)
① 사회적경제기업	①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벤처기업·이노비즈 기업 등)
② UN SDGs 17개 분야 영위(물, 환경 등)	②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
③ 정관, 미션 등 경영 방침에 사회적 가치 추구 명시	③ 연구개발조직 보유 여부
④ 취약계층(어르신, 장애인 등) 고용	④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지표, 고용 등 지속적 성장여부

\* 사회성(1개 이상)과 혁신성(1개 이상)이 동시에 충족시 광의의 소셜벤처로 인정

- 광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간 자문단\*을 구성하여 소셜벤처 판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민간 전문가, 소셜벤처 기업가, 임팩트투자사, 공공기관(기보, KVIC, 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 협의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정부는 필요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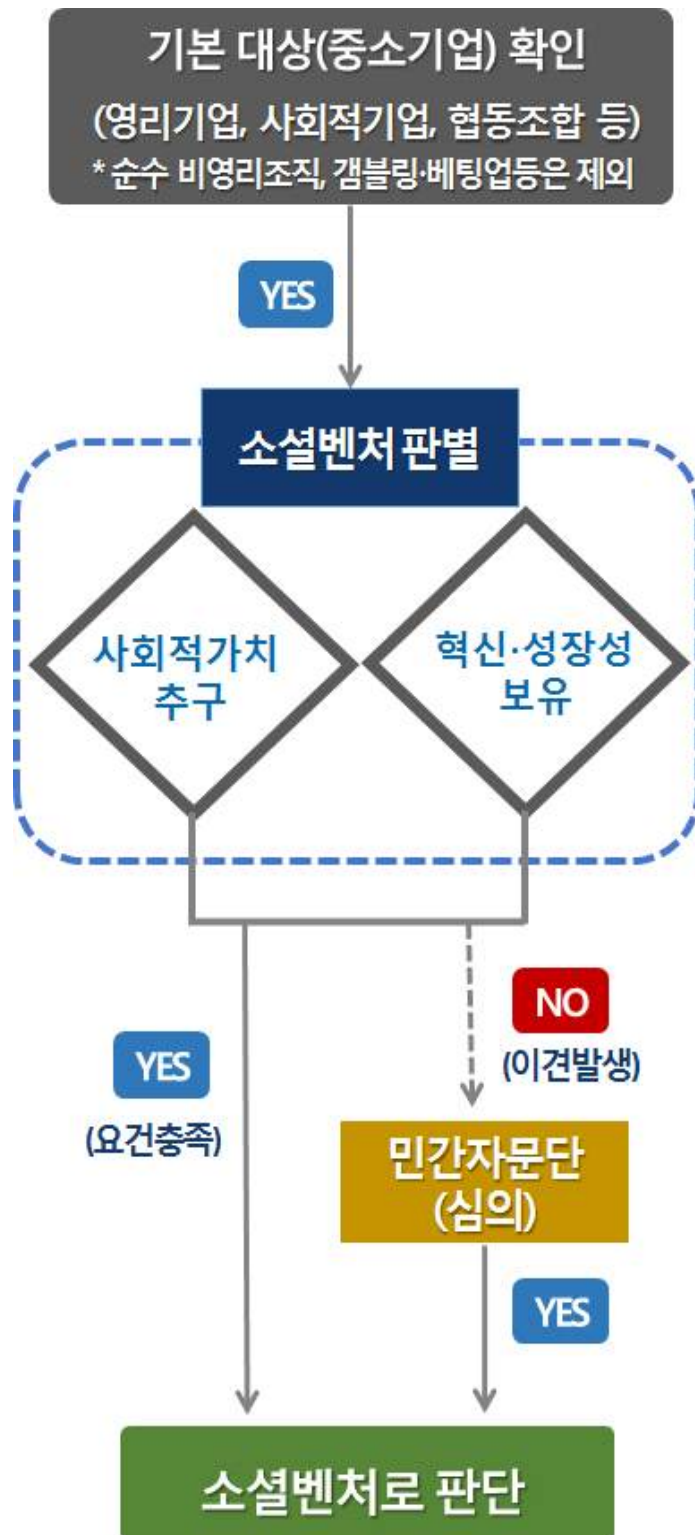
- 기관별(임팩트투자사, 은행, 공공기관 등) 지원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자체적으로 활용

- 정책(보증, R&D, 판로 등) 대상으로 구분가능한 소셜벤처 기업군 확인을 위해 소셜벤처 현황 파악을 상시적으로 실시('18.하)

\* 임팩트투·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조사하되, 자체적으로 소셜벤처 여부를 판단받고 싶은 기업도 포함하여 현황 파악 시행



## 소셜벤처 판단 프로세스(예시)



### < 사전제외 대상 >

- ① 순수 비영리조직
- ② 창업지원법상 제한 업종 (게임, 베팅업 등)

### <사회성 확인 지표(예)>

- ① 사회적경제기업
- ② UN SDGs 17개 분야 영위  
\* 물, 환경, 교육 등
- ③ 경영 방침에 사회적 가치 추구 명시 여부
- ④ 취약 계층 대상 고용
- ⑤ 이윤의 사회 환원
- ⑥ 지역사회 기여

### <벤처성 확인 지표(예)>

- ①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 벤처, 이노비즈 등
- ② 지식재산권 보유
- ③ 연구개발활동 조직 보유
- ④ 재무지표, 고용 등 증가
- 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보유
- ⑥ 사회문제(환경, 고령화 등) 해결형 신기술 보유 여부

### <민간자문단>

- ① (역할) 소셜벤처 적합 여부  
이건 발생시 최종 결정
- ② 구성(민간중심)
  - 선배 소셜벤처기업가
  - 사회적경제 전문가
  - 임팩트투자사 등



## 2 소셜벤처 가치평가체계 구축 및 확산

### □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 개발('18.하)

- 경제적 성과와 소셜벤처가 창출한 사회적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 혁신성·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치평가모형 개발

\* 경제적성과 위주의 현행 평가 체계에서는 소셜벤처에 대한 명확한 가치평가가 곤란하여, 일반 기업에 비해 성과가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음

#### < 기업가치 평가체계 변화 >

현행	→	소셜벤처 가치평가체계
경제적성과 * 재무제표상 지표, 고용현황 등		경제적성과 + 사회적성과(추가) * 등급(5~10개), 점수(100점 만점) 등

- 기보·사회적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사회적금융협의회\*(금융위)와 연계하여 민간\*\*과 공동 개발하고, 등급(5~10개), 점수(100점 만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과 산출

\* 금융위, 신한, 은행연합회, 신보, 중진공, 소진공, 서민금융진흥원, KVIC 등

\*\* 임팩트투자사, 엑셀러레이터 등

#### < 기존 사회적가치 평가 모형 비교 >

구분	사회적기업진흥원 (SVI: Social Value Index)	SK행복나눔재단 (SPC: Social Progress Credit)	B-Corporation 제도(미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성과를 14개 세부 측정지표 측정 (계량 11개, 비계량 3개)</li> <li>○ 100점 만점으로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측정</li> <li>○ 화폐화가 어렵거나, 간접적 사회변화분은 측정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평가</li> <li>○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중</li> </ul>
평가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가치 추구 여부, 지역사회협력 수준, 근로자 임금수준, 근로자 역량강화노력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을 통한 편익증진, 자원소비 절감 성과, 공공예산 효율성 증대 성과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미션,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 여부, 환경 개선 여부 등</li> </ul>



- 임팩트 투자사, 은행, 보증기관, R&D·판로 정책지원 기관 등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범용모형으로 개발
- 다양한 지원기관이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치평가센터 홈페이지에 평가모형 공개
- 지원기관 등이 별도로 정한 소셜벤처 지원 기준에 따라 등급이나 점수별 우대 지원 등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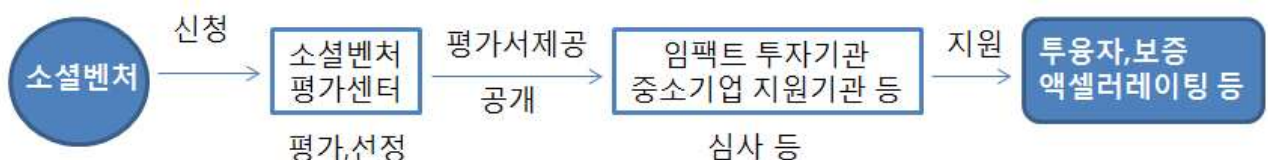
< 우수 소셜벤처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분 활용 사례 >

공공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보) 보증비율 상향(전액보증), 보증료 추가 감면 (<math>\Delta 0.5\%p \rightarrow \Delta 0.7\%p</math>) 등</li> <li>○ (투자) 임팩트투자펀드 인센티브 성과 계산</li> <li>○ (창업) 생활혁신형 청년창업가 발굴, 청년창업사관학교 등</li> <li>○ (기술개발) 사회가치증진 제품 R&amp;D 대상 발굴 등</li> </ul>
민간 부문 * 가치평가 결과 자율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 SK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제도, 현대차그룹, LG전자·화학 등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상 선발</li> <li>○ (투자) 임팩트투자사의 투자처 발굴</li> </ul>

- 유망 소셜벤처를 발굴하거나 소셜벤처 기업이 자체적으로 우수성 확인을 받고싶은 경우, 가치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가칭) 운영('18.하)

- 기보\*를 통해 소셜벤처 가치평가를 조속히 실시하고, 민간의 자율적 가치평가체계 구축을 유도
- \* 벤처확인제도 및 기술가치평가 운영 경험, 가치평가 수준에 따른 보증연계 가능
- 공신력있는 평가자료 제공, 민간자문단 운영, 판별 가이드라인 관리, 현황파악 및 DB 관리, 소셜벤처 지원사업 안내 등 수행





### 1 [수도권] 성수동 소셜벤처 밸리 조성

- 성수동\* 일대에 소셜벤처 지원 역량을 집중·연계하여 소셜벤처 창업·성장 및 성공사례 창출 중심지(Hub)로 육성

\* 헤이그라운드, 소셜캠퍼스 溫 등 창업지원 공간이 구축되어 있고, 소셜벤처·사회적 혁신가 등 250여개 기업, 3천여명이 모여 소셜벤처 집적지를 형성

- 既 구축·운영중인 소셜캠퍼스 溫(노동부), 헤이그라운드(민간), 성동 소셜벤처 허브센터(성동구청)를 중심으로, 창업공간, 시제품 제작, 제품 전시 공간 등 제공

- 소셜벤처 밸리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논의기구(분기당 1회)를 설치하여 지원기관간 역할분담, 입주기업 대상 애로사항 해결\* 등 실시

\*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One-Stop 서비스지원단(가칭 소셜벤처지원단, 민관전문가 구성)

- 민간의 아이디어를 제안\*(Bottom-up) 받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셜벤처기업 집중 지원('19년)

\* 임팩트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등 지원 관계자와 정기적 교류 기회 마련, IR·피칭 실시, 스토리텔링 홍보 동영상 제작, TED형 포럼 정기운영 등

- 공유형 물류창고 운영, 기업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위한 “소셜벤처기업 맵” 구성·제공



#### <중기부>

논의기구 운영, 민간 주도 전문지원기관 운영 등 성수 소셜벤처 협업 체계 구축·지원

#### <노동부-성동구청-민간>

입주기관별 특성에 맞는 창업공간 제공, 시제품제작, 제품 판매·전시공간 등 제공



## 2 [지방]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소셜벤처 육성

□ 지역 수요 및 해당 지자체의 지원의지가 높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공모(5개 내외)하고 지역 혁신기관\*\*과 협업 ('19년)

\* 지자체 소유 건물을 소셜벤처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

\*\* 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대학·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등

○ 소셜벤처 (예비)창업자 100개팀에게 창업공간, 네트워킹, 컨설팅, 제품 홍보·판로지원 등을 집중 실시

\* 창업공간 제공, 민간전문가의 비즈니스모델 검증, 분야별 멘토링, 투자자들과 정기적 네트워킹 구축 등

###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셜벤처 지원방안(예시)>

◆ **(지원실적)** 대전센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소셜벤처를 발굴·육성(소셜벤처 전용 사업은 없음)

- 유메인('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센서 기술, '17년 26억원 투자유치), 넥스트이노베이션(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기술, '17년 TIPS 선정) 등

◆ **(향후계획)** 지자체(입주공간), 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하여 대전 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소셜벤처 발굴 → 창업 → 성장을 체계적 지원

발굴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예비)창업자 공동 발굴	(센터) 사업화 지원(역량강화, 시제품제작, 시장검증, IP확보, 제품고도화 등) (지자체) 입주공간 제공 (민간AC) 씨드투자(0.3억), BM개발, 집중멘토링(13주) 등	판로 확보 등 타부처 사업연계 글로벌 진출지원 등
센터,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	센터, 지자체,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	센터(파트너기업 등)

\* 대전시 및 대전창경센터는 대전시청과 충남도청 이전으로 인한 도시재생 문제 해결에 대전 과학기술기반(출연연, 대학)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소셜벤처 육성에 관심



### 3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 □ 소셜벤처 예비창업가 육성 및 초기창업 지원(노동부)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나 초기창업자(1년미만 대상, 공간·창업비용(팀당 최대 5천만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소셜벤처를 포함하고, 지원규모 확대
- 사업 공간,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성공창업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소셜캠퍼스온(溫)' 확대('18, 6개→'19년 9개)하여 인큐베이팅 서비스 확대

#### □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소셜벤처 청년창업가 발굴('18.하, 중기부)

- 가치평가 활용, 사회가치 창출 및 혁신성이 우수한 청년 소셜벤처 창업기업\*에게 1억원까지 창업사업화 비용 지원('18년 추경, 연 100개 발굴)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오픈바우처) :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창업자 및 창업 6개월 이내 청년창업자

- 창업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물품구매, 마케팅비 등)을 지원하되, 유흥비 사용, 친족기업과 거래 등 최소한 제한 설정

- 바우처 사용전 창업교육 실시, 전담멘토를 매칭하여 바우처 관리

- 일상 생활 불편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혁신형 소셜벤처 청년창업가를 발굴·지원(예: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컵 개발 등)하여 누구나 쉽게 창업가능한 환경 조성('18년 추경, 482억원)

- 소셜벤처 가치평가 모형을 활용, 즉시 사업화 가능성있는 창업자는 사업 실패시 상환 의무가 없는 정책자금(성공불용자) 최대 2천만원 지원

\* 대출 3년 이후 성공시에는 심사를 거쳐 5천만원 한도 추가대출, 성실실패자 상환의무 면제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자 선발시 소셜벤처에 대해서는 우대 가점(최대 3점)을 부여, 추후 소셜벤처 수요와 성과를 반영한 별도 과정 신설 검토

\* 1년간 사업비(최대 1억), 교육·코칭 및 기술지원, 창업공간 제공 등을 지원



□ **민관 협력을 통한 우수 청년소셜벤처 창업 지속 지원**

- 우수 청년 소셜벤처에 대해 대기업·공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및 글로벌 소셜벤처로 육성
- (우수 소셜벤처 정보 공유) 지원대상 선발시, 우수한 소셜벤처를 정부·민간 상호간 추천하거나, DB화 하여 공유
- (분야별 특성 반영 및 매칭) 친환경분야는 LG전자·화학, 제조 기술기반 소셜벤처는 현대차그룹, 도시재생·주거는 LH, 물관련 기업은 K-Water 등과 지원 연계

**< 민간 대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현황 >**

<b>SK그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성과인센티브: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단위로 측정, 사후 금전 보상</li> <li>○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생태계 지원 (펀드 투자)</li> </ul>
<b>현대차그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30여개 사회적기업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li> <li>○ 기업당 최대 1억원 사업비 지원, 멘토링 등 실시</li> </ul>
<b>LG전자·화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li> <li>○ 공간지원(LG소셜캠퍼스), 금융지원(무상 최대 5천만원, 대출 최대 1억원) 등</li> </ul>
<b>LH</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주거 관련 소셜벤처 예비창업팀 지원('18년 10억원)</li> <li>○ 창업자금, 공간, 컨설팅 지원, 클라우드 펀딩 및 홍보</li> </ul>
<b>K-Water</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산업플랫폼(물산업분야 벤처기업 종합시스템) 활용</li> <li>○ 대전 대덕특구 내 "K-water 스타트업 HUB"에 입주지원, 기술·연구인력 매칭,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 해외진출 지원 등</li> </ul>

- (가치평가모형 활용) SK가 既 운영중인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제도와 연계, 사후보상 실시 및 가치평가모형 확산
- 향후 소셜벤처를 육성하는 민간 사업과의 연계 모델을 지속 확대 하고, 공기업과 연계를 통해 지원사례 확산



## 4 소셜벤처 성장 촉진

### 1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및 TIPS 통한 투자확대

#### □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 모태펀드 출자(800억원, 80%)를 기반으로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1,200억원\* 규모의 '소셜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중기부)

\* 모태펀드 내 1,000억원(중기부) + 한국성장금융 임팩트펀드 200억원(금융위)

☞ 시각 장애인용 점자 보조기기 등 사회적임팩트는 크지만 상업성이 높지않아 일반 VC관심이 낮은 분야의 혁신적 소셜벤처들도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증가

- '18년도 운용성과를 반영하여, '22년까지 조성규모 확대 검토

\* (향후 계획) ('18) 1,000억원 → ('22) 총 5,000억원

#### □ 소셜벤처 특성에 맞게 운용방식 차별화 및 민간자본 유인('18.하)

- 펀드 총액의 70% 이상을 소셜벤처에 투자, 성과 창출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펀드 존속 기한 장기화(보통 7년 내외→10년 내외)

-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 위험을 낮춰<sup>①</sup> 민간 자본<sup>②</sup>의 임팩트 투자 참여 확대를 유도

①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이익 발생시 모태 지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확대 등

② 옐로우독, D3주빌리, 소풍, 크레비스 파트너스, HGI, MYSC 등 민간 임팩트 투자사

- 소셜벤처에 적합한 표준 투자해설서\*(추구하는 사회적가치 등 반영) 제작 및 보급

\* (소셜벤처 간담회) 現 투자계약서의 경우 소셜벤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곤란

#### <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 운용방식 >

구 분	기존 펀드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
투자범위	40~60% 이상	소셜벤처 70% 이상
존속기한	7년 내외	10년 내외
인센티브	초과수익 20% 이내	전체 초과수익



□ 펀드가 창출한 사회적 성과에 따라 성과보수 지급('18.하)

-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를 통해 펀드 투자기업의 사회성과(투자기간중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산정

- 모태펀드 초과수익 범위\*내에서 운용사에 사회성과 환산 금액의 20%까지 인센티브로 지급 검토

\* (현행) 초과수익의 20% 이내 → (개선) 전체 초과수익중 사회성과 환산금액의 20% 이내

□ 기술기반 소셜벤처에 특화된 팁스(TIPS) 운영사 선정('18.5월)

- TIPS 프로그램을 통해 소셜벤처에 중점 투자하는 운영사를 신규 선정하여, 우수 기술기반 소셜벤처를 육성

- 소셜벤처 전문 운영사는 최대 6년간, 매년 5~10개 내외의 창업팀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중 50% 이상을 소셜벤처에 투자

\* 선정된 창업팀은 민간선투자 1억 외에 R&D 등을 위해 9억까지 추가 정부지원

---

**2 소셜벤처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

□ (보증)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기보)을 통한 보증 공급지원 ('18.6월)

- 향후 5년간 5천억원 규모 보증 공급 확대 검토

\* 기보(억원) : ('18)300 → ('19)700 → ('20)1,150 → ('21)1,350 → ('22)1,500

- 보증료 감면( $\Delta 0.5\%$ p), 전액보증 등 소셜벤처에 대한 우대지원 강화

□ (융자)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17, 200억원 → '18년, 350억원)

\* ('17년도 지원현황) 총 225억원 지원, 지원업체 127개, 평균 대출금액 178백만원



### 3 소셜벤처 R&D 혁신역량 강화 지원

#### □ 소셜벤처의 혁신성 강화를 위한 R&D 지원 확대

- (준비) 인력·과제기획역량 등이 부족한 소셜벤처기업 대상,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는 R&D기획지원사업 실시 (20개사 지원, 중기부)
  - R&D기획역량강화 교육, 개발대상 기술·시장 분석,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획기관 매칭 및 지원
  - \* (소셜벤처 간담회) R&D 지원을 받으려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R&D기획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행) 지역·사회 혁신형 R&D 과제 소셜벤처 참여 확대
  - 기업 주도로,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 및 건강·환경·안전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가치증진 제품R&D’ 시행(창업성장기술개발지원사업 활용, 중기부)
  - \* (예시) 저가 점자 스마트 워치(닷), 전동 휠체어(토도웍스), 장애인 교육용 앱(에누바) 등
  -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사업\*’, 다부처 R&D사업 기획·선정시, 가점대상인 사회적경제기업 범위에 소셜벤처 포함 등 제도개선 추진(과기정통부)
  -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R&D과제를 제안한 지자체 대상으로 선정('18년 55억원)

### 4 국내외 판로 확충

#### □ 국내 판로 확충 및 마케팅 촉진

-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규모(10인 이하) 소셜벤처에 대해 기업당 1억원 한도내 지원사업(판로확보, 제품개발 등)을 패키지로 지원('18년 20억원, 중기부)
- 선정된 기업에 기업진단팀(사업주관기관, 경영컨설턴트 등) 배정, 필요한 지원사업 구성 및 지원성과 점검, 추가 컨설팅 등 성장경로 관리



- 온·오프라인 정책매장 입점 우대 및 소셜벤처 제품정보 DB 구축을 통한 판로 확대 지원

\* 공영홈쇼핑(아임쇼핑) 등 온라인을 통한 제품 홍보 및 유통지원 포털(아임스타즈, [www.imstars.or.kr](http://www.imstars.or.kr))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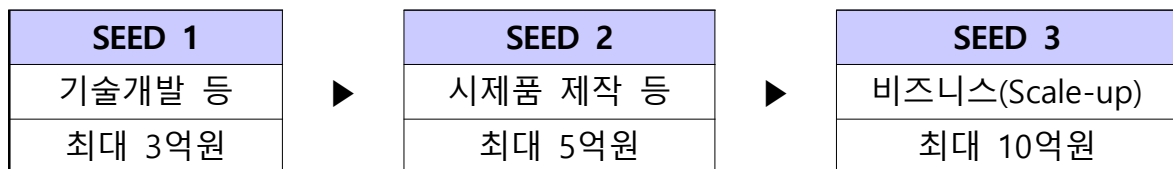
- 방송·언론, 뉴미디어(SNS 등) 매체를 활용한 우수 소셜벤처 제품의 소비자 노출 및 확산을 유도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을 활용한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를 콘텐츠화한 전시·홍보

#### □ ODA 연계를 통한 소셜벤처 해외 판로 활성화(중기부, 외교부)

- 코이카(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을 통해 개도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한 소셜벤처 육성('18년 86억원)

\* (사례) 힐세리온(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 개발, 베트남에 보급), LS테크놀로지(저가형 고도정수처리장치 개발, 라오스에 깨끗한 물 제공에 기여)

##### < CTS 단계별 지원 >



- CTS 참여기업의 해외시장 본격 진출시, 베트남, 미얀마 등 개도국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공간 활용 지원

\* 미국, 중국 및 베트남, 미얀마, 인도, 칠레 등 총 14개국 22개소 설치

- CTS 참여기업의 비즈니스 역량강화 해외연수 프로그램\* 실시

\* 해외 소셜벤처 투자자 피칭, 인큐베이팅 기업운영 프로그램 참여 등 1주일간 연수('17년 총 12개팀 참가)

- 기업주도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수요자맞춤형 연수 실시, 연수기간 연장(1주일→2주일) 등 프로그램 개편



## 5 소셜벤처 활성화 문화 확산

### □ 소셜벤처 성공사례 및 우수 기업인 발굴·홍보 및 포상

- 혁신적 사업모델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소셜벤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상파 방송(다큐멘터리)·SNS 등을 통해 홍보 확대
-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포상을 신설\*하여 자긍심 고취

\* 벤처창업페스티벌(11월), 세계기업가정신주간행사(GEW, 11월) 등 행사의 유공자 포상부문에 해당 분야 신설

### □ 사회적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교육 활성화

- (청소년) 초중고 비즈쿨 지원학교 확대('18, 560개교 → '19, 600개교) 및 사회적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소셜벤처 창업동아리 운영' 지원
- (대학생·일반인)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가정신 캠프·포럼을 개최, 소셜벤처 창업 및 사회혁신 성공사례 등을 공유·확산

\* 대학기업가센터(9개) 및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주관

- 창업선도대학\*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과정을 필수 설치,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10% 이상을 소셜벤처교육으로 운영

\*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통해 창업자 발굴-교육-사업화자금(최대 1억원)-성장지원까지 창업 쉼단계 지원

---

❖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의 추진으로 2,500여개의 일자리(청년 일자리 2,000여개)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9년)

- 360여개 소셜벤처가 창업하고, 약 250개 기업이 임팩트투자·보증·R&D 등의 지원을 받아 성장 가능
-



## V. 향후 추진일정

정책과제	일정 · 주관부처	
1. 소셜벤처 판별 및 가치평가체계 구축		
(1) 민간 주도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마련	'18.3분기	중기부
(2) 소셜벤처 실태조사 실시	'18.3분기	중기부
(3) 소셜벤처 가치평가 모형 개발	'18.3분기	중기부
(4)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가칭) 운영	'18.3분기	중기부
2. 청년 소셜벤처 허브(HUB) 구축		
(1) (성수동)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19.1분기	성동구청·노동부
(2) (성수동) 소셜벤처 지원 전문 지원기관 선정·운영	'19.1분기	중기부
(3) (지 방)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 소셜벤처 육성	'19.1분기	중기부
3.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1) 청년 소셜벤처 바우처 방식 사업비 지원	'18.4분기	중기부
(2) 대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과 연계 강화	'19.상	대기업·중기부
(3) 소셜벤처 육성 팁스(Tips) 운영사 선정 및 창업 지원	'18.2분기	중기부
(4) 생활혁신형 소셜벤처 정책자금(성공불용자) 지원	'18.4분기	중기부
(5)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셜벤처 우대가점 부여	19.1분기	중기부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및 소셜캠퍼스 온 확대	'18.3분기	노동부
4. 소셜벤처 성장촉진		
(1)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18.2분기	중기부
(2) 소셜벤처 맞춤형 금융(보증, 융자) 확대	'18.2분기	중기부·금융위
(3) 소셜벤처 R&D 지원 확대(R&D기획, R&D 수행)	'19.1분기	중기부·과정통부
(4) 소규모 소셜벤처 제품개발·판로 패키지 지원	'18.2분기	중기부
(5) ODA 연계를 통한 소셜벤처 해외 판로 진출 지원	'18.3분기	외교부
(6)소셜벤처 성공사례 포상·홍보 및 교육 강화	'18.4분기	중기부
(7)창업선도대학 내 CSR 과정 설치	19.1분기	중기부



## 참고

## 소셜벤처 성공사례

 <p><b>&lt;모어댄(한)&gt;</b></p>	<p>(혁신) 폐자동차 시트 등 재활용 가죽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 제작 (사회성과) 경력단절여성, 새터민 등 취약계층 고용, 폐기물문제 해결 (경제성과) 스타필드 고양, 교보 핫트랙스 등 11개 매장 입점</p>
 <p><b>&lt;레드스톤 시스템(한)&gt;</b></p>	<p>(혁신) 컴퓨터 CPU 전력절감기술 등 다수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성능 개선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사회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정보화 교육 실시 (경제성과) '17년도 381억원 매출, 장애인 39명 고용(총근로자 113명)</p>
 <p><b>&lt;이지앤모어(한)&gt;</b></p>	<p>(혁신) 국내 최초 '월경컵' 식약처 허가, 생리대 등 다양한 월경용품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 경험 공유 및 제품 판매 (사회성과) 제품 구매, 온라인 리뷰 적립 기부포인트로 저소득층 아동(매월 600명→1,000명 확대 예정)에게 월경용품 지원 (경제성과) 올리브영.왓슨스 등 입점, 여성.청년근로자 비중 100%</p>
 <p><b>&lt;에누마(미)&gt; 실리콘밸리 한인 기업</b></p>	<p>(혁신) 신체적 장애, 문화.경제적 취약층 아동을 위한 읽기, 셈하기 학습용 게임 개발과 서비스(원손잡이 사용모드, 난독자용 폰트 등 적용) (사회성과) 1,400개 미국 초등학교가 수업 교재로 활용, 8개 언어 약 150개 국가에서 활용, 하루 평균 약 40만 번의 셈하기 학습이 실행 (경제성과)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500만 이상, '18년 4월까지 총 101억 원의 투자 유치, 글로벌 러닝X프라이즈 (XPRIZE) 경진대회 결선진출 1백만불 상금 획득</p>
 <p><b>&lt;오파테크(한)&gt;</b></p>	<p>(혁신) 시각장애인이 재미있고, 쉽고, 빠르게 점자를 익힐 수 있는 점자 교육보조기기 탭틸로 개발. 블루투스를 통해 모바일 앱과 연결해 점자를 읽고 쓰는 방법을 학습 (사회성과)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아는 사람은 10%미만, 탭틸로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쉽게 점자를 배워 세상과 소통가능 (경제성과) '17.3. 미국 최대 보조공학박람회 CSNU 참가, '17.7월 미국 첫 판매 개사(개당 900달러),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인도 등 진출 계획</p>



 <p>&lt;이노마드(한)&gt;</p>	<p>(혁신) 세계 최초로 물병 사이즈의 휴대성을 강조한 수력발전기 제품을 개발(강이나 계곡의 물을 전력 에너지로 변환해 모바일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일체형 발전기)</p> <p>(사회성과)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계 1/3 인구에게 '휴대용 발전기'를 보급해 꼭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p> <p>(경제성과) '16.9월 미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킵스타터'를 통해 펀딩 성공, '17년 9월 생산을 완료하여 '17.12월까지 총 3,200대(약580,000천원) 판매</p>
 <p>&lt;토도웍스(한)&gt;</p>	<p>(혁신) 기존의 수동휠체어에 조이스틱과 모터, 컴퓨팅 보드, 배터리를 장착하여 전동 조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토도드라이브 개발</p> <p>(사회성과) 자기 몸에 맞는 기존 휠체어에 큰 개조 없이 간단하게 장착,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p> <p>(경제성과) '16.3월 설립, 개당 176만원, '16년 매출(136백만원)</p>
 <p>&lt;빅이슈(영)&gt;</p>	<p>(혁신) 홈리스에게만 잡지 판매권을 부여하는 비즈니스모델로 빈곤 문제 해결('91년도 창간, 판매금액 50%를 판매원 귀속)</p> <p>(사회성과) 총 1억5천만 파운드 사회적자금 조성, 약 1백만명 고용지원, 임대주택을 통해 3.4백만명에게 거주지 제공</p> <p>(경제성과) 약 300개가 넘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하여 3천만 파운드 이상 매출 창출 및 재투자</p>
 <p>&lt;에그리쿨(프)&gt;</p>	<p>(혁신) 대도시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면서 무농약의 신선한 과일 재배가 가능한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15년 창업)</p> <p>(사회성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물과 비료 사용을 90% 감소, 새로운 도시형 농업일자리 창출</p> <p>(경제성과) '17년까지 약 43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p>
 <p>&lt;킵스타트(미)&gt;</p>	<p>(혁신) 저가의 즉동식 펌프 개발(약 95불)</p> <p>(사회성과) 아프리카 농민에게 저가 펌프 판매와 농작물 재배 컨설팅 제공, 연간 1천2백만명을 기아에서 해방</p> <p>(경제성과) 총 21만명 고용 창출, 연간 2억불 매출 창출</p>







---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

2018. 7. 3

관 계 부 처 합 동







---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

2018. 7. 3

관 계 부 처 합 동



# 순 서

I . 추진 배경 .....	113
II . 현황 및 문제점 .....	114
III . 기본 방향 .....	119
IV . 정책 과제 .....	120
1. 인재 유입 활성화 .....	120
2. 사회적경제 핵심리더 육성 .....	124
3.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126
4.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	129
5. 인재양성 종합지원체계 구축 .....	133
V . 추진 일정 .....	136



## I. 추진배경

- 고령화,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증가
    - EU는 경제와 고용위기 속에서 사회적경제가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고, 특히 취업애로계층의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
    - 우리나라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 및 소득양극화 해소, 지역공동체 복원 등에 기여
      - \* 사회적기업(노동부), 협동조합(기재부), 마을기업(행안부), 자활기업(복지부) 등
  -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체 고용규모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활성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고용비중은 여전히 EU의 1/4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 \* '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은 1.4%인데 비해 EU 28개국 평균은 6.3%
      - ↳ 다만, EU의 사회적경제조직 범위(협회·공제회 등 포함)가 우리나라(사회적경제기본법상 조직)에 비해 더 포괄적
  -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에서 활동할 “사람”을 키워야 하나, 현재 인재양성을 위한 여건은 열악한 상황
    -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청년·신중년 등 다양한 계층의 신규 인재 유입 저조
      - \*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 87.5%가 사회적경제를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본 적은 있으나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17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中)
    - 부처별 창업 지원에만 편중되어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교육 전문가·지원인력 등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정 등은 거의 부재한 상황
- 이에 따라, 새로운 인재가 사회적경제로 지속 유입되고, 전문성을 갖춰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 마련



## Ⅱ. 현황 및 문제점

### 1. 현황

❖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정부기관의 사회적경제관련 교육훈련 현황 실태조사\*에 기반한 분석('17.10월~12월)

\* 노동부 등 6개 부처(28개 프로그램), 서울시 등 101개 지자체(283개), 강원 등 7개 교육청(10개) 등 총 114개 기관에서 321개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제출

\*\* (한계) 민간이 자체 재원으로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현황은 미포함

❖ 조사내용: 각 기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유형, 대상, 운영기관, 지원조건, 지원내용, 수료인원, 예산 등

\* (유형) 일반교육(기초, 전문), 창업교육, 창업지원, 기타 등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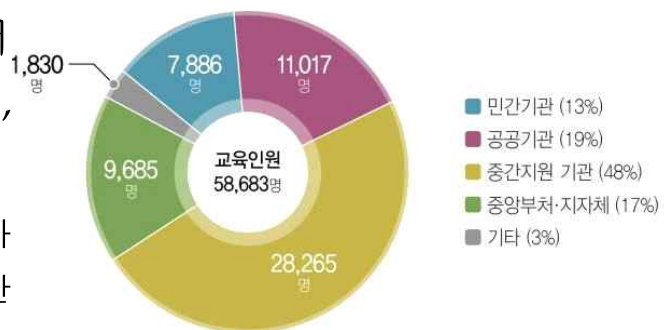
\*\* (대상) 학생, 일반인, 구직자, 창업희망자, 사회적경제 종사자, 공무원, 기타로 구분

\*\*\* (운영기관) 직접수행, 공공기관, 중간지원기관, 민간기관, 기타로 구분

□ (총괄) '17년 114개 기관에서 총 321개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교육인원은 58천여명

○ (교육기관) 중간지원기관\*(48%)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 등 민간기관에서 13% 수행

\*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관련 제반 시책을 집행하는 비영리법인, 자치단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 기관·대상별 교육인원 >

기관 대상	민간기관	공공기관	중간지원 기관	부처·지자체 직접	무응답	계
학생	592	1,069	1,611	5,652	220	9,144
일반인	1,218	3,029	4,081	1,170	564	10,062
창업희망자	1,314	4,453	10,470	408	491	17,136
종사자	4,762	2,466	8,894	277	555	16,954
공공/기타	0	0	3,209	2,178	0	5,387
계	7,886 (13%)	11,017 (19%)	28,265 (48%)	9,685 (17%)	1,830 (3%)	58,683 (100%)



- (프로그램) 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초 소양 수준의 일반교육과 창업 입문교육 중심 프로그램이 제공



< 유형별 프로그램, 교육인원, 예산 >

	창업 교육·지원	기초 소양	전문 교육	정부 제도	강사 양성	기타	계
프로그램 수(개)	116 (36%)	102 (32%)	31 (10%)	29 (9%)	6 (2%)	37 (12%)	321 (100%)
교육인원 (명)	9,071 (15%)	30,440 (52%)	12,776 (22%)	3,293 (6%)	155 (1%)	2,948 (5%)	58,683 (100%)
예산 (백만원)	24,342 (87%)	905 (3%)	2,076 (7%)	118 (1%)	61 (1%)	428 (1%)	27,930 (100%)

- 강의방식 교육이 82%에 이르며, 실습·탐방 등 체험 형식은 약 3%에 불과

\* (전달방식) 강의식 82%, 강의·실습 병행식 8%, 실습형 2.8%, 현장탐방 0.4% 등

- (교육대상) 창업 희망자(29%)와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29%)가 교육인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며 초·중·고 학생은 약 9천명(16%)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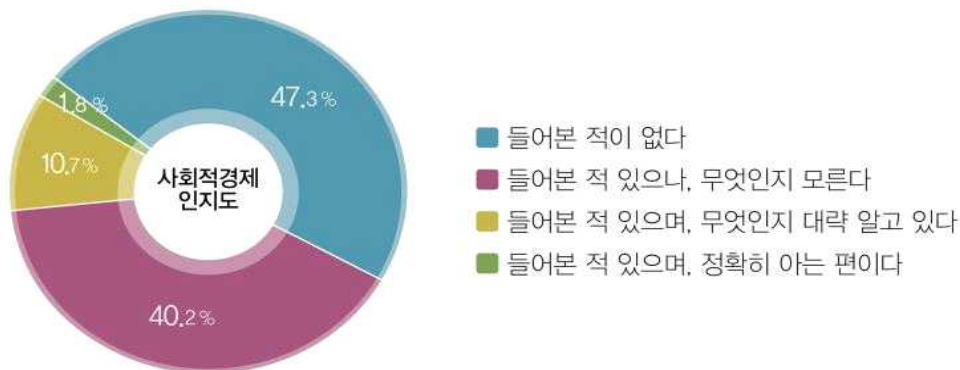


### < 대상별 교육인원, 예산 >

	학생	일반인	구직자	창업 희망자	종사자	공공/ 기타	계
교육인원 (명)	9,144 (16%)	9,764 (17%)	298 (1%)	17,136 (29%)	16,954 (29%)	5,387 (9%)	58,683 (100%)
예산 (백만원)	448.6 (2%)	990.25 (4%)	612.2 (2%)	23,676.26 (85%)	1,524.05 (5%)	678.7 (2%)	27,930 (100%)
1인당 교육비	5만원	10만원	205만원	138만원	9만원	13만원	48만원

○ (인지도) 일반 국민의 47.3%가 사회적경제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

\* 일반시민 1,000명 대상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기업 인지도 조사, '17년 5월~7월



## 2. 문제점

### 1 | 인재유입의 부족

□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인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이 미비

○ 청년, 신중년, 퇴직전문인력 등 구직자들의 사회적경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 제공 및 프로그램이 부족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교육 중 구직자 대상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혁신활동가 사업, 강원 JOBS 사업 등 인건비 지원 사업)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

**현장 의견** ('17.10.26, 창업지원기관, 소셜벤처 대표 현장간담회)

■ “일반 구인시장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과 미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른 생각의 차이로 근속률이 높지 않다.”



- 높은 비율의 예산이 창업지원에 집중 되고 있으나, 주로 초기 입문단계의 창업교육이 제공
- 창업기 이후 지속 성장에 필요한 인재육성 전략 및 투자가 부족
  - \* 사회적경제 기업은 R&D를 통한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83%), 자금 부족(60.8%) 등의 사유로 실행하지 못한 기업이 많음('17년 기업대상 수요조사 결과)

## 2 | 리더·종사자 대상 맞춤형 전문교육의 미비

- 교육내용, 주제, 전달방식 등이 단조로우며 대상별·분야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획일화된 프로그램이 주로 제공
- 리더·종사자 역시 전문교육 보다는 기초 소양수준의 교육이 주로 제공
- (리더) 일부 대학에서 학위과정을 개설 중(총 160명 규모)이나, 학사과정 운영대학은 2개교\*에 불과 하는 등 학계 기반 확충이 절실
  - \* 한양대학교 · 숭실대학교 ('18년 개설)
- (종사자) 종사자들의 전문인력화 등 사회적경제 내부 인력의 핵심 인재로의 육성에 소홀했으며, 양질의 교육 콘텐츠가 부족
- 기업규모가 영세하여 교육 참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종사자\*의 18.6%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장 맞춤형이 아닌 사회적경제 기초 소양위주 교육이 제공되어 효과성도 미흡
  -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 · 자활기업 현황('16년) : 총 14,948개, 종사자 91,100명

## 3 | 일반국민 인식 및 이해도 저조

- 우리사회 사회적경제 역사가 짧고, 초·중고 교육과정이나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인식과 이해가 저조\*
  - \* 일반시민의 47.3%가 사회적경제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40.2%도 들어본 적은 있으나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17.7월 일반시민 1천명 대상 실태조사)



- 일반 경제교육의 경우 교과과정에 반영되어 대부분의 학생이 교육을 접할 수 있으나, 사회적경제는 전체 초·중·고 학생('16년 기준 663만명)의 1%가 채 되지 않는 학생(9,144명)만 교육을 이수
-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들도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평균 정원의 2배 이상 인원이 신청

**현장 의견** ('17.11.1,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등 당사자 조직 현장간담회)

-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 가능하려면 사회적경제 가치에 공감하고 후원하는 주체로서의 시민 양성이 필요하다.”

## 4 | 종합적인 지원체계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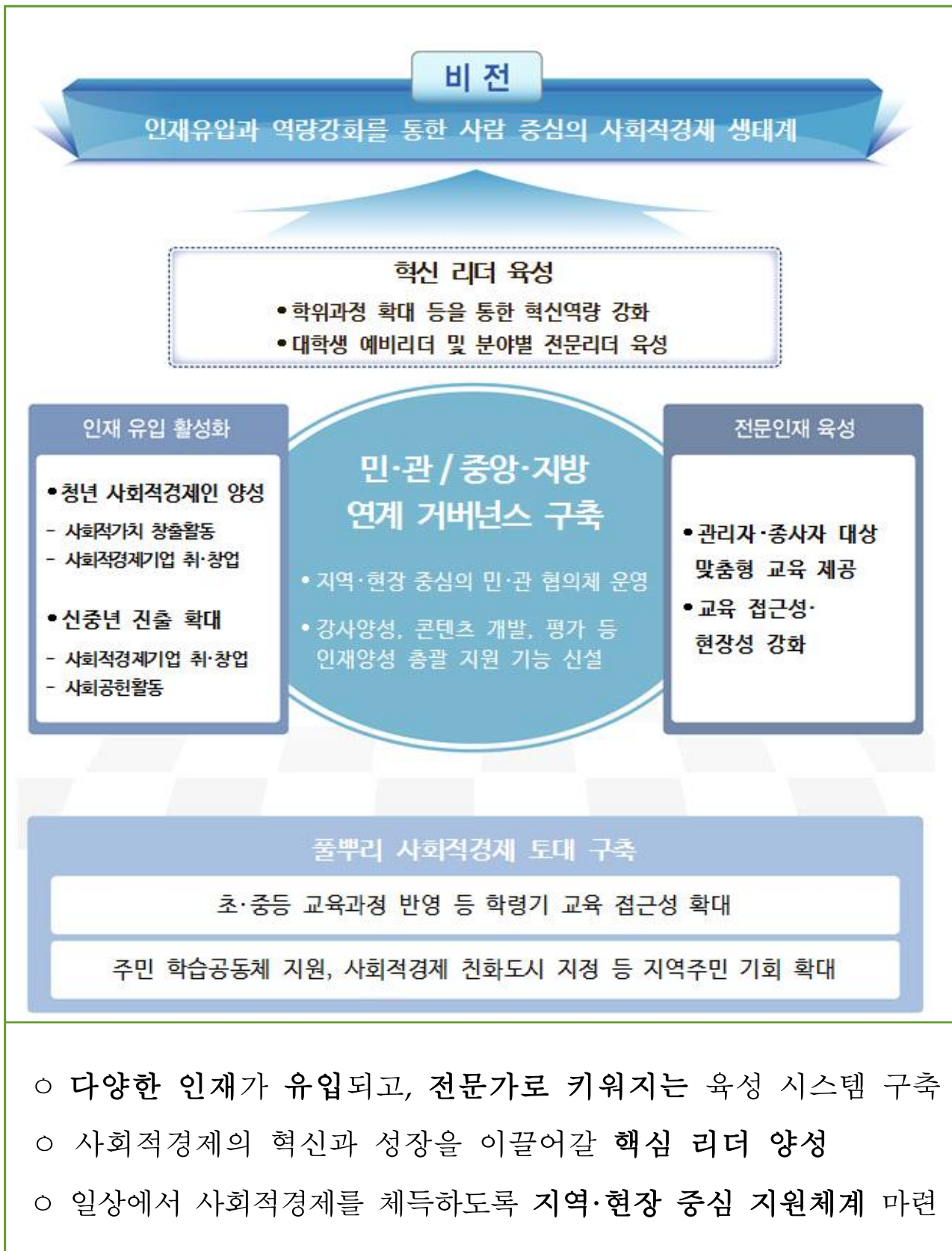
- 온라인 플랫폼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미비함에 따라 연구·개발, 콘텐츠 보급, 전문가 양성 등 체계적인 인재양성이 곤란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교육이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진행됨에 따라 프로그램 연계성, 사회적 경제 교육 실태 파악 및 평가 등에 한계
  -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협동조합 : 기재부, 자활기업 : 보건복지부,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 온라인 교육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하며,
  - 중간지원기관이 높은 비중(48%)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요원이 부족하며 지원 미흡으로 역량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현장 의견** ('17.12.6, 교육전문가 그룹 현장간담회)

- “사회적경제 교육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연구·개발, 콘텐츠 보급, 강사 양성, 평가 등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가 필요한 시점이다..”



### Ⅲ.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기본방향





## IV. 정책 과제

### 1. 인재 유입 활성화

◇ 유능한 인재들이 사회적경제를 찾아오도록 매력적인 취·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①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 (청년 창업 확대)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혁신적이고 유능한 청년의 유입을 확대

○ (아이디어 발굴 확대) 사회적경제 창업입문과정을 확대\*하고 도시재생·태양광 등 분야별 맞춤형 특화 창업입문 교육과정 확대

\* ('18년) 일반 창업입문과정(240명, 30시간) → ('19년) 도시재생·사회서비스 등 사회적경제 장점이 부각되는 분야별 특화 과정 포함 입문과정 확대

-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 발굴된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 연계, 창업 지원사업 선발 우대 등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 발굴을 확대

○ (사업화 집중지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 선발규모를 확대하고, 자금·공간·멘토링 등 창업의 전 과정 밀착지원(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청년·베이비부머 등 창업 수요에 대응, 선발규모 확대(연 500팀→연 1,000팀)

- 초기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원기간 연장(1년→2년) 및 지원수준 현실화

○ (체계적인 성장지원) 창업기업의 조기 도약을 위해 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고 판로·R&D·투자 등 통합지원을 통해 우수기업을 집중 육성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창업지원그룹과 협력하여 소셜벤처 등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중기부)

\* ('19년) 5개 센터 시범 운영 후 성과에 따라 타지역 혁신센터로 확산 추진

- 창업팀의 생존률 제고를 위해 성장지원센터\*를 확대 조성('17년 3개소 → '19년 전국 9개소) 하고 컨설팅, 투자연계 등을 강화(노동부)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팀에게 입주공간,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제공



- 판로, R&D, 컨설팅 등 분야의 관련 정부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스타 사회적경제기업을 집중 육성

\* ('18년) 20개사 → ('20년) 50개사로 확대, '22년까지 200개 스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금융지원 확대) 사회가치연대기금 등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 '18년 중 정부·공공자금을 중심으로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고, '22년까지 민관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

- (사회가치창출 활동) 청년(단체)이 교육·돌봄·환경 등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를 통해 일경험 및 소득을 지원

- 공공부문과 청년·기업 등 민간부문 합동으로 지역사회 내에 산재한 현안 문제점·수요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 풀타임 근무 시 2,250만원 지원, '18.하반기 2,000명 예정(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내 민간취업연계형의 50%)

-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지원) 금전적 보상보다는 보람, 사회적가치 등에 관심이 있는 청년을 적극 유입하여 청년 실업 극복 및 지역사회 활력 제고

- 청년 구직자가 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근무 시 인건비 등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에 필요한 심화교육을 제공하여 청년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을 유도

\* 초기 2년간 연 2,400만원 인건비 지원, 이후 해당지역 취·창업 시 추가 인센티브 지원, 참여 청년에게 사전 직무훈련 및 취업기간 중 주기적 교육·컨설팅 제공

\*\* '18.하반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내 지역정착지원형(3,750명) 중 2,000명 취·창업 지원

**※ 유사사례: 일부 자치단체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청년 인턴 지원사업 추진 중**

- 서울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사업: 청년 구직자들에게 사회적경제 조직 현장의 프로젝트 수행 및 일경험 지원 (시급 8,200원, 최대 23개월 지원)
- 강원 JOBS 프로젝트: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일터기반 학습 지원과 실무 교육을 통해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 (월 60만원, 5개월 지원)
- 미국 AmeriCorps: 청년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빈곤퇴치 등 사회문제 해결 추진, 풀타임(연 1,700시간이상) 근무 시 연 3만달러(생계비 2.5만, 교육비 0.5만) 지원



- (취업) 사회적경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취업 시 인건비를 지원하여 전문성 있는 신중년 유입을 촉진
  - (교육) 폴리텍 內 신중년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쏘 폴리텍 직업훈련과정으로 확대**
    - \* ('18년) 서울 강서·대구 등 4개 캠퍼스→('20년) 20개 캠퍼스→('22년) 34개 쏘 캠퍼스
  - 사회적경제조직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민간기관을 통해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취업교육 과정 개설**
    - \* 사회적경제조직 총괄관리자 과정('18년 하반기~, 노동부)
  - (취업지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전국 31개소)와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을 연계하여 사회적경제조직 특화 **훈련·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하여 베이비부머 등 퇴직인력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 \* 노동부-현대자동차-서울50플러스재단 공동으로 퇴직전문인력 및 신중년 대상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제공('18년 200명, '22년까지 1천명 지원)
    - 워크넷 內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정보를 별도 제공하고, 각종 **취업 박람회** 시 사회적경제 **홍보 부스** 별도 운영을 추진
      - \* 워크넷 內 기업유형별 채용정보에 '사회적경제기업' 분류를 신설
  - (인건비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대하여 신중년 유입을 **활성화**(노동부)
    - \* 50세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인사·노무 등)에 채용 시 인건비 지원(월 8만원, 최대 1년)
- (창업) 전문성을 가진 신중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해 **시니어 특화 창업과정을 확대\***
  - \* '18년 민간 시니어 특화 창업전문기관을 통해 창업입문과정 30명 제공 중
- 특히,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위해 **맞춤형 사업화 지원\*** 및 **씨앗자금** 신설 검토(과기부)
  - \* 일반·심화·고경력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18년 22개)



- (활동지원) 퇴직인력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문위원제도를 확대하고 재능기부뱅크·프로보노 허브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노동부)
  - 마케팅·회계·법무 등 경영분야별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
    - \* ('18년) 30명의 전문위원을 선발하여 서비스 제공(월 8회 컨설팅, 100만원 수당 지급)
    - 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해 교육 등 강화
  - 컨설팅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과 재능기부 의지가 있는 퇴직전문인력을 연결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 \* (온라인) 재능기부 뱅크, (오프라인)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內 프로보노 허브센터 마련

## 사회적경제 취·창업 지원 체계





## 2. 사회적경제 핵심리더 육성

◇ 사회적책임의식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①

### 대학 내 전문교육과정 확대

- (선도대학 지정) 노동부·교육부 협력으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노동부), 연구개발·학부개설 등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노동부는 학부개설 준비를 위한 리더과정(비학위과정)을 2년간 지원, 교육부는 사회적경제 연구 확충 등을 위한 소요비용을 지원
  - \* 현재 한양대와 숭실대 학부과정 개설('18.3월) → '19년 신규 3개 대학 지정, '22년까지 20개 대학에서 500여명 학부 전공자 육성 지원
- (학위·비학위 확대) 사회적기업 리더과정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으로 개편, 지원금 및 지원 대학 수를 확대하여 핵심리더를 집중 육성
  - \* ('18년) 4개교 지원 → ('22년) 20개교 지원 추진
  - SK 등 민간기업 등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학위운영대학을 확대
  - \* 학위과정 운영 10개 대학 중 KAIST, 이화여대, 한양대 등 5곳은 SK그룹에서 지원
- (국제교류 확대) 외국 대학 교류 및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사회적경제 리더의 글로벌 역량 제고
  - 사회적경제 선도대학과 외국의 사회적경제 주요 대학\*간 교류·협업 체계 구축 지원
  - \* 스페인 몬드라곤대학, 영국 협동조합대학, 이탈리아 트렌토대학 등
  - 리더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정책연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18년 7명)



## ②

## 대학생들을 예비리더로 육성

- 중소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 대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수혜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창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수혜기간 만큼 취·창업을 유지('18: 356억원, '17년 4,152명 지원)
- KOICA 등 장기 해외봉사단('18년 2천명 → '21년 4천명)에게 국내외 비영리기관,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 진출을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 '중소기업 탐방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탐방, 실제 일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노동부)
  - \* 학생에게 탐방 기회를 제공(1천명, 최대 5일), 기관 선정 시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 대학생 대상 대학생협 창업, 운영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유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대학 생협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 \* 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內 교육과정 개설('19년)

##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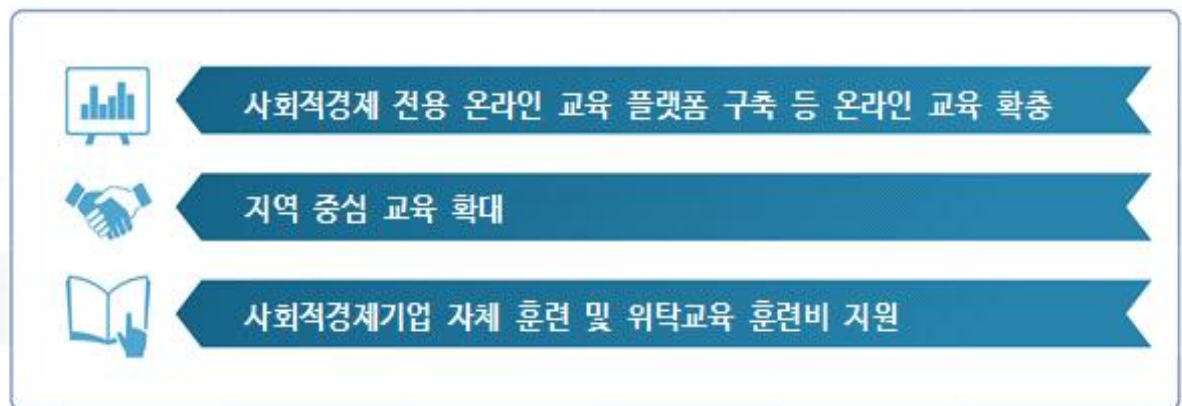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 유망분야 리더 육성

- (분야별 전문리더 육성지원) 사회적경제 진출 유망 분야별\* 전문 리더 육성을 위한 심화교육 과정 신설('19년, 사회적기업진흥원)
  - \* 도시재생, 신재생에너지,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개발원조 등
- (포럼 운영) 최근 주요 경제 동향 및 트렌드, 국내외 사회적경제 변화 공유 등을 주제로 사회적경제 리더 대상 권역별 포럼 운영
  - '18년 사회적경제 국제 리더포럼 개최 시 '사회적경제 유망진출 분야'에 대한 분야별 해외전문가와의 토론 프로그램을 제공
  - \* 국제 리더포럼(6.15, 서울) 및 사회적경제박람회 시(7.13~15)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 개최



### 3.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재'를 적극 육성 하겠습니다.





- (온라인 교육)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민간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교육 플랫폼(가칭 SE-배움터)을 운영('19년, 사회적기업진흥원)하여 민간 전문교육 콘텐츠를 탑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
  - 사회적경제 우수강좌를 발굴·개발하여 K-MOOC\* 강의에 탑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공백·교육비용 부담 해소('19년)
    - \* K-MOOC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한(Open) 웹 기반(Online) 강좌(Course), 서울대·KAIST 등 70개 대학에서 324개 강좌 무료 제공
- (지역중심) 권역별 중간지원기관,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지역내 평생교육기관·전문교육기관 등을 통한 교육을 확대하여 접근성·현장성 강화\*
  - 중간지원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교육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훈련 제공시 시설비,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등 지원
    -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최대 20억원 지원, 노동부)
  - 지역 내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시 평생교육기관, 지역교육기관 등의 교육·공간·강사 등 지원
    - 도서관, 주민센터 등 지역 시설을 학습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비용 지원) 종사자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 자체 훈련 및 위탁 교육에 대한 훈련비 지원\* 확대
  - 사회적기업에서 종사자를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 재직자 훈련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원 확대
    - \* 예시) 이주여성 종사자를 위한 어학교육 등 교육과목을 폭 넓게 인정



- (중간관리자) 현장에 요구되는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해 **경영분야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단위 워크숍 개최를 지원
  - 회계·마케팅·인사 등 **필요역량별 특화 교육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진흥원)
    - \* ('18년) 중간관리자 과정 신설(실무역량 통합교육) → ('19년) 세무·마케팅·인사 등 중간관리자 필요 역량별 교육과정 개설(5개 과정)
  - 사회적경제기업 업종·분야·지역별 우수사례 공유 및 발전방안 토론, 중간관리자 간 네트워킹을 위한 **워크숍 지원**
- (종사자) 업무공백·이동시간 등 **교육훈련으로 인한 기회비용 감소**를 통해 종사자 **훈련 비율을 확대**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
  - (**맞춤형 훈련 제공**)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이 **훈련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조사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선정한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훈련 모집 및 실시
  - (**훈련비용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이 종사자 **경력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
    - \* 시제품 제작, R&D, 마케팅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개발비 사업의 규정을 개정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 종사자 훈련에 사용가능하도록 지원('18년)
  - (**일학습병행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의 **일학습병행 참여 확대**를 위해 **선정지표를 개선**하고, 선정기업에 **프로그램 개발, 훈련비용** 등을 지원
    - \* 선정 지표 중 사회적경제기업에 불리한 항목(신용등급, 매출채권 회전율 등)을 개선하고 일학습병행 훈련에 적합한 사회적경제기업 분야 적극 발굴
  - (**역량진단 컨설팅**) 기업 및 종사자의 역량진단을 실시하여 **훈련이 필요한 역량을 파악·제시**하고 **적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매칭**\*(인력공단과 협업)
    - \* 노동부 “맞춤형 인적자원개발(HRD) 컨설팅 지원사업” : ① 기업이 컨설팅 신청 → ②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HRD 안내 → ③ 정부 훈련프로그램과 매칭·연계



## 4.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①

### 초·중고 교육과정 반영 등 학령기 교육 확대

#### □ (1단계) 교육과정 개편 전 조치 가능한 방안 시행\*

\* '15년 개정 교육과정이 '20년까지 단계적 적용 중이므로 당장 교과서 개편은 어려운 상황임

- (과목개설 지원) 사회교과 등에서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경제 관련 과목을 선택과목 등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교재·교수자료 개발·보급\*

\* ('18년) 스토리텔링, 사례중심의 초·중고 교재·교수자료 개발·보급('18년, 교육부), ('19년) 시·도교육청의 사회적경제 관련 교과서 개발 및 교과목 개설 지원

- '사회적경제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학습 및 학교 협동조합, 공정 무역 등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19년 6개교)

- (교원 역량 강화) 초·중등 교원이 사회적경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연수 과정을 확대\*하고 교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포함\*\*

\* ('18년) 경기·강원 등 4개 권역(권역 당 초·중등 교사 40명 대상 30시간 이내) 교사연수 실시→ ('22년) 전 권역(17개 시도)으로 확대

\*\* ('19년) 교장 연수과정(교원대, 서울대 등)에 사회적가치 등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 반영

- 특히, KDI에서는 사회과 교강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사회적경제 교육강좌를 개설('18.6)

- (체험학습 확대) 사회적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액션러닝, 일체험, 동아리 활동 등 체험 학습을 확대·강화

- 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캠프를 확대\*하고 신기술 체험 중심의 창업 체험 교육을 '사회적 문제해결 창업체험교육'\*\*으로 확대 운영

\* ('18년) 사회적경제 캠프 2회(청소년·대학생) 개최(160명)

\*\* (예시) 창업경진대회 내 사회적 문제해결 부문 신설, 청소년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EP) 내 사회적 문제해결 관련 콘텐츠 탑재·미션 제공하여 학생 흥미 제고



- 초·중·고 사회적경제 학습모임 활성화 및 자유학기제 연계 학습 지원, 사회적경제 대학 동아리 지원 확대\*

\* ('18년) 대학 사회문제 해결 동아리 20개소 지원 → ('22년) 초·중·고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지원 신설 및 대학 동아리 지원 확대

\*\* (우수 사례) ▲ 연세대 인액터스: 신진작가 작품을 홍보·판매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개발 ▲ 한양대 키다리은행: 대학생들의 자발적 출자금으로 조성된 숯다리 펀드 운용

- 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관(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속 발굴

\* 사회적경제 기관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핸드북 제작 및 배포

○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학생들이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적경제를 체득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

- 학교협동조합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교육부, '18.12)

\* 학교협동조합: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공통의 교육·경제·사회·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공동으로 설립하는 사회적협동조합('18.2월 기준 56개 인가)

\*\* (사례) 삼각산고등학교(서울 강북구), 학생·학부모·졸업생·지역주민·교사가 조합원으로 참여,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를 파는 학교매점 운영 및 사회적경제 교육 실시

□ (2단계)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초·중·고 필수과목(사회, 도덕, 통합사회 등)에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 내용 추가 반영

## ② 지역 주민의 사회적경제 교육 접근성 강화

□ (지역 학습 활성화) 사회적경제 상시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학습공동체를 활성화

○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사회적경제를 이해·체험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를 지정(노동부, 행안부)

-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및 인프라 지원, 창업지원,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 개최 등 관련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 '19년부터 신규로 매년 3개 시군구 지정



○ **지역교육센터 교육과정 內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 시군구 평생교육기관,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관련 과목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균형 있는 경제인식**을 갖도록 지원

\* ('17년) 전국 15개 센터, 취약계층 등 지역주민 대상 일반경제교육 실시(약 16만명)

- **지역사회지도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과목**을 개설하여 지역현장에서 활동하는 리더들의 사회적경제 이해도 제고

\*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교육과정에 사회가치·사회적경제 교육과목을 개설하여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사회 리더들에게 연 16회, 약 6천명 대상 교육 실시

□ **(주민의 사회적경제 활동 지원)** 주민들이 도시재생,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분야의 사회적경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도시재생)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주민,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관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 주체로 육성**

\* 교육대상별·사업유형별·사업단계별 교육과정을 표준화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의 교육예산 지원

○ **(에너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출모델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 인센티브 규모, 대상설비 범위, 주민인정 범위 등 지원방안 마련 ('18년)

-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의 수익 창출을 지원하는 등 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생 에너지 관련 **전문인재로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협동조합의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 전력의 경우 한국전력 발전 6사가 의무 구매

○ **(관광) 지역 주민 및 활동가를 관광두레 PD로 육성하여 지역 고유의 특성(문화유산, 음식, 자연 등)을 지닌 주민사업체를 발굴하여 창업을 지원**

\* '22년까지 관광두레PD 256명 선발하여 양성, 주민사업체 1,125개 발굴·육성

\*\* (우수 사례) ▲ 경남 거창: 일본 결혼이주여성이 중심이 되어 로컬푸드 기반 일본가정식 판매, ▲ 강원 홍천: 귀농청년과 홍천주민이 함께 지역 대표 농산물 '흙'으로 만든 맥주를 관광 상품화



## ③

##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 (사회적경제 통합행사 개최) 사회적경제기업 우수 제품 및 사회적 기여도 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통합 박람회를 개최**(18.7. 대구 EXCO)
  - \* 사회적기업 박람회, 협동조합 박람회, 마을기업 박람회를 통합하여 개최
- ‘**사회적가치 창출대회**’\*를 신설, 높은 수준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기업, 공공기관 포상 및 우수사례 적극 확산(노동부)
  - \*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조직, 공공기관 등이 1년간 창출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여 우수기업 포상 및 사례집 발간 등(19년~)
- (민관협업을 통한 인식 확대) 시민사회·종교·언론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 캠페인 확대
  - (시민사회) 지역과 민간 중심의 사회적경제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인식 개선 활동 진행
    - 윤리적 소비 캠페인, 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순회토론회,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 등 개최 지원
    - \* 시민사회(네트워크)가 사회가치 평가를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사회적경제조직,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게 공로상을 수여
  - (종교) 1성당·1교회·1사찰-1사회적경제 연계 운동\*, 3대 종교 공동 행사 개최 지원 등을 통해 종교 내 사회적경제 저변을 확대
    - 3대 종교(가톨릭, 기독교, 불교) 지도자의 범종교 선언 및 지원 활동을 통해 종교계 인적·물적 자원을 사회적경제에 연계
    - \* (주요사례)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서울관구): 사회적기업(위캔센터)을 설립하여 37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 수제쿠키 판매 수익금은 발달 장애인 직업훈련에 사용
  - (언론) 언론사와 공동으로 기획 기사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사회 가치에 대한 공익 광고 송출 등도 추진
    -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사례 발굴 및 홍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가 기획 기사 등
    - \*\*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 사회적경제 성공사례 등을 EBS를 통해 개발·방영하여 학생들에게 사회적 경제에 관한 긍정적 인식 유도



## 5. 종합지원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①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

- (지역중심·중앙뒷받침 시스템) 지역·현장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되, 중앙은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기능 수행
  - (지역·현장중심) 시·도 중간지원기관, 민간교육기관, 당사자조직, 시민사회 등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장·사례중심 교육을 제공
    - 지역 간 교육편차 해소 및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 중앙교육기관, 중간지원기관, 자치단체, 지역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로 연결. 콘텐츠, 강사, 공간 활용 등 교육 인프라를 전 지역에 공유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등 당사자조직이 돌봄, 공정무역 등 특정 업종에 대한 개별 직무관련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 (‘18년) 선배 노하우 전수과정 개설, 2개 업종 네트워크 지원 → (‘22년) 20개 네트워크 지원
    - 지역의 시민사회·사회적경제조직간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농업 등 지역 특화 분야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설·지원
      - \* 경실련, YMCA, YWCA 등 시민사회와 NGO, 종교, 사회적경제조직,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지역 중심의 민관네트워크 활용(16개 네트워크)
  - (중앙 뒷받침) 연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강사 양성,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민·관/중앙·지방 교육기관 네트워킹 등 교육 총괄 지원
    - (1단계) ‘19년 사회적기업진흥원 부설 연구개발센터 설치
      - \* ▲ (연구) 사회적경제 연구·개발, 교육과정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 ▲ (교육·네트워킹)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당사자조직 연수, 네트워킹 지원 등
      - ▲ (성과평가) 교육성과 평가 및 정책개발 지원, 인재양성 백서 발간 등
    - \*\* 연구 및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연구인력 총원 추진



- (2단계) 중장기로 연수 시설을 갖춘 인재개발원 조성 검토('20~)

\* 당사자 조직 등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민간교육기관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교육 서비스 품질을 향상

②

## 컨텐츠 및 강사양성 등 인프라 구축

□ (교육 컨텐츠 개발) 사회적경제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대상별 역량 모델 및 교육 표준안 개발·보급

○ 일반교육과정에 활용 가능한 사회적경제 교육 표준안 마련 및 보급('18년)

○ 리더, 실무자, 지원인력 등 대상자별 역량모델을 개발하고 민간 교육역량 활용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공모 추진('19년, 10개 발굴)

○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19년, 교육부)

\* 협력학습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대상 : 소상공인, 직장근로자 등)

○ 대학에서 활용하는 온라인 창업교육 교재에 사회적경제 관련 콘텐츠를 포함하고 교재 활용이 확대 되도록 적극 유도

\* 사회적기업가, 창업실무 분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5개 내외 대학에 사회적경제 취·창업 관련 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컨설팅 실시

□ (강사 양성) 사회적경제·사회적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강사를 적극 발굴·양성하고, 강사 DB를 구축하여 교육기관 등에 공유

○ 사회적경제 강사 양성과정을 확대\*하고 금융·R&D·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 강사를 육성

\* ('18년) 연간 25명 양성 → ('22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연간 300명 강사 양성

○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강사 인력풀을 구축, 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교육기관 등에 제공



- (지원조직) 지원조직에게 요구되는 소통·조정·협업 능력 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제공 및 지원조직간 정보공유와 연대·협업 강화
  - 코디네이터·인큐베이터·네트워커 과정 등 **기능별 특화과정** 신설
    - \* 사회적기업 진흥원 아카데미 內 중간지원인력 특화과정 신설
    - 중간지원기관 종사자의 근무여건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19년, 노동부)
      - \* 현재 16개 시도(서울시 제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중간지원기관: 평균 7명, 연봉 약 2,200만원
- (공직자) 공직자들의 **사회적경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공직자 **교육과정** 內 **사회가치·사회적경제 교육과정** 신설·확대
  - '18년 주요시책 교육으로 '사회적경제'를 명시하고, 부처별 직장 교육 시 필수 과목으로 반영하도록 공무원 인재개발지침 개정('18.3)
    - **각급 기본 교육과정**에 **사회가치,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반영
      - \* 5·7·9급 신규자 교육과정, 고위공무원단 교육, 국세공무원교육원, 고용노동 연수원 등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사회혁신방법론을 적용한 프로그램 운영
    - **지방 공직자 대상 전문·사이버과정** 개설 및 운영 확대
      - \* ('18년) 전문/사이버 과정(1,200명 수강 계획) → ('19년) 과정 추가(2,000명 이상)
  - **공무원 해외 연수과정**(장단기 연수, 직무훈련 등)에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 육성**
    - \* 제1차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 해외 단기연수과정 실시('18.4.22~29, 영국 LSE 대학)

→ (사후관리) **민관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재양성 종합계획`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정책과제를 추가·보완**

\* 위원장(노동부 장관, 민간위원 공동), 위원(당사자조직,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관련부처등)



## V. 과제별 추진 일정

- 노동부, 교육부, 행안부, 중기부 등 12개 부처에서 32개 주요과제 추진  
 ○ 연내 시작과제 26개, '19년 이후 과제 6개 과제

정 책 과 제 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b>1. 인재 유입 활성화(6개 과제)</b>		
<b>1-1.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b>		
① 청년 사회적가치창출활동 지원	'18.6~	행안부
②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확대	'18.6~	행안부
③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확대	'18.6~	노동부 중기부 금융위
<b>1-2. 신중년 사회적경제 진출 확대</b>		
④ 신중년 사회적경제 교육 및 취업지원 확대	'18.9~	노동부
⑤ 신중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18.6~	노동·과기부
⑥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18.6~	노동부
<b>2. 사회적책임 의식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리더 육성(9개 과제)</b>		
<b>2-1. 대학 내 전문교육과정 확대</b>		
① 사회적경제 학부 개설 지원	'19.3~	노동·교육부
② 사회적경제 석·박사 학위과정 확대	'18.6~	노동부
③ 외국 대학과 교류 지원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확대	'18.6~	노동·교육부



정 책 과 제 명 (5개 분야 32개 과제)	추진일정	주관부처
<b>2-2. 대학생들을 예비 사회적경제 리더로 육성</b>		
④ 희망사다리 장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18.9~	교육부
⑤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프로그램 제공	'18.9~	노동부
⑥ KOICA 등 해외봉사단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18.9~	외교부
⑦ 대학생협 활성화 지원	'19.3~	기재·교육부
<b>2-3. 사회적경제 유망분야 리더 육성</b>		
⑧ 권역별 사회적경제 리더 포럼 운영	'19.3~	노동부
⑨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진출 유망분야 전문리더 육성 지원	'18.7~	노동부
<b>3.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5개 과제)</b>		
<b>3-1.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b>		
① 사회적경제기업 중간관리자 대상 회계·마케팅 등 업무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18.7~	노동부
② 훈련비용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18.9~	노동부
<b>3-2. 교육의 편의성 제고</b>		
③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K-MOOC 강좌 개설	'19.3~	노동·교육부
④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전문교육 확대	'18.9~	노동부
⑤ 사회적경제기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비 및 인건비 지원	'18.12~	노동부



과 제 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b>4.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6개 과제)</b>		
<b>4-1. 초·중·고 학령기 교육접근성 확대</b>		
① 사회적경제 과목개설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 등	'18.6~	교육부 노동부 기재부
② 차기 교육과정 개편 시 사회적경제 내용 반영	차기교육 과정 개편시	교육부
<b>4-2. 지역주민의 교육 접근성 강화</b>		
③ 지역교육센터 등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상시학습 지원	'18.7~	행안부 노동부 기재부
④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 지원	'18.9~	국토부 산업부 문체부 등
<b>4-3.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b>		
⑤ 사회적경제 통합행사 개최	'18.7~	기재부 노동부 행안부
⑥ 민관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 확대	'18.6~	노동부
<b>5. 종합지원체계 구축(6개 과제)</b>		
<b>5-1.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b>		
① 지역·현장 중심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18.9~	노동부
②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개발 등 중앙 뒷받침 시스템 구축	'19.3~	노동부
<b>5-2. 콘텐츠 및 강사양성 등 인프라 구축</b>		
③ 사회적경제 교육 콘텐츠 개발	'18.9~	노동부
④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사회적경제 전문 강사 양성	'18.9~	노동부
<b>5-3. 공무원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b>		
⑤ 기능별 특화과정 개설 등 지원조직 역량 강화	'18.9~	노동부
⑥ 공무원 교육과정 內 사회적경제 교육 반영	'18.3~	노동·인사처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주요 목표



기반조성 (2017 ▶ 2022년)

플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일반국민의  
사회적경제 인지도



52.7%

5년후

80%

초·중·고 교육



9천명

5년후

60만명



신규진입 (2017 ▶ 2022년)

인재 유입 확대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1,600명

5년후

16,000명

신중년 진출 촉진(교육)



150명

5년후

5,000명



전문가 (2017 ▶ 2022년)

전문인재 육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교육훈련



19%

5년후

50%

사회적경제 학위과정



10개교

5년후

40개교







---

**- 협동이 혁신이다 !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2단계 혁신성장전략**  
**[2018~2022]**

---

2018.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협동이 혁신이다 !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2단계 혁신성장전략**  
**[2018~2022]**

---

2018.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 . 추진배경 .....	145
II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현주소 .....	146
1. 설립·운영현황 .....	146
2. 문제점 및 한계 .....	147
3. 과기협동조합의 장점 및 가능성 .....	148
4. 추진방향 .....	149
III . 비전, 목표 추진과제 .....	150
IV . 기존 과기협동조합의 발전 촉진 .....	151
① 매머드급 과기협동조합 운영 .....	151
② 과기협동조합의 성공스토리 확산 .....	152
③ 과학기술 서비스 시장 활성화 .....	153
④ 과기협동조합 활성화 제도 보완 .....	154
V . 새로운 과기협동조합의 결성 촉진 .....	155
⑤ 다양한 과기협동조합 BM 개발 및 확산 .....	155
⑥ 연구기관·대학의 협동조합 결성 주도 .....	157
⑦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과 홍보 확대 .....	158
⑧ 과기협동조합의 과기협동조합 운영 .....	159
VI . 기대효과 .....	160
VII . 추진일정 .....	161
참고1 과기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간 비교 .....	162
참고2 과기협동조합 우수사례(국내) .....	163
참고3 과기협동조합 우수사례(해외) .....	164
참고4 과기협동조합 빅데이터 분석 결과 .....	165



## I. 추진배경

### ◆ (정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하 과기협동조합) 이란?

- (구성원) 「이공계특별법」상 이공계 인력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 등의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 (사업내용) 연구개발을 포함한 모든 과학기술 활동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

□ (사회 환경 변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 증대와 잠재 과학기술인 활용 및 유연한 일자리에 대한 요구 증가

- (사회적 경제 활성화) 최근 정부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

※ 국정과제(26번)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17.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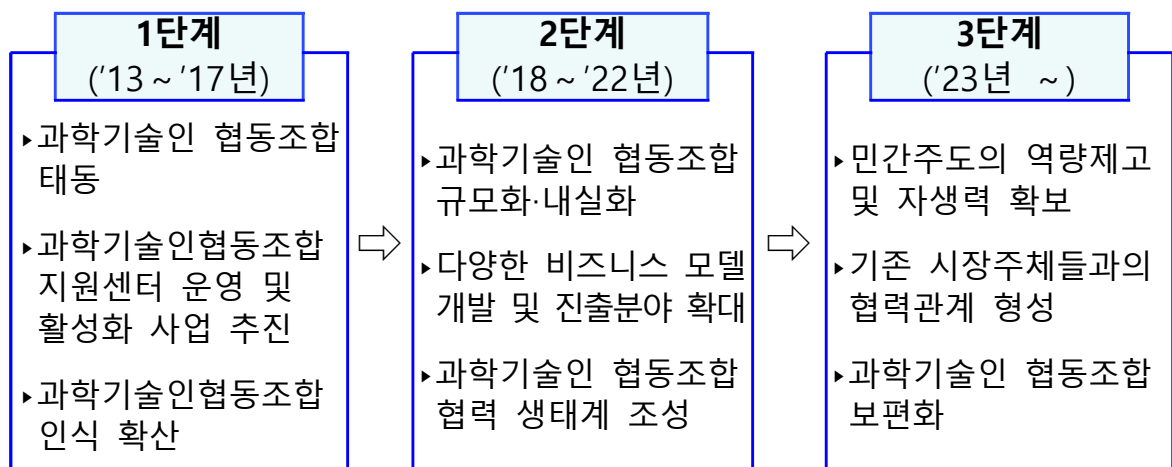
- (과학기술 일자리) 퇴직 과학기술인 및 경력단절 여성과기인 증가 등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다양한 창업·고용형태를 요구하는 목소리 확대

□ (지원 성과와 한계) 정부는 '13년부터 과기협동조합을 지원(1단계), 그간 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전체 협동조합의 2%에 불과

※ 일반협동조합 11,637개 대비 과학기술인협동조합 264개 ('17.12월)

- 과기협동조합의 운영 내실화,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그간의 성과를 강화하고 한계를 보완하는 “과기 협동조합 2단계 혁신성장 전략” 필요

<과기협동조합 발전단계(안)>





## Ⅱ.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현주소

### 1 설립·운영 현황

#### □ 국내 과기협동조합 운영 현황

- (규모 및 분야) '17년 기준 총 264개 과기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며 사업 분야 중 “기술서비스(42.0%)”가 가장 높은 비중

<분야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현황('17.12)>

분야	기술서비스 및 기술거래	과학교육· 문화	연구개발	IT 서비스	조사분석	합계
조합수(개)	113	61	38	34	18	264

- (유형) 설립유형은 사업자(33.6%), 프리랜서형(29.5%), 융복합형 사업자(20.5%) 순으로 최근 프리랜서형 협동조합의 증가가 두드러짐  
※ 프리랜서형 협동조합의 증가 ('14) 18% → ('17.6) 29.5%
- (매출과 고용) 조합당 매출은 연 1억원, 평균조합원은 14.3명  
※ 조합당 평균 고용인원은 4.3명, 유급직원의 월평균 임금은 159만원 수준
- (주요고객) 정부·지자체(50%), 기업(39.2%), 개인(11.8%) 순  
※ 매출발생 주요 분야 : 연구개발(33.3%), 과학교육·문화(22.2%) 순

#### □ 정책지원 현황

- (사업지원) 과학기술 인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을 위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지원사업” 추진('13~)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시장진출 및 사업화 지원,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 ('18년 약 8억)
- (주요성과) 우수사례 홍보, 설립경영 교육 등 통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수 증가, 사업화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초기 안정화 지원  
※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수 증가) ('13) 42개 → ('17) 264개





## 2

## 문제점 및 한계

- (규모의 영세성)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협동조합 수에 비하여 전체 수가 부족하고, 협동조합의 영세성이 두드러짐
  - (수 부족) 전체 협동조합 규모 대비 과기 협동조합은 2%에 불과, 일반 협동조합 수에 비해 크게 적은 수준
    - ※ 일반협동조합 11,637개 대비 과기협동조합 264개 ('17.12월)
  - (영세성) 낮은 사업 운영율(60%) 낮은 임금수준(월 평균 159만원), 낮은 매출액(연평균 99백만원) 등 전반적으로 규모 영세
    - ※ 과기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7.12, 과기협동조합지원센터)
- (인식·자원부족) 과기협동조합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신뢰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금융자원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설립과 운영에 애로
  - (인지도·신뢰도) 운영모델, 사업적 가능성 등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가 부족하고, 협동조합의 기술적 역량,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불신 존재
    - ※ 과기협동조합에 대해 잘 모른다는 비중 高 (기업 58.3%, 연구기관 77.9%)
    - ※ 과기협동조합 인증 등 신뢰성 지원요구가 가장 高 (기업 42.7%, 연구기관 46.7%)
  - (금융, 인력) 출자금과 같은 자기자본에 의존하고 있어 수요에 비해 체계적 자금조달이 어렵고 기술전문가가 아닌 경영 전문가 부족
    - ※ 정책요구사항 1순위 : “정부 보조금(61.8%)”, “판로 지원(14.7%)”, “자금 융자(5.9%)” 순
    - ※ 연구기관 종사자의 조합 설립 및 참여 의향은 높으나(82.4%), “협동조합의 원리를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39.4%)”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중 高
- (경쟁력 미흡) 과기 협동조합 운영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정립과 접근이 어렵고 既 결성된 협동조합의 경우도 성공적인 사업화에 어려움
  - (사업모델) 과학기술분야 협동조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지 못하여 협동조합 설립에 장벽
    - ※ 설립애로사항 1위 “비즈니스 모델 설계(39.4%)”
  - (사업 경쟁력) 과학기술분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사업성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관련 시장과 판로 미비
    - ※ 운영애로사항 1,2위 “판로개척 등 사업의 경쟁력 확보 미흡(30%)”과 “비즈니스 모델 구축 어려움(25.7%)” 등



## 3

## 과기협동조합의 장점 및 가능성

## □ 혁신동력을 갖춘 사회적 경제조직

- (작지만 튼튼한 조합) 일반 협동조합에 비해 조합원의 전문성\*이 높고 조합당 출자금액은 작으나, 조합원당 출자금액이 높은 편

\* 과기협동조합 조합원의 42%가 박사학위 소지자

※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조합당 출자금액 2,141만원 (일반협동조합 4,064만원)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조합원당 출자금액 148만원 (일반협동조합 74.8만원)

- (부가가치 창출) 기술기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부가가치가 큰 사업영역(연구개발, 기술서비스 등) 수행

## □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新 조직 형태

- (융합사업) 전통적 사업자 협동조합과는 다른, 이기능·이업종간 융복합형 사업자 협동조합(20.5%)이 다수 존재

※ (사례) “기술융합협동조합”은 3D 프린팅 관련 다양한 분야 중소기업이 모여 3D 프린팅 관련 공동사업 추진(3D 프린터로 무인항공기 제작 등)

- (유연한 일자리) 전통적 직원·노동자 협동조합과는 다른, 프리랜서형 협동조합 비중(29.5%)이 높게 나타나 IT등 기술 전문가의 유연한 일자리 가능성 존재

## □ 연구산업 등 관련 시장 활성화 전망

- (연구산업 활성화) 주문연구산업('22년 8조780억원) 및 연구관리산업('22년 1조 2,120억원) 시장 확대 등 과학기술 관련 산업 성장 전망

※ 연구기관이 생각하는 과기협동조합 적합 일거리는 ‘기술컨설팅(30.2%)’, ‘교육프로그램 운영(20.7%)’, ‘연구개발 제도 및 정책동향 정보 제공(15.9%)’ 순 (2018, STEPI)

<연구산업 관련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현황 ('18, STEPI)>

분야	주문연구	연구기획	연구관리 연구개발	연구관리 기술사업	연구관리 인사서비스	장비	합계
조합 수(개)	129	13	23	7	16	3	120



## □ 과학기술관련 환경 변화

- (과학기술 인력변화) 과기 협동조합 창업 의향이 높은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전체 과학기술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 ※ 50세 이상 연구개발인력 비중 증가 : ('00) 6.5% → ('16) 13.6%
  - ※ 연구기관 연구원 대상 조사결과 과기협동조합 '설립할 의향(13.6%)', '조합원으로 참여할 의향(68.8%)' 등 높게 나타남(STEPI, 2018)
- (지역 과학기술 역량강화) 지역 클러스터, 강소특구 등 지역 지원정책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 (강소특구) 지역 기술핵심기관 중심으로 강소특구 지정 및 육성 추진('18~)

## 4 추진방향

- (규모화·성공사례 확산) 규모가 있는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자생력과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 우수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 상호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중대형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지속가능성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의 우수 성공사례를 창출
- (과학기술 서비스 시장 활성화) 과학기술분야 사업모델 확보를 지원하고 과학기술분야 협동조합 일거리의 수요와 공급 매칭 활성화
  - 우수 비즈니스 모델(BM)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을 활성화하고, 판로 지원을 통해 과기 협동조합의 조기 정착을 지원
- (과기협동조합 인식 제고) 협동조합 성공모델 확산, 창업 교육 등을 활성화하여 협동조합 창업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신뢰도 제고
- (체계화된 지원) 금융 및 인력 지원을 과기협동조합의 특성에 맞게 체계화하고 협동조합 경영원리에 기반한 지원 강화



### Ⅲ. 비전, 목표, 추진과제

#### 비전 및 목표

- ◎ (비전)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新산업 주체 육성
- ◎ (목표) ① '22년까지 1,000개의 과기협동조합 육성 1만개 조합 일자리 창출
- ② 과기협동조합을 통한 과학기술서비스의 고도화, 전문화

#### 추진 과제

#### 중점전략

#### 1. 기존 협동조합의 발전 촉진

#### 2. 새로운 협동조합 결성 촉진

#### 추진과제

#### ① 메머드급 과기협동조합 육성

- 대기업, 대학 등을 활용한 중대형 융복합 협동조합 육성
- 협동조합 연합회 활성화

#### ② 과기협동조합의 성공스토리 확산

- 고경력 경력단절여성 등 정례적 성공 스토리 발굴 및 표창
- 협동조합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 ③ 과학기술 서비스 시장 활성화

- 연구산업, 과학문화, 연구안전관리산업 등 과학기술 서비스 산업 활성화
- 일거리 수요-공급자 네트워크 강화
- 협동조합 제품 서비스의 사업화, 시장진출 지원

#### ④ 협동조합 활성화 제도 보완

- 출연(연) 연구원 겸직 제한 완화
- 금융 지원 및 투자 연계 강화
- 협동조합 ERP 개발 및 보급

#### ⑤ 다양한 과기협동조합 BM 개발 확산

- 우수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 개최
- 과기협동조합 원스톱 창업지원
- 연구산업, 과학문화, 교육형 협업모델 개발
- ICT 기술 활용 협동조합 신 모델 확산

#### ⑥ 연구기관·대학의 협동조합 결성 주도

- 출연(연), 대학 등 혁신자원을 활용한 전문성 기반 협동조합 강화
- 특구 등 지역 공동체 혁신 플랫폼구축

#### ⑦ 예비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확대

- 선배 협동조합과 연계한 현장교육
- 특성별 맞춤형 창업 교육 및 홍보 강화
- 사회적 경제 교육과정 지원
- 창업 인턴제

#### ⑧ 과기협동조합의 과기협동조합 운영

- 창업지원형 협동조합 육성
-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 사업자 고용협동조합 운영



## IV. 기존 과기협동조합의 발전 촉진

### ① 매머드급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 매머드급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조합원수가 많거나, 매출액 규모가 크거나, 사회·과학기술 파급효과가 큰 협동조합

□ (중대형 융·복합 조합 육성) 대기업, 출연(연), 대학 등 다양한 혁신 주체가 함께 구성하는 중대형 규모의 과기협동조합 육성

○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기술 및 사업지원이 가능한 형태 육성

※ 대기업 CSR 프로그램 및 대기업의 협력업체 육성 지원요구 등을 활용

#### <(예시) 대기업과 협력방안>

- ▶ '기술분야' 공동 사업을 위한 대기업-중소협력업체간 협동조합 구성 지원
  - ▶ "원스톱 창업지원사업('19년~)" 중 '사회혁신형 모델'에 대기업-정부 공동투자
  - ▶ "원스톱 창업지원사업('19년~)" BM 모집 시 대기업 참여 모델 지원
- ※ '기술창업 및 연구산업형 모델' 또는 '지역사회혁신형 모델'에 직접 출자를 통해 참여

○ 대학·출연(연)이 기술·설비 등을 제공하여 보육한 창업기업들을 협동조합으로 구성, 상호 협업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육성

※ 협동조합 구성 후 조합원사끼리 기술인력, 시설, 공간, 기자재 등을 공유

※ (예시) 출연(연) 혹은 대학+연구소기업+기술기업+개인 연구자+판매·유통법인 등

□ (협동조합연합회 활성화) 과기 협동조합의 협동 경험을 공유하고, 자생력·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인형 연합회 구성·지원

○ 규모화를 통해 대규모 사업 및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술분야별, 산업분야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지원

\* (협동조합연합회) 3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예시) 드론관련 협동조합끼리 연합회 구성, 드론 개발 대규모 공동사업 및 기술협력

○ 과기협동조합의 융합·공동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과기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중 “혁신형 사업화 지원” 신설하여 협업 프로젝트 지원



## ② 과기협동조합의 성공스토리 확산

- (성공스토리 발굴) 고경력 과학기술인, 여성과학기술인 등 다양한 과기협동조합 설립·운영 성공사례를 정례적으로 발굴·확산
- 설립·준비과정, 조합원 구성, 비즈니스 모델 수립, 수익창출·배분 등 정착과 운영에 관한 성공사례 발굴 공모전 운영, 홍보물 제작 배포
    - ※ 추천 및 자기신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우수사례 발굴
    - ※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하여 과기협동조합 예비 설립자 및 관심자에게 배포
  - 발굴된 성공스토리 중 대국민 파급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과 우수한 협력모델에 대해 표창, 시상식 등 개최
    - ※ '22년까지 연 10개 성공스토리를 시상하여 총 50개 성공사례(Best Practice 확보)

### <과기 협동조합 설립·운영 성공스토리(예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고경력과학기술인	중소기업
<b>&lt;온과학교육문화협동조합&gt;</b> 	<b>&lt;과학기술문화협동조합&gt;</b> 	<b>&lt;광주스마트콘텐츠개발자협동조합&gt;</b> 
각기 다른 전공분야의 경력단절 여성 조합원들이 통합·융합 교재 및 교구 개발, 개발된 과학 키트를 활용하여 초·중·고교의 3D프린팅 과학수업 등 체험수업 진행	공과대학 교수, 과학교사, 과학기자 등 은퇴 과학기술자들이 모여 과학문화 홍보, 문화확산을 위한 위탁용역 및 정책연구 추진	모바일 콘텐츠 분야 청년 스타트업 대표가 모인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사가 생산한 콘텐츠를 협동조합이 전문 퍼블리싱하여 관리·운영

-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국내외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과기협동조합 우수 성공스토리 확산 및 조합간 정보교류 활성화
- (국내) 지역별 과기협동조합 협의회\*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수사례 공유 및 정보 및 일거리 교류 등 활성화
    - \*현재 총 4개(전북, 경북, 경남, 충청) 지역별 협의회 운영중
  - (국제) 해외 우수 기술기반 협동조합 사례 탐방 및 초청, 공개 토론회 및 소그룹 간담회 등을 통해 해외사례 벤치마킹, 교류 활성화



### ③ 과학기술 서비스 시장 활성화

- (과학기술 서비스산업 활성화) 연구산업, 과학문화산업 등 과학기술 서비스분야 산업을 활성화하여 과기협동조합의 판로, 시장 확대
  - (연구산업) 연구자·연구산업 기업 매칭 활성화, 정부 R&D 바우처 사업의 연구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연구산업 시장 확대 추진
    - ※ “연구산업 혁신성장 전략” 수립('17.12)
  - (과학문화산업) 공공구매 확대 등을 통한 콘텐츠산업 육성, 과학문화 유통채널의 발굴 및 확대, 과학놀이산업 창출 등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
    - ※ “과학문화산업성장지원 전략” 수립 추진('18.下)
  - (연구안전관리산업) 연구실사고 문제 해결중심의 R&D 추진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관련 기업성장 지원 및 시장형성 촉진
    - ※ “연구안전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방안” 수립 추진('18.下)
- (일거리 매칭) 과학기술서비스 분야 협동조합의 일거리 공급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공급자와 수요자간 상시적 네트워크 강화
  - (수요공급자 네트워크) 대학·연구소 및 산학연 집적단지 등 협동조합 업무 외부위탁 수요기관과의 네트워크 마련, 교류 활성화
    - ※ 협동조합 협의회 활동 및 매칭데이 등을 통해 위탁관리 수요-공급 연계
  - (공공부문 일거리 연계) 출연(연) 등 공공기관 외부 주문연구 수요 우선 연계 및 중소기업 R&D 서비스 지원 사업 등 연계
    - ※ 중소기업 R&D 바우처 사업('17년 5,603억원) 등에 과기협동조합이 참여 추진
- (사업화 지원)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진출과 시장경쟁력 증대를 위해 유형별 사업화를 지원하고 사업화 성과 도출 지원
  - (성장단계별 차별지원) 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 등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별 및 지원분야별로 차별화된 사업화 지원
  - (클라우드 펀딩) 협동조합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일대일 전략 컨설팅 및 상품홍보 등을 통해 대중을 대상으로 성공가능성 있는 펀딩 모델 발굴



#### ④ 협동조합 활성화 제도 보완

- (연구자의 겸직제한 완화) 겸직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제도 활용이 저조한 연구자 겸직을 활성화하여 **협동조합 창업 유도**
  - ※ 연구인력 대비 휴·겸직 창업자 비율(중소기업청, 2011) : 공공연구기관 0.14%
- (휴·겸직 규정) 벤처기업에 허용되어 있는 교육공무원 및 출연(연) 연구원 겸직 규정을 기술기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확대 검토
  - ※ 벤처기업법 제16조(휴직 허용), 제16조의2(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개정 등
- (출연연 내규 개선) 연구소 기업에만 허용되어 있는 출연(연) 창업 겸직 제도를 확장하여 협동조합 대상으로 허용
- ('기술클리닉' 시범사업) 고경력 연구자의 퇴직 3~5년 전 협동조합 창업 겸직을 지원, 이들을 통한 기업 기술사업화, 기술컨설팅 등 제공
  - ※ 특구재단 시범실시('18년~), 출연연 연구자의 사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자 EXIT 프로그램 추가 운영('19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금융·투자의 연계강화) 자본시장 접근성이 낮은 협동조합에 금융 지원 확대, 외부 투자 허용 등을 통해 **자본 조달 활성화**
  - ※ 과기협동조합 자본조달 방안 : 출자금(70.8%), 부채(29.2%), 금융기관 대출경험(9.2%)
- (금융지원 확대) 신용보증기금에 신설하는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통해 과기협동조합 대상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
  - ※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확대 추진
- (외부투자 허용) 협동조합의 외부투자를 허용하는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방안 검토하여, 과기협동조합에 적용 (기재부)
  - ※ 임팩트 투자 주체가 출자를 통해 투자 방식으로 참여
- (협동조합 ERP\* 지원) 일반 기업과는 다른 협동조합의 회계원리를 감안 과기협동조합 맞춤형 ERP 개발 및 확산 검토
  - \*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인사, 회계, 생산등 회사 자원관리 시스템



## V. 새로운 과기협동조합의 결성 촉진

### ⑤ 다양한 과기협동조합 사업화 모델(BM : Business Model) 개발 확산

- (사업모델 발굴) 과학기술분야 기관 및 전국단위 공모전 등을 통해 새로운 협동조합 사업모델(BM) 아이디어를 발굴('18~)
- 기관, 또는 전국민 대상으로 연구산업형, 과학문화형, 국민생활밀착형 등 분야별 협동조합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 시상 및 인큐베이팅 연계
  - ※ 과학기술인 누구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아이디어를 공개 및 개방

<과기협동조합 BM 아이디어 분야(안)>

<연구산업형>	<과학문화·교육형>	<국민생활밀착형·지역사회형>
· R&D 위한 사업자 협동조합 / R&D 서비스형 협동조합 · 주문연구, 연구관리 등	· 과학기술·ICT관련 교육 및 문화 지원 협동조합 · 교육프로그램, 교구 등 개발	· 사회문제해결, 사회적 가치와 과학기술을 연계한 협동조합 · 기초지자체와 컨소시엄 추진

- (원스톱 창업지원) 기술혁신성 기반의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원스톱 창업지원을 통해 새로운 BM에 기반한 협동조합 신설 지원 추진('19~)
- ※ 창업 아이템 발굴 → 컨설팅/교육을 통한 사업역량 배양 → 과기 협동조합 설립 →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안정까지 전 단계에 대한 지원
  - 청년 협동조합 창업 지원시 과학기술 혁신성을 기반으로 하는 BM 발굴 및 지원 (기재부)
  - 협동조합 운영 원리를 기반으로 기술성, 혁신성, 사회적 가치 등을 보유한 특화된 BM 발굴하여 과기 협동조합 창업 실현 지원
  - ※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과기 협동조합 설립 희망팀과 희망아이디어 활용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원스톱 창업지원 추진체계(안)>

STEP	① 홍보·발굴	② 설립 인큐베이팅	③ 초기 사업화 지원
내용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창업 아이디어 발굴	기술기반 협동조합 설립 교육, 아이템별 비즈니스모델 확립, 액셀러레이팅	프로토타이핑(시제품), 상품화 전략 등 초기사업화 지원
방향	고경력, 경력단절여성, 청년 각 트랙 대상 창업 아이템 발굴	시장진출 가능 비즈니스모델, 조합원 및 조합 구성, 경영인프라 구축	시장 진입
방식	전국단위 홍보, 공모전	분야별 전문 컨소시엄 구성, 액셀러레이팅 지원	R&BD 지원



○ 연구산업형\*, 과학기술·ICT관련 문화·교육서비스형\*\* 비즈니스 모델 등 특화하여 여성,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의 참여 확대 유도

<p><b>연구산업형</b></p> <p>&lt;한국정책 플랫폼협동조합&gt;</p> 	<p><b>과학교육문화산업형</b></p> <p>&lt;매쓰에듀테인먼트센터 협동조합&gt;</p> 	<p><b>기술융합형</b></p> <p>&lt;기술융합 협동조합&gt;</p> 
<p>연구개발서비스업,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 기업으로, 기술정보 소요기업 지원을 통해 정부 정책과 중소 영세기업 사이 공백 연계</p>	<p>공과대학 교수, 과학교사, 과학기자 등 은퇴 과학기술자들이 모여 과학문화 홍보, 문화확산을 위한 위탁영역 및 정책연구 추진</p>	<p>기술협동조합, 3D프린터로 무인항공기 제작</p> <p>남해읍에서 2013년 세계 최장 대형 비행기를 제작한 남해읍이 최근엔 세계최초로 3D프린팅을 이용한 항공기 제작을 시도하고 있다. 남해읍은 지난 11월 11일 3D프린팅을 이용한 항공기 제작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3D프린팅을 이용한 항공기 제작을 하고 있다.</p> <p>남해읍은 3D프린팅을 이용한 항공기 제작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3D프린팅을 이용한 항공기 제작을 하고 있다.</p>

☐ (디지털 기술기반 모델) 기술개발 관련 혁신주체들이 IT 기반 플랫폼을 통해 지식·정보를 교류, 협동조합으로 발전하는 모델 탐색·발굴

- ※ (예) 스위스 MIDATA협동조합은 IT개발자, 의사, 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저장 및 공유를 통해 의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2차적 활용, 사업화 지원
- ※ (예) IoT, Drone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농민에게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 <디지털 기술기반 협동조합 모델(안)>





## ⑥ 연구기관, 대학의 협동조합 결성 주도

- (연구기관 기반 과기협동조합) 연구소 인적·기술적 자원을 활용하여 과기협동조합의 창업 및 운영 활성화, 기술 사업화로 연계
  - (아이디어 발굴) 과기특성화대학, 연구소, 과학기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 창업 연계 활성화
    - ※ 청년창업/기술사업화 분과, 과학교육 문화 분과, 사회혁신분과로 나누어 우수 아이디어 공모 및 시상 추진
  - (고경력 연구원 활용) 고경력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창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이 가능한 기술 서비스 협동조합 육성
    - ※ 특구재단 시범 사업 실시('18~)
- (대학 기반 과기협동조합) 대학이 보유기술로 인큐베이팅한 다수의 기업들을 협동조합으로 구성, 상호 협업 등 촉진
  - ※ 협동조합 구성 후 조합원사끼리 기술인력, 시설, 공간, 기자재 등을 공유
- (지역 혁신플랫폼 구축) 지역 과기특구 등을 중심으로 출연(연), 대학 등 지역혁신주체들의 협동조합 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마련
  - 지역단위로 협동조합의 창업, 운영활성화,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과학기술 협동조합 지원 플랫폼 설치·운영
    - ※ 과기특구가 설치된 5개 지역(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우선 설치
    - ※ 설치방식 : 특구, TP,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위탁

<지원 플랫폼 주요 기능 (예시)>

### <출연(연)+기업, 대학+기업 기술협업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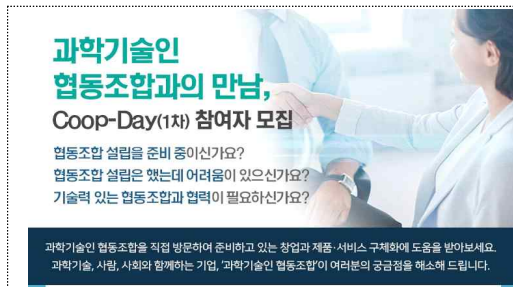
- 연구소기업간, 연구소기업+지역기업간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 지원
- 연구소기업+기술사업화 전문가(특허, 법률, 경영 등) 간 협동조합 지원 등
-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자원 연계(지역기반 산·학·연)
- 지역기반 혁신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간 오픈 네트워크 지원

⇒ 지역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공동체 혁신동력 강화



## ⑦ 예비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확대

- (설립 희망자 현장교육) 협동조합 예비 설립자를 대상으로 관련분야 협동조합에 탐방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의 날(Coop-Day)” 확대 운영  
 <“협동조합의 날” 운영 주요내용>



- ▶ (내 용) 예비조합원이 과기협동조합 실제 사업 현장을 탐방하여 창업을 구체화하고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 ▶ (계 획) 운영규모 확대('18년 5회 →연10회), 이공계 연구팀 등 청년층 참여 확대로 청년 과기 협동조합 설립 확대 유도

- (특성별 맞춤형 교육·연계) 설립 희망자 특성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이공계 대학생, 기술사, 경력단절 여성, 은퇴 예정자 등 과기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그룹별 전문강좌 개설·운영
  -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설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창업컨설팅 지원
    - ※ 기설립 과기 협동조합, 분야별 경영컨설팅기관 등 직접적인 창업 컨설팅 연계·지원
- (창업인턴제) 이공계 청년 등이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경험하고 향후 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과기협동조합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경험할 수 있는 “창업인턴” 고용을 지원하고 이들의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 노하우 습득을 지원
- (지역 사회문제해결 해커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기협동조합 사업모델 도출하기 위한 해커톤 실시
- \* 해 커 톤: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일정기간 특정 목적 달성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회
  - ※ 과학기술전문가, 지역사회 당사자, 지지체 등 기술수요자와 공급자간 만남을 통해 문제해결 모델 발굴 및 협동조합 창업 기반 마련
-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지원)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을 통해 과기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창출 역할을 강화 (노동부)
- 사회적경제기업 단기 교육과정 연계\*, 회계·마케팅·인사 등 역량별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회적 경제 특화 창업 교육 지원 등
  - \* 사회적경제선도대학 또는 SEMBA 운영대학 교수진 활용 과기협동조합 지원



## ⑧ 과기협동조합의 과기협동조합 운영

- (과기협동조합 창업지원 협동조합) 과기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운영 및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과기협동조합 운영
  - 협동조합 출자, 설립운영 컨설팅, 관련 행정 지원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협동조합 창업지원” 협동조합 모델 구축
  - 협동조합 전문가, 기술기반 창업기업, 기술사업화 기업 등 모여 구성
- ※ 초기에는 과기특구가 중심이 되어 추진(출자, 설립 등) 중장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확보
- ※ (예) 신나는 조합 :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투자 등 자금조달과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등 전문적으로 시행
- (예) 엔슬협동조합 : 대기업 임원출신이 모여 벤처 육성 컨설팅 수행
- (사업자고용협동조합 운영) 예비창업자, 프리랜서를 협동조합이 직접 고용하여, 과기협동조합을 경험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 과기협동조합이 예비설립자(사업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기술개발 등 비즈니스 노하우 습득 후 창업(독립)하도록 인큐베이팅 지원
  - \* 프리랜서, 1인사업자, 예비창업자 등
  - 참여자와 협동조합 간 고용계약을 통해 사회보험, 행정업무, 세금 처리 등 체계를 공유, 현장 인큐베이팅을 통한 성장 지원

### □ 프랑스의 IT 테마형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 “Coopetic”



▶ (운영모델) IT, 커뮤니케이션, 영상 분야에 특화하여 프리랜서들과 협동조합이 고용계약을 맺고 교육, 훈련, 사회보험, 홍보 등 행정지원을 하는 “사업자고용협동조합(CAE)” 모델

▶ (지원사항) 조합원에게 법률, 행정, 재무, 홍보 마케팅 등 기업 경영 기반을 제공하고, 조합원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협동조합 법인을 통해 일거리 계약이 가능하며, 사업개발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 가능



## VI. 기대효과

### □ 과기협동조합 수 확대 및 우수 비즈니스모델 확산

- (양적 확대) 2022년까지 과기협동조합을 1,000개 규모로 육성, 10,000명 규모의 조합 일자리\* 창출

\* 조합당 평균 10명 내외의 조합원 및 고용인 추정

<과학기술인협동조합 그간 추이 및 향후 계획(안)>

분야	2014	2015	2016	2017	2022년*
1. 연구개발	14	28	34	38	140
2. 조사 분석	13	17	17	18	125
3. 기술서비스	30	64	95	113	289
4. IT서비스	16	23	31	34	160
5. 과학교육, 문화	25	32	42	61	250
합계	108	164	219	264	1,064

\* 원스톱 창업지원사업('19년~)을 통해 연 100개 창업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을 가정

- (질적 다양화) 협동조합의 조합원 구성, 조합의 유형, 규모, 비즈니스 방식 측면에서 다양성 확대

- ▶ (조합원 구성) 원스톱 창업지원, 사업자고용협동조합 등으로 고경력, 남성 외에도 여성과 청년 과학기술인 비중 확대
- ▶ (유형) 프리랜서형, 융복합형 등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 창출 및 현재 수도권 중심(50%이상)에서 지역플랫폼을 통한 지역으로의 확산
- ▶ (규모) 대학 등 혁신주체 주도의 협동조합 육성, 협동조합 연합회 등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협동조합 육성
- ▶ (사업모델)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BM 발굴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 사업모델 추진

### □ 과기협동조합을 통한 과학기술서비스의 고도화, 전문화

- (서비스 역량 강화) 연구산업, 과학문화산업 등 산업의 주체 육성
  - 특히 이업종간 융합형 과기협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연계 서비스 및 융복합 사업 추진 가능
- (과학기술의 현장 착근) 과학기술전문가 풀을 확보하여 산업현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한 전문인력 및 자원 적시 공급 가능



## Ⅶ. 추진 일정

번호	정책과제	일정	담당
<b>① 기존 협동조합의 발전 촉진</b>			
①-1	중대형 융복합 조합 육성	'19上~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①-2	협동조합 연합회 활성화	'19上~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②-1	10대 성공스토리 발굴	'18下~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②-2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18下~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③-1	과학기술서비스 산업 활성화	'18下~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활용정책과 등)
③-2	일거리 매칭 강화	'18下~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연구성과활용정책과)
③-3	과기협동조합 맞춤형 사업화 지원	'18上~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④-1	연구자 겸직허용	'18下~	과기정통부 (연구기관지원팀 지역연구진흥과)
④-2	금융지원 및 투자강화	'18下	금융위 기획재정부
④-3	협동조합용 ERP 개발 및 보급	'19下~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b>② 새로운 협동조합의 결성 촉진</b>			
⑤-1	다양한 BM 아이디어 발굴	'19上~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⑤-2	원스톱 창업지원	'19上~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⑤-3	연구산업, 과학문화·교육형 협업모델 개발	'18下~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⑤-4	디지털기술기반 협동조합 모델 육성	'19上~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⑥-1	연구소 단위 창업 촉진	'18下~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지역연구진흥과)
⑥-2	대학 단위 창업 촉진	'19上~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⑥-3	지역단위 플랫폼 구축	'19上~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⑦-1	설립희망자 현장교육	'18上~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⑦-2	특성별 맞춤형 교육연계	'18上~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⑦-3	창업 인턴제	'19下~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⑦-4	지역사회 문제해결 해커톤	'19上~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⑦-5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지원	'18下~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⑧-1	과기협동조합 창업지원 협동조합 운영	'19下~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⑧-2	사업자 고용협동조합 운영	'19下~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 참고1

## 과기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의 비교

	2017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운영 실태조사('17.12)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기재부, '18.2 발표)
<b>&lt;조사개요&gt;</b>		
조사목적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현황 파악	협동조합 정책 수립 등에 활용 (협동조합기본법, 2년 마다)
조사대상	설립현황 파악이 완료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240개	신고·인가된 10,615개 협동조합
조사기준일	2017년 6월 30일	2016년 12월
<b>&lt;항목&gt;</b>		
사업 운영율	60.0%	53.4%
평균 조합원 수	14.9명	61.6명 *일반협동조합 53.1명, 사회적 협동조합 128.5명
조합 유형	사업자(68.8%) > 다중 이해관계자 (11.7%) > 직원(9.1%) 順	사업자(70.2%) > 다중 이해관계자 (16.3%) > 직원(4.1%) 順
조합유형별 평균 조합원 수	(사업·생산자) 12.0명, (소비자) 13.8명, (직원) 9.9명, (후원자) 6.1명	(사업·생산자) 30.9명, (소비자) 22명, (직원) 18명, (후원자) 5.7명
평균 출자금	2,141만원	4,064만원
조합원당 출자금	148만원	74.8만원
평균 유급종사자 수	4.3명	4.3명 *일반 3.4명, 사회적 12.0명
유급종사자 중 정규직 비중	49.0%	81.0%
유급종사자의 월평균 급여	(정규직) 235.6만원 (비정규직) 146.2만원 (평균) 159만원	(정규직) 147만원 (비정규직) 92만원 (평균) 135만원
평균 매출액	99백만원	2.7억원
매출비중 (주요고객)	정부·공공기관(50.0%) > 기업(39.2%) > 일반 개인(11.8%) 順	일반 개인(36.1%) > 정부·공공기관 (19.8%) > 조합원(19.8%) 順
교류·연대 참여율	53.3%	30.9%



## 참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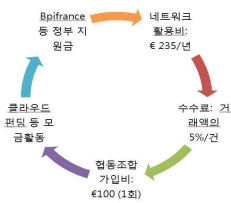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우수사례(국내)

분야	조합명	소개	주요사업
고 경 력 과 기 인	<p>한국법과학 협동조합 (2016.10 설립, 조합원수 36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감식분야 전문가 등 전현직의 법과학 현장수사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li> <li>▶ 사고재구성, 범죄현장 클리닝, 법과학 관련 교육 및 자문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컨설팅과 자문 활동으로 사회적 기여 활동도 활발히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수사 장비 개발 및 판매, 법과학 관련 교육 및 자문, 범죄현장 크리닝 등</li> <li>▶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MOU 체결(2016)</li> <li>▶ OCN 드라마 '터널', '블랙' 감식 장비 협찬(2017)</li> <li>▶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MOU 체결(2017)</li> </ul>
경 력 단 절 여 성	<p>굿잡마미 협동조합 (2016.10 설립, 조합원수 9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기획자, 웹디자인, 웹퍼블리셔 등 여성 IT전문가들이 모여 IT 업계에서 여성의 짧은 근속연수,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의 어려움 등 구조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li> <li>▶ IT분야 제작/서비스 사업,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IT취업교육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사업(홈페이지, 앱 제작 등), IT 및 S/W 교육사업 등</li> <li>▶ 웹사이트 및 모바일사이트 구축 (경기도직업교육센터, 경기행복 교육사업단, 전북대학교 등 2016~2017)</li> <li>▶ IT 및 S/W 교육(HTML5, 반응형 웹디자인 등, 경기도 여성새일센터, 2017)</li> </ul>
중 소 기 업 기 술 융 합	<p>기술융합 협동조합 (2013.7 설립, 조합원수 1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 기계, 디자인, 3D프린팅, 해석 등 전문기술을 보유한 12개의 법인들이 모여 원스톱 시제품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li> <li>▶ 시제품개발대행, 공동 R&amp;BD, 기술컨설팅, 기술교육(하드웨어 설계, 로봇교육, 구조설계해석, 목공 등), IP경영 지원 등 조합원사의 기술융합을 통한 다양한 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제품 설계, 개발, 제조</li> <li>▶ 창업인턴제 인턴연수기업(창업진흥원 2014)</li> <li>▶ 5개 기관 MOU체결(경상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항공우주센터 등, 2014)</li> </ul>



### 참고3

### 과학기술분야 협동조합 우수사례(해외)

조합명	주요내용
 <p>CoTech (영)</p>	<p>&lt;작은 협동조합의 연합체 : CoTech(Cooperative Technologists, 영국)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16년 설립, '18년 총 30개 협동조합의 네트워크로 성장(직원 수 252명)</li> <li>▶ (분야) 디자인, 3D, DB관리 및 분석, 브랜딩, IT서비스 등의 기술 분야 작은 노동자 협동조합들의 기술공유, 협력촉진을 위한 연합체</li> <li>▶ (운영) 협동조합간 기술 공유·협력 위해 “공동창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거버넌스는 온라인 플랫폼(Loomio)에 의거하여 전 구성원 참여</li> </ul>
 <p>Up &amp; Go (미)</p>	<p>&lt;사회공헌형 플랫폼 협동조합 : Up &amp; Go (미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뉴욕 IT개발자 협동조합(Colab Co-op), 뉴욕 노동자 협동조합, 로빈후드 재단, Barclays은행 등이 협력하여 설립</li> <li>▶ (분야) 청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협동조합으로, IT 개발자 협동조합이 IT 플랫폼을 개발·구축하고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은 플랫폼의 공동소유자로서 출자</li> <li>▶ (운영) 지역 서비스노동자 지원조직과 은행의 사회공헌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설립, 기존의 이윤추구형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대비 15% 수준으로 수수료 절감</li> </ul>
 <p>France Barter (프)</p>	<p>&lt;조합간 B2B 거래를 위한 플랫폼 협동조합 : France Barter (프랑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1000명 이상의 기업가(중소기업 및 협동조합)가 참여</li> <li>▶ (분야) 협동조합의 온라인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이자 핀테크 플랫폼이며, 협동조합들의 B2B 사업을 지원</li> <li>▶ (운영) 각 협동조합들간 서비스와 제품을 현금거래가 아닌, '교환'의 형식으로 거래, 서비스 수요자인 협동조합/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또 다른 협동조합/기업의 공급업체가 되어, 연쇄적 비즈니스로 연결</li> </ul>



## 과학기술인협동조합 빅데이터 분석 결과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주요 업무영역 분석(워드 클라우드)

###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조합명 분석>

###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사업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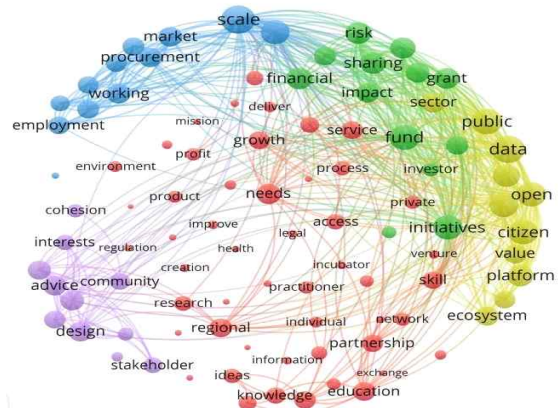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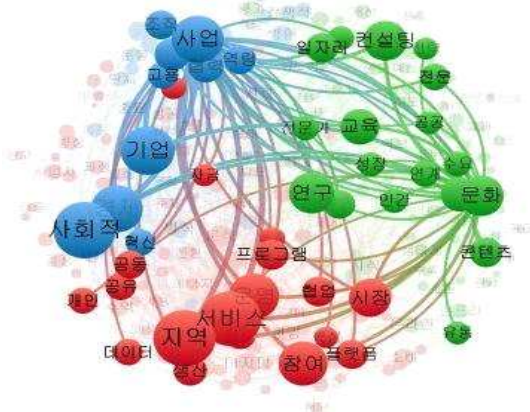


- 조합명으로는 3D 프린팅, 에너지, 드론 등 신산업 관련 키워드가, 사업내용으로는 컨설팅, 교육, 콘텐츠 등 과학기술서비스 관련 키워드 다수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네트워크 분석(국내외 문헌기준)

## <(국내) 주요 문헌 네트워크 분석>

### <(국외) 주요 문헌 네트워크분석>



- (국내) ① 정책지원 (“사회적경제”, “고용기업”),  
② 연구산업 및 과학문화 (“연구”, “시장”, “문화, 콘텐츠” “컨설팅”)  
③ 지역공동체 참여 (“지역”, “서비스” “참여”) 관련 키워드 주도적
- (국외) ① 협동조합 방식을 통한 리스크 경감 (“risk”, “financial”, “crowdfunding”)  
② 시민 협력 플랫폼 (“public”, “citizen”, “platform”),  
③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지원 (“procurement”, “market”, “inclusive”),  
④ 지역공동체수요를 반영한 기획 (“community”, “interests”, “planning”),  
⑤ 협동조합 활성화 교육 (“education”, “learning”) 관련 키워드 주도적







---

#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

2018. 7.









---

#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

2018. 7.





## 목 차

I. 추진 방향 및 목표 .....	172
II. 제도개선 방안 .....	173
1.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	173
2. 자활사업 참여절차 개편 및 참여자 역량 강화	174
3. 자활기업 문호 개방, 규모화 지원 및 부처간 칸막이 제거	175
4. 자활기업 지원 인프라 개편 .....	176
5. 자활기금 적극 지원 체계 마련 .....	178
* 참고자료 .....	180
1.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경로	
2. 자활기업 지원유형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 자활기업 활성화 추진 개요

국정과제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국정과제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자활대상자 확대,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

### □ 자활기업의 의의

○ 일자리 제공을 통해 수급자, 차상위층의 탈수급·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활급여를 제공하는 수단

○ 다양한 문제\*를 가진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호된 작업장

\* (일반저소득층:자활대상자) 이혼비율(5%:28%), 만성질환보유(37%:53%), 중졸이하(22%:49%)

#### < 자활기업 현황('17년) >

- ▶ (개수·유형) 1,092개 운영중, 개인사업자(65%),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순
- ▶ (업종) 청소(24%), 집수리(17%), 돌봄(15%), 폐자원·음식물재활용 등
- ▶ (매출액) 총 2,399억원(기업당 2.2억원)이나, 3개 전국기업의 매출액 1,615억원(중복집계 825억원)을 제외하면 지역 자활기업 1개소당 매출액은 1.3억원 수준
- ▶ (고용) 11,029명(차상위·수급자 3,489명)으로 기업당 10명 수준이나 3개 전국기업의 고용규모 (5,685명 / 중복 1,936명)를 제외하면 기업당 6.9명 수준으로 영세
- ▶ (인건비) 합계 1,230억원, 기업당 97백만원, 정부 인건비 지원\*은 36억원(3% 미만)

\* 자활기업 고용 수급자에 시장형 근로사업단 인건비의 100%(2년), 50%(이후 3년) 지급

### □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저소득층 지원) 수급자, 차상위자 대상 일자리 확대와 근로소득 증가를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 및 빈곤층의 상위소득 계층으로 이동 유도

○ (일할 권리 내실화) 저소득층 고용안정성이 우수한 자활근로·자활기업 강화

\* 생계급여수급자(119만명)중 근로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근로조건이 부과되어 취업성공 패키지(26천명), 자산형성지원사업(72천명), 자활근로·기업 취·창업(41천명)으로 경로가 나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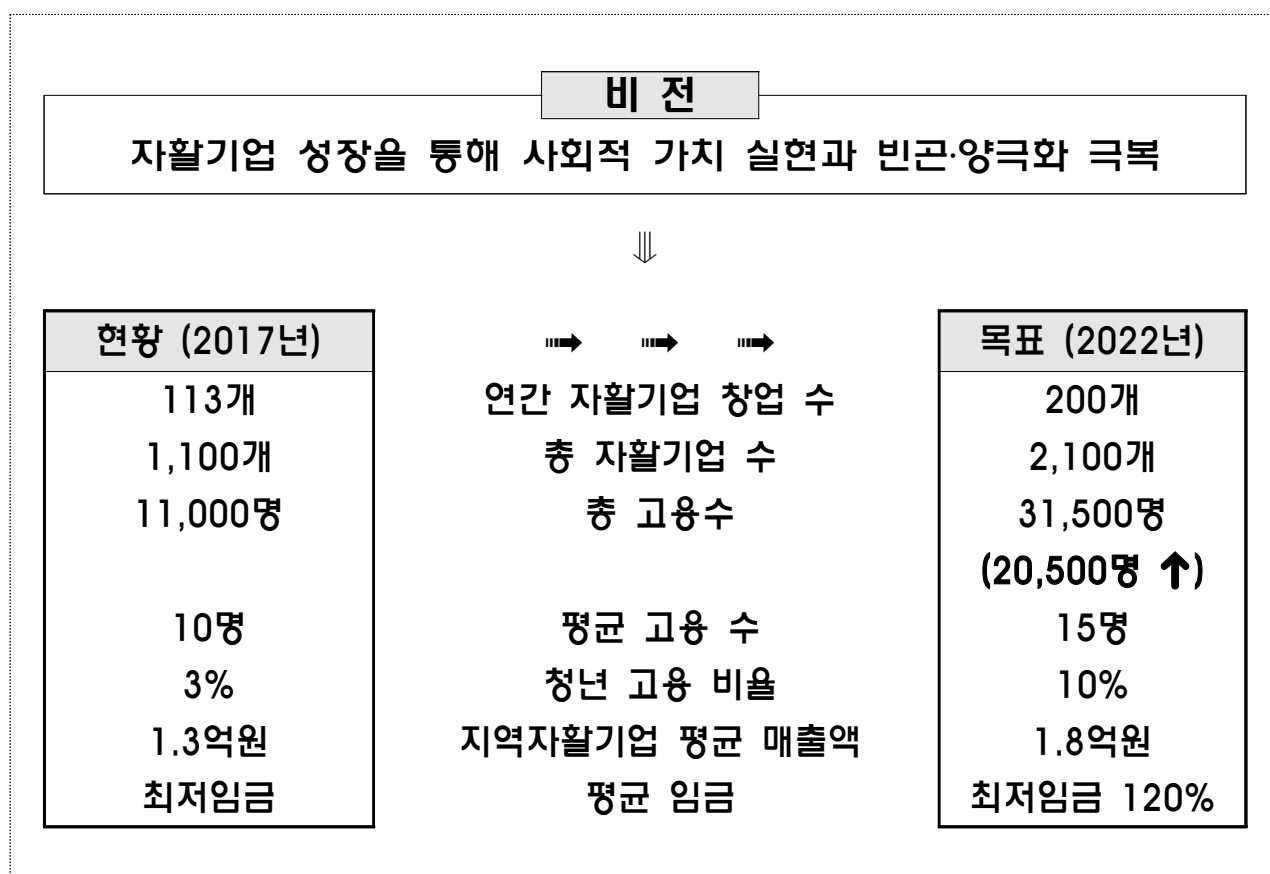
- 청년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높은 탈수급(64%) 기여 등 순항, 취·창업지원제도(자활근로, 자활기업)는 낮은 참여 등으로 재편 필요

⇒ 자활기업(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  
2022년까지 자활기업 1천개, 저소득층 일자리 2만개 창출



## I. 추진 방향 및 목표

- (사회적경제) 자활기업은 근로빈곤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의  
통로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저\*로서 역할  
\* 자활기업 약 37%(407)가 사회적기업(178/1,713), 사회적협동조합(31/949) 등으로 성장
- (논의방향) 종전의 창업 前단계 집중지원에서 탈피, 자활기업의  
창업과 시장에서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
  - '수급자'에 대한 '복지부'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부처간 협업으로 자활기업 1,000개, 일자리 2만개 창출('22) 추진
  - 맞춤형 취·창업 인큐베이팅으로 사업실패·실직 저소득층이  
스스로 소득을 만드는 선순환 사회보장구조(패자부활기회) 마련





## II. 제도개선 방향

### 1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 (청년참여) 저소득 니트(NEET)족\* 및 보육원 보호종결아동(3천명)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급여수급자 편입 방지

\* 근로의지가 미약한 소득하위계층 청년이 일하지 않는 니트족으로 머물 가능성이 중산층 이상 가구 청년의 1.6배(서울대 이봉주 교수)

- (청년창업)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을 도입하고, 사업단을 기업으로 창업시키는데 성공한 자활센터에는 복지부 평가시 가점 부여

<지자체 청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창업지원('18.下~) 개요>

- ▶ (대상) 자활근로사업 신규참여 또는 참여기간 2년 이내인 만18~34세 청년
- ▶ (업종) 요식업, 문화, 스포츠, 쇼핑물·유통 등 청년선호 업종 중심
- ▶ (과정) 심리적 자립·사회적응 스킬훈련(1년차), 기술훈련, 사업단 운영(2·3년차)
- ▶ (지원) 사업준비금(최대 3천만원), 근로사업비(30%)를 50%로 확대, 창업포상

- (청년취업) 청년채용 자활기업과 고용유지 청년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일손 부족 자활기업과 구직 중인 청년층의 매칭 유도

- 자활기업 참여 청년에 자활장려수당(소득의 최대 30%) 지급

- 수급자 청년을 고용한 자활기업에는 5년간 인건비 지원\*

\* '17년 인건비 지원액(101만원/인) 기준 처음 2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청년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지원(2년간 최대 2,400만원, 행안부) 등 타부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적극 연계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청년 3명 고용시 1명 최대 2천만원 지원, 중기부), 지역주도사업(도시청년 시골파견, 농식품부) 등

※ '22년 자활기업(31천명) 청년고용비율 10% 달성으로 청년일자리 3천개 창출



## 2

## 자활사업 참여절차 개편 및 참여자 역량강화

- (맞춤형경로) 참여대상자의 자활역량과 가구여건을 종합 평가하여 최적의 자활경로 설정이 가능하도록 역량평가제도 개선

\* 자활사업 참여자의 1년 고용유지율이 취성패 참여자의 2배 수준

- 종전에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주로 '취업경로'로 유도했으나, 당사자 의지와 여건에 따라 '창업경로' 선택 가능성 제고



\* 조건부수급자 역량평가 및 취업우선지원제도 개선(복지부-고용부 협의)

- (절차 간소화) 사업 참여자의 편의와 종합적·심층적 상담을 위해 자활역량·취업준비도 등 평가를 통합하여 원스톱 상담 실시

- 4개 평가\*(4개 기관 수행)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통합 수행

\* 현재 근로능력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자활역량은 지자체, 취업준비도는 고용센터(고용부), 자립역량평가는 지역자활센터(복지부) 등 여러 기관에서 평가중

- (참여환경조성) 자활사업 미참여 수급자의 자활근로 참여 유도

- 가족 보육·간병 때문에 근로조건부과가 유예된 수급자(14천명)에게 돌봄서비스 바우처 등을 제공하고 시간제 근로에 참여토록 유도

- 자활근로 인건비 인상\* 및 근로 미참여자 모니터링 병행 추진

\* 수급자의 근로 미참여 이유는 낮은 자활근로 인건비, 수급자격 유지 선호 등

- 최저임금 대비 자활근로 인건비 수준 인상 추진 (18. 70% → 80%)

- (교육·관리 강화) 청년층·차상위층 등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활기업 리더 육성

- 창업과정에서 필수적인 직능·자격·마케팅 기초과정 교육 등을 자활연수원에서 제공(자격증 취득까지 지원)

- 자활사업에의 자발적 참여 대상인 차상위 이상 계층의 자활기업 창업 등 보호된 취·창업사업 참여 유도로 수급층으로 전락 예방



### □ 자활기업 문호 개방 및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강화

- (문호개방)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종사자 요건 (1/3 이상 수급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 자활기업 인정
  -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선행 기업의 동료컨설팅(peer consulting),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성장 모델(우수기업 포상 등) 추진
- (민간위탁) 지자체(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집수리·간병사업 등 자활근로사업을 자활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18.下 지침개정)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나, 자활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모절차 없이 사업성 검토 후 자활기업에 위탁

### □ 동일·유사 업종 간 규모화 지원

- (규모화) 각 권역별 동종·유사업종 간 네트워크화, 규모화 추진
  - 전국 자활기업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재활용·커피 도소매·외식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여 매출액 및 고용확대 유도
  - \* 자활기금 투입, 지자체 부지 활용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작업장 설치 등 지원

### □ 자활기업의 공공사업 유치 지원

- (도시재생 등) 매입임대주택·도시재생 사업(국토부·LH)과 자활기업 집수리·청소·관리사업 등을 연계
  - \* 중앙자활센터-LH간 업무협약('18.6월)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련 입주 청소, 공가관리, 매입대상물건 상태 확인 등 업무에 자활기업을 투입할 예정이며, 협력분야를 향후 도시재생사업 전반으로 확대 계획
- (공공조달 우대) 자활기업 공공기관 입찰 가점 확대\* 및 취약계층 고용(30%) 자활기업 대상 수의계약제도(5천만원 이하)\*\* 신설
  - \* '17.12, 계약예규 개정 완료 (국가: 1.7점→2점, 지자체: 0.5점→1점)
  - \*\* 국가계약법 시행령(7.9까지 입법예고)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7.24 공포 추진) 개정



#### 4 자활기업 지원 인프라 개편

- 인프라 네트워크화를 통한 지원 강화(『한국자활복지개발원<sup>(가칭)</sup>』)
- (재구조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14곳), 자활연수원 등으로 분산 운영중인 자활지원조직을 재정중립 원칙하에 재구조화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재구조화를 통해 공공성·안정성\* 제고, 기능중복 제거, 정보시스템 및 기금집행지원 효율화 등 도모
    - \* 자활지원조직 공공성 제고 요구에 부응, 개발원 재편 후 공공기관화 추진
    - 기업인증, 경영컨설팅, 규모화 지원은 광역자활센터의 고유 업무화
  - (참여자 DB) 자활정보시스템 내에 참여자 DB 구축, 자활경로 상담 및 자활프로그램 반복진입 방지 등에 활용
    - 자활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사업 중도 탈락자의 재진입 시 DB를 활용하여 맞춤형으로 탈수급 경로 안내
  - (자활기금 심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지자체 요청시 기금 지출·용자 심사를 지원하는 등 기금활용도 제고
    - \* 개발원에 자활기금 운용 전문조직을 설치, 자활기업 규모화 전국화 지원
  - (교육강화) 현장수요가 많은 기술·직능교육, 창업준비를 위한 경영기초과정 등 교육 확대, 사회적 경제조직 구성원 역량 강화

현행		→	변경	
중앙 자활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연구·교육·홍보</li> <li>■ 사업의 개발, 평가</li> <li>■ 광역·지역센터 및 자활기업 기술경영 지도</li> </ul>		한국 자 활 복 지 개 발 원	<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연구·통계·홍보</li> <li>■ 신규사업 개발, 평가</li> <li>■ 자활기금 운영, 자활DB 운영</li> </ul>
	광역 자활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연구·교육·홍보</li> <li>■ 광역자활사업체 육성</li> <li>■ 지역특화 일자리 연계</li> </ul>			<광역자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기업 경영컨설팅·인증</li> <li>■ 자활기업 규모화·프랜차이즈</li> <li>■ 지역특화 일자리 연계 등</li> </ul>
	자활 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관련 교육기능 수행</li> </ul>			<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일원화</li> <li>■ 청년특화 자격과정 운영</li> </ul>

\* 중앙자활센터 19명 정원 예산 25억원 → 개발원(광역센터 포함) 170명 정원 예산 100억원



□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경제 지원 허브로 육성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지자체가 지정하는 지역자활센터(250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다양한 지역특화사업 수행여건 조성
    - 서울 송파 등 별도의 모법인이 없는 지자체 직영(전국11개소)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우선 전환(기 전환 9개소)
    - 현장 피드백 결과를 반영, 법인화 지역자활센터 인센티브\* 조정
- \* 매출액의 50% 자율적 사용, 지역특화형 사업개발 및 네트워크비용 지원

<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15~'21)>

- (개요) 근로취약계층 고용 촉진 차원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역자활센터가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법인화
  - (운영) 사회적협동조합형 지역자활센터는 사업단 매출액의 최대 50%를 자율적으로 사용, 운영비 지원액은 매년 10%씩 감축(최대 50%까지)
- (허브화)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적경제조직과의 네트워크를 강화, 협력·공동사업 추진(도시재생, 문화사업, 농촌 일자리 등)
    - 사회적기업 등 여타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사업단 출범 등을 지역자활센터의 성과로 인정, 인센티브 지원 검토
    - 성공한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대표, 사회적경제 전문가 등이 지역자활센터 운영진에 참여토록 의무화

<중앙자활센터-LH 간 『사회적 가치 구현 상생업무 협약』('18.6월)>

- LH가 추진 중인 집수리 연계형 장기전세임대 사업,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사업,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등에 자활기업 참여를 촉진
  - 중앙자활센터는 사업에 참여할 자활기업을 선정하고 LH는 자활기업을 입주청소, 집수리, 공가관리, 매입대상 부동산 상태 파악 등 업무에 투입
- (예보자활기업) 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 2,400여 개 중, 매년 자격요건 등을 갖춘 100개\*('17년 9개) 사업단에게 자격 부여
    - 자활사업단 운영기간(3년) 중 시장진입을 앞둔 우수 자활사업단(매출액이 사업비 대비 40%이상)을 선정해 집중 지원
- \* 창업자금 적립비율(매출액의 60→80%), 사업비 비율(총비용의 30→50%) 조정 등



## 5 자활기금 적극 지원 체계 마련

- (현황) 전국 233개 지자체 조례에 의해 총 3,941억원의 자활기금 적립(자활근로수익금 등), 자활기업 지원 등 자활사업에 활용

\* 총 4,376억원 중 435억원 집행(소모율 10%), 잔액 3,941억원('17년말 현재)

- 일부 지자체는 근로수익으로 조성된 자활기금을 폐지, 타기금에 통합
- 손실발생 위험기피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소극적 운용\*, 목적외 사용 등 자활기금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금년중 전수조사 예정)

\* 위험부담을 직접 감수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전세보증금 대출(38%) 등 회수가 가능한 지원에 치중, 현장이 요구하는 사업자금 지원 등에는 미온적

### <지자체 자활기금 오용 사례>

- (일반회계 편입) 경상남도 2015.12월 자활기금 조례를 폐지, 잔액 및 상환금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조례 폐지 당시 자활기금 잔액 약 33억원)
-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 대전('11.4월), 전남('13.4월) 자활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대전복지재단·전남복지재단 조례를 제정, 재단으로 이관한 기금을 재단규정에 따라 관리

- (기금위탁) 희망하는 지자체는 자활기금 운용, 융자심사 등의 업무를 중앙(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설치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탁\*

\* 중앙자활센터 업무위탁 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이미 완비

- 위원회에 전문가, 지역관계자\* 등 참여, 지자체는 위원회의 기금 집행 타당성 등 검토결과를 활용하여 집행여부 결정(집행책임 분산)

\* 자활기금 조성·사용권한은 지자체, 중앙의 위원회는 권고·중재 기능 수행

	기존	변경
신청	자활기업 → 지역·광역자활센터(보증) → 지자체(자활담당)	자활기업 → 자활센터, 지자체
심사	지자체(회계부서, 심의위원회)	중앙 위원회(은행)
집행	지자체(자활담당)	(위탁)민간은행

- 시군구 단위로는 육성이 어려운 광역·전국자활기업 등 자활기업 규모화, 네트워크화를 중앙과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으로 유도



□ (집행간소화) 지자체-중앙자활센터-민간은행 간 업무협약을 통해 효율적인 자활기금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위탁 범위 설정

○ 대출심사를 간소화하고 전문가가 융자심의 등에 적극 참여

○ 자활기금 집행 심의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가치 평가 등 반영

○ 자활기업 전세보증금·사업자금 등의 대출금리\* 인하 추진

\* (現) 전세보증금은 3% 이하, 사업자금은 3%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고정금리)

□ (기금관리 강화) 임의적 자활기금 폐지 제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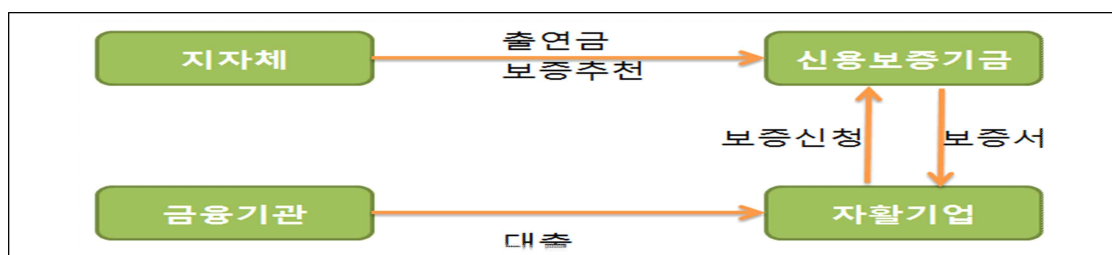
○ 기금 조성의 특수성(자활참여자의 근로수익 적립)과 사용목적(자활사업 활성화)에 맞지 않는 지자체의 임의적인 폐지·오남용 방지

○ 법개정까지 지자체에 자활기금 폐지의 위법·부당성 적극 설명

□ (협약보증) 지자체 자활기금 일부를 중앙자활센터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재원으로 출연(50억원, 5년간 매년 10억원)

○ 신보는 5년간 4백억원(출연금액의 8배) 규모로 자활기업에 대한 융자 보증지원 가능('1개 기업당 5천만원 융자시 8백개 기업 지원)

○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신보 전문가 참여



○ 금융위·신보의 사회적경제지원계정(최대 5천억원) 적극 활용

- 신보의 자활기업 신용보증 심사기준을 합리화하여 다른 사회적 경제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자활기업 보증 확대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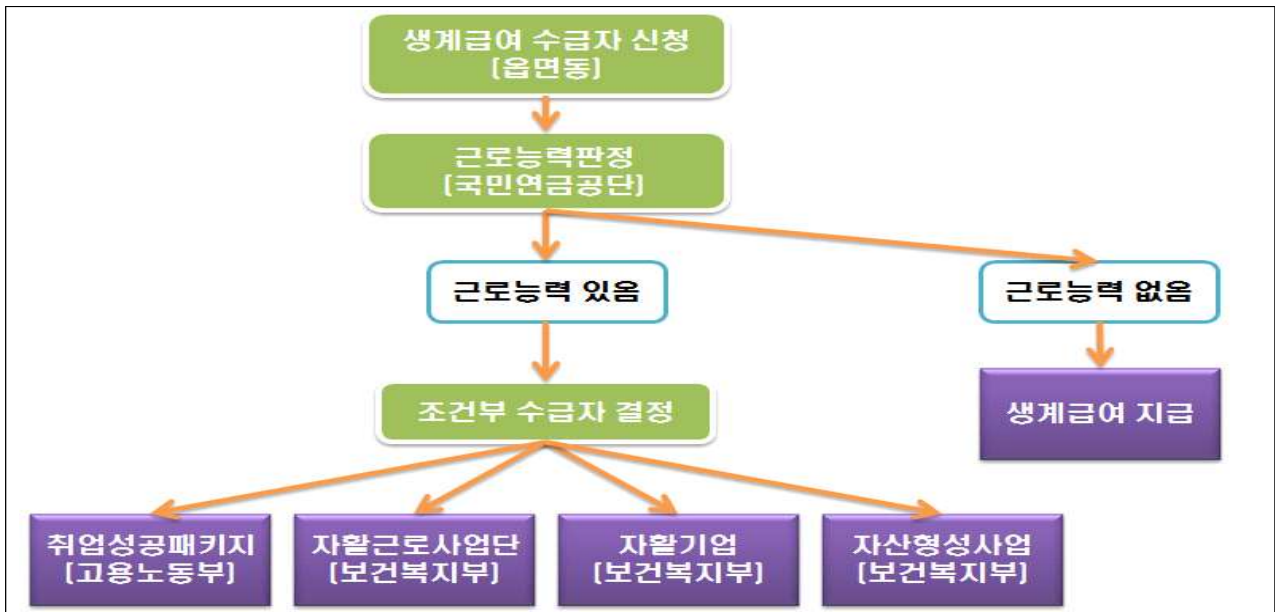
\* 보증액('18.6) : 사회적기업 438억원, 협동조합 79억원, 자활기업 10억원



## 참고 1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경로

-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경로는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자산형성 사업, 그리고 자활기업 취·창업으로 나누어짐



- ❶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근로능력이 높고 취업의지가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일반 실업급여 대상자로 **직업훈련**에 초점

\*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성공수당(150만원), 내일배움카드(최대 300만원), 진단경로 설정(20~25만원), 개별 훈련수당 월평균 28.4만원을 지원

- ❷ 자활근로는 근로능력이 취약한 참여자에게 자활·자립 동기부여 및 직업훈련, 창업준비, 사회성회복 등 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지역사회와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프로그램 제공

- ❸ 저소득층이 전세금, 창업 등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자산형성 사업은 지원대상의 특성에 따라 **4가지로 구분** 실시 중

- ❹ 자활기업은 성공적인 자활근로사업단이 독립하여 시장에 진입하거나,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신규 설립할 수 있는 기업 형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평균 종사자 10인, 평균 매출액은 1.3억원으로 2~3인 소규모 창업을 대다수



## 참고 2

## 자활기업 지원유형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

### □ 지원 대상 자활기업 유형 구분 및 재정지원 확대

- (자립형 자활기업) 소규모 창업을 통한 근로취약계층 자립을 목적으로 하며, 2인 이상 4인 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구성
  - 지원요건은 인원기준(2~4인), 外 현행과 동일(개인사업자도 인정)
- (사회형 자활기업) 일정인원(5인 이상) 확보 및 수급자·차상위자 고용 비율요건 지속충족(전체 구성원의 1/3), 법인격취득 의무화 등
  - 최대 5년간, 신규 채용 수급자 1인당 인건비 50% 지원
  - 자활기금 활용, 사업자금 융자 지원 확대 (2억원 한도, 7년 상환)
  - 우수자활기업 대상 추가 사업비지원 확대('18년 16개소, 최대 1억원)
  - 탈수급종사자 사업자부담 4대 보험료 및 사업용재산 취·등록세지원

### □ 사회적가치 실현 유도를 위한 자활기업 인증 강화('18.下 지침개정)

- (인증제) 정부의 추가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증제 도입, 인증기간을 명시(예시: 1년)하고, 정기적인 재인증 절차 신설
  - 자활정보시스템 성과입력(연 2회 이상) 및 사업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되, 성장단계에 진입한 자활기업의 재인증에 대해서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수준으로 인증 요건 완화
- \* 전체 고용 인원 (5인 이상) 대비 취약계층(차차상위자, 북한이탈주민, 장기 실직자, 장애인, 출소자, 고령자 등) 고용 30% 이상
- (명단공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활기업' 명단 등을 공표하여 타부처 및 공공기관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홈페이지 게시 등)
  - 지원대상 자활기업의 업종, 생산품목 및 우선 위탁사업·생산품 우선구매내용 등도 고시하여 판로지원과 저소득층 고용창출 연계
  - 광역자활센터에서 정기적인 성과 모니터링 및 현장 지원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 추진

2018. 7.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 추진

2018. 7.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



# ||| 목 차 |||

I. 추진배경 .....	187
II.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개념 및 운영 .....	188
1.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개념 .....	188
2.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운영구조 .....	189
3.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공공지원 .....	191
III.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사업구성 및 공공지원 ..	195
1. 기본방향 .....	195
2. 『5대 서비스』 사업화 지원 .....	196
3. 안정적 조합 운영기반 구축지원 .....	200
4. 협동조합 교육지원(일자리 관련) .....	203
5. 他 사회적 기업과의 N/W 구성지원 .....	204
IV.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및 관리계획 .....	206
V. 향후계획 .....	207



## I. 추진배경

-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은 노후주택 정비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해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
  - (노후주택정비) 뉴딜사업은 전면철거가 아닌 현지개량 위주의 소규모 정비사업, 경관개선 목적의 집수리\* 추진
    - \* 집단적 경관개선의 목적을 위해 자부담 10%를 전제로 주택외부수리 지원
  - (기초생활인프라) 마을도서관·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공공시설의 적극적인 공급을 위해 재정 및 기금 투입
    - \*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기초 생활인프라 건설비용 지원(부지매입은 일부 제한)
    - \*\*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등 건설 시 총사업비의 70%까지 1.5%의 금리로 융자
-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물리적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주도적으로 주거지를 유지·관리할 자조조직 필요
  -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총괄 기획·집행하지만, 인력·재정상 한계로 관련 시설을 지속적·능동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
  - 주차장 등 대형 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나, 마을도서관 등 소형 시설은 비용회수가 어려워 민간위탁도 현실적으로 곤란
- 결국, 도시재생지역의 마을 주민,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는 조직을 만들어,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유지·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주민 자조조직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을 관리하고, 도시재생을 통해 공급된 기초생활인프라를 관리하도록 육성 추진

⇒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소비자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하여 마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지역 생활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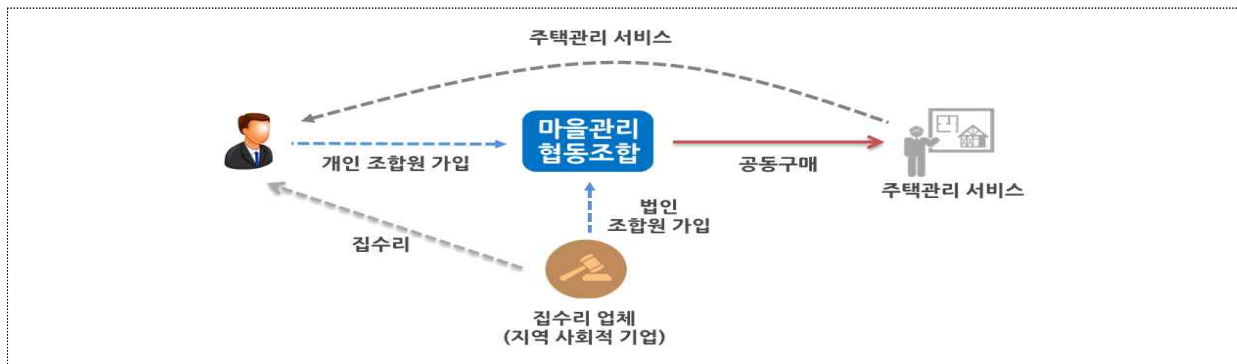
## Ⅱ.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개념 및 운영

### 1.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개념

#### □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정의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은 조합이 공동구매한 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등을 이용
- 사회적 기업 등 他 사회적 경제주체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 법인조합원 가입 시 집수리 등 해당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조합원에게 판매도 가능

【마을관리협동조합 개념도(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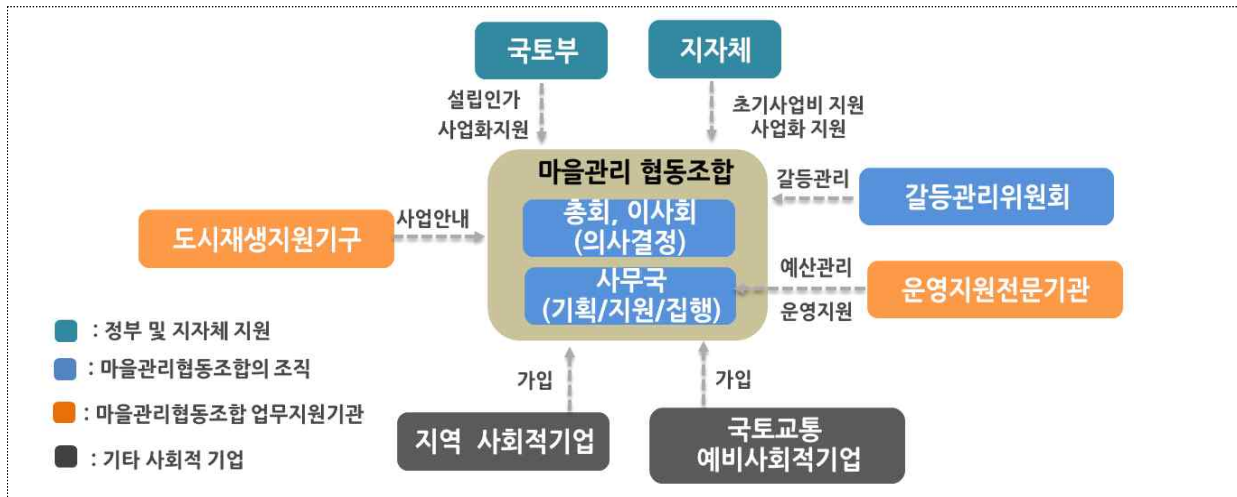
#### □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방향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마을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
  - \*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또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비영리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일자리 제공 등 사업적 기능 수행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국토부 장관이 설립을 **인가\***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므로 **잉여금 배당 금지** (공공목적에만 사용 가능)
  -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제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2.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운영구조

- (조직)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및 이사회**, 집행기구인 **사무국**, 갈등관리를 실시하는 **갈등관리위원회** 등으로 구성



- ① (마을관리 협동조합 총회 등)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마을주민을 조합원으로 하고, 의사결정 기구로 총회, 이사회 등을 구성**
  - (총회)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운영
  - (이사회)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총회 의결 안건 등 결정
    - \* 총회, 이사회로 결정할 사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사무국)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업무**,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홍보 업무**, 협동조합 **사업 총괄 집행**
  - \* 임원의 사무국 직원 겸직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일부제한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주택관리업무가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사무국 인력 중 **최소 1명은 주택관리사 채용 권고**
    - \*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주민 활용 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업
- ③ (갈등관리위원회)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과정에서 **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중재 역할수행** (非法政 사항, 표준정관 반영)
  - **외부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성 확보
    - \* 관할 지자체,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지원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인사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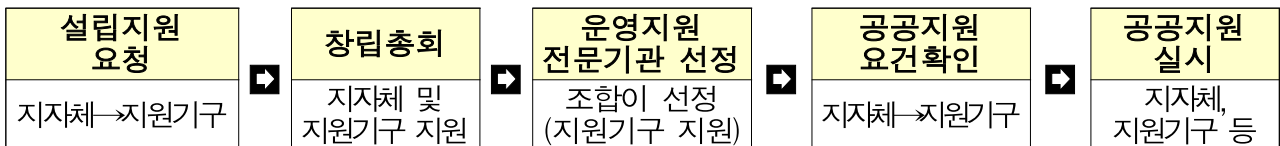


-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국토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마을 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및 운영점검·관리를 실시
  - 지자체는 뉴딜사업비로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3년간 9천만원), 전체 활성화 계획과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 간 연계 강화
  - 국토부와 지자체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자생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적주택 사업, 기초생활인프라 위탁관리 등 수익원 확보 지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 업무지원) 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는 도시 재생지원기구를 추가 지정하고, 운영지원 전문기관도 선정
  - ① (지원기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뉴딜 사업지 지원
    - 진흥원은 지역순회자문단, 모니터링 및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마을 관리 협동조합의 성장단계별, 사업유형별 지원 체계 구축
    - 아울러, 『표준정관』과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영하고, 국토 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등 他 사회적기업과 업무연계 지원
  - ② (운영지원 전문기관) 협동조합은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기반 금융기관을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투명한 운영 추진
    - \* 운영지원전문기관은 조합원 가입, 출자, 경비부담, 임원보수 등 업무수행
    -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그간 지역 사회에서 수행해온 지역 공헌 사업과 협동조합의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 협동조합이 희망하는 경우,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집행업무 등 사무국 역할도 수행 가능
- (他사회적기업과 연계)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지역 내 사회적기업 또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법인 조합원으로 활용
  - 법인 조합원은 협동조합원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공급하여, 마을 관리 협동조합의 기능을 일부 대행 (사회적기업진흥원 연계 지원)



### 3.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공공지원

- (공공지원 요건) 국토부,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지원 전문기관은 국토부 고시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마을관리 협동조합만 지원
  - (국토부 고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공공지원을 받으려면 운영지원 전문기관 선정, 표준정관 필수 조항 반영이 필요함을 명기
    - \* 도시재생 특별법 제27조제1항제8호(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보조)를 위한 기준
  - (표준정관)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위한 정관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총회 운영안, 조합원 자격 등 표준정관 마련
    - 다만, 임원 자격 등 일부 조항은 필수 조항으로 운영
- (공공지원 신청절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초기 설립을 지원 하되,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공공지원도 결정



- ① (설립지원 요청) 지자체는 관할 뉴딜 사업지역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기구에 지원 요청
- ② (창립총회) 지자체와 지원기구는 사업계획, 정관작성 등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③ (운영지원 전문기관 선정) 창립총회를 마친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신탁, 새마을금고 등을 운영지원전문기관으로 선정 (지원기구 지원)
- ④ (공공지원 가능여부 확인) 지자체는 지원기구에게 해당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국토부 고시 등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
- ⑤ (공공지원 실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공공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초기사업비 지원, 사업화 지원 등 공공지원 개시



[참고1]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의 관계

□ (문제상황)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뉴딜 사업지 내의 주민주도 조직이므로, 주민협의체와의 관계, 조합원의 자격 등의 개념 정리 필요

\* 주민협의체 :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의견전달 및 사업안 제시

□ (쟁점1)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발기 설립시, 주민협의체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협동조합에 주민협의체의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

○ (①안) 통합운영 (협동조합원 = 주민협의체 회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주민주도 조직이며,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하여 마을 내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주민협의체와 동일시 할 필요

-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지자체가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주민대표기구로 인정하여, 주민협의체의 난립 및 갈등 방지

○ (②안) 분리운영 (협동조합원 ≠ 주민협의체 회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주민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주민협의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

⇒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공공자산에 대한 위탁, 주민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주민협의체와 동일시하는 ①안 적정

□ (쟁점2) 협동조합원의 자격을 마을주민으로만 제한할지 여부

○ (①안)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마을재생을 위한 것으로, 마을주민이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하므로, 외부인 참여 부적절

○ (②안) 소비자 협동조합이므로 조합원의 자격 제한은 부적절하며, 외부인의 개입 우려는 협동조합 임원자격 제한하여 통제 가능

⇒ 협동조합 참여 주체를 다양화 하고,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제한은 부적절, ②안 적정

□ (대응방안) 표준정관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되, 선택은 주민 재량

○ 협동조합 구성초기에는 주민협의체와 동일한 구성원으로 구성하고,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협동조합원 임원요건에 주민협의체 경력 요구

\* 기존 주민협의체 회원이 아닌 경우 마을관리 협동조합 가입 후 활동경력 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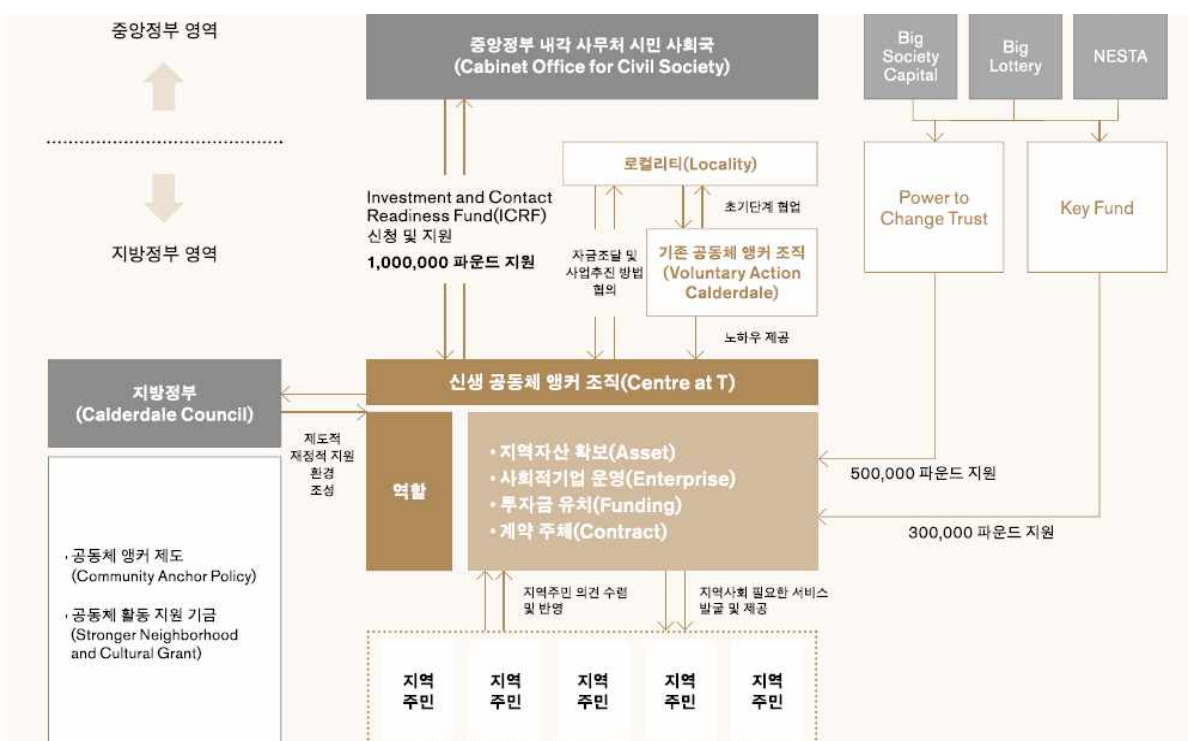
○ 아울러, 조합원 자격제한을 두지 않되, 협동조합원 임원은 반드시 마을주민(3년이상 거주)으로 제한하여, 과도한 외부인 개입 차단



## [참고2] 해외 유사사례 및 비교

### □ (영국) 공동체 앵커조직(Community Anchor Organis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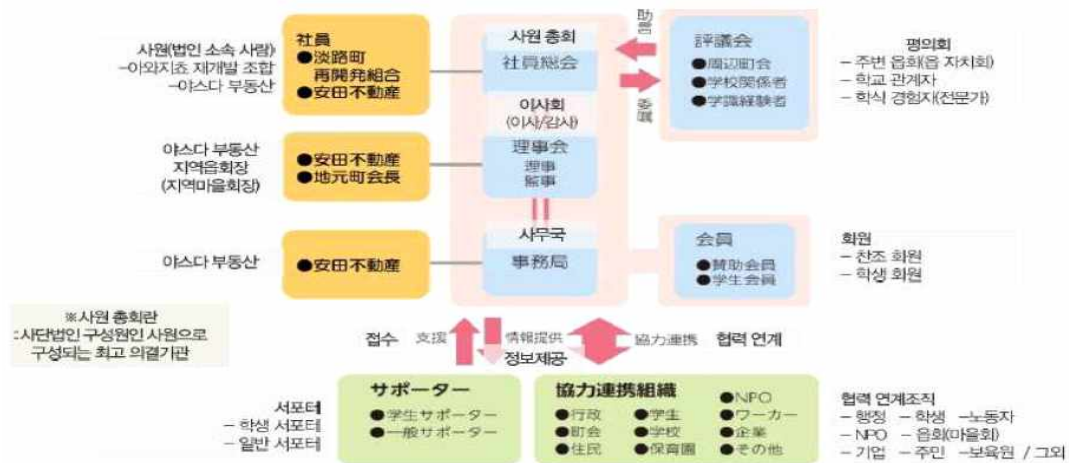
- (개념) 공동체 앵커조직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역기반 비영리 조직**으로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서비스 공급자, 지역자산 공유 중개자 역할 수행
  - 사회적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는 직접 지역사업을 운영하면서 확보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운영
  - 영국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대신하여 공공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공동체 기업**으로 육성 추진
- (공공지원 사항) 영국 정부는 **지역공동체권리(community rights)**를 법제화, **지역앵커시설을 공동소유** 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
  - 또한, 영국 정부는 자선단체와 함께 공동체 앵커조직의 **초기사업화 비용**을 지원하여 공동체 앵커조직의 **운영 안정화 지원**
- (대표사례) **Centre at Threeways**(‘11년 설립) 설립 · 운영 사례
  - Centre at Threeways는 수익활동이 가능한 유한회사로 지자체로부터 **지역 내 폐교에 대한 점유권과 활용권**을 받아 시설물 개선 및 운영
  - 또한, 영국정부가 제정한 **지역공동체권리**와 **초기사업비** 기금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인 **Locality**가 지원





## □ (일본) 에리어매니지먼트(Area Management) 사례

- (개념) 에리어매니지먼트는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주택, 상가시설 및 생활인프라를 정비하는 공간 및 지역관리조직
- (공공지원) 국토교통성은 에리어매니지먼트 추진매뉴얼을 만들어('08년),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단체를 에리어매니지먼트로 지정하고,
  - 무이자 융자, 세제특례 등 국가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조직화 추진
- (대표사례) 아와지 에리어매니지먼트
  - 아와지 에리어매니지먼트는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아와지 지역에서 다세대 정비, 지역방재, 공원기능 재편, 지역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시설 확충, 타운매니지먼트 등 지역공헌사업 추진
  - 특히, 학생기숙사를 운영, 학생들의 지속적인 마을거주 유도



## □ 해외사례와 마을관리 협동조합 비교

	공동체 앵커조직(英)	에리어매니지먼트(日)	마을관리 협동조합
조직형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조직성격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수요자 집합체
법적근거	지역주권법 사회적투자 준비선언	도시재생특별조치법	협동조합 기본법 (기재부)
수요자	주민 전체	주민 전체	조합 가입자 (수익자 부담)
주요업무	공간관리 커뮤니티 활성화	개발사업 및 공간관리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관리 커뮤니티 활성화
공공지원	앵커시설 소유권 부여 초기사업비 지원	무이자 융자 세제 특례	앵커시설 소유권 부여 초기사업비 지원
지속화 방안	수익사업 발굴	수익사업 발굴	수익사업 발굴



### Ⅲ.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사업구성 및 공공지원

#### 1. 기본방향

- ◆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저층주거민 희망 5대 서비스 사업화 지원
  - \* ① 주택관리서비스 ② 집수리서비스 ③ 사회적 주택 ④ 에너지자립 ⑤ 마을상점
- ◆ 마을관리 협동조합 조기 안정화를 위한 수익원 확보 등 운영 지원
  - \* ① 공공시설 위탁관리 ② 수익사업(태양광 사업) ③ 초기 운영비 지원
- ◆ 마을관리 협동조합 지역 N/W 구축과 지속적인 조합원 교육 지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사업은 마을유지·관리,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주민이 희망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 지원 필요
  - 국토부와 지자체는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희망하는 5대 서비스를 선정,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원활하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 저층주거민 희망 5대 서비스

- ① 주택관리 서비스 : 노후 단독·다세대, 연립·빌라 등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긴급 보수, 유지관리 등 제공
- ② 집수리 서비스 : 노후주택의 개량, 집단적 경관정비, 공용부 정비 등
- ③ 사회적 주택 : 마을주민 스스로 지역 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 ④ 에너지자립 : 자가용 태양광 설치를 통한 협동조합원의 에너지 절감
- ⑤ 마을상점 :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물품 판매점, 공중목욕탕 등 공중이용시설 운영

-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조기에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여 자유롭게 주민희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수익원 확보와 운영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신탁, 새마을 금고, 지역 내 他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 협동조합원에 대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종합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2. 『5대 서비스』 사업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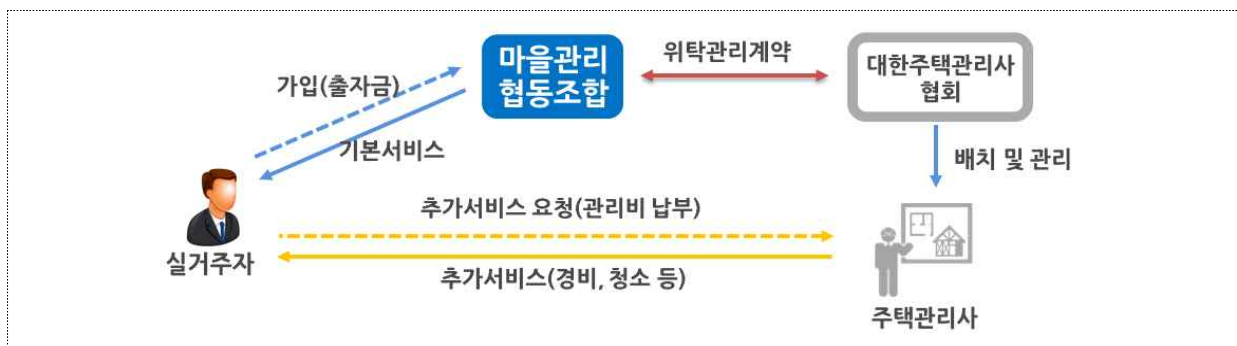
※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만 사업화 지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주택관리서비스, 집수리서비스, 사회적 주택, 에너지자립 사업, 마을상점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1 주택관리 서비스 (주택건설공급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업)

- (현황) 저층주거지에는 20~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이며, 장기적 관리계획과 공용부 관리 등 필요
  - 그러나, 공동주택(150세대 이상)과 같은 주택관리 서비스\* 부재
    - \* 주택잔손보기, 재해응급조치, 주택안전점검, 경비, 청소, 공용부 관리 등
- (사업화 지원)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주택관리사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협회가 주택관리사를 고용 또는 추천하여 사무국에 배치
  - \* 위탁계약 비용은 인건비 상당액(위탁수수료 및 제비용 불포함)으로 추진
  - \*\* 주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관리 근로자도 협회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고용
-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주택잔손보기 등 기초적인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협동조합이 희망하는 경우 상근으로 조합업무도 수행
  - \* (기본업무) 주택잔손보기, 재해응급조치, 개별 주택안전점검, 무단주차 확인 등
- 추가적인 주택관리 업무는 개별 집주인 별로 협동조합 출자금 외에 추가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 \* (추가) 경비, 청소, 공용부 관리, 전기시설물 안전점검·보수 등 (관리비 발생)
- 협회는 고용한 주택관리사에 대한 손해배상공제를 지원하고, 마을 주민을 주택관리사로 양성하여 마을에 배치 추진

【마을관리협동조합 주택관리서비스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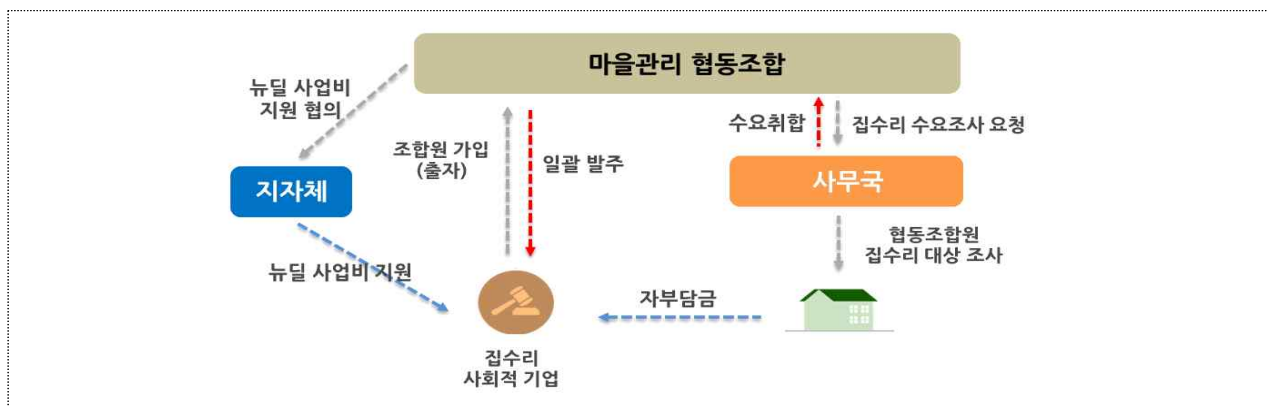




## ② 집수리 서비스 (도심재생과, LH 협업)

- (현황) 저층주거지는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대부분이고, 집주인이 고령층인 경우가 많아 신축보다는 집수리 수요가 높은 실정
  - 다만, 집수리 사업은 집주인들의 비용에 대한 부담\*, 집수리 수요 파악의 어려움, 전문사업자 부재 등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은 상황
    - \* 뉴딜사업비는 집수리(외관정비)에 대해 최대 1천만원까지 집행가능
- (사업화 지원) 국토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연계, 터 새로이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고, 창업비용, 사업공간 마련 비용 등 지원
  - \* 뉴딜 사업지 내 집수리 등 노후건축물에 대한 개선 사업을 위해 지역 청년·주민 고용, 이익 재투자 등을 조건으로 집수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집수리 수요를 파악, 터 새로이 사업자에 집단으로 발주하고, 잉여금이 있으면 수리비 일부 지원\*
  - \* (예) 내부 집수리 비용 = 70%(자부담) + 30%(협동조합 잉여금 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집수리 서비스 개념도】



## ③ 사회적 주택사업 (민간임대정책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협업)

- (현황) 국토부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관리를 맡겨,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사업** 추진 중
  - \*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기관(사회적경제주체)에게 시세 30%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시세 50%에 재임대하는 구조(전대차 구조)
- 뉴딜 사업지에서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임대관리를 맡겨, 뉴딜 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주민에게 **사회적 주택** 공급 추진



- (사업화 지원) 국토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공모없이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으로 수의 선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추진)

\* 既시행중인 사회적 주택사업은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 선정

-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뉴딜사업지 내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의 임대관리 및 주거서비스 공급 위탁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이주대상자 1순위 + 시세 50%로 공급하되, 협동조합원은 시세 40%, 기초수급자는 시세 30%로 공급

#### 【마을관리협동조합 사회적 주택 운영 개념도】



#### ④ 에너지 자립 사업 (산업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협업)

- (현황) 저층 노후주거지에는 주로 저소득 · 고령층 · 임차인이 거주하는 만큼, 자가용 태양광 설치를 통해 에너지자립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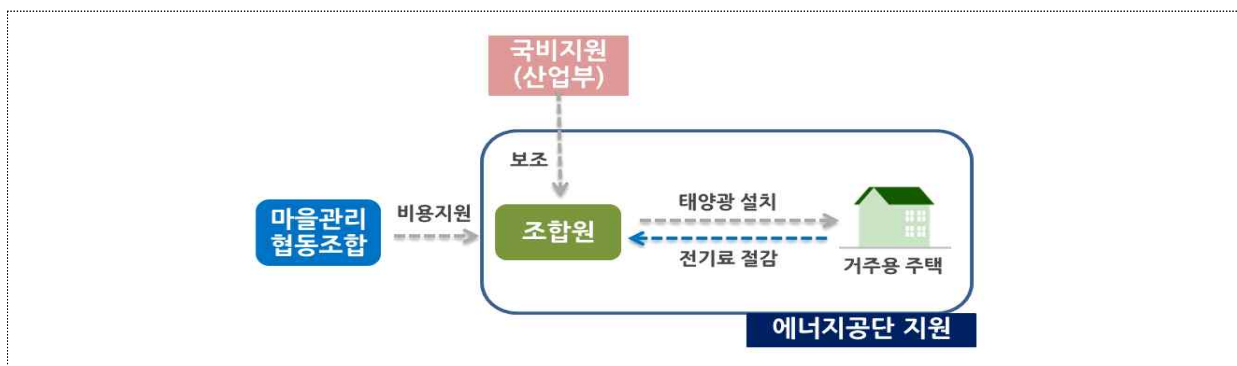
- 자가용 태양광은 거주자 스스로 설치하기에 비용부담\*이 있고, 주택의 여건이 태양광을 설치하기에 적합한지 컨설팅도 필요

\* 자가용 태양광 발전시설은 개인 사유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지원 곤란

- (사업화 지원)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가용 태양광 설치 수요를 조사하여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 건물 유희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 【마을관리협동조합 에너지자립 사업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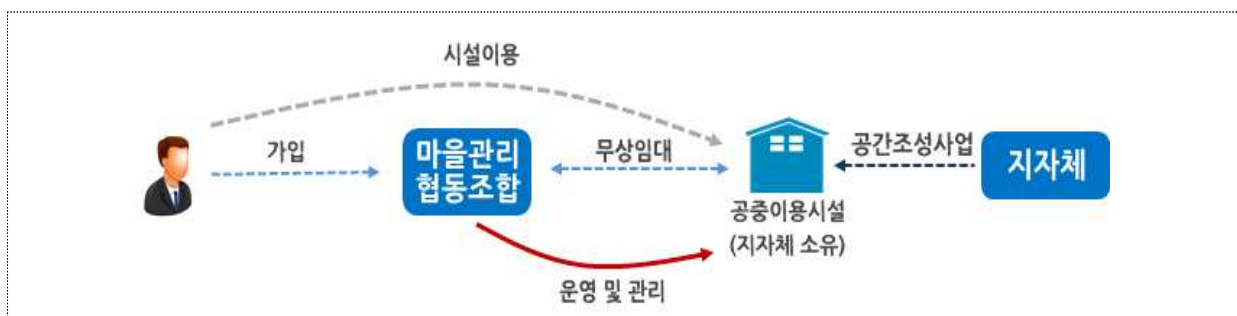


- 산업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연계한 사업신청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19년 공모분 부터 적용)
- 에너지공단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사업선정을 위해 우수한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추천, 컨소시엄 구성 지원 등을 통해 공모과정 지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잉여금 발생시 조합원에게 설치비용 일부지원
  - \* (예시) 설치비용 = 국비(산업부, 50%) + 협동조합 잉여금(30%) + 조합원 자부담(20%)

## 5 마을상점 사업 (지자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업)

- (현황) 노후 주거지는 주차장 등 공공인프라 외에도, 민간영역에서 공급하는 판매시설, 목욕탕 등 공중이용시설도 부족한 상황
  - \* '17년 시범사업 현장인 공주의 경우 공중목욕탕이 없어 주민들 불편 호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공중목욕탕 운영을 포함 (주민주도 운영 계획중)
- (사업화 지원)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판매점, 목욕탕 등 민간영역 사업을 기획하면, 지자체가 공간조성 후 협동조합에게 무상임대
  - \* 도시재생법 제30조의 2에 따라 구관장 등 공동이용시설 무상임대 가능
-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판매점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기존 소비자 생협,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 지원
  - \* SK행복나래, 아름다운가게 등 자체적인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회적 경제활용
-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협동조합원에게는 가격 할인

###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상점 사업 개념도】



※ 이 밖에도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지역여건,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희망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사회적 경제센터와 상담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설계 지원 예정



### 3. 안정적 조합 운영기반 구축 지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공시설물 관리 위탁, 태양광 사업 등 수익원 확보 및 초기사업비 지원

#### 1 지자체 기초생활인프라 관리 위탁 (지자체 협업)

○ (위탁내용) 지자체가 뉴딜 사업지 내 주차장 등 기초 생활인프라 운영·관리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위탁하고 수수료 지급

\* 개방형 공동시설, 체육시설 등 단순 관리·운영만으로도 수익창출이 가능한 시설 대상

○ (위탁방법) 지자체와 마을관리 협동조합 간 시설관리 위탁계약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가능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공유재산법 위임규정) 제10조 별표4

【나 - 1) -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지자체 협업) 국토부는 既선정 뉴딜 사업지 중 지자체가 기초생활인프라 위탁을 계획 중인 곳과 마을관리 협동조합 시범사업 추진

\* '18년 시범사업으로 4개 뉴딜 사업지(인천, 공주, 충주, 안양) 추진 예정

- 추후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기초생활인프라 위탁을 계획하는 사업지에 대해 가점을 부여, 뉴딜사업으로 우선 선정 추진

#### 2 태양광 발전사업 (지자체, 에너지공단 협업)

○ (사업내용) 지자체와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수익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



- (사업방법) 지자체가 공공시설물 옥상 등 태양광 설치장소를 제공하면, 지자체와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공동 출자하여 태양광 설치

\* 지자체는 뉴딜 사업비(국비+지방비)로, 협동조합은 자체 수익으로 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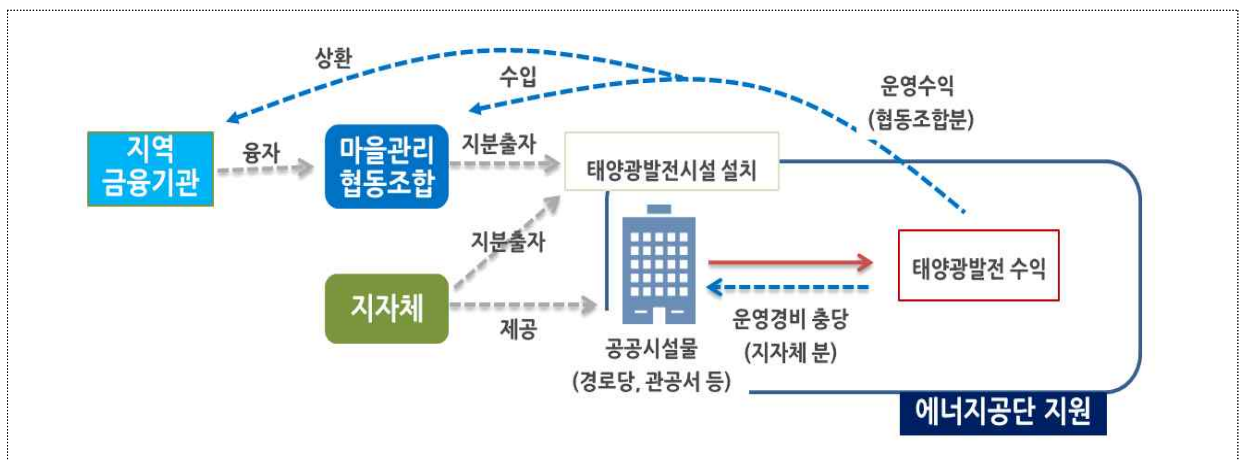
-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등록하고, 한국형 발전 차액지원제도\*에 참여, 6개 발전사에 고정가격으로 생산전량 판매

\*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공기업이 20년간 의무구매하는 제도 (발전소 설비용량 100kW 미만인 경우 가능하며, 발전소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발전소 간 이격거리는 250m를 초과해야 함)

- 신한 등 지역 금융기관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은 점을 감안, 태양광 설치용 저리 융자상품 지원 추진

- 에너지공단은 지자체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총괄 컨설팅하고, 태양광 설치사업자 선정 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사업 개념도】



### ③ 초기사업비 지원 (지자체)

- (현황)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사업초기에 자금력이 부족하므로, 지자체가 뉴딜 사업비로 초기 조합사업비를 지원하여 동력 확보

- (지원내용) 지자체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초기운영비용을 지급하면, 신한, 새마을금고 등 운영지원 전문기관이 수령해 집행관리

\* 시뮬레이션 결과, 보조금 미수령시 초기 3년간 1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후 5년차부터 자생적 운영 시작(☞ 참고3)

\*\* 현재 2년간 5천만원→ 3년간 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 추진



### [참고3]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 시뮬레이션

※ 분석의 전제(실제 사업현장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 ▶ 사업대상 면적은 48,506㎡, 인구 1,678명, 총664세대(소유 66세대, 세입 598세대)
- ▶ 사업기간은 총 5년으로 가정
- ▶ 1차년도 협동조합원수는 50명이며, 협동조합원 수는 매년 50%씩 상승 가정
- ▶ 협동조합원 출자금과 연회비를 변수로 시뮬레이션 진행
- ▶ 지원방안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되,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 연차별로 아이템 추가
- ▶ 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직접 고용함을 가정
- ▶ 사업비용에 대한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① 인건비 ② 운영비(판관비, 이윤, 제경비 등으로 간주)

#### □ 연차별 추진사업 정리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수익사업	태양광발전	-	인프라 관리 (주차장)	-	-
조합사업	주택관리	-	-	사회서비스 공급	-

#### □ 연차별 수익 시뮬레이션 ⇨ 적정 출자금 및 연회비 수준에서 약 9천만원 지원필요

##### ① 출자금 5만원, 연회비 2만원

(단위 : 백만원)

	합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총수익	△84	△42	△34	△9	△16	17
수입	918	94	103	187	250	284
지출	1,002	136	137	196	266	267

##### ② 출자금 10만원, 연회비 1만원

(단위 : 백만원)

	합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총수익	△79	△40	△34	△12	△15	19
수입	923	96	103	187	251	286
지출	1,002	136	137	196	266	267

##### ③ 출자금 20만원, 연회비 0원

(단위 : 백만원)

	합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총수익	△59	△35	△32	△6	△11	25
수입	943	101	105	190	255	292
지출	1,002	136	137	196	266	267



#### 4. 협동조합 교육지원 (일자리 관련)

◆ 주민 교육을 통해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동조합이 수행할 각종 업무에 참여, 지역일자리 적극 창출

##### □ 협동조합 관련 기본교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도 운영하며, 배당금지 등 공익 목적이 강한 조직
- 배당·잉여금 등에 대한 공정한 관리가 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만큼, 마을 주민들의 조합설립·운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을 활용, 마을관리 협동조합 특화교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실시
-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16개 지역에서 기본법제, 운영 등 교육 실시 중

##### □ 지원사업 관련 직업교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자체 협업 등)

- (지자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민 교육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기초생활인프라 관리\*, 사회서비스 공급 등 관련 자격교육\*\* 추진
- \* 에너지관리기능사, 전기기능사 등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필요한 자격
- \*\* 요양보호사 등 각종 서비스공급을 위해 요청되는 자격증 취득교육
- (진흥원) 단기적으로 既실시중인 『협동조합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공모 시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교육 실시
-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별도 직업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추진 (도시재생지원기구에 대한 예산반영 필요)
- (운영지원 전문기관)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참여하는 지역기반 금융기관도 초기사업비를 활용하여 주민 일자리 관련 교육 추진
- 아울러, 기관 자체적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 추진



## 5. 他 사회적 경제와의 N/W 구성지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他사회적 경제와 N/W를 구성하도록 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이 되도록 지원

### □ N/W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업)

-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마을 内外의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공급하도록 지원
  - \* (예) 사회적주택 운영을 위해 임대관리 전문 사회적 경제를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마을의 사회적주택 임대관리 업무를 수행
- N/W 구성을 희망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희망업종을 사회적 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진흥원이 업체 정보제공, 업무협의 주선

###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과의 연계 강화 (도시재생역량과 협업)

- (신규 기업) 신규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가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면, 인증평가 시 가점 부여
- (기존 기업) 지원기구는 예비사회적기업 既인증 업체에게 사업지 인근의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업무연계 지원
  - \* 특히,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고용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 기존 지역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 강화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필요한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관할 사회적 경제센터에 요청, 지역 사회적 경제와 협업체제 구축

#### ※ 법인 조합원(사회적 경제)의 『마을관리 협동조합』 가입 (상세☞참고4)

- (가입조건) 사회적 경제 등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개인 조합원에 비해 높은 출자금 납부 (정관으로 출자금 규모 결정)
- (가입효과)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희망 수요를 취합하면, 관련 법인 조합원이 수요를 희망한 조합원들에게 관련 재화 및 서비스 판매
  - \* 조합원은 非조합원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다만, 지자체 등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법인 조합원이 수행하려면, 협동조합과 법인 조합원이 공동수탁자가 되어 계약체결



#### [참고4]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간 협업 모델

□ (개요)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를 법인 조합원으로 참여시켜, 조합원에게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 **사회적 경제**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통해 해당 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수요** 확보
- 아울러,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지자체 등의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인 조합원과 공동수행하여, **부족한 전문성 보완**도 가능

#### □ (협업모델1) 공동구매 방식

\* (예) 조합원들이 집수리를 희망하는 경우, 집수리를 영업으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를 법인 조합원으로 선정하여 마을에서 집수리 사업 실시

- ① (**희망수요 조사**)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조사**하여, **사회적 경제 선정 분야** 결정
- ② (**사회적 경제 선정**)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희망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를 **공모 등의 방법**으로 선정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선정도 가능)

\* 선정된 사회적 경제는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정관상 규정된 출자금 납입

- ③ (**실수요조사 및 공급**)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제 구매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

\* 비조합원에 대한 수요도 조사하되, 가격차등화 등 조합원 우대

#### □ (협업모델2) 위탁사업 수행 방식

- 지자체, LH 등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 경제**(법인 조합원)이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 다만,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고,
  - 협동조합과 법인 조합원 사이의 위탁도 서로 다른 법인격간의 업무 위탁으로 간주(법제처) 하므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업무 수행 (이때, 위탁사업비 관리, 수익의 배분 등은 정관으로 결정)





## IV.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및 관리계획

### □ (육성목표) '22년까지 마을관리 협동조합 100곳 설립·운영 추진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既 반영

####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계획(안)】

	합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설립(개)	100	2	8	25	30	35
일자리(명)	500	10	40	125	150	175

※ 마을관리 협동조합 1개소 당 총 5명의 고용창출 예상

#### ○ (시범사업) '17년 선정한 33개 주거재생사업지 中 주민협의체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4~5개 사업지에서 시범사업 실시 ('18.下)

\* 총 4개 현장(인천 만부, 공주시, 충주시, 안양시)에서 시범사업 협의중

- '18년 중 최소 2개 사업지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 즉시 가능사업 착수 등 가시적 성과 도출

#### ○ (본사업) '19년부터 지원기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를 통해 본사업 착수

\* 시범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본사업 착수시기 결정

- 지원기구를 통해 운영지원 전문기관 선정, 국토부 지원 등 협의

※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실시할 공공위탁 사업, 협동조합 자체사업 등을 통해 5년간 지역기반 일자리 총 500개 창출

### □ (사업관리 방안) 사업단계별로 도시재생 지원기구 및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계획 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

#### ① (사업준비 단계) 지원기구가 지자체 및 주민들에게 사업의 내용, 추진절차, 유관기관 별 지원 사항 안내 (별도 사업가이드라인 마련)

- 특히, 지자체는 기초생활인프라 위탁, 태양광발전 지원, 조합원 업종교육 지원 등 중요 협조사항에 대한 연차별 이행계획 마련

\* 뉴딜 사업비 집행이 필요한 항목은 활성화 계획 예산소요에 미리 반영 필요



- ② (협동조합 설립단계) 지원기구의 안내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 모임을 만들고,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 관할 지자체가 既제출한 연차별 지원계획과 연계하여 협동조합의 공공위탁 업무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자체 조합사업 계획도 마련
- ③ (운영지원 전문기관 선정단계) 지원기구는 협동조합이 운영지원 전문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공모절차 안내·지원
- 특히, 신협, 새마을금고 등 표준정관 상 운영지원 전문기관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역별 공모사실을 통보하여 참여 독려
- ④ (사업착수 이후 단계) 지원기구는 운영지원 전문기관 선정을 마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성장단계별로 구분, 지원 및 관리 실시

## IV. 향후계획

-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추진 보도자료 : 7.27일 조간 (예정)
- 국토부 - 유관기관 간 시범사업 MOU 체결 : 8월 중 (예정)
  - \* 『마을관리 협동조합』 협업기관 워크샵과 병행 예정
  - \*\* (MOU 대상) LH, 새마을금고, 신협,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에너지공단 등
- 『마을관리 협동조합』 업무체계 구축
  - 도시재생 지원기구 지정 : 8월 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정)
  - 표준정관 마련 : 8월 중
  - 마을관리 협동조합 지원기준(국토부 고시) 마련 : 9월 중
  - 시범사업 운영지원 전문기관 선정 및 조합원 모집 : 9월 중
- 『마을관리 협동조합』 시범사업 착수 및 보도자료 : 9월 중







---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안)

---

2018. 7.

교 육 부  
(평생미래교육국)







---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안)

---

2018. 7.

교 육 부  
(평생미래교육국)



# 차 례

I . 추진배경 .....	213
II . 지원계획 수립 경과 .....	214
III . 학교 내 협동조합 운영 현황 .....	214
IV . 비전 및 기본방향 .....	218
V .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방향(안) .....	219
VI . 학교 내 협동조합 세부 지원계획(안) .....	220
1. 지원 개요 .....	220
2.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대상 .....	220
3.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주요사항 .....	221
4.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추진체계 .....	225
5. 제도개선 및 행정사항 .....	226
VII . 향후 추진일정 .....	227
<붙임 1> 교육부 인가 학교협동조합 현황 .....	228
<붙임 2> 시·도별 학교협동조합 지원 현황 .....	230
<붙임 3> 대학생협동조합 현황 .....	231
<붙임 4> 국립대학 생활협동조합 현황 .....	232
<붙임 5> 국립대학 생활협동조합 이익환원 현황 .....	233
<붙임 6> 협동조합기본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국세기본법 비교 .....	234
<붙임 7> 관련 법령 .....	236



## I. 추진배경

-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증가
  - \* (정의)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 기재부 주관)
-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저성장·저고용으로의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
  - \* EU 전체 GDP의 10%를 사회적경제가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고용 비율도 평균 6.5%(EU 6.5%, 프랑스 9.0%, 벨기에 10.3% 등, '15)를 기록
- 우리나라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 중이나, 인재양성을 위한 여건은 열악한 상황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07, 고용부 소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개원('10)
  -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국정과제-26, 기재부)
- 특히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사회적경제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
  - ※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제정안(윤호중의원 등 27인 발의, '16.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제정안(박광온의원 등 21인 발의, '17.10) 국회 계류 중
- 학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경제 학습·체험공간으로 '학교 내 협동조합'의 중요성 상승
  -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사회적경제 체험 가능
  - 또한, 학교협동조합에 참여한 학생이 대학 진학 후에도 대학생협 협동조합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역량 함양 가능

☞ 지역 내 사회적경제 체험·확산의 거점으로 학교 내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 내 교육부 소관 학교협동조합 지원 계획 포함



## Ⅱ. 지원계획 수립 경과

- ☐ ('17. 10.)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기재부 주관) 발표
- ☐ ('17. 11.) BH 비서관 주재 관계자 협의회
  - ※ 참석자 : 사회적경제비서관 주재, 학교협동조합연합회, 대학생협동조합연합회 등
- ☐ ('17. 12. ~ '18. 4.)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방안” 정책연구
  - ※ (연구책임자)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장종익
- ☐ ('18. 5.) 학교 내 협동조합 관계자 의견수렴
  - ※ 참석자 : 전국 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 한국대학생협연합회 사무국장 및 이사장, 교육청 업무 담당자(서울, 대구, 경기, 강원) 등
- ☐ ('18. 6.) 평생미래교육국장 주재 부내 토론회
- ☐ ('18. 7.)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고용부 주관) 발표
  - ※ 종합계획 내에 대학생협동조합 및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과제 포함

## Ⅲ. 학교 내 협동조합 운영 현황

※ ‘학교 내 협동조합’에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임

- ☐ 학교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 현황
  - (설립근거) 「협동조합 기본법」(기재부 소관)
    - “학교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하나로서 설립인가 등의 사무는 기재부에서 교육부로 위탁
      -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에 따라 기재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 다만,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정의, 설립기준, 구성원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없음(사회적협동조합 설립기준 등 준용)
  - (설립현황) 전국 총 60개의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중('18.4.)

< (참고) 시·도별 학교협동조합 설립 현황 >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21	2	1	0	1	1	0	18	7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제주	세종	계
1	2	0	1	4	1	0	0	60



- (지원현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인가 등 지원(교육부), 설립 및 운영 관련 컨설팅 등 지원(시·도교육청)

- (교육부) 설립인가, 정관변경, 해산, 지도·감독 및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의사록 공증면제\* 시행 중('16~)

\* 「공증인법」에 따라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학교협동조합은 미성년 학생이 조합원인 경우가 많아 우리부는 학생이 50% 이상인 학교협동조합에 한해 의사록 공증면제를 법무부에 추천('18년 현재 60개 중 35개 면제, 58%)

- (시·도교육청) '18년 기준 11개 교육청에서 1,483백만원 예산지원, 8개 교육청에서 조례 제정\* 운영

\* 조례 제정 시도(8개) :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전북, 전남, 경남

#### < (참고) 주요 시·도별 학교협동조합 지원 현황 >

- (서울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 마련,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추진하고,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중
- (경기도)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 마련, 학교협동조합을 포함한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추진 중

- (운영유형) 70% 이상이 학교매점 운영, 이외에도 방과후학교, 특성화고 창업연계,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와 지역이 연계한 운영 모델도 존재

#### < (참고) 학교협동조합 사업모델(예시) >

- [학교매점 사업모델] 기존 개인사업자 운영에서 발생한 불량제품 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됨.
- [방과후학교 사업모델] 학교협동조합이 방과후학교 위탁 관리 또는 프로그램 자체 운영하는 사업모델. '16부터 서울 초교(5개) 시범운영 중, 강원 금병초 마을교육 형태로 진행중
- [특성화고 창업모델] 비즈쿨 등 특성화고 창업교육과 연계해 협동조합 방식으로 학교내에서 창업하는 모델. 서울성수공고, 광신정보산업고, 강원춘천한샘고 등 특성화고가 대표적
- [특수학교 전환교육] 발달장애인 등의 사회적응 및 취업훈련을 위한 전환교육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델. 서울 밀알학교 등
- [농산어촌 지역연계] 농산어촌의 협조(재배, 생산 및 가공활동 등)를 통해 친환경 생태실습 등을 추진하는 방식. 강원도 연당초 등이 농업 및 교육사업 진행 중



## □ 대학생생활협동조합 운영 현황

- (설립근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대학생생활협동조합의 관리·감독 및 지원 근거 등은 공정위 소관이며 **우리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후** 구체적 방안 모색 필요
  - ※ 대학생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정위 소관이며, 기재부로 소관부처 변경 진행 중(이후 기재부→교육부 위임 예정)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부처 변경을 포함한 일부개정안(이학영의원 등 19인 발의, '16.11) 국회 계류 중
- (설립현황) '17년 기준 총 33개 대학(국립대 18개교, 사립대 15개교) 내에 설립·운영 중이며,
  - 국립대의 경우, 조합원 수는 교당 평균 2,439명, 연간 시설사용료는 교당 평균 37백만원 납부('16, '17년 결산자료)

### <국립대학 생활협동조합 주요 현황(상세자료 불임참고)>

주요 항목	계	평균	최소	최대
조합원수(명)	41,468	2,439	363 (해양대)	16,922 (강릉원주대)
출자금(백만원)	2,541	149	37 (창원대)	700 (강원대)
총매출액(백만원)	74,771	4,398	827 (군산대)	9,192 (전북대)
시설사용료(백만원)	631	37	5 (군산대)	90 (서울과기대)
발전기금 장학금(백만원)	677	52	10 (강릉원주대 방통대)	193 (강원대)

(출처 :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16, '17년 결산자료)

- (운영현황) 식당·매점·서점 등 대학 내 복지시설 운영 및 대학 생협 간 공동구매·공동생산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
  - ※ '17년 기준 학교당 평균 10개 매장 운영, 학교당 연평균 매출액은 43억에 달함



## ※ 해외사례

-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가가 주도적으로 학교협동조합을 장려하고, MCSC\*, 앙카사\*\*(ANGKASA)를 중심으로 지원체계 구축

\* MCSC : 말레이시아 협동조합진흥원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진흥원과 유사한 중간조직 역할 수행

\*\* 앙카사 : 협동조합 연합조직으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수행

- 영국의 경우 학교제도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고 지원체계를 갖춘 사례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국·공립학교에서 운영하는 커리큘럼 내에 협동조합대학에서 개발한 초·중·고 대상 협동조합 교육커리큘럼이 포함

※ 협동조합대학(Co-operative College) : 1차대전 이후 영국협동조합전국연합회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전문 기관, 학교협동조합 관련 교육자료 개발 등 추진

☞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 IV. 비전 및 기본방향

### 비 전

**“교육과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 기 본 방 향

학교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확보

대학으로 이어지는  
사회적경제 체험의 장 마련

사·도교육청과 연계한 현장중심 지원

### 추 진 전 략

① 사·도교육청 및  
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학생  
교육활동 지원

③ 대학생협동조합 활성화  
환경 조성

②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및 매뉴얼 보급

④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현장 소통 강화



## V.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방향(안)

### □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현장중심 지원

-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 및 관리·감독을 중앙부처가 직접 수행하고 교육청은 보조적 역할 수행
- 그러나,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여 밀접한 관리·지원이 가능한 교육청의 역할 확대가 필요

☞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인가, 관리 및 감독에 대한 권한을 지역 교육청으로 위임하여 현장적합성 있는 지원 추진

### □ 학교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확보

- 일반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학교협동조합의 구성원 대다수(학생, 학부모)는 3년 이상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
  - ※ 학생 및 학부모 조합원은 졸업, 교사 조합원은 전보 등으로 조합원 수증가가 어렵고 임원진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움(관계자 협의회, '18.5.23)
- 또한, 70% 이상의 학교협동조합은 매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운영모델 개발을 통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사업 운영 지원 필요

☞ 국가적인 수준에서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학교협동조합 구성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사업모델 발굴 추진

### □ 대학으로 이어지는 사회적경제 체험의 장 마련

-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체험한 학생이 대학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대학 내 편의시설 등을 학내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대학생활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추진

☞ 대학생활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령의 소관부서 이관에 대비한 대학생활협동조합 관리방안 마련 추진



## VI. 학교 내 협동조합 세부 지원계획(안)

### 1. 지원 개요

#### □ 사업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 초·중·고 학교협동조합* 및 대학생협동조합	* 조합원 중, 학생·학부모가 50%이상 조합에 한함
지원내용	■ 학교협동조합 :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교육청별 지원센터 구축 지원,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 대학생협동조합 : 대학생협 활성화 지원 ※ 국립대 내 생협 대상 시설사용료 면제** 추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 설치(예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가능
사업예산 (1안)특별교부금 (2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	■ (1안) 특교 지원시 : 총 1,340백만원 - 중앙지원센터 운영 : 1개*300백만원 - 교육청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시도별 사업계획에 따른 상향식 맞춤형 지원 : 1,040백만원* * 시·도별로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의 편차가 커서 시·도 계획에 맞춰 총액으로 지원하고 세부사항은 시도에 위임하여 자율성 제고(대응투자 검토)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혁신교육 확산 지원) -교육청 위임에 따른 자율성 인정(단, 우리부 지원대상은 학생·학부모 50%이상 조합에 한함) -특별교부금 사업 운영 개선방안 : 하향식 지양('18.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기간	■ '19~'22년(4년) - 중앙지원센터 운영 : '19~'22년 - 시도지원센터 구축 : 매년 교육청 계획에 맞춰 지원	

※ (2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교육청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준재정수요 항목 축소 및 폐지 추진 중('18 업무보고)으로 신규 항목 추가 불가('18.6.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2.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대상

#### □ 학교협동조합의 정의 및 구성요소

- (정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회적협동조합



### < (참고) 국내·외 학교협동조합 정의 사례 >

- (서울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구성요소) 학교협동조합은 구성원, 사업목적, 형태 및 사업기반 등에서 기존 사회적협동조합 조직과 다른 특성을 가짐
  - (구성원) 학교 구성원 등(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 ※ 50% 이상의 구성원이 학생 또는 학부모로 구성
  - (사업목적) 학교·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 수행 또는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형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업기반)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사회(법인 사무소는 학교 내 소재)

#### □ 대학생협동조합의 정의

- (정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내 구성원(대학생 등)이 출자·운영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법인)
  - ※ 대학 생협은 대학 구성원의 공동체의식 함양, 직거래 경험 등을 통한 연대 사업, 이익금 환원 등 유·무형의 가치 창출

## 3.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주요사항

#### □ 시·도교육청 및 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학생 교육활동 지원

- (권한 위임)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관리 및 감독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관리·감독의 현장적합성 확보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내 위임근거 마련('18.하)
  - ※ (시·도교육감 협의회) 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 권한을 시·도교육감으로 위임 건의('18.1)



- (지원센터 신설) 인가 및 관리·감독, 지원방안 수립·실행 등을 추진할 시도지원센터\*를 교육청 내에 신설하도록 권장하고 특별교부금 지원 추진
  - \* (역할) 중앙지원센터에서 기 개발된 교육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설립·운영 컨설팅 진행

-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 등에서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 사례가 포함된 사회적경제 관련 교수자료 개발·보급\*

\* 스토리텔링, 사례 중심의 초·중·고 교수자료 개발·보급('18.하)

- 사회적경제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학습 및 학교협동조합, 공정 무역 등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19년 6개교)

- (체험학습 확대) 학생 대상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관 지속 발굴

※ 학교협동조합 등에서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핸드북 제작·배포 예정('18.하)

#### < (참고) 서울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사례 >

- 매점 먹거리 선택에서부터 홍보까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해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의 이해, 게임을 통해 배우는 협동조합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

- (혁신학교 연계 운영)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학교협동조합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마을과 학교가 결합된 마을교육공동체 내실화

※ 마을교육프로그램이 학교협동조합과 결합·운영된 서울 금천구의 혁신교육지구 사례 안내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생 주도의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 참여 및 협업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성 함양 도모

※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집 및 교육청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활용 안내

- (방과후학교 연계 지원)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협의회를 통해 학교협동조합 연계 방과후학교 도입을 원하는 교육청 대상 컨설팅 연계 지원

-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회적경제 박람회\*(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 미래교육박람회 등 관련 행사를 통해 학교협동조합 우수사례 발굴·확산

\* 2018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18.7.13~15, 대구 EXCO 2, 3홀) 등

- ☞ (예산)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획일적 예산 지원을 지양하고 시·도별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상향식 맞춤형 지원 추진 : 1,040백만원\*



※ 시·도별로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의 편차가 커서 시·도 계획에 맞춰 총액으로 지원하고 세부사항은 시·도에 위임하여 자율성 제고

\* <산출근거> 시·도지원센터(17개\*20백만원)+협동조합 신규설립(40교\*10백만원)+운영지원(기존60교\*5백만원) ⇒ 시·도 요구에 맞춰 교부금 차등 지원(예정)

## □ ‘(가칭)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및 매뉴얼 보급

- 학교협동조합 운영 주요주체(학생, 학부모, 교사 등)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기존의 매점사업 외 학교협동조합이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교협동조합 개설 및 운영 지원
- 시·도 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연수를 추진하고, 학교협동조합 운영매뉴얼을 개발·보급

☞ (예산) 중앙지원센터 운영(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 설치 예정) : 300백만원\*1개 기관  
\* <산출근거>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120백만원)+매뉴얼 개발·보급(80백만원)+연수·운영지원 등(100백만원) ⇒ 세부 항목은 협의 후 구체화(예정)

## □ 대학생활협동조합 활성화 환경 조성

- 국립대 내 생활협동조합(38개 국립대 중 18개교 생협 운영) 대상 대학시설 사용료\* 면제를 통한 대학생협 운영 지원 및 활성화 환경 조성

\* (현황) '17년 결산기준 총 631백만원을 시설사용료로 납부, 교당 평균 시설사용료 37백만원(최소 5백만원 군산대, 최대 90백만원 서울과기대)

※ 국립대 내 생협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할 예정. 다만, 생협은 수익금의 일정액을 장학금으로 환원하거나 학내구성원 복지증진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등 연합회와 협의 필요('19, 운영지원과)

### < (참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주요 법령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등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 시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소비자의 후생목리 증진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조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①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내용과 조건은 그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5. 법 제34조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기 운영 중인 대학 내 소비조합\*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판로 확대\*\*

\* 소비조합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국립대 38개교 중, 4개교에서 소비조합 운영 중(공주대, 교원대, 교통대, 서울교대)

※ 대학 내 소비조합의 국유재산 사용과 관련한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립대 내 소비조합의 생활협동조합 전환 안내('05.12, 교육부 운영지원과)

< 소비조합 운영 대학의 생협 미전환 관련 대학 담당자 의견('18.6.26)>			
	생협	소비조합	위탁운영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 교직원 등의 자발적 참여 및 민주적 의사결정 등 사회적 경제 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금이 대학회계로 들어와서 직영처럼 운영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재산사용허가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 직원 등 관리에 대한 부담 감소</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 모집, 구성원 동의, 출자금 마련, 시설이용료, 발전기금, 장학금 등 번거로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이 적거나 적자일 경우 대학에서 보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업체가 수익 확보를 위해 판매가 인상 등 우려</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협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별로 없음(예; 생협 전환에 따른 식재료 공동구매 시, 절감액이 현재보다 크지 않음)</li> <li>■ 오히려, 위탁을 통한 안정적 임대수익 등에 대한 유인가가 더 큼</li> </ul>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고용], 사회적협동조합[기재], 마을기업[행재], 자활기업[복지]) 대상 판로확대 기 추진입찰시 기점부여, 수익계약 허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 기재부

## □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현장 소통 강화

- 교육부, 시·도교육청, 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반영

※ 학교 내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관련 의제 발굴 및 협의, 현장 소통 및 홍보 지원 등 교육부-시도교육청-민간 간 협력 체제 강화

### < (참고) 학교협동조합 민관 협의체 구성 관련 서울교육청 조례 >

- 제6조(민관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교협동조합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추진체계

### □ 사업 추진체계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등 사업관리·운영 총괄
- (중앙지원센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협동조합 지원 관리·운영 수행

#### < (참고) 국평원 내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설치 근거 검토 >

-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평생교육’에는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평생교육원(「평생교육법」 제19조) 내에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중앙지원센터를 두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국평원 내 검정고시지원센터의 경우, 보조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18. 교육기획보장과)

- 학교협동조합 지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의체의 실질적 운영 추진
- 학교협동조합 운영·관리모델 개발, 운영 매뉴얼 제작, 학교협동조합 구성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도 담당자 연수 등을 수행
- (시·도교육청) 시·도 교육청 내에 별도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현장 관리 및 설립·운영 지원 추진
  - 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관리·감독을 수행할 “(가칭)학교협동조합 시도지원센터” 등 전담조직 설치·운영



-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보급 및 운영 컨설팅, 재정지원 등 현장 중심의 직접 지원 추진
- (민·관 협의체) 교육부, 시·도 교육청 관계자, 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 및 현장 관계자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자문 수행

## 5. 제도개선 및 행정사항

### □ (학교협동조합) 관리주체 변경을 통한 현장성 강화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학교협동조합의 관리주체를 교육부 → 시·도교육청으로 위임

— < (참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

제22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20. 생략

(신설) 21.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 교육부는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학교협동조합 대상 교육 지원 및 사업모델 개발 등 지원 역할 수행

### □ (대학생활협동조합) 권한 이전에 대비한 관리방안 마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교육부 내 관리 체계 구축 필요 → 담당부서 지정 및 사전 관리 추진

※ 대학생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정위 소관이며, 기재부로 소관부처 변경 진행 중(이후 기재부→교육부 위임 예정)

- 소비조합과 대학생생활협동조합이 혼재되어 관리·감독 상의 어려움 발생 → 소비조합이 대학생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안내·유도



## VII. 향후 추진일정

-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계획(초안)” BH 협의('18.7.)
-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계획(최종안)” 확정('18.7.)
- 2019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관련 시·도교육청 수요 조사('18.8~)
  - ※ 수요 조사를 근거로 특별교부금 교부금액 확정 및 시도 통지(~'18.9)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18.10~)
  - ※ 법령 소관 부처인 행자부의 법령개정 수요조사('18.10~)와 연계하여 개정 추진
    - (내용)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관리·감독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 2019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시·도교육청 배부 및 사업 추진('19.1~)
- 학교 내 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지정 추진('19.1~)
- 시·도교육청 대상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등을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실시('19.3.~)



□ 학교협동조합 현황('18.4.30)

번호	협동조합명	수리(인가)일	지역	학교급	유형	학교명	의사록 공증면제 여부
1	금병초등학교비단병풍 사회적협동조합	2016.06.01	강원	초	매점&교육	금병초등학교	0
2	춘천한샘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6.06.02	강원	고	매점&교육	한샘고등학교	0
3	연당초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7.04.12	강원	초	농업&교육	연당초등학교	0
4	용기중기 사회적협동조합	2017.06.09	강원	고	매점&교육	현천고등학교	
5	소양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8-01-10	강원	고	복지, 교육	소양고등학교	
6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8-01-18	강원	고	교육(경제)	황지정보산업 고등학교	
7	자갈자갈 팔렬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8-04-25	강원	고	매점&교육	팔렬고등학교	
8	북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13.09.03	경기	고	매점&교육	북정고등학교	0
9	덕이고 교육복지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14.01.08	경기	고	매점&교육(동아 리)	덕이고등학교	0
10	사회적협동조합 의정부여자중학교 모교지	2014.08.07	경기	중	매점&교육(생태)	의정부여자중학교	0
11	한문영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14.12.19	경기	고	매점(로컬푸드)	한국문화영상고등 학교	
12	한국도예고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14.12.19	경기	고	매점&교육	한국도예고등학교	0
13	흥덕고 사회적협동조합 흥덕쿵	2015.02.25	경기	고	매점&교육	흥덕고등학교	0
14	기흥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15.03.24	경기	고	매점&교육	기흥고등학교	0
15	신길고 마을교육공동체 개방형 사회적협동조합	2015.12.02	경기	고	매점&교육	신길고등학교	0
16	큰꿈교육사회적협동조합	2016.02.15	경기	초	교육(방과후)	조현초등학교	
17	마을교육경제공동체 별내고 사회적협동조합	2016.04.22	경기	고	매점&교육	별내고등학교	0
18	현암고마을교육공동체 개방형 사회적협동조합	2016.06.27	경기	고	매점&교육	현암고등학교	0
19	사회적협동조합 술이홀통일출판사	2016.09.26	경기	고	교육(진로)	문산수익고등학교	0
20	양평고등학교 창업체험센터 사회적협동조합	2016.12.26	경기	고	방과후 마을학교, 사회복지시설및 청소년육성·보호 위탁사업	양평고등학교	
21	운양고 마을교육공동체 개방형 사회적협동조합	2017.01.05	경기	고	매점&교육	운양고등학교	0
22	참여와 나눔의 교육공동체 청옥초 사회적협동조합 푸른빛 나누리	2017.02.07	경기	초	매점&교육	청옥초등학교	
23	천천고등학교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17.05.01	경기	고	매점&교육	천천고등학교	0
24	마석고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17.08.08	경기	고	매점&교육	마석고등학교	
25	광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18-03-16	경기	고	매점&교육	광덕고등학교	
26	가온길 사천여고 사회적협동조합	2016.10.06	경남	고	매점&교육	사천여자고등학교	0



27	범어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6.11.24	경남	고	매점&교육	범어고등학교	0
28	보광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6.11.28	경남	고	매점&교육	보광고등학교	0
29	태봉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7.03.29	경남	고	매점&교육	태봉고등학교	0
30	문경여자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5.08.10	경북	고	매점&교육	문경여자고등학교	0
31	광주제일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7.08.31	광주	고	매점&교육	광주제일고등학교	0
32	대송 사회적협동조합	2017.03.29	대구	고	교육(진로)	대구방송통신고등학교	
33	만덕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6.10.27	부산	고	매점&교육	만덕고등학교	0
34	영림중 사회적협동조합	2013.09.03	서울	중	매점&교육	영림중학교	0
35	독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2014.08.19	서울	고	매점,교육	독산고등학교	0
36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5.02.25	서울	고	매점&교육	삼각산고등학교	0
37	삼성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5.08.25	서울	고	매점&교육	삼성고등학교	0
38	선사고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15.10.20	서울	고	매점&교육	선사고등학교	0
39	국사봉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6.02.02	서울	중	매점&교육	국사봉중학교	0
40	가재울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6.02.15	서울	고	매점&교육	가재울고등학교	0
41	월천교육문화 사회적협동조합	2016.03.11	서울	초	교육(방과후)	월천초등학교	
42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6.06.27	서울	초	교육(방과후)	양화초등학교	
43	계성샛별 사회적협동조합	2016.07.28	서울	고	매점&교육	계성고등학교	0
44	길음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6.08.26	서울	중	매점&교육	길음중학교	0
45	신천사회적협동조합	2016.09.07	서울	초	교육(방과후)	신천초등학교	
46	한울타리 사회적협동조합	2016.09.20	서울	중	매점&교육	한울중학교	0
47	금북 사회적협동조합	2016.10.24	서울	초	교육(방과후,진로, 평생교육)	금북초등학교	
48	성수공업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7.03.28	서울	고	교육(진로)	성수공업고등학교	
49	광신정산고 사회적협동조합	2017.08.23	서울	고	매점&교육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0
50	함께배움 사회적협동조합	2017.10.26	서울	초	방과후	천왕초등학교	
51	밀알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7-11-27	서울	초·중고 통합	교육, 복리증진	밀알학교	
52	서울남산초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8-01-10	서울	초	복지, 교육	서울남산초등학교	
53	성심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8-01-24	서울	중,고	매점&교육	성심여자중,고등학교	
54	성일 사회적협동조합	2018-03-30	서울	초	복지, 교육	서울성일초등학교	
55	강화여자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7.09.06	인천	고	매점&교육	강화여자고등학교	0
56	선학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7-12-04	인천	중	건강, 교육	선학중학교	
57	광양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7-12-19	전남	중	건강, 교육	광양중학교	
58	전라중학교 생그레 사회적협동조합	2017.07.03	전북	중	매점&교육	전라중학교	
59	양현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YHAM(암)	2018-01-10	전북	고	복지, 건강	양현고등학교	
60	충북고등학교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16.12.08	충북	고	매점&교육	충북고등학교	0



## 붙임2

## 시·도별 학교협동조합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18년기준)

연번	교육청	과(팀)	담당자 (연락처)	조례 유무 (제정일)	예산 현황	기본계획 유무	지원내용
1	서울	참여협력 담당관	강석찬 주무관 (02-399-9379)	○ ( '15.10.8)	121	○	운영비, 컨설팅, 시설개선비
2	부산	교육정책과	박혜영 주무관 (051-860-0472)	×	×	×	×
3	대구	중등교육과	최진아 장학사 (053-231-0373)	×	130	○	운영비
4	인천	정책기획 조정관	황미애 주무관 (032-420-8207)	○ ( '17.7.17.)	23	○	초기 시설비, 운영비, 연수경비
5	광주	교육자치과	안정섭 주무관 (062-380-4639)	○ ( '17.8.1.)	5.6	○	홍보, 교육 등 관련 운영비
6	대전	교육정책과	이양숙 주무관 (042-616-8232)	×	×	×	×
7	울산	평생교육 체육과	오선희 주무관 (052-210-5573)	×	×	×	×
8	세종	학교혁신과	김은하 주무관 (044-320-2021)	○ ( '18.4.10)	×	×	동아리 운영, 컨설팅
9	경기	마을교육 공동체기획단	김경래 장학사 (031-820-0922)	○ ( '15.11.4)	700	○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10	강원	정책기획관	지창환 주무관 (033-258-5349)	×	139	○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11	충북	체육보건 안전과	배상호 장학사 (043-290-2265)	×	70	○	설립지원 서비스, 연수 및 컨설팅 지원 시설비, 운영비 등
12	충남	학교정책과	김태곤 교사 (041-640-7116)	×	80	○	시설비, 운영비, 연수비, 체험비 등
13	전북	정책공보 담당관	장학사 임수영 (063-239-3143)	○ ( '17.8.11.)	180	○	설립 초기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등
14	전남	교육진흥과	김경렬 장학사 (061-260-0819)	○ ( '17.12.28.)	10	○	시설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
15	경북	과학직업과	김태환 주무관 (054-805-3424)	×	×	×	×
16	경남	교육복지과	김해숙 주무관 (055-210-5172)	○	25	○	운영비 등
17	제주	미래인재 교육과	박은희 주무관 (064-710-0392)	×	×	×	×



□ 전국 대학생활협동조합 현황(국립대 18교, 국립대법인 2교, 사립대15교)

연번	협동조합명	학교유형	설립년도
1	강릉원주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15
2	강원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01
3	경북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01
4	경상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04
5	경희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2003
6	국민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2003
7	군산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11
8	금오공과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07
9	농협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2016
10	동국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2004
11	동아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2014
12	목원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2012
13	부경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11
14	부산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06
15	상지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2005
16	서울과학기술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13
17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법인	2000
18	성결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2016
19	송실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1999
20	안동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12
21	연세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1994
22	이화여자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1998
23	인천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법인	2005
24	인하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2000
25	전남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07
26	전북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12
27	제주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11
28	조선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1990
29	창원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06
30	충남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12
31	충북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12
32	한국기술교육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2008
3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12
34	한국외국어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1994
35	한국해양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11

< 자료출처 :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2018년 >



연번	대 학 명	조 합 원 수(명)	출 자 금(원)	매 장 수(개)
1	강릉원주대	626	71,810,000	10(매점4, 식당3, 카페3)
2	강원대	16,922	700,841,650	12(매점5, 식당4, 카페3)
3	경북대	1,500	64,050,000	21(매점6, 식당10, 카페5)
4	경상대	636	114,230,000	16(매점7, 식당7, 카페2)
5	군산대	364	195,300,000	5(매점2, 카페3)
6	금오공과대	656	43,730,000	6(매점2, 식당3, 카페1)
7	부경대	710	73,430,000	14(매점4, 식당6, 카페4)
8	방송통신대	1,089	98,033,854	2(매점1, 카페1)
9	서울과기대	809	73,180,000	8(매점2, 식당2, 카페4)
10	안동대	388	43,010,000	7(매점2, 식당3, 카페2)
11	전남대	13,932	238,155,000	10(매점5, 카페5)
12	전북대	487	465,150,000	18(매점7, 식당5, 카페6)
13	제주대	1,034	80,270,000	9(매점5, 식당3, 카페1)
14	창원대	356	37,220,000	10(매점4, 식당3, 카페3)
15	충남대	484	50,590,000	-
16	충북대	1,112	90,999,950	9(매점3, 식당3, 카페3)
17	한국해양대	363	101,840,000	9(매점 2, 식당3, 카페4)
	계	41,468	2,541,840,454	166

< 자료출처 :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2016년 결산자료(2017.3월) >

※ 부산대 제외(자료 미확보)



<단위 : 원, %>

연 번	학교명	총매출액	시설사용료	영업이익(A)	시설개선비(B)	발전기금/ 장학금(C)	환원비율(%) (B+C/A)
1	강릉원주대	2,216,980,000	18,500,000	17,030,527	-	10,000,000	58.7
2	강원대	6,226,864,143	16,003,531	-1,662,537	153,624,000	152,925,910	-
3	경북대	8,892,164,857	22,000,000	64,510,741	-	-	-
4	경상대	5,327,514,856	36,559,910	6,792,509	135,890,135	30,000,000	2,442.2
5	군산대	827,179,000	5,056,000	-41,123,873	-	-	-
6	금오공대	3,095,635,279	13,512,259	125,654,697	-	50,000,000	39.8
7	방송통신대	1,863,042,413	60,001,166	22,207,175	-	10,000,000	45.0
8	부경대	5,449,171,690	44,737,310	95,207,434	-	193,625,063	203.4
9	서울과기대	4,098,630,076	90,019,370	-	62,606,600	11,500,000	-
10	안동대	1,801,959,592	20,180,000	3,783,722	-	-	-
11	전남대	4,300,000,000	19,000,000	38,198,542	-	64,000,000	167.5
12	전북대	9,192,064,673	87,906,236	-65,569,633	125,438,161	-	-
13	제주대	3,207,348,000	18,883,000	10,585,799	6,500,000	15,000,000	203.1
14	창원대	2,812,447,998	18,270,900	142,232,120	23,198,675	30,000,000	37.4
15	충남대	6,691,654,307	56,971,070	189,631,197	4,037,000	20,000,000	12.7
16	충북대	5,244,439,000	31,025,930	70,719,846	-	31,800,000	45.0
17	한국해양대	3,524,242,518	72,659,690	46,436,440	-	59,000,000	127.1
	계	74,771,338,402	631,286,372	724,634,706	511,294,571	677,850,973	164.1

<자료출처 : 한국대 학생 생활협동조합연합회 '17년 결산자료>

※ 부산대 제외(자료 미 확보)



구 분	협동조합기본법 (2012.1.26.제정, 기재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999.2.5.제정, 공정위)	국세기본법 (1974.12.21제정, 기재부)
	사회적협동조합(학교협동조합 포함)의 근거법	대학생활협동조합의 근거법	대학 소비조합의 근거법 * 대학생협으로 전환토록 안내(2005 국감지적)
특 징	<p>※ 사회적협동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격) 비영리(사단)법인</li> <li>■ (설립) 5인 이상 조합원자격 가진자 발기인, 정관작성, 창립총회 의결, 신고, 중앙부처 인가</li> <li>■ (출좌) 1인 1좌 이상 출자, 총 출좌수의 30/100 초과 금지</li> <li>■ (임원) 이사장 1명 포함 3명이 상 이사, 1명 이상 감사</li> </ul>	<p>※ 대학생활협동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격) 비영리(사단)법인</li> <li>■ (설립) 30인 이상 조합원자격 가진자 발기인, 정관작성, 창립총회 의결, 신고, 지자체 인가</li> <li>■ (출좌) 1인 1좌 이상 출자, 총 출좌수의 20/100 초과 금지</li> <li>■ (임원) 이사장 1명 포함 7명 이상 20명 이하 이사 2명 감사</li> </ul>	<p>※ 소비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격) 법인으로보는 단체</li> <li>■ (신청) 관할 세무서장 승인</li> <li>■ (기타) 조직운영규정에 따라 단체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단체명의로 수익·재산 소유·관리 등</li> </ul>
제 정 이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등 기존 별법 체제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에 의한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또는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li> <li>■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주로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도입하며,</li> <li>■ 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자발적인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활동이 지역·직장·단체 및 학교 단위에서부터 점차 증대하고 있으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조합과는 달리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조합에 대한 공신력의 결여, 조합원의 확보곤란 등 조합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li> <li>■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자발적인 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li> </ul>



<p>목 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u>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li> <li>■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li> </ul>
<p>주 요 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조직으로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설립 가능하며,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는 각각 법인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함</li> <li>■ 협동조합 등은 조합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상호협력 증진에 노력하여야 함</li> <li>■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li> <li>■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3년마다 협동조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lt;이하생략&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발적인 조합활동을 통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30인 이상의 소비자는 발기인이 되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li> <li>■ 조합원은 누구나 1좌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함</li> <li>■ 조합은 농수산물 및 환경물품 등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li> <li>■ 조합은 재고물품의 처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세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기간과 기한, 서류송달 절차등을 정함.</li> <li>■ 세법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세법의 특례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li> <li>■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소급과세의 금지, 기업회계존중의 원칙등을 정함.</li> <li>■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등의 타채권에 대한 우선권,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등이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등에 우선한다는 것과 납세담보물매각시 우선순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lt;이하생략&gt;</li> </ul>



□ 법인세법 제1조제2호 :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2017, 법무부)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민법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법인(특수법인)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참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설립인가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이하 생략)







---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동력**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

---

2018. 11.

**관계부처 합동**







---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동력**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

---

2018. 11.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I . 추진 배경 .....	243
II . 제2차 기본계획 평가 및 향후 여건 전망 .....	244
1. 평가 .....	245
2. 향후 여건 전망 .....	247
III . 제3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	248
IV . 분야별 추진과제 .....	249
1.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	249
2.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	258
3.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 .....	261
4.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 및 국제협력 확대 ....	269
V . 과제별 추진 일정 .....	274
<참고> 최근 세계의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	278



## I. 추진 배경

- 세계화 및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환경·노인복지·보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 고조
  - 사회적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 수요를 개척하고, 시장의 방식으로 사회문제도 해결함으로써 **혁신성장·포용성장에 선도적 역할** 가능
    - \* EU 등에서도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
- 정부는 '07년부터 2차례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차: '07~'11, 2차: '12~'17)을 수립,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
  - 초기 기반이 취약한 상황임을 고려, 정부 주도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세제 등을 집중 지원하여 성장 기반을 조성
  - 지난 10년 간 사회적기업 수는 34배, 고용규모는 1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확대**되고, 매출액 등 **경영상황도 개선**되는 성과
    - \* ('07) 55개소, 2,539명 → ('17) 1,877개소, 41,417명
    - \*\* 평균 매출액: ('14) 12.0억원 → ('15) 13.5억원 → ('16) 15.8억원
-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지속 성장 및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육성 정책으로는 한계
  - 사회적경제기업 고용 비중이 EU의 1/4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인증 요건이 엄격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도 포용하지 못하는 문제**
  - 기업별 규모가 영세하고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기업도 존재하는 등 **민간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측면도 존재
- 따라서, 정부 주도 육성에서 **민간·지역 주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유입되고 사회적경제 당사자와 지역·국민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



## II. 제2차 기본 계획 평가 및 향후 여건 전망

### < 사회적기업 현황 >

- '17년 사회적기업 수는 1,877개\*, 예비사회적기업 수는 1,194개이며, 총 매출액은 약 3.5조,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은 19.3억\*\*

\* 사회적기업 수 : ('12) 774개소 → ('15) 1,506개소 → ('17) 1,877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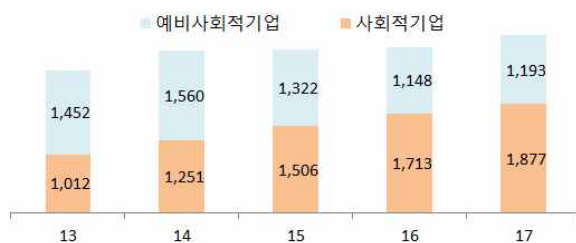
\*\* 평균 매출액(억원): ('12) 8.9 → ('15) 13.5 → ('17) 19.3(추정치)

-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68.6%), 기타형(10.3%), 혼합형(10.0%), 사회서비스 제공형(6.3%)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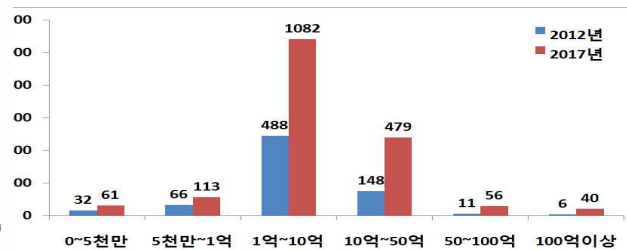
- 경쟁력있는 사회적기업도 많아지면서 사회적기업 간 격차도 확대\*

\* 연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40개)도 증가한 반면, 5천 이하 기업(61개)도 존재

< 사회적기업 수 >



< 사회적기업 매출액 분포 >



- 사회적기업 전체 고용인원은 41만명, 평균 고용은 약 22명\*, 매출액 대비 고용은 1억당 2명(전체 사업체 평균 고용 5.4명, 매출액 대비 전체 사업체 1억당 0.4명, '16. 전국사업체조사)

\* 고용인원(명) : ('12) 18,297 → ('15) 33,527 → ('17) 41,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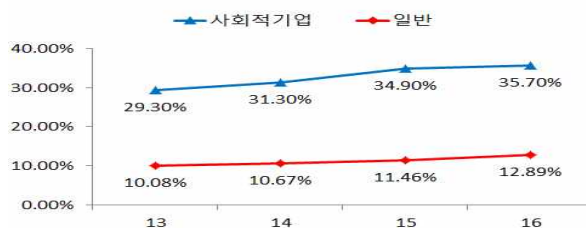
평균 고용인원(명): ('12) 24.4 → ('14) 23.0 → ('16) 23.7 → ('17) 22.1

- (취약계층 고용) 전체 고용인원 중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비율은 60% 수준으로, 규모는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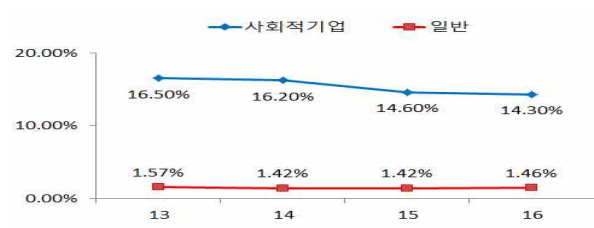
\* 취약계층 고용규모(명): ('07) 1,403 → ('12) 11,091 → ('17) 25,171

취약계층 구성('17년 기준): 고령자(58%), 장애인(23%), 저소득자(12%)

< 고령자 고용비율 >



< 장애인 고용비율 >



- (고용의 질) 사회적기업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97.6%\*(전체 89.1%, '17년), '16년 기준 사회적기업 평균임금은 154만원\*\*, 일자리의 안정성(상용직 94.1%) 등의 이유로 종사자의 근로 만족도도 높은 편

\* 국민연금 93.3%,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97.0%, 산재보험은 98.4%로 높음

\*\* 청소업 187.4만원(전체 청소·환경미화 직종 164.4만원) 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에서의 평균임금은 사회적기업이 더 높은 편



— < 제2차 기본계획('13~'17) 주요내용 > —

- ◇ 목표: 사회적기업 3천개 육성
- ◇ 주요과제: 4대 분야, 15개 정책과제, 61개 세부추진과제
  - 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판로 지원 및 공공구매 확대, 자금 및 투자 지원 확대, 인건비 지원 등 재정지원 제도 개선 등
  - ②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컨설팅 지원 확대, 지원기관 역량 및 인프라 강화,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 사후관리 지원 등
  - ③ 사회적기업 역할 확대 및 성과 확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회적기업 성공모델 확산, 경영공시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
  - ④ 민간과 지역 파트너십 강화: 민간의 사회적기업 지원 확산, 지역·업종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등
- ◇ 주요 실적: 61개 세부추진과제 중 54개 추진, 7개 미추진
  - 주요 추진과제는 ▲온·오프라인 판매채널 확대 ▲재정지원 개선 (연차별 차등 지원 등)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추진 등
  - 주요 미추진과제는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 인센티브(구매 포인트제 등) 신설 등

**[F4] 인증제 기반 지원 정책이 단기간 사회적기업 육성에는 기여,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은 부족**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위주 지원 정책은 단기간 사회적기업 육성에 역할, 특히 취약계층 고용 창출에 도움
  - 그러나,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 \* 전년대비 증가율(%): ('14) 23.6 → ('15) 20.4 → ('16) 13.7 → ('17) 9.6
  - 인증 요건이 엄격하여 창업초기 단계에 있는 소셜벤처 등이 사회적기업으로 유입되지 못하는 등\* 사회적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인·지정률(예비 포함): 28.4%('17년)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획일적인 지원 체계 하에서, 창업 이후 기업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평가도 부족



**F5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틀을 마련하였으나 창업 단계 지원 집중**

- ☐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정보 DB(통합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 소셜벤처 경연대회와 전문지원 기관을 통한 사회적기업가 육성, 초기 창업팀을 위한 성장지원센터 조성 등 단계적 지원 틀 마련
- ☐ 판로개척, 경영·노무 등 전문 컨설팅, 전문인력이나 종사자 직업역량 강화 등 원하는 지원이 다양\*해졌으나, 정부 지원이 여전히 일자리 창출(43.3%), 창업지원(16.9%)에 집중
  - \* 사회적기업의 향후 지원 필요사항('17년) : 판로(21.6%), 홍보(20.4%), 금융(11.7%), 인력(10.5%), 교육훈련(8.1%) 등
  - 특히 판로 지원의 경우, 온·오프라인 매장은 여전히 부족하고 일반 국민들은 사회적기업 구매에 애로\*
  - \*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이용의 애로사항으로 “접할 기회가 적음”이 1순위

**F6 개별 사회적기업 육성에 주력,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은 미흡**

- ☐ 매출 100억원 이상 사회적기업이 증가('12. 6개소 → '17. 40개소)하는 등 개별 사회적기업의 성장에 성과
  - 반면, 국민들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고\*, 매출액 중 공공구매가 40%를 차지하는 등 구매층이 제한적
    - \* 사회적기업제품 경험률은 약 20%, 사회적기업을 잘 모른다는 응답은 61%, 사회적경제를 잘 모른다는 응답은 87.5%('17. 실태조사)
  - 판로개척, 금융 등 간접 지원이 부족하고 사회적기업 상호구매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는 한계

**F7 자생적 성장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며, 사회적기업의 지역적 분포도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

- ☐ 영업이익 발생이 개선되고 있으나 약 50%는 적자 상태이며, 연 매출 100억 이상 기업은 약 2%(40개), 5천만원 미만 기업도 존재(61개)
  - 또한 매출상위 기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상위 20개 중 13개)하고, 사회적기업의 분포도 수도권이 40%\*인 반면, 세종 0.5%, 제주 2.3% 등 지역 간 편차가 존재
    - \* 서울(17.3%), 경기(16.8%), 인천(5.9%)



**F4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 등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 필요**

- ☐ 최근 3%대 저성장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하는 방식 변화 등으로 대규모 일자리창출 가능성은 낮아짐
- 지역에 기반을 두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활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중요

**F5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사회와 민간의 관심 증가**

- ☐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세먼지, 고독사, 아동학대 등 새로운 사회문제도 대두되면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사회와 민간의 관심과 기대가 증가
-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과 민간의 자원 투입 확대는 사회적기업 확산 기회로 작용 전망

**F6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산된 거버넌스 하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 연계 강화 필요**

- ☐ '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마을기업('11년), 협동조합·자활기업('12년) 지원법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정책적으로 육성
- 먼저 체계화된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와 축적된 경험을 여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산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연계도 강화하여 사회적경제를 선도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요구 증대
-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증가에 따라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활동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

- ◆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넓혀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
- ◆ 사회적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역할이 가능하도록 생태계 조성 방식으로 지원을 개편
- ◆ 지역·민간 중심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 전체의 확산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 Ⅲ. 제3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 ❖ 정부 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비 전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따뜻한 성장 실현”

목 표

사회적기업을 통한 가치 있는 일자리 10만개 신규 창출,  
사회적기업 구매 경험 비율 60% 달성

추진과제

#### F4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 ▲ 사회적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 사업 주기에 따른 창업 지원 강화
- ▲ 사회적가치가 높은 영역에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 ▲ 소셜벤처 육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연계 강화

#### F5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 ▲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 ▲ 사회적기업 투명성 제고
- ▲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천 선도

#### F6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

- ▲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소비 촉진
- ▲ 업종·지역별 협력 사업 지원 강화
- ▲ 스타기업 육성
- ▲ 사회적 금융 공급 확대
- ▲ 컨설팅 지원 확대

#### F7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 및 국제협력 확대

- ▲ 지역 주도, 중앙부처 뒷받침
- ▲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협력체계 구축
- ▲ 일반 국민의 사회적가치 이해 제고
- ▲ 남·북 협력, ODA 등 통한 사회적기업 확산
- ▲ 아시아 지역의 사회적경제 Hub화



## IV. 분야별 추진과제

### 1

###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1

### 사회적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F4 사회적기업 정의 개편

-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 등 혁신적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으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법령에 명시
  - 현행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강조되는 ‘사회적기업’ 정의 규정을 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기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 (현행) ‘①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②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개편) “③ 혁신적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정의 추가

#### F5 등록제 도입 추진

-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등록제 전환
  - ① 법개정을 통해 인증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의 개편을 추진하되, ② 단기적으로 현행 인증제도의 세부 요건을 완화하여 연착륙 지원
- (인·지정 요건 완화)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 심사기준이 되는 세부요건을 완화하여 양적 확대 기반 구축(‘18.下~)
  - (인증)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등 현재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식되는 요건을 중심으로 대폭 완화
    -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하며,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으로 분류(5개)하여 각 요건을 설정·심사 중



- 사업 개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사업 운영기간 실적만으로 평가·인증\*이 가능하도록 개편

\* (現) 6개월 동안의 영업이익을 제출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기업만 인증 신청 가능

-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목적의 경우 최소 고용 인원과 근로 시간 기준 완화

\* 現 5명 고용, 주 20시간 이상 근무 → 3명, 주 15시간 이상 근무

- 또한 청년 소셜벤처 등 참신한 기업의 진입 촉진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 분야\* 명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

\*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업 분야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 (예비) 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실적이 없는 계획 단계에서도 지정 가능하도록 개선

- (등록제 도입)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 및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 추진('18.下~)

- 등록 요건\*과 자치단체-중앙 간 역할 분담\*\* 등에 관한 의견수렴을 거쳐 등록제로의 개편을 추진

\* 사회적 목적 추구,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등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설정

\*\* 자치단체가 등록·관리하고 중앙은 지자체 재정 지원 등

-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추구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별도의 법인격 신설을 검토

- 법인격 신설 수요, 조건\*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 추진

\* (법인격 조건(예)) ① 상법상 회사만큼 설립이 자유로우나, ② 이윤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배분할 수 없으며, ③ 청산할 경우 잔여자산을 사회적기업 또는 비영리조직에 증여해야 하는 규제 부여 등

(사례) 영국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구성원들에게 자산 분배를 금지하는 '자산처분제한(asset lock)' 및 연차보고서 작성 의무 적용, 'CIC 감독관실'은 CIC의 법령준수여부 감독 및 관련 지침 발행



## F6 정부 지원 효과성 제고

- (수요 중심 지원 강화) 인증제도 개선에 맞춰 사회적기업의 특성·필요에 따라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체계 개편('18.下~)

\* (예) 태양광 에너지를 판매하는 혁신형 사회적기업 → 신재생 에너지 전문인력 지원 등 사회적기업 요구를 중심으로 지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부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개선
  - 부처 간 MOU 등을 통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부처별 우수사례 및 애로사항 등 공유, 정책 반영
  -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총괄 지원기관으로 신규 참여 분야 발굴 및 지정 심사 지원
- (정책 연계 강화) 중앙부처 간 정례적 협의체인 '사회적기업 정책협의회'를 신설,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유사·중복 방지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차관급)
  - 사회적경제기업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처 등으로 구성\*
    - \*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 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등 검토
  - 부처형 사회적기업 우수 사례 공유, 관련 지원 예산 협의,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 실적 점검 등 협력방안 논의



- (단계별 지원 강화) 창업 입문단계부터 창업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쏙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 (창업 前) 도시재생,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창업입문과정을 신규 추가\* 하고, 「소셜벤처 경연대회」 지원 강화 등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잠재적 사업가 유입 활성화
- \* ('18년) 일반 창업입문과정(240명, 30시간) → ('19년) 도시재생·사회서비스 등 사회적경제 장점이 부각되는 분야별 특화 과정 포함 입문과정 확대
- 사회적경제 선도대학('19. 3개소 지정) 내 사회적경제 학부 개설 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과정 중심 커리큘럼 운영
- (창업 초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확대하고, 사무공간 등 물적 인프라 확충
- 창업 지원팀 수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액 상향 추진
- \* 지원팀수 : '18년 675팀 → '19년 1,000팀
- 지원기간도 기존 1년 → 최대 2년으로 연장\* 등 탄력적 지원
- \* (1년차) 시제품 개발 등 사업 아이템 고도화  
(2년차)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사업화(단, 2년차 지원은 평가 및 기업 수요 등 고려하여 제공)
- (창업 後) 매년 이력 조사를 실시하여 성장 현황 및 지원 수요 등 파악, 필요한 지원 연계 및 컨설팅 제공 →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촉진

① 교육·아이디어 지원	② 창업 초기 집중 육성	③ 성장 지원	④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입문과정 신설</li> <li>▪ 선도대학 지정 및 학부과정 개설</li> <li>▪ 소셜벤처 경연대회 지원, 사회적기업 홍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확대 (사업비, 멘토링 등)</li> <li>▪ 무료 사용 공간 제공 (소셜캠퍼스 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력조사(연 1회)</li> <li>▪ 사후관리 및 후속지원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지정</li> </ul>



- (사회적기업 재도전 지원) 창업에 실패하거나 창업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창업 및 경영 개선에 필요한 멘토링, 사업비 등 지원('19. 시범사업, 100팀)
  - 창업 실패 기업에 대해서는 상담·평가 등 통해 재창업 교육·멘토링, 사업화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Re-Start」\* 신설 추진
    - \* (1단계) 실패원인분석, 재사업 아이템 평가 → (2단계) 기술·시장조사 등 통해 사업화, 마케팅 비용 등 지원(평균 3천만원)
  - 경영 악화 기업에는 「사회적기업 경영혁신 프로젝트」 신설\* 추진
    - \* 악화원인 분석, 자금 조달 지원, 마케팅 지원, 역량강화·멘토링 등 통해 경영 개선을 유도하거나 적합한 유형 변경을 통한 재창업 연계 등 지원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이 진출 가능한 업종\* 개발,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기업 확대 지원\*\*
    - \* (예) 청소업종 사회적기업을 코레일 차량정비단 폐기물수거업체로 전환 (코레일-진흥원 MOU 체결, '18.下)
    - \*\* (예) LH 임대주택 입주민 입주청소 서비스를 사회적기업에 위탁('18년 5개 사회적기업에 시범 사업(3억 매출), '1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추진
- (혁신 분야 특화 지원) 해외진출형, 기술기반형,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 분야 별 전문적 지원 강화(외교부, 중기부, 산업부 등 협조)
  - 진흥원과 KOTR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관련 전문기관 간 MOU 추진 → 컨설팅, 기술 지원 등 제공
    - \* (예) 해외진출형은 KOICA, KOTRA 등 해외진출 인큐베이팅이 가능한 전문 기관, 기술기반형은 중소기업기술진흥원 등 특화 기관을 통해 R&D 기획 지원 제공
- (중장년·여성 맞춤형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내 중장년·여성 특화 분야를 신설('19. 100팀(육성사업 물량 10%))
  - 대상별 창업 입문과정을 확대('18. 3개 → '22. 10개)하고,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31개소), 새일센터(155개소)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취·창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성장지원센터 활용 확대) 전국 9개 권역의 성장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입주공간, 협업공간 및 멘토링 등을 제공
  - \* '19년 +4개소(現 6개) 개설하여 총 9개 권역 10개소 구축 예정
  - '센터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센터 운영자 간 정례적 워크숍(연2회) 등을 통해 운영 경험 공유
  - 지역 주민, 학생 등 대상으로 창업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



## □ 지역 발전 분야

- (도시재생)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창업 및 사업 운영 지원
  - 도시재생사업 참여 신청 시, 금융지원 심사 가점(2점), 도시재생 기금 융자 지원 등 추진
  - 도시재생 지역에 어울림플랫폼\*(도시재생 복합시설) 조성 및 창업 공간 임대, 노후건축물 개량사업자\*\*(‘터 새로이’사업자)로 우선 지정
- \* 도시재생 지역내 창업지원과 주거기능을 함께 하는 복합시설로 연 20개소 설치 목표(‘22년까지 100개소)
- \*\* 청년 건축가·기술인을 채용하는 지역업체를 노후건축물 개량사업자로 지정 하여 자생력 있는 회사로 육성(‘22년까지 100곳 지정)

## \* (사례) 팩토리 베를린(독)

- 베를린의 구도심지역(베르나우어 거리)의 폐공장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자 등에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창업단지를 조성,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



- (생활 SOC) 지역단위 문화체육, 장애인 돌봄 시설 등 각종 생활 밀착형 SOC\*에 사회적기업이 건립·운영 참여
  - \* 지역과 밀착된 10대 생활SOC분야를 선정, 단기간 집중투자 예정(‘19년 7조)
  - 특히 위탁기관 공모 규정에 사회적 가치 기준을 반영하여 사회적 기업의 위탁 확대를 추진

## □ 사회서비스 분야 \* ‘18.12월 사회서비스 종합대책 발표 예정

- (보건복지) 의료, 돌봄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노인돌봄 (요양) 국공립 시설 위탁 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국공립 위탁체 선정 시 사회적기업 우선 고려
  -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에게 조직관리, 법령·회계 교육 등 제공(연2회)
- (돌봄) 돌봄 사회적기업의 돌봄서비스 위탁 운영을 활성화\*
  - \* ‘다함께 돌봄 센터’ 위탁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토록 하고, ‘지역특화 사업’과 ‘다함께 돌봄’ 사업 연계추진 (‘19~)



- (보육) 국공립 시설 일부를 사회적기업이 수탁·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18.上), 보육 관련 지원을 위한 매뉴얼 마련

\* 어린이집 총 40,330개소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51개소(약 0.13%)('17.7월)

## □ 문화·관광·체육 분야

- (문화예술) 예술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 홍보·마케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 지원
  - \*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18년 25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10억) → 기업당 최대 150백만원으로 지원한도 확대 및 지원기업 개소 증대 추진('19. 58억)
- (관광)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음식, 기념품,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광 사업 분야에 사회적기업 진출 확대 및 지원\*
  - \* 지역관광 전문인력(관광두레 PD)을 육성하고('22년까지 256명 선발),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생태관광', 로컬푸드 기반 '음식업' 등 주민사업체 사업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19년 475개 → '22년까지 1,125개)
- (체육) 체육인, 생활 체육 동호회 등을 통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및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 \* 지자체 생활체육시설(생활 SOC)의 스포츠클럽(비영리) 위탁 등('스포츠 클럽 육성법'제정 추진)

## □ 환경·산림 분야

- (환경) 공공선별장 위탁운영, 주민주도형 생태관광, 도시환경 개선 등 '22년까지 10대 중점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 250개 육성하는 등 환경형 사회적기업 영역 확대
  - \* 현재 폐기물, 청소 등 위주(300여개 인증 사회적기업 수) → 생태 관광, 녹색 소비, 자원순환, 미세먼지, 환경보건 등 분야로 다변화
- (산림) 청정임산물, 국유림 등 지역 산림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귀산촌인, 청년임업인 등이 참여하는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 지원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지역별 산림 전문인력을 지정\*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역자원조사, 산림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현장 밀착지원 추진
  - \* '18. 8억, 5개 지역 → '19. 16억, 25개
  - 숲교육, 생활정원, 목공 등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새로운 시장에서 산림형 사회적기업의 진출 지원
  - \* 사회적기업가 등 대상 산림형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18. 3억 → '19. 6억)



□ (소셜벤처 진입 촉진) 전국 대학 내 소셜벤처 동아리 지원('19년 20팀) 및 캠퍼스 투어 확대(연1회 → 연 2회)

○ 청년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체험 프로그램'\* 신설('19. 500명 시범사업)

\* 노동부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활용, 사회적기업을 탐방 대상에 포함

□ (경연대회를 활용한 소셜벤처 육성) 혁신적인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활용, 창업과 연계 강화

○ 육성사업 참여 시 최대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하는 등 수상팀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연계도를 제고\*

\* '09~'17년간 290팀 입상, 92팀 육성사업 연계(31.7%)

○ 경연대회 수상팀은 관계부처 창업 지원사업 진입 시 우선선발\* 또는 가산점 부여 등 통해 실제 사업화 유도(중기부, 교육부 협조)

\* 현재 일반창업 및 글로벌성장 부문 수상팀은 노동부 육성사업에 자동선정

- (중기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및 '청년창업 사관학교'\*\* 내 수상팀 신청 시 가점 부여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오픈바우처) : 만 39세이하 예비청년창업자 및 창업 6개월 이내 청년창업자(100개 기업, 최대 1억)

\*\* 1년간 사업비(최대1억원), 교육, 코칭, 기술지원, 창업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공공기관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해서는 가점 0.5점 부여 중

- (교육부)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참여 시 우대 방안 마련·추진

\* '15년부터 개최 중으로 '18년 사회적 문제해결 분야를 신설



○ **(민간 자원 연계)**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CSR과 연계하여 기업 전문역량을 활용한 후속 지원 및 협업 프로그램 운영\*

\* (딜로이트 회계법인)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회계·세무 분야 컨설팅, (우리은행) 금융교육·멘토링, (SK) 판로 지원, (LG) 소셜캠퍼스 내 업무 공간 지원(5곳)

○ **(공간 지원)** 입상팀 창업 시 성장지원센터\* 등 활용하여 창업공간 우선 입주 지원

\* '17년 3개소(서울, 부산, 전주) 조성, '18년 하반기 3개소(성남, 대구, 대전), '19년 4개소 추가 조성 예정

○ **(금융 지원)** 모태펀드, 임팩트펀드 및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 금융 지원과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수상팀이 창업하는 경우 사회적기업투자 '모태펀드'(노동부), '소셜 임팩트 펀드\*(중기부)에 입상자 정보 제공 및 투자 추천

\*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800억원, 80%)를 기반으로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18년) → 22년까지 총 5,000억원 규모 조성 목표

-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수상팀 대상 대출금액의 100% 보증\* 및 민간은행 대출금리 우대 추진

\* 보증한도 5,000만원, 연간 25억 내외

○ **(판로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사업\*에 수상팀 연계

\* 예: 주요 기차역사 내 사회적기업 판매 공간에 소셜벤처 경연대회 수상팀 제품 전시 및 비치(코레일)

□ **(네트워킹 강화)** 경연대회 참여자들의 교류·활동 촉진 및 협업 기반 마련을 위해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 정례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운영비 등 지원)

\* 선배 사회적기업가와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신설, 홈커밍데이 등 기존 및 신규 참가자간 접점 마련(운영비 등 지원) → 참여 기수별-기수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자체 펠로우십 체계 형성을 지원



## 2

##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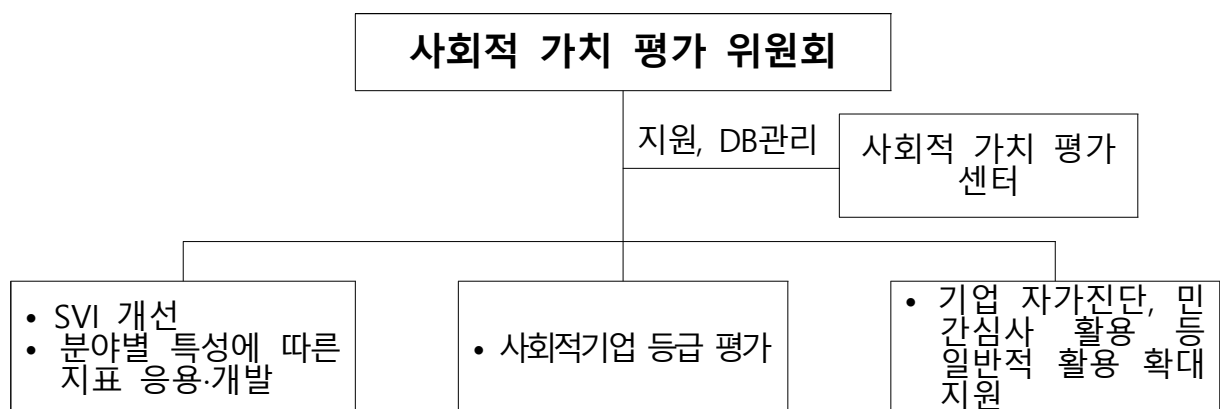
- ◆ 인증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2-1

###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 「사회적 가치 지표」 평가체계 구축)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을 평가 → 중앙·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 심사 시 활용
    - SVI를 기본 가치지표로 하여 사회적기업을 평가(2년에 1회)하고, 등급을 부여 → 필요 기관에 정보 제공, 평가 결과를 DB로 관리
- < 사회적 가치 지표(SVI) 개요('17. 개발) >

  - ▲(목적)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정도를 파악하고 발전방향 제시
  - ▲(지표 구성) 3대 관점, 14개 측정지표(계량 11개+비계량 3개)로 구성
    - 조직 운영 등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 고용창출 및 재정 성과,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성,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 등 평가
- 사회적가치지표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장과 금융·판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 지표 개발·보완, 적용·평가 등 총괄기능 수행
  - 사회적기업진흥원 내 사회적 가치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평가 센터」 설치
    - 사회적가치 평가 운영위원회 지원, 사회적기업 평가 DB 관리,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 수행





- (「사회적 가치 지표」 응용)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응용하여 다양한 목적에 맞는 분야별 지표 개발, 정부 지원 시 적용
  - (재정 지원) 고용성과, 매출 및 영업수준, 사회 기여 등을 중심 사회적 가치 지표로 활용(지자체·중앙정부에 심사 기준(안) 배포)
    -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지원 선정 시 심사 기준으로 활용
  - (공공구매 지원) 고용성과, 지역사회 기여 등을 중심 사회적 가치 지표로 활용
    -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평가, 등급을 부여(평가 센터), 일정 등급 이상 구매시에만 경영평가 실적으로 인정\*
      - \*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심사 기준(안)」 마련·배포('19년~, 기재부 협의)
  - (금융 지원) 신보·기보 등 공공기관 및 민간과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회적경제기업 신용평가 모델 확산('18.下)
    - \* 활용 사례 및 지표 보완 필요 등에 관한 실태 조사 수행('19. 연구용역)
    -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출이나 보증 등 금융 지원 신청 시 일정 기준 이상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지표의 지속적 개선)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표에 대한 현장의 공감도를 높이고, 기업 자가진단, 소셜벤처·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평가 등 일반적 영역에 활용 확대 추진\*
  - \* 현재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한 금융지원(고용부), 신용보증기금 및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 선정 시 등에 활용 중
  - 민간 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대상 선정 시 평가 등에 활용 권장
    - \* (활용례) '2018 LG소셜캠퍼스 지원사업' 시 사회적가치지표를 심사기준으로 적용, 총 20개 기업 대상 사회가치측정, 최종 11개소 선정 및 지원('18.4월)

## 2-2 | 사회적기업 투명성 제고

- (경영공시 강화) 경영공시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경영공시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 '17년 1,877개 기업 중 455개 기업이 자율경영공시에 참여(약 24%)
  - 공공구매 시장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경영공시 의무화\*
    - \* 사회적협동조합 및 조합원 200인/출자금 30억원 이상의 협동조합은 경영공시 의무화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 제96조의2)
  - 경영공시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금융·판로 지원 신청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



- **(부정수급 관리 강화)** 부정수급 예방 교육 의무화 및 사업장 점검 확대 등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
  - 사회적기업 인증시 부정수급 예방 의무교육 실시 및 정부지원을 받는 기업 대상 정기 교육 실시(연 1회)
  - 사업장 점검대상을 재정지원을 받는 (예비)사회적기업 → 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확대
  - 부정수급 시 금액 무관하게 형사고발하고, 정부지원사업 참여 영구 제한

## 2-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 선도

- **(공공부문 자원과 사회적기업 연계)** 공공기관의 강점 및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확대
  - 해외 진출사업이나, 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 수행 과정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직접 활용하거나 지원을 확대\*(MOU 등 추진)
    - \* (KOTRA) 사회적경제기업 수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영문 카탈로그 제작 지원, 상담 주선 등 지원
  -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레일, 항만공사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자산을 가진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홍보 영상 게재, 판매 매장\* 등 지원(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협조)
    - \* 고속도로 휴게소·서울역사 내 사회적기업매장 개장 추진('18.下~) →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휴게소·역사(예: 전주역, 부산역 등)로 확대
-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기업 시상)**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활용,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 성과 등을 평가(연 1회)하고 사회적 가치·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포상
  - 중앙부처 사회적기업 협의회('19년 신설)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 실적 평가 및 지원방안 등 논의(연 1회)
  - 사회적기업 지원 유형별 우수 사례집을 발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촉진
  -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를 신설하여 우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시상 등 우수사례 적극 확산('19년~)
- **(공공기관 교육 확대)**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확대
  - 신규 입사자, 관리직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 연수 프로그램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



◆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의 민간 소비를 늘리고, 사회적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여 규모와 질을 확장하겠습니다.

## 3-1

##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소비 촉진

## F4 민간부문의 소비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소비 인센티브 신설) 일반 시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이용·소비액에 대한 세제 지원 검토\* 등 추진

\* 소득공제 적용 타당성 여부 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19년~)

- 고향사랑상품권(지역화폐) 거래 대상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포함 (기재부, 행안부 협조)
- 은행, 카드사와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시 혜택 부여
  - 사회적기업 온라인 구매몰(SEPP, '18.12월 개설 예정)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시 할인, 포인트 적립 우대 등 추진

- (SNS 몰-가치 소비 캠페인 연계) 카카오 등 SNS 몰 내 사회적기업 진출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및 '가치 소비'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구매 촉진

- 공공기관, 대기업 임직원 전용 온라인몰 내 사회적기업 제품 입점을 지원하고 '가치소비의 날' 사내이벤트 등을 통해 구매 유도('18.下~)

- (소비자 접점 확대) 소비자에 친숙한 유통 채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 접점을 확대\*


\* '17년 조사 결과, 사회적기업 제품 미구매 사유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접할 기회가 없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88.3%로 조사

- TV홈쇼핑, 백화점·마트, 소셜/오픈마켓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한 특별전·기획전 개최 및 기업의 입점 지원 확대
  - GS·롯데·현대 홈쇼핑 등과 협약을 확대하고(현 2곳) G-마켓 등 온라인유통 플랫폼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카테고리 신설 추진



- 공영홈쇼핑 내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 방송 편성 및 이용수수료 우대(15%)\* 추진(중기부 협조)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영홈쇼핑(아임쇼핑) 수수료는 평균 20%

< 홈쇼핑 방송 우수사례 >	
<b>(기업) 아름다운커피 / (상품) 공정무역 너츠세트</b> - (지원내용) GS샵 전문 품평회 지원, '17년 유통 확대 지원사업으로 박람회 참여 지원 - (주요성과) GS홈쇼핑 33,000천원 매출 달성	

-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공동 판매·마케팅 등을 위한 오프라인 유통 거점 전국에 확대\*(행안부, 농림부 등 협조)

-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판매장 '스토어 36.5'\*를 유통 인구가 많은 중심 상권에 조성하는 방향으로 통합·재편

\* 현재 타 판매장 내 흡인숍 형태를 포함하여 전국 65개소 조성, 유통인구가 적은 지역에 주로 설치되어 활용도가 낮음


- 전국 주요 도시에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신설 추진('19년~)

\* 행안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흔 마음' 유통지원센터를 조성,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위한 공동 마케팅, 판매장으로 활용

- 로컬푸드 직매장, 하나로마트 등 중앙부처·공공기관 주관 유통망에 사회적경제기업 위탁 및 입점을 확대(가점 신설, 입점 비용 지원 등)

- (상품 개선 지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상품을 발굴,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상품 개선 지원 확대

- 상품MD, 유통전문가, 디자인전문가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인 상품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 개선 지원('18.下, 진흥원)

< 상품 경쟁력 강화 지원 우수사례 >	
<b>(기업) 향미원 / (상품) 포켓잼</b> - (지원내용) 상품 네이밍 리뉴얼, 상품 중량 개선 및 수출용 패키지 개선 - (지원성과) '17년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IFFE 우수 디자인상품상 수상, 이베이(ebay) 입점 등	



- (해외 진출 지원) 해외진출 사회적기업에 컨설팅, 마케팅, 출장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KOTRA·진흥원)

\* KOTRA 해외진출 패키지('18. 신설) : 기업역량평가를 통해 93개 사 선정 ('18.8월), 역량강화 컨설팅, 영문 카탈로그 제작, 디지털마케팅, 세일즈 출장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 → 지속 확대 추진

- (중소기업 지원제도 연계) 사회적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연계한 전문적인 판로·마케팅 등 지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모 시, 사회적기업 부문 신설 또는 가점 부여(중기부 협조)
  - 마케팅 대전(연1회) 진행 시 사회적기업 가점 부여 및 코너 설치 지원 등

## 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구매 활성화

- (법·제도 개선)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구매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및 평가 강화

- (구매 비율 의무화) 공공기관 구매비율 의무화\*,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신설 등 추진\*\*

\* (유사사례)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 50%, 여성기업 5% 규정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계류중

-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계획 및 사회적기업 별 상품·서비스 정보 DB를 구축하여 공공기관 구매 매칭을 강화
- (결과 공개 강화) 사회적기업 구매 실적구매 결과 순위 공개 강화\*
  - \* (現) 전년도 공공구매 실적, 당해년도 공공구매 계획, 공공구매 실적 상위 10개 기관 공표(노동부)
  - (강화) 3년 연속 구매비율 하락 기관 및 당해년도 구매 계획 감소 기관 소관부처 통보 및 소관부처 홈페이지 게시 추가
  -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전 공공기관의 약 1/4, 207개/832개)의 경우 소관 부처에서 평가 시 기재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 \* 현재 소관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평가항목을 정하여 구매 평가 등이 상이(고용부 사회적기업 구매율 3%, 문체부 정성평가, 중기부 사회적기업+사협 구매율 5% 등)



□ (수의계약 확대)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제품·서비스 용역 민간 위탁 시 수의계약 금액을 2천만원 → 5천만원으로 확대(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18.下)

□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일반 국민 및 공공기관의 편리한 제품 구매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SEPP) 구축('19. 20억)

○ 상품정보 제공에서 구매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구매 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구매 및 기관 실적관리 편의성 제고

□ (공공구매 상담 지원) 지역별 공공구매 전문상담기관 운영 등 구매 지원 강화

○ 공공구매 구매상담기관은 공공구매 수요 발굴, 구매 상담 및 영업 지원, 우수 모델 개발 등 현장지원 활동 강화

○ 진흥원 내 공공기관 판로지원 T/F를 신설, 총괄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구매상담기관(16개)을 활용한 현장 설명회(분기 1회), 지자체·공공기관 협약체결 등 구매 지원\* 확대

\* '17년 4개소 시범운영(광주, 울산, 충남, 경북 지역) 추진 성과

↳ 광주시 우선구매 조례 제정 지원 (구매비율 5%)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협약 체결 (2건) 등

□ (행사 연계 구매 촉진) 국가·공공기관 대규모 행사 등과 연계, 사회적기업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창출

○ 일자리박람회, 창업박람회 등 중앙·지방 개최 박람회 시 사회적기업 홍보 부스 설치 및 기념품 등으로 사회적기업제품을 제공(공공기관 구매상담기관 활용)

○ 정부 주도 국제행사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부대행사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기업 참여 시 우대(기재부 협조)

\*(참여 사례)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평창동계올림픽”

↳ 공정여행 사회적기업 컨소시엄(15개사) 주도로 전국 1,400여명의 사회 소외계층 대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참관 및 공정여행 제공



□ (지역단위 공동사업 지원) 사회적기업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협업 해결 및 사회적기업 규모의 경제 실현

- 사회적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인력비, 사업개발비 등 지원(1팀당 최대 3억, '19년~) 추진
  - 퇴직 인력,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 발굴 및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가칭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18.下 시범사업, 2개 지역)

\* (노동부 지역특화사업) 우리동네 사회적기업(신설) 사례 : 부천시

- 돌봄 수요가 많은 방학 기간 동안 "급식", "방과후 수업", "등·하원" 전문 사회적기업이 함께 협업하여 '급식-방과후 수업-등·하원'을 One-Stop으로 제공 예정('18. 下, 시범사업)

- 현재 공동 상표, 브랜드 개발에 한정된 사업개발비 공동사업 지원 항목도 확대('18.下 지원항목 수요 조사)
  - 다수 기업이 협업하여 시장 수요 조사, 마케팅, 홍보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개발비 우선 지원
- (공동 시설·장비 지원) 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공동으로 필요한 시설·장비 등 비용 지원 추진
- (공동 기술개발 지원) 사회적경제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시 기술개발 및 사업화 비용 등 지원 (중기부, 산업부 기술지원 사업과 연계)

□ (프랜차이즈 육성) 업종별 프랜차이즈화\*를 통해 업종 내 경쟁력을 가진 우수기업의 노하우 및 사례를 유사 사회적기업체에 확산

- 프랜차이즈 당 20억원 범위 내 지원(매칭형) → 공모 사업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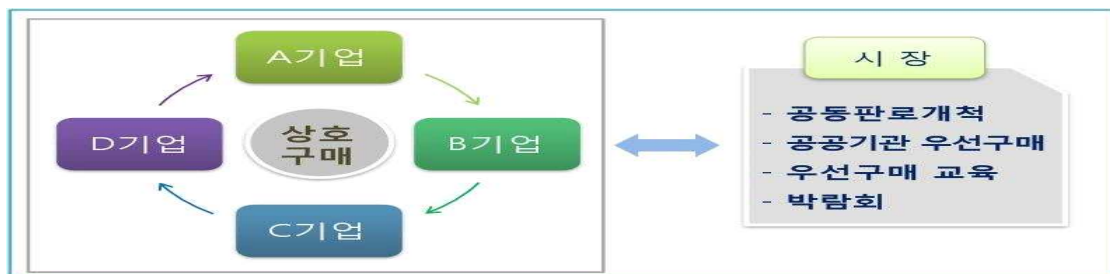
\* 방역·소독 청소업종, 돌봄, 관광, 재활용(환경) 등 업종별 사회적기업을 묶는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시범 실시



- (사회적기업 혁신타운 조성)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 등이 집적된 시설을 조성하여 사회적기업 간 협업·교류 및 공동 홍보·판매, 사회적경제 연구 등 지원(산업부 등 협조)
  - 사회적기업 상품 판매(비즈니스) 뿐 아니라 파일럿 형태의 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클러스터로 조성('19년 2개소)
- (지역 단위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 육성) 지역 단위 사회적기업의 전문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가칭)사회적기업 종합상사'를 신설·육성
  - 사회적경제기업 간 연계하여 공동 판로개척 및 상호구매를 활성화 하는 경우 사업비 등 지급(전문인력·사업개발비 등, 1억 범위)
    - (1) <일반 시장>에서 공동 판로개척, 박람회, 교육 등을 수행하고,
    - (2) <사회적기업 내>의 상호 구매도 활성화

#### ☞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 체계 확립

- \*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종합상사'는 지역 소재 사회적기업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인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제품 컨설팅,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17년 종합상사 회원기업의 매출액 93억)



### 3-3 | 스타 기업 육성

- ("소셜임팩트 11" 신설) 우수 사회적기업을 선정(11개), 백화점·홈쇼핑 등 전국적 유통망에 우선 입점 등 집중적 지원을 통해 큰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
  - 상품의 질, 매출액, 사회적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선정 → 2년 간 상품 개선, 금융·판로, 우수사례 홍보 등을 집중 지원
  - 진흥원 내 관련 전담 인력(가칭 '스타기업 매니저')을 지정하여 선정 기업 성장 지원, 지원기간 2년 후 성장도를 평가하여 1년 추가 연장



- (금융 공급 확대) 정부 재원을 활용한 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경로도 다변화
  - 사회적기업 전용 모태펀드 확충('18년 5호 펀드 108억 출자 → '20년 6호 펀드 발행 추진)
    - 다양한 기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조정((現) 1개 기업 한도 20% → (개정) 10~15% 이내)
  - 소셜 임팩트투자펀드\*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확대(중기부)
    - \* ('18) 1,000억원 → ('22) 총 5,000억원 규모 조성 목표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사회적기업 대상 금융 공급 확대
    - \* (서민금융진흥원) '18년 50억원→'19년 50~80억, (신용보증기금) '18년 400억 →'19년 1,600억원으로 특례보증 연 한도 확대
  - 공공임대상가 사회적기업 입점 지원 등 임대 지원 신설
    - LH 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상가 일부를 사회적경제기업에 저가에 임대('18년부터 공급 추진, 임대료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
- (금융 접근성 제고) 사회적금융 정보 제공 강화 및 우수 사회적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
  - 서민금융진흥원 협력기관('18년 11개 기관)을 통해 사회적금융 지원 제도 안내 및 컨설팅 제공
  -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우수한 사회적기업이 대출 선정 등에서 우대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 사회적 가치 반영 추진(금융위)
- (자조금융 기반 조성) (가칭)사회적경제공제사업기금을 설치, 운영 자금 및 성장기 금융 공급 인프라 확충
  -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공제회 지원 근거 마련



- (컨설팅 효과성 제고) 상시 상담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
  - 일회성·단기적 상담은 온라인 ‘재능기부뱅크’ 사이트\*를 통해 퇴직전문인력의 프로보노 활동과 연계
    - \*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한 사회적기업과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퇴직전문인력 등 전문가를 연계하여 경영·회계·법률 등 분야별 자문 서비스 제공
  - 다회성·장기적 상담은 초기 상담을 거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대면 상담 지원(심사 + 자부담)
  - 프로보노 활동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성장지원센터\*의 공간 및 사무기기 등 물적 인프라 제공
    - \* 서울, 부산, 전주 3개소 조성 → '18. 성남, 대구, 대전·충남 3개소 구축 중
- (업종·분야별 전문기관 육성·발굴) 사회적기업의 지원 수요를 반영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 육성 및 발굴
  - \* (현장의 목소리) 전문기능 중심으로 영역별 전국을 커버하는 지원 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필요('18년 지원기관 대표자 간담회)
  - 사회적금융, 유통·마케팅 등 사회적기업 지원 분야별 전문 지원 조직을 발굴·육성하여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 (기업·직능단체 연계 강화) 다양한 기업, 직능단체\*, 시민사회와 MOU 등 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 \* 노무사회, 변호사회, 세무사회, 관세사회, 경영지도사회 등 전문성을 지닌 직능 단체(16.12월, 고용노동부-한국공인회계사회 협업, 회계·세무 분야 전문 컨설팅 제공)
- (컨설팅 간 연계 지원 강화) 기업별 지원 현황 등 이력을 DB화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에 필요한 후속 지원 연계
  - \* (예) 경영 컨설팅 + 판로·금융·재정지원: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마케팅, 금융, 재정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 ◆ 지역과 사회적기업 중심, 중앙정부가 뒷받침하고  
사회적경제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기업 정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4-1

## 지역 주도, 중앙부처 뒷받침

## F4 지역 주도

- (지자체 기능 이관) 사회적경제 발전도, 정책 추진 여건, 등록제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부 사업의 지자체 이관 검토
  - 지자체의 수요·인프라 등 역량을 반영하여 신규 기업 발굴, 재정 지원 및 기초 컨설팅, 지역 주민과 사회적기업 간 접점 확대 등을 통한 지역기반 구축·지원업무 등을 점진적으로 이관\*
    - \* 지자체 업무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 의견수렴('18.下)을 통해 진행
- (예산 탄력성 확대) 광역 지자체에서 각 지역 실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집행 탄력성을 강화
  - 지역 수요 및 필요에 맞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간 예산의 조정이 용이한 예산계정으로 변경 추진(기재부 협조)
-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지자체, 당사자조직·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기관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정례화 및 활성화 → 중앙·지자체 정책 반영
  - \* 업종별 프랜차이즈화,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사업, 기업의 경영상 애로,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전략적 업종 전환, 직원·대표자 역량 강화 등 사회적기업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 네트워크 의견수렴 제도화

## F5 중앙 뒷받침

- (지자체 사업 참여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매칭 사업의 사회적기업 참여 확대



-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공동체활성화 등 자치단체 대상 중앙 정부 공모사업\*에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 참여시 심사 우대 등 추진

\* (예) 농식품부의 '마을만들기' ①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②지역소득증대를 위한 시설 지원, ③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 추진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한 지역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되도록 지원(사회적기업 컨설팅 등으로 연계)

\* (예) 천안시는 소유 건물에 결혼이주여성들이 운영하는 '다문화 레스토랑 (I'm Asia: 이맛이야)' 창업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17.6)

- 부처별 주요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우수사례집」 발간, 지자체 등 배포 → 우수 모델 확산 추진

## 4-2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기업 협력체계 구축

- (당사자 참여 확대) 사업 추진과정에 사회적기업 단체 등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기적 의견수렴

- 중앙, 지자체 및 진흥원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평가·환류 등 전 단계에서 현장과 시민사회의 참여체계 구축 추진\*

\*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포상 시 심사 우대 등 추진

- (진흥원-자치단체 협력 강화) 사회적기업진흥원 - 자치단체와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체계 마련

- 각 기관의 장점이 되는 혁신 기능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 우수 지원사례 및 경험과 노하우, 자원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조직 네트워킹 기회 확대(지자체 및 부처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포함)

- (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진흥원의 기능 확대·개편

- 사회적기업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창업 지원, 공공구매 및 판로 지원, 경영 지원 등 전문서비스 강화



- 사회적기업에 대한 통계관리 강화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개편 및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통계청 협조)

\* ▲사회적기업 통합 DB 구축 ▲기업별·사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 ▲국가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중복 및 부정수급예방 시스템 구축 등

- **민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자치단체 간 업무 협조·공유사항 조율, 교육·컨텐츠 제공, 우수 사례 확산 등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자치단체 업무를 중앙과 연결·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자치단체) 지역 특색을 살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등 현장 밀착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종사자 역량 교육도 확대

-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3년 미만 전담인력(전체 인력의 약 40%)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기적인 교육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상호 연계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여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산하고 상호 간 교류·협업을 촉진

- 판로·재정지원 및 클러스터 이용, 통합박람회 개최 등 사회적경제 기업이 **함께 이용·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개방
- 업종별 협업, 교육, 판로 지원 등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협력하여 참여하는 경우 심사 우대 등 검토

#### 4-3 | 일반국민의 사회적 가치 이해 제고

□ **(체험기회 확대)** 청소년·청년·일반시민 등 대상자별로 사회적기업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기회 확대 제공

- 청소년·청년 대상 **사회적기업 캠프, 대학 학습 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에 **자원봉사 활동 유도**(행안부 협조)

\* 사회적기업 캠프: ('19년) 연 2회, 160명 → '22년까지 확대  
학습동아리 지원: ('19년) 20팀 → '22년까지 확대

- 청소년 대상 사회적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유도

\*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해 사회적기업 진로체험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사회적기업 인식 개선 및 사회적기업분야 관심·참여 유도



- 사회적기업 자원봉사 수요기관 등록 검토\*(행안부), 대국민 참여 확대

\* 소속 자원봉사센터와 활동 계획 및 활동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 후 등록

○ 초·중등 교과과정에 사회적경제 내용과 가치를 반영하여 일상 생활에서 협력·연대를 실천 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초·중등 교수자료 개발('18년)하여 시·도 교육청 교과 개설 지원('19년~)

□ (국민참여 홍보 강화) 가치 소비,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체험 등에 대한 수기 공모전 개최하고, 교육도 진행하여 일반 시민의 인식 확산 유도(한국소비자원 협조)

□ (사회적기업 홍보 다각화) 우수사례 발굴·홍보 강화 및 온·오프라인 홍보방식 다양화

○ 우수 사회적기업 또는 기업가, 종사자를 선발하여 연중 홍보함으로써 대중에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노출 확대

\* (예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기차 KORAIL 매거진 등 국민 생활 밀착형 홍보

○ 공익광고, 다큐 제작 중심의 기존 홍보 방식에서 나아가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간접광고(PPL), SNS 활용 등 홍보방식 다각화

\* (유사사례 : JTBC 천하장사, '16.6~8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진흥공단과 JTBC 공동기획으로 은지원, 강호동 등 유명 연예인이 직접 전국 각지의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방영

#### 4-4

#### 남·북 협력, ODA 등 통한 사회적기업 확산

□ (남·북 협력사업 내 사회적기업 참여 지원) 사회·문화 교류, 인도 협력 등 남북 협력 사업에 사회적기업 참여 활성화(통일부 협조)

○ 생태 교류, 문화재 공동 발굴 등 민간 협력사업에 환경, 문화 관련 사회적기업 참여 지원 → 교류사업 확대에 맞춰 사회적기업 참여 가능 분야 발굴·단계적 확대 추진

□ (ODA·정책 이전) KOICA 등을 활용하여 아시아 국가 등에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 이전 및 사회적기업 진출 등 추진

○ ODA 사업 참여자 선정 시 사회적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추진 (외교부 협조)



- \* (예) KOICA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내 사회적기업 가점 신설 등
  -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ODA에 적용하여 개발 협력 난제 해결을 모색, 기술개발사업(최대 3억) → 시범사업(최대 5억) → 현지적용(최대 10억) 단계로 구성

-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ODA 사업 개발 및 사회적기업 참여 확대 (외교부 협조)

## 4-5 | 아시아 지역의 사회적경제 Hub화

- (협력체계 구축) 한국의 사회적기업 제도·정책을 공유·확산하고, 아시아 지역 내 한국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 한국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 및 지원제도가 가장 잘 조성된 국가 1위 선정('16년 사회적경제 주요 45개국 대상, 톰슨 로이터 재단·GSEN·UnLtd 공동으로 진행한 글로벌 리서치)

- 사무국을 신설(진흥원)하여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포럼, 학술·연구·워크숍 교류, 대학 학위·프로그램 교류 등 실무 지원
- 사회적경제 국제 포럼(SE)을 확대하여 '아시아 네트워크'\*를 신설하고 우수 글로벌 기업에 '아시안 사회적기업가' 상(Asian SE Awards)을 추진하는 등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사회적기업 협력체계를 구축

- \* 사회적경제기업, 유관 민간 조직,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아시아지역 민·관 합동 네트워크로 조성

- OECD, ILO 등 국제기구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등 사회적기업 논의 확산을 위한 전략 마련

- (아시아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회적경제 선도대학('19년 지정) 등 활용하여 국제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가칭)을 신설, 아시아 사회적기업가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국내 사회적기업가들의 글로벌화와 아시아 유망 (청년)사회적기업가들의 국내 유입 활성화 → 국내·외 사회적기업가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사회혁신 글로벌 허브로 한국의 위상 정립



## V. 과제별 추진 일정

연번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 부처
		'18	'19	'20	'21	'22	
1.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1-1. 사회적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1-1-1	사회적기업 정의 개편						노동부
1-1-2	등록제 추진 및 인·지정 요건 완화						노동부
1-1-3	수요 중심 지원 강화						노동부
1-1-4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정책 연계 강화						노동부
1-2. 사업 주기에 따른 창업 지원 강화							
1-2-1	창업 단계별 지원 강화						노동부
1-2-2	사회적기업 재도전 지원 신설						노동부
1-2-3	혁신분야 특화 지원 및 중장년· 여성 맞춤형 지원 확대						외교부, 중기부, 산업부
1-3. 사회적가치가 높은 영역에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1-3-1	지역발전 분야 진입 촉진						국토부, 문화부
1-3-2	사회서비스 분야 진입 촉진						복지부
1-3-3	문화·관광·체육 분야 진입 촉진						문화부
1-3-4	환경·산림 분야 진입 촉진						환경부, 산림청
1-4. 소셜벤처 육성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연계 강화							
1-4-1	소셜벤처 진입 촉진						노동부
1-4-2	경연대회 지원 강화						노동부, 중기부, 교육부
1-4-3	네트워크 지원						노동부



2.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2-1.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2-1-1	평가체계 구축 추진						노동부
2-1-2	사회적 가치 지표 응용 추진						노동부
2-1-3	지표의 지속적 개선						노동부
2-2. 사회적기업 투명성 제고							
2-2-1	경영공시 강화						노동부
2-2-2	부정수급 관리 강화						노동부
2-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 선도							
2-3-1	공공부문 자원과 사회적기업 연계						노동부
2-3-2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기업 시상						노동부
2-3-3	공공기관 교육 확대						노동부, 기재부
3.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							
3-1.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소비 촉진							
3-1-1	사회적경제기업 소비 인센티브 신설 추진						노동부, 기재부, 중기부, 지자체
3-1-2	소비자 접점 및 오프라인 유통 거점 확대						노동부, 행안부, 농림부
3-1-3	상품 개선 지원						노동부
3-1-4	해외 진출 지원						노동부, KOTRA
3-1-4	중소기업 지원 제도 연계						중기부
3-1-5	공공기관 구매 비율 의무화 등 판로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노동부
3-1-6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평가 반영 강화						기재부
3-1-7	온라인 구매 플랫폼 구축 및 공공구매 상담 지원						노동부
3-1-8	행사·구매 연계						노동부, 기재부



<b>3-2. 업종·지역별 협력 사업 지원 강화</b>							
3-2-1	지역단위 공동사업 지원						노동부
3-2-2	프랜차이즈 육성						노동부
3-2-3	사회적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부 등
3-2-4	지역단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육성(사회적기업 종합상사)						노동부
<b>3-3. 스타 기업 육성</b>							
3-3-1	소셜임팩트 11 신설						노동부
<b>3-4. 사회적 금융 공급 확대</b>							
3-4-1	금융 공급 확대						노동부, 중기부, 금융위, 국토부
3-4-2	금융 접근성 제고						금융위
3-4-3	자조금융 시스템 구축 추진						노동부, 금융위
<b>3-5. 컨설팅 지원 확대</b>							
3-5-1	컨설팅 인프라 강화						노동부
3-5-2	전문기관 육성 발굴						노동부
3-5-3	지원사업 간 연계 및 기업·직능 단체 협력 강화						노동부
<b>4.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 체계 조성과 국제 협력 확대</b>							
<b>4-1. 지역 주도, 중앙부처 뒷받침</b>							
4-1-1	지자체 기능 이관						노동부
4-1-2	예산 자율성 확대						노동부, 기재부
4-1-3	지자체 사업 참여 강화						노동부, 농식품부, 각부처
<b>4-2.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협력체계 구축</b>							
4-2-1	현장과 시민사회 참여체계 구축						노동부



4-2-2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간 협력 강화						노동부
4-2-3	사회적경제기업 상호연계 지원						노동부
<b>4-3. 일반 국민의 사회적가치 이해 제고</b>							
4-3-1	자원봉사 수요기관 등록 검토 등 지원						행안부, 노동부
4-3-2	초·중등 교과과정 반영						교육부
4-3-3	국민참여 홍보 강화						한국소비자원
4-3-4	사회적기업 홍보 다각화						노동부
<b>4-4. 남·북 협력, ODA 등 통한 사회적기업 확산</b>							
4-4-1	남북 협력사업 내 사회적기업 참여 지원						통일부, 노동부
4-4-2	ODA 사업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외교부, 노동부
<b>4-5.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회적경제 위상 강화</b>							
4-5-1	사무국 신설(진흥원)						노동부, 진흥원
4-5-2	국제포럼 확대 및 아시아네트워크 신설						노동부, 진흥원
4-5-3	국제기구 협력 방안 마련						노동부, 기재부
4-5-4	아시아 사회적기업가 양성						노동부



## &lt; 최근 세계의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gt;

- EU는 실업, 사회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09년 **사회적경제 개념 인식, 법적조치 권고**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 강화
  - 이에 따라, 유럽 각 국은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높이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
  - 프랑스는 2014년 '**사회연대경제법(ESS: l'Economie Sociale et Solidaire)**'을 제정하고,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영역, 승인제도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규정
  -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은 사회적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
- OECD는 주요 국가의 사회적기업 정책을 비교 분석, **8가지 정책 추진방향 제시** (Boosting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OECD/EU, 2017)
  - ①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 ② 다자간 파트너십 구축 ③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④ 금융 공급자에 대한 위험 공유 ⑤ 교육 과정에 사회적기업가 정신, 관련 역량 반영 ⑥ 사회적 영향 측정 및 평가 활성화 ⑦ 사회적기업 친화적 행정 시스템 마련 ⑧ 사회적기업을 위한 제도적 연속성과 정치적 지원 보장 등
  - 주요 사례
    - ▲ (벨기에) "사회적혁신공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기업가 및 혁신가에게 워크샵, 훈련, 선배 혁신가 멘토링 등 제공하고 인식제고 및 네트워킹도 지원
    - ▲ (덴마크) 코펜하겐 시는 "코펜하겐 프로젝트 하우스"라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스타트업의 인큐베이팅, 다중 파트너 멘토링 시스템, 문화행사 등 개최
    - ▲ (프랑스) 랑그도크루시옹 지역에서는 지역창업보육센터(Alter'Incub)를 통해 12개월 과정의 창업보육프로그램\*을 시행
      - \* 개인, 집단, 외부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킹, 시장조사, 재정 및 사업계획, 집단훈련 등 제공
    - ▲ (독일) 사회적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정신을 위한 금융기관 (FASE)" 및 "PHINEO" 운영
    - ▲ (영국) "빅포텐셜"이라는 투자준비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자조기업, 지역공동체 기업 및 사회적기업 투자 또는 공공계약 수주를 지원
    - ▲ (스페인) 공공조달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책임 공공조달을 위한 시의회 법령"\*을 제정(바르셀로나)
      - \* (예) 직원 50명 이상 기관은 공공조달 기업 선정 시 최소 5% 이상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고용한 기업을 선정하여야 함



---

#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

2019. 2.

국토교통부







---

#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

2019. 2.

국토교통부



## 1. 추진배경

-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주택공급체계의 한계를 매워주는 대안 필요
  - 공공임대주택은 개발 가능 택지부족, 재원부담으로 인해 지속적 공급확대가 어렵고, 낙인효과 등 사회갈등을 유발
  - 민간임대주택은 높은 임대료 등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 해결에 한계
- 주거와 경제활동 공간의 분리, 제테크 수단으로 이용 등 주거공간이 더 이상 삶의 터전으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공동체 형성 미흡

## 2. 추진성과 및 한계

- 공공과 민간의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종합계획('16.5), 주거복지로드맵('17.11) 등을 통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중
  - 자금조달(기금 대출상품·HUG 보증 등)·행정(HUG 산하 지원센터 설립) 지원 및 LH 보유부지 활용 시범사업(고양삼송, 수원조원) 등
-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경제주체의 역량 및 타부처 정책과의 연계 부족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는 다소 미흡

## 3.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 < 추진 방향 >

[비전]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게 오랜기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환경 조성

- ◆ 다양한 사업모델의 사회주택을 공급, 주민참여 등 사회가치 실현
- ◆ 자금조달 지원 및 교육·컨설팅을 통한 사회적경제 주체 역량 제고
- ◆ 중앙-자치단체-사회적경제주체로 협의체 구성·운영 등 활성화 기반 구축



## ① 사회주택 공급 확대

- (안정적 주거공급)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밀착, 수요 맞춤형으로 공급  
(’19년~’22년 매년 2,000호), 개발 가능한 토지 발굴 및 시범사업 지속 실시
  -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공급확대(매년 1,500호 이상 공급 예정), 인프라가 취약한 다른 자치단체는 소규모 시범사업 위주 실시
    - \* ’19년 토지임대부 900호, 리츠형 200호, 준주택 리모델링 250호 매입임대 운영위탁 70호 등
  - LH는 ’19년부터 매년 500호(토지임대부 300호, 매입임대 운영위탁 200호)
    - \* 토지임대부(또는 리츠형) : 지자체(또는 리츠)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사회적경제주체에게 장기 임대하여, 대상 토지에 사회주택 건설 및 임차인 모집 운영하는 방식
- (맞춤형 사업모델 발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입주대상을 넓게 설정하되, 수요자 특성에 맞는 사회주택 공급
  - 전국단위로의 확산을 위해 농촌형 사회주택 등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과 프로그램\*도 개발
    - \* 청년 대상의 세어하우스, 신혼부부를 위한 돌봄서비스, 고령자 노노(老老)케어 등
- (공공성 확보)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기금지원 요건에 공공성을 반영하고, 심사 시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
  - 입주자격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3인 500만원) 120% 이하 무주택자 / 전체 세대의 40% 이상 주거취약계층(공공주택특별법)에 공급
  - 임대가격은 주변시세 85% 이하, 기간은 15년 이상 공급
    - \* (심사절차) 신청→자문위원회→영업점심사→본점심사→보증 발급

## ②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 (주민참여 제고) 복지·문화·일자리 등 각종 정부정책이 사회주택을 통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지자체·지역주민 참여



- (공동체 코디네이터) 공모 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하여 위촉, 입주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사업계획 단계에서 민간사업자 자율적으로 위촉하되, 필요시 해당 사회주택의 컨셉에 맞는 전문가를 지자체, LH, HUG 등이 추천

- 주민과 함께 프로그램 기획·실행, 외부자원 연계 활동 등을 통해 입주민의 공공의식 변화·참여 유도(서울시는 자체 운영 중)

### 3 사회적경제주체 지원 및 역량 강화

- (지원체계 구축) 사회주택 공급 관련 금융·행정지원을 위한 HUG의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18.6)를 강화하여 전국적 지원체계 구축

- 센터 기능을 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으로 강화

- (자금조달 지원) 주거복지로드맵(17.11)에 따라 도입한 사회주택 건설·매입자금 기금융자\* 및 HUG 보증\*\*으로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시행세칙에 기금융자를 위한 '사회임대주택' 기금융자 조건 신설(18.3)

\*\* HUG의 PF 보증을 위한 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 및 세칙 개정(17.12)

- (교육 및 컨설팅)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주택사업 및 재원조달 관련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실시

- 입주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및 사업성 분석·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주체의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

### 4 협의체 구성 등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

- (협의체 구성·운영)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사회적경제주체, 주택 관련 전문기관 및 사회단체 등으로 상시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우리부는 사회주택 제도 전반과 기본적인 지원을, 자치단체는 사업 승인 및 관리, 세부 지원, 각종 정부정책 연계 등을 담당



□ (관련 정책 연계) 단순 주거제공이 아닌 다양한 관련 정책 실현의 플랫폼으로 사회주택이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연계 추진

- 사업계획 단계부터 생활SOC,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회적경제주체 협업 유도(기금 심사시 가점 부여 등)

□ (홍보 강화)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해 대중매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

- HUG 금융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 플랫폼 개선을 통해 사업자와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 5 추진체계 및 사업참여 방안

□ (추진체계)

중앙정부	지자체	사회적경제주체
정책수립, 제도개선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및 기반 조성	지자체 사업 공모 사회서비스 연계 예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사업 공모 참여</li> <li>- 자체 사업 추진</li> <li>- 매입임대주택 위탁 운영</li> </ul>
	공공기관 (LH등) 기관 사업 공모* (HUG) 기금 융자·보증, 컨설팅, 교육	

□ (사업참여) 사회주택 사업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모에 참여하거나, 사회적경제주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

- (공모사업)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사업목적/사업대상지/사업방식 등을 정하여 공모하면, 공모 내용에 적합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추진

\* 참가의향서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자 선정 → 약정체결 및 자금조달 → 착공, 준공 및 입주자 모집 등 운영

- (자체사업) 사회적경제주체의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HUG 또는 금융기관과 자금조달 방법 협의 후 사업 추진

\* 토지 및 사업방식 발굴 → HUG 컨설팅 → 기금 융자·보증 상담 → 약정체결 및 자금조달 → 착공, 준공 및 입주자 모집 등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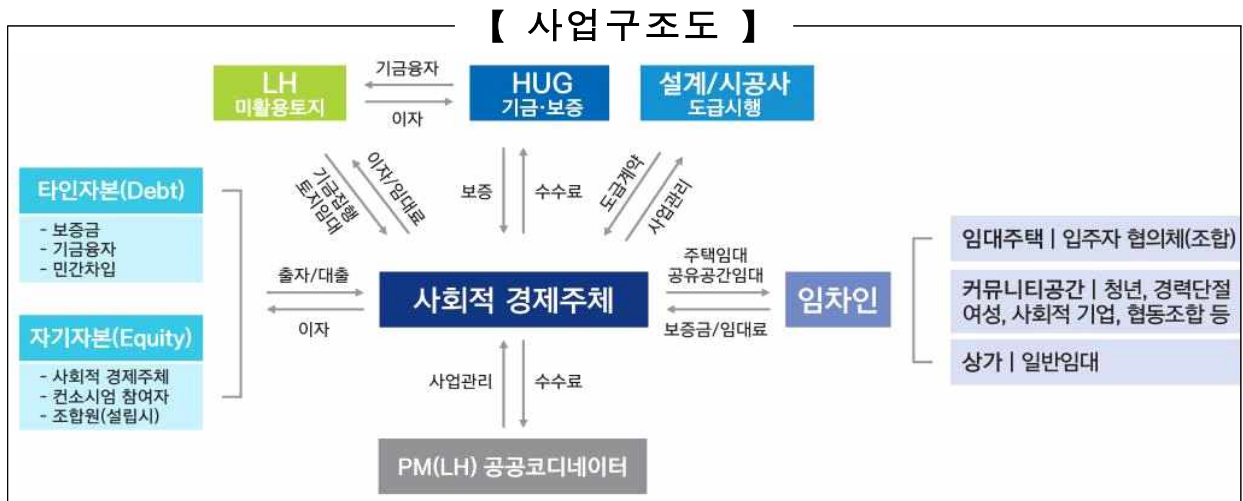


## 참고 1

## 사회주택 사업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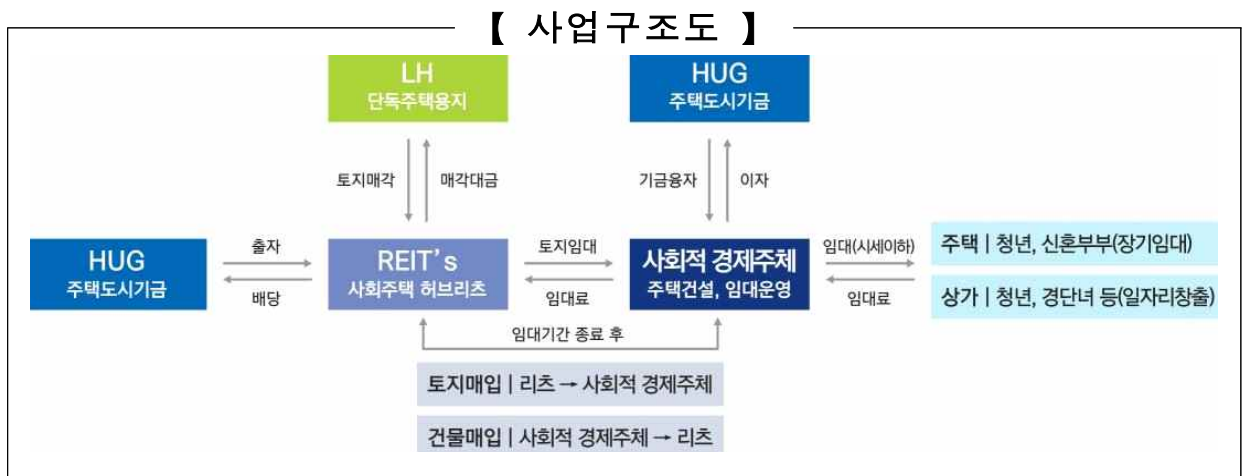
### 1 토지임대부 방식

- 사회적경제주체가 지자체나 지방공사의 미활용 용지를 임대하여 사회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임대 완료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 \* 수원조원에 LH국민임대홍보관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중('20.下 입주예정/ 45~88호)



### 2 리츠형 토지임대부 방식

- 리츠가 토지(점포주택용지)를 매입하면 사회적경제주체가 이를 임대하여 사회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상가임대수익 및 15년 이상 운영 후 사업청산 시 수익으로 주택임대 손실 보전
- \* 고양삼송에 시범사업 중('19.下 입주예정/ 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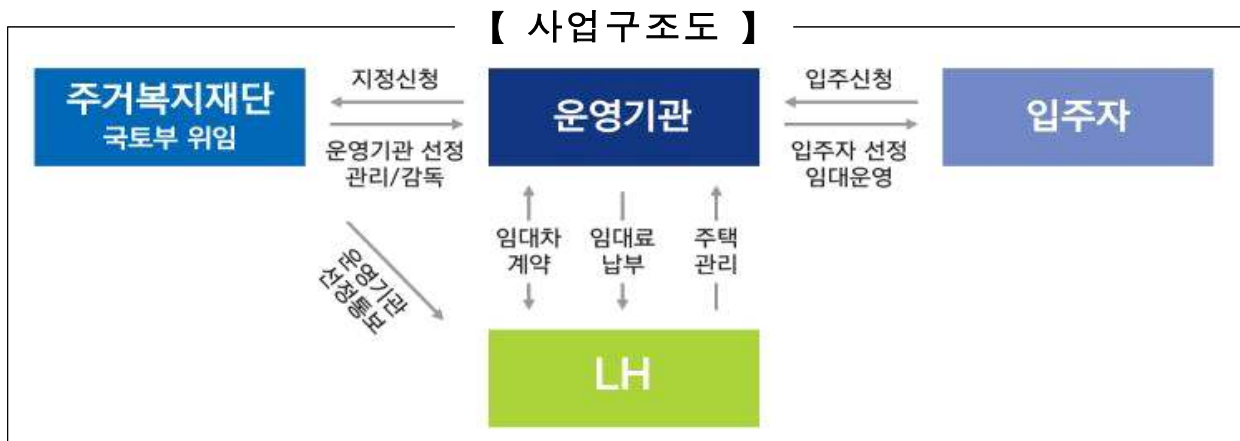




### ③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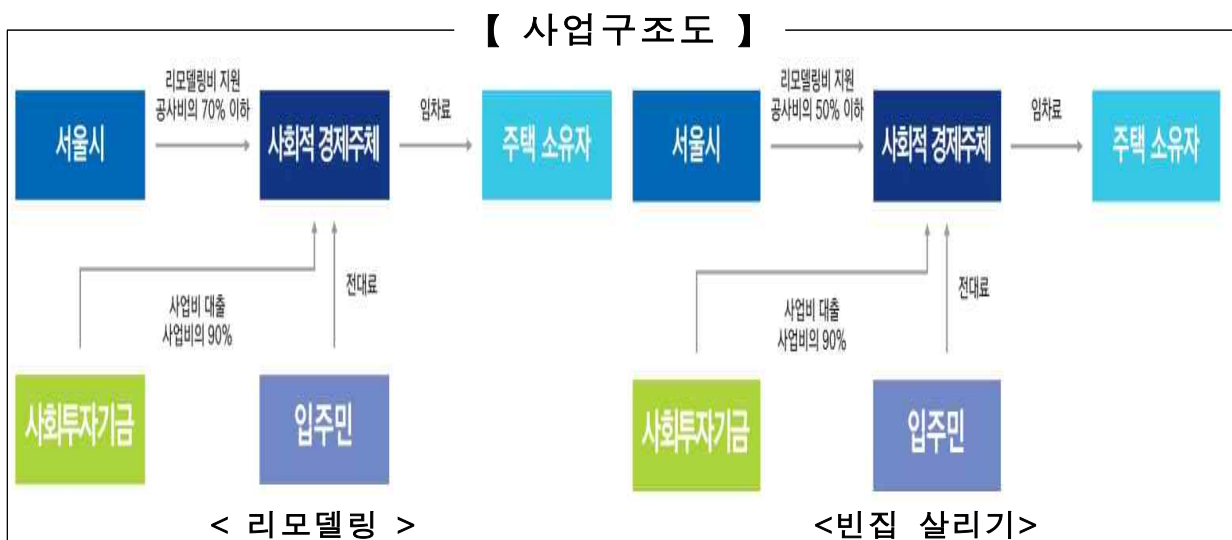
- LH 등이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입 후 사회적경제주체 등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셰어하우스로 재임대

\* '16년에 12개 운영기관 선정하여 246호 운영 중,  
'18년에 신규로 운영기관 10개를 선정하여 수도권 101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중



### ④ 준주택 리모델링/ 빈집 살리기

- (리모델링) 사회적경제주체가 고시원 등 15년 이상된 근린생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에게 재임대
- (빈집살리기) 6개월 이상 빈집을 사회적경제주체가 리모델링해서 청년 등에게 재임대





## □ 기금융자 : 사회주택 건설/매입을 위한 장기·저리의 기금융자

- (지원 방식) 토지임대부\*, 지자체·공공기관 협업형\*\*, 리츠형\*\*\* 등 다양한 사업구조의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다각적으로 지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토지지원리츠 등의 소유토지를 사회적경제주체가 임차하여 사업수행

\*\* 지자체, 공공기관의 신용을 담보로 사회적경제주체와 공동 사업수행

\*\*\* 기금, 지자체, 지방공사 또는 LH가 출자·설립한 리츠 등을 통한 사업수행

- (용자대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경제주체(사회적경제주체에 토지를 임대하는 지자체, 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 포함)

-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 및 단독주택(다가구 등)

- (용자기간) 최장 30년(20년+ 연장 10년), 만기\* 일시상환 구조이며, 매 연장시 당초 용자원금의 5%이상 상환 필요

\* 건설자금 용자는 12년, 16년, 20년, 매입자금 용자는 8년, 16년, 20년

- (한도 및 금리) 전용면적 45㎡이하는 세대당 용자한도가 최대 0.5억원, 60~85㎡이하는 최대 1억원으로, 연 2.0~2.8%(변동금리)로 지원

- 용자기간 만료 후 전체세대를 분양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금리를 0.1%p씩 인하하여 최대 1.0%p까지 인하

구분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45㎡ 이하	45㎡ ~ 60㎡	60㎡ ~ 85㎡	
용자한도	최대 0.5억원	최대 0.8억원	최대 1억원	가구당 0.6억 (호당 5억원내)
용자금리(변동금리)	연 2.0%	연 2.3%	연 2.8%	연 2.0%



□ **보증 :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매입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대출보증**

○ **PF보증**

- (보증대상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경제주체
- (대상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 및 단독주택(다가구 등)
- (보증요건) 공공성\*, 시공사 수행능력\*\*, 자기자금 선투입\*\*\* 등
  - \* 임대료(시세의 85%이하), 입주대상(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 무주택자)
  - \*\* 신용등급 BB+ 이상 또는 시공순위 500위 이내이거나, 시공실적 최근 5년간 300세대 이상
  - \*\*\* 총사업비의 5%, 토지임대부사업은 20%(단 지자체 등의 매입확약시 5%)
- (보증료율) 심사등급별(3등급 체계)로 연 0.220%~0.668% (매입확약시 연0.1%)
- (보증한도) 총사업비의 70% 이내(매입확약시 최대 90%)

○ **매입자금보증**

- (보증대상자) PF보증과 동일
- (대상주택) PF보증과 동일(단, 단독주택은 매입확약시만 보증취급)
- (보증요건) 공공성(PF 보증과 동일), 자기자금 선투입\* 등
  - \* 총사업비의 10%, 토지임대부사업의 경우 20%(단 지자체 등의 매입확약시 5%)
- (보증료율) 연 0.278%(매입확약시 연0.1%)
- (보증한도) 주택유형·지역별 주택가격의 50~80% 차등 적용(매입확약시 최대 90%)

구 분	사회임대주택 PF보증	일반 PF보증	사회임대주택 매입자금보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사] 신용등급 BB+이상 or 최근 5년간 300세대 이상 실적 (또는 시공순위 500위이내)</li> <li>* 30세대 미만 사업장인 경우 C이상, 시공사 실적요건 면제</li> <li>▪ [건축 연면적] 요건 없음</li> <li>▪ [자기자금 선투입] 총사업비 5% 토지임대부사업은 20% (지자체 매입확약시 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사] BB+등급 이상 &amp; 시공순위 500위 이내 (or) 5년 실적 300세대 이상</li> <li>▪ [건축 연면적] 5천㎡이상</li> <li>▪ [자기자금 선투입] 총사업비 5% 토지임대부사업은 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자금 선투입] 총사업비 10% 토지임대부 사업은 20%, (지자체 매입확약시 5%)</li> </ul>
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0.220%~0.668% (지자체 매입확약시 0.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0.605%~1.2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0.278% (지자체 매입확약시 0.1%)</li> </ul>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자체 매입확약시 9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사업비의 70%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유형·지역별 주택가격의 50~80% 차등 적용 (지자체 매입확약시 90%)</li> </ul>







---

#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

---

2019. 3.

관계부처 합동







---

#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

---

2019. 3.

관계부처 합동



## 순 서

I. 추진 배경 및 경과 .....	295
II. 현황 및 문제점 .....	296
III. 목표 및 전략 체계도 .....	298
IV. 실행계획 .....	299
V. 과제별 추진 일정 .....	312



##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발달장애\*는 아동기 발생 장애로 인지·의사소통·자기 통제 능력이 부족하여 평생동안 특별한 보살핌 필요

\* 발달장애인 : 22.5만명(지적 20만명, 자폐성 2.5만명), 전체 장애인(254만)의 8.9%

\*\* 부모도움 비율 : 전체장애인(21%), 지적(72.8%), 자폐(98.5%)

- 발달장애인에 대한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발표(‘18.9.12)

###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및 포용사회 구현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기반 ‘영유아기-학령기-청장년기-노년기-전주기’ 구분에 따라 10대 정책과제 24개 세부 이행과제 수립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등에도 불구하고 장애 특성상 다양한 수요를 공적 자원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

☞ 지역별·연령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조모임 등 민간 자원을 보충적·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하고 촘촘한 서비스 제공 필요

☞ 정부과 민간사이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키(key) 역할 수행 필요

- (추진경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 자원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문체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18.11.21)

- 파파스윌 사회적협동조합 등 현장 방문을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현장 의견 수렴(‘18.12.11)



## II. 현황 및 문제점

- ☞ 그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구성·운영, 이를 위한 정부지원도 부처별 분절적으로 수행
- ☞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여 안정화,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 발달장애인 자조모임과 사회적경제기업은 맵아기 상태

### □ 자조모임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복지관, 단체 등 기관 중심으로 형성,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자조모임이 활동 중
  - (당사자) 사회 참여적\* 또는 여가 문화적 성격의 자조모임 위주
    - \* (예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피플퍼스트’
  - (부모) 정부 재정지원을 토대로 형성·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온라인 맘카페 등을 통한 자생형 자조모임\*도 활동 중
    - \* (예시) 영유아발달장애 엄마모임 ‘무지개모임’
- (문제점) 생산적인 자조모임 유지를 위한 양질의 정보와 콘텐츠, 공간 등 체계적인 기반 구축은 미약한 상황

### □ 발달장애인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발달장애 서비스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은 66개(협동조합 17개, 사회적기업 49개)
  - \* 교육, 치료, 돌봄 및 주간활동, 직업재활 및 일자리, 심리치료/부모 교육 등
- 서비스 공급(종류, 양과 규모) 부족 해결, 비용절감 및 품질 향상, 교사 및 전문가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설립
- (문제점) 비전문가 위주 운영, 공간 확보의 어려움, 경영 노하우 미흡 등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에 애로
  - 또한 기존의 교육, 돌봄, 고용 등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발달장애인 부모 및 당사자(사회적경제기업)의 직접 참여\* 미흡
    - \* 방과후 돌봄, 상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동조합을 위탁하는 형태 등



## [참고] 국내·외 자조모임 사례

### (1) 미국

- 1974년에 설립된 'People First'를 비롯하여 800개 이상의 자기 옹호 그룹이 운영 중
- 1991년에는 전국 조직인 'Self-Advocates Becoming Empowered(SABE)'를 결성(Missouri People First Members&Advisors)
  - \*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재활부(California Department of Rehabilitation)에서는 자기옹호 훈련을 위한 비용을 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존재, '10년에는 자기옹호 훈련비용으로 7만 달러를 비영리조직에 제공

### (2) 일본

- 1989년 '전일본 손을 잡는 육성회(이하 '육성회')를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 활동 시작
  - \* 육성회에서는 매년 10~11월에 전국대회 개최, 수천명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지원자가 참여
- 일본 정부는 2004년부터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성화를 목표로 본인활동 지원사업 실시 중
  - \* 자조모임 당사자 간 회의 및 교류,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세미나 등 지원

### (3) 우리나라

- 2015년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자조단체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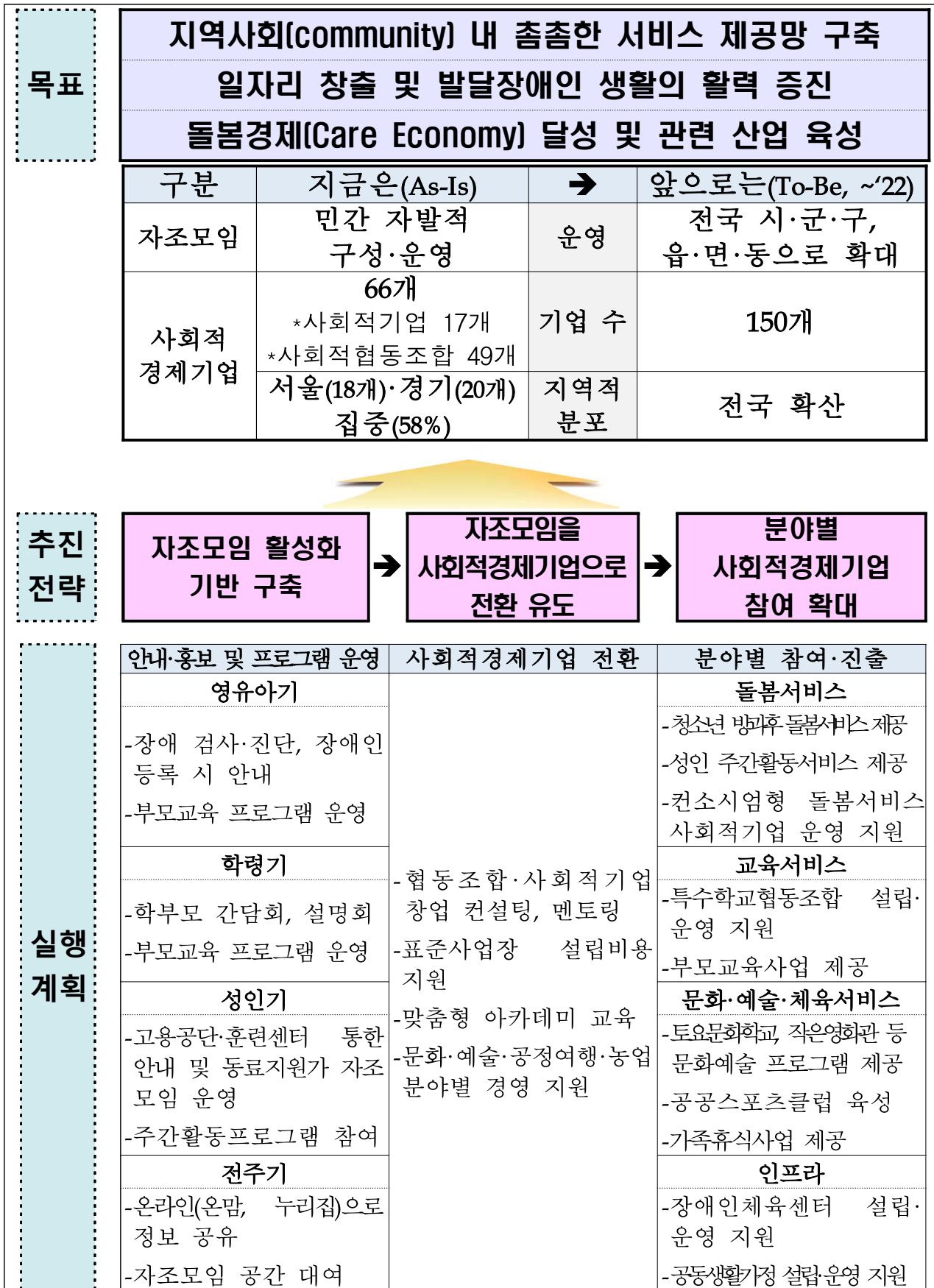
\* (제11조) 자조단체의 결성 등

-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 기관의 지원 하에 소규모 자조모임이 연대체를 구성하여 조직되는 경향



### Ⅲ. 목표 및 전략 체계도





## IV. 실행계획

### 1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1. 기존 자조모임에 참여 안내 및 홍보

□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 자조모임 안내 강화 (복지부)

○ (영유아기)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진단, 장애인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자조모임 안내

\* 발달장애인 부모 자조모임 홍보 및 안내

- (보건소) 영유아 발달이상 정밀검사 관련 기관 정보 및 자조모임 관련 안내문 제공
- (건강보험공단) 영유아 발달선별검사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가족에게 유선상담 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부모 자조모임 안내
-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등록 신청시 주민센터에서 자조모임 관련 안내문 제공

○ (학령기) (특수)학교 내 장애학생 교육적 지원을 위한 진단·평가, 선정·배치 시 학부모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 자조모임 안내\* (교육부)

\* 지역 내 발달장애인 부모 자조모임 조직 현황, 성격, 프로그램 등 안내

○ (성인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등을 통해 자조모임 모집공고·프로그램, 우수사례 등 안내 (고용부)

□ 온·오프라인 상시 정보공유를 통한 자조모임 안내

○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활용 상시 접근 가능한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운영 (교육부)

\* 장애학생의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교육 및 관련서비스 등 다양한 양육정보 제공([www.nise.go.kr/onmam](http://www.nise.go.kr/onmam))

- 장애학생 부모 양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자료, 부모 자조모임 정보 등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



- 장애학생 부모 자조모임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정보센터 운영으로 장애인생활체육동호회 클럽 및 생활체육 정보안내, 유선 상담 실시 (문체부)
-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 ‘누리집’) 지역별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 중인 클럽 정보(경기종목별, 장애유형별 등), 프로그램 및 대회 등 안내
- \*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 운영 중(<https://sports.koreanpc.kr>)이며,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1577-7976)’를 통해서도 정보 안내 가능

## 2. 새로운 자조모임 결성 촉진

###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한 자조모임 결성 지원 (복지부)

- 부모 자조모임의 활성화 위해 지역발달센터에서 발달장애인·부모 신규 자조모임 모집 공고\* 등 지원 강화
- \* 대표 홈페이지 : 비로소([www.broso.or.kr](http://www.broso.or.kr)) 활성화 통해 자조모임 홍보 및 신규 자조모임 모집, 자조모임 교육 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공 추진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사업\*과 부모 자조모임 연계 활성화
-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인 부모들의 자조모임 결성을 지원하고, 기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의 프로그램을 자조모임 프로그램과 연계
- \* 발달장애인법(제34조2항) 및 종합대책에 근거, '19년부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사업’ 추진 예정

### □ 특수교육지원센터\*(199개소)의 장애학생 가족지원 사업을 통한 부모 자조모임 결성 지원 (교육부, 고용부)

-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센터로,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교



또는 관할지역 관공서 내에 설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장애학생 부모 자조모임 지원 포함

[참고] '18년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인천) 장애학생 가족을 위한 책자 발간, 학부모 집단상담 지원, 여름방학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족 요리교실 등 특기적성지원
- (제주)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가족캠프 및 유·초·중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캠프 운영, 초등학교 입학예정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연수 등

- 지역 내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부모가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또는 강사로 참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애인고용공단 협업하여 운영·강사 pool 제공

### 3. 자조모임 활동공간 지원

- 부모 및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활동 공간 제공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와 주간활동·방과후돌봄 제공 기관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자조모임 공간 제공 (복지부)
- 자조모임을 결성한 장애학생 부모회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18년 199개소)나 특수학교('18년 176개교)에 모임 공간 제공 (교육부)
-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 구성원의 자조모임 지원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19년 13개소), 장애인고용공단지사(20개소)에서 자조모임 공간 제공 (고용부)



## 4. 자조모임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을 통한 부모 자조모임 지원 (복지부)
  - 발달장애인 부모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전문가 중심의 이론에서 벗어나 참여 위주 수요자 중심의 자조모임 프로그램 지원
  - 부모교육 프로그램\* 공동교육과정으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포함 및 부모교육 수행기관 선정 시 자조모임 프로그램 가점 부여
  - \*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성인권 교육으로 구성
- 시·도교육청 단위 장애학생 부모 자조모임 활동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 고려한 자조모임 프로그램 지원 (교육부)
  - 선정된 자조모임을 대상으로 연수 및 설명회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탐방,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 \* '20~'22년, 매년 5개 교육청 선정
  - 장애학생 부모 자조모임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의 주요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
  - 자조모임이 특수학교 및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프로그램으로 자조모임을 포함하여 다양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지원 (복지부)
  -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자조모임 결과보고를 통해 우수 사례 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바람직한 모델 확산 도모
  - \* 발달장애인·부모 자조모임 수기 공모 및 시상, 우수사례 발표 및 자료집 제작



< 주간활동 프로그램 예시 >

구분	내용
참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조모임</b> :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li> <li>•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li> <li>• 직장 탐방, 캠프, 여행</li> <li>•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li> <li>•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li> </ul>
창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조모임</b>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li> <li>•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li> <li>•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li> <li>•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li> <li>•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li> <li>•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li> <li>•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li> </ul>

□ 동료지원가(발달장애인)와 발달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직업생활 관련 자조모임 지원(고용부)

○ 직업체험, 발달장애인 고용 사업장 및 사회적기업 방문 등 직업 생활을 위한 자조모임활동\* 지원

\* 예 : 실제 사업장과 유사하게 구성된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내 직업체험관, 지원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장애인 현장훈련이 진행 중인 사업체 방문

□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을 통해 자조모임 문화교육 프로그램 참여 지원 및 발달장애인 전문 예술 활동 기회 제공 (문체부)

○ 지적, 자폐성 장애인 중심(450명)으로 5개 분야·총 45개 과목 운영

- ① 클래식 음악(현악기, 관악기) ② 무용(창작무용, 전통무용, 발리댄스 등)  
 ③ 미술(순수미술, 도예) ④ 실용음악(마칭밴드, 퓨전밴드, 우쿨렐레, 등)  
 ⑤ 전통음악 (향피리, 가야금, 아쟁) 및 전통공연 (사물놀이, 국악, 안동탈춤 등)

\* 주관 :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 ('18년 성과) 전국 14개 시·도내 문화예술학교 16개소 운영, 3,799회 교육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에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파견 (문체부)

사업명	사업구성	추진방안
생활체육교실	① 지체장애교실, ② 지적장애교실, ③ 청각장애교실, ④시각장애교실, ⑤ 혼합 및 기타유형교실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를 통해 교실 및 동호회 지원
생활체육동호회	생활체육종목 동호회 지원 (장애인 가맹종목, 국제대회 경기종목 등)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이 전국에 조성된 열린관광지\* 나눔 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문체부)

\*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시니어 등 신체적 사유로 관광활동에 제약이 있는 이들이 최소한의 관광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개선한 관광지('18년말 기준 누적 29개소)

- (참가대상) 관광취약계층(장애인, 시니어, 영·유아동반자 등, 1회당 20여명)
- (주관기관) 한국관광공사

- 발달장애인, 부모 등으로 구성된 농촌지역 공동체(10인 이상) 대상 체육활동, 마을가꾸기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농식품부)

-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공동체에 대해 사업 계획·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

\* 농촌 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 : 농촌주민 10~15명 이상 공동체(면단위)에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19년 : 장애인 참여 8곳)

\*\* (전북 완주 새힘원) 마을주민·장애인 공동체가 비즈공예, 클레이아트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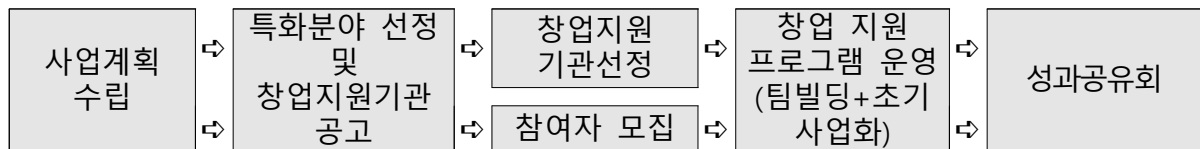


## 2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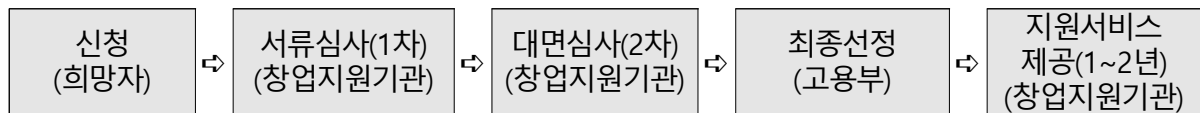
### 1.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부모 자조모임 등 대상으로 창업 프로세스 구축 및 초기 창업지원 (기재부, 고용부)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원하는 자조모임에 맞춤형 컨설팅, 장애인고용 친화적 기업(사회적기업)과 멘토링 등 지원

#### <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 추진절차 >



#### <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신청 절차 >



\* '18. 사회적기업 2,122개소 중 장애인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은 699개소(32.9%)

-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창업지원(5개소) (고용부)

- 시설·장비 구입비, 제품 및 기술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창업비용 지원**(최대 5천만원 한도)

\* 지원대상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여 3년 이내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을 사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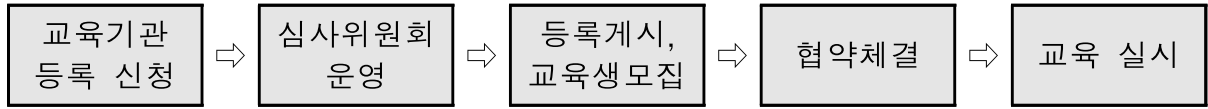
- 작업시설, 편의시설 비용,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등 최대 10억원 한도(장애인 1인당 3천만원 지원) 내에서 설립·운영비 지원

- 판로 및 운영지원을 위해 최초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그 다음 2년간 50%를 면제하고, 공공기관에게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의무 부과(0.3%)



-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를 통해 발달장애인 협동조합 창업을 위한 특화교육 추진 (기재부)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추진 절차>



-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전문상시상담기관\* 운영 및 경영코칭\*\*을 활용하여 운영에 필요한 역량 강화(기재부, 고용부)

\* 법무, 회계·세무, 인사·노무 관련 상시 질의·답변 가능한 게시판 운영

\*\* 성장단계별 현안 진단,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하여 컨설팅

## 2. 분야별 맞춤형 경영 지원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경영 지원 확대 (문체부)

-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등까지 경영지원 대상 확대\*

\* '18년 10억원 → '19년 39억원

- (단계별 지원)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초기·성장·성숙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추진

###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내용 】





##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활동 및 지원사례 】

※ (드림워드앙상블) 국내 최초('15년) 발달장애인 클라리넷앙상블로 연주 및 강연, 장애 인식 개선, 연주 재능기부 등을 수행, '17년 재원조성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 매출액 및 기부·후원 모금액 증가

### □ 공정여행\* 특화형 사회적경제 창업 육성지원 (문체부)

\*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등한 관계를 맺는 공정무역(fair trade)에서 따온 개념으로, 현지의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지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여행을 의미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고용부)' 연계를 통해 공정여행 분야 창업 및 관광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 유도·지원

\* ('19년 특화분야) 공정여행 분야 / (창업지원기관)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 (전문멘토) 트레블러스맵 활동가

### □ 발달장애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 지원 (농식품부)

○ 발달장애인이 농업 기술과 공동체 활동을 익힐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농장 확산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농업 직업훈련 기회 확대('19, 18개 → '22, 70개)

- 사회적 농장 선정 시 발달장애인이 사업주체이거나 사업대상인 경우 가점 부여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추진('20~)

- 사회적 농업 :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고용 등을 제공하는 농업활동('19: 18개소)
- '18년도 사회적농장 4개소가 발달장애아동 및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업 체험, 농업 직업교육 등 실시
- (전북 완주) 발달장애아동 가족과 고령농업인이 멘토·멘티가 되어 채소를 재배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 수행, 판매 수익금을 기반으로 협동조합 설립 구상 중



### ③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 1.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공급

#####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복지부)

-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참여 확대 추진

\* 19년 7월 도입하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관련 제공 기관 및 협력기관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중

#####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복지부)

-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

\* 시·군·구청으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의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연계(계약 체결 등)하여 이용자에게 체육, 미술, 음악이나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협력기관

※ (협력기관 예시)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민간 학원(음악, 미술 등), 체육관/주민체육 시설(수영, 검도, 태권도, 볼링, 헬스 등), 각종 체험교실, 공방(요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평생교육센터, 진로교육센터, 직업체험장, 치료·감각통합센터, 카페, 레스토랑 등

##### ☐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컨소시엄형 사회적기업 지원 (고용부)

- 발달장애인에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사업비 지원(3억 한도)

#### 2. 발달장애인 교육 서비스 공급

#####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강화 (복지부)

-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이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 (우수사례) 파파스윌(Papaswill) : 발달장애인 부모 자조모임에서 시작하여 발달장애인 부모, 특수교사,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가들과 함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주요사업으로 **직업재활사업, 당사자 자조모임지원** 등 수행

□ 특수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등 **특수교육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교육부)

○ 장애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특수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국가평생교육진흥원)와 연계하여 학교 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교육 콘텐츠 보급, 연수 및 컨설팅 지원 등)

-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특수학교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여 밀접한 지원·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육청 역할 확대

○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내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사례 공유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참고] 특수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사례

- (밀알학교) 발달장애인 등의 사회적응 및 취업훈련을 위해 직무중심의 현장실습형 매점 사업 및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마켓 사업 추진('18.3.~)
- (새솔학교) 장애학생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새솔학교 지점인 '하울림' 카페를 김포교육지원청 내에 운영하여 카페 운영 및 물품 판매('18.3.~)

□ 동료지원가(장애인)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 등 경제활동 참여 유도(고용부)

○ 동료상담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취업 정보 제공\*('19년 9,600명)

\* 자치단체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 장애인 유관기관('19년),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20년)을 수행기관으로 선정



### 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체육 서비스 공급

#### □ 사회적경제기업의 문화·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문체부)

##### ○ (독서문화 프로그램) 인지·행동 특성에 전문성을 갖춘 발달장애 사회적경제기업 프로그램 위탁 기회 제공

- 전국 공공도서관 및 발달장애인 복지시설과 연계, 「장애인(시각·청각·발달·지체 등) 독서문화프로그램」 위탁 사업자 선정에 참여

\* (예시) 함께 읽고 생각 나누기, 글쓰기, 지역도서관 견학, 독서문학기행 등

##### ○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유도

\* 공모를 통해 '18년 총 825개 중 사회적경제 조직 72개(8.7% 포함) 선정

##### ○ (작은영화관 확충) 극장 부재 지역 대상 소규모 상설 영화관 (100석 내외) 건립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기회 확대

\* ('17년) 32개소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작은영화관은 22개소 (68.8%)

※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기초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작은영화관을 개설, 문화소외계층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지역간 문화불균형 해소

- '19년 지체장애인과 가족들이 편안하게 영화 관람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장애인 전용 '동행영화관(1개소)' 설립 예정

##### ○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지원 및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근거 마련

- 지역단위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지원센터 개념의 비영리법인 76개('18년 기준) 선정·지원\*(선정→법인설립→3년간 연 2~3억원 지원)

\* '22년까지 '1시군구 1스포츠클럽' 완성 목표(232개 클럽 육성)



- 지자체 생활체육시설의 **스포츠클럽**(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위탁\*** 등이 포함된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 추진

\* 272개 체육 시설 중 스포츠클럽 위탁 시설은 106개(39%) 수준, '17년 기준


- (가족휴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휴식 지원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수행기관으로써 참여 활성화 유도 (복지부)**

\* 힐링캠프(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19년 11,030명 지원

## 4. 인프라 공급

- 생활 SOC 운영 주체로 발달장애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 확대 (문체부)

- 장애인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 등 시설운영 주체에 사회적 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예 시>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센터 “반다비체육센터”	
	○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 체육시설로서 지역 맞춤형 모델 선택
	○ 목표 : 총 150개소 / '19년~'23년 매년 30개소 신규 조성
	○ 유형 :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모델 중 지역수요 맞춤 설계

-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생활가정 등 관련 사회복지 시설의 설립·운영의 주요주체로 참여토록 지원 강화\* (복지부)

\* 그룹홈 설립·운영, 그룹홈 우수사례 공유 등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

- 공동생활가정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9~)

\* 적정 이용 인원 설정 및 의료 특화 공동생활가정 도입 등 유형 다양화 연구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19년 25천명),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제공주체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하도록 사업시행 시 적극 안내



## V. 과제별 추진 일정

정 책 과 제 명 (33개)	추진일정	주관부처
<b>1.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b>		
<b>1-1. 기존 자조모임에 참여 안내 및 홍보</b>		
1-1-1.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 자조모임 안내 강화	‘19~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1-1-2. 온·오프라인 상시 정보공유를 통한 자조모임 안내	‘19~	교육부, 문체부
<b>1-2. 새로운 자조모임 결성 촉진</b>		
1-2-1.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한 자조모임 결성 지원	‘19.上~	복지부
1-2-2.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학생 가족지원	‘19~	교육부, 고용부
<b>1-3. 자조모임 활동공간 지원</b>		
1-3-1.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주간활동·방과후 돌봄 제공기관에서 공간 대여	‘19~	복지부
1-3-2.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특수학교에 모임 공간 제공	‘20~	교육부
1-3-3.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공간 제공	‘19~	고용부
<b>1-4. 자조모임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b>		
1-4-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을 통한 부모 자조모임 지원	‘19~	복지부
1-4-2. 시·도교육청 단위 장애학생 부모 자조모임 활동 공모	‘20~	교육부
1-4-3.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주간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	‘19.3~	복지부
1-4-4. 발달장애인 직업생활 관련 자조모임 지원	‘19~	고용부
1-4-5. 문화예술 교육 과정에 발달장애 자조모임 참여 유도	‘19~	문체부
1-4-6.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체육활동 지원	‘19~	문체부
1-4-7. 열린관광지 나눔여행 참여 기회 제공	‘19~	문체부, 고용부
1-4-8. 농촌지역 발달장애인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19.下~	농식품부
<b>2.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b>		
<b>2-1.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b>		
2-1-1. 발달장애인 부모 자조모임 등 대상으로 협동조합 창업 프로세스 구축 및 초기 창업지원	‘19~	기재부, 고용부
2-1-2.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법인세·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등 지원	‘19~	고용부



정 책 과 제 명 (33개)	추진일정	주관부처
2-1-3.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를 통해 발달장애인 협동조합 창업을 위한 특화교육 추진	'19~	기재부
2-1-4. 전문상시상담기관 운영 및 경영코칭을 활용하여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역량 강화	'19~	기재부, 고용부
<b>2-2. 분야별 맞춤형 경영 지원</b>		
2-2-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경영 지원 확대	'19~	문체부
2-2-2. 공정여행 특화형 사회적경제 창업 육성지원	'19~	문체부
2-2-3. 발달장애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 지원	'19.下~	농식품부
<b>3.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b>		
<b>3-1.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공급</b>		
3-1-1.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19.7~	복지부
3-1-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19.3~	복지부
3-1-3.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컨소시엄형 사회적기업 지원	'19~	고용부
<b>3-2. 발달장애인 교육 서비스 공급</b>		
3-2-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강화	'19~	복지부
3-2-2. 특수교육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	'20~	교육부
3-2-3. 동료지원가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9~	고용부
<b>3-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체육 서비스 공급</b>		
3-3-1.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위탁 기회 제공	'19~	문체부
3-3-2. 토요문화학교 등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공모에 참여 유도	'19~	문체부
3-3-3. 소규모 상설 영화관 건립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19~	문체부
3-3-4.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설립 지원 및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근거 마련	'19~	문체부
3-3-5. 가족휴식 지원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활성화 유도	'19~	복지부
<b>3-4. 인프라 공급</b>		
3-4-1. 생활 SOC 운영 주체로 발달장애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 확대	'19~	문체부
3-4-2. 공동생활가정 등 사회복지시설 설립·운영의 주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19~	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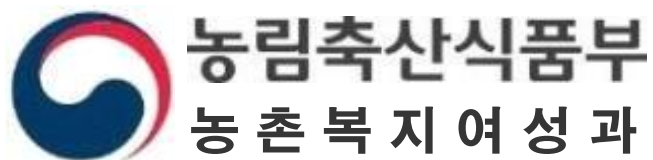


---

# 사회적 농업 추진전략(요약본)

---

2019. 3.









---

# 사회적 농업 추진전략(요약본)

---

2019. 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농촌의 산업구조가 다각화되고 농촌인구가 다양해지면서 농업·농촌의 가치 재조명
  -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인의 지속적 유입으로 농촌에서의 새로운 활동 가능성 증대
    - \* 귀농귀촌가구: ('13) 291,040호 → ('15) 329,368 → ('17) 346,759
  - 농촌에서는 농업 생산활동 외에도 자연 경관, 전통문화, 공동체 등 농촌다움을 활용한 관광·융복합산업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
    -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073개소, 관광농원 655, 융복합산업인증 1,397('17년)
  - 장애학생 대상 농업 체험교육, 고령영세농업인과 연대한 공동 생산·가공 등 농업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 해외에서는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
  - 이탈리아는 '70년대 이후 사회적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 농업이 활발하고, 정부기관 간 협력을 위한 사회적 농업법 제정('15)
  - 네덜란드는 정부에서 농장에 돌봄 비용을 지불하는 돌봄농업이 활성화, 일본은 장애인의 농장 취업을 지원하는 농복연계 정책\*을 추진
    - \*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이 협력하여 농장에 시설·교육·기술·인력 등 지원
- 농촌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18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을 비롯한 정책 추진
  - \* 국정과제 81-3.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 농업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농장(9개소)에 운영 및 네트워크비 지원(국비 378백만원)
    - 복지·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등을 농업활동에 참여시켜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



## &lt; 사업 개요 &gt;

- ◆ 사회적 농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통합과 자립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활동
- ◆ '18년부터 사회적 농장을 선정하여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비를 지원(개소당 6천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 (네트워크) 사회적 농업이 농업과 복지의 융복합적인 영역임을 고려할 때 기관 간의 협력 관계 형성이 필수

- 사회적 농업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구성·평가, 인적·물적 자원 확보 등을 위해 복지기관 등 지역사회 협력망의 중요성 재확인
- 각 농장 활동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농장 간 상호 정보 교환 및 체계적인 홍보 활동 필요

□ (교육)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적 농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필요

- 지역 여건·대상자·분야에 따라 사회적 농업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농장별로 선도 농가의 멘토링이 효과적
- 농업인은 대상자(장애인·범죄피해자)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며, 복지·교육기관에도 농업의 특성에 대한 교육 필요

□ (운영) 사회적 농업 활동 지속을 위한 경영 및 인프라 보완 필요

- 농업 경영과 사회적 농업의 비중 조절 및 생산품 판매 지원 필요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농장 주변 시설 보완과 인력 확보 중요
- 장기적으로는 복지제도 연계 등 제도적 지원 바람직

\* 네덜란드는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적 농장에 돌봄서비스 비용 지불



## 비전

“사회적 농업을 통해 함께 사는 따뜻한 농촌 실현”

## 목표

-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 확대
- ▶ 농촌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
- ▶ 농업계 내외에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연차별  
주요과제

기반조성('19~'20)	도약('21~'22)	확산('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농장 확대 ('19: 18개소→'20: 30)</li> <li>▲ 온라인 플랫폼 구축('19)</li> <li>▲ 성과지표 개발('19)</li> <li>▲ 지원센터 설치('20)</li> <li>▲ 법적 기반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농장 확대 ('21: 50개소→'22: 70)</li> <li>▲ 분야별 거점농장 운영</li> <li>▲ 사회적 농업 교육·홍보 지속 확대</li> <li>▲ 돌봄공동체 조성(~'2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농장 확대 ('23: 100개소)</li> <li>▲ 등록제 도입('23~)</li> <li>▲ 공공기관 구매 추진</li> <li>▲ 커뮤니티 케어 등 복지제도 연계 추진</li> </ul>

분야별  
주요과제

## 1. 인지도 제고

- 온라인 채널 홍보, 농업인·지자체 대상 교육

## 2. 사회적 농장의 체계적 육성

- 예비 사회적 농장 및 거점농장 도입, 역량 강화, 등록제 도입

## 3.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 사회적 농업 사업비 지원, (가칭)돌봄공동체 조성, 제도적 지원

## 4. 생산물 판매 지원

- 로컬푸드 연계, 사회적 농업 생산물 홍보 및 구매 활성화

## 5.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네트워크 지원 및 체계 구축, 사회적 농업 협의체 확대

## 6. 제도적 기반 구축

- 사회적 농업 연구 추진, 법적 근거 마련, 지원센터 설치



---

## 1. 인지도 제고

---

□ 사회적 농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잠재적 구매자 확대를 위해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사회적 농업의 가치 전파

○ 농식품블로그기자단을 활용하여 사회적 농업 온라인 플랫폼\*에 사회적 농장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소개

- 대한민국 농식품 미래기획단(YAFF)\*\*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 추진

\* 사회적 농업 정책·사례 소개, 생산품 홍보·판매 지원 플랫폼(10월 구축 예정)

\*\* 농식품 취업정보 공유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6,895명)

○ 소비자단체가 사회적 농업을 이해하고 사회적 농장과 교류하며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 활동 지원

\* 사회적 농장 방문 및 사회적경제박람회(7월, 광주) 견학 추진

□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인을 사회적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공무원의 이해도 제고

○ 다양한 재능을 가진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의 사회적경제 교육을 신설하고 사회적 농업 활동 소개

\* 귀농귀촌 종합센터 교육 과정(67개) 內 사회적경제 의무 과목 편성 추진

\*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 농업인 국외훈련사업을 통해 농업인 교육 추진

○ 귀농·귀촌인이 자원봉사자·협력농가가 될 수 있도록 귀농귀촌 박람회를 통해 사회적 농업을 보람있는 농촌생활 아이템으로 홍보

○ 현장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 ‘사회적 농업과 공동체활성화 과정’ 운영(8월, 교육원), 중앙·지방공무원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에 사회적 농업의 이해 포함(‘18, 중공교)

\* 일본 교토부는 청사에서 사회적 농업 마켓을 정기 개최하는 등 지자체 지원 활발

-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일본 등 선진지 견학 추진(연2회)



---

## 2. 사회적 농장의 체계적 육성

---

□ 사회적 농업 활동에 진입하려는 농장을 사회적 농장으로 육성하는 ‘예비 사회적 농장’ 제도 도입

○ 사회적 농업 사업 참여의지가 있는 농업법인 등\*을 예비 사회적 농장으로 분류하여 정책사업 관련 정보 제공

\*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곳(지자체에서 농촌지역 소재, 중복지원 등 적격요건 검토)

○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실제 사회적 농장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행사·공모 사업 등 참여 안내

\* 기획공모·교육원 교육, 사회적경제 박람회, 사회적 농업 사업 공모, 토론회 등

□ 분야별 거점 농장을 지정하여 사회적 농장에 대한 교육·네트워크 중심 기관으로 운영(‘20년 5개소)

○ 거점 농장은 (예비)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 현장 교육 및 인근 농가에 사회적 농업 활동을 확산하는 역할 수행

\* 사회적 농업 인력 육성에 대한 교육비 및 전담인력인 전문매니저 비용 지원 추진(예산 확보 필요), 경영공시 의무 부여

○ 거점 농장과 네트워크를 맺은 복지·교육·보건 기관 등과 신규 사회적 농업 활동 희망 농장들 간에 연결망 형성

\* 일본 교토부는 지역별 거점농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장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 '20년도에는 1차적으로 '18년도 시범사업자 중 분야·지역을 고려하여 지정

□ 농가의 사회적 농업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등록제를 도입하여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농장 확산

○ 거점 농장을 중심으로 분야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참여자(사회적 약자)의 장애·대응방법 등에 대한 이해 제고, 운영 사례를 공유

\* 사회적 농업 사업비 및 상향식 학습조직 지원사업 활용하여 세미나 개최



○ 사회적 농업 해외 연수를 통해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사회적 농장 간 유대 강화 추진

\* 1년차 사업자: 하반기 일본, 2년차 사업자: 상반기 유럽(사회적 농업 사업비 활용)

○ 사회적 농업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각 농장의 사회적 농업 방향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 지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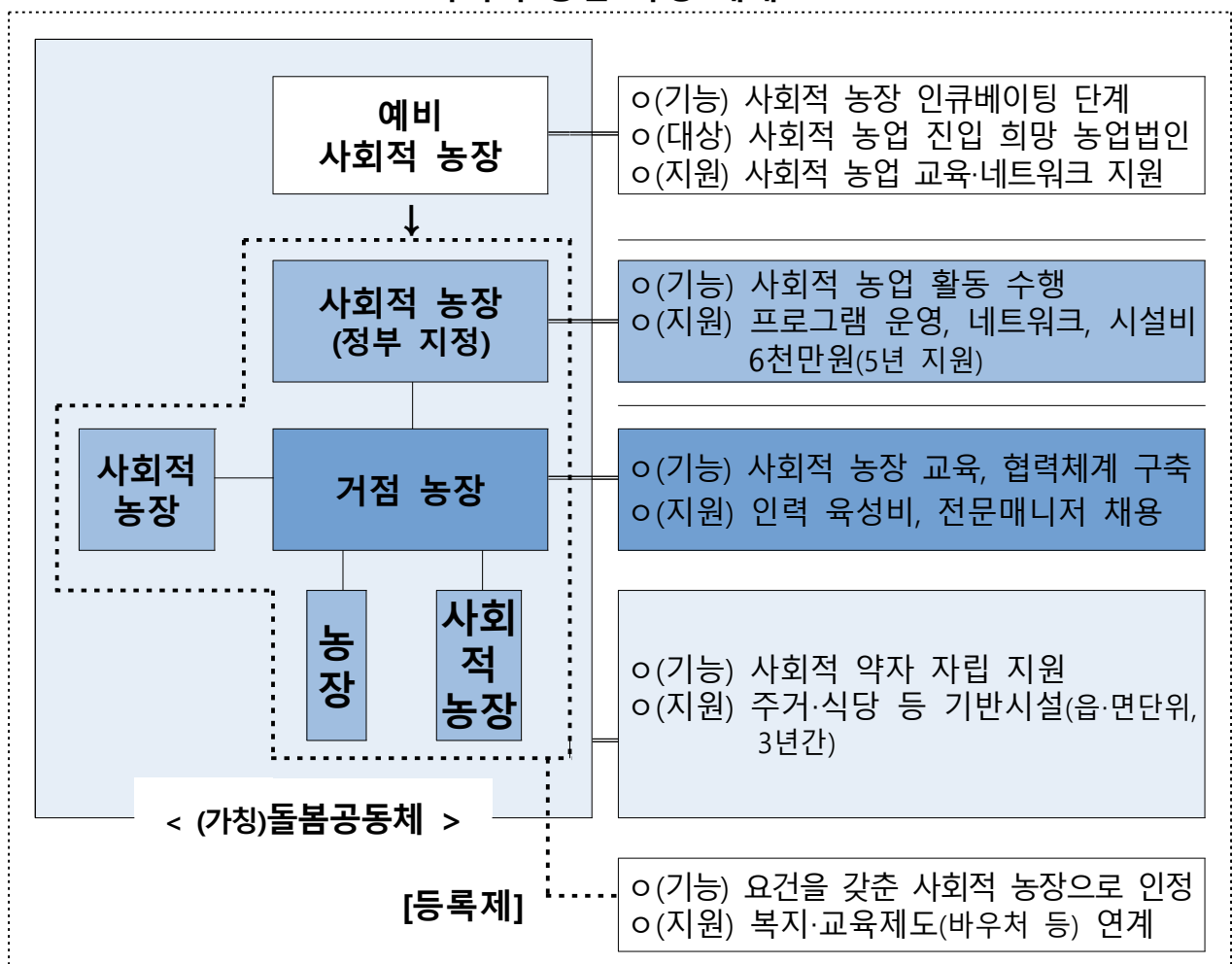
\* 컨설팅이 필요한 농장이 사업비를 활용하여 전문가 컨설팅 이용

○ 향후 사회적 농장의 구체적인 요건 마련 후 등록제를 도입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사회적 농장 확산 추진('23~)

\* 사회적 농장 개소수 확대를 위해 인증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등록제로 추진

\*\* 등록처는 지자체 또는 민간 협회 등에 위탁하는 방안 검토(네덜란드는 농업부와 사회적농업협회가 인증 기준을 만들고, 협회에서 인증 심사 주관)

< 사회적 농업 육성 체계도 >





### 3.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 사회적 농장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에 대해 **사업비 등 지원**
  - '18년 시범사업(9개소)을 시작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개선비 **지원 대상 확대**(개소당 6천만원, '19: 18개소 → '22: 70)
  - 사회적 농장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전문분야**(회계·세무) **바우처 운영 및 인건비 지원사업\*** 연계('19)
    - \*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경영인력과)
  - **지역의 유희시설**을 사회적 농장이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연계 추진('19)
    - \* 농촌 유희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 정보(RAISE) 활용
- 사회적 농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가 농촌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칭)돌봄공동체 조성**('20년 9개소 추진)
  -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농업 활동과 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시설, 농장, 식당, 직매장, 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 지원**
    - \* 홍성·임실·청송의 경우, 사회적 농업을 통해 마을에 정착하려 할 때 주거시설 및 식당 부족 등 지역 환경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 지역 내 사회적 약자 수, 기반시설 및 전문기관 현황 등을 파악하는 **지역조사 및 해외사례 조사 추진**(2월, 지자체·도연구원)
    - \* 네덜란드 호그벡: 치매환자·의사·봉사자가 함께 거주하며 농업 등 일상생활 영위
- **장기적으로는 복지·고용 등이 연계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농업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
  - 등록된 농장의 사회적 농업 활동은 복지·교육·고용 등의 영역에서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 필요**
  - 정책연구('19)를 통해 관련 **복지제도 분석 및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삶의질위원회 분과위** 등을 통해 논의 추진
    - \* 벨기에는 '17년부터 사회적 농장에서도 장애인 수당을 활용 가능



---

## 4. 생산품 판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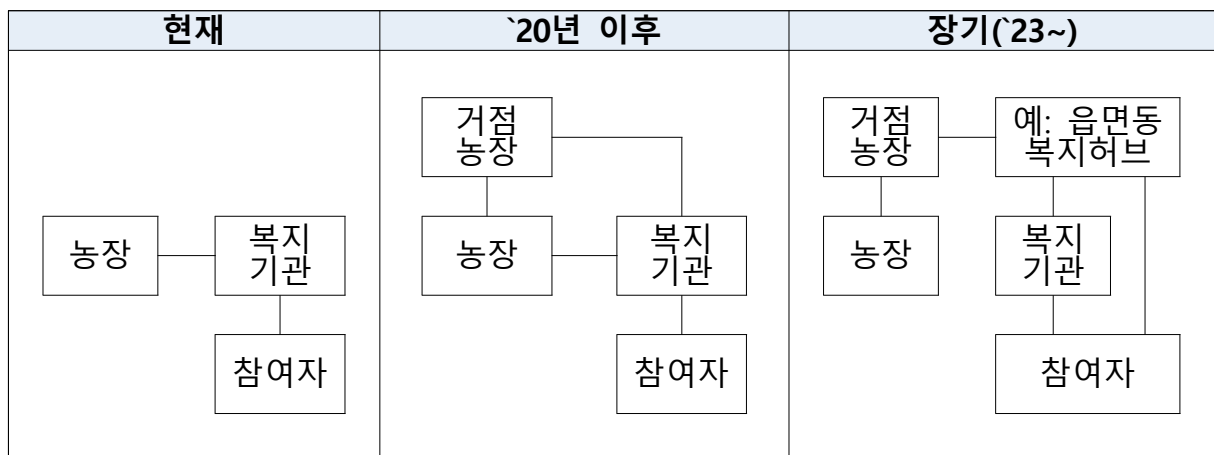
---

- 사회적 농업 생산물이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아동센터, 공공 급식 등을 통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유도
    - 먹거리 선순환체계 내에 사회적 농장이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
      - 지역 푸드플랜 수립 시 사회적 농장이 생산자에 포함되도록 사업 지침 개정('20,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
    - 대상자(사회적 약자)들이 속한 복지관, 학교 등에서 소비할 농산물을 사회적 농장이 기획 생산하는 경우 사회적 농장 선정 시 가점 부여('20)
  - 사회적 농업의 가치 전파와 생산품 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추진
    - 사회적 농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농장의 생산품을 홍보하고 판매 사이트와 연결(10월, 플랫폼 구축)
      - 생산에 참여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개와 사회적 농업 활동 취지를 설명하여 스토리와 상품을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
    - 공영홈쇼핑 중간광고, 사회적 농업 생산품에 대한 클라우드 펀딩, 사회적 농장의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홍보 방안 추진
    - 우리부·유관기관 행사를 활용하여 사회적 농업 생산품 홍보
      - 박람회·시상식 등 행사에서 사회적 농업 생산품을 기념품·상패로 활용하고, 우리부의 명절 선물세트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
      -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을 의무화한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법(안)\* 지원 대상에 사회적 농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노동부)
-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계류중



## 5.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주민·복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네트워크 구성원 간에 사회적 농업 활동 시 협력하고, 기타 지역 사회 문제 논의 및 생산품의 상호 구매·판매가 이루어지는 장 마련
    - \* '18년도 사업자들은 각 지역별 사회적 농업 협의체를 자체 구성하여 운영 중
  -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및 가족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하여 사회적 농장의 신뢰도 제고
    - \* 지자체(시·군)의 사업 이행점검 시 사회적 약자의 의견 청취 포함(반기별)
  - 장기적으로 사회적 농장과 참여 희망자 간 원활한 매칭을 위해 지자체 복지 분야와 농장 간 연결 체계 구축 추진(복지부·행안부 협의 필요)



- 사회적 농장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국 사회적 농업 협의체 운영 개편
  - 전국 사회적 농장 분포를 고려하여 논의의 밀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역별로 회의 운영(4월~, 월 1회)
  - 지자체, 농식품 유관기관 및 지역 대학 등이 사회적 농장과의 교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체 참여 안내
    - \* 농어촌공사·aT 등 유관기관 지원 사업 연계 및 대학 사회복지 전공자 등의 유입 유도



---

## 6. 제도적 기반 구축

---

### □ 제도 개선 및 홍보에 활용할 사회적 농업 관련 연구 지속 추진

- 사회적 농업 성과 연구를 통해 성과 지표를 개발하여 사회적 농업 성과 관리·분석에 활용('18~'19, 농진청·농정연구센터)

\* 농업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효과를 분석하여 홍보에 활용(농진청)

- 각 농장이 활동 내용, 참여자의 변화·성취 등을 기록하도록 하여 이를 효과 분석, 홍보 등에 활용

\* 사회적 농업의 효과는 계량이 어렵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기록이 중요

- 농장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를 장애인 분야까지 확대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도 일하기 쉬운 농작업환경 조성

\* 성별·연령·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제품·환경 디자인

### □ 사회적 농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적 지원의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18.12월 발의된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 대응(서삼석의원안)

\* 주요 내용: 사회적 농업 정의, 정부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등

- 농업계, 농업·복지전문가, 언론 등과의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농업의 중요성과 근거법의 필요성을 공론화

### □ 사회적 농장의 홍보·컨설팅 등 사업을 지원할 지원센터 설치('20)

- (예비)사회적 농장 관리,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회적 농업 정책 발전 지원

- 사회적 농장에 대해 정책사업 안내, 네트워크 형성, 홍보, 판로 확보를 위한 경영·판매 컨설팅 등을 지원

\* 기존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농어촌공사)의 역할을 농업·농촌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지원 기능으로 확대







##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2019. 4.

복권위원회사무처







##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2019. 4.

복권위원회사무처



## 순 서

I. 복권기금 운용 현황 및 개편 필요성 .....	333
------------------------------	-----

II. 복권기금 개편방안 .....	335
---------------------	-----

1. 복권위원회 구성·운영 개편 .....	335
-------------------------	-----

2. 복권기금 사업 신청·선정 기준 개편 .....	336
------------------------------	-----

3.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 개편 .....	337
--------------------------	-----

4. 복권기금 사업의 국민 소통 및 투명성 강화 ....	338
---------------------------------	-----

III. 향후 추진계획 .....	339
--------------------	-----

### 【참고】

1. 복권기금에 적용하는 사회적 가치 .....	340
----------------------------	-----

2.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 개편(안) .....	341
-----------------------------	-----



## I. 복권기금 운용 현황 및 개편 필요성

□ (복권기금 현황) 복권판매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 설치

○ 조성 재원 : 복권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운용 수익 등

○ 배분 및 용도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법정 배분사업(10개 기관) 및 제23조제3항에 의한 공익사업\*

\* 복권법상 공익사업 : ①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②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③ 국가유공자 복지 ④ 문화예술진흥 등

○ 사업계획 수립 : 복권위원회(총 21명) 심의·의결

○ 지원사업 현황 : '19년 복권기금 지원사업비는 총 2조 1,857 억원으로 저소득·소외계층 지원을 지속 확대

< 복권기금 지원사업 현황 >

(단위: 억원, %)

	'04~'10	'11	'12	'13	'14	'15	'16	'17	'18	'19계획
총규모	67,218	12,022	12,723	14,620	15,499	16,257	16,671	17,328	18,972	21,857
법정배분사업	18,512	3,580	4,259	5,233	5,433	5,392	5,367	5,780	6,415	7,206
공익사업	48,706	8,442	8,464	9,387	10,066	10,865	11,304	11,548	12,557	14,651

□ (개편 필요성) 복권기금이 사회적 가치 사업을 적극 지원 할 수 있도록 복권기금 운용체계 개편 필요

○ 양극화,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권 기금이 사회적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행하는 기반 마련 추진

□ (추진 경과) 사회적 가치 창출 TF\* 운영('18.5~)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개편방안 마련

\* TF 구성 :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4명(BH 사회적경제비서관실, 복권위)

\*\*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 연구: 동국대 오영민 교수('18.6~10)



## 참고

## 복권기금 사회적 가치 활성화 목표 및 발전전략

◇ 복권기금이 사회적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복권기금 개편방안 마련 및 시행 추진

###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통한 국민 복지 증진

#### 목표

사회적 가치 사업의 활성화 및 대국민 투명성 제고

#### 추진 전략

사회적 가치 사업  
확대를 위한  
복권위 및 사업부처  
역할 강화

다양한 의견수렴 및  
대국민 정보공개에 위한  
인프라 구축

#### 정책 과제

복권위원회 운영개편

균형인사 및 추천경로 다양화

사회적 가치 사업 발굴

사업 신청지침 및 신청서 개편

성과평가체계 개편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등 신설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 추진 체계

복권위원회 및 기금사업주체의 사회적 가치  
사업 실현 선도

민간부분(민간 전문가, 국민 등)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인프라 조성



## Ⅱ. 복권기금 개편방안

### 1. 복권위원회 구성·운영 개편

#### 1 현황

□ (구성) 총 21인{(위원장: 기재부 2차관), 민간위원 11인, 정부위원 9인}

< 분야별·성별·지역별 민간위원 현황 >

성별		지역별		분야별(자격요건별)			
남성	여성	수도권	비수도권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기타
5명 (45%)	6명 (55%)	10명 (91%)	1명 (9%)	2명 (18%)	5명 (45%)	3명 (27%)	1명 (9%)

#### 2 개편방안

◇ 복권위 의사결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민간위원을 성별·지역별·분야별로 균형 있게 구성(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지침 준수)

□ 복권위 정책결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

- (성별) 특정성별이 위촉직 민간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여성참여율 40%이상 준수)
- (지역별) 지역주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비수도권 위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인사를 균형 있게 포함하기 위해 노력
- (분야별) 특정 직업군이 위촉위원의 25%를 넘지 않도록 하고 복지단체 등 다양한 현장전문가 적극 위촉 노력



## 2. 복권기금 사업 신청·선정 기준 개편

### 1 현황

- (사업부처 신청) 사업부처는 매년 3.31일까지 차년도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복권위에 제출

\* 복권위는 사용신청서 양식을 매년초 사용신청지침에 포함, 부처에 통보

- (복권위 심의·조정) 복권위는 신청 사업에 대해 심의·조정하여 차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 5.31일까지 예산실 제출

### 2 개편방안

- ◇ 사업부처가 사회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신청하도록 「복권기금 사용 신청서」를 개편
- ◇ 복권위가 사회적 가치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복권기금 사용신청지침」을 개편

- (사용 신청서) 각 사업부처가 사회적 가치 사업을 적극 발굴·신청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복권기금 사용 신청서」를 개편

- 사업부처가 복권위에 제출하는 “사용 신청서”에 사회적 가치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내용 추가

- \* ① 내용 : 사업목적 등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② 절차 : 참여, 공유, 윤리 등 사회적 가치의 절차를 통해 추진하도록 유도  
③ 대상 : 사업의 수혜자를 사회적 가치 대상자(사회·경제적 약자)로 선정

- (사용신청지침) 각 사업부처가 신청하는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지원 할 수 있도록

- 복권위가 사업부처에 제시하는 「복권기금 사용신청지침」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업의 우선 지원 원칙 제시



### 3.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 개편

#### 1 현황

- 복권위는 매년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1~3월)
  -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복권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 2 개편방안

◇ 복권기금사업이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복권기금 성과평가 편람」 개편

-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등 복권기금의 취지 및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을 더욱 유도하기 위하여 성과지표 개편
  - (성과) “성과목표의 타당성” 지표를 신설(2점)하고, 사업 내용 및 대상 측면의 사회적 가치 반영 정도를 평가
  - (환류/홍보) 참여·공개 등 사업 절차 측면의 사회적 가치 반영 여부를 평가

<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편람 개편안 >

부문	현행 (A)	개편 (B)	증감 (B-A)	비고	사회적 가치	
집행	25	25	-		내용	안전·인권, 노동·일자리, 보건·복지, 상생·책임, 지역균형, 환경·재생 등
성과	50	50	-			
- 성과목표의 타당성	-	2	2	신설		
- 성과지표의 타당성	5	5	-		대상	보훈·유공자,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5	5	-			
- 성과지표치의 연간목표치달성 정도	40	38	△2			
환류	25	25	-		절차	참여·공개, 공유·협력, 공평·윤리
가점1(홍보실적)	+2	+2	-	평가내용 추가		
가점2(신규사업 발굴노력)	+2	+2	-			



## 4. 복권기금 사업의 국민 소통 및 투명성 강화

### 1 현 황

- 복권위원회 홈페이지(www.bokgwon.go.kr)를 통해 복권기금 지원 사업의 개요, 주요사업 사례 및 연간 집행액 정도만 제공 중
  - 일반 국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별 세부내용(지원요건, 대상자 등), 신청방법 및 사업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2 개편방안

◇ 홈페이지를 통해 복권기금사업의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세부 사업내용을 제공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운용 현황 및 운용 성과를 공개해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 일반국민이 복권기금 사업을 ① 쉽게 찾아서, ② 내용과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③ 성과까지 알 수 있도록 개편
  - ① 사업검색 기능 신설 : 사업별 정책 대상자(저소득층, 장애인 등)가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 추가
    - 생애주기(영유아, 아동, 노년 등), 가구상황(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등), 주제(주거, 문화, 서민금융 등)별 사업 검색
  - ② 사업별 상세정보 제공 : 지원사업에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상세 안내
    - 사업별 선정·집행 관련 자료 및 사업지침 등도 함께 공개
  - ③ 운용현황·성과 공개 : 사업별 월별·일별 집행실적\*과 연간 성과평가 결과 공개

\* ‘열린재정’ 사이트(기재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집행정보 연계



### Ⅲ. 향후 추진계획

□ 개선방안에 포함된 세부 추진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

- ① (복권위 구성·운영 개편) 향후 신규위원 선임 시 반영(상시)
- ② (사업 신청·선정기준 개편) 복권기금 사용신청지침 개정 및 부처 통보('19.2.14. 완료)
- ③ (사업 성과평가 개편) 복권기금 성과평가 편람 개정 및 부처 통보('~19.10월)
- ④ (홈페이지 개편) 개편안에 대한 기금사업 집행부처 협의 등을 통해 '19년도 사업부터 정보공개 확대(~'19.6.)

〈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안) 〉

추진과제	추진일정			
	1/4	2/4	3/4	4/4
<b>1. 복권위원회 구성·운영 개편</b>				
· 민간위원 구성 다양화 등 (상시)				
<b>2. 복권기금 신청·선정 기준 개편</b>				
· 복권기금 사용신청지침 개정·통보				
· '20년도 복권기금사업 신청·접수				
· '20년도 복권기금사업 심의·선정				
<b>3.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 개편</b>				
· '19년도 성과평가편람 개편안 마련				
· 개편안 복권위 의결 및 부처 통보				
<b>4. 복권기금 사업의 국민 소통 및 투명성 강화</b>				
· 홈페이지 개편안 마련 및 부처 협의				
· 홈페이지 개편 및 대국민 공개				



## 1. 사회적 가치의 개념

- 경제적 가치와 대비되어 개인을 초월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바람직한 가치

## 2. 사회적 가치의 구성요소와 적용방법

### (1) 사회적 가치의 내용

- 구성요소: 안전·인권, 노동·일자리, 보건·복지, 상생·책임, 지역 균형, 환경·재생, 기타공익사업
- 반영방법: 복권기금의 각 사업목적에 사회적 가치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 (2) 사회적 가치의 절차

- 구성요소: 참여·공개, 공유·협력, 공평·윤리
- 반영방법: 복권기금 사업을 사회적 가치의 절차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

### (3) 사회적 가치의 대상

- 구성요소: 사회적, 경제적 약자 (장애인, 노인, 영아, 청소년, 저소득층 등)
- 반영방법: 복권기금의 사업의 수혜자가 가급적 사회적 가치의 대상자인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되도록 선정



## 참고 2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 개편(안)

현행				개편			
부 문	평가지표	자 숙	산 구	부 문	평가지표	자 숙	산 구
집 행	1. 당초 계획에 비추어 사업예산을 적기에 차 질없이 효율적·합리적으로 집행하였는가? - 예산집행률 (15) - 계획이행정도(5): 분기별자금지출계획 - 예산절감노력 등 효율적 집행 (5)	25	25	집 행	좌동	25	25
	2.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당초 계획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 성과지표의 타당성 (5) -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5) - 목표달성도 (40) *(가점)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증진 기여도(법정배분사업 경우 0~2점)	50	50		2.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당초 계획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 성과목표의 타당성 (2) * 사업 수혜자 및 사업목적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의 적절성을 함께 고려 - 성과지표의 타당성 (5) -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5) - 목표달성도 (38)	50	50
성 과	3. 사업체계가 효과적이며 사업평가 등의 환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사업추진 (5) - 집행실태점검 (5) - 체계의 적절성 (5) - 사업평가 등의 환류 (10)	25	25	성 과	3. 사업체계가 효과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적절 히 반영하였으며 사업평가 등의 환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사업추진 (5) * (추정기준) 협력과 공유 참여와 공개 등 - 집행실태점검 (5) * (추정기준) 공평과 윤리 등 - 체계의 적절성 (5) - 사업평가 등의 환류 (10)	25	25
	(가점1) 복권기금사업을 통해 복권기금에 대한 긍정적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는가? - 홍보실적 및 홍보효과의 수준 (2)	-	+2		(가점1) 복권기금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증진되고 있음 을 홍보하는 등 복권기금에 대한 긍정적 인지도 제고에 기 여하였는가? - 홍보실적 및 홍보효과의 수준 (2)	+2	+2
환 류	(가점2) 신규사업 발굴노력 (2) 사업 참신성과 가점(기금)별 특성 반영 여부 (법정배분 및 공익 사업, 0~2점)	-	+2	환 류	좌동	-	+2







---

#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혁신적 문화서비스 · 일자리 창출 방안

---

2019. 9. 2.

문화체육관광부







---

#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혁신적 문화서비스 · 일자리 창출 방안

---

2019. 9. 2.

문화체육관광부



## 순 서

I . 추진배경 .....	348
II . 사회적경제 현황 및 문제점 .....	351
III . 추진전략 .....	353
IV . 세부 추진과제 .....	354
1. 사회적경제로 혁신적 문화 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	354
2. 주민·문화인력과 함께 지속가능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58
3. 연대와 협업 강화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합니다. ....	363
V . 과제별 추진일정 .....	367



## 추진경과

- (의견 수렴) 문화 분야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간담회, 현장방문 실시
  - (간담회)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기업과 함께 활동사례 공유 및 실질적 정책제안 수렴
    - \* 1차(개관, '18.7.19.) → 2차(소셜벤처, 7.24.) → 3차(문화예술, 7.31.) → 4차(관광, 8.8.) → 5차(체육, 8.17.) → 6차(생활SOC, 10.16.)
  - (현장 방문) 사회적기업의 혁신적 문화활동 공유 공간 및 사회적경제와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 SOC 등 우수기관 방문('19.3월~8월)

기관 및 공간	운영 기업
아트업서울-성동(예술가 공유 창작공간)	(주)위누
플레이스비브(공연 등 복합 문화공간)	(주)플레이스비브
그림가게, 미나리하우스	(주)에이컴퍼니
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
체부동생활문화지원센터	(주)기분좋은큐엑스
헤이그라운드(협업·공유 공간)	(사)루트임팩트
창신·송인도시재생 지역(백남준기념관 카페 등)	창신송인도시재생협동조합

- (정책 연구)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사회적경제조직 실태 파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진행('18.11월~'19.5월)
  - \*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공동연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전문가·관계기관 협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숍 및 관계기관 협의
  - (워크숍) 지역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현장 전문가 의견 청취('19.7월)
  - (협의·의견수렴) 관계기관(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지역문화진흥원 등)과 연계·협업 활성화 방안 모색(수시)



## I. 추진배경

### □ 양질의 문화 일자리 창출

- 문화 분야 구직 수요는 높으나, 창작·실기 중심의 전공교육과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기획, 마케팅)과의 불일치로 수급 불균형 발생
  - \* 예·체능계열 첫 일자리 입직 '1년 이상 소요' 15.4% (전체 11.9%),
  - \*\* 전공-직업 정합성 예·체능계열 20.1%로 최하위 (전체 48.2%) / '17년 한국고용정보원
- 기업 인프라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에서의 문화 분야 경제 활동 기회(일거리·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부족
  - \* 수도권 사업체 비중 : 콘텐츠 43.2%, 스포츠 47.7%, 관광 52.3% ('17년 분야별 산업통계)
- 단기계약에 의한 프로젝트형 일자리가 많아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저임금, 불공정 행위 및 사회보장 정책의 사각지대에 노출
  - \* △(비정규직 비중) 전업예술인 72.5%, 콘텐츠 19.6%, 관광 20.7%, 체육 19.7% / 전체 16.1%  
△(평균근로소득) 예체능 176만원/전체 215만원, △(고용보험가입) 예술인 24.1%/전체 89.6%  
<'18년 예술인 실태조사, '17년 각 분야별 산업통계 등>

☞ 고용 친화성이 높은 사회적경제를 통해 문화 분야 전문인력의 재능을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하고, 권리 사각지대 해소 필요

### □ 문화 참여 확대로 지역문화 · 경제 활성화

- 일과 삶의 균형 중시(워라벨), 소득 3만불 시대, 주 52시간 근로에 따라 다양한 문화(여가) 서비스 수요 증가
  - \* '여가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 95.1%가 중요하다고 응답 ('16년 LG경제연구원)
  - \*\*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 : 1위 관광, 2위 문화예술활동, 4위 체육활동 ('17년 통계청)
- 관람(감상) 차원을 넘어, 일상에서 취미생활·소통·배움·봉사 활동 등 지역(주민)의 능동적 생활문화 참여 욕구 증대
  - \* 생활문화동호회 : '14년 663개 → '18년 1,840개(14,273명) 참여 ('18년 생활문화동호회사업)



- 국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도 증가(81.5%, '03년 조사 이후 최고치)했으나, 지역별·계층별 문화격차는 여전히 존재

< 문화예술관람률('18년 문화향수실태조사) >

지 역	대 도시 85.2%	읍면지역 71.7%
연 령	20대 97.1%, 30대 91.6%	60대 64.7%, 70세이상 46.9%
소 득	600만원 이상 91.9%	100만원 미만 42.5%
장애 여부	장애 없음 81.7%	장애 등록 48.2%

- 거주지 근접 희망 시설로도 문화·체육시설 수요가 가장 높으나,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낙후지역의 문화시설 접근성은 떨어짐

\* 희망 시설 : ①문화(25.4%), ②체육(17.2%), ③의료(16.8%) 순 ('18년 국토부 기초생활인프라 설문)

\*\* 문화시설의 36.8%, 공연장의 50.3% 수도권 집중 ('18년 문화기반시설총람)

- 또한 생활 SOC, 문화 프로그램 등의 양적 지원은 확대했으나, 공급자 중심으로 지원·운영되어 주민 체감 및 참여 욕구 충족에 한계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혁신적 문화 서비스 창출, 문화 참여·향유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 □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

- 문화의 창의성과 감수성, 공동체의 공감·소통 능력 향상 등의 가치를 연계·활용하려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혁신 활동 수요 증대
  - 공공에서는 문화 분야와 복지·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결합, 새로운 경제·서비스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확장성 보유
- 민간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공헌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이 부각되면서, 공공성을 겸비한 문화 분야와의 접목·협력 시도 증가

< 민간·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협업 사례 >

- 현대자동차그룹, 'H-온드림(On-Dream) 사회적기업 창업 오디션' : 사단법인 씨즈 및 한국 메세나협회 등 협업으로 8년 동안 211여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문화예술팀 약 26%), 1,420개 일자리 창출 / UN 사회연대경제 컨퍼런스 성공사례 발표('19.6월)

☞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과 결속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의 적극적 역할 및 연대·협업 필요



## 〈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국내·외 활동 사례 〉

### 1. 드림우드앙상블

### 발달장애인 일자리 제공(사회적협동조합)

- (연혁) '15년 창업(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전문예술법인), '16년 예술경영우수사례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 수상 및 '18년 평창패럴림픽 전야제 초청공연 등 진행
- (역할)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클라리넷 앙상블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장애인식 개선** 등 기여
- (사업) 연주·강연 장애 인식개선, 음악교육 및 연주 재능기부 사업, 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등
- (조직/활동) 정규직 14명 등 총 29명. '17년 72회 연주, 14,920명 관람 및 매출 236백만원

세계장애인의 날 UN 주재 한국대표부 공연('18.12월)



2018평창패럴림픽 전야제('18.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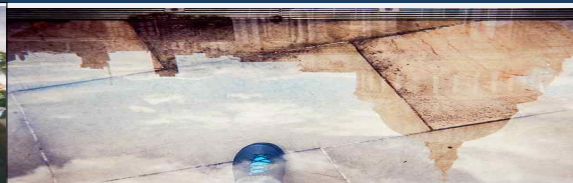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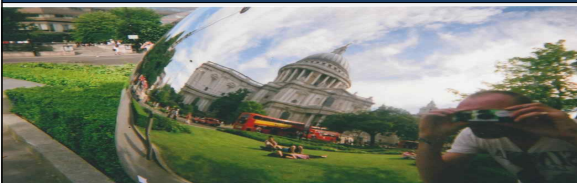


### 2. 카페아트(Cafe Art, 영국)

### 예술활동을 통한 노숙자 사회 참여(사회적기업)

- (역할) 런던 노숙자 자선단체에 속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수익 창출 기회 제공
- (사업) '아트인카페(Art in cafe)', '마이런던(My London)', '아트마켓(Art Market)' 및 기업들 대상 작품 대외판매
- (특징) **공공·민간·개인 등 다각적 협업 및 후원**으로 365일 노숙자들의 작품을 전시
  - 노숙자 상부단체인 홈리스링크(후원), 영국왕립사진협회(도시 확산), 세인트폴 대성당(전시·판매 공간), 큐빅호텔(작품 보관), 후지필름(카메라장비 제공) 및 자원봉사자·재능기부자 등

마이런던 프로젝트 - 노숙자들이 촬영한 도시 사진 우수작



노숙자들에게 제공되는 카메라는 후지에서 후원 + 달력디자인은 런던 최고 디자인 기업인 Cater Wong Design 등 무료 진행 + 인쇄비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충당

### 3.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 주민이 만드는 지역여행(협동조합)

- (목적) 지역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사업체의 창업·발전을 통해 **관광이 지역소득으로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확립**
  - \* 숙박·식음·체험 등 분야에서 '관광사업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창업·경영개선 지원
- (특징) 지역에서 **관광두레PD**를 선발·육성하여 주민사업체의 성장 지원
- (현황) 73개 지역, 388개 주민사업체 발굴, 상시 근로인력 800명('19.6월 기준)

#### 담다(DAMDA)

#### 담양대나무공예인협동조합

대나무 공예의 명맥을 잇기 위해 대·부공예 계승자공예가들이 모여 기념품 판매 및 수익 창출 지역 어르신 일자리 제공



#### 가치가(같이하는 가치여행)

#### 관광문화콘텐츠협동조합 가치가

커피 목공 축제 공연예술 관광 등 분야의 지역주민들이 모여 가평지역 여행에 대해 재 탐구, 직접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 여수1923

#### 수·레인보우 협동조합

지역 봉사자 모임에서 출발 여수 지역 다문화 이주여성 일자리 지원 젊은 1인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로컬푸드 판매





## Ⅱ.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현황 및 문제점

### □ 문화 분야 맞춤형 지원체계 미흡

-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속적으로 증가

\* '15년 905개 → '16년 1,135개 → '17년 1,347개 → '18년 1,605개(최근 3년 **연평균성장률 21%↑**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준)

- 현장은 특화된 전문 지원을 필요로 하나, **문화·체육·관광 업종별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성장을 지원할 정책은 부족**

\* 사회적경제 창업·육성 지원이 대부분 도·소매, 제조업 등 유형의 재화 거래 업종 위주로 설계되어, 문화서비스 특성에 맞는 사업 모델 개발 및 인재 육성에 한계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지원 신규 추진('18년~) 등 지원 확대 중이나, **진입 촉진 장치\*** 및 **전담 육성체계 미완비**

\* 각 지역 및 국토부, 환경부 등 10개 부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운영 중

- **문화와 사회적경제 경영**(기업가정신, 기획·유통 등) 전문성을 겸비하여,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역량 있는 인력 부족

### □ 문화 인력 특성에 맞는 조직 모델 필요

- 기존 경영모델을 넘어, **문화 인력 특성**(프리랜서, 전문직 등)을 반영하여, **문화예술인의 활동과 수익 증대를 지원할 특화 모델 필요**

\* [현장의 목소리] “예술가들은 보통 상근 근무를 하지 않는 프리랜서로 활동, 인건비 지원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산의 문제도 발생하여, 공공기관 입찰참여시 불리하게 적용”

#### < 예술가 프리랜서 협동조합 사례 : SMart, 벨기에 >

- **(역할)** SMart는 아티스트를 위한 상호협동조합(Société Mutuelle pour artists)을 의미.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사회보장 관련 법제도 개선, 저작권 등 창작활동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예술인의 전국 플랫폼’을 구축하여 문화예술인의 대변자로 자리매김**
- **(연혁)** '98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제회사로 창립. '16년 사회적목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조합원 가입을 의무화 함. 현재 **유럽 9개국으로 확산**되었고 프리랜서 전반으로 영역 확장 중
- **(조직)** 벨기에에 12개 지부, 상근 148명 등 총 178명 근무. 조합원은 12,600여명
- **(사업)** 프리랜서 회원과 이들에게 사업을 의뢰한 **고객 사이에서 계약·사업관리 등 진행**
  - ① 계약관리 - 고용계약서 작성, 고용 및 사회보험 신고 등 위임 행정 업무 처리
  - ② 사업관리 - 행정, 회계, 재무, 보수 및 용역비 지급, 저작권료 청구 등
  - ③ 기타 - 장비·협업공간 임대, 교육, 보증기금 혜택, 문화예술전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

\* 프리랜서가 자영업자나 독립 프리랜서의 지위로 있는 것보다 낮은 비용으로 사회보험 혜택 제공



##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 다각화 · 고도화 필요

-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의 사업은 창작, 행사 기획, 교육 등 위주로 재정 지원 종료 후 영세한 문화 기업이 겪는 동일한 재정 위기에 직면
  - \* 문화 사회적기업 인증연차별 당기순이익 : (1년차) 11,568천원→ (2년) 11,828천원→ (3년) 9,339천원 → (4년) △4,675천원→ (5년) △1,679천원 / '17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지역의 풍부한 문화자원 및 문화 수요와 연계하여, 주민 참여하에 지역별 특색있는 사업모델로 지역·사회적경제 상생 모색 필요

## □ 금융 접근 등 재원조달의 어려움

- 매출·영업이익 등 재무성과를 넘어, 혁신적 문화서비스로 창출된 사회적 성과 측정지표가 구체화되지 않아, 투·융자 등 참여 어려움
  -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조직 7.1%만이 사회적금융 수혜 경험('18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설문)
  - \*\* [현장 목소리] “소외계층 대상 무료공연, 낙후지역 벽화, 설치 예술작품 등의 예술향유 서비스는 대상자가 불특정하며, 계량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성과를 인정받기 어려움”
- 새로운 유형의 관광벤처, 사회적기업 등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로 인정받지 못해, 기존 융자지원 접근에 한계
- 스포츠 산업 융자는 ‘체육시설업’에 편중\*되는 등 담보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조직(스포츠서비스업, 체육용구생산업 위주)은 혜택받기 어려움
  - \* '18년 스포츠 산업 융자 420억원의 98.8%가 체육시설업에 집행

## □ 공공 · 민간 ·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업 및 인식 제고 필요

- 공공부문의 문화를 통한 사회적가치 확산, 민간 영역에서의 다양한 협업 수요 충족을 위해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필요
  - 사회적경제조직 간 공동사업·마케팅을 기획할 정보교류·소통 장치 부족
    - \* 지역문화재단 등 중심으로 정보가 교환되나, 조직간 직접 소통은 인적네트워크에 의존
-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 가치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여, 활동영역 확장 및 지속적 수요 창출에 한계

☞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문화생태계 및 지역사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지원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조성 필요



### Ⅲ. 추진전략

#### 비전

사회적경제와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

#### 목표

- ◇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확산 및 지속가능한 문화 일자리 확대
- ◇ 사람 중심의 문화 생태계 조성 및 지역사회 활력 제고

#### 전략1. 사회적경제로 혁신적 문화 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 |   |                                |
|---|--------------------------------|
| 1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도입으로 저변 확대  |
| 2 | 분야별 특화된 전담 중간지원조직 가동           |
| 3 |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
| 4 | 사회적가치 측정체계 마련 및 금융 접근성 제고      |

#### 전략2. 주민·문화인력과 함께 지속가능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                                |
|---|--------------------------------|
| 5 | 문화인력을 활용한 혁신적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확산   |
| 6 |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를 통한 지역 문화 시설 활용도 제고 |
| 7 | 문화 자산을 활용한 지역사회·경제 활성화         |
| 8 | 수요자 맞춤형 생활문화프로그램 확산            |

#### 전략3. 연대와 협업 강화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합니다.

- |    |                             |
|----|-----------------------------|
| 9  | 공공·민간·사회적경제조직 간 다각적 협력체계 구축 |
| 10 | 공공부문과의 연계 강화 및 공공 수요 창출     |
| 11 | 민간 부문 협업 확대 지원              |
| 12 |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



## IV. 세부 추진 과제

### 1 사회적경제로 혁신적 문화 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 1.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도입으로 저변 확대

#####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도입 및 특화 지원 확대 (‘19년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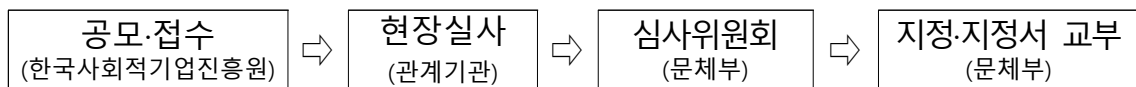
- (지정대상) 문화예술, 생활체육, 지역관광 서비스 등 문화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기업

\* 문체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문화 분야 기업(단체)을 중심으로 지정하되, 문화를 매개로 한 타 산업 융합의 경우도 가능성을 열어 둠

- (지정요건) 조직형태(법인·조합, 회사, 비영리단체 등), 영업활동\*,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형/창의·혁신형 등), 사회적 목적 재투자(이익 2/3 이상) 등

\* 유급근로자 고용 및 매출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일자리창출 등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유급근로자 고용 및 매출 발생 필요

- (평가·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정, 3년간 유효



- (지원내용) 예비사회적기업 공통지원(인건비·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및 문체부(특화지원) 소관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문화시설 활용 등 연계

\* 특화지원(예) : 사회적기업 인증 대비 컨설팅, 문화예술프로그램 위탁 운영 참여 등

##### □ 부처간 협력을 통한 특화 육성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고용부)’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 분야에 특화된 창업팀 발굴 및 문화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관리

\* (‘19년 특화분야) 공정여행 / (전문멘토) (주)트레블러스맵(사회적기업) 활동가



## 2. 분야별 특화된 전담 중간지원조직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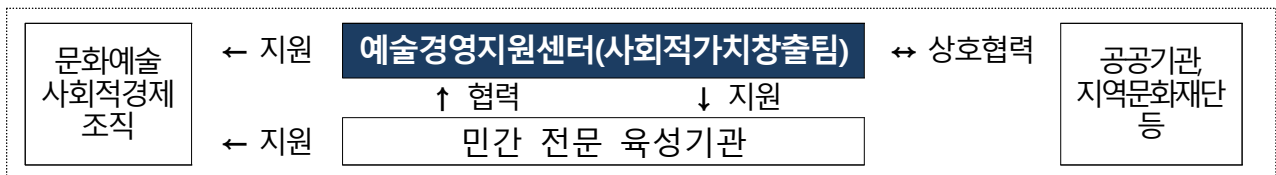
### □ 문화예술 분야

- 예술경영지원센터\* 내에 사회적가치창출팀 신설('19년) 및 센터의 기존 창업·투자지원 연계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본격 육성

\* '10년 사회적기업 문화예술전문 특화지원기관 지정(고용부)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 기반 마련 및 지원 사업 추진('19년 39억원/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공공기관·지역문화재단 등과 협력, 장르별·지역별 창업·전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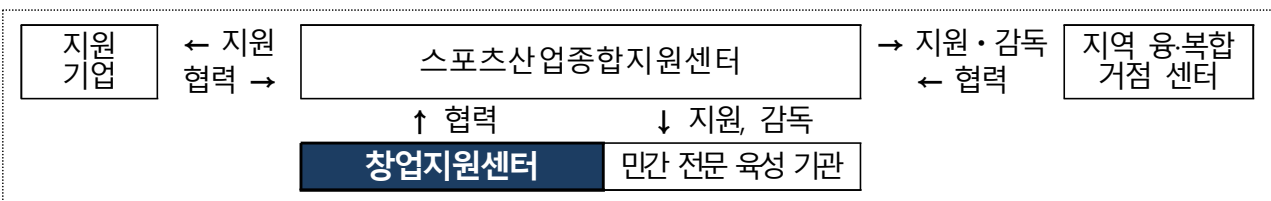
\* (예) 지역문화재단 지원사업 참여단체 중 역량 있는 단체의 사회적경제조직 전환 지원 등



### □ 스포츠 분야

- 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 신규 조성('20년 1개소)으로 사회적경제 특화 육성 사업 전담 및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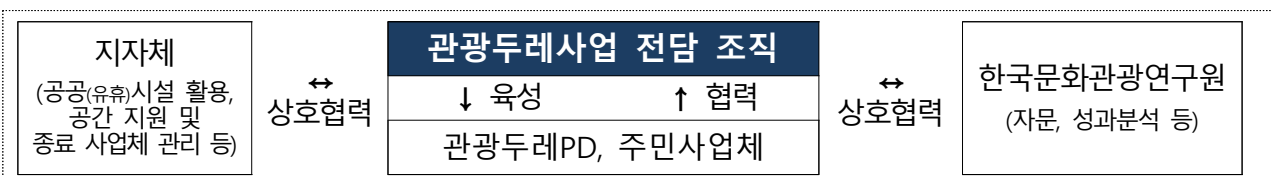
\* ('19년) 창업지원센터별(6개소)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센터 당 최소 1개 팀 이상)  
( '20년) 신규 사회적경제 전담 센터 1개소 조성 및 '22년 1개소 추가 조성



### □ 관광 분야

- 관광두레 사업 전담 조직 정비('20년), 관광 분야의 선도적 사회적경제 모델인 '관광두레' 사업 추진 총괄

- 관광두레PD 선발·육성, 주민사업체 발굴·창업 지원 및 관광두레 연계·통합프로그램 운영과 다각적 관계기관 협업 추진





### 3.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 □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

- (문화예술) (예비)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준비 전반\*\* → (초기)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화 → (성장·성숙기)시장경쟁력 제고 및 사업 확장 지원

\* 유형 : ① 예술활동으로 사회문제 해결, ② 예술생태계 선순환에 기여

단계 : (예비) 최대 15백만원, (초기) 최대 50백만원, (성장) 최대 80백만원 / 각 10개팀 내외

\*\* 사업 항목 구체화, 팀 구성, 사업자등록, 경영실무 등 전 주기에 걸친 밀착·공동 설계

- (스포츠) (예비)아이디어 발굴, 창업 교육, 현장실습 → (3년 미만)사업 아이디어 시제품 지원, 사업화, 시설관리 교육 및 경연대회 등

\* (창업교육) 3개월 / 집합 이론교육, 멘토링, 워크숍, 세미나, 현장실습 등 지원

(창업보육)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수수료 등 지원(15~40백만원 차등)

- (관광두레) (1년차)주민사업체 발굴, 사업계획 수립(자원조사 및 지역진단 등) → (2년차)창업 및 시범사업 운영 → (3년차)사업체 운영·경영 지원

- 지역주도형 관광주민사업체\* 대폭 확대·성장 유도('18년 367개 → '22년까지 1,125개 발굴 목표 및 청년 사업체 지속 확대)

\* 지역별 특색 있는 숙박·식음·여행·체험·기념품 등을 생산·판매

#### □ 전문 인력 양성

- (문화예술) 예비 창업자·재도전자 대상 실패사례 교육 실시, 창업 사례 공유 및 기창업자 등과 인적 교류 지원(5개 권역 순회, 150~200명 교육)

-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교육 및 인사노무·법률·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수시 경영상담(문화예술 기관·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전임 컨설턴트 11명)

\* 수요자 맞춤형 상담 및 지역 문화재단 연계 상담 병행

- (스포츠) 사회적경제 전담 센터를 기반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및 전문가-청년 협업 스포츠 공익 프로그램 기획·활동 지원('20년 40명)

- (관광두레) 지역 주민·활동가를 관광두레 PD로 육성('19년 신규 20명 → '22년 신규 30명), 지역 주민공동체의 관광 사업 기획·창업시 조력



## 4. 사회적가치 측정체계 마련 및 금융 접근성 제고

### □ 문화 분야 객관적 성과 측정체계 구축

- (특화지표 개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개발('19.12월)로 신용창출 기회 증대
  - \* 공공·민간 재정지원 및 투·융자 지원 참여시 활용 가능한 성과기준 도출·확산
- (문화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공공지원 문화예술 사업이 유발하는 사회적 가치를 경제 효과로 산출할 수 있는 표준모형 연구 추진('20년~)

### □ 투·융자 지원 확대

- (문화예술) 기업별 진단을 통해 투자 유치제안 컨설팅, 투자기관 매칭 주선 및 투자 유치대회 개최(매년 15개 기업 내외)
- (스포츠) 체육시설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회적기업의 주 업종인 서비스업·용구생산업 융자 우선 배정('19년 융자 지원의 10% 이상, 55억원)
  - \* 신청한도는 설비자금 10억원, 연구개발자금 3억원, 운전자금 2억원
- (제도 개선) 신용보증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20년)
- (관광) 혁신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을 관광사업체로 편입 유도하는 등 기존 관광기금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
  - (관광사업체 편입) 새로운 유형의 관광사업체가 관광진흥법령 상 관광사업체로 포함되도록 '관광사업의 종류(제3조)' 개정('19년.하)
    - \* ①관광벤처·사회적기업 등이 포괄되도록 관광편의시설업 내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 ②개별관광객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 신설
  - (융자지원)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제도 도입('19년/ 국고 30억원 등 300억원 / 신용보증재단과 협약)



## 2

## 주민·문화인력과 함께 지속가능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문화인력을 활용한 혁신적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확산

#### □ 예술인 플랫폼 협동조합

- (모델개발) 예술인 대상 안정적 활동 기반,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문화예술 사업의 규모화를 위한 협동조합 모델 개발('19년)
  -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사업(기재부)'과 연계하여, 선도모델 개발 추진
- (확산지원) 제도 개선과제 발굴\* 등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모델 확산 전략 마련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 추진('20년~)
  - \* 저작권, 사회보험제도, 계약 관행 등 예술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검토
- (창업·홍보)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사업 설계, 조직설립·전환 컨설팅, 외부 자원 연계 및 조합원 모집 홍보 지원 추진('20년~)

#### < 유사사례 : 발레STP협동조합 >

- (설립) '12년 민간발레단 연합회로 시작 → '14년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
- (역할) 문화예술의 지역 균형적 발전과 발레 대중화, 무용수 복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국내 민간단체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
  - \* 대규모 발레공연(「발레, 아름다운 나눔 시리즈」, 「수원발레축제」 등) 및 발레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차별화된 대중화 프로그램 기획운영(「플래시몹 댄스」, 「횡단보도 댄스」, 「버스킹 공연」 등)
- (참여)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이원국발레단, SEQ(서)발레단, 와이즈발레단, 김옥련발레단

#### □ 은퇴선수 협동조합

- (창업지원) 전문성과 경력을 축적한 은퇴선수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창업 지원('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기재부)'과 연계 등)
- (교육지원) 생활체육 시설(프로그램) 등 주요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입찰·계약 컨설팅 등 제공('19년~)

#### < 유사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 >

- (설립) '16년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선정 '17년 설립(문체부 인가) / 은퇴선수후원자 등 조합원 150명
- (배경) 엘리트 체육선수의 은퇴 후 사회적응 고민에서 출발 박항서 감독과 FC경력 매니저들이 설립
- (역할) 은퇴선수의 취업 및 재사회화 사업, 노인장애안·다문화 및 취약계층 맞춤 스포츠 교육



## 2.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를 통한 지역 문화 시설 활용도 제고

### □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 SOC 활성화

- (운영 참여) 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SOC 운영을 위해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 '19년 '국민체육센터'·'개방형다목적체육관'·'생활문화센터' 등 공모시 사회적경제조직 등 민간 운영주체 참여에 대한 가점(+3~5점 수준) 부여
- 기존 지역문화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주민 참여 제고 및 생활 SOC 프로그램 지원, 컨설팅 추진 등으로 시설 활성화
- (기반 확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문화·체육시설 지속 확충
  - \* '22년까지 주요 생활SOC 확대(신규물량) : ▶ 국민체육센터(750여개/수영장 190여개, 체육관 440여개, 장애인형 120여개), ▶ 공공도서관(160여개) 등

#### <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사례 : 주민·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 참여 >

- (조성 전) '06년 주민 서명운동(2,008명) 및 청원 → '12년 서울시 주민 참여예산제 공모 선정으로 예산 확보 → '12년 주민 설문 및 기본계획 수립 → '13년 협동조합 등이 참여, 설계 발주 → '13년~'15년 총괄계획가주민 협업 하에 공간프로그램 기획 → '15.11월 개관
- (조성 후) 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 위탁 운영('15년~), 학교연계사업을 위해 7개교와 업무협약 체결, 지역 내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이 특화자료실 운영 참여

### □ 문화 시설 운영 활성화

- 지역 문화시설 운영주체로 지역의 문화적 배경과 특색을 잘 알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유도(가점 부여 등)
- (작은미술관) 미술관 부재 지역 대상 소규모 상설 미술관 조성('19년 9개소 → '20년 10개소 목표) 및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참여 확대
- (생활문화센터) 문화시설·유희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의 일상적·자발적 생활문화 공간 조성('20년 38개소(신규) 목표) 및 운영 참여
- \*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조직 대상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연계·지정



### 3. 문화 자산을 활용한 지역사회 · 경제 활성화

#### □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조직이 만들어 가는 문화재생

- (협업구축) 지역 유희 시설(산업·교육·교통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재생’ 추진 시 기획 단계부터 ‘지역-주민-사회적경제조직’ 관계망 구축·활용
  - 지역 문제점 공유, 재생사업의 기획 및 재생 이후 지역 자산을 활용한 일자리 수익 창출 논의를 위한 관계자 참여 등 활성화
- \* ‘시설’ 조성 중심에서 재생지역에서 살아가고 관계를 형성할 ‘사람’ 중심으로 전환, 지역 토양에 맞는 문화재생 유도
- (표준설계) 재생공간을 활용하는 지역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사회적경제조직이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사업추진모델 설계(‘19.12월)

< ‘주민-사회적경제조직’ 문화재생 참여 사례 : 관광 사회적기업, (주)착한여행 >

- (사업) 서울시내 성곽마을(9개 권역, 22개 마을, ‘19~’20) 도시재생 사업
- (참여)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전문그룹으로 참여, 주민과 함께 지역 자산을 활용한 사업모델 발굴 및 탐방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맞춤형 탐방해설사 육성

#### □ 사회적경제로 2018 평창 등 국제경기대회 유산 확산

- (추진전략) 국제경기대회·행사 종료 이후, 경기시설 등이 지속가능한 지역의 유산으로 활용되도록 사회적경제를 활용·연계
- (2018 평창 유산) 평창 동계올림픽의 가치 지속 확산 및 시설 사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 \* 시설견학, 동계스포츠 체험, 문화교육 등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 등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협력 사례 :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

- (설립) 2006년 설립, SK행복나눔재단, NGO, 정부, 지자체 협력 지원
- (사업) 결식이웃 공공급식 도시락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적가치 창출
- (2018 평창) ‘강원만찬’ 브랜드 개발, 올림픽 개·폐회식때 참여자들에게 도시락 제공, 지역의 대표 식재료 활용으로 지역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국내에서 올림픽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가 함께한 사례로 협업 가능성 보여줌



#### 4. 수요자 맞춤형 생활문화프로그램 확산

##### □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확산

- (생활문화) 지역 문화격차 해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문화 서비스 기획·운영·교육에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19년~/가점부여 등)
-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공동체' 및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등

##### < 생활문화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사업 >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비 고
생활문화동호회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문화향수 확대를 위한 생활문화동호회들의 협력·기획 지원 및 지역간 교류 지원	'19년 70개 단체, 1,500개 동호회 지원 예정 * 18년 사회적경제조직 6개 참여
생활문화공동체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마을단위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문화 탐색활동 등 지원	'19년 40개 단체 지원 예정 * 18년 사회적경제조직 9개 참여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자 공모 시, 지원 자격을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단체에서 사회적경제조직까지 확대	'19년 258개 문화시설·단체, 309개 프로그램 9,000명 지원 예정 * 18년 사회적경제조직 10개 참여

- (청년문화활동) 청춘마이크\*사업 운영자격을 문화예술단체에서 사회적경제로 확대하고, 청년 문화활동가 지원 확대 검토

\*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공연 기회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전문예술가로서의 성장 발판 제공('19년도 200개 팀, 약 900명 지원 예정)

- (문화예술교육)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로 교육 영역 확대 및 공공적 가치와의 연계를 강화,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기획·확산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등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선정·운영('19년 현재 45개 기업 선정)

\* 유관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홍보 확대 및 향후 공모 시 사회적가치 기준 반영 검토

##### < 문화예술교육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사례 : 자바르떼(Job-arte) >

- (설립) '04년 '신나는 문화학교'로 시작, '07년 사회적기업 인증, '13년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 활발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통해 '10년 인천지부, 경기지부 독립 후 각각 사회적기업 인증
- (사업)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공연예술 프로그램 지역 축제 공연 기획 등  
\* '신나는 예술여행', '우리동네 랄랄라 음악대 등 다수의 지역내 참여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 □ 생활체육 활성화

- 지역의 생활체육인(주민)과 공공스포츠클럽(사회적경제)을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 (성장지원) 공공스포츠클럽\*(비영리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공모참여 확대, 지도자 인건비·운영비 지원(5년간, 총 4~9억원), 종료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연계)

\* '19.7월 누적 89개소, '22년까지 229개 클럽 조성, '1시군구 1스포츠클럽' 목표

- (인력양성) 스포츠클럽 전문인력인 '스포츠클럽관리사\*' 도입('19년) 및 경영능력·회원(조합원) 관리 등 연수교육으로 사회적경제 활동인력 확대

\* 대한체육회가 등록 민간자격(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으로 운영

### < 국내 공공스포츠클럽 사례 : 진주스포츠클럽 >

- (운영) '15년 선정 / 3개 체육시설진주국민체육센터(위탁), 모덕테니스장(위탁),문산체육관(무상임대)
- (직원) 31명(행정인력 3, 지도자 28)
- (회원) 3,100여명(청소년 400여명, 성인 2,400여명, 노인 300여명)
- (특징) △ 회원 중심 대의원제도 운영, △ 11개 종목별 자치조직 168명 대표자 활동, △ 인근 초·고·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클럽시설 내 학교 학생들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 < 해외스포츠클럽 사례 : AC London FC >

- (설립) '11년 런던폭동의 피해 지역인 크로이던(Croydon)의 10대 청소년들이 범죄 조직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12년 7월 지역 청소년 중심 축구 클럽으로 설립
- (설립자) 프린스 초우더리(Prince Choudary)는 매너저이며, FA 1·2급, UEFA B급 지도자 자격 보유
- (팀 운영) 100%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 수입은 100% 구단에 재투자



-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체육시설이 없는 격오지 주민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연계되는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 자격 부여

\* 저소득층 대상 1회 30만원, 2회 이상 체험시 50만원 한도 지원



### 3

## 연대와 협업 강화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합니다.

### 1. 공공·민간·사회적경제조직 간 다각적 협업체계 구축

#### □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협의체 구성·운영

- (목적) 공공-민간-사회적경제조직간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운영) 문체부,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간지원조직, 협업기관, 연구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여, 현안사항 논의 및 협업 모색
  - \* 대표협의체 운영(반기별 1회) 및 필요시 실무협의체(주요 정책중심) 별도 운영

#### <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협의체 구성(안) >



#### □ 공공기관간 협업 강화

- 다양한 영역의 공공기관 간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를 활용한 혁신적 사회적경제 협력 시범사업 발굴('19년~)
  - (문화예술) 기관별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활용, 문화예술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협력 추진('19.3월 예정-세종문화회관 업무협약 등)
  - (관광)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연계하여,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추진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관광두레 사업운영)-국립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업무협약('18.12월), 한국관광공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협약('19.6월) 등



## 2. 공공부문과의 연계 강화 및 공공 수요 창출

### □ 공공기관과의 협력 지원

- (공공성 강화) 공공기관의 고유 목적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상생·협력 방안 모색
  - 봉사·기부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공공자원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지원 필요
    - \* 예) (KOTRA) 해외시장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및 ‘기업-예술인(사회적경제조직)’ 매칭 사업 추진 / (LH) 사회적기업에게 ‘희망상가’ 임대사업 추진
- (협업확산)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사업 발굴 및 확산(우수사례 소개 등)

#### < 문화·관광 분야 공공기관 사례 >

기 관 명	사 업 내 용
한국관광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분야 마을기업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지원</li> <li>- 관광두레 3차년 육성 완료 지역 중 우수 주민사업체(관광두레 리더스) 선발 ('19년 총 13개 지역 20곳, 관광기금 5억원 지원)</li> <li>- 우수 주민사업체 대상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시범사업 추진 예정</li> </ul>
그랜드코리아레저 (GK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KL 사회공헌재단 사회적가치 실현 공모 사업 추진 ('19년~)</li> <li>- 문화·관광을 매개로 한 지역 역량 사업 및 생활문화 실현 사업 지원</li> <li>- (1년 이내 사업) 최대 5천만원, (3년 이내 사업) 최대 2억원</li> </ul>

### □ 공공구매 수요 확대

- (홍보)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유형 및 제품(서비스) 안내 책자 발간·배포, 공공구매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공공구매 확대 유도
  - \*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개념 및 현황, 유형별 대표사업, 우수사례 소개 등
- (공공플랫폼 활용)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고용부) 활용 및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부처합동) 등에 참여, 인지도·호감도 제고
  - \* 문화 분야 특별공연, 상품전시, 홍보 책자·영상 제공 등



## □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판로 개척 지원

- (컨설팅) 공공구매 시장 판로 개척 및 진출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컨설팅 제공('19년~, 80여개 기업·단체·개인)
  - \* (단계별 역량강화) (초급)공공시장 진출 절차 → (중급) 아이템 발굴·전략 수립 → (고급) 사업구성, 판로개척 실천, 사업매칭 지원 등
- (연계지원) (공)기업 사회공헌 및 문화마케팅·구매담당 부서 담당자와 1:1 미팅 주선, '문화예술+기업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등
  -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조직 협력사업 제안 및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발표 등

## 3. 민간 부문 협업 확대 지원

## □ 민간과의 협력 및 후원 활성화

- (교류확대) 기업 사회공헌 및 문화마케팅 담당자와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 간 인적교류 정례화
  - \* 문화예술 기업·단체 현장탐방, 문화예술 콘텐츠 동반관람, 간담회 등
- (후원 활성화) 민간기업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협력사업 등 후원 유도
  - \* 예) 문체부-예술경영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한국메세나협회 등

### < 민간과의 협업·후원 사례 : (주)에이컴퍼니(Acompany) >

- (설립) '11년 설립 '13년 사회적기업 인증, 신진 예술가 발굴, 아트 큐레이팅컨설팅 전문 기업
- (사업) '14년 현대자동차그룹, H-온드림(On Dream) 오디션에 선정, 제품개발전시회 등 사업비 후원을 통해 그림가게 '미나리하우스' 운영, 브리즈아트페어,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등 사업 확장

## □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 강화

-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간 정보 공유 및 교류를 촉진\*하여, 전문성·경험 공유, 공동사업 및 공동마케팅 등 협력사업 발굴, 우수사례 확산
  - \* 지역문화재단-사회적경제조직 간 협업체계,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협의체 등 활용



## 4.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 □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성과 및 가치 확산

- (실태조사) 문화예술 분야 최초로 사회적경제 일반, 운영현황, 주요 활동, 협업사례 등 파악 및 정책만족도·사회적경제인식 조사 등('19년말)
- (인식제고)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필요성 논의 확산 및 대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 등 추진
  - (공론화) 문화의 사회적가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의 역할 및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성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심포지엄 등 개최
    - \* 문화 분야 및 현장전문가, 관련 대표 학회 인사,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 (성과공유) 예술경영컨퍼런스·관광두레 전국대회\*(10월경) 등을 통한 우수 기업(가), 종사자 등 선정·시상 및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 \* '18년 사회적경제 특강, 우수사례 공모 선정단체 현장발표 사례공유 및 시상
    - \*\* 관광두레 활동가 참여('18년 1,400여명 참여), 현장마켓 운영, 우수사례 시상

### □ 홍보 강화 및 해외 진출계기 마련

- (국내홍보) 문화 분야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경제조직 활동 사례 온·오프라인 홍보 및 대 국민 인식 확산(공공기관 누리집, 언론 등)
  - \* '위클리 공감', '아르떼365' 등 상시적 전문 지식 정보 채널을 통해 활동 사례 연재
- (국제교류) 주요 국제 문화교류 계기, 홍보 책자 배포 및 교류행사 참여 문화 단체 대상 공식 인증 부여(양국 교류 준비위원회 심사 인증)

#### < '16년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 참여 사례 : (주)노리단 >

- (행사명) 낭트 한국의 봄 / (도시) 프랑스 낭트
- (주요내용) 2012년 낭트 시에 설립된 '한국의 봄 (Printemps Coréen)' 협회와 한국의 사회적 기업 노리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복합문화 프로젝트로 한국의 품격 있는 전통과 현대 예술을 소개





## V. 과제별 추진일정

세 부 과 제	주관부처	추진시기
<b>1. 사회적경제로 혁신적 문화 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b>		
<b>(1)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도입으로 저변 확대</b>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미래문화전략팀	'19년~
▶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가 육성	고용부·문체부	'19년~
<b>(2) 분야별 특화된 전담 중간지원조직 가동</b>		
▶ 문화예술 분야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활동 지원	예술정책과	'19년~
▶ 스포츠 분야 창업지원센터 신규 조성	스포츠산업과	'20년~
▶ 관광 분야 관광두레사업 전담 조직 정비	관광산업정책과	'20년~
<b>(3)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b>		
▶ 문화예술 분야 단계별 창업 및 성장·성숙 지원	예술정책과	'19년~
▶ 스포츠 분야 단계별 창업 및 성장 지원	스포츠산업과	'20년~
▶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확대 및 단계별 지원	관광산업정책과	'20년~
▶ 문화예술 분야 실패사례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예술정책과	'19년~
▶ 스포츠 분야 전문인력 지원 및 활동 지원	스포츠산업과	'20년~
▶ 관광두레 PD 육성	관광산업정책과	'19년~
<b>(4) 사회적가치 측정체계 마련 및 금융 접근성 제고</b>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가치 측정지표 개발	예술정책과	'19년~
▶ 문화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표준모형 연구	미래문화전략팀	'20년~
▶ 문화예술 투자 컨설팅 및 투자 유치대회	예술정책과	'19년~
▶ 스포츠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금융 접근 확대	스포츠산업과	'19년~
▶ 관광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금융 접근 확대	관광정책과	'19년~
<b>2. 주민·문화인력과 지속가능한 문화서비스를 창출합니다.</b>		
<b>(1) 문화인력을 활용한 혁신적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확산</b>		
▶ 예술인 플랫폼 협동조합 모델 개발	기재부	'19년~
▶ 예술인 플랫폼 협동조합 모델 확산 및 창업 등 지원	예술정책과	'20년~
▶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연계 은퇴선수 창업 지원	기재부·문체부	'20년~
▶ 은퇴선수 협동조합 컨설팅	스포츠정책과	'19년~



세 부 과 제		주관부처	추진시기
(2)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를 통한 지역 문화 시설 활용도 제고			
▶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 SOC 운영 기회 제공	체육진흥과 문화기반과	'19년~	
▶ 문화 시설 운영 활성화	문화기반과	'19년~	
(3) 문화 자산을 활용한 지역사회·경제 활성화			
▶ 문화재생 사업추진모델 설계	문화기반과	'19년~	
▶ 평창 스포츠 시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스포츠유산과	'20년~	
(4) 수요자 맞춤형 생활문화프로그램 확산			
▶ 생활문화동호회·생활문화공동체 참여 확대	지역문화정책과	'20년~	
▶ 청춘마이크 사업 운영	지역문화정책과	'20년~	
▶ 문화예술교육 운영 참여 확대	문화예술교육과	'19년~	
▶ 공공스포츠클럽 확대	체육진흥과	'19년~	
▶ 스포츠클럽관리사 도입	체육진흥과	'19년~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 참여	체육진흥과	'19년~	
3. 연대와 협업 강화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합니다.			
(1) 공공·민간·사회적경제조직 간 다각적 협업체계 구축			
▶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협의체 구성·운영	미래문화전략팀	'20년~	
(2) 공공부문과의 연계 강화 및 공공 수요 창출			
▶ 공공구매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예술정책과	'19년~	
▶ 공공플랫폼 활용 및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여	고용부 기재부·문체부	'20년~	
▶ 공공판로 개척 컨설팅 및 행사 개최	예술정책과	'19년~	
(3) 민간 부문 협업 확대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 간 인적교류 정례화	예술정책과	'19년~	
(4)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예술정책과	'19년~	
▶ 예술경영컨퍼런스	예술정책과	'19년~	
▶ 관광두레 전국대회 개최	관광산업정책과	'19년~	
▶ 온·오프라인 홍보 및 인식 확산	미래문화전략팀	'19년~	
▶ 해외 홍보 책자 등 인식 확산	국제문화과	'20년~	



#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방안

2019. 11



관계부처 합동







#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방안

2019. 11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I. 추진배경 및 경과 .....	373
II. 현장의 주요 의견 .....	374
III. 제고방안 .....	376
1. 지역의 추진기반 공고화 .....	377
2. 현장 활동 지원 .....	382
3.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 조성 .....	386
IV. 향후 추진상황 관리 .....	392



## I. 추진배경 및 경과

### □ 추진배경

- '18년까지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제도화되고 예산에 반영되어 자치단체 중심 실행여건을 조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실행
    - \* 사회적경제 활성화('17.10.), 사회적 금융('18.2.), 사회적경제 인재양성('18.7.), 자활기업 활성화('18.7.),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11.) 등
  - 유관 정책\*들도 '18·'19년에 사업지역 선정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후 자치단체 단위에서 추진 중
    - \*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농촌신활력플러스, 어촌뉴딜300,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 자치단체는 일부 시·도를 중심으로 전담조직 설치, 조례 제정 등 추진체계 구축 노력 중이나,
    - 단체장 의지, 지역주민 관심에 따라 전담조직과 조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 등 지역 간 편차 존재
    - \* (전담조직) 시·도 70.6%, 시·군·구 38.1% 설치 / (조례) 159곳, 200개 운영
-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잘하는 자치단체는 더 잘하게, 부족한 자치단체는 최소한 추진기반을 갖추도록 추진역량 제고 뒷받침 필요

### □ 추진경과

- 추진역량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간 합동 TF\* 구성·운영(2.12.~)
  - \* 행안부(주관)·기재부·고용부·복지부·금융위 및 사업 주관 7개 부처, 민간 전문가, 5개 자치단체(시·도 2, 시·군·구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참여
- 현장의견 수렴과 지역사회 내 협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시·도 정책간담회를 개최(총 10회, 5.14.~6.27.)
  - ※ 각 시·도 주관으로 시·군·구 간담회 별도 개최(총 56회)
- 지역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집행 실태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 마련



## II. 현장의 주요 의견

### □ 지역 추진체계

- (추진기반) 전담조직\* 설치, 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집행 역량을 높이고, 자치단체 내·외 간 협업할 필요\*\*\* [참고1~4]

\* 전담조직 미설치 시·군·구 140개(담당자 1~2명이 일자리 업무 등을 병행)

\*\* 담당자 1,342명(시·도 181명, 시·군·구 1,161명) 관련 교육 이수 비율 21.1%

\*\*\* 사회적경제위원회 118곳 설치했으나, '19년 상반기 실제 개최지역은 55곳

※ 관련조례는 정부 출범 이후 127개('17.5월) → 200개까지 확대('19.8월 기준)  
중앙·지방 교육기관, 지방공무원 사회적경제 교육 실시('19.上 6,536명 이수)

- (현장지원) 현장 접점에서 민·관을 연결하는 중간지원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시·군·구 단위에도 설치를 확대할 필요성 제기

\* 중앙부처 지원 기관, 자치단체 자체 운영 기관(시·도 33, 시·군·구 69) [참고5]

◆ (현장목소리) 자치단체·농·수·신협과 협업 제도화 필요(대전·충남 연대조직), 순환보직으로 담당자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강원 연대조직 등),

### □ 현장 활동 지원

- (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전담조직과 사업 담당부서가 연계·협력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유관 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

- (참여기회) 유관 사업 내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가능 분야가 한정\* 되고 공모일정이 촉박해, 사전에 안내하고 참여의 폭을 넓힐 필요

\* 현실적으로 참여 가능한 분야가 문화, 교육, 소규모 시설 운영 등으로 제한

※ '18·'19년 선정 사업 중 사회적경제기업 참여(예정) 사업은 15%(사업비 기준 0.1%)

- (행정부담) 정부지원에 따른 서류작업\*이 방대해 기업 부담 가중

\* 사회적기업 29건, 협동조합 13건, 마을기업 23건

◆ (현장목소리) 사업정보를 지역 내 기업에 연락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나, 부서간 칸막이·민간 역량 부족으로 참여 저조(시·도 중간지원기관) 중·장년, 어르신 종사자가 많아 서류작업이 특히 어려움(전북 기업)



## □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생태계

- (인재양성) 지역 간 교육 인프라 차이로 교육규모·수준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현장에 필요한 실무교육 확대 필요

\* (서울·경기) 전문가·대학을 활용한 현장·실무교육 / (지방) 기초소양 교육 중심

※ '19.上 자치단체에서 주민·전문가·종사자 총 24,830명(1,624회) 교육 실시, 일부 지역은 대학 학부 개설('20년)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 추진

◆ (현장목소리) 시장에 나갈 준비가 안된 곳이 많이 있음(부산 연대조직), 마케팅 등 구체적·세분화된 실무 중심 교육 필요(강원·부산 창업준비자)

- (금융접근성) 대출심사시 사회적가치 반영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이 어렵고, 지방의 금융접근성이 낮아\* 자치단체 역할 필요

\* 중개기관 22개 중 14개 수도권 소재 / 수도권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비중은 41.8%('18년말 기준), 공공부문 금융지원 비중은 54.4%('19.1월~7월) [참고6]

※ 11개 자치단체는 기금 운영(1,147억원), 자산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중

◆ (현장목소리) 지방에는 사회적경제 관련 자금이 없음(경남 기업), 대출심사에서 사회적경제만의 가치를 평가해줬으면...(세종 활동가)

- (판로확대) 판로지원 정책 대상에 자활기업 포함,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기관 접근성 및 제도 개선된 수의계약\* 실효성 제고

- 자치단체·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감사 등 우려로 수의계약을 기피, 기관 내부지침 등에 수의계약 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

\* 사회적경제기업이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시, 수의계약 확대(2천→5천만원)

※ '18년도 자치단체 공공구매는 1,0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5% 증가

◆ (현장목소리) 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에서 자활기업이 소외(경남 연대조직), 간접구매를 통한 판로 확대가 필요(제주 연대조직), 감사 우려 등으로 현장에서 수의계약 불가(광주·세종 연대조직, 경남 기업)



### III. 제고방안

#### □ 추진방향

**비 전**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 ① 지역의 추진기반 공고화

- ▶ 전담부서 확대 및 자치단체 추진체계 구축
- ▶ 민·관 협치기구 운영 및 내실화
- ▶ 중간지원기관 운영방식 개선

추진상황 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

#### ② 현장활동 지원

- ▶ 유관 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 연계 확대
- ▶ 유휴 국·공유시설 활용 확대
- ▶ 서류감축 등 행정부담 경감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

#### ③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 조성

- ▶ 지역의 교육역량·인프라 강화 및 교육 확대
- ▶ 금융의 지역편차 해소 및 사회적가치 반영
-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

정책 수립  
[각 부처]

정책 집행  
[자치단체]

정책 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 1 지역의 추진기반 공고화

## (1) 자치단체 추진체계

### 1 조례 및 전담부서 정비

- (조례) 지역기반·민간주도 내용의 ‘참고 자치법규안’ 마련 [붙임1],  
조례 운영 여부 점검 및 지원(‘19.11월)(행안부, 자치단체)
  - 조례 제·개정 및 협업체계 구성·운영, 자치단체 역할 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 지원 병행
- (조직) 지역 수준에서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  
담부서 역할 확대 및 설치 지원(‘19.12월)(행안부, 자치단체)
  - ※ (전담조직 설치 현황) 시·도(課 단위) 70.1%, 시·군·구(課·팀 단위) 38.1%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발굴 및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관리에  
한정된 전담조직 역할 대폭 확대\*, 제도화(참고 자치법규안)
  - \* 생태계 조성, 자치단체 내·외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중앙·지방 연계 강화

### 2 관계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 (제도화) 정책·사업의 책임있는 조정 권한을 위해 부단체장 중심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 제도화(참고 자치법규안, ‘19.11월)(자치단체)

#### <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 운영 예시 >

- ▶ (구성) 부단체장, 사회적경제 전담부서(행정협의회 운영), 국고보조사업  
및 자치단체 자체 사업 소관 부서
- ▶ (주요기능)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점검, 사회적경제조직의  
유관 사업 참여 등 연계·조정, 현장 수요에 기반\*한 정책·사업 수립

\* (민·관)사회적경제위원회 의결사항을 행정협의회에서 논의, 정책·사업에 반영



- **(내실화)** 행정협의회는 내부 협업·정책조정 중심으로 운영하되, 민간 현장 및 중앙부처 연계 강화('19.11월)(행안부, 자치단체)
  - 자치단체 사회적경제위원회(민·관 협치) 및 사회적경제 중앙·지방 협의체\*(중앙·지방 협업) 통해 현장-자치단체-중앙을 유기적으로 연계
    - \* 행안부 및 17개 시·도 참여, 자치단체 의견 수렴 및 중앙부처 정책 안내
- **(통합운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 추진체계\*의 경우, 자치단체 필요시 행정협의회를 활용\*\*(국조실, 국토부, 농식품부)
  - \*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관계 부서 협의체(생활SOC 추진단, 행정협의체 등)
  -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 / 행정협의회에 각 사업 안건 상정·일괄 논의
  - 각 사업지침에 '既 설치·운영 중인 유사기구 활용 가능'함을 명시, 중복 운영을 방지하고 사회적경제 및 사업 간 연계를 함께 논의
- **(점검·평가)**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성과(사업 융·복합,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표창 등) 및 평가\* 반영('20.上~)(행안부)
  - \* 자치단체 합동 평가 중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지표 반영 추진('20.上)

### 3 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

- **(교육과정)** 지역 교육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 교재·교육안(8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활용해 교육과정 확대('19.12월)(행안부)
- **(교육이수)** 업무담당자가 사회적경제 교육을 이수토록 안내\*하고 자치단체별 이수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20년)(행안부, 고용부)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 반영('19.12월) 및 교육과정 안내
  - \*\* 공모사업 선정시 담당자 교육이수 비율을 평가 기준에 반영
  - ※ '19.上 기준, 1,342명 중 273명(21%) 교육 이수(시·도 34%, 시·군·구 19%)
- **(전문직위)** 자치단체 내 사회적경제 전문직위 운영을 유도\*하여 장기 재직시 인사상 인센티브 등 제공('19.11월)(행안부)
  - \*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 전문직위 예시(사회적경제) 반영(11.5.)



## [2] 민·관 협치기구

### ① 포괄적 민·관 협치체계 구축

- (제도화) 자치단체와 현장의 소통·협력 확대를 위한 민·관 합동 사회적경제위원회 제도화(참고 자치법규안, '19.11월~)(자치단체)
  -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협회) 및 전문가 외에도 중간지원기관, 전통적 사회적경제기업인 농·수·신협·새마을금고 등 대상 확대

#### <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예시 >

- ▶ (구성) 공동 위원장(부단체장·민간), 사회적경제과·팀(간사), 중간지원기관, 사회적경제기업(협회)\*, 개별법상 사회적경제기업\*\*

\* (시·도) 시·도 단위 사회적경제기업협회 / (시·군·구)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 농·수·신협·생협·새마을금고 (시·도)중앙회 지역본부 / (시·군·구)지역조합 등

- ▶ (주요기능)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방향 협의, 현장의견 수렴, 주요정책 현장전달 및 유관 사업 참여 협의, 민간 주체 간 협업\* 증진 등

\* (예시) 상호 제품·서비스 구매 확대, 동종 기업 간 자재·설비 공동구매·활용, 농·수·신협·생협·새마을금고의 인프라(공간·전문인력) 제공 및 컨설팅 등

### ② 운영 활성화

- (내실화)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협의한 정책방향을 계획·사업에 반영\*하고, 전통적 사회적경제기업 역할\*\* 확대('19.12월)(자치단체)

\* 사회적경제위원회 의결사항은 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서 협의토록 제도화

\*\* 농·수·신협·생협·새마을금고 등의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 확대

※ (사례) 대구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정책 제안(38건)→30건 사업 반영

- (점검·평가)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운영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에 반영('20.上~)(행안부)

\* 자치단체 합동 평가 중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지표 반영 추진('20.上)



### [3] 중간지원기관 개선

#### < 중간지원기관 유형 >

구 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
예산 지원 주체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유 형	사회적기업·협동조합 <u>권역별 통합지원기관</u> (진흥원 선정)	<u>사회적경제 지원센터</u> (시·도 지정)	사회적경제지원센터(69개) ※ 공동체 지원센터(131개), 도시재생지원센터(193개) 등
	<u>마을기업 지원센터</u> (국비·지방비 50:50, 시·도 지정)		

- ▶ 시·도 단위 중간지원기관은 3개 유형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일원화하거나 분리 운영 중(통상 비영리법인을 지원센터로 선정) [참고5]

#### 1 중앙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

- (역량강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대상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직무·직급별 특화 교육과정 추진('20년)(기재부, 고용부)
  - 연차별 교육수요(실무→전문→기획)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및 창업멘토('19.12월)·성장지원센터 운영기관 종사자 역량강화('20년) 등
  - \* (1년미만) 사회적경제기업 현장탐방 및 인터뷰, 기본법·업무지침 실무교육 → (3년미만) 경영코칭, Design Thinking, 회계·노무·갈등관리 전문역량 교육 → (관리자급) 지역 발전전략, 정책·기획·리더십 프로그램 등
  - ※ 현재,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대상 직무연수과정('19.上 311명)·워크숍 운영 중
- (기관 간 협업) 자치단체와 지역 내 중간지원기관들의 상호 협업 체계 제도화(참고 자치법규안, '19.11월~)(행안부, 자치단체)
  - 민·관과 다양한 중간지원기관 간 협력·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의 사회적경제위원회 참여 명시



## ② 시·도 단위 중간지원기관

- (기능조정) 시·도 및 중앙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 간 기능·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조정('20.上)(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시·도)
  - 중간지원기관 간 기능·업무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시·도 간 사전협의 절차 마련(기재부, 행안부)
- ※ 중앙부처 지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과 '마을기업 지원센터'는 일원화 추진
- (통합·연계)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 단위의 3가지 중간지원기관을 통합 또는 연계하도록 지원('20.上)(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시·도)
  - 부처 및 시·도 간 사전협의를 통해 1개 기관으로 통합 지정해 운영\*하거나, 컨소시엄 등 기관 간 수평적 협업체계 마련 지원
- \* (사례) 부산·대구·강원은 3가지 중간지원기관을 1개 법인으로 지정, 통합 운영

## ③ 시·군·구 단위 중간지원기관

- (운영확대) 지역의 예산·인력·역할 등을 고려하여 신설 또는 유사 기능의 중간지원기관\* 지정 등 자율적으로 확산('20.上~)(시·군·구)
  - \* 공동체 지원센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 (운영방식) 중간지원기관 신설 및 다양한 중간지원기관 간 연계 여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결정(필요시 시·도 협의)
  - (권역 단위) 예산·인력 부족으로 기관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다수 시·군·구 관할의 권역별 기관\* 운영(시·도 주관)
  - \* (사례) 경북(23개 시·군·구)은 3개 권역(남부·서부권, 북부권, 동부권)별 운영
  - (기능통합) 1개 법인이 사회적경제·도시재생·공동체 등 사무 수탁\*, 각 사무 수행 조직은 수평적 협업, 해당 법인은 협업 총괄·조정
  - \* (사례) 전주시 도시혁신센터(사회적경제·공동체·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합 운영)
  - (장소통합) 별도 기관을 운영하여 영역별 전문성을 확보하되,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동일 시설 입주·운영\*
  - \* (사례) 전남(사회적경제·공동체·지신보), 제주(서민금융·사회적경제) 등



## (1) 지역사업 참여 확대

### 1 사업 관련 규정 개정 등

-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통해 조성된 생활편의시설 사용·위탁관리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 활용('19.4월 사업가이드라인 반영)(국토부)

#### < 사업유형별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사례 >

- ▶ (중심시가지형) 시장 내 빈 점포(47개소) 무상 신탁, 리모델링 및 안전 관리 지원을 통해 '추억의 상가' 운영(경남 창원시, 부림창작공예촌협동조합)
- ▶ (경제기반형) 사회주택 건설 및 운영관리, 커뮤니티 공간 의무화 및 자치규약 마련 등 공동체 복원(서울 마포구, 녹색친구들)
- ▶ (일반근린형) 마을공용부엌·문화상점 운영 수탁, 마을 경비·택배보관·마을주차장 관리 등 마을관리소 기능(인천 남동구, 만부마을관리협동조합)
- ▶ (주거지지원형) 지역 청년활동가 대상 프로그램 진행, 애완용품 판매 스토어·카페 운영(서울 강북구, 오늘만협동조합)
- ▶ (우리동네살리기형) 집수리·조경·원예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부산 우리家협동조합)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정\* 확대, 재원조달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도입 추진 등 관련 제도 자치단체 대상 홍보 강화('20.上)

\*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지원(매년 10개), 예비사회적기업 250개 지정(~'22년)

- (생활SOC) 사례집 발간 등 자치단체 활용 가능한 선도사례 확산, 사업계획서 반영 등을 통한 참여 활성화 유도('20.上)(국조실)

-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 참여내용 적시\*

\* (예시) 복합화 대상 생활SOC 사업 신청시, 주민 의견수렴 과정·결과 등

※ 국조실·전문가·자치단체 협업을 통해 지역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20년~)



-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지역 내 서비스 제공자로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활용[선도사업 추진계획('19.1월) 반영](복지부)

- '20년 사업 실행계획서 수립 시 신규 참여('19년말~)

※ 해당 지역의 사업분야·내용에 따라 자치단체와 협의, 사업 참여

▶ (노인 사업) 광주 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부산 북구, 부산진구, 경기 안산, 경기 남양주, 충북 진천, 충남 청양, 전남 순천, 제주 서귀포

▶ (장애인 사업) 대구 남구, 제주 제주 ▶ (정신질환자 사업) 경기 화성

- (어촌뉴딜300) 사업 전 단계에 참여를 유도·배려하도록 시행지침 명시(3.28.), 사업 시행권자를 사회적경제조직까지 확대\*(법령개정, 8.27.)

\* 「어촌어항법」(8.27.)·시행령('20.1월 예정),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업 전부·일부 시행 가능

- 자치단체 워크숍 개최를 통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자치단체·유관기관(복지부·자활센터) 간 협업체계 구축 지원

※ 관계기관 간 MOU 체결 등 추진('20.上~)

- (농촌신활력플러스)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이 사업 예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 반영\*('18.4월~)(농식품부)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포함 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

- '20년 신규지구는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해 선정할 예정(~'19.11월 자치단체 신청, 12월 선정)

\* 선정평가 기준에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여부' 명시('19.9월 자치단체 통지)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준공 이후 지역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조직 입주, 중간지원기관 중심으로 운영조직 구성(기본계획\* 반영)(산업부)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19.6월)

- 既 선정 지역은 중앙·자치단체 간 상시협의 및 보완 컨설팅\* 지속('19.12월~), 신규 혁신타운 3개소 선정 추진('19.12월 공모)

\* 시·도 단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 (기타) 장기공공임대주택 조성(국토부), 귀농귀촌활성화 및 사회적 농업(농식품부)도 사회적경제 연계 확대 추진
  - (장기공공임대주택) 사회적기업·협동조합으로 제한된 단지 내 입주대상 확대('20.上, 관련 지침 개정)
  - (귀농귀촌활성화) 귀농귀촌인 재능·경력정보를 자치단체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과 공유,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지원('20년)
- ※ 귀농귀촌교육 내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편성('19.3월), 既 운영 중
- (사회적농업) 사업대상 조직 형태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명시('18년) 하였고, 관련 교육을 위한 거점농장 육성 추진('20년 사업지침 신규)

## 2 자치단체 역할 강화

- (총괄조정) 부단체장 중심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를 통해 사업 간 융·복합 및 사회적경제 연계 강화('19.11월~)(자치단체)
  - 국고보조사업 및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자체사업 전체에 대한 연계 확대
- ※ 중앙·지방정책협의회(부단체장), 사회적경제 중앙·지방협의체를 통해 관심 환기

## 3 참여기회 확대

- (사업안내)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가능 사업을 자치단체에 안내\*, 중간지원기관 및 현장에 전파('20.上~)(기재부, 진흥원)
  - \* 「사회적경제 주요사업 안내」(매년 상반기), 유관사업(52개) 내용·일정·담당자 등
  - 자치단체는 중앙부처 예산 확정시(매년 12월) 계속 사업은 전년도 사업규모·일정을 기반으로 사업 참여 준비\*(행안부, 자치단체)
  - \* 행정협의회를 통해 사업공모 협의 → 사회적경제위원회를 통해 현장 안내
  - ※ 중앙부처 사업의 공고~선정과정이 단기간에 진행되므로, 사전 준비 필요
- (참여분야) 유관 사업 및 참여분야 지속 발굴(기재부), 사업지침상 사회적경제조직 참여·가점 등 인센티브 명시('20.上~)(각 부처)



## [2] 유희시설 활용 확대

- (국유재산)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유희 국유재산 활용 방안 수립시, 재산관리기관은 자치단체에 **수익매각 검토**(‘20년~)(기재부)
  - ※ 「국유재산법 시행령」 §40③4.자치단체 직접 공용·공공용 사용시 수익매각 가능  
「국유재산 처분기준」 §5① 시행령 §40③4호의 수익매각은 기재부 승인 필요
- 자치단체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민·관이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자치단체가 구체적 계획·예산 수립 후 수익매각 요청
- (공유재산) 유희 공유재산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임대 적극 추진**  
[「공유재산법 시행령」 既 개정\*(‘18.12월)](자치단체)
  -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수익계약 및 임대료 경감(조례로 50%) 가능(§13·§17)
- 민·관 협치기구인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지역 내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 파악 및 세부 사용주체 협의 등 진행

## [3] 행정부담 경감

- (서류\*감축) 전산망(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 **확인 가능 서류 등 실효성 낮은 서식 지속 발굴**, 제외·간소화(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 \* 설립(신고·인증·지정), 운영·관리(경영공시·사업보고·사업비신청 등) 일체
- **사회적기업**은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전산망 확인 가능한 **4대 보험 관련 서류 등 감축 추진**(‘20년~)
- **협동조합**은 경영공시자료 중 **사업결산보고서→결산자료 대체**(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설립시 **임원이력서·사진 제외\*** 추진(‘20년~)
  -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같이 약력만 받도록 간소화
- **마을기업**은 법\* 제정시 시행령에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항을 마련해 서류 제출 제외 추진(법 통과 이후)
  - \*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발의(박정의원, 5.15.)



## (1) 인재양성 확대

### ① 지역의 교육역량·인프라 강화

- (표준교육안)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대상별 맞춤형 표준교육(안)\* 개발·보급(고용부, 행안부, 진흥원)
  - \* 주민 표준교재('19.12월), 예비 취·창업자 및 기업 종사자 경영·실무 교육안(~'20년)
- 표준교육안 마련 전까지 자치단체에서 既 시행 중인 우수 교재·교육(안)을 우선 발굴·공유('19.12월)
- (프로그램) 지역현장의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훈련프로그램 개발·시행 추진('19.12월)(고용부)
  - \* (예시) 사회적금융, 공공구매(조달),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 (강사) 자치단체 현장에서 교육 추진시 활용 가능한 강사DB 구축·제공('20.上)(고용부)
  - 전문강사 지속 양성('19년 25명→'22년 300명), 사회적기업가 등 충원경로를 다양화해 DB 구축

### ② 자치단체 주관 교육 확대

- (맞춤형 교육) 주민 기초 소양교육, (예비)취·창업자 대상 단계별 교육, 기업종사자 실무교육 등 현장 중심 인재양성('20년~)(자치단체)
  - 사회적경제 인재 유입을 위한 기초 소양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회계 등 실무교육 추진
  - 취·창업 지원은 기존 창업 공모사업 중심에서 '기초교육→창업지원→마케팅 등 실무교육→경영·상품개발 등 고도화'로 세분화\*
  - \* 자치단체 우수 교육·창업프로그램을 공유('19.12월), 표준교육안 마련('20년)



- (제도화) 자치단체의 인재양성 책무\* 조례 명시, 자치단체 추진계획 반영 등 교육 운영 제도화('19.11월~)(행안부, 자치단체)
  - \* 중앙부처 제공 교육안·강사DB 및 시·군·구, 중간지원기관, 성장지원센터 활용
  - ※ 참고 자치법규안 마련, 향후 자치단체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
-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자치단체 합동평가 반영 추진 및 각 지역 우수 교육과정\* 및 협업사례\*\*를 발굴·전파('20.上)(행안부)
  - \* 인큐베이팅→창업→초기 금융조달→경영·상품개발 고도화(광주·대전·경기·강원)
  - \*\* 지역 실험, 교육 운영을 위한 유희공간(회의실·강당 등) 제공 가능(대구·경북)

### 3 지역 시설 활용

- (대학) 자치단체 협업, 학부 개설\* 등 추진 중인 대학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으로 추가 지정('19.12월)(고용부, 교육부)
  - \* 상지대(강원)·한남대(대전) 사회적경제 학부과정 개설 예정('20년~)
  - \*\* 지정시 지역문제 해결 거점화(이화여대: 서울 서북 도시재생 프로젝트 진행 등)
- (초·중·고) 이미 배포한 교수·학습자료('19.2월)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지원\*('19.12월~)(교육부, 시·도)
  - \* 교과(사회·통합사회 등)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학교 사회적경제 교육 지원
- (성장지원센터) 자체 교육 확충\* 및 자치단체 교육과정 수탁·장소 제공 등 협업, 신규 3개소 조성 추진\*\*('20년, 10개소→13개소)(고용부)
  - \* 국민참여예산['20년(안) 5억원], 성장지원센터별 교육계획 수립·시행('20.上)
  - \*\* 복권기금['20년(안) 31억원], 입지 선정 및 공사 예정
- (사회적경제기업) 농·수·실험·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상 사회적경제 기업의 유희 공간 활용('20.上)(자치단체)
  - 개별법상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치단체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참여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역 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협의
  - \* (시·도) 농·수·실험·생협·새마을금고 중앙회 지역본부 / (시·군·구) 지역조합



## [2] 금융접근성 제고

### ① 지역 간 편차 완화

- (중개기관) 지방 소재 중개기관을 발굴(실태조사)하고, 교육·우수사례 전수 등 사회적금융 사업수행\* 역량 강화('19.12월~)(금융위)

\* 서민금융진흥원이 민간 사업수행기관(10개)을 통한 대출 등 자금지원 중

- (지역 기반 금융기관) 지역 내 농·수·신협·새마을금고의 사회적 금융 역할 확대('19.12월~)(행안부, 금융위)

- 자치단체와 협치를 제도화\*하여 지역 내 역할 강화, 신협중앙회를 중심으로 거점 신협\*\* 지정·기능 강화

\* 자치단체 사회적경제위원회에 개별법상 사회적경제기업 참여(조례 명시)

\*\* 사회적경제기업에 적극적인 금융 공급 등 선도적 역할 수행(70개소)

#### < 금융기관·자치단체 협업 사례 >

- ▶ (경기) 지역 신협과 협업해 융자조건 완화 및 이자차액 보전 실시, 도금고(신한은행)와 협업을 통한 부동산 자산화 사업 시행 중
- ▶ (대전) 하나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협업을 통해 특례보증(신보)·융자지원 및 이자감면(은행)·이자차액 보전(자치단체) 등 종합적 금융지원

### ② 금융심사시 사회적가치 고려

- (평가체계) '18년 마련한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체계\*' 모형을 확정하고 보증심사에 사회적가치 반영('20.上~)(금융위)

\* 기업미션, 제품·서비스의 사회적가치 지향 등 사회적가치 부문을 60~70% 반영

- 사회적금융 유관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19.10월), 사회적금융협의회\*를 통해 확산 유도('20.上~)

\* 금융위, 농·수·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7개 관계기관 참여



- **(지속성 제고)** 사회적가치 반영 투·융자시 경영컨설팅을 병행해 기업 경쟁력 강화, 투·융자 회수 등 **선순환 유도**(자치단체 등)
  - 금융기관·자치단체·중간지원기관이 **대출 정보를 공유**, 이를 바탕으로 재무·경영 관련 **종합 컨설팅\***(평가체계 확정 이후)
    - \*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교육, 마케팅·상품 개발 등 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 ③ 자치단체 금융정책 역량 강화

- **(자치단체 기금)**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필요시 기금을 조성·운영 하도록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기금 사례 발굴·공유**(‘19.12월)(행안부)
  - 기금 **조성방법 및 제도화(조례)**, 운영·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사례를 유형화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성**토록 지원

#### < 자치단체 기금 운영 사례 >

- ▶ **(서울)** 조례 설치 후 자치단체 **예산 출연**을 통해 기금 조성(215억원, '13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융자사업**은 민간 기관을 선정해 운용
- ▶ **(부산·인천)** 별도의 조례 없이 지역 내 공공기관이 **출연**해 기금 조성 (부산 10.4억/인천 4.5억, '18년~), 사회적기업연구원·사회연대은행 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에 기금 **운영·관리를 위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6②,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은 민간위탁 금지

- **(정책안내)** 자치단체의 정책 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 설명\***(‘19.12월) 및 지방공무원 **표준교재(안) 반영** 추진(‘20.上~)(금융위, 행안부)
  - \* 사회적경제 우수사례·성과공유회 개최시 안내, 중간지원기관 전파
  - 자치단체와 중간지원기관이 현장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금융정책·상품 안내 등 기능 수행
- **(정보공유)** 既 제공 중인 **중개기관 DB 갱신**(매년), 중개기관 **취급 사회적금융상품 내용 확대 공개\***(‘19.12월)(금융위)
  - \* 대출한도, 금리 등을 상품 또는 대상별로 분류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



### (3) 판로 확대

#### ① 정책대상 확대

- (구매기관) 우선구매 정책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청 등\*\*\*으로 명시(참고 자치법규안)(행안부, 교육부, 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상 시·도 및 시·군·구(읍·면·동), 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의회

\*\*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관(사업소 등), 지방공사, 지방공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 교육지원청, 공립학교

- (수혜대상) 자치단체 판로 지원 정책·사업에 자활기업을 추가\*, 자치단체 합동평가\*\*를 통해 구매 확대('20년~)(행안부, 자치단체)

\* 구매촉진 관련 조항 마련(조례), 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통해 통합 지원

\*\* '20년 실적부터 평가하도록 합동평가 지표 既 반영(사회적경제 분야 우선구매율)  
( '19년)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 ('20년) 자활기업 추가

#### ② 공공기관 접근성 강화

- (간접구매) 지역 내 공공기관(국가·지방공기업)의 대규모 계약(물품·용역) 발주시 사회적경제 간접구매\* 확대('20.上~)(시·도\*\*)

\* 계약 조건에 “계약당사자가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용역을 구매”토록 명시

\*\* 각 시·도에서 공공기관 협의(MOU 등)를 통해 간접구매 조건 도입 확산

※ (적용예시) 단체급식위탁(식재료), 청소용역(청소용품, 세제), 인쇄(복사용지), 학술용역(지역현황 분석), 사무기기 유지보수(잉크, 토너) 등

- (컨설팅) 공공시장(방과후 교육 등 서비스위탁) 진입 역량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대상 공공구매 컨설팅\* 지원('19.12월)(기재부)

\* 공공시장 판로분석, 영업전략 코칭, 사업제안서 등 서류 작성 컨설팅

#### < 기타 공공기관 구매촉진 우수사례 >

- ▶ 공공구매 지원조직 운영(광주·강원·경남·제주), 공공구매 플랫폼 운영(충남), 지역 내 공기업 우선구매 MOU(인천), 공공기관 내 상설판매장(경북)



### ③ 수의계약 운영 내실화

- (기관 내부지침) 법령 개정사항\*을 공공기관 내부지침\*\*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 정비 추진('20.上)(자치단체, 행안부)
  - \* 사회적경제기업(취약계층 30% 이상 고용)은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5천만원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4③, 3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가능  
「강원·경인·충청지방우정청 일상감사 지침」 일상 감사 대상(2천만원 초과)
  - \*\*\* 「금남군 일상감사 규칙」 일상 감사 대상(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등
- (계약담당자) 관련 제도를 활용해 자치단체 계약담당자의 수의계약 부담을 낮추고, 적극행정 유도('20.上)(자치단체)
  - 수의계약 요건 충족시 부단체장 주재 행정협의회를 통해 결정\* 또는 자치단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견 제시 요청\*\*
    - \* 사업 부서가 안건 상정(서면심의 등) / 제도 정착시까지 한시 운영(~'21년)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12)하고 그 의견에 따른 경우 징계 면책(§16)

### ④ 공공·민간 소비 활성화

- (구매목표) 시·도에서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공공기관 구매 목표 설정, 구매실적 작성\*을 통해 내실화('20.上~)(자치단체)
  - \* 매년 작성, 적용기관에 대한 관련 자료제출 요구 권한 명시(조례)
- (유통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추가 설치('20.下 2개소)(행안부)
  - \* 재정 인센티브 10억원, '18년 2개(인천·충남), '19년 2개(강원·전남) 선정 완료

#### < 유통 전문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례 >

- ▶ (대구 무한상사) 유사·동종 업체 공동 재료구입, 상품기획 및 홍보·판촉
- ▶ (강원 강원곳간) 공동브랜드 운영, 물류센터 및 전시판매장 구축·운영
- ▶ (경북 사회적기업종합상사) 상품 기획·판촉, 고객 관리 등 영업지원



## IV. 향후 추진상황 관리

### □ 추진상황 점검 [붙임2]

- (관계부처) 현재 구성·운영 중인 TF를 통해 과제 추진상황 확인 ('20.上~, 수시)

- (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중앙·지방협의체를 통해 시·도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분기별, 시·군·구 실적 포함)

\* 조례 제·개정 및 전담조직 설치 현황, 협업체계 설치·개최, 추진계획 수립 등

- 연초에는 전년도 공공구매 및 추진실적, 당해년도 업무계획·유관사업 연계방안, 연말에는 정책 우수사례·정책성과 등 중점 점검

※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자치단체 합동평가 반영 추진('20.上~)

### □ 우수사례 공유·확산

- 재정·인프라 부족 문제를 극복한 사례 및 지역 맞춤형 창의적 환경 조성 시책을 발굴해 전국 확산('20.上~)

※ (예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광주, 경기, 강원), 하나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대전), 공기업 기금 조성(부산), '공공구매 지원단' 등

-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여 주요 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주요 정책 논의, 담당자 표창 등 추진(연말)



## 제1장 총 칙

목적	(내용)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효과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정의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포함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기업과 중간지원기관, 분야별 협의체·연합회 등 사회적경제연대조직 포함 (중간지원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계·협력을 돕는 조직
자치단체 책무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 제2장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 기본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부단체장·민간 공동위원장, 사회적경제조직 등 (기능)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방향 및 민·관 협력방안 심의·자문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	(구성) 부단체장, 사회적경제 담당 국·과 및 사업 소관 부서 등 (기능) 정책방향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점검, 사업 간 연계·조정, 위원회 주요 안건에 대한 자치단체 정책·사업 반영 논의
실태조사 및 평가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사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및 평가결과는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 제3장 사회적경제 생태계

인력·금융·판로 등	(인력양성) 전문인력, 담당공무원,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강화 (금융지원)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및 기금의 설치 (판로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명시 및 실적관리
------------	--

## 제4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기능) 자치단체,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계·협력 및 생태계 지원 (운영) 기초 – 유사 업무 기관의 통합 운영 근거 마련 광역 – 관할 구역 내 권역별 운영 등
-----------------	---

## 제5장 보칙

포상	(대상)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공기관·사회적경제조직 담당자
지도·감독	(내용) 재정지원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도·감독



## 붙임2

##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번호	과제내용	일정	기관
<b>1. 지역의 추진기반 공고화</b>			
1-1-1	참고 자치법규(안) 마련, 운영실태 점검·지원	'19.11.	행안부
1-1-2	사회적경제 전담조직 역할 강화, 제도화	'19.12.	행안부, 자치단체
1-1-3	부단체장 중심의 행정협의회 제도화	'19.12.	자치단체
1-1-4	중앙·지방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장~중앙 연계	'19.12.	행안부, 자치단체
1-1-5	유사 사업추진체계 통합 운영을 위한 지침 개정	'20.上	국조실, 국토부, 농식품부
1-1-6	행정협의회 운영 성과 점검 및 평가 반영	'20.上~	행안부
1-1-7	표준 교육안을 통한 지방공무원 교육과정 확대	'19.12.	행안부
1-1-8	담당자 교육 이수를 위한 지침 개정·인센티브	'19.12.~	행안부, 고용부
1-1-9	사회적경제 전문직위 운영을 위한 지침 개정	'19.11.	행안부
1-2-1	민·관협업을 위한 사회적경제위원회 제도화	'19.12.	자치단체
1-2-2	민·관 간 연계 및 농·수·신협 참여 제도화	'19.12.	자치단체
1-2-3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실적 점검·평가 반영	'20.上~	행안부
1-3-1	중간지원기관 대상 맞춤·특화 교육과정 추진	'20.上	기재부, 고용부
1-3-2	자치단체 및 중간지원기관들 간 협업 제도화	'19.12.	행안부, 자치단체
1-3-3	시·도 중간지원기관 관련 사전협의, 기능 조정	'20.上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시·도
1-3-4	시·도 중간지원기관 통합·연계 지원	'20.上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시·도
1-3-5	시·군·구 중간지원기관 개편·신설 추진	'20.上~	자치단체
<b>2. 현장 활동 지원</b>			
2-1-1	도시재생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지정 및 홍보	'20.上	국토부
2-1-2	생활SOC사업 참여 사례집 발간	'20.上	국조실
2-1-3	사업계획에 참여내용 적시 및 활성화방안 마련	'20.上~	국조실
2-1-4	지역사회 통합돌봄 세부사업 참여(각 자치단체)	'19.12.~	복지부
2-1-5	어촌뉴딜 워크숍,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지원	'20.上~	해수부
2-1-6	참여 여부를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선정에 반영	'19.12.	농식품부
2-1-7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컨설팅 및 추가 선정	'19.12.	산업부
2-1-8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입주대상 확대	'20.上	국토부
2-1-9	귀농귀촌인의 사회적경제 분야 유입 지원	'20.上	농식품부
2-1-10	사회적농업 교육을 위한 거점농장 육성	'20.上~	농식품부



번호	과제내용	일정	기관
2-1-11	사회적경제의 사업 연계를 위한 행정협의회 운영	'19.12.~	자치단체
2-1-12	사회적경제조직 참여가능 사업 안내·발굴	'20.上~	기재부, 진흥원
2-1-13	참여 사업·분야 지속 발굴 및 인센티브 명시	'20.上~	기재부, 각부처
2-2-1	유희 국유재산 활용방안 마련시 수의매각 검토	'20.上~	기재부
2-2-2	유희 공유재산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임대	'19.12.~	자치단체
2-3-1	사회적기업의 4대 보험 관련 서류 등 감축	'20.上~	고용부
2-3-2	협동조합 사업결산보고서·임원이력서 등 제외	'20.上	기재부
2-3-3	마을기업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항 마련	'20.下~	행안부

### 3.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 조성

3-1-1	대상별 사회적경제 표준교육(안) 개발·보급	'19.12.~	고용부, 행안부 진흥원
3-1-2	지역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개발·시행	'19.12.	고용부
3-1-3	강사 충원 다양화, DB 구축 및 자치단체 제공	'20.上	고용부
3-1-4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 실시	'20.上	자치단체
3-1-5	자치단체의 인재양성을 조례 및 추진계획 반영	'19.12.~	행안부, 자치단체
3-1-6	자치단체 교육실적 평가 반영 및 우수사례 발굴	'20.上~	행안부
3-1-7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추가 지정	'19.12.	고용부, 교육부
3-1-8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 활성화 지원	'20.上~	교육부, 시·도
3-1-9	성장지원센터 교육기능 강화 및 신규 조성	'20.上	고용부
3-1-10	교육 추진시 사회적경제기업 유희 공간 활용	'20.上~	자치단체
3-2-1	지방 소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발굴·육성	'19.12.~	금융위
3-2-2	농·수·신협·새마을금고의 역할 확대	'19.12.~	행안부, 금융위
3-2-3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체계 보증심사 반영	'20.上~	금융위
3-2-4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투·융자시 컨설팅 지원	'20.上~	자치단체 등
3-2-5	사회적경제 관련 기금 모델 발굴, 공유	'19.12.	행안부
3-2-6	자치단체 대상 사회적금융 정책 안내(교육안 반영)	'19.12.~	행안부, 금융위
3-2-7	사회적금융 중개기관·금융상품 정보제공 확대	'19.12.	금융위
3-3-1	우선구매 등 구매촉진 적용기관 조례 명시	'19.12.	행안부, 교육부, 자치단체
3-3-2	자활기업의 판로정책대상 포함, 실적 평가	'20.上~	행안부, 자치단체
3-3-3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간접구매 확대	'20.上~	시·도
3-3-4	협동조합 대상 공공기관 우선구매 컨설팅	'19.12.	기재부
3-3-5	수의계약 관련 공공기관 내부지침·조례 개정	'20.上	행안부, 자치단체
3-3-6	계약담당자의 수의계약 관련 적극행정 유도	'20.上	행안부
3-3-7	시·도 시행계획상 구매목표 반영(연말 실적 작성)	'20.上	자치단체
3-3-8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추가 설치	'20.下	행안부



## ◁ 참고자료 ▷



# 참고1

## 자치단체별 전담부서 설치 현황 ('19.6월 기준)

(단위 : 개)

	시·도	시·군·구		
	課 명칭	과 단위	팀 단위	타업무 병행
합계	12 (70.1%) ※일자리/공동체 5	12 (5.3%)	74 (32.7%)	140 (62%)
서울	사회적경제담당관	5	19	1
부산	사회적경제과		1	15
대구	사회적경제과		3	5
인천	사회적경제과		4	6
광주	일자리정책관		5	
대전	사회적경제과		5	
울산	사회적경제과			5
세종	참여공동체과 팀	-		
경기	사회적경제과	1	15	15
강원	사회적경제과	1	5	12
충북	민간협력공동체과			11
충남	경제정책과 팀	2	2	11
전북	사회적경제과	3	4	7
전남	사회적경제과		5	17
경북	사회적경제과		2	21
경남	사회적경제과		4	14
제주	경제정책과	-		



## 참고2

## 자치단체별 조례 현황('19.8월 기준)

(단위 : 개)

지역	합계	시·도		시·군·구		개별 기업 지원 조례 포함시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소계	조례명	소계	운영지역	
전국	200	30	설치 시·도: 16/17	170	143/226	361 (시도 46, 시군구 315)
서울	35	4	·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 사회적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 · 사회투자기금 조례	31	20/25	54 · 시 6 / 구 48 · 운영지역 25 / 25
부산	7	2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5	3/16	29 · 시 4 / 군·구 25 · 운영지역 16 / 16
대구	5	2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3	3/8	17 · 시 4 / 군·구 13 · 운영지역 8 / 8
인천	12	3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9	9/10	13 · 시 3 / 군·구 10 · 운영지역 10 / 10
광주	9	2	·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7	5/5	11 · 시 4 / 구 7 · 운영지역 5 / 5
대전	3	0	-	3	3/5	12 · 시 2 / 구 10 · 운영지역 5 / 5
울산	4	1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3	3/5	10 · 시 3 / 군·구 7 · 운영지역 5 / 5
세종	2	2	·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 사회투자기금 조례	-	-	2
경기	36	3	·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	33	28/31	49 · 도 3 / 시·군 46 · 운영지역 31 / 31
강원	14	1	·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13	11/18	26 · 도 1 / 시·군 25 · 운영지역 18 / 18
충북	3	1	·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2	2/11	18 · 도 3 / 시·군 15 · 운영지역 11 / 11
충남	14	2	·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12	9/15	21 · 도 2 / 시·군 19 · 운영지역 15 / 15
전북	6	1	·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5	4/14	25 · 도 3 / 시·군 22 · 운영지역 14 / 14
전남	22	2	·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20	20/22	23 · 도 2 / 시·군 21 · 운영지역 21 / 22
경북	15	1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14	14/23	26 · 도 1 / 시·군 25 · 운영지역 23 / 23
경남	11	1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10	9/18	25 · 도 1 / 시·군 24 · 운영지역 18 / 18
제주	2	2	·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	-	4

※ 교육청 조례 제외(교육청 10개 시·도교육청에서 11개 조례 운영 중)



### 참고3

## 자치단체별 업무 담당자 교육 현황 ('19.上)

□ 담당자 교육 이수: 총 1,342명 중 283명 교육 이수(21.1%)

(단위 : 명)

지역	시·도		시·군·구	
	담당자	교육이수자	담당자	교육이수자
합 계	181	62 (34.3%)	1,161	221 (19.0%)
서울	23	23	142	93
부산	13	4	75	18
대구	11	0	22	0
인천	11	4	35	8
광주	4	3	12	2
대전	13	6	14	4
울산	11	1	9	2
세종	1	1	-	-
경기	21	0	204	18
강원	14	4	44	3
충북	7	0	42	0
충남	5	1	60	4
전북	12	9	73	23
전남	8	4	49	3
경북	13	2	67	0
경남	2	0	313	43
제주	12	0	-	-



# 참고4

## 자치단체별 협업 기구 현황 ('19.上)

	시·도				시·군·구			
	사회적경제 위원회		민·관협의체		사회적경제 위원회		민·관협의체	
	설치	개최	설치	개최	설치	개최	설치	개최
합계	15곳	14곳	15곳	14곳	103곳	41곳	23곳	19곳
서울	○	○	○	○	13	6	2	1
부산	○	○	○	○	1	0	2	1
대구	○	○	○	○	3	0	8	8
인천	○	○	○	○	10	4	0	0
광주	○	○	○	○	4	3	0	0
대전	×	×	×	×	2	2	0	0
울산	○	○	×	×	2	1	0	0
세종	○	○	○	×	-			
경기	○	×	○	○	15	10	3	3
강원	○	○	○	○	7	4	0	0
충북	×	×	○	○	5	0	0	0
충남	○	○	○	○	10	4	1	1
전북	○	○	○	○	11	1	4	3
전남	○	○	○	○	12	3	0	0
경북	○	○	○	○	3	0	1	0
경남	○	○	○	○	5	3	2	2
제주	○	○	○	○	-			



# 참고5

## 자치단체별 중간지원기관 현황 ('19.6월 기준)

구 분	시·도			시군구	비 고
	중앙부처 예산지원		자치단체 예산지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합 계	33개소			69개소	지활지원센터 제외
서 울	○	○		23	
부 산	○			0	
대 구	○			0	
인 천	○	○	○	5	
광 주	○		○	3*	* 공동체 지원센터
대 전	○ (세종과 공동 운영)	○	-	1	
울 산	○	○		1	
세 종	○ (대전과 공동 운영)	○	-	-	
경 기	○	○		21	
강 원	○			2	
충 북	○	○	-	0	
충 남	○		○	3	
전 북	○	○	-	4	
전 남	○	○	○	0	
경 북	○	○	-	3*	* 권역별 운영
경 남	○	○	○	3	
제 주	○	○	-	-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재부·고용부 예산 지원, 진흥원이 지정
- (마을기업) 행안부와 시·도 50:50 예산 지원, 시·도가 지정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도 예산 지원, 시·도가 지정
- (시·군·구 단위) 시·군·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 시·군·구가 지정



## 참고6

## 시·도별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18년말 기준)

(단위 : 개)

구 분	비 중	합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합계	100%	19,253	2,122	14,476	1,442	1,213
서울	21.3%	4,096	389	3,463	91	153
부산	5.2%	993	102	730	75	86
대구	4.2%	810	68	615	78	49
인천	3.4%	647	126	418	56	47
광주	5.1%	976	109	755	56	56
대전	3.7%	720	63	582	50	25
울산	2.0%	390	77	261	34	18
세종	0.7%	135	10	96	19	10
경기	17.2%	3,306	355	2,603	170	178
강원	5.7%	1,107	119	798	111	79
충북	3.6%	688	93	457	81	57
충남	4.4%	851	94	583	120	54
전북	6.6%	1,265	127	929	102	107
전남	5.5%	1,054	112	717	140	85
경북	5.3%	1,011	133	657	115	106
경남	4.5%	861	97	568	113	83
제주	1.8%	343	48	244	31	20



---

#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

2019. 12.

관계부처 합동







---

#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

2019. 12.

관계부처 합동



## 순 서

I. 추진배경 .....	407
II. 현황 및 문제점 .....	409
III. 목표 및 추진전략 .....	411
IV. 추진 방안 .....	412
1.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	412
2.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414
3. 지역 활성화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419
4. 사회서비스 제공 다양화 .....	426
5. 농·수산물조합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	428
V. 추진과제 목록 .....	431



□ 농산어촌은 공간적으로 범위가 넓고 인구밀도가 낮아 도시와 같은 주민활동 및 사회서비스 전달에 제약

○ 국토의 대부분이 농산어촌에 해당하나, 거주하는 인구는 적고 고령화가 진전된 상태

\* 읍·면은 국토면적의 83%, 거주 인구는 18.8%, 65세 이상 인구 비중 21.5%('18)

○ 농산어촌의 주요 산업인 농림어업은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액이 지속 증가하나 종사자는 지속 감소

\* 농림어업 생산액: ('10) 55조원 → ('18) 61 / 농림어가 인구: ('10) 348만명 → ('18) 263

□ 고령자·장애인 비중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의료·복지기관 및 교육·문화·여가시설이 분산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부족

\* 고령자 비중: 전국 14.4%, 농어촌 21.5 / 장애인 비중: 전국 5.0%, 군지역 8.5('18)

○ (의료) 농어촌 주민의 월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도시 지역에 비해 많은 반면,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 여건이 열악

\* 월 5회 이상 의료기관 이용 주민 비율 : 농어촌 5.4% > 도시 3.5%('18)

\*\* 이동 소요시간: 의료기관 23.9분 (도시 15.0), 응급실 26.5분 (도시 18.3)

○ (교육·문화) 도·농간 그리고 읍·면간에도 교육 격차가 존재하며,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문화 향유 기회 제약

\* 면지역 농촌주민 이주 희망사유 중 자녀교육 문제가 14.5%(읍은 6.6, 도시는 5.6)('18)

\*\* 문화여가 시설 부족: 농어촌 8.0% > 도시 3.2 / 이동 불편: 농어촌 4.9 > 도시 1.1('18)

○ 농산어촌의 시장 기능 약화와 정부 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 지대를 보완할 새로운 방안 모색 필요



□ 시장기능이 약화된 농산어촌의 문제를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사회적경제에 주목

○ 사회적경제 기업 수·일자리 증가율과 3년 생존율이 일반기업에 비해 높아 일자리 창출이나 지속가능성에 유리

\* '17년 대비 '18년 사회적경제기업 수 증가율은 11.4%('12~'16년 중소기업 연평균 2.6%), 협동조합 등 4대 유형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 10.3%('12~'16년 중소기업 연평균 4.0%)

\*\* 3년 생존율: ('16) 90.5% → ('17) 90.2 → ('18) 90.5 (일반기업 41.5%, '16년말)

○ 농산어촌에는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수·산림조합을 비롯하여 주민 간의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경제활동 경험에 축적

\* 신뢰·규범·네트워크 면에서 농촌에 사회적 자본 요인이 많다는 연구 결과 다수

○ 농림어업 외에 복지·환경·교육·문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결합되어 새로운 경제주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확장성 보유

\* 충남 홍성에서는 주민들이 출자하여 의료기관·도서관 등 설립, 보건·교육서비스 보완

□ 농산어촌의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 귀촌인이 증가하는 점도 기회 요소로 작용

○ 국민들은 농산어촌에 식량 생산 외에도 환경·경관보전, 여가 활용 등 다방면의 역할을 기대하며, 이는 귀촌 유인책으로 작용

\* 귀촌 인구: ('13) 42만 명 → ('18) 49 / 30대 이하 비율('18): 49.1%

\*\* 귀촌 이유: (1위) 자연환경, (2위) 가족, (3위) 정서적 여유 ('18, 귀농·귀촌실태조사)

○ 귀촌인의 유입으로 전체 농산어촌 인구는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농산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인력으로 성장 가능

\* 농산어촌인구: ('00) 938만명 → ('05) 876 → ('10) 876 → ('15) 939 → ('17) 963

\*\* 귀농인이 원주민보다 경제조직 참여(75% vs 46), 경제다각화(65% vs 20) 비율 ↑ ('16)

---

⇒ **부처별로 추진해 온 농산어촌 활성화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연계 필요**

---



## 1 사회적경제 활동 인력 부족

- (현황) 농산어촌에는 약 5천 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존재
  - \* 사회적기업 643개, 협동조합 4,207, 마을기업 967, 사회적 농장 9 등('18)
- (문제점) 농산어촌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젊은 인력이 부족
  - 청년층 유출 및 고령화로 농산어촌에 인력이 부족하고,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호소
    - \* 운영상 어려움: 자금 부족 43.6%, 홍보·마케팅 역량 부족 25.3%
  - 지역개발사업 시설, 마을만들기 활동가 등 보유 자원과 지원 정책사업은 많으나,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효과가 제한적

## 2 소득사업 중심의 운영

- (현황) 농산어촌 사회적경제기업은 대부분 농림수산물 생산·가공·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
  -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40.9%, 식품 외 제조·판매 13.8%, 환경·에너지 10% 등('17)
- (문제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임에도 주사업이 일반 농어업법인과 같은 소득사업이고 사회서비스 제공은 적음
  - \* 농촌공동체 회사 262개소('11~'18) 중 사회서비스 유형 58개소(22%)
  - 사회적경제기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판로가 부족하여 안정적 매출 확보가 어려움
    - \* 상품·서비스 판매 시 어려움: 안정적 판로 부재 44.4%, 낮은 인지도 20.9%
  -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으로 창출되는 소득이 낮아 사회서비스 제도 등과의 연계 없이는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움



### 3 지역 활성화 사업 참여 저조

- (현황) 농산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

\* 신활력사업('05~'10, 시·군당 연간 20~30억원 지원), 어촌종합개발사업('94~계속, 권역당 35억원 지원), 산촌종합개발사업('95~'09, 마을당 14억원 지원) 등

- (문제점) 기존의 정책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H/W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었고 농어업법인이 주로 참여

- 지역개발사업 종료 이후의 시설물 방치 및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
- H/W 지원과 더불어 S/W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선도조직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필요

### 4 농·수·산림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한계

- (현황) 농·수·산림조합은 오랜 기간 농림어업인 공동의 경제·신용사업을 해온 경험과 자산이 축적

\* 지역조합 개소수: 농축협 1,118개, 수협 91개, 산림조합 142개('19)

- (문제점) 농·수·산림조합은 그동안 다양한 지역 사회 공헌활동을 해왔으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요구

- 조합원 고령화·감소 추세, 농·산·어촌지역 소멸위기 등의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 역할을 강화할 필요
- 또한, 농·수·산림조합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나 체감도가 낮은 활동에 대해 인지도 제고 필요



## 목 표

농림어업 분야와 농·산·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산·어촌 활력 증진

## 추진전략

- ▷ 농·산·어촌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 ▷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 ▷ 전통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 추진과제

환경  
조성

## F4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 농·산·어촌의 공동체 활성화

## F5 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를 이끌 핵심리더 육성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경영 지원
-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접근성 제고
- 다양한 루트를 통한 판로 확대

지역  
활성화  
사업  
참여

## F6 지역 활성화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 농촌신활력플러스, 로컬푸드, 사회적농업,  
어촌뉴딜 300, 교육농장, 산림일자리발전소,  
신품종 재배 등

## F7 농·산·어촌의 사회서비스 제공 다양화

-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활성화
- 농·산·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확산

농협·수협·  
산림조합

## F8 전통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
- 사회서비스 공급 역할 확대
-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강화



## 1.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 농산어촌에서 사회적경제 인지도를 높이고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여 사회적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창업 지원

□ (인지도 제고) 농림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 농림어업인 교육 과정에 농산어촌 사회적경제 사례와 정책 소개를 포함하고 정부·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확대

\* 귀농귀촌 종합센터 및 귀어귀촌 종합센터 교육, 농업인 국외연수, 기획공모 교육 등

\*\* ('19)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산림교육원 → ('20안)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수협연수원 등으로 확대

○ 소비자단체가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사회적경제기업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박람회 참가 및 온라인 홍보 활동 지원('20.上)

\* 농식품 소비자단체의 사회적경제박람회 및 사회적 농장 견학 지원

□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로 발전 가능한 잠재력 있는 지역 공동체의 활동을 장려

○ 주민 주도적으로 교육·문화서비스를 공급하는 공동체\*('20안: 200개소) 및 지역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농업인 학습조직\*\*('20안: 12개) 지원

\* 10~15명 공동체에 음악·인문학·치매예방 등 프로그램 운영비 5~25백만원 지원

\*\* 농업인 공동체가 직접 학습계획을 수립하면 강사비·교재비·다과비 등 1천만원 지원

## 사 례

○ A 사회적기업(충북)은 초등학교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목공, 도예, 제과제빵, 바리스타교실 운영

-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여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높이고 학부모들은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로 관심을 확대하는 등 지역 교육 공동체 구축



- 어촌자원 활용 및 신규인력 유입 우수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확산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19: 1,116개소)의 사회적경제 조직화 지원

\* 어촌뉴딜 30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관광고도화 사업 등 우선 지원

\*\* 자율적으로 수산자원 관리, 어업경영 개선, 어업 질서 유지하는 어업인 공동체로, 활동실적 평가 시 사회적경제 활동에 가점 부여

#### 사 례

- B 어촌계(경기)는 공동생산 및 공동판매를 원칙으로 효과적인 유통방법 개선 노력과 서식 어·패류 자원보호를 위한 어장 휴식년제 도입 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어촌생활·정주여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마을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바다가꿈' 프로젝트\* 추진('20안: 20개소)

\* 서비스디자인(Nudge 이론) 개념을 적용하여 주민 행동변화를 통해 어촌경관 개선 추진

- 채소재배, 공예품 제작 등 농촌 어르신에게 적합한 소일거리를 사업화하고 마을공동체 등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19: 88개소)

\* 농촌노인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신체·정신·사회적 건강프로그램 지원

#### 사 례

- C 마을(충북)에서는 고령자들이 함께 머위를 시설에서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고 또한 건강관리 및 취미교육을 통해 우울감 해소

- 산림을 활용한 새로운 공동체 사업모델을 확산\*하고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이 함께 숲을 가꾸는 나눔 공동체\*\* 운영

\*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18.12월)

\*\* 사회복지시설에 조성한 나눔숲을 시민정원사,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지역주민 등이 함께 가꾸는 공동체 활동을 전개(매년 50개)

#### 사 례

- D 협동조합(충남)은 채종원 인근 4개 마을 주민들로 구성(조합원 205명)하여 채종원 보호·관리에 참여, 산림부산물 채취·판매



## 2. 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지역 자원을 연계할 핵심리더를 양성하고 창업·금융·판로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동의 지속가능성 제고

□ (리더 양성)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활동 생태계를 만들고 조직 간 시너지를 도출할 수 있는 핵심리더 양성

○ 귀촌인이 사회적경제기업 등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간지원조직 간 귀촌인 재능·경력 정보 공유('20)

\*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가 보유한 귀농산어촌인 자격정보 DB 공유 대상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으로 확대

○ 사회적농업은 거점농장\*을 통해 지역 내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을 기획·총괄하여 사회적농업을 확산하는 활동가 육성

\* 선도적인 사회적 농장 중 분야별·지역별로 거점농장으로 지정하여 사회적농업 교육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 기관으로 운영('20안: 4개소)

### 사 례

- E 농장(일본 교토)은 사회적농업 활동을 직접 하면서 교토부 내 농업-복지 연계 확산을 위한 각 분야 지도·상담 역할을 하는 거점 농장(중간지원조직)으로 활동
  - 청각장애인과 농산물 생산·판매 및 농가 레스토랑, 수공예품 작업장 운영을 통해 돌봄·고용서비스를 제공

○ 지역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 및 산림비즈니스를 추진할 주민경영체를 발굴·육성하는 현장 활동가(그루매니저\*) 양성

\* 지역자원 조사, 주민경영체 발굴, 창업 지원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형 기업 육성을 3년간 추진('20안: 45명)

### 사 례

- '18년에 선발된 5명의 그루매니저는 각 지역(서울, 울주, 인제, 영주, 완주)에서 지역주민 338명이 참여하는 28개 산림형 경영체를 발굴·육성 중)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17.9)하여 고용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 → '18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
- \* 유형 : 목재·목공 4, 임산물 6, 산촌체험 5, 휴양·교육 7, 산림레포츠 2, 기타 4



○ 어촌지역의 사회적경제 활동을 선도할 수 있도록 어촌 핵심 리더 (여성어업인, 어촌계장 등) 대상 역량 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어촌공동체 주도의 어촌 개발을 위한 창업·경영컨설팅 교육지원, 어촌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별 개발 현황 공유 등

○ 농산어촌 청년이 일자리도 얻고 보람도 느끼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농식품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행안부) 등을 활용하여 인건비 지원

□ (창업 지원)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공간 및 사업화 지원

○ 활용도가 낮은 농산어촌의 유희시설을 청년·귀촌인 등이 창업 공간, 공유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지원

\* 농촌 유희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20안, 20개소) 및 청년 귀산촌 주거지원사업 ('20안, 4개소) 추진, 어촌 유희시설 활용방안 마련(~20.1월)

#### 사 례

○ F 농협(충북)은 유희 하나로마트를 리모델링하여 지역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제공, 전시판매장, 카페, 체험·교육장으로 활용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등이 창업 단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지원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조성: ('18) 74개 시군 → ('19) 86 → ('20안) 90

\*\* 가공·창업희망 농업인은 창업보육과정(1~2년) 참여 후 시설 공동 활용

#### 사 례

○ 군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전북)는 창업보육을 통해 G 영농조합법인(68명 참여)을 육성하고 공동 가공시설 활용을 통한 가공·창업 지원

○ 농림어업 및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조직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지정 시 인건비·사업비 지원 신청 가능(농업·농촌형 27개, 산림형 98)('19.8월)



## 사 례

- H 기업(서울)은 브랜딩·마케팅 전문가가 '18년 설립한 기업으로 소규모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구절초)을 원료로 비건 화장품을 제조·판매  
\* '19년 제1차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19.3월)

-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법인 설립 및 사업화를 위한 가공·경영·유통·금융 등 종합컨설팅 지원(농수협, 어촌어항공단, 임업진흥원 등)  
\* 종합컨설팅(농수협),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산림청),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노동부)
- 로컬푸드 직매장\*, 국유림영림단\*\*, 산림복지전문업체\*\*\*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및 설립 지원(aT, 임업진흥원)  
\* 로컬푸드 직매장 경영 활성화 워크숍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교육  
\*\* 국유림의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전담하는 사업체로 140개단 1,463명 조직('18)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을 채용하여 산림 관련 사회서비스 제공

## □ (경영활동 지원) 사회적경제기업과 정부의 중간조직으로 현장에서 회계서비스·마케팅 기술 등을 지원하는 전문조직 운영

- 기존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지역별 어촌특화지원센터\*\* 등이 사회적경제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반영  
\* 홍보·판로 등 역할을 확대하여 농업·농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운영('20안)  
\*\* 어촌공동체 주도의 어촌특화사업 창업·경영컨설팅, 상품·서비스 및 기술 연구개발, 어촌특화상품 판매·유통·홍보 등을 지원('20안: 10개소)
- 농업·농촌 사회적경제기업 경영활동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20안: 150개소 / '20.3월중 '20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통보)  
\*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등에게 받는 전문 서비스 비용 2백만원 지원(국비 70%)
- 농업경영체를 유통조직화하여 공동판로 개척 등 유통·마케팅 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20안: 8개소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판로지원사업))  
\* 농산물 상품기획, 브랜드 개발, 판매전략 수립 등 마케팅 기술 지원



## 사 례

- I 협동조합(전남)은 광주·전남지역 청년농부로 구성되어 조합원간 멘토링·협업을 통한 마케팅 활동 및 온·오프라인 공동 판촉행사를 통해 매출 75억원 달성('17, 전년대비 25% 상승)

## □ (금융접근성) 사회적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접근성 제고

- 산지유통자금, 도매유통자금, 식품·외식자금 등 농수산물 정책자금  
용자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가점 부여 및 자금집행 실적 관리 추진

\*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가점 신설('19)

-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약을 통해 대출 한도 등을  
우대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대출상품 운용\*(농·수협은행) 및 활용 촉진\*\*

\* 보증료 감면, 부동산 담보 비율 특례 적용, 추가 신용 대출 등(농협은행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대출, 사회적기업론, 수협은행 Sh사회적경제기업 성공지원대출)

\*\* 은행 영업점 이벤트 및 SNS 등 홍보 채널 이용 홍보 진행

-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활동과 상품을  
홍보하고 자금 모집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최대 5백만원)

\*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컨설팅·수수료 지원 및 홍보 강화(농업정책보험금융원,  
총 6.6억원), 사회적 농장 크라우드펀딩 안내·홍보 강화(농어촌공사)

## 사 례

- J 농업회사법인(경북)은 '18년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사회적농업 활동을  
소개하여 20일 간 사과·사과즙 293만원 매출 달성



□ (판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 마련

○ 사회적농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회적경제박람회 참여,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판로 개척 지원(농어촌공사)

\* 사회적농업 정책 및 사회적 농장 활동 및 상품 홍보 홈페이지 구축('19.말)

\*\* 사회적 농장 및 농촌공동체회사 등 총 20개소 지원(총 6천만원)

○ 농협물·수협쇼핑·산림조합 유통망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농림수산물 판매 촉진

\* 농협물 농업인생산기업 전용관을 통해 900여개 우수상품 홍보 및 매출 확대 추진

\*\* 수협·공영홈쇼핑 공동으로 수산물 전용 방송프로그램(어랍쇼, 漁Love Show) 제작 ('17~ / 연간 50회, 취급상품 30개 내외)

\*\*\* 산림조합 판매장(255개소) 이용, 청정숲푸드 품질인증('19년 5건 인증), 안테나숍·박람회 지원('19~) 등

사 례

○ K 영농조합법인(충남)은 '02년 설립하여 '14년에 사회적기업 선정된 후 '18년 공영홈쇼핑 방송 시작

- '공영홈쇼핑 참여 이후 매출액 21%, 영업이익 76% 증가

○ 농식품 수출을 위한 현장코칭\*(aT, '20안: 120개소), 수협 무역지원센터(10개소)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규 판로 발굴, 수출 박람회 참가 지원\*\*('20안: 9개 박람회, 140업체)

\* 사회적기업 코칭비용 감면(5회까지 자부담(10만원/회) 면제), 상품 마케팅·홍보용 사진·동영상 촬영 비용 감면(aT)

\*\* 임차료, 장치비 및 통역, 통관 등 업체당 250~350만원 한도 내 지원

사 례

○ L 농업회사법인은 유기농 쌀가공식품(강정, 조청, 쌀가루 등)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16년 지정)

- aT 수출현장코칭(5회), 판촉지원(19개소) 등을 통해 미동부 Wholefoods 및 Foodbazar 최초 입점 → 89천불 수출('18, 전년대비 20배↑)



### 3. 지역 활성화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지역에 필요한 시설·프로그램 마련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해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유도

#### 가 신활력 플러스

신활력 플러스 :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추진

- 지역 특화산업 관련 H/W를 비롯하여 민간 중심의 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시·군당 4년간 70억원)
  -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 특화사업 지원('18~'22년, 100개소)
-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조직 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도록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에 반영('18)
- 지역 특화 산업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이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 례

- M 협동조합(전북)은 정책사업으로 구축된 읍·면 소재 가공센터에 신활력플러스를 통해 상품 생산 설비를 일부 추가하여 기존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을 이용할 농가·업체에 대한 교육·관리 담당

-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업기획, 계획수립, 운영 등 소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18)된 지침의 추진상황 관리(상시)
  - '20년 신규지구 선정 평가 기준에 신활력추진단·추진위원회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 여부'를 적용('19.9월~)
  - 자치단체의 사업 기획단계에서 해당 시·군 사회적경제위원회와 논의하도록 권고('19.9월, '20년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에 반영)



## 나 로컬푸드

로컬푸드 : 지역에서 중소농업인이 생산한 먹거리를 장거리 이동과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중소농업인 판로 확보

###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는 다양한 먹거리 관련 활동을 발굴·지원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 다품목을 소량 생산하는 중소농업인 사회적경제기업에 직매장 개설을 지원하고('20안: 14개소), 지역 수산물의 직매장 입점 추진('20안: 6개소)

\* 직매장 지원, 직거래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에 사회적경제 기업도 포함하고('18.12월) 적극 참여 추진

- 매년 사례공모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민간 로컬푸드 모델·단체를 발굴, 경영컨설팅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지원('19: 18개)

#### 사 례

- N 농업회사법인(제주)은 결혼이민여성들과 함께 아열대채소(공심채)를 재배하고 이를 활용한 식당을 운영하여 일자리 제공 및 정착 지원

### □ 지자체와 사회적경제기업·시민단체 등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 먹거리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푸드플랜 수립 지원

- 지자체 실정에 맞는 푸드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원하고('20안: 20개 지자체), 필요한 H/W·S/W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 관련 정책사업을 패키지로 지원(12개 사업 우선 선정, 20개 사업 가점 부여)

#### 사 례

- ○ 사회적협동조합(대전)은 푸드플랜 추진 중간지원조직인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지역먹거리 유통, 가공품 개발 지원
  - 다른 사회적기업들과 협력하여 먹거리 관련 교육 운영

- 시민사회와 지자체공무원이 함께 로컬푸드 등 다양한 먹거리 이슈를 논의하는 교육과정인 푸드플랜 아카데미 운영 확대('20안: 3개 권역)



## 다 사회적농업

사회적농업 :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공동체 활성화 도모

- 사회적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 지원 확대('19: 18개소 → '20안: 50)
  - 사회적 농장은 지역 내 농업인 및 보건·복지·교육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애인·노인 등과 사회적농업 활동 수행
  - 사회적경제기업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18~)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 제정('18.2월)

### 사 례

- P 협동조합(충남)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홍성군 보건소, 인근 농업인 등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들과 함께 영농활동

- 사회적 농장을 중심으로 지역 내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농장 간 연대 강화
  - 농업인, 복지·교육기관, 주민 등이 협력하여 사회적농업 활동을 수행하고 다른 공동체 활동과 연계하는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 사회적 농장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국 사회적 농업 협의체 운영
    - \* 전체 회의 및 청년·청소년, 장애인, 노인·여성 등 분야별 회의를 격월 개최
- 장기적으로는 복지·고용 등이 연계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농업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
  - 관련 복지제도 분석 및 연계 방안 연구결과('19, KREI)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20)
    - \* 벨기에는 '17년부터 사회적 농장에서도 장애인 수당을 활용 가능
  - 사회적농업 포럼(우리부), 열린소통포럼(행안부) 등을 통해 관계부처 협의



## 라 어촌뉴딜 300

어촌뉴딜 300 : 낙후된 선착장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특화개발을 통해 300개의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여 어촌재생과 혁신성장을 견인

### □ 시설현대화,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협업체\* 운영과 협업체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여 공동체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추진

\* 지역주민(50% 이상),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로서 사업 쉼과정에 걸쳐 의견수렴, 갈등 관리, 사업계획 수립 등의 기능 수행으로 상향식 개발 도모

###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후 운영·관리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활성화 도모

-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용한 사후 관리·운영, 공유재산 가치 제고 우수 사례 등 교육 및 지역맞춤형 컨설팅 등 추진

### ○ 현장 접점에서의 정책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 담당자 워크숍 개최 및 유관기관 간 MOU 체결('20.上)

### □ 사업시행단계부터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적인 사업 참여 보장(“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개정, '19.3.28)

### ○ 소득사업\*은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법인(마을기업 등)을 구성하여 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하도록 의무화

\* 갯벌체험, 게스트하우스, 특산물 레스토랑, 해양레저 체험 등

### ○ 시설물 관리·운영 주체 선정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권 부여

\* 대합실 운영·관리, 복지센터 운영, 마을도서관 운영 등

### ○ 어촌뉴딜 사업의 위탁·시행권자 범위를 사회적경제기업까지 확대

\* 어촌·어항법 제47조의6 신설('19.8월), 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20.1월)



## 마 농촌교육농장

교육농장 :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교과 과정과 연계한 체험농장을 운영하며, 체험 사업장간 협업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 규모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 농장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농업경영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19: 79개소)

\* 농촌교육농장 경영체 교육과정 운영: ('20안) 16회, 670명 → ('21안) 18회, 700명

### ○ 개별 농가단위로 운영되는 농업·농촌 교육·체험 농장 간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

\* 교육농장 간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을 운영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교육에 활용

### ○ 농촌교육농장 자체 품질관리·상호협력을 위한 전국 협의체를 운영하고, 농장 운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사양성과정 교육 추진

\* 농촌교육농장 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연 1회), 교육·정보교류(연 5회)

#### 사 례

○ Q 협동조합(경기)은 인근의 농촌교육농장 8개소가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 프로그램 공유 및 협력, 사업장간 멘토-멘티 등으로 체험 경쟁력 확보 (R 농장이 멘토 역할)

- R 농장(경기)은 돼지를 테마로 돼지박물관, 체험관, 소시지교육장, 미니돼지 사육장 및 쇼장, 치유정원을 운영

\* 가족공동경영체로서 연방문객 6만명, 연매출 약 9억원

### □ 농촌교육농장이 교육계와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현장 학습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제 추진

### ○ 체험프로그램 운영 농장을 대상으로 교육환경, 프로그램 개발능력, 체험교사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190개소)

### ○ 진로체험, 치유농장 등으로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농장으로 육성



## 바 산림일자리발전소

산림일자리발전소 : 산림에 특화된 산림형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여 산촌문제 해결과 지역일자리 창출

□ 산림분야에 특화된 쏙단계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에 특화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실현

○ 역량있는 기획·활동가(그루매니저)를 선정하여 3년간 주민공동체(그루경영체) 발굴·육성

\* 그루매니저: ('19) 35명 → ('22) 50 / 그루경영체: ('19) 175개 → ('22) 250

○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산림인프라를 연결·조합하여 산림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건전한 공동체 육성

□ 교육, 멘토링 등 간접지원을 통해 경영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체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자립하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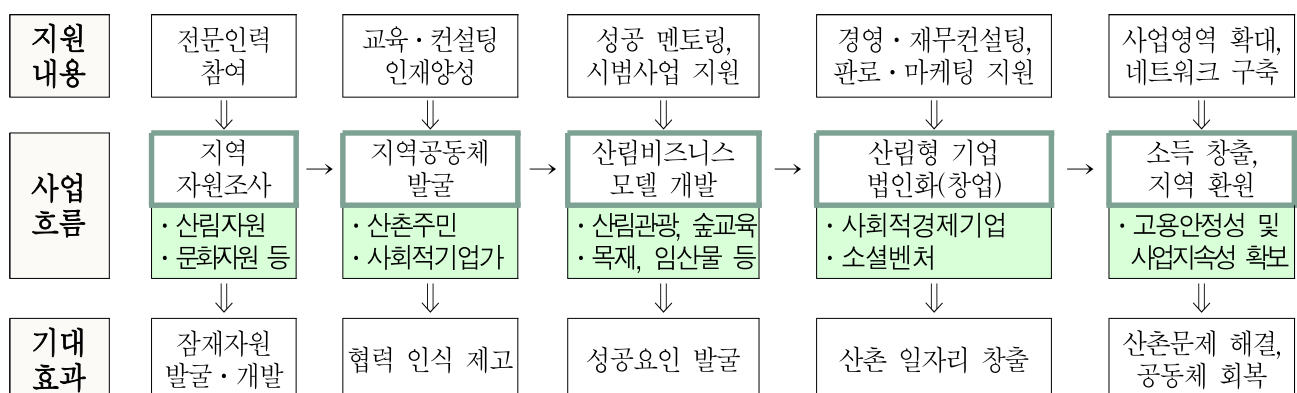
○ 경영체 대상 임업기술 등 역량강화 교육, 사업모델 기획 등 지원

\* ('18년 사례) 1년차(4개월간) 60회 교육(경영체당 24회), 수목관리사, 산림기술자 등 자격취득

○ 정부 및 지자체의 산림자원 정보\*를 경영체에 제공하여 활용도 제고('19.4분기)

\* 산림청(선도산림경영단지, 산림관광, 숲체험교육사업), 지자체(등산로 정비, 적정기술 교육, 지역축제), 타부처 사업(농식품부 농촌유학, 행안부 마을기업) 등을 연계 활용

### < 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 프로세스 >





## 사 신제품 생명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

신제품 생명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 : 고부가가치 산림자원인 신제품을 생산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주민소득·일자리 창출, 산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산촌의 공동화·고령화, 일자리와 소득 부족의 문제를 지역의 산림 자원과 사회적경제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접근

○ 산림 신제품 생명자원을 생산·공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산촌주민 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 및 산림생명산업 발전

\* 산림 신제품 출원 : 감·밤·대추·야생화·산채·표고버섯·산초 등 99종 370품종

□ 부가가치가 높고 산업화가 가능한 산림 신제품 분야와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협동조합을 결합한 사업모델 추진

○ (국가) 신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신제품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보유한 신제품 특허권, 재배기술 등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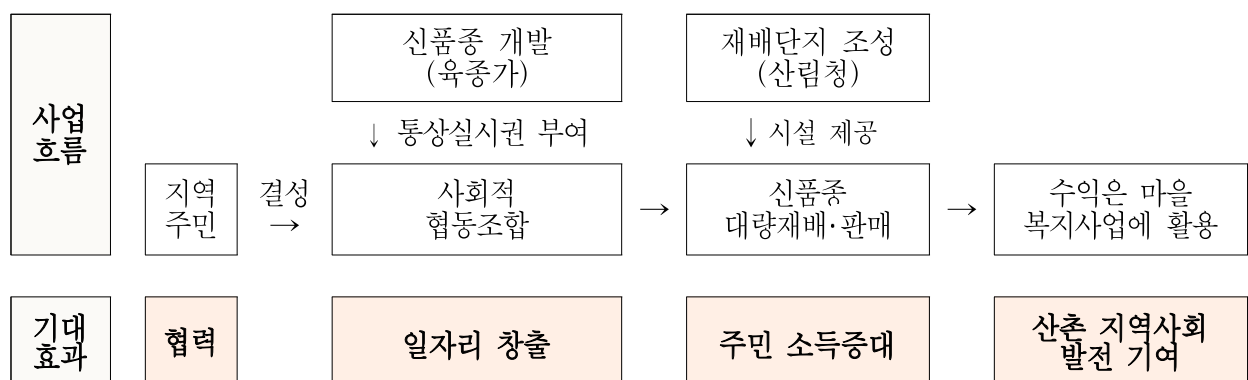
- 연간 2개소씩 '22년까지 총 8개소의 신제품 재배단지 조성

\* '19년 조성 예정 : 강원도 평창군, 경상남도 하동군에 각각 5ha규모로 조성

○ (주민) 단지별 50명 규모의 사회적협동조합 결성, 신제품을 대량 생산하여 제약·화장품·식품 등 바이오 산업계 원료로 공급

- 수익은 마을 복지사업 활용 등 지역사회에 환원

### < 신제품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체계 >





## 4. 농·산·어촌의 사회서비스 제공 다양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사회서비스 정책 및 사업과 연계방안 모색, 농산어촌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활동 지원

□ (정책사업 참여)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교통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유도

○ 농촌유학\*, 숲체험 교육사업\*\* 등 교육 관련 서비스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제공하는 사례 발굴, 홍보

\* 농촌유학: 도시 학생들이 6개월 이상 농촌에 살며 지역 학교 통학('20안: 25개소)

\*\* 숲체험 교육사업: 복권기금(녹색자금) 재원으로 취약계층에 숲교육 제공('20안: 20개소)

### 사 례

○ S 유학센터(강원)는 농촌유학을 운영하면서 귀농귀촌, 노인돌봄 등 지역의 거점 역할 수행('14년 사회적협동조합, '18년 사회적기업 인증)

○ 교통이 불편한 농산어촌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서비스\*\* 보완

\* 농촌형 교통모델: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에 마을버스·택시 활용 교통서비스 운영 지원

\*\*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통해 정류장, 표지판, 콜센터 운영비 등 지원

### 사 례

○ T 영농조합법인(강원)은 귀촌여성을 운전자로 고용하여 버스 노선이 부족한 면지역 5개 마을에 버스 운영

○ 산림휴양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의 산림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내 나눔객실 운영

\* 전국 35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75개 객실을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지역사회 통합돌봄) 통합돌봄과 사회적농업의 연계를 통한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 및 확산 추진

\*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 거주하며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 ○ 사회적농업, 중심지 활성화 등 농산어촌 관련 정책사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부처 간 MOU 체결 추진('19.하)

\* 선도사업과 사회적농업지원 등 관련 사업의 연계, 조직 간 협조체계 구축 등

\*\* (예시) 농촌 지역 내 돌봄 필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농업을 활용한 주간활동·재활 서비스, 사회적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제공

### ○ 공간적 분산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농산어촌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사업 발굴

\* 제4차 농어업인 삶의질 기본계획('20~'24) 수립 시 반영 추진('19.말)

## □ (정책 안내) 사회적경제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제도 안내 등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 독려

### ○ 농업·농촌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정책사업 안내 및 홍보, 네트 워크 형성 등을 지원하는 농업·농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20안)

\* 기존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농어촌공사)의 역할을 확대하여 운영

### ○ 농어업법인 등이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사업 및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을 통해 안내('20)

\*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제도 연구('19.5~8월)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농업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정책 게시('19 구축)



## 5. 전통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 전통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인 농·수·산림조합이 보유한 자원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공헌을 확대하고 타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 장려

□ (로컬푸드 확산) 로컬푸드 직매장 개소수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직매장 활용 시너지 도출(1농협 1로컬푸드 추진)



○ 전국 하나로마트를 거점으로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및 관공서·은행 등의 로컬푸드 판매코너 확대('19: 400개, '22년까지 총 1,100개)

\* 판매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하나로마트에 샵인샵 형태로 직매장 추가 개설 추진

### 사 례

○ U 농협(광주)은 구청, 주민센터, 농협은행에 약 1평 규모의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6곳 운영(소규모·고령농업인 등 150 농가, 100개 품목)

- 농협에서 직매장 개설 관련 비용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문위원단을 운영하여 직매장 품질 향상 도모

○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사회적경제기업 입점 사례 확산

### 사 례

○ V 농협(경기)은 지역 주부들로 구성된 W 협동조합이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

- W 협동조합은 농협 직매장 내 조리실을 이용하여 반찬을 만들고, 직매장 내 반찬가게 및 카페를 운영하여 판매금액의 일부는 지역에 기부

○ 지역수협이 연합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권역별로 구성 추진('20안: 1개 권역 6개 점포)



- 산림조합이 위탁 경영하는 선도산림경영단지를 거점으로 지역주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생산된 임산물을 지역사회에 우선 공급

\* 500ha 이상의 사유림을 규모화하여 지역 산림조합이 위탁 경영('20안: 23개소)

#### 사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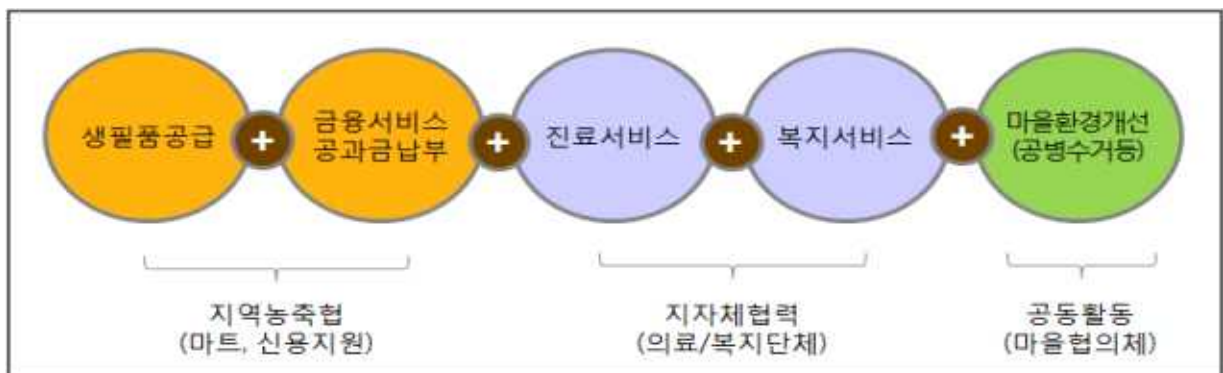
- X 산림경영단지(전남)는 편백과 두릅·황칠 생산 단지로, 지역의 두릅 관련 협동조합, 황칠나무 생산 관련 협동조합 등과 협력하여 임산물을 생산하고, 지역제재소, 로컬푸드 매장 등 지역 업체에 우선 공급

-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마다 소재하고 주민에 대한 밀착 지원이 가능한 지역조합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 확충

-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생필품 공급 및 의료·복지·금융서비스를 복합 지원하는 이동 마트인 '찾아가는 행복장터' 시범 운영('19: 1개소)

\* 농협·지자체·마을협의체가 협력하여 행복장터 운영(시범사업: 경기 포천)

#### < 찾아가는 행복장터 개념도 >



- 도서지역 의료비 지원 등 의료혜택 사각지대 거주 어업인 대상 의료서비스 확대 및 복지센터 건립 등을 통한 복지 확충 추진

- 건강검진·수술치료·치과치료·의료봉사활동비 지원('19: 수협 3.8억원) 및 어업인 의료지원 협약 체결(20개 병원 지정 운영)

#### 사 례

- Y 수협(제주)은 다목적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마트, 수산시장, 금융, 교육공간, 다목적 문화여가공간, 어업인 사우나실 등을 설치하여 생활서비스 제공
- 마트, 수산시장, 수산금융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센터 운영에 활용하여 지속성 확보



○ **취약·독거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접 돌봄을 제공하거나 이동 보조기구 지급 등 농산어촌 복지서비스 보완**

\* 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원 등 전문 문화복지시설('19: 농협 15개소) 및 농업인행복콜센터와 농촌현장지원단('19: 농협 500농가) 운영

\*\* 고령자들의 수요가 많은 보행기, 청소기 등 제공('18: 농협 22억원)

**사 례**

- Z 농협(충남)은 농협 첫 노인요양원을 설립하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자재 공급, 협력 병원과 연계 의료서비스 제공('19.4월 준공)
- 산림조합중앙회는 국산목재로 제작한 책걸상('14~'18년, 5,341개)을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취약계층 등 765개 기관 및 가정에 보급

○ **결혼이민여성에게 농촌생활 교육·멘토링('19: 농협 1,500명), 모국 방문 및 모국가족 국내 초청('19: 농협 10가정, 수협 31가정) 지원**

○ **인재 육성을 위해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제공 및 농촌출신 학생 장학관 운영('19: 농협 400억원, 수협 5.3억원)**

□ **(사회적가치 교육) 조합원·임직원의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 확대 및 평가에 반영 추진**

○ **임직원 대상 협동조합 교육에 사회적 가치 및 다른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포함**

\* 농협 임직원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가치 교육은 필수 이수하도록 의무 편성('19)

○ **지역농축협 종합업적평가 항목에 범농협 시너지 창출 및 사회 공헌 활동 집중화를 위해 사회공헌 가점 확대 추진**

\* 농협 교육지원사업 평가 시 범농협 사회공헌 월별 테마 및 중점사업 내용 반영

○ **중앙회에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 가치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모델 발굴**

\* 농협 지역사회공헌부, 수협 어촌계지원센터, 산림조합 사회적경제지원팀 신설('18~'19)



추진 과제	주관부처
<b>1.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b>	
<b>1-1. 인지도 제고</b>	
1-1-1. 귀농귀촌종합센터 교육 등 농어업인 교육 확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등 공무원 대상 교육 확대 등	농식품부, 해수부
1-1-2.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농식품부
<b>1-2. 공동체 활성화</b>	
1-2-1.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상향식 학습조직, 우수 어촌계·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농식품부, 해수부
1-2-2. 농촌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산림 활용 공동체 사업 모델 확산 등	농진청, 산림청
<b>2. 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b>	
<b>2-1. 리더 육성</b>	
2-1-1. 귀촌인 DB 공유(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식품부
2-1-2. 사회적농업 활동가, 어촌 핵심리더, 그루매니저 양성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2-1-3.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연계	농식품부 (행안부)
<b>2-2. 창업 지원</b>	
2-2-1. 농산어촌 유희시설 활용,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조성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2-2-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농식품부, 산림청
2-2-3.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전환 지원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b>2-3. 경영활동 지원</b>	
2-3-1.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 활용	농식품부, 해수부
2-3-2. 전문서비스 바우처, 유통조직화 공동판로 개척	농식품부, 농진청



추진 과제	주관부처
<b>2-4. 금융접근성</b>	
2-4-1. 정책자금 융자 우대, 전용 대출상품 운영	농식품부(aT, 농협), 해수부(수협)
2-4-2. 농식품 클라우드펀딩 활용	농 식품부
<b>2-5. 판로 확대</b>	
2-5-1. 온라인 플랫폼 구축, 수출 지원	농식품부(농어촌공사, aT), 해수부(수협)
2-5-2. 농협·수협·산림조합 유통망을 활용한 판매 촉진	농식품부(농협), 해수부(수협) 산림청(산림조합)
<b>3. 지역활성화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b>	
<b>3-가. 신활력 플러스</b>	
3-가-1.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등 S/W 지원(지침 반영)	농식품부
3-가-2.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시·군 사회적경제위원회 활용	농 식품부
<b>3-나. 로컬푸드</b>	
3-나-1. 직매장 개설·입점 지원, 로컬푸드 모델 사례 공모전	농식품부(aT), 해수부
3-나-2. 푸드플랜 수립 연구 지원, 패키지 지원사업 등	농 식품부
<b>3-다. 사회적농업</b>	
3-다-1. 사회적 농장 및 네트워크 지원	농 식품부
3-다-2. 관련 복지제도 연계위한 연구 등 논의	농 식품부
<b>3-라. 어촌뉴딜 300</b>	
3-라-1.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해수부
3-라-2.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유도	해수부
<b>3-마. 농촌교육농장</b>	
3-마-1. 교육농장에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	농 진청
3-마-2. 교육농장 품질인증제 추진	농 진청



추진 과제	주관부처
<b>3-바. 산림일자리발전소</b>	
3-바-1. 지역별 그루매니저 배치	산림청
3-바-2. 산림비즈니스 공동체 발굴 및 교육, 멘토링	산림청
<b>3-사. 신품종 생명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b>	
3-사-1.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및 특허권, 재배기술 지원	산림청
<b>4.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활성화</b>	
<b>4-1. 정책사업 참여</b>	
4-1-1. 농촌유학, 숲체험교육, 농촌 교통모델 보완 등	농식품부, 산림청
<b>4-2. 지역사회 통합돌봄</b>	
4-2-1. 복지부 등과 커뮤니티 케어 연계 MOU 체결	농식품부
4-2-2. 삶의질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적경제 영역 반영	농식품부
<b>4-3. 정책 안내</b>	
4-3-1. 농업·농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및 온라인 채널 운영	농식품부
<b>5. 전통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b>	
<b>5-가. 로컬푸드 확산</b>	
5-가-1. 판매장 및 사회적경제 연계 사례 확산	농식품부(농협)
5-가-2. 권역별 수산물 공급망 구축, 임산물 우선 공급	해수부(수협), 산림청(산림조합)
<b>5-나. 사회서비스 제공</b>	
5-나-1. 찾아가는 행복장터, 의료·문화·생활 등 지원	농식품부(농협), 해수부(수협)
5-나-2.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자녀 교육 등 지원	농식품부(농협), 해수부(수협)
<b>5-다. 사회적 가치 교육</b>	
5-다-1. 조합 사회적경제 교육 개편	농식품부(농협), 해수부(수협)
5-다-2. 중앙회에 관련 부서 운영	농식품부(농협), 해수부(수협) 산림청(산림조합)



## 참고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지원 확대 주요 내용(안)

구 분	적용	주요 내용
사업 확대	'19년	사회적 농장 지원 확대(9개소→ 18)
		그루매니저 확대(5명→ 35)
	'20년(안)	사회적경제교육 과정 확대 (농식품·산림교육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수협연수원)
		그루매니저 확대(35명→ 45)
사업 참여	'19년	사회적 농장 지원 확대(18개소→ 50)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20년(안)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규 추진	'19년	귀촌인 정보 공유(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대상)
		어촌 핵심리더 육성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농어촌공사)
		로컬푸드 기반 사회적 모델 발굴
		어촌뉴딜 300
		신품종 생명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
	'20년(안)	농협 찾아가는 행복장터 운영(1개소)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및 매니저 육성
		사회적경제 지원 역할 확대 (농업·농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
		사회적농업 온라인 플랫폼 운영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농협평가에 사회공헌 가점 확대 추진



---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

2020. 1. 15.

관계부처 합동







---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

2020. 1. 15.

관계부처 합동



# 순서

I. 사회적 가치 의의 및 추진 필요성 .....	439
1. 사회적 가치 의의 .....	439
2. 사회적 가치 추진 필요성 .....	441
3. 그간의 성과 및 한계 .....	442
II. 추진전략 및 목표 .....	444
1. 비전 및 추진전략 .....	444
2. 한국의 변화될 모습 .....	446
III.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 .....	448
1. 조직 구조·문화 개선 .....	448
2. 인사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	449
3.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 .....	450
4.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	451
IV.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 지원 .....	452
1. 기업·국민 등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	452
2.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	453
3. 사회적경제 성장 가속화 .....	454
V. 향후 추진계획 .....	455
※ 참고자료 .....	458



# I. 사회적 가치 의의 및 추진 필요성

## 1 사회적 가치 의의

□ (의의)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균형있는 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 가치가 중요

-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구현, 사회문제 해결 등은 경제성장에 필수적 요소이며, 현 정부 국가비전인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
- 국제적으로도 경제적 효율성 위주 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 가치에 주목

\* 사회발전 논의: GDP → 삶의 질('50~) → 사회의 질('97~) → 지속가능발전('15)

- 스웨덴(샬트세바덴 협약, '38), 네덜란드(바세나르 협약, '82)는 연대에 기반한 노동-자본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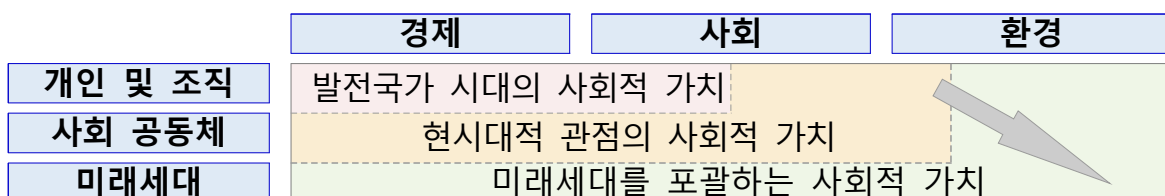
\* 이익집단이 정부와 함께 정책 협의 → 임금 조정 등으로 일자리 창출

- 특히, EU, 영국 및 국제기구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천 노력을 전개하고, 법제화·국제규범화 하는 추세

\* EU 사회책임조달지침('10) 및 비재무정보 공시('14), 영국 사회적가치법('12)

□ (개념)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가치

- 개인의 경제적 후생에서 시작하여 삶의 질, 공동체와 미래세대 까지 고려(sustainability)하는 '균형감 있고 포괄적인 발전' 개념



- 국회 발의된 사회적가치기본법(안)은 인권, 안전 등 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13개 대표적 세부가치를 제시

\* 인권, 안전, 복지, 노동, 사회통합, 상생, 일자리, 지역사회, 지역경제, CSR, 환경, 참여, 공동체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17.10. 박광온 의원 발의안, 기재위 계류)



## 참 고

## 13개 사회적 가치 세부 항목의 주요 의미

- 사회적 가치는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b>인권</b> 의 보호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재난과 사고로부터 <b>안전</b> 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b>보건복지</b> 의 제공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b>노동권</b> 의 보장과 근로조건향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고용안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b>사회통합</b>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b>상생과 협력</b>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b>일자리</b> 창출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b>지역사회</b>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b>지역경제</b> 공헌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b>사회적 책임</b> 이행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b>환경</b> 의 지속가능성 보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b>참여</b> 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그 밖에 <b>공동체</b> 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 출처 : 정부혁신 추진계획(행안부, '18.3)



## 2 사회적 가치 추진 필요성

- (삶의 질)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국민체감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하고, 경제적 성과와 삶의 질 간의 격차\* 완화 필요

\* '15년/'06년 증가율(통계청,'17) : (실질GDP) 28.6%↑, (삶의질 종합지수) 11.8%↑

- 국제비교 시 한국의 총 GDP 규모는 세계 11위 수준('18년)인 반면, 삶의 질 관련 국제지표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

- 특히, 공동체(사회관계망 질), 대기오염, 자살률 등은 최하위 수준

### < 사회적 가치 관련 주요 국제지표 >

- ① (OECD Better Life Index) 한국은 OECD 국가중 하위 25%, 세부지표 중 교육, 시민참여는 양호, 공동체(지원관계망), 환경, 건강, 일·삶균형은 취약

\* '18년 (40개국): (전체)30 (공동체)40 (교육)11 (환경)40 (참여)2 (건강)36 (균형)37

- ② (UN World happiness Index) 상위 35%, 건강(기대수명) 관련 지표 순위는 최상위 수준, 사회적 자유, 부패, 사회적 지원 지표는 평균 이하로 부진

\* '19년 (156개국): (전체)54 (기대수명)9 (관용)40 (사회적자유)144 (부패)100 (사회지원)91

- ③ (T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다고 느끼는지를 비교한 것으로 180개국 중 45위로 상위 25%

- (기업 경쟁력) 기업의 장기성장과 위험관리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CSR 활동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성장 여건 강화

\* '16년 전세계 CEO 75% 이상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비교우위와 성장기회 확보에 중요하다고 대답(CSR Europe 설문조사, 2017)

-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을 거래기업의 선결 이행 요건으로 반영, 무역장벽으로 적용하는 사례\* 증가

\* 국내 수출기업 54%가 글로벌 기업 납품시 CSR 평가를 받았고, 미흡시 협력사 선정배제 조건부 납품 등 불이익 → 컨설팅교육, 정보공유, 인증비용 등 정부지원 필요('18, 대한상의)

\* 미국 대표기업 CEO 181명이 고객, 직원, 납품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 사회적 책임 강조 성명서 발표('19.8.19, 동아 등 보도)

- 개도국\*도 점차 CSR을 강조하면서, 비용절감 등을 위해 개도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에게도 사회적책임 이행의 중요성 증가

\* 인도네시아('07)·인도('14) CSR 의무화 법제정, 중국 100대 CSR 우수기업 발표 등



- 신용평가 기관, 투자은행 등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업 가치 평가를 진행

\* S&P, Moody's는 환경, 사회 등 평가, Goldman Sachs 등은 CSR을 평가모델에 반영

- (사회통합과 경제성장) 양극화, 고실업, 사회갈등 등 주요 문제 해결·완화로 사회통합을 제고하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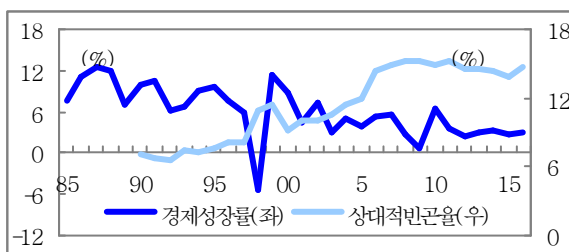
\* 韓 사회신뢰가 북유럽 수준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 1.5%p ↑('16, 서울대 김병연 대한상의)

-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고실업, 저성장 고착화 등 문제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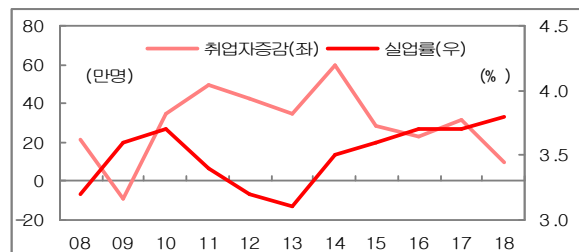
\* '00~16년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 증가(ECOS)

\*\* '17년 OECD 국가중 임금소득 10분위 배율 기준 불평등도 3위(OECD, '18.3)

경제성장-소득분배



취업자-실업률



\* 자료: 통계청

### 3 그간의 성과 및 한계

- (성과)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추진, 민간에서도 기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 활동 전개

- (정부)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아젠다로 채택, 그간 정책 추진기반 마련과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3대 기본법 제정(국회 계류중) 추진

\* 사회적가치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법

- 정부혁신, 공기업 경영평가, 공공 조달 등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정부혁신 핵심원칙으로 선정('18.3), 정부혁신평가('18.5)·지자체 합동평가('18.3)·공공기관 평가('17.12) 등 지표 반영, 사회적경제기업 입찰가점 도입('17.12) 등



- (민간) 기업, 시민단체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 전개
  - 민간기업 내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거나, 사회적금융을 조성하는 등 자발적 사회책임경영을 실천
    - \* 그룹 내부 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SK), 사회투자펀드 조성(KB, 한국성장금융) 등
  - 시민사회단체의 착한소비 운동, 3대 종교단체 공동행사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운동 등 추진

□ (한계) 주요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정책방향 제시는 미흡했으며, 국민은 공공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

- 주요 분야에 사회적 가치 반영을 강화했으나, 부분·개별적 추진으로 체계적 정책방향 설정과 전반적 인식공유는 미흡
  - 현행 소관 개별법에 근거, 13대 세부가치별 개별적인 중장기 비전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실행력에 한계
    - \* 세부 실행계획, 재정적 뒷받침 등의 미비로 추진력 저하, 종합적 시각의 관련 정책 간 연계 및 정합성 확보 곤란
  - 전담조직, 점검체계 등 추진기반이 미약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주요제도의 실질적 내재화에도 한계
    - \* 사회적가치 기본법안 상 규정된 위원회, 전담조직, 평가시스템 구축 지연
- 국민들은 사회문제가 심각하나, 사회적 가치 실현 수준과 실현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
  - \* 사회적 가치 대국민 인식조사, 1,000명, 온라인 설문조사('19.5, 심각성(1~5점) : (저출산·고령화)4.36 (환경)4.28 (일자리)4.21 (대·중기 격차)4.20 등
  - 사회적 가치중 중요성은 높으나 실현 정도가 낮은 항목으로 일자리 창출, 환경, 안전, 상생협력 등을 지목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국회의 책임 강조
    - \* 우선책임 주체(%): (국회)31.4 (공공부문)34.4 (기업)4.5 (시민단체)1.3

⇒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에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

\* 사회적 가치 T/F(정책기획위 산하, '19.3~), 관계기관 협의회('19.4~) 구성·운영



## Ⅱ. 추진전략 및 목표

### 1 비전 및 추진전략





◇ (비전) '같이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 실현을 위해

○ 4대 실현방향, 13대 세부 사회적 가치를 제시

① **사람중심 포용사회**(인권, 건강·보건, 노동, 사회통합)

②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환경, 안전)

③ **역량있는 시민·공동체**(시민사회, 참여, 지역경제, 지역사회)

④ **상생경제**(CSR, 상생협력, 일자리)

○ 정부 주도가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공공, 민간, 시민)의  
수평적 참여와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

◇ (추진전략)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을 위해 전반적 운영  
시스템에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고 민간의 확산을 지원

① 공공 부문의 전반적 **운영원리**(조직·인사·재정·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실천적·균형적으로 반영

② **사회구성원**(민간, 시민·공동체,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가치실현 활동이 확산되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

◇ (세부가치별 과제) 향후 13대 세부가치별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 사회적가치 부처협의회(과제 발굴·보완), 민간전문가 TF(이행점검)



## 2 한국의 변화될 모습

### □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해 세부가치별 달성 지표 설정

분야	세부 가치	세부 지표 (예시)
사람중심 포용사회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형 인권경영 표준지침 마련('20)</li> <li>피해자 국선번호 인력 확충('18: 17→'22: 25명)</li> </ul>
	건강·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수명 연장('16: 73→'22: 75세)</li> </ul>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임금근로자 비중('17: 22.3→'22: 18.0%)</li> </ul>
	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대빈곤율 완화('17: 17.4→'23: 15.5%)</li> </ul>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실가스 감축('18~'20 배출전망치의 76% 수준으로 배출허용총량(1,777백만톤) 설정)</li> <li>환경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20~'22 총 4,775건)</li> </ul>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사고 사망사고 '17년 대비 '22년 30%이상 감축</li> </ul>
역량있는 시민·공동체	시민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20)</li> </ul>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 모델 확산율<sup>1)</sup>('22: 70%)</li> <li>SGI<sup>2)</sup> '시민의 참여역량' 수준('18: 5.5→'22: 6.0)</li> </ul>
	지역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22)</li> <li>농·어촌 순유입 90만명 이상('17~'22)</li> </ul>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자치회 설치 읍면동 지속 확대('19: 408→'22: 700개)</li> </ul>
상생경제	CS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SR 활동에 대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지속 확대(現 연간 100개 내외 → '19~'22년 누적 500개)</li> <li>중소기업 CSR 컨설팅('19: 30→'20: 200개사)</li> </ul>
	상생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반성장 여건 개선('18: 75.2→'22: 78.2점)</li> </ul>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자수, 여성고용률 등 제고</li> <li>고용보험 피보험자 수('18: 1,343→'22: 1,500만명)</li> </ul>

1) 참여 우수사례 도입 중앙부처(시군구 지자체) / 전체 중앙부처(전체 시군구 지자체)

2) 지속가능거버넌스 지수(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배텔스만 재단, 1~10점)



## 참고

## 사회적 가치 분야별 현황 (국제지표 수준)

분류	조사기관	조사내용					
인권	인권의식조사, 인권위, '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 아동을 제외한 장애인 등 대부분의 취약 집단에 속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음</li> </ul>					
안전	사망자수 비교 행안부, '17년, '15년	(10만명당 사망자)	화재	범죄	생활안전	교통사고	감염병
		한국 <sup>(18)</sup>	0.7	0.6	18.2	7.3	5.1
		OECD <sup>(15)</sup> )	1.5	1.9	29.4	5.6	3.1
	안전지수, UL, '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위 11%(21위/187개국)</li> </ul>					
건강·보건	더나은 삶지수, OECD, '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대수명, 선진국 상위 25%(10위/40개국)</li> </ul>					
노동	더나은 삶지수, OECD, '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 안정성, 선진국 상위 13%(5위/40개국)</li> <li><b>장시간 근로자, 선진국 하위 8%(37위/40개국)</b></li> </ul>					
사회통합	더나은 삶지수, OECD, '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대교육기간, 선진국 하위 38%(25위/40개국)</li> <li>교육성취, 선진국 상위 33%(13위/40개국)</li> </ul>					
	행복지수 UN, '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사회적 지원, 하위 41%(91위/155개국)</b></li> </ul>					
	OECD, '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ECD 평균 자살률 11.5의 2배 넘는 수준</li> </ul>					
상생·협력	국가경쟁력평가 WEF, '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독과점의 수준, 하위 34% (93위/140개국)</b></li> </ul>					
일자리	더나은 삶지수, OECD, '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률, 선진국 하위 33%(27위/40개국)</li> </ul>					
지역사회	더나은 삶지수, OECD, '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지원관계망의 질, 선진국 하위 1% (40위/40개국)</b></li> </ul>					
지역경제	OECD, '1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대도시권 GDP 비중, 선진국 하위 13% (28위/32개국)</b></li> </ul>					
CSR	국가경쟁력평가, IMD, '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기업 경영관행, 하위 25%(47위/63개국)</b></li> </ul>					
환경	제3차 환경성과평가, OECD, '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적 불평등을 줄이는 등 <b>환경정의</b>를 강화할 것을 권고</li> </ul>					
	더나은 삶지수, OECD, '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수질, 선진국 하위 28%(29위/40개국)</b></li> <li><b>대기오염, 선진국 하위 1%(40위/40개국)</b></li> </ul>					
참여	더나은 삶지수, OECD, '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칙 제정 참여, 선진국 상위 15%(6위/40개국)</li> <li>투표참여율, 선진국 상위 33%(13위/40개국)</li> </ul>					
	지속가능거버넌스지수, 베텔스만, '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민주주의의 질 하위 24%(31위/41개국)</li> </ul>					
기타 공공성	행복지수 UN, '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용도, 상위 26%(40위/155개국)</li> </ul>					
	부패인식지수, TI, '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상위 25%(45위/180개국)</b></li> </ul>					

※ 지수별로 대상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



### Ⅲ.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

#### 1. 조직 구조·문화 개선

##### ◇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을 위한 조직 기반 정비

- 정부 운영에서 보장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명문화(‘20년~)

\* 현재는 사회적 가치 추구 방침을 원론적으로만 기술하고 있으며,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의 범위의 예시도 안전·치안·복지 등으로 다소 협소

- 공공 사회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현장·민생 공무원\* 및 조직을 확충하고, 각 기관별로 사회적 가치 전달 부서·책임관 등을 지정

\* 경찰, 소방, 사회복지,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10.3만여 명 총원(‘20~’22년)

##### ◇ 협업·참여 강화를 통한 조직의 사회적 유연성 제고

- 혁신·도전 과제 중심 벤처형 조직, 국민 안전 등 현안 긴급 대응반, 부처 간 협업 정원\* 등 운영 활성화

\* 교차 파견 확대(‘19년 40명 → ’20년 50명 내외) 및 인사·보수상 인센티브 부여

- 복지·안전 등 생활 밀접 분야에서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공공 조직을 진단·평가하는 국민 참여 조직 진단\* 실시 확대

\* ’18년 경찰청(지역 경찰)·고용부(근로 감독) 시범 실시(‘18년 2개 → ’19년 20개)

- 공공기관별 특성·여건을 고려, 근로자의 이사회 참관\*·참여, 이사 추천 등 노사 협력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단계적 도입 추진

\* 근로자의 이사회 참관제: 수자원공사 등 28개 공공기관(‘19.11월) → 점진 확대 유도

##### ◇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조직 문화 확산

-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경진 대회 등 집단 지성을 통해 조직의 SQ\*(Spiritual Quotient)를 계발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

\* IQ·EQ 등과 구분되는 것으로,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창조적 지능지수

- 적극 행정을 공직 사회 조직 문화로 정착\*시켜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유도

\* 적극행정 운영지침(‘19.6월)·규정(‘19.8월) 마련 → 이행 점검 및 평가(‘20.1월)



## 2. 인사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 ◇ 공무원 등 채용·승진 시 사회적 가치 고려 강화

- 공무원 면접시험\*, 고위 관리자 역량 평가('20년) 등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를 대폭 강화

\* (예) 사회적 가치의 개념·사례·정책 등을 재구성하여 면접 과제·질문 등에 활용

- 성과 평가를 경쟁·개인 중심에서 협업·조직 중심으로 전환하여 민관·부서 간 협업, 팀워크 등 공동체 가치를 반영(지침 등 개정)

\* 사회적 가치 반영 등 성과 관리 우수 기관 담당자 포상 및 사례 공유('19.12월)

- 공공기관장 성과 계약 시 비리·범죄 근절, 국민·근로자 보호,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고 기관장 리더 역량 제고\*

\* 공공기관장 워크숍, 지방공기업 CEO 리더십 포럼 등 지속 추진

### ◇ 공정하고 투명한 포용적 인사 관리 도모

- 채용 비리 제재 강화\*,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도입 추진

\* 채용 비위 임원 명단 공개 부정 합격자 합격 취소 절차 마련 등(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20년)

- 여성·장애인·지역 인재·저소득층 등 균형 인사 계획 수립을 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산하고, 취약 계층 채용 확대 및 장애인 근무 여건 개선\*\*

\* 지자체 균형인사지침 개정 / \*\*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보조 공학 기기 및 보조 인력 지원)을 장애인고용기금 사업으로 통합·일원화 및 지원 확대('21년~)

### ◇ 사회적 가치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 교육·훈련 기관 성과 진단\* 시 사회적 가치 교육 및 사회 혁신 방법론(리빙랩 등) 도입 실적 등을 반영

\* 33개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 운영·내용·인프라에 대해 종합 평가(매년 실시)

- 업무 외 봉사, 재난 구조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국민 소통·공익 활동 등을 공무원 필수 학습 요건(상시 학습\*)으로 지정

\* 상시 학습: 年 80~100시간 학습 의무 부여 → 승진 심사 시 실적 반영



### 3.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

#### ◇ 평가체계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

-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 자율평가지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를 의무화하고, 정부업무평가 관련 지표의 세분화\* 및 배점·가점 확대\*\*
  - \* (정부혁신평가) 포용적 행정, 국민참여 관련 평가항목 세분화
  - \*\* (균형발전평가) 관련 배점 20→25점, (재난안전평가) 사회적 가치 성과 가점 3점 추가
- (지자체) 사회적 가치 항목(13개)을 고려하여 합동평가 지표개발·평가·환류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등 가치 반영 강화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내용을 보완하고 배점 확대\*
  - \* (국가) 사회형평적 채용 등을 추가하여 평가지표(균등한 기회, 상생협력, 안전) 내용 보강 (지방) '지속가능경영' 내 사회적가치 경영 강화 등 리더십 배점 강화(19, 4점→20, 14점)
- (기금·R&D) 기금의 존치 타당성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신규 반영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가치 반영 구체화·확대\*
  - \*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에 사회적 가치 기여도 평가 방향 제시

#### ◇ 기관 내부의 사회적 가치 평가 역량 강화

- 기관별 평가지표 개발 지원을 위해 세부항목별(13개) 지표 Pool을 구축하고 정부업무평가\*에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를 추가 발굴
  - \* 정부혁신평가(~'19.12까지 수요조사, '20년 발굴), 행정관리역량평가('20.1월 발굴)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권역별 공공기관 순회 설명회\* 개최
  - \*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안내서」('19년 발간),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지표 등 설명

#### ◇ 컨설팅·인센티브 등 평가결과 환류 강화

- 정부혁신 평가 결과 사회적 가치 항목 하위기관(20%)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컨설팅단에 사회적 가치 전문가를 보장
  - \* 원인분석 및 보완방향 제시, 우수기관 사례 전파 등
-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평가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포상(사회적경제 활성화 포상) 등 부여
  - \*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우선순위 선정 등



## 4.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 ◇ 사회적 가치 핵심 재정사업 선정

- 매년 사회적 약자 보호, 기회균등, 공동체 등 핵심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위주 10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19년 35→'20년 165억), 다함께 돌봄(106→262억),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616→863억), 사회적기업 육성(903→1,013억원) 등

### ◇ 재정운용기준에 사회적 가치 원리 강화

- 예산·기금 등 재정운용 쏠과정(편성-집행-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관련 내용 포함

\* 각 기금관리 주체는 기금별 특성을 감안한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마련 (기금지침 개정,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19.4월) 참고)

- 지자체, 교육청 금고은행 지정시 사회적 가치 고려

### ◇ 재정사업 추진과정에서 참여·협업 촉진

- 참여예산 내실화를 위해 집행 모니터링단 운영을 정례화\*하고, 집중토론 등을 통해 주요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문제해결형)

\* (기존) 집행액 등 공개→(개선) 제안자 등으로 구성 점검의견청취('19.下 시범운영→'20 정례화)

- 재정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활성화\*

\* (예시) 사업시행자 위탁범위에 사회적경제기업 포함(낙후 어촌·어항 재생사업 등)

### ◇ 사회적 가치 공공조달제도 강화

- 공공조달 계약과정(신인도 평가 등)에서 사회적 가치가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등 조달제도 개선('20.上)

\* 신인도 평가체계 정비 및 신규 가·감점제도 발굴

-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사회적 가치 고려를 포함하는 '공공조달 혁신방안\*' 추진

\* 민관협력 공공수요발굴협의체 운영 및 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등



## Ⅳ.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 지원

### 1. 기업·국민 등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지원

- DB(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등),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평가·검증하기 위한 지표 개발 등 추진 기반 구축
- 정책자금 지원대상 평가시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 우대\*(’20년), 정부포상(사랑받는 기업포상, ’20년~) 등 인센티브 제공
  - \* 소셜임팩트 펀드 주목적 투자 대상에 CSR 경영 우수 중소·벤처기업 포함,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확대(’19 500억원 → ’20 600억원)
- 글로벌 CSR 기준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 지원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산업별로 전문화\*하고 수준별 맞춤 컨설팅 제공
  - \* (’19.下) CSR 협의체 시범 운영 → (’20년) 에너지식품 등 산업 분야별로 확대 운영 검토

#### ◇ 교육·홍보·문화 조성 등을 통한 민간인식 제고

- 중소기업 대상의 지속가능경영 교재 개발(’20.上) 및 전문가 교육과정 확대(’20년),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사례집 발간(’20.下)
- 사회적 가치 인식조사(가칭) 정례화(’20년~), 사회적경제 박람회(’20년~), 사회적 가치 간담회 등을 통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 발굴·홍보,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 활성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지원
  - \* 공급원가 변동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 사회적 가치 분야 국제협력 및 ODA 강화

- ODA 기본계획에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사회적 가치 이행을 촉진하는 방향을 반영(’20년)하고 사업심사 시에도 고려(’21년)
- 개도국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과의 ODA 협력 프로그램(KOICA) 확대



## 2.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 ◇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 기관에 대한 참여지수 개발 및 우수기관 인증 확대, 참여 포인트제 도입 등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자발적 참여문화 조성
- 문제해결형 참여 촉진을 위해 '광화문1번가'의 정책숙의 기능과 참여예산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R&D 등 리빙랩 활성화
- 사회적 약자, 정책수요자 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참여 사례 발굴·유형화를 통한 가이드 마련·확산

### ◇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 지자체-지역대학간 연계, 청년 친화적 산단으로의 혁신 등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 주민자치회를 확산하고,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참여 제도를 활성화
- 실질적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공공자원을 개방하고(통합포털, '20.2월), 지역활성화 지원 위한 재원 조성\*

\* 주민 등이 지역자산화 위해 빈집·유휴지 매입 시 보증·저리대출 제공(농협·신보)

###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정책의 연계·협력 위한 부처협의회 구성\*(단장: 사회적경제비서관) 및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강화

\* (기관운영)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인사처  
(평가)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국조실, 인사처, 균형위  
(항목별) 법무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총리실

- 민간전문가로 사회적 가치 T/F 구성·운영(정책기획위원회 산하)



### 3. 사회적경제 성장 가속화

#### ◇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 개선

- 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의 통합·연계\*를 추진하고 시·도 소관 중간지원기관과의 기능 조정 절차\*\* 마련

\* 협동조합(기재부) + 사회적기업(고용부) + 마을기업(행안부)

\*\* 중간지원기관 간 역할분담 협의, 연계 운영 필요시 기관 통합 또는 컨소시엄 구성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업체 수, 취업자 수, 취약계층 고용수준, 사회 보험 가입률 등 사회적경제기업 특성을 고려한 통계 개발('20년)

#### ◇ 사회적 금융 기반 고도화

- 조합형 사회적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자금지원을 확대\*, 신탁법 개정안\*\* 통과 노력 지속

\* 신용·담보·전용상품 대출(90억원) 및 육성자금지원(10억원) 등 '20년 총 100억원 지원

\*\* 신탁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출자를 허용('19.2.15. 발의, 정무위 계류중)

-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제공을 추진하고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사회적금융 관련 정보\*\* 제공 확대

\* 신보에서 개발한 사회적경제기업 특화 평가모형으로, 웹 시스템 구축 완료('19.10월)

\*\* 대출형·투자형 중개기관 현황,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현황, 해외사례 등

-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조달 수단 확대 지원

#### ◇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 지원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10 → 13개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2개소 착공 → 신규 3개소 추가 조성) 등 지역 거점 센터 확충

- 소셜벤처 대상 R&D를 지원(디딤돌 창업과제 등)하고,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팝업 스토어·공동 브랜드 개발·디자인 컨설팅\* 등 지원

\* (해외 판로 지원) KOTRA 사회적경제기업 예산 확대: ('19) 6.5억 → ('20) 9억원  
(디자인 지원) 사업예산 확대: ('19) 7억원 → ('20) 31.9억원

- 협동조합간 연대를 통한 성장을 위해 이종연합회(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간) 설립 허용 및 공동사업 발굴·확산



## V. 향후 추진계획

- ◇ 문재인 정부 내 국민체감도 제고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가치별 실행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20년)
  - \*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재정확보 등 지원
- ◇ 실행 목표별 세부 실행계획 및 정책 추진상황 지속 점검·관리
  - \* 추진현황, 목표 달성, 정책효과 등을 사회적 가치 TF에서 논의

〈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	주관기관	일정
◇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		
① 조직 구조·문화 개선		
▪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을 위한 조직 기반 정비		
- 정부조직관리지침 등 보완	행안부	'20.上
- 현장·민생 공무원 및 조직 확충	행안부	'20년~
-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책임관 등 지정	각 기관	'20.上
▪ 협업·참여 강화를 통한 조직의 사회적 유연성 제고		
- 벤처형 조직, 긴급 대응반, 협업 정원 등 운영 활성화	행안부	'20년~
- 국민 참여 조직 진단 실시 확대	행안부	'20년~
-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확대 유도	기재부	'20년~
▪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조직 문화 확산		
-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경진 대회 등 실시	각 기관	'20년~
- 적극 행정 이행 점검 및 평가	인사처	'20.1월
② 인사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 공무원 등 채용·승진 시 사회적 가치 고려 강화		
- 채용·승진 시 사회적 가치·책임 평가 강화	행안, 인사	'20년~
- 성과 평가를 경쟁·개인→협업·조직 중심으로 전환	행안, 인사	'20년~
- 공공기관장 사회적 책무 명시 및 리더 역량 제고	기재, 행안	'20년~
▪ 공정하고 투명한 포용적 인사 관리 도모		
- 지방공기업 등 채용 비리 제재 강화(법령 개정)	행안부	'20년
-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도입 추진	행안부	'20년~
- 취약 계층 채용 확대 등 균형 인사 확산(지자체·공공기관)	행안, 인사, 기재	'20년~
▪ 사회적 가치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 교육·훈련 기관 성과 진단 시 사회적 가치 반영	인사처	'20년~
- 사회적 가치 활동을 공무원 필수 학습 요건으로 지정	인사처	'20년~



＜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	주관기관	일정
<b>③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b>		
▪ 평가체계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		
- 재정사업 자율평가지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 의무화	기재부	'20.1월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보강	기재, 행안	'20년~
-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체계 개편	행안부	'20년
- 기금의 존치 타당성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기재부	'20.1월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방향에 사회적 가치 반영	과기부	'21년
▪ 기관 내부의 사회적 가치 평가 역량 강화		
- 사회적 가치 세부항목별 평가지표 pool 구축	기재, 진흥원	'20년~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기재부	'20년
▪ 컨설팅, 인센티브 등 평가결과 환류 강화		
- 정부혁신 평가 결과 컨설팅 강화	행안부	'20년
-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우수사례 발굴	행안, 교육	'20.下
-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부여	행안부	'20.下
- 포상 수여(사회적경제 활성화 정부포상)	기재부	'20.3/4
<b>④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b>		
▪ 사회적 가치 핵심 재정사업 선정		
- 핵심 재정사업 선정 관리	기재부	'19.下~
▪ 재정운용기준에 사회적 가치 원리 강화		
- 예산·기금 지침 개정	기재부	'20년
- 지자체·교육부 금고은행 지정방안 개선	교육, 행안	'19.下
▪ 재정사업 추진과정에서 참여·협업 촉진		
- 참여예산제도 내실화	기재부	'20년
▪ 사회적 가치 공공조달제도 강화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조달제도 개선	기재부	'20.上
-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추진	기재부	'19.下~
<b>◇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 지원</b>		
<b>①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b>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지원		
-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지원 플랫폼 구축	중기부	'20.上
-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 개발	산업부	'20.上
-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투자 지원 확대	중기부	'20.上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중기부	'20.上
- 사회적 가치 부분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산업부	'20.下
-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산업별 전문화	산업부	'20.下
-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컨설팅 지원	중기부	'20년



＜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	주관기관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홍보 통한 민간기업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대상 지속가능경영 전문교재 개발</li> <li>- 중소기업 대상 전문가 교육과정 확대</li> <li>- 사회적 가치 인식조사(가칭) 정례화</li> <li>-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li> <li>- 사회적 가치 간담회 추진</li> </ul> </li> <li>▪ 사회적 가치 분야 국제협력 및 ODA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DA 기본계획 및 사업심사 시 사회적 가치 반영</li> <li>- 민간과의 ODA 협력 프로그램 확대</li> </ul> </li> </ul>	 중기부 중기부 기재, 진흥원 기재부 행안부  국조실 외교, KOICA	 '20.上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b>②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참여 활성화 수준 진단 지수 개발</li> <li>- 국민참여 우수기관 인증</li> <li>- 참여 포인트제 도입</li> <li>- 광화문1번가-참여예산간 연계 강화</li> </ul> </li> <li>▪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지역대학 협력기반 시범사업 추진</li> <li>- 5개지역 산단 혁신계획 수립</li> <li>- 주민자치회 확산 및 참여제도 보완</li> <li>- 공공자원 통합포털</li> </ul> </li> <li>▪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가치 T/F 구성·운영</li> <li>- 부처협의회 구성</li> </ul> </li> </ul>	 행안부 행안부 행안부 행안, 기재  산업부 산업부 행안부 행안부  정책위, 기재 기재부	 '20.上 '20.下 '20.上 '20년  '20년 '20.上 '20년~ '20.1/4  '19년~ '19년~
<b>③ 사회적경제 성장 가속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지원기관 체계 효율적 개선</li> <li>- 사회적경제기업 특성을 고려한 통계 개발</li> </ul> </li> <li>▪ 사회적 금융 기반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제공 추진</li> <li>- 사회적 금융 정보 제공 확대(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li> <li>-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 도입</li> </ul> </li> <li>▪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추가 건립(3개소)</li> <li>-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신규 건립(3개소)</li> <li>- 소셜벤처 등에 대한 R&amp;D 지원</li> <li>- 팝업 스토어, 디자인 컨설팅 등 판로 지원</li> <li>- 협동조합 간 이중연합회 설립 허용</li> </ul> </li> </ul>	 기재, 행안, 고용 각 기관  금융위 금융위 기재부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산업부 기재부	 '20년 '20년~  '20.下 '20.3/4 '20.上  '20년 '20년~ '20년~ '20년~ '20.上



□ **(개념 형성·발전)** ‘경제적 성장’과 함께 양적 성장의 한계가 제기되면서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단계로 논의 확대

① (‘30~’80년대) 대공황 이후, 경제성장(GDP)이 사회발전의 유일한 척도였으나, ‘50년대부터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시작

- ‘50~’6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빈곤, 범죄 등 사회문제도 증가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60~’70년대 미국에서 시작, 유럽과 UN, OECD 등 국제기구로 확산된 사회지표 운동(Social Indicator Movement)의 영향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② (‘90~’00년대) 신자유주의 부작용 심화, 환경에 대한 범지구적 대응 요구 등으로 지속가능발전(‘92, UN sustainable development) 논의 대두

- 개인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전제로써 사회의 안정, 포용과 역량 등을 강조하는 ‘사회의 질’로 확장(‘97년, 암스테르담 선언)

- 환경규범으로 시작된(‘92, UN) 지속가능성 논의가 경제 뿐 아니라 사회·경제·환경의 통합적 발전에 대한 개념으로 확대·제시

③ (‘08년 금융위기~) 성장위주 발전전략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유럽국가 등은 사회적 가치 관련 규범화·정책화 단계로 진전

\* GDP에 대한 과도한 의존 때문에,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고 ... 잘못된 방향으로 경제성장 정책이 이루어 졌음(OECD 고위전문가그룹 보고서, ‘18)

- 금융위기 이후, ‘포용성 향상’과 ‘혁신능력 배양’이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부상

- 유럽 국가 중심의 사회적 가치 관련 국내 법제화와 국제기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기준 제시, 통상 규범화 경향



□ **[국제규범화]** 국제기구와 유럽국가 중심으로 경제·사회·환경 요인을 균형 있게 포괄하는 ‘사회적 가치’ 실천노력 전개

- EU 및 회원국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기관·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제화 등의 다양한 조치 시행

국제기준	주요 내용
EU, 사회적경제 결의안('09)	사회적경제 개념인식, 법적조치 권고 등을 채택하며 유럽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EU, 사회적책임 조달 지침('10)	일자리, 노동권 준수, 사회통합, 기회균등, 윤리적 무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자율적 준수 등 제시
영국, 사회적 가치법('12)	공공기관이 위탁·조달하려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창출을 고려하도록 규정
EU, 비재무정보 공시('14)	환경문제, 사회 및 피고용 측면, 인권존중, 부패 및 뇌물 방지 등에 관한 기업의 비재무 보고서 발간 의무화

- OECD, UN 등은 나라별 국민 삶의 질, 행복을 여러 지표로 평가·발표

국제지표	주요 내용
OECD, Better Life Index('11~)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질,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24개 지표로 국가별 웰빙수준 평가
UN, World Happiness Index('12~)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기대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패정도 등 측정, 매년 UN이 정하는 ‘세계 행복의 날(3.20)’에 발표

- UN, ISO 등은 기업활동이 경제·사회·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국제기준 제시

국제기준	주요 내용
UN Global Compact('00)	선진기업들이 추구해야 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분야 10개 원칙을 제시
ISO <sup>1)</sup> 26000('10)	기업, 정부 등 조직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침·원칙 제공
GRI <sup>2)</sup> G4('13)	경제, 환경, 사회 등 영역에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보고서의 표준 제공
UN SDGs <sup>3)</sup> ('15)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를 승계하여 빈곤퇴치, 사회발전, 환경보호, 경제, 치안 등 17개 목표 제시

- 1)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 2) Global Reporting Initiative
- 3)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참고 2

## 사회적 가치 인식조사 결과

※ 사회적 가치 대국민 인식조사, 1,000명, 온라인 설문조사('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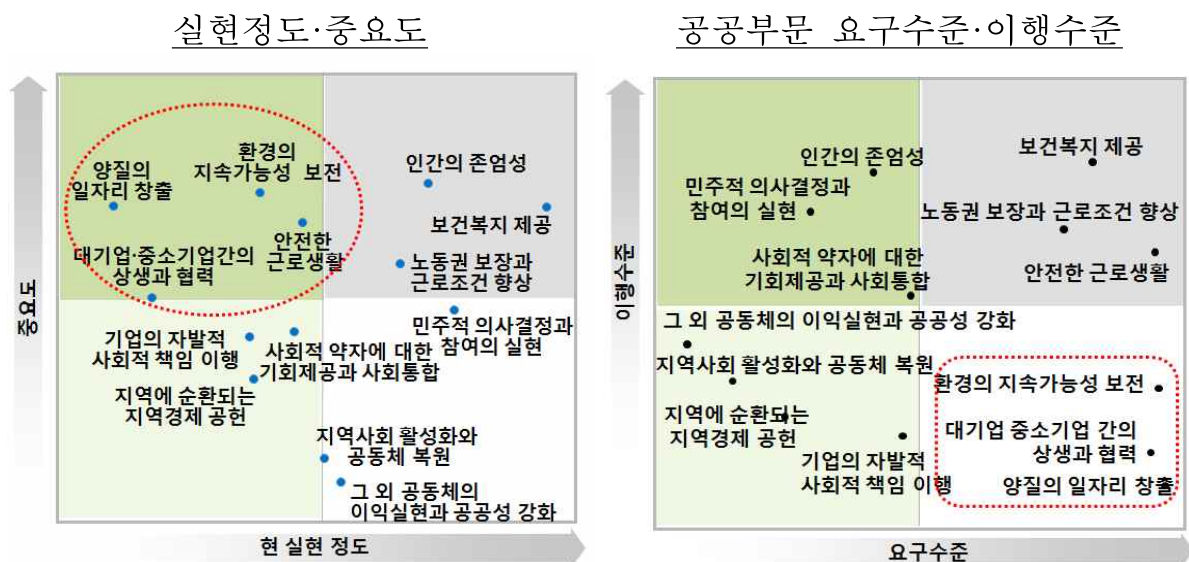
◇ 국민들은 사회문제가 심각하나, 사회적 가치 실현 수준과 실현을 위한 노력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

□ (사회문제) 모든 문항이 보통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환경, 일자리 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

\* 심각성(1~5점) : (저출산·고령화)4.36 (환경)4.28 (일자리)4.21 (대·중기 격차)4.20 등

□ (사회적 가치 인식) 13개 분야별 실현 수준이 보통 이하

- 사회적 가치 중 중요성이 높으나 실현 정도가 낮은 항목으로 일자리 창출, 환경, 안전, 상생협력 등을 지목
-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으나, 공공부문의 이행 수준은 낮은 항목으로 일자리 창출, 환경, 상생협력 등을 지목



- 사회전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며, 특히 공공부문·국회에서 우선책임이 있다고 응답

\* 실현정도(1~5점): (국회)1.96 (공공부문)2.80 (기업)2.64 (시민단체)3.08

우선책임 주체(%): (국회)31.4 (공공부문)34.4 (기업)4.5 (시민단체)1.3



---

#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0~'22]

---

2020. 3.

관 계 부 처 합 동







---

#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0~'22]

---

2020. 3.

관 계 부 처 합 동



## 순 서

I. 수립배경 .....	465
II. 그간의 성과 및 시사점 .....	467
III. 제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	473
IV. 5대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	475
1. [Advance]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	475
2. [Band] 협동조합간 연대 강화 .....	479
3. [Community] 지역사회 중심 운영 .....	482
4. [Deregulation]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484
5. [Education] 교육 및 홍보 내실화 .....	487
V. 향후 추진계획 .....	489
[참고] 세부 실행계획 .....	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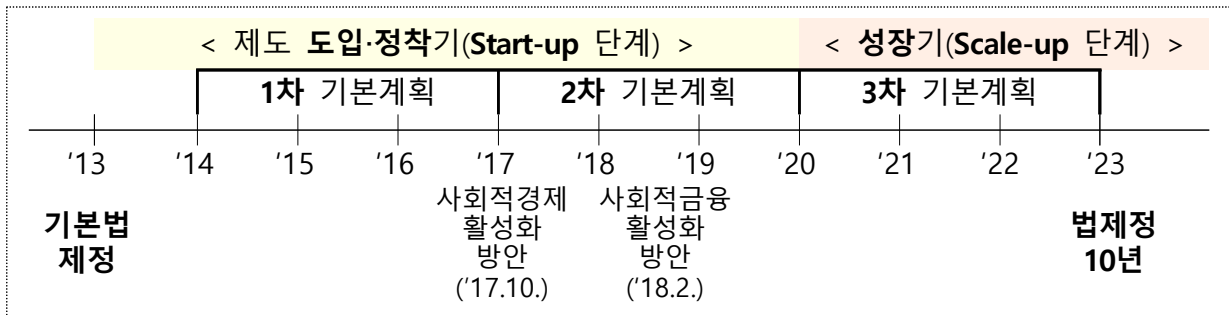


# I. 수립배경

-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12.12월) 이후,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차 기본계획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며, 협동조합 제도 도입·정착기를 지나 성장기로 전환을 준비한다는데 의의



## ① 사회적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중요성 강화

-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인 '포용성장' 및 '사람중심 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금융·판로·인재 등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과 함께 주요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활성화 지원

- 협동조합이 갖는 조직운영의 특성(1인 1표 등) 상,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의 이상적인 조직형태로 부각

⇒ 경제주체로서 협동조합의 가치·역할(정체성)이 강조되는 시기

## ② 초기 창업단계(Start-up)에서 성장단계(Scale-up)로 전환 필요

- 협동조합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후 7년이 경과하면서, 초기 창업한 협동조합은 성장기로 진입하는 시점

⇒ 성장기로 안정적으로 전환하고 정착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성장 기반을 확립해야하는 시기



## 【 참고: 추진경과 】

-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추진방향 마련('19.4월)
-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추진('19.4~12월)
  - 기본계획(3년주기)과 실태조사(2년주기)가 함께 이루어지는 첫해로 3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실태조사 내용 구성
    - \* 유형별 문항 추가, FGI(Focus Group Interviews) 실시 등 심층분석
- 연구용역, 해외사례 연구,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
  - 협동조합 기본계획('19.2~12월, 중소기업연구원), 노동자 기업인수협동조합 전환모델('19.3~7월, 외대 산학협력단)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
    - \*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플랫폼 종사자 지원방안 연구용역(고용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참여
  - 해외사례 연구를 위한 현장방문(5월, 프랑스/벨기에) 및 세미나 참석
    - \* 협동조합법 국제심포지엄(3.26), 플랫폼 협동조합 해외사례 세미나(5.29) 등
  - 기재부 차관 주재 창업지원 사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19.6.19.)
  - 전문가 자문회의('19.3~5월, 4회), One-Point 현장 종사자·전문가 회의\* 수시 추진 및 다수의 정책토론회\*\* 참여
    - \* 프랜차이즈협동조합(5.2), 프리랜서협동조합(8.2, 9.18), 공동돌봄 협동조합(10.29) 등
    - \*\* 협동조합기본법 제도개선(7.6), 사회적경제 공제 발전방안(9.25), 사회연대경제회의 제도개선 토론회(10.30), 사회적경제 정책포럼-플랫폼 노동(12.5) 등
- 협동조합 라운드테이블 구성·운영
  - 정부-중간지원기관(사회적기업진흥원)-민간조직(한국협동조합협의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구성
  - 협동조합 기본계획 5대 전략을 주제로 개최('19.9~10월, 4회)하여 현장의 정책수요 반영 및 의견수렴
-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상정('19.11.6.)
- 제4차 실태조사 결과 반영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20.1월)



## Ⅱ. 그간의 성과 및 시사점

### 1 성과 (제4차 실태조사 결과 등에 기반)

#### ◇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양적 확대 달성

- 협동조합 설립 수(신고·인가 기준)가 매년 2천여개 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년말 14,526개

\* 협동조합 수(신고·인가): ('14) 6,235 → ('16) 10,615 → ('18) 14,526

\*\* 유형별 개수('18년): (일반)협동조합 13,267개, 사회적협동조합 1,185개, 연합회 74개

- '18년 기준 사업을 운영중인 협동조합\* 수는 7,050개로, '16년 (5,100개) 대비 38.2% 증가

\* 사업체등록을 하고, '18년도에 과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고용보험 가입 실적이 있는 협동조합

—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이 '16년 대비 54.6% 증가하는 등 큰 폭 증가

\* ('16→'18) (일반)협동조합(4,514→6,166), 사회적협동조합(549→849), 연합회(3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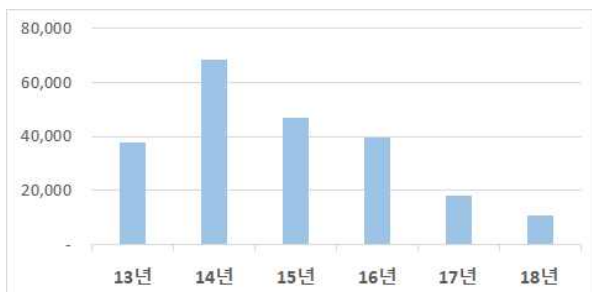
#### ◇ 협동조합의 운영·경영 성과도 개선 추세

- 운영중인 협동조합의 평균 조합원 수, 출자금, 매출액 등이 증가하는 등 운영·경영 성과도 개선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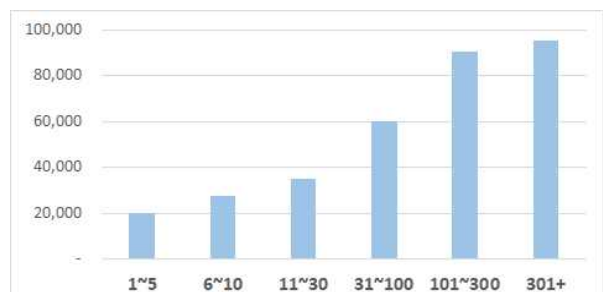
\* ('16→'18) 조합원수(61.6→67.0명), 출자금(47→57백만원), 매출액(2.7→3.7억원)

- 업력이 길고, 조합원 수가 많은 협동조합이 매출액도 높은 경향을 보이며, 대규모 협동조합이 전체 성장을 견인

< 설립연도 별 매출액 평균(만원) >



< 조합원수 별 매출액 평균(만원) >





##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높은 취약계층 고용 효과

- 협동조합 총 피고용자(임금 근로자+유급형 임원)가 '18년 31,335명으로, '16년 대비(20,409명) 53.5% 증가
    - 조합 당 평균 피고용자는 '16년 4.0명에서 '18년 4.4명으로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16년 66.0%→'18년 70.8%) 및 월평균 임금('16년 131.3만원→'18년 158.2만원)이 증가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
  - 임금근로자 중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취약계층 고용규모는 '16년 대비 46.7% 증가
- \* 취약계층 비율(%): ('14) 26.8 → ('16) 43.3 → ('18) 42.3  
취약계층 인원(명): ('14) 1,787 → ('16) 7,662 → ('18) 11,243

- ▶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돌봄·가사·간병분야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 '19년 고용인원 927명(신규 303명) 중 취약계층 620명(66.9%)
- ▶ (나무와열매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아동 부모가 주체가 되어 장애아동 돌봄을 위해 설립, '19년 고용인원 407명(신규 36명) 중 취약계층 217명(53.3%)

## ◇ 지역경제 선순환 및 공동체 복원에 기여

-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등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의 성공사례 창출
- \* 협동조합의 62.8%('16년 52.4%)가 물품·현금 기부,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시 조합당 631만원('16년 462만원)

- ▶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 12개의 매장을 통해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 중개, 2배 이상 높은 농가소득, 기존 대비 30% 낮은 소비자가격을 실현
- ▶ (횡성한우협동조합) 횡성지역 한우사육농가로 구성, 사료 공동구매, 공동출하, 육가공센터 운영 등을 통해 횡성한우 경쟁력 향상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역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복원에 기여

- ▶ (회현당 사회적협동조합) 회현 지역 빈곤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 535명의 기부로 설립, 참기름 생산과 카페 운영을 통해 수익 창출, 수익금은 전액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
- ▶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농장)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홍성군 보건소, 인근 농업인 등과 협력하여 지역의 정신질환 장애인들과 농업 활동 운영



## ◇ 정부-시장의 중간영역에서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보완

- 정부-시장의 중간영역에서 복지·문화 서비스의 소외계층 및 지역에 틈새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

-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력하여 보건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의료, 요양서비스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건강증진 활동, 독거노인 반찬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문체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영화관이 없는 중소 시·군지역에 100석 규모의 영화관을 설립하고 최신영화를 저렴한 가격으로 상영

- 서비스 수요자가 중심이 되어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서비스 질 향상

- ▶ (고양도토리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육아를 중심으로 어린이집에서 초·중등 대안학교로 확장, 생애주기별 교육·문화 활동 진행
- ▶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발달장애인 부모가 주체가 되어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돌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특수치료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약 70%)

## ◇ 협동조합 인프라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20.3.6. 국회 통과)을 통해 협동조합 인프라를 강화하는 신규제도 도입

### ① 협동조합간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이종연합회 허용

- \* (현행) 법상 동일한 유형의 협동조합간 연합회 설립만 허용  
→ (개선) 다른 법상 협동조합(생협, 신협)과의 연합회 설립도 허용

### ②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우선출자제도 도입

- \*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의결권·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 출자 방식

### ③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휴면조합 해산절차 간소화

- \* 휴면조합의 정리를 유도하고, 일정요건의 휴면조합은 자동적으로 해산될 수 있는 근거 마련

### ④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유도하는 인허가 간주제 도입

- \* 처리지연 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하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



◇ **협동조합의 성장 가능성 확인 but 업종·규모 측면에서 한계**  
→ **특화분야 발굴·성공사례 확산, 규모화 등을 통한 성과 가시화**

- (업종) 협동조합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사회서비스 분야 등 협동조합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족
    - \* 업종별 비중(%): 도소매업(22.1), 교육서비스업(15.0), 농림어업(9.4), 예술·스포츠(9.0), 제조업(8.9), 협회 및 단체(6.5), 보건 및 사회복지(5.4), 출판·영상(3.9) 등
  - (규모) 업력이 길고, 조합원 수가 많은 협동조합 중심으로 성장한 반면, 신생 협동조합 등 상당수의 협동조합은 여전히 영세한 수준
    - \* 조합원 수가 10명 미만인 협동조합이 58.7%, 300명 초과하는 조합은 2.6%에 불과
- ⇒ 그간 구축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특화분야 발굴 및 성공사례 확산, 규모화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

◇ **협동조합 인프라 구축 but 개별 협동조합, 중앙정부 중심의 접근**  
→ **연대를 통한 상호지원,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구축**

- (연대) 연합회·협의회 가입률(40%), 연대사업 경험(30%) 등 연대·협력 활동이 낮은 수준이며, 대표성 있는 연합회도 부재
  - (지역) 중앙정부 중심의 설계로 지역의 전달체계 및 추진체계 미미
- ⇒ 연대를 통한 성장, 지역사회 기여 등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프라 재구축

◇ **협동조합의 가치 확산 but 대국민 인식이 아직 부족**  
→ **사전교육 및 자율규제 등 자정기능 강화 + 홍보 내실화**

- 협동조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휴면조합 등 낮은 사업 운영률, 소수의 악용사례 등이 부각
- ⇒ 협동조합 가치·운영원칙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협동조합 생태계 내에서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며, 홍보 내실화



## 1) 개관

- 4대 분야, 11대 정책과제 내 61개 세부과제 중 54개 완료 및 정상 추진, 7개 지연

## 2) 주요 추진실적

- 협동조합 자생력 제고를 위한 판로·자금조달·내부역량 강화 지원
  - (판로) 국가·지자체 물품·용역 입찰에 대한 가점 확대\*('17.12월) 및 공공기관 구매실적 지표의 배점 상향\*\*('17.12월)
    - \* 국가 : (기존) 0점 → (개선) 2점, 지자체 : (기존) 0.5점 → (개선) 1점
    - \*\* (기존) 정부권장정책지표(6점) 중 사회적협동조합 구매목표(0.1%) 달성지표(0.04~0.08점) → (개선)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중 협동조합 생산품 실적(0.2~0.4점), 비계량(2점)
  - (자금조달) 정책자금<sup>내</sup>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 신설·지속 증대\* 및 협동조합에 대한 신보·지신보 보증한도 확대\*\*·기준개선('18.上~)
    -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 ('16) 121억원 → ('17) 230억원 → ('18) 400억원
    - \*\* 신보 : (기존) 1억원 → (개선) 3억원, 지신보: (기존) 0.5억원 → (개선) 4억원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민간위탁시장 진출 활성화, 협동조합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 친화적 분야 확대
  - (모델발굴) 소상공인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사업\* 신설('18년, 중기부), 사업고용협동조합 및 직원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위해 공동장비, 브랜드 개발, 마케팅, R&D 등에 5억원 이내 지원
    - \*\* 사업고용협동조합('17.12월, '18.12월), 직원협동조합('18.7월, '19.7월) 각 2회 연구용역 완료
  - (민간위탁)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방과후 교육 서비스, 돌봄(아이돌봄, 가사지원) 서비스 단체표준(안) 제작('18.12월)
  - (창업지원) 창업지원사업 확대\*, 팀코치 육성 및 청년 협동조합, 예비창업팀, 일반인 등 대상 창업교육과정 운영
    - \* ('16) 12개팀 → ('17) 24개팀 → ('18) 30개팀 → ('19) 60개팀



□ 차별해소를 위한 부처간 협업 및 민·관 파트너십 강화, 협동조합 관리체계 효율화 등 네트워크 강화

- (제도개선) 여성기업 지정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동일한 혜택(공공구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 해소

\*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19.10월)

- (관리체계) 경영공시 항목 개편(우선구매 실적 추가) 및 협동조합 성과 평가지표(Coop-index)\*·활용가이드 개발('19.11월)

\* 협동조합원칙(CPI), 협동조합가치(CVI), 조직성숙도(OMI), 조직신뢰도(OTI) 4개 부문으로 구성

□ 대국민 홍보, 미래세대 교육 및 글로벌 연대를 통한 인식개선

- (미래세대) 학교 협동조합 총회 의사록 공중면제(35개), 관련 조례 제정(8개 교육청) 및 청소년·교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운영('17~'19년 각 20개교), 청소년 사회적경제 캠프('18.5월)

- (글로벌 연대) 국제 컨퍼런스 개최\*, 국제교류 캠프 및 연수 참가\*\*

\*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18.7.12.~13.)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사무총장 등 초청

\*\* 협동조합 영리더(Young Leader) 국제교류 캠프(영국), 사회적협동조합 국제학교 연수(이탈리아)

### 3) 지연과제(7개) 및 향후 계획

□ (3차 기본계획 반영) ①불분할 자산에 대한 세제지원, ②연합회 공제기금 마련 등은 3차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재추진

□ (중장기 과제) 세제지원, 협동조합 시스템 개편 관련사항, 민간공인 자격 제도 도입 등 일부 과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 (세제지원 합리화) ③개별법 협동조합과 동일한 세제혜택 적용은 협동조합 전반의 세제지원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시스템 개편) ④전문강사 인력뱅크 시스템 구축, ⑤영문홈페이지, ⑥관계부처간 정보공유 강화는 향후 협동조합 시스템 개편시 반영

- (민간공인자격제도) ⑦협동조합 전문가 육성을 위한 민간공인자격 제도는 도입은 향후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추진



### Ⅲ. 제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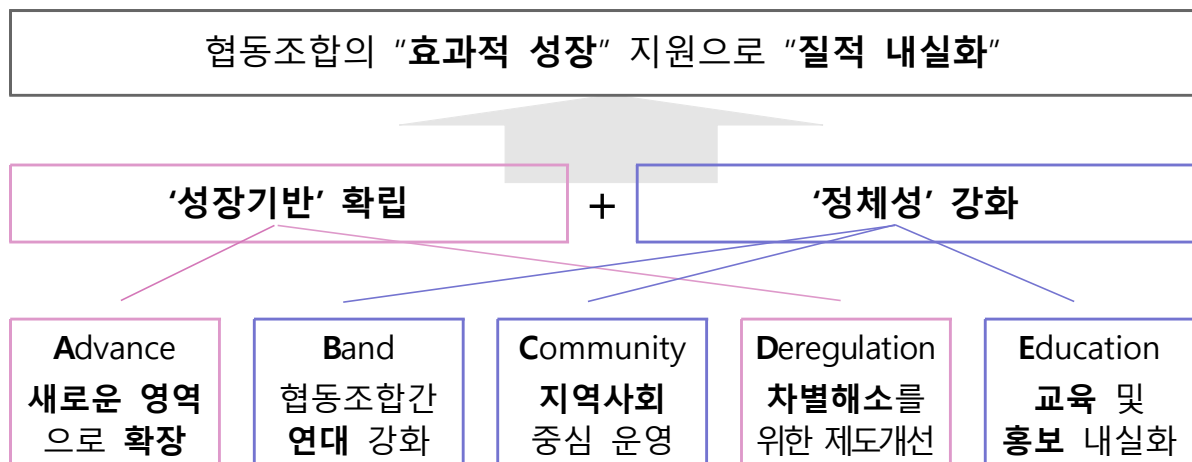
#### 1 기본방향

##### ◇ ‘COOP 2.0시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 (COOP 1.0) 자유로운 설립 지원으로 양적 확대  
→ (COOP 2.0) 효과적인 성장 지원으로 질적 내실화
- ❶ 제도 도입·정착 → 성공사례 확산 등을 통한 성과 가시화
- ❷ 설립단계에 초점 → 규모화·연대 등을 통한 성장단계로 전환
- ❸ 협동조합 중심의 정책·사업 개발 →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과 연계
- ❹ 개별 협동조합 지원 → 협동조합 연대를 통한 상호지원 체계 구축
- ❺ 중앙정부 중심의 접근 → 지역 자생기반 강화

##### ◇ 협동조합 ‘성장기반 확립 및 정체성 강화’를 목표로 정책설계

- (성장기반 확립) 협동조합이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고,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반기업과 차별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정체성 강화) 일반기업과는 다른 협동조합의 특성을 살려 ‘연대’, ‘지역’, ‘교육’에 기반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설계





## 비전

COOP 2.0 시대로의 도약

## 목표

## 협동조합의 성장기반 확립 및 정체성 강화

성과지표	'18년	'22년
평균 출자금	5,744만원	9,000만원
평균 매출액	3.7억원	6.0억원
취약계층 고용비율	42.3%	45%
연합회·협의회 가입률	39.9%	60%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 추진	62.8%	70%

## 전략

A

## Advance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 ▶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 지원
-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 ▶ 협동조합 스케일업을 통한 성장지원

B

## Band

협동조합간 연대 강화

- ▶ 연합회 역할 강화
- ▶ 협동조합간 연대 촉진
- ▶ 자율규제 강화

C

## Community

지역사회 중심 운영

- ▶ 지역 전달체계 개선
- ▶ 자치단체 사업 참여 확대
- ▶ 자치단체 추진체계 공고화

D

## Deregulation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 진입제한 완화 및 동등한 혜택 제공
- ▶ 기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 ▶ 금융조달 애로 해소

E

## Education

교육 및 홍보 내실화

- ▶ 준비된 창업을 위한 사전 교육 강화
- ▶ 현장·참여형 교육 확대
- ▶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홍보



## IV. 5대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 A [Advance]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 미래 인구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한 협동조합 특화모델을 발굴하고, 협동조합 스케일업(Scale-up) 지원

#### 1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 지원

##### 1 미래 인구변화에 대비한 돌봄시장 진출

- 아동 및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돌봄 분야의 협동조합이 미미\*한 만큼 **협동조합형 돌봄시설 활성화**

\* 돌봄 협동조합 현황('19.11월): 협동 어린이집(158개), 협동조합형 유치원(1개), 노인요양시설(9개), 지역아동센터(18개), 다함께돌봄센터(7개)

- 국공유 재산 임차 등을 통한 **공간확보** 지원, 돌봄분야 협동조합 설립 매뉴얼 마련, 위탁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추진

- 생애주기에 따라 돌봄분야 협동조합의 **확장**(육아-방과후 교육-노인요양)이 가능하도록 **특화 교육** 추진

- 대상별 특화 돌봄이 아닌, **지역공동체 내** 각종 돌봄을 지원하는 '**조합형 돌봄 플랫폼**' 구축('20년 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실시)





## ② 협동조합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확대

- 해외진출 및 해외 협동조합과의 연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브랜드,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모델 창출
  - － KOTRA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역량 및 브랜드 강화, 해외진출 기회 확대
  - － ICA(국제협동조합연맹) ‘2020 세계협동조합대회’(‘20.12월, 서울 코엑스) 개최 등을 계기로 국제 협동조합간 비즈니스 교류 확대

## ②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 ①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기업 인수·전환, 사업 중단·폐업 등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노동자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

\* 노동자들이 소유하고 기업 운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2/3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인 협동조합

- (대상) 대표의 은퇴를 앞두고 경영 승계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 경영부실·폐업 등에 처한 기업 등
  - － 동일 직무 노동자로 구성되어 의사결정 비용이 낮고, 시장경쟁 및 자본조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에 집중
- \* (예시) 운수교통, 사회서비스, 사업서비스, 소규모 제조업 등
- (지원방안)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지원기관을 지정·운영(‘20년)하고, 현장의 수요 등을 감안한 단계별 제도개선 추진
  - － (지원기관) 노동자협동조합 전환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및 매뉴얼 개발, 컨설팅 등 수행
  - － (제도개선) 노동자협동조합 전환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노동자 기업인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 ▶ (1단계: 노동자협동조합 전환의 제약요인 해소) 조직변경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자본잠식 상태 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허용 등 검토
- ▶ (2단계: 노동자 기업인수 지원제도 마련) 인수주체의 법적근거(노동자협동조합 전환 추진단 등) 부여, 사회적금융 등을 통한 노동자 인수자금 지원 등 검토



② (프리랜서 협동조합) 급격한 기술·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 형태를 협동조합으로 흡수, 이들에 대한 '노동보호' 강화

- (대상) 사용자가 다수 또는 불특정하거나, 단순 중개역할만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등

\* 플랫폼 노동자(배달원, 대리운전, 가사노동 등), 문화예술, IT 개발자 등

- ▶ (번역협동조합) 통번역가들이 업계의 부당한 관행 및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대안으로 설립, 중개과정을 간소화하여 정당한 대가 지급 및 서비스 질 향상 추진
- ▶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가사노동자협회가 소속 협동조합들과 함께 설립,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앱)을 운영하며, 저렴한 수수료, 노동자 교육 및 자조모임 구성, 상호부조 활동 등을 통해 가사노동자 근무여건 개선

- (지원방안) 협동조합을 통한 조직화 및 운영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 (조직화) 협동조합의 가치를 지향하는 혁신리더 발굴 및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한국형 모델 개발 지원

- 플랫폼 노동 분야 등 혁신모델의 사업화 및 사회적기업 진입 지원 (고용부)을 통해 플랫폼 협동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가 발굴

\* 공유경제와 협동조합을 접목한 방식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술은 수용하지만, 민주적 가치를 위해 다른 소유 모델 지향(민주적 거버넌스, 폭넓은 소유구조 등)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사업(기재부, 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통해 사업고용협동조합\* 사업모델 및 노무 매뉴얼 개발 지원

\* 협동조합과 프리랜서가 근로계약을 맺고 프리랜서가 직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근로계약이 가능한 유럽에서 활성화

- (운영)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연합회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중기부)을 통해 공동 마케팅·브랜드 개발 등 공동사업 지원, 예술인 지원사업(문체부)\*을 통한 운영지원

\* 협동조합과 예술인 간 표준계약서 체결 시 사회보험료 지원, 협동조합을 매개로 하여 예술인 조합원 파견지원 사업 참여 지원 등

- 플랫폼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지원하여 공유 플랫폼 개발 및 종사자 교육, 공제사업 등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



### ③ 협동조합 Scale-up을 통한 성장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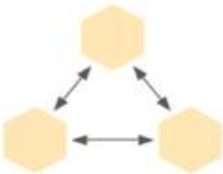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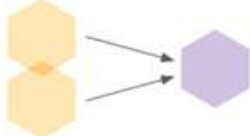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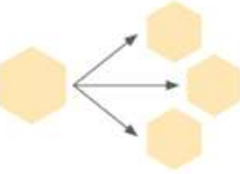

#### ① 사업연합·합병을 통한 규모화

- (사업연합) 협동조합간 또는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대를 통해 서비스를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 \* (사례) 화성시 사회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연합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지역주민에게 틈새 보육 서비스 제공
- (합병) 유사한 협동조합 간 적격합병이 가능하도록 **상시상담기관** 등을 통한 **컨설팅** 지원 및 합병관련 **가이드북** 마련
  - \* 농협의 경우 조합 경영기반 강화를 위한 합병을 적극 추진하여 2만여개의 이동 조합을 1,500여개의 읍면조합으로 통합('70년대)

#### ② 성공모델의 복제·확산 지원

- 성공모델을 **다른 지역에 복제**하거나, 성공모델의 **노하우 확산**을 지원하는 (가칭)**콤파이즈 사업** 추진
  - 지역 또는 전국 확산을 원하는 협동조합 성공모델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복제·확산 시스템(사업 매뉴얼 마련, 교육·훈련 등) 구축 지원
  - \* '20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기재부,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

< 스케일업(Scale-up) 전략 >

① 사업연합	② 합병	③ 복제	④ 확산
			

#### ③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고도화

- 협동조합 설립지원 중심인 창업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사업모델 개발·확장** 등 운영중인 협동조합의 **안정적 성장** 지원
  - \* (현행) 예비 창업자의 협동조합 설립지원 중심
  - (개선) 설립지원 + 사업연합, 성공모델 복제·확산 등 성장지원



## B (Band) 협동조합간 연대 강화

◇ 협동조합간 연대를 통해 자생(自生), 자립(自立) 및 자정(自淨)이 이루어지는 생태계 조성으로 협동조합 정체성 고양

### 1 연합회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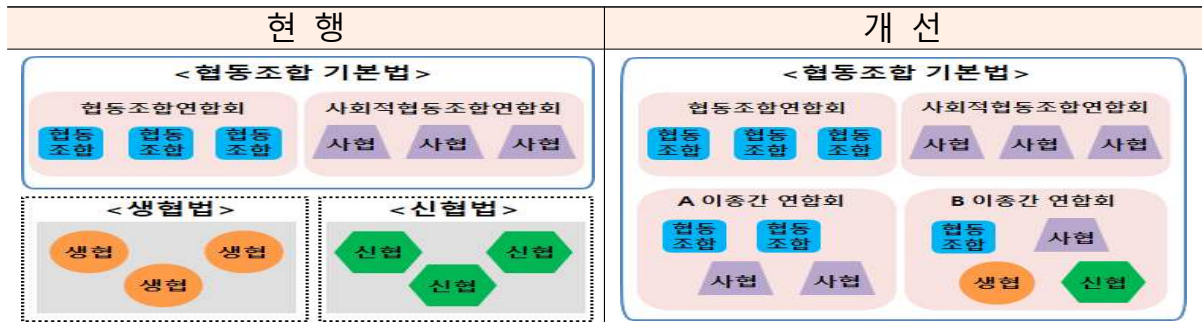
#### ① 대표 연합회 설립 지원

- 지역·업종별 연합회가 매트릭스 구조로 상호 보완하는 체계 구축
  - 정부는 간접적 방식(관련 법령 개정, 연대조직 중심으로 협동조합 지원 사업 개편 등)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대표 연합회 설립 지원

- ▶ (지역연합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종 협동조합간 연대
- ▶ (업종연합회) 업종별 협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고, 연합회 고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모화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통해 기본법-개별법(생협, 신협) 협동조합간 시너지 창출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으로 '20.9월부터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가능



#### ② 협동조합의 성장지원 강화

- 협동조합 연합회,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교육, 컨설팅 등 협동조합 성장지원 사업 추진

\* (예시) 협동조합 스스로 필요한 교육을 설계·운영하는 '맞춤형 아카데미'(사회적 기업진흥원) 운영체계를 개별조합 중심에서 연합회 등 대표조직 중심으로 개편

- 정부는 표준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민간조직의 역량 제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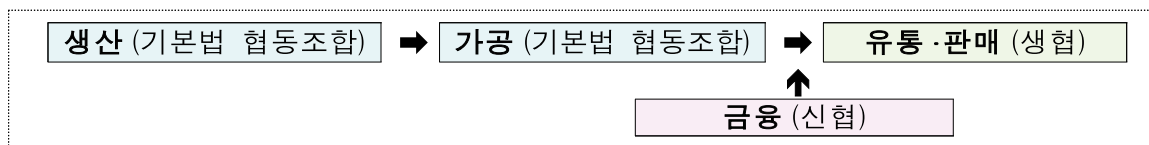
### ③ 연합회 고유사업인 공제사업 활성화

- 회원조합에 대한 대출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회원조합(법인) 대상 공제사업**부터 활성화
- 개별법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사례\* 등을 참조하여 **공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공제기금 조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 사업 추진
- － 공제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제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하도록 하고, 공제사업에 대한 **감사·감독 기준** 마련

## 2 협동조합간 연대 촉진

### ① 이종 협동조합간 공동사업 발굴·확산

- 이종 협동조합간 가치·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적 제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추진
- \* (예시) 이종 협동조합간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의 푸드플랜 사업 참여



### ② 개별법-기본법 협동조합간 상생 지원

- (판로) ‘협동조합 팝업스토어 사업’을 신규 시행, 농협·생협 주요 매장에서 협동조합 상품을 전시·홍보·판매 추진
- \* 중앙 및 지방정부, 농협, 생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의 협력을 통해, '20년 지자체 매칭 지원이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5개 지역)
- (자금) 상호금융 협동조합의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 활성화
- \*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협법 개정 추진(개정안 국회 계류 중)

#### < 협동조합간 협력 사례 >

- ▶ (생협) 아이쿱 생협은 조합원 평가단 운영, 상품성 개선사업 등을 통해 협동조합 제품의 아이쿱 입점 지원
- ▶ (신협) 동작신협은 사회주택 공급지원을 위해 주택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주택 사업자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입주자를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 ③ 자율규제 강화

#### ① 연합회를 통한 자율감사

- 해외사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연합회를 통한 자율감사 추진**
  - － (1단계) 연합회의 회원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 강화** → (2단계) 대표성 있는 연합회 설립 후 **제도화**

- ▶ **(이탈리아)** 2년마다 외부감사, 감사연합회 존재, 연합회에 속하지 않는 협동조합의 감사는 국가에서 수행(국가는 연합회에 위탁)
- ▶ **(독일)** 2년마다(자산총액 200만유로 이상인 경우 매년) 감사연합회 가입 의무화(단, 20명 미만 협동조합은 감사회 설치 의무 없음)

#### ② 자율공시 강화

- 경영공시 대상\*이 아닌 협동조합을 위한 **연차보고 매뉴얼** 마련
  - \* 사회적협동조합 및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30억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 － 경영공시 교육을 **결산, 총회, 경영공시**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협동조합 **운영 교육**으로 확대하여 역량 강화 도모
- 협동조합기본법 상 **변경신고 사항**을 **간소화**(협동조합기본법 개정)하여 변경신고에 대한 부담경감 및 효율성 제고
  - \* **(현행)** 신고한 사항 전부 → **(개선)** 등기사항(주소, 출자 총좌수, 납입한 출자금 총액, 임원 인적사항 등) + 기타 주요 정보(조합원수, 법인 전화번호 등)

#### ③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조합 내부 갈등이 민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협동조합기본법 개정)
  - － 조합원의 **총회 소집 청구권, 의안제안권** 신설 등 조합원의 견제 기능 활성화
    - \* 현행 총회 소집권자는 이사장이고, 총회 소집결정 및 의안결정권한은 이사회에 존재
  - － 이사 및 감사의 **이사회 소집 권한**(현재 이사장만 가능) 인정,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의 **의결권 배제** 등 이사회 관련 규정 보완
- 주사업(고유목적사업) 구분,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거래 구분 등 협동조합 특성을 반영한 **회계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 지방자치단체를 지원체계의 허브로 재편하여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협동조합 운영구조 구축

## 1 지역 전달체계 개선

### 1 중간지원기관 통합·연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중간지원기관의 기능·역할을 통합·연계하는 방안 마련
  - \* 현재 중간지원기관이 중앙부처·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 권역별(16개 시·도) 지원기관, 자치단체 위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으로 중복·다원화되어 비효율적 운영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중간지원기관 지정방식 및 절차, 운영비용 분담 방안 등 세부 실행계획 마련('20.下)
- 시도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인 통합·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통합 유도

### 2 중간지원기관 역량 강화

- 지원기관 종사자가 지역의 협동조합 전문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
  - \* 회계·법무·노무 전문 상시상담기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운영

## 2 자치단체 사업 참여 확대

### 1 지역 맞춤형 협동조합 사업모델 개발

- 지역 공동체가 문제수요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모델개발 사업 추진

- ▶ (여가부 지역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공동주택단지, 저층주거지, 농산어촌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20년 15개 지역 시범사업 실시)
- ▶ (서울시 공동주택 같이 살림프로젝트) 공동주택 내 주민 불편과 필요 서비스를 발굴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지원('19년 15개 → '22년 3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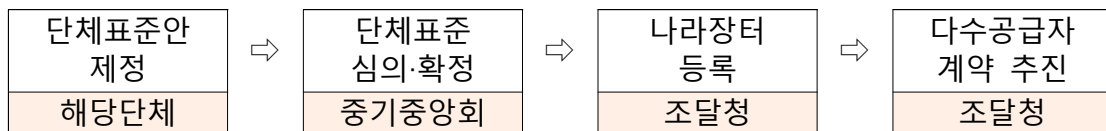
- 자치단체별 수요 분석을 통해 어린이집, 돌봄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수요가 많은 분야의 협동조합 집중 육성
- 중간지원기관이 협동조합 참여가 적합한 분야 발굴, 분야별 협동조합 관리, 정부사업과 협동조합 매칭 역할

## ② 공공시장 진출 지원

- 기관별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 공표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 \* (현행) 우선구매율 실적을 지자체·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기관별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은 미공표 → (개선) 협동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
- 민간위탁 서비스 표준을 제정해 자체적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공공시장 진출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예시) 서비스 표준을 단체표준으로 등록하여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MAS)\* 추진

\* 경쟁입찰 원칙의 예외로, 단체표준을 만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기관이 선정



## ③ 자치단체 추진체계 공고화

### ① 시·도 협의회 강화

-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지역연합회-중간지원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정례화

\* (민·관)사회적경제위원회의 분과 위원회로 구성

\*\* 협동조합 정책 협의·조정을 위해 기재부 장관 소속으로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가능(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4조)

### ② 시·도단위 활성화 계획 수립 유도

- 광역자치단체가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시·도 계획을 반영하여 상향식으로 수립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이중 협동조합간 공동사업 발굴, 연대 및 협업 지원 등을 포함



◇ 일반 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하고 기존 법인(상법상 회사 등) 위주의 법·제도 개선

## 1 진입제한 완화 및 동등한 혜택 제공

① (진입제한 완화) 협동조합 진입이 제한되는 차별적 법·제도 현황 파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 등으로 한정한 장애인 기업 인정범위에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협동조합 포함(장애인법 시행령 개정)

\* 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이고, 총 출자자수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 조합원이 출자하며, 이사장이 장애인 조합원인 협동조합

- 안전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관련 지원대상에 사회적 협동조합 추가(안전교육법 시행령 개정)

- 상인조직\*의 유형에 협동조합 추가(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에서 상시적으로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 (현행) 상인조직으로 상인회, 상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등만 가능

→ (개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도 포함

② (동등한 혜택) 세제, 계약제도 등에 있어 성격·특성이 유사한 여타 법인(개별법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들에 준하는 혜택 제공

-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보건(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 사회적기업의 혜택을 사회적협동조합까지 확대('20.7.1. 시행)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사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인정(지정기부금의 범위에 대한 기재부 고시 개정)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혜택을 사협연합회까지 확대('20.1.1. 지출분부터 적용)

\*\* 단,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공익사업(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한 연합회로 한정



## ② 기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 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

-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협동조합에 대한 역차별 요인 해소
  - － 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침에 협동조합도 지원대상임을 명확히하고, 협동조합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방식이나 평가방식 개선 검토
- \* (예시) 재무적 평가 외에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여 판로·R&D·컨설팅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 추진

### ② 중앙부처 중점사업과 연계 강화

- 협동조합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활성화 분야 발굴·육성

#### < 사업 예시 >

- ▶ (교육부) 협동조합 유치원, 학교협동조합
- ▶ (복지부) 협동 어린이집, 돌봄 협동조합
- ▶ (국토부) 마을관리 협동조합,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버스·택시 협동조합
- ▶ (문화부) 은퇴선수 협동조합, 공공 문화·체육시설 민간위탁, 공공스포츠클럽
- ▶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푸드플랜 ▶ (해수부) 어촌뉴딜 사업

- 정부사업 추진시 지원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정책 설계시 협동조합 모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공무원 교육 강화

- ▶ (유치원)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 시, 공공시설 임차 허용(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 '18.11월) → 공유시설을 임차한 2호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 예정('20.3월, 경기도 동탄)
- ▶ (어촌뉴딜 사업) 사업시행자 위탁가능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 '20.2월 시행)
  - \* (현행) 수협중앙회·조합, 어촌계,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가능
  - (개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추가
- ▶ (임대사업) 협동조합형 임대사업에 대한 규정(조합원 모집·신고기준('20.5월 시행), 청약철회 및 가입비 반환('20.11월 시행) 등) 마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 ③ 금융조달 애로해소

#### ① 우선출자제도를 활용한 자기자본 확충

- 우선출자제도를 통해 자금조달 수단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넓히고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

- ▶ (개념)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의결권·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 출자 방식
- ▶ (주요대상)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해 사업확장을 계획하는 협동조합, 인내자본이 필요한 창업초기 협동조합 등

- 우선출자 대상, 요건 등을 구체화(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 20.上)
- 클라우드 펀딩, 사회책임투자(SRI) 등 다양한 투자유치 방안 마련
- \* (예시) 협동조합 클라우드 펀딩 대회 개최, IR 자료 제작 지원 등

#### ② 사회적금융 활성화

-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금융위, 신보)의 활용 및 제공 추진

- \*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반적 재무평가 위주가 아닌 사회적가치 중심의 평가모형 개발('18.12월),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19.10월)

< 평가지표 구성 >			< 온라인 평가 프로세스 >		
부문	영역	가중치	평가신청	기업심사	결과산출
협동조합 으로서 부합성 (60)	조합철학	25	서류 제출 (공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전송 등) → 기업실태표 작성  협동조합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평가지표별 측 정 결 과 시스템 입력	⇒ 시스템 자동적으로 평가등급 및 평가보고서 산출
	참여/배려 및 연대	30			
	조합원 편익	30			
	공동체/상생	15			
금융지원을 위한 타당성 (40)	경영역량	10			
	교육	10			
	운영활동	30			
	재무상태	50			
			협동조합	평가기관	시스템

-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서금융 홈페이지 內)를 개편하여 사회적금융 관련 정보\* 제공 확대('20.下)

- \* 대출형·투자형 중개기관 현황,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현황 등

#### ③ 내부조달의 안정성 강화

- 조합원 차입에 관한 유사수신 행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

- 협동조합의 경영 안전성 제고를 위한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방안 검토

- \* 비분할 적립금 정의(법정적립금과의 관계 등), 세제혜택 방안, 해외사례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0년)



- ◇ 사전 교육 강화,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홍보 강화

## 1 준비된 창업을 위한 사전 교육 강화

### 1 사전 교육 콘텐츠 개발

-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원칙, 운영원리에 대해 교육하는 표준교재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 업종별 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협동조합의 효과적 설립·운영을 위한 조합원 구성,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 협동조합 교육 사업(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업종별 특화교재 개발·보급 지원

### 2 협동조합 설립전 교육 활성화

- 협동조합 설립전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활성화 유도
  - \* (예시)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 공모시 협동조합 설립전 교육 이수자에게 가점 부여 등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별도의 사전교육 강화방안 마련

## 2 현장·참여형 교육 확대

### 1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농협, 생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과 우수 협동조합 연수프로그램 마련
- 사회적경제 선도대학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사회적경제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등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 학교협동조합(중·고교)의 경험이 대학생협동조합(대학) 및 협동조합 창업(일반)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마련



## ② 팀 빌딩 중심의 창업지원을 위한 팀 코치 양성

- 조직화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 확장을 위해 협동조합형 창업 및 인큐베이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팀 코치 육성

\* 신규 팀 코치 양성과정 및 심화과정(신설) 운영

## ③ 경영진단 프로그램 및 현장코칭 확대

-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확대
  - － 사업 리모델링, 합병, 해산 등 진단내용별 교육·멘토링 매칭

## 3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홍보

### ①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협동조합 성과 관리·홍보

- 협동조합 실태조사 개편 등을 통해 협동조합 운영·경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매년 산출, 성과 관리·홍보 강화

- ▶ **(기본방향)** (현재) 2년 주기, 설문조사 방식 → (개선) 현황조사(1년, 행정조사), 심층조사(3년, 패널조사)로 이원화하여 실태조사 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
- ▶ **(추진계획)** 실태조사 개편방안 마련 및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20.下)
  - \* 실태조사 조사주기 개편(2→3년), 국세청 등 유관기관 행정정보 활용 근거 마련 등

### ②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이미지 쇄신

- 협동조합에 대한 구시대적이고 정체된 이미지를 미래지향적·능동적 이미지로 전환하기 위해 홍보방식 개편

- ▶ **(매체)**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 텍스트 위주 →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 개발
- ▶ **(대상)** 협동조합 관계자 중심 → 일반 국민(특히, 2030세대 중심)으로 확대
- ▶ **(방식)** 일방적인 정보전달 → 체험단 등을 통한 참여형 쌍방향 홍보

-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협동조합 브랜드(네이밍, 슬로건 등) 개발
















## V. 향후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법제 개선, 과제관리 강화를 통해 제3차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 (추진체계) 시·도 협의회 및 협동조합 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 협력 및 이행점검 강화
  - (시·도협의회) 시·도협의회('20.上)를 통해 기본계획을 자치단체에 전파하고, 자치단체 사업도 일관된 목표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 (협동조합심의회) 과제 이행상황을 협동조합정책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연1회)으로 점검·평가
    - \* 기재부 1차관 주재, 복지부, 고용부 등 10개 부처 실장급 및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
  - 실무협의회, 민간위원·전문가 회의 등을 활성화하여 과제 추진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 (법제개선) 협동조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제개선을 통해 협동조합 인프라 강화 뒷받침
  - (법) 제3차 기본계획 상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소요\* 등을 반영하여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20.下)
    - \* 변경신고 사항 간소화, 조합원의 견제기능 활성화, 이사회 관련 규정 보완 등
  - (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내용\*, 기본계획 개정소요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 추진('20.上)
    - \* 이종연합회 허용, 우선출자제도 도입, 휴면조합 해산절차 간소화 등
- (과제관리) 법령 개정사항, 주요 제도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과제별 처리현황을 협동조합 홍보포털([www.coop.go.kr](http://www.coop.go.kr))에 공개('20.上)
  -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등은 지속적 발굴·개선방안 마련
  -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는 추진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경제정책방향,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 등 관련 대책 수립 시 반영
















정책 과제		추진 일정			소관부처
		'20년	'21년	'22년	
㉠ (Advance)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A-1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 지원				
A-1-① 미래 인구변화에 대비한 돌봄시장 진출					
○ 돌봄분야 협동조합 설립 매뉴얼 마련					기재부
○ 돌봄 위탁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추진					기재부
○ 돌봄분야 협동조합 특화 교육 추진					기재부
○ 조합형 돌봄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복지부
A-1-② 협동조합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확대					
○ 해외진출 사업 추진					KOTRA
○ 국제 협동조합간 비즈니스 교류 확대					기재부 KOTRA
A-2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A-2-①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모델					
○ 기업인수·전환 지원기관 지정·운영					기재부
○ 기업인수·전환 모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재부
A-2-② 프리랜서 협동조합 모델					
○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사업모델 개발 지원					기재부 고용부 중기부 문체부 등
○ 프리랜서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 지원					
A-3	협동조합 스케일업을 통한 성장지원				
A-3-① 사업연합·합병을 통한 규모화					
○ 중간지원기관 등을 통한 사업연합 지원					기재부
○ 합병관련 가이드북 마련					기재부
○ 합병 컨설팅 지원					기재부















A-3-② 성공모델의 복제·확산 지원					
○ (가칭) 쿵차이즈 사업 추진					기재부
A-3-③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 고도화					기재부
㉞ (Band) 협동조합간 연대 강화					
B-1	연합회 역할 강화				
B-1-① 대표 연합회 설립지원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B-1-② 협동조합의 성장지원 강화					
○ 교육·컨설팅 사업 추진체계 개편					기재부
B-1-③ 연합회 고유사업인 공제사업 활성화					
○ 공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기재부
B-2	협동조합간 연대 촉진				
B-2-① 이중 협동조합간 공동사업 발굴·확산					기재부
B-2-② 개별법-기본법 협동조합간 상생 지원					
○ 협동조합 팝업스토어 추진					기재부
○ 상호금융 협동조합의 협동조합 출자 활성화					금융위, 행안부
B-3	자율규제 강화				
B-3-① 연합회를 통한 자율감사					
○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					기재부
○ 감사연합회 제도화					기재부
B-3-② 자율공시 강화					
○ 연차보고 매뉴얼 마련 및 운영교육 강화					기재부
○ 변경신고 사항 간소화					기재부
B-3-③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조합 내부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					기재부
○ 협동조합 회계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기재부













㉟ (Community) 지역사회 중심 운영				
<b>C-1</b>	<b>지역 전달체계 개선</b>			
C-1-① 중간지원기관 통합·연계				
○ 중간지원기관 통합·연계 방안 마련				기재부 고용부 지자체
○ 중앙-지방 지원기관 통합·연계 운영				
C-1-② 중간지원기관 역량 강화				
○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				기재부
<b>C-2</b>	<b>자치단체 사업 참여 확대</b>			
C-2-① 지역 맞춤형 협동조합 사업모델 개발				
○ 지역 맞춤형 모델 개발 사업 추진				지자체
○ 중간지원기관 등을 통한 자치단체 사업 참여지원				기재부
C-2-② 공공시장 진출 지원				
○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 공표				기재부
○ 민간위탁 활성화 지원				기재부
<b>C-3</b>	<b>자치단체 추진체계 공고화</b>			
C-3-① 시·도 협의회 강화				
○ 자치단체별 협의회 구성·운영				지자체
○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정례화				기재부
C-3-② 시·도단위 활성화계획 수립 유도				지자체
㉠ (Deregulation)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b>D-1</b>	<b>진입제한 완화 및 동등한 혜택 제공</b>			
D-1-① 진입제한 완화				
○ 장애인 기업 인정범위에 포함				중기부
○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지원대상에 포함				행안부
○ 상인조직의 유형에 포함				중기부



D-1-② 동등한 혜택 제공					
○ 사회적협동조합 교육·보건용역 부가세 면제					기재부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익사업 지정기부금 인정					기재부
<b>D-2</b>	<b>기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b>				
D-2-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					
○ 협동조합에 차별적인 사업지침(지원대상, 사업 방식, 평가방식 등) 개선					중기부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사업 추진					중기부
D-2-② 중앙부처 중점사업과 연계 강화					
○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한 활성화 분야 발굴·육성					각 부처
○ 제도개선 및 공무원 교육 강화					기재부 각 부처
<b>D-3</b>	<b>금융조달 애로해소</b>				
D-3-① 우선출자제도를 활용한 자기자본 확충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 다양한 투자유치 방안 마련					기재부
D-3-② 사회적금융 활성화					
○ 사회적금융 평가시스템 제공 추진					금융위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 개편					금융위
D-3-③ 내부조달의 안정성 강화					
○ 조합원 차입에 대한 기준 마련					기재부
○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방안 검토					기재부



㉔ (Education) 교육 및 홍보 내실화				
E-1	준비된 창업을 위한 사전교육 강화			
E-1-① 사전교육 콘텐츠 개발				
○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기재부
○ 업종별 설립 가이드라인 마련				기재부
E-1-② 협동조합 설립전 교육 활성화				기재부
○ 사전교육 강화방안 마련				기재부
E-2	현장·참여형 교육 확대			
E-2-①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협동조합 연수프로그램 마련·운영				기재부
○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고용부
○ 학교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 마련·운영				기재부 교육부
E-2-② 팀 빌딩 중심의 창업지원을 위한 팀코치 양성				
○ 신규 팀 코치 양성과정 및 심화과정 운영				기재부
E-2-③ 경영진단 프로그램 및 현장코칭 확대				기재부
E-3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홍보			
E-3-①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협동조합 성과관리·홍보				
○ 실태조사 개편방안 마련				기재부
E-3-②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이미지 쇄신				
○ 홍보방식 개편				기재부
○ 협동조합 브랜드 개발				기재부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진출 분야 확대 및 육성 기반 강화】

20. 7.



관계부처 합동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진출 분야 확대 및 육성 기반 강화】

20. 7.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I. 추진배경 .....	499
II. 현황 및 문제점 .....	500
III. 추진전략 .....	502
IV. 핵심과제 세부 추진계획 .....	503
1. 신산업 분야 진출 [경제가치 강화] .....	503
2. 환경문제 해결 [환경가치 강화] .....	507
3. 고객서비스 향상 [서비스 강화] .....	509
4.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 강화 .....	512
V. 향후 추진일정 .....	516



## I. 추진배경

- 전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문제해결 및 지속가능한 새로운 발전 모델로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 부각
  - EU는 사회적경제 결의문('09)을 발표, 사회가 직면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대안책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제시
-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국내 경제·환경적 문제해결을 위한 선제 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추진, 녹색전환 본격화
  - 세계 환경시장은 실물경제 위축에도 지속 성장 중으로, 선도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 확보 추진 필요
    - ※ 세계 경제성장률은 연 평균 2.8%, 환경산업 시장은 연 평균 3.6% 성장(WB, EBI, '12~'17)
  - 다양해진 환경위해 요소와 높아진 삶의 질 수준에 맞춰 기후·환경문제 해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요 증대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물동량 폭증(전년대비 약 20%↑)과 포장 쓰레기 증가(플라스틱 전년대비 약 20%↑) 등은 특정 환경문제로 심화
- 사회·경제의 녹색전환 속에서 경제적가치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는 환경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성장 추진 필요
  - 마을주민이 운영하는 생태관광, 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업사이클 등 일부 사회적경제 성공사례 창출하였으나 부분적 성과에 그침

생태관광 서비스		업사이클 제품	
			
생태체험	지역 식당 활성화	자동차 가죽시트를 업사이클한 가방	트럭 방수덮개를 업사이클한 가방

⇒ 진출 분야 확대와 육성기반 강화·체계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수의 확대, 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서비스 만족도 향상 필요



## Ⅱ. 현황 및 문제점

### Ⅱ-1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현황

- (총괄) 환경 분야 주요 사회적경제조직은 총 830개소이며, 이 중 사회적경제기업이 425개소, 소셜벤처형 업사이클업이 405개소

합계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형 업사이클업
	소계	(여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830개소 (100%)	425개소 (51.2%)	210개소 (25.3%)	97개소 (11.7%)	63개소 (7.6%)	55개소 (6.6%)	405개소 (48.8%)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425개소는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22,703개소('18년 기준) 대비 1.9% 수준

- (진출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중 업사이클 분야 48.8%, 폐기물 분야가 27%로 다수를 차지

합계	업사이클	폐기물	환경 교육	녹색제품	기타
830개소 (100%)	405개소 (48.8%)	224개소 (27%)	66개소 (8.0%)	61개소 (7.3%)	74개소 (8.9%)

※ 진입 용이성으로 업사이클(1~2명 공방 수준)과 폐기물(수거·운반·선별 등) 분야 집중

- (육성 기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협력 체계 구축 등 기본적인 육성 기반 토대를 마련
- (지원) 환경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12) 및 컨설팅 등 중심의 지원사업 추진
  - (협력체계) 민간 대기업 등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선발하여 금융·공간·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
    - (민간) 민간 대기업(SK이노베이션, LG소셜캠퍼스, DB손해보험)과 업무협약, 공모전 공동개최를 통해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192개소 육성·지원
- ※ 사회적경제기업 당 1~2억 사업화 자금 및 공간 지원 등
- (공공) 산하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기관별 사회적경제 사업 지원, 신규사업 발굴, 우수사례 공유 등 정기적 교류(연 2회)



## 1 [진출 분야] 특정분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치중

- 新시장 확대, 환경현안 급증 및 환경서비스 다양화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 확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업사이클 및 폐기물 분야 위주로 활동

☞ 미래 성장가능성, 주요 환경현안, 환경서비스 수요,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등을 고려, 다양한 분야로의 전략적 참여 확대 필요

- ① (신산업) 소셜벤처형 업사이클 기업 본격 육성, 생물소재(자생식물) 확보, 녹색제품 보급 확산 및 에너지 분권·자립 등으로 진출 확대
- ② (환경문제 해결) 주민참여·상생형 폐자원 처리시설 설치·운영, 소규모 수도 시설 관리의 자활기업 전환 및 재사용 활성화 등으로 진출 확대
- ③ (환경서비스) 마을 주도 생태관광 활성화, 친환경 산행도시락 사업 확대, 환경교육 활성화 등으로 진출 확대

## 2 [육성 기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육성 기반 미흡

- 수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나 컨트롤타워 역할의 거버넌스 구축 등 체계적인 육성 기반은 미흡
- (지원) 그간 초기단계 소규모 자금지원 위주였고, 성장단계에 접어든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체계적 지원사업은 부족한 상황
  - (협력체계) 일부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관계부처, 지자체, 사회적경제조직 등과의 연계·협업사업이 부족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부재
  - (사회적경제 인식) 환경분야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부족은 여전하여 근본적인 활성화에 한계
  - (환경가치 평가) 일반적인 사회적경제기업 인증기준\* 등에 환경적가치가 미반영되어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저평가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혜택 등을 사회적가치로 평가

☞ 사회적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전 과정 지원, 협력체계 강화, 인식제고, 환경적가치 평가지표 마련 등 안정적인 육성기반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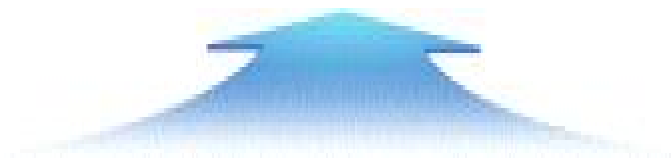


### Ⅲ. 추진 전략

**비전**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지속가능성장 및 환경가치 실현

**목표**

- ◇ 사회적경제기업 약 1.4천개 육성 및 일자리 약 1.3만개 창출(~'22)
- ◇ 사회적경제 진출 분야 확대 및 육성 기반 강화



추진 전략		핵심 추진과제
진출 확대	<b>① 신산업</b> <b>경제가치 강화</b>	① 소셜벤처형 업사이클 육성 ② 자생식물 사회적농장 시범사업 ③ 녹색제품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확산 ④ 우리그린마을공동체 설치·운영
	<b>② 환경문제 해결</b> <b>환경가치 강화</b>	① 주민참여·상생형 폐자원처리시설 설치·운영 ②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의 자활기업 전환 ③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재사용 활성화
	<b>③ 환경서비스</b> <b>고객서비스 강화</b>	① 마을 주도 생태관광 활성화 ② 지역 식문화와 연계한 산행도시락 사업 확대 ③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환경교육 강화
육성 기반	<b>④ 육성 기반 강화</b>	① 사회적경제기업 전과정 성장 지원 ② 협력·연계체계 강화 ③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④ 환경적가치 평가지표 구축



## IV. 핵심과제 세부 추진계획

### 1 신산업 분야 진출 확대로 경제가치 강화

◇ 업사이클, 생물소재, 녹색제품, 에너지분권화 등 새로운 시장이 형성·확장되는 분야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확대

#### ① 소셜벤처형 업사이클 기업 육성 환경부 주관, 지자체 협조

◇ 창업 및 판로개척 등 성장지원을 통해 소셜벤처형 업사이클 기업의 창업·성장 확대  
◇ 소셜벤처형 업사이클 기업 약 200개소 추가 창업 및 성장을 목표로 추진

□ (현황) 소셜벤처형 업사이클\* 기업이 영업 중(약 405개소)이나 소규모 영세 기업(1~2인 공방)을 탈피하지 못하는 등 **질적 성장 미흡**

\* 자원의 재활용(Re-cycling)을 넘어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디자인을 더하여 (Upgrade)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Up-cycling)

○ 프라이탁(스위스), 에코이스트(미국), 글로베호프(핀란드) 등 업사이클 시장을 선도하는 전문기업이 지속 등장하며 연간 2~3배씩 성장 중

□ (추진계획) 업사이클 기반 강화와 기업 성장단계별 전과정 지원으로 업사이클 혁신 기업 집중 육성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20~)

○ (지역 거점 육성) 지역별로 구축된 업사이클 센터(現 9개소)를 중심으로 창업, 연구, 소재 중개 및 생산 등 업사이클 산업 핵심허브로 육성

○ (소재 중개) 업사이클 기업이 필요한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재 중개 인프라 확보

※ 서울 재활용플라자 내 소재 중개 시범 운영('20~'23), 이후 확대 추진

○ (전과정 지원) 경영·디자인 컨설팅,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팝업스토어·상설종합매장 판로지원 등 전과정 육성책 제공

※ 업사이클 분야 지원 예산 확대 편성('20년 45억)

○ (법령정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재활용(업사이클) 법적 정의와 지원근거 마련하여 안정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20.하)



## ② 자생식물 사회적농장 시범사업 **신규** **환경부 주관, 농림부 협조**

- ◇ 농장에서 취약계층 등을 고용해 작물재배 등을 하고, 판매수익을 분배하는 사회적 농장의 재배분야에 자생식물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
- ◇ 사회적경제기업 약 **20개소** 추가 창업 및 성장을 목표로 추진

□ **(현황)** 「나고야의정서」 시행('18.8) 이후 자생식물\* 보전을 위한 연구 중심의 정책을 추진 중이나 우수 생물소재에 대한 상업화는 미흡

\* **(자생식물 개념)** 한반도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던 토착식물로서 자연상태 스스로 자라는 식물(↔ 개량종, 재배종)로, 소나무라일락산딸기 등 총 185과 1,060속 4,000여 종류 자생

○ 바이오산업 소재의 자립화를 위해 우수 소재 발굴 및 대량증식 기반 구축 등 생물소재 분야의 개척 필요

□ **(추진계획)** 사회적농장 등을 활용한 자생식물 종자 분양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자생식물 상업화 및 글로벌 생물자원 경쟁력 강화

○ **(시범사업)** 사회적농장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21~)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

- **(절차)** 30개 사회적농장\* 중 희망농장 선정(농림부) → 자생식물 종자 분양 및 기술 지원(생물자원관) → 사업화 지원(환경부)

\*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농장 30개소 지원('18~, 농림부)

- **(제도개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 공익목적의 영리활동에도 종자 분양이 가능하도록 「생물표본 관리규정」 개정('21)

※ (현행) 시험·연구 및 교육 목적의 종자 분양만을 허용

- **(사업 지원)** 종자 분양, 자생식물 재배시설(비닐하우스, 스프링쿨러 등) 설치·개선 및 교육·기술 등 지원

※ 생물소재 대량증식단지 조성 사업(환경부, '20~'22)과 연계하여 대량증식 기술 이전 등 추진

- **(판로지원)** 재배된 자생식물을 정부(중앙·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초지 조성사업\* 및 바이오산업 소재 등으로 연계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 훼손지 복원사업 등



### ③ 녹색제품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확산

환경부 주관

- ◇ 민간수요 증가, 온라인 판매 강화 등을 통한 새로운 시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녹색제품의 개발, 유통 및 판매 분야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성장 확대
- ◇ 사회적경제기업 약 30개소 추가 창업 및 성장을 목표로 추진

#### □ (현황) 녹색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 시행('05) 이후 공공수요 이외 민간수요 증가, 온라인 판매 강화\* 등을 통한 새로운 시장 확대 예상

\* 온라인 쇼핑몰 내 녹색제품 판매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20.4~, 인터파크)

○ '19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액은 3.6조 수준

○ 현재 녹색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61개소로 전체 사회적경제조직의 약 7% 수준

#### □ (추진계획) 날로 커지고 있는 녹색제품 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녹색제품 개발, 인증취득 및 판로 등에 대한 특화지원 강화('21~)

○ (녹색제품 개발) 녹색제품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컨설팅 등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 개선 비용을 지원

※ 민간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제품군(유아용 기저귀 등)을 녹색제품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음

○ (인증취득)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등 녹색제품 인증\*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공공구매 판로 진입 촉진

\* 특정 제품의 환경성(자원순환성, 에너지, 환경오염, 유해물질 등)을 평가하여 우수 제품을 인증, 공공기관에는 인증받은 녹색제품을 구매할 의무를 부여

○ (판로지원) 녹색매장 운영기업 등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생산 제품 입점 지원

\* 녹색매장지정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중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CU 등의 대기업에서 운영 중인 매장과 농협·생협 등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유통사 등



#### ④ 우리그린마을공동체 설치·운영 **신규**

**고용부 주관, 산업부 등 협조**

◇ 참여·분권형(태양광, 풍력 등)으로 에너지 전환 확대에 따라 마을 단위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운영하는 우리그린마을공동체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약 **80개소** 추가 창업 및 성장을 목표로 추진

□ **(현황)**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신재생에너지원이 제한적이고 해당 분야에서의 주민 참여 저조

○ 지역주민이 에너지 순환체제 전반에 능동적인 주체로서 참여하는 **한국형 마을공동체**(우리그린공동체) 육성 필요

※ 서울 상도동 성대골 사례 : 에너지 협동조합을 발족, 동네 옥상 빈터 등을 활용해 태양광 설비 등을 설치·발전하고, 에너지 슈퍼마켓을 통한 이윤창출, 우리집솔라론 등 금융상품과의 연계 등을 통해 자립가능한 에너지마을 구축

□ **(추진계획)** 중소도시나 읍지역 등을 대상으로 마을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 주도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결성하여 에너지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고용부 등)

- 관련 전문인력을 매칭 지원하고, 친환경적인 소셜미션과 에너지 기술 기반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지역 공동체와 연계해 역량 강화를 지원

○ **(기반구축)** 에너지 자립을 위한 발전설비·원천기술 확보 등 지원(산업부·고용부)

-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의 지리·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적정 에너지원을 선정하고, 연차별 에너지플랜 수립

- 발전설비 구축 비용(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및 유희시설 등을 활용한 업무공간(행안부·지자체) 지원 방안 검토

○ **(관리체계 구축)** 구축된 발전설비의 관리·운영을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수행토록 하고, 관련 지원을 통해 자생력 확보(고용부 등)

- 생산된 에너지는 지역 내 우선 공급하여 에너지 자족을 실천하는 한편, 지역 내 공급 후 남은 에너지는 외부에 판매하여 수익창출 도모



## 2 환경문제 해결 분야 진출 확대로 환경가치 강화

◇ 처리시설 설치 곤란, 소규모수도시설 수질 안전, 자원낭비형 소비문화 등 환경문제 해결 과정에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확대

### ① 주민참여·상생형 폐자원 처리시설 설치·운영 환경부 주관, 지자체 협조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으로 마을 협동조합 등을 통한 수익사업 추진, 소득창출 도모  
◇ 사회적경제기업 약 25개소 추가 창업 및 성장을 목표로 추진

□ (현황) 대표적 님비시설인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이 주민반대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현실임에 따라 폐기물 등의 안정적 처리 우려

○ 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폐열·폐가스 등을 활용, 주민주도 수익사업을 추진 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운영 중(6개소 운영·15개소 조성중)



□ (추진계획) 처리시설의 안정적 설치·운영을 도모함과 함께, 마을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 소득창출 사업 추진

○ 친환경에너지타운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운영시설에 대한 성과 점검 등을 통해 사업 효율화 추진('20~, '20년 예산 5,140백만원)

○ 지역 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고려해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 발굴·확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법' 제정('20.6)에 따라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주민 공동체 조직 등을 활용한 상생발전 사업 추진 예정('21.6 시행)

\* 방치폐기물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주민 사업투자이익 분배, 주민 복지사업 및 주민참여 등을 제도화

### ②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의 자활기업 전환 신규 환경부 주관, 복지부 협조

◇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운영 주체를 이장·주민에서 자활기업으로 전환하여 수질 안전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 약 25개소 추가 창업 및 성장을 목표로 추진

\* 마을관리시설 중 자활기업이 운영 가능한 시설은 약 5,000개소, 기업당 200개 시설 관리로 가정



- (현황) 전국 소규모수도시설\*(13,703개소)의 54%(7,412개소)는 이장·주민 등 비전문가가 관리하는 마을관리시설로 수질 안전성이 취약\*\*

\* 지방상수도가 미보급된 지역에서 지하수용천수지표수 등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 (수질기준 초과율) 정수장 0.1%, 소규모수도시설 3.3%

- (추진계획)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를 자활사업으로 전환 운영하여 신규 자활 일자리 창출 및 수질 안전 강화

- (규정 개정) 「수도시설 운영관리 지침」에 수도시설 관리자\*로 자활 기업 우선 활용 명시 추진('20.하~)

\* 수도법 개정(시행 '20.11)으로 지자체에 소규모수도시설 전문관리자 지정 의무 부여

- (교육 지원) 자활기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교육 과정 개설·운영('21~)

※ 전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관리자 지정

- (지원사업 연계) 자활기업 지원체계(창업자금, 창업컨설팅, 인건비, 교육비 등)와 연계하여 창업 및 육성 지원(복지부 협업, '21~)

### ③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재사용 활성화 신규 환경부 주관, 지자체 협조

- ◇ 1회용품 및 택배 증가, 물품 사용기한 단축 등 소비문화 변화로 인한 자원낭비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촉진, 재사용 활성화, 사업화 지원 등 필요
- ◇ 사회적경제기업 약 45개소 추가 창업 및 성장을 목표로 추진

- (현황) 소비패턴 변화로 1회용품 및 포장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한 번 사용한 물건을 교환·재사용하기 위한 인프라는 미흡

- (추진계획) 1회용품 발생 억제 및 재사용 활성화 등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자원 순환과 수익 창출

- (다회용기 사용 촉진) 다회용 박스 배송, 장례식장·영화관·체육시설 등의 다회용기 회수·세척·재공급 관련 사회적기업 전문 육성('21~)

- (재사용 활성화) 지자체 재활용센터\* 및 민간 재사용 사업 분야에 사회적 경제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창업·센터 리모델링·기술 등 지원('20~)

- 중고물품 교환, 수리·수선, 제품판매 등 재사용 시스템의 지역사회 보급 확산

\* 중고물품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지자체에 설치운영



### 3 환경서비스 분야 진출 확대로 고객만족 강화

◇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환경자산을 연계한 서비스, 기후·환경위기로 인한 환경교육서비스 등에 대한 고객수요에 맞춘 사업모델 발굴 및 확산

#### ① 마을 주도 생태관광 활성화 환경부 주관, 문체부 등 협조

◇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고, 수행 주체로 지역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사회적경제기업 약 25개소 추가 창업 및 성장을 목표로 추진

□ (현황) 제주 동백동산(선홍곶 사회적협동조합, '17~) 등 주민공동체가 창업한 사업체가 생태관광지역\*을 운영하여 해당 수익을 주민소득으로 연결

\* 자연·생태적 보전가치, 시설의 생태적 설계 등 6개 기준에 따라 환경부가 지정하는 '생태관광지역' 제도로, 전국 26개 지역(창녕 우포늪, 제주 동백동산, 양구 DMZ 등) 지정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지역 생태·문화자원과의 연계 등 생태관광에 대한 고품격 서비스 수요 증가

□ (추진계획)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통한 우수 모델을 개발하고, 전국 단위 확대('20~, '20년 예산 1,020백만원)

○ (법령정비) 「생태관광진흥법(가칭)」 제정('21)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용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주도의 생태계 서비스 촉진

○ (인센티브) 생태관광지역 운영주체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시,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인센티브 제공

○ (신규 서비스) 장애인 대상 무장애 탐방시설 및 프로그램\*, 체험버스,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통역기(4개소, 36개국 언어) 등 신규 서비스 우선 지원

\* 점자(시각)·수어영상(청각)·읽기쉬운 도서(발달장애) 보급 등

○ (역량 강화) 생태관광지역(26개소) 중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전문인력 양성, 민·관·학 자문단 운영 등 집중 지원

○ (운영 지원)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 기획·운영 컨설팅, 콘텐츠 개발 및 진단·평가, 공동브랜드 마케팅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역 관광 프로그램 등과 협력방안 강구(문체부 등 협업)



## ② 지역 식문화와 연계한 친환경 산행도시락 사업 확대 추진 환경부 주관, 농림부 협조

- ◇ 산행도시락 사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판로 지원, 지역 명산 및 도립공원으로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 사회적경제기업 약 **30개소** 추가 창업 및 성장을 목표로 추진

□ **(현황)** 지역 식문화 체험과 산행 중 식사 수요 등을 고려,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친환경 산행 도시락 서비스\*** 추진 중

\* 국립공원 방문객에게 지역 특산음식을 다회용 도시락에 담아 판매, 빈 용기 수거

○ 치악산 등을 시작('18년)으로 21개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19.10)

※ 치악산(강원만찬협동조합) : 매출액 210백만원('19), 일자리 창출('18년 2명→현재 8명)



태백산 곤드레밥 정식



주왕산 산내음 도시락

□ **(추진계획)** 모든 국립공원으로 친환경 산행도시락 사업 확대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확대 및 지원 강화('20~)

○ **(사업화 지원)** 국립공원 명품마을 사업, 지역 먹거리 사업 등과 연계 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사업화 지원 등 육성책 제공(농림부 협업)

※ 강원만찬협동조합, 단양로컬푸드협동조합에 사업비 지원 예정('20.7월, 1,100천원/개소)

○ **(판로 지원)** 홍보자료 제작 및 온라인 주문 등 마케팅 지원, 탐방·견학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판로개척 지원

○ **(추가 확대)** 지자체 대상 권역별 사업설명회 개최(노하우 공유 등)를 통해 지역 명산·도립공원 등으로의 확대 추진



### ③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환경교육 강화 환경부 주관, 지자체 협조

- ◇ 기후변화 위기 등 증가하는 환경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인력 양성과 전과정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고품질 교육서비스 제공 및 관련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 사회적경제기업 약 **30개소** 추가 창업 및 성장을 목표로 추진

- **(현황)**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현안에 대한 교육수요는 증가하나, 이를 위한 콘텐츠 및 교육서비스는 부족
  - 환경교육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 66개소 활동 중이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특화된 지원방안 미흡
  - 전문인력 유입이 부족하고 관련 자격증 위상도 낮아 직업 흡인력 부족
- **(추진계획)** 환경교육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및 특화지원 추진
  - **(인력 양성)** 환경교육사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환경교육 사회적경제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유입 도모('21~)
    -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환경교육사로 변경('20~)하여 위상을 제고하고, 온라인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 ※ (기존) 양성기관 명의 → (개선) 환경부장관 명의(양성기관 : 교육 담당, 국가센터 : 발급)
    - 저소득층 등의 환경교육사 취득 지원을 위한 '바우처(직업훈련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인턴십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
  - **(특화지원)** 환경교육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모델개발, 창업, 판로개척에 이르는 전과정 특화지원 체계 마련('21~)
    - 사회적경제기업 우수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3개, '21)
    - \* (마포 성미산 사례) 성미산 지키기 운동, 성미산 학교 설립, 마을기업 운영 등
    - 개발된 우수모델 사업화를 위해 국가·광역환경교육센터를 활용한 기술 및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
    -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주체 선정시 사회적경제기업 가점부여 등 연계 지원



## 4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 강화

◇ 환경형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부터 성장·성숙까지 전 단계별 전략적 성장을 지원하고, 협업·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육성 인프라 강화

### ① 환경형 사회적경제기업 전과정 성장 지원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 협조

- (창업) 사회적경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3년 미만)에 대해 아이디어 발굴 단계부터 창업 지원
- (성장) 환경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20년 60억) 하여 전과정 패키지 지원 강화
  - 사업화 전략 수립 → 사업화 자금 지원(컨설팅, 시제품 제작, 인·검증, 특허·기술, 홍보 등) → 투자 유치 → 정책자금 융자 등 단계별 성장 지원
- (판로) 적격심사 관련 제도개선, 전용 온라인몰 확대 운영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및 판로 지원
  - 환경부·산하기관 적격심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찰기회 확대 방안 검토
    - \*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상태 및 신용 평가 우대범위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전용 온라인몰(환경공단)을 타 기관으로 확대 운영
- (투자 유치)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투자유치를 지원함으로써 성장 촉진
  - 투자역량강화 컨설팅, 투자기관 연계(크라우드펀딩, 벤처캐피탈 등), 투자 설명회 개최 및 참가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
  - 미래환경산업펀드\*의 주목적 투자범위를 조정(환경형 사회적경제기업 포함)하고 조성규모를 확대(~'22, 약 2,000억원)하여 투자 연계
    - \* 우수 환경산업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투자펀드(1,072억원 규모 자금 운용중)



## ② 협력·연계 체계 강화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조

### 【(민간기업) 대·중·소 상생협력 통한 사회적경제 육성】

- ☐ (공동사업) 업무협약 및 공모전(LG소셜캠퍼스, SK이노베이션, DB손해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관 협력 사업모델 발굴

구분	지원내용
창업지원	3년 미만의 예비·초기창업자에게 창업·사업화 지원
금융지원	사업화 자금 지원·대출, 임팩트투자* 등 금융지원
공간지원	사업 안정화 위한 사무공간 지원
성장지원	생산성 향상 컨설팅·교육·홍보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인재육성	초·중·고·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등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 환경·복지 등 사회현안 해결도 하고 수익 창출도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착한 투자

- **환경부하가 큰 업계**(제철, 석유화학, 시멘트 등)를 중심으로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투자를 유도

※ (Green Balance 개념) 자사의 높은 환경부하를 친환경 분야 활동을 통해 상쇄

- ☐ (공모전)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성장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선정기업에 다각적 육성책 제공('21년 20개소 이상)
- ☐ (판로개척) 기업 직원 전용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입점 지원 등

### 【(공공기관) 환경부 산하기관의 선도적 역할 확대】

- ☐ (공공기관 연계) 환경부 산하기관의 고유 업무영역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협력 및 창업·성장 지원 사업 추진

#### < 공공기관 연계 지원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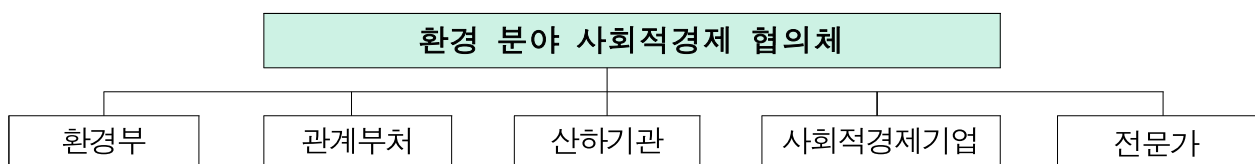
기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추진현황
한국수자원공사	- 댐 주변지역을 활용한 주민참여형(주민조합, 마을기업) 수익사업 * 수상태양광, 외래어종 이용 비료화 사업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장기저리 융자사업 등) 및 컨설팅·홍보 지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인천지역 공공기관 간 업무협업 및 기금조성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항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 국립공원별 사회적기업 창업팀 발굴·육성 - 국립공원 성수기 기간 홍보부스 운영 통한 홍보·판로개척 지원



- (간담회)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기관별 사회적경제 사업 공유, 실적점검 및 건의·협조사항 등 의견 교류(연 2회)
- (경진대회)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기관의 사회적경제 사업 촉진 및 적극적 참여 유도(연 1회)

## 【(거버넌스) 민관 정책 거버넌스 구축·운영

- (거버넌스) 환경부·관계부처·공공기관·사회적경제조직·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협의체 구성·운영(분기 1회 이상)



- (기능) 사회적경제와 관련 주요 의사결정 등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 추진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제도개선, 성과 평가·관리·우수사례 확산 및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을 수행

## ③ 환경분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환경부 주관, 고용부 등 협조

- (대국민) 우수사례,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등으로 사회적경제 개념·역할에 대한 일반 국민 대상 인지도 제고
  - 범부처 협업으로 추진 중인 'Buy Social' 브랜드 기반을 통한 홍보로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고용부 등 협업)
  - 분야별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환경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
    - ※ (홍보메시지) 환경현안 해결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환경형 사회적경제
  - 환경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환경개선 성과 등에 대한 집중 홍보
  - 환경부와 민간(LG, SK, DB)의 협업성과에 대하여 홍보채널(SNS,



유튜브 등) 공동 활용

□ (소속·산하기관) 공공기관 담당자 인식 제고로 해당 기관의 사회적경제 사업 확산 및 공공판로 개척 지원

○ 소속·산하기관 구매 담당직원 사회적경제 설명회 개최 및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에 공공기관 참여 유도

#### ④ 환경적 가치 평가지표 마련 신규 환경부 주관, 고용부 등 협조

□ (지표 개발) 환경형 사회적경제기업 판별기준 및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을 위한 가치평가 지표 개발('19.11~'20.7)

※ 일자리·사회서비스제공형이 아닌 환경가치 실현을 소셜미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등)이 지원사업에서 저평가되지 않도록 기준 마련·제시

□ (활용 방안) 환경형 사회적경제기업 판별 및 지원 기준\*으로 활용, 타부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선정·평가과정의 검토기준으로 제시

\* 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고용부) 등



## V. 향후 추진일정

세부 추진과제	관계부처	일정
<b>① 신산업 분야 진출 확대로 경제가치 강화</b>		
<b>① 소셜벤처형 업사이클 기업 육성</b>		
▪ 지역 거점 육성 및 소재 중개	환경부	'20년~
▪ 컨설팅, 시제품 제작, 판로지원 등 전과정 지원	환경부	'20년~
▪ 재활용 법적정의 및 지원근거 등 법령정비	환경부	'20.下
<b>② 자생식물 사회적농장 사업</b>		
▪ 자생식물 사회적농장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농림부	'21년~
▪ 자생식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생물표본 관리규정 개정 등	환경부	'21년~
▪ 종자 분양, 재배시설 현대화 등 사업비 지원	환경부	'22년~
▪ 전담교육기관 지정 등 교육·기술 지원	환경부	'20년~
▪ 초지조성 관련 사업 등과 연계한 판로 지원	환경부	'21년~
<b>③ 녹색제품 분야 사회적경제 확산</b>		
▪ 제품개발, 인증 취득비용, 판로 등 지원	환경부	'21년~
<b>④ 마을 공동체 중심 에너지 자립 사업</b>		
▪ 지역주민 중심 사회적경제조직 결성 및 운영 지원	고용부	'21년~
▪ 발전설비 및 원천기술 등 지원 검토	고용부·산업부 등	'21년~
<b>② 환경문제 해결분야 진출 확대로 환경가치 강화</b>		
<b>① 주민참여·상생형 폐자원 처리시설 운영</b>		
▪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관리 및 신규지정	환경부·지자체	'20년~
<b>②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자활사업</b>		
▪ 「수도시설 운영관리 지침」 개정	환경부	'20.下
▪ 운영·관리 교육 및 기술지원	환경부	'20년~
▪ 자활기업 지원체계 연계	환경부·복지부	'21년~
<b>③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재사용 활성화</b>		
▪ 다회용기 사용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	환경부	'21년~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	환경부·지자체	'20년~
<b>③ 환경서비스 분야 진출 확대로 고객서비스 강화</b>		
<b>① 마을 주도 생태관광 활성화</b>		
▪ 「생태관광진흥법」 및 하위규정 법령 정비	환경부	'21년
▪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환경부·문화부 등	'20년~
- 프로그램 컨설팅,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운영 지원	환경부	'20.下
<b>② 친환경 산행도시락 사업</b>		
▪ 법인체 설립 및 사업화 지원 등 육성책 제공	환경부	'20년~
▪ 탐방·견학프로그램과 연계한 판로 지원	환경부	'21년~
▪ 공동브랜드, 주문·배달 어플 등 마케팅 지원	환경부	'21.上
▪ 노하우 공유 및 사업화·운영 지원	환경부·지자체	'21년~



세부 추진과제	관계부처	일정
<b>③ 환경교육 분야 사회적경제 확산</b>		
▪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선	환경부	'20.下~
▪ 온라인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교육 바우처 및 인턴십 운영, 환경교육 사회적경제기업 특화지원	환경부	'21년~
<b>④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 강화</b>		
<b>① 환경형 사회적경제기업 전과정 성장 지원</b>		
▪ 에코스타트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	환경부	'20년~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와 연계한 전과정 패키지 지원	환경부	'20년~
▪ 공공구매 확대 및 판로 지원	환경부	'20년~
▪ 투자역량강화 컨설팅, 투자설명회 등 투자유치 지원	환경부	'21년~
<b>② 다각적 협력체계 구축</b>		
<b>②-1. [민간기업] 대·중·소 상생협력 통한 사회적경제 육성</b>		
▪ 공동 사업모델 확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육성책 제공	환경부	'20년~
▪ 기업 직원 전용몰 입점 지원 유도	환경부	'21년~
<b>②-2. [공공기관] 산하기관의 선도적 역할 확대</b>		
▪ 기관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합동 간담회	환경부	'20년~
▪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환경부	'20.下
▪ 정책연계형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성장 지원	환경부	'20년~
<b>②-3. [협업체) 민관 정책 네트워크 구축·운영</b>		
▪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협업체 구성	환경부·관계부처·자·체 등	'20.下
<b>③ 환경분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b>		
▪ 우수사례, 스토리텔링형 대국민 홍보 등	환경부·고용부 등	'20년~
<b>④ 환경적 가치 평가지표 마련</b>		
▪ 판별기준 및 가치평가 지표 개발	환경부	'20.下
▪ 환경형 사회적경제기업 판별 및 지원기준 활용	환경부·고용부 등	'20년~







---

#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

2020. 8. 13.

관 계 부 처 합 동







---

#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

2020. 8. 13.

관 계 부 처 합 동



#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요약]

## 1 추진배경

□ 現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연대·협력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① 現 정부는 심화되는 경제·사회의 양극화 대응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17년 이후 부처별·분야별 총 19개 대책 수립·추진 중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종합대책, '17.10), 사회적금융·인재양성('18), 지역공동체 역량 제고('19), 소셜벤처·자활기업·사회적기업('18)·협동조합('20) 설립 지원

② 최근 코로나 19를 계기로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높고 위기시 복원력(resilience)이 좋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목도가 증가

\* 취약계층 고용비중(% , '18) : (사회적기업) 61 (협동조합) 42.3

\* '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伊(20%)·佛(0.8%)·벨기에(12%) 등 유럽 주요국의 사회적경제 고용은 오히려 증가 ('17, OECD)

## 2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및 평가

① (현황) 사회적기업 창업 활성화 및 취약계층 중심 고용 창출

① 現 정부출범('17.5월) 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 수(연평균 약 10%), 종사자 수(연평균 약 5%)가 빠르게 증가

사회적경제기업(개) · 종사자 수(명)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전체 기업 수 (전년비)	20,459	22,470 (9.8%↑)	24,838 (10.5%↑)	27,452 (10.5%↑)
종사자 수 (전년비)	248,669	253,013 (1.7%↑)	265,398 (4.9%↑)	284,875 (7.3%↑)

②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보완,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도 기여

\* 취약계층 고용(천명, '16→'18) : (협동조합) 7.7→11.2 (사회적기업) 23.8→26.1

\* 사회목적 재투자 추정액(억원, '18) : (협동조합) 262 (사회적기업) 1,157



② (평가)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의 양적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다수 기업이 영세하고 지역 편중, 진출분야 제한 등 문제점 노출

① 창업 후 정부지원(평균 3년)이 종료되면 개별 기업들은 성장이 정체·지연되면서 신생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다수를 차지

\*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비중(%) : 사회적기업 66('18), 협동조합 93('19)

②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활동을 중요시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경영성과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

\* 사회적기업 고용자의 지역별 비중(% , '18) : (수도권) 52.5, (비수도권) 47.5

\* 사회적기업 평균 영업이익(천원, '18) : (수도권) 19,776, (비수도권) △2,788

③ 그간의 진출분야 다각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도소매 등 소규모 서비스업 중심으로 진출업종·분야가 다소 제한적인 상황

\* 제조업·도소매업 비율(% , '18) : (사회적기업) 40.1 (협동조합) 31

### 3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목표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스케일업)을 통한 자생력·경쟁력 강화 → '22년까지 <b>6.4만명</b>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유지·창출기반 확충
정책과제	<b>1. 혁신성장 기반 강화</b> <b>3.8만명</b>
	① R&D·인재·사업모델 등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역량 확충
	② 민간판로 개척지원 및 공공판로 확대
	③ 성장금융 확대와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
	<b>2. 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b> <b>1.4만명</b>
	① 지역별 사회적경제 허브(Hub) 조성
	②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활성화
	③ 상호금융을 통한 역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b>3.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b> <b>1.2만명</b>
	① 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모델 발굴
	②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활성화
	③ 소셜벤처 사업모델 고도화 지원
	④ 문화·교육·과학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중앙·지자체·민간 “협업 거버넌스”



## 1. 혁신성장 기반 강화

- ① (혁신역량 확충) 창업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성장기 기업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지원

① 성장유망기업 대상 범부처 통합지원체계 마련

	현재 모습		미래 모습
지원대상	초기 창업기업 위주	→	초기기업(1~3년) + 성장기 기업(4년차 이상)
지원방법	칸막이식 지원 (부처별 소관 기업)	→	이어달리기 지원 (각 부처 - 초기기업, 중기부 - 성장기업 통합지원)
지원내용	단편적 지원 (초기 기술개발 위주)	→	전분야 연계지원 (기술개발+사업화+마케팅)
지원체계	각 부처별 운영	→	범부처 협업 (기재부·중기부 주관 T/F)

- ② 청년 일경험(700명, 3차 추정) 및 업종특화 창업지원\* 확대 등 통한 우수인재 유입 지원

\* ('19) 여성·도시재생·관광·융합기술 등 8개 분야 → ('20) 10개 분야(특산물제조 등 추가)

- ③ 플랫폼노동자 협동조합연합회, 1호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일반협동조합+신협·생협, '20.10월) 등 혁신형 사업모델 발굴·확산

- ② (판로지원) 국·내외, 온·오프라인 민간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공공판로를 지속 확대

- ① (민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온라인 판매채널(e-store 36.5+) 확대·개편, 코리아세일페스타('20.11월) 사회적경제전용관 개설 등 추진

- ② (공공) 입법(「사회적경제기본법」, 「판로지원특별법」)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화 추진

- ③ (성장금융)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투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 ① 성장지원 특례보증 지원 및 사회투자펀드 조성액 확대

\* 現 1~3억원 → 최대 2배까지 확대(신보), 現 연 250→500억원(성장금융)

- ②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시스템”(재무상태 외 기업의 사회적가치 역량 평가 '19년 신보 개발) 실용화(現 활용기관 9개 → '21년 50개社)



## 2. 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

- ① **(사회적경제 허브)** 창업부터 성장까지 연계 지원하는 지역기반 성장 거점 조성 및 중간지원기관의 단계적 통합 추진
  - ①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온, 전국 10개소)” 및 “혁신타운(‘22년까지 5개소 완공 예정)” 중심 지역거점 조성
  - ② 중간지원기관\*의 단계적 통합으로 원스톱 서비스창구 마련(‘20.下)
    - \* 현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지원기관(기재부·고용부·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 16개) + 마을기업지원센터(행안부·지자체 위탁 17개)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지자체 위탁 13개)
- ② **(사업모델 개발)** 지역별 자원 분석·공유를 토대로 주민참여·주도 사업의 다양화
  - ① 지자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 정보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지역문제해결형 R&D 등 활성화 추진
    - \* 총 34개 기초지자체 지역경제 및 사회적경제 현황 등 지역자원뱅크(3차 추경)
  - ②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사업체(예: 사회적농장, 산림일자리발전소, 관광두레 등) 확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참여 촉진
- ③ **(지역금융)** 수도권·지방 및 지방 간 사회적금융 인프라 등 격차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상호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
  - ①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설립·운영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 \* 서울시·화성시 기금 既 조정·운영, 충남 조성 중, 경남 ‘20.6월 관련 조례 의결
  - ② 신탁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출자근거 마련(「신탁법」 개정), 새마을금고 사회적경제 전용 대출상품 개발·공급 등

## 3.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

- 「한국판 뉴딜」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유망분야 진출을 지원
- ① (환경·신재생)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대 추진
  - ② (사회서비스)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반영 확대 등 통한 공적돌봄 분야 진출
  - ③ (소셜벤처) 소셜벤처 스케일업 보증지원 확대(~’22년 1,500억원)
  - ④ (문화·교육·과학) 관광두레 사회적기업 전환 지원, 학교 협동조합 사업 모델 다양화 지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등(’20년 600명)



# 목 차

I . 추진배경 .....	527
II . 현황 및 평가 .....	530
III .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	532
1. 혁신성장 기반 강화 .....	533
2. 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 .....	539
3. 진출분야 다양화 .....	543
IV . 향후 추진계획 .....	547



## I. 추진배경

### □ 코로나 19 계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

#### ○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3월 이후 취업자 감소세 지속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0.2)49.2 (3)△19.5 (4)△47.6 (5)△39.2 (6)△35.2 (7)△27.7

- 특히,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층 고용회복도 더딘 상황

\* 임시일용직 취업자증감(전년비, 만명): ('20.3)△59.3 (4)△78.3 (5)△65.3 (6)△49.4 (7)△43.8  
청년층 취업자증감(전년비, 만명): ('20.3)△22.9 (4)△24.5 (5)△18.3 (6)△17.0 (7)△19.5

### □ 現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연대·협력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 ① 現 정부는 심화되는 경제·사회의 양극화 대응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17년 이후 부처별·분야별 총 19개 대책 수립·추진 중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종합대책, '17.10), 사회적금융·인재양성('18), 지역공동체 역량 제고('19), 소셜벤처·자활기업·사회적기업('18)·협동조합('20) 설립 지원

#### ② 최근 코로나 19를 계기로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높고 위기시 복원력(resilience)이 좋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목도가 증가

\* 취약계층 고용비중(% , '18) : (사회적기업) 61 (협동조합) 42.3

\* '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伊(20%)·佛(0.8%)·벨기에(12%) 등 유럽 주요국의 사회적경제 고용은 오히려 증가 ('17, OECD)

### ☞ 공공·민간의 일자리 창출여력 보완,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할 필요

※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20.3월, 일자리위) 민간일자리 5대 정책분야  
①지역, ②신산업·서비스, ③중소·벤처·소상공인, ④제조·건설, ⑤사회적경제 일자리



## 【참고1】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국내 사회적경제계 활동내용

### ❶ 사회적경제계 내부 고용유지 및 경영애로 완화

- 「사회적경제 코로나 19 대응본부\*」를 조직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조정 제로(0) 선언”(3.26)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관계 공공기관·일부 민간기업이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경제계의 분야별 피해 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조직

-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고용연대기금’을 모금(약 2억원 모금)하고 고용유지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
- ‘다함께 위기극복기금’(약 2.6억원 모금)을 조성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긴급자금 및 제품·서비스 선구매 지원

### ❷ 자발적인 위기극복 지원활동 전개

※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코로나 19 위기극복 지원활동 사례

- (취약계층 지원) 수제마스크 제작·기부(A협동조합), 음식·마스크·소독제 등 지원(B생협)
- (의료활동 지원) 타지 의료진에 대한 무료숙박 제공(C사회적기업) 등

### ❸ 신규 직접일자리 창출 지원 등 안전판 역할 강화

- 공공일자리 창출(55만명, 3차 추정) 추진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채용여력 보강 등을 통해 취약계층·청년 일경험을 적극 지원

※ 사회적경제 분야 「공공일자리 55만개 창출사업」 기여 현황 📊 총 3,871명

- 비대면 정부일자리 :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1,700명)
- 특화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
  - ①(소셜벤처) 디지털 청년일자리(250명), 청년인턴(150명) <기업가정신재단, 중기부>
  - ②(업사이클) 업사이클 전문 사회적기업 청년일경험(100명) <환경산업협회, 환경부>
  - ③(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청년 일경험(300명) <고용부>
  - ④(산림관리) 사회적경제조직 통한 숲교육프로그램 운영 등(1,371명) <산림청>



## 【참고2】 유럽 주요국 사회적경제계의 코로나 19 위기극복 지원사례

### ① 코로나 극복 기금 모금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COVID 대응연합」\*을 조직, 7,500만 달러 (약 920억원) 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금융지원

\* 아쇼카(獨) 등 40여개 글로벌 임팩트투자 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 英 사회적금융 도매기금(Big Society Capital ; BSC)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긴급 유동성 공급

\* 정부·민간 등의 주요 금융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 운용 중인 성장펀드를 재조정해 400여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6개월간 무금리 제공, 대출기간 연장 등 지원

### ② 보건·의료 활동 지원, 취약계층 구호 서비스 제공 및 민생 지원

- (보건·의료) 마스크 등 의료보호장비 제작·보급,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해 의료인력을 투입하는 등 공공 의료서비스 보완

\* 예: 스페인 보건의료협동조합 Espriu Foundation,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공중보건 기관과 협력, 의료인력 채용 및 원격 의료서비스(매주 2,500건) 실시

- (구호 서비스)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지역 내 빈곤층·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생필품 지원 등 구호활동 전개

▪ (이동·배송) 伊 택시협동조합 Lombardia, 거동이 불편한 노인 대상 무료 이동지원, 생필품 택배 배송

▪ (식료품) 佛 협동조합 Groupe UP, 노숙인 대상 식료품 바우처 지급

▪ (보육) 英 협동조합 Midcounties Co-operative,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부모들을 위해 탁아시설에 대한 추가 보육비용을 지원

- (민생) 일자리 제공, 생필품 가격 동결 등 서민생활 지원

▪ (고용) 英 협동조합 Coop Group, 비대면·소매거래 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지역 내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배송원 등 중심으로 신규채용 확대

▪ (생필품 지원) 伊 협동조합 Coop, 협동조합 상품(1만 8천여개) 가격 일시동결

▪ (금융) 獨 협동조합은행 BVR, 비대면 결제한도 상향

▪ (교육) 伊 사회적협동조합 Imiberg, 20여개 고등학교 대상 원격수업 실시



## II.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및 평가

###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활성화 및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 창출

- ① 現 정부출범('17.5월) 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 수(연평균 약 10%), 종사자 수(연평균 약 5%)가 빠르게 증가

사회적경제기업(개) · 종사자 수(명)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전체 기업 수 (전년비)	20,459	22,470 (9.8% ↑)	24,838 (10.5% ↑)	27,452 (10.5% ↑)
종사자 수 (전년비)	248,669	253,013 (1.7% ↑)	265,398 (4.9% ↑)	284,875 (7.3% ↑)

- ②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보완,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도 기여

\* 취약계층 고용(천명, '16→'18) : (협동조합) 7.7→11.2 (사회적기업) 23.8→26.1

\* 사회목적 재투자 추정액(억원, '18) : (협동조합) 262 (사회적기업) 1,157

### □ 이는 사회적경제 초기 생태계 구축 등 그간 정책의 성과에 기인

- ① 민·관 협의체 등 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토대로 사회적금융 시스템 구축, 공공구매 확대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신보) · DB(신용정보원),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서민금융진흥원) 등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을 구축

\* 사회적금융 정책자금 공급액(억원) : ('18) 1,937 → ('19) 4,625

- 국가계약 입찰가점(1.7→2점) · 수의계약 확대(2천→5천만원 이하), 국·공유재산 사용료율 인하(5→2.5%),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 공공구매액 : ('17) 1조363억원 → ('18) 1조4,445억원

- ② 부처별 · 지역별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을 모색하고 진출경로 다각화를 시도

\* 주거·환경(사회주택, 도시재생), 문화·예술(생활 SOC, 지역 관광), 소셜벤처 등



□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의 양적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다수 기업이 영세하고 지역 편중, 진출분야 제한 등 문제점 노출

❶ 창업 후 정부지원(평균 3년)이 종료되면 개별 기업들은 성장이 정체·지연되면서 신생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다수를 차지

\*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비중(%) : 사회적기업 66('18), 협동조합 93('19)

▪ 특히, 창업 초기 소규모 기업 중 상당수는 자립이 어려운 상황

\*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가능성(% '19 KDI) : (既 자립) 24.4, (단기 내) 37.6, (불가) 37.9

❷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활동을 중요시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경영성과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

\* 사회적기업 고용자의 지역별 비중(% '18) : (수도권) 52.5, (비수도권) 47.5

\* 사회적기업 평균 영업이익(천원, '18) : (수도권) 19,776, (비수도권) △2,788

▪ 비수도권 지역 간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수 등에서 격차가 발생

\*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사회적기업 수(개, '19) : (강원) 7.20(최대), (대구) 2.75(최소)

❸ 그간의 진출분야 다각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도소매 등 소규모 서비스업 중심으로 진출업종·분야가 제한적인 상황

\* 제조업 및 도소매업 비율(% '18) : (사회적기업) 40.1 (협동조합) 31

☞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정책을 지속**해 나가면서 유망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병행 추진

① 사회적경제 규모도 EU 등에 비해 아직은 미흡 → 지속 성장 필요

\* 전체고용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비중(%) : 韓 1.1('19), EU(27개국) 6.5('17)  
(※ 사회적경제기업 포괄범위는 나라마다 상이)

② 현재 **부처별·부문별**로 정책을 마련·추진 → **협업**을 통해 개선 가능



### Ⅲ.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 【 기본방향 】

◇ 현행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창업 지원 정책(1.0)을 추진하면서 스케일업 및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정책을 병행 추진(2.0)

- ① 설립·창업에 초점 → **창업 + 성장** 통한 자생력·경쟁력 강화
- ② 중앙정부 주도 지원 및 발전 → **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
- ③ 제한적 진출 →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 대응한 진출분야 **다양화**

#### 목표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스케일업)**을 통한 **자생력·경쟁력** 강화  
→ '22년까지 **6.4만명**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유지·창출기반** 확충

#### 정책과제

##### 1. 혁신성장 기반 강화

**3.8만명**

- ① R&D·인재·사업모델 등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역량 확충
- ② 민간판로 개척지원 및 공공판로 확대
- ③ 성장금융 확대와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

##### 2. 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

**1.4만명**

- ① 지역별 사회적경제 허브(Hub) 조성
- ②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활성화
- ③ 상호금융을 통한 역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 3.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

**1.2만명**

- ① 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모델 발굴
- ②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활성화
- ③ 소셜벤처 사업모델 고도화 지원
- ④ 문화·교육·과학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중앙정부·지자체·민간 “협업 거버넌스”



## 1. 혁신성장 기반 강화

-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성장기 기업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지원

### ① R&D·인재·사업모델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역량 확충

- **【그간의 대응】**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셜벤처 육성, 인재양성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추진 중

\* 소셜벤처 활성화·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혁신성장 전략('18) 등

- 소셜벤처 수 증가 등 분야별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에 핵심적인 **R&D 투자여력, 인력** 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 연구인력·조직 보유현황('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 해당없음 48.6%

\*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애로사항('19년 KDI 설문) : 일반·전문인력 확보 42.3%

- ⇒ **【향후 정책과제】** 초기 창업에 성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역량 확충**에 집중

### (1) 성장유망기업 통합지원체계 마련

- 개별부처별 소규모 지원에서 범부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전환

- 소관부처가 창업 및 초기기업을 지원하고, 중기부가 성장기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도약-성장의 협업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관계부처 TF(기재부·중기부 공동주관)를 구성, 부처간 역할 조정

	현재 모습		미래 모습
지원대상	초기 창업기업 위주	→	초기기업(1~3년) + 성장기 기업(4년차 이상)
지원방법	칸막이식 지원 (부처별 소관 기업)	→	이어달리기 지원 (각 부처 - 초기기업, 중기부 - 성장기업 통합지원)
지원내용	단편적 지원 (초기 기술개발 위주)	→	전분야 연계지원 (기술개발+사업화+마케팅)
지원체계	각 부처별 운영	→	범부처 협업 (기재부·중기부 주관 T/F)



## (2) 우수인재 유입 지원

❶ (청년) 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일경험 및 창업 지원, 교육·훈련 강화 추진

- (일경험)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조직 인턴십 지원(3차 추정)
- (창업) 청년창업가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 검토, 지역 기반·업종특화 창업지원 확대\*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활성화

\* ('18) 여성·글로벌·도시재생 등 6개 분야 → ('19) 8개 분야(관광·융합기술 추가) → ('20) 10개 분야(특산물제조 등 추가)

- (교육·훈련) 사회적경제 선도대학<sup>1)</sup>을 확대하고(現 누적 12개 → '22년 누적 20개)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확충<sup>2)</sup>

1)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대학

2)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상자 선발시 사회적경제기업 우대안 마련·추진  
(서류평가지 가점, 교육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 강의 신설, '21~)

❷ (신중년) 숙련된 시니어 인력 활용을 위해 대·중소기업, 전문가협회 등과 연계해 “재능기부뱅크” 모집 등 활성화

- (재취업연계 과정) 사회적경제기업의 전문인력 채용수요에 맞춰 커리어 전환교육·인턴십 등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채용관(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19.下~),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社당 최대 2명, 월 250만원限)과의 채용연계방안 마련('20.下)

- (전문멘토양성 과정)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세무·회계·노무 상담)을 위해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및 매칭 지원

	현행		개선
모집	개인 단위 모집 위주	→	직능단체 단위 업무협약
관리	단순 매칭·집합교육 위주	→	1:1 매칭 맞춤형 교육 + 고용연계



### (3) 혁신형 사업모델 발굴·확산

#### ① (규모화 모델)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연합회 구성 등을 통한 연대사업\* 지원

\*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협동조합의 경우('18년 평균 고용인원 : 사회적기업 20.7명, 협동조합 4.4명), 연대사업이 매출증대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29.9%, '20년)

\* (예) 원재료 공동구매·판매, 공동브랜드 개발 등

#### ▪ 이종(異種)협동조합(기본법-개별법 상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발굴, 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지원('20.10월)

\* (예) 이종협동조합 공동으로 로컬푸드 사업 참여

↳ (기본법 협동조합) 생산·가공 + (신협) 금융 + (생협) 유통·판매

\* '20.3월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일반 협동조합과 신협·생협 간 연합회 구성 가능

#### ▪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공동 마케팅·브랜드 개발 등 지원

▪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 아카데미 확충 : ('19) 8개 → ('22) 12개(목표)

▪ 성장형 협동조합 지정기준(업력, 매출·고용 증가율 등 고려) 마련 및 공동사업 추진

#### ② (협업 모델) 공공기관·대기업·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 (예) ①(한국도로공사·hi-shop 협동조합) 고속도로 휴게소에 난립한 불법 노점상을 협동조합 방식을 통한 정식 납품업체로 전환('19년~)

②(굿잡 5060) 현대차가 기획 및 재정·시설 등 지원 + 지자체 홍보, 구직자 모집, 연계 프로그램 제공 등 + 사회적기업이 취업 알선('18년~)

#### ③ (대안적 사업모델) 보육·노인 등 돌봄수요 확산,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 종사자 증가 등에 대응한 사업모델 개발

#### ▪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확대(現 6개 시범사업 → 단계적 확대)<sup>1)</sup>,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강화<sup>2)</sup>

1) 돌봄매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돌봄 수요·공급 연계

2) 지역사회 내 돌봄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보건의료·요양 등 서비스 연계·제공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수 : ('20) 42개 → ('22) 150개(목표)

#### ▪ 플랫폼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지원<sup>1)</sup>, 사업고용협동조합<sup>2)</sup> 모델 활성화 추진

1) 공유플랫폼 개발 및 종사자 교육 지원, 공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20.下) 등

2) 협동조합과 프리랜서가 근로계약을 맺고, 프리랜서가 직원 조합원으로 참여



## ② 민간판로 개척 지원 및 공공판로 확대

- **【그간의 대응】 「국가계약법」 개정** 통한 공공조달 확대,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 전용 **온라인몰(e-store 36.5+)** 개설 등 통한 판로 확보 지원
- \* 국가계약 입찰가점 확대, 수의계약 대상 확대, 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등
  - \* 코로나 19 계기, 「사회적경제 온라인 특별전(‘20.6.15~30)」 개최  
→ 총 43개 기관 참여, 총매출 1,590백만원(박람회 평균매출의 8.3배↑)
  - 공공구매 실적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공공판로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민간의 새로운 판매영역 개척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경향
  - \* 사회적기업 공공매출액 비율(%) : (‘16) 60.6, (‘17) 50.8, (‘18) 53.2  
민간매출액 분포(% , ‘18) : (1억원 미만) 23.4, (1~5억원) 43.8
- ⇒ **【향후 정책과제】** 국·내외, 온·오프라인 민간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공공판로를 지속 확대

### (1) 민간판로 개척 지원

#### ① e-store 36.5+ 확대·개편(‘20.下) 등 비대면 판로 개척 지원

- ▶ **온라인몰 고도화** : 모바일 웹 기능 강화, 제품체험단(소셜어답터) 운영 및 상품개선 지원, 입점절차 간소화, 소비자 맞춤상품 추천기능 구현 등
  - ▶ **민간시장 진출 연계 강화(‘20.下~)**
    - 지역(대구·경기·경남·전남·광주 등) 사회적경제 쇼핑몰 간 상품정보 교류 확대(‘20.下)
    - 유명 포털 등(네이버 해피빈·우체국쇼핑 등)과 온라인 기획전 등 협업 강화(‘21.上)
- ⇒ **e-store 36.5+ 거래 실적·목표(억원)** : (‘19) 11 → (‘20) 20 → (‘21) 30

#### ② 오프라인 유통채널별(백화점, 마트, 홈쇼핑 등) 전문벤더 양성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문유통조직(소셜벤더) 발굴·육성 지원

- \* 상품 발굴(MD 기능) 및 품질 개선 권고, 유통채널 진출 연계, 기획전 개최 등
- \* 現 민간벤더 5개소 시범선정·운영 중,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확대여부 검토



③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수출 역량진단·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해외진출 패키지 마련·운영

\* 사회적경제기업-해외바이어 간 1:1 비즈니스 상담 주선, 해외 팝업스토어 (K-Social) 운영, 해외 온라인플랫폼 입점 교육 등(KOTRA, '21~)

④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캠페인 ("Buy Social")<sup>1)</sup> 계기, 소비촉진 프로모션<sup>2)</sup> 실시('20.下)

1) 英 사회적경제기업 시장확대 캠페인, 라이선스 취득으로 국내 도입·시범실시

2) 추석연계 판로 기획전, CSR과 연계한 가치소비 캠페인 실시(9~10월 중)

⑤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촉진 행사 및 농협 등 대규모 유통 채널 등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활용 기회 확대

▶ 「코리아세일페스타」('20.11월), "사회적경제 전용관" 개설 추진

▶ 농협, ①사회적경제 전용관·전용매대 확충('19년 51개 → '20년 55개)

②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확대('19년 390개 → '20년 600개)

③사회적경제 팝업스토어(shop in shop) 개설('20.下)

④공영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채널 다각화

⑤농업 분야 종사 사회적경제기업과 계통계약\* 확대

\* 전국 하나로마트 상품공급을 위해 농협하나로유통과 공급업체간 체결계약

## (2) 공공판로 확대

①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신설(「사회적경제기본법」·「판로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② 공공기관 경영평가(비계량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실적\* 등을 반영토록 가이드라인 마련

\* 협력사업 발굴, 판로·금융지원, 공동 연구개발 및 동반 해외진출 등

③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수의계약 확대

\* (현행) 5천만원 → (개선) 1억원 (「지방계약법시행령」개정, '20.7월말~12월)



### ③ 성장금융 확대와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

□ **【그간의 대응】**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사회적 금융 인프라 조성, 정책자금(투자·융자·보증) 공급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모형, 중개기관 DB, 사회적경제기업 DB(추진 중) 등

\* 정책자금 공급 실적(억원) : ('18) 1,937 → ('19) 4,625 → ('20.上) 2,599

○ 정책자금 총 공급은 증가세이나 개별기업은 부족한 지원한도, 재무성과 위주의 평가 등으로 성장을 위한 자금확보에 제약

\* (보증한도) 연매출의 1/2 이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3억원, 마을·자활기업 1억원

⇒ **【향후 정책과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투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①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지원 특례보증을 지원(신보)

\* 평가(수익성·사회적가치) 우수기업에 한해 보증한도 우대(예: 2배까지 확대) 적용

② 협동조합에 대해 우선출자제도를 본격 시행하고('20.10월) 우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보증한도 확대\* 추진

\* (기준) 연간매출액의 1/2 또는 출자금의 3배 중 적은 금액 범위 내

(개선)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同 한도를 상향(예시 : 출자금의 5배)**

③ 성장금융 출자금액 확대 · 민간 출자비율 상향 조정을 통한 사회투자펀드 펀드조성액 확대(現 연 250억원 → 향후 연 500억원)

\* (출자금액) 200억원 → 300억원, (민간 출자비율) 20%(50억원) → 40%(200억원)

④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역량 평가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표준 평가시스템”(‘19년 신보 개발) 활용 확대(現 9개사 → ‘21년 50개사)

\* 기업철학, 사회환원 등 평가지표를 토대로 사회적가치 등급을 산출하는 모형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 이용희망 기관·단체에 무상제공, 표준평가시스템 上 평가 우수기업 pool 조성, 관계기관에 제공



## 2. 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

- ❖ 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에 투자·공헌하는 구조(“지역순환경제”) 확립을 지원

### ① 지역별 사회적경제 허브(Hub) 조성

□ **【그간의 대응】**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지원, 입주공간 및 교육·컨설팅 제공 등을 위한 지역별 지원공간이 다수 신설 중

\* 중간지원기관(중앙·지방정부 별도 지정·운영), 소셜캠퍼스 온(고용부, 전국 10개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산업부, 전국 5개 타운 건립 확정)

- 부처별 칸막이식 설립·운영으로 각 지역별 지원기관들이 중복·다원화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

⇒ **【향후 정책과제】** 지원기관 간 유기적 연계·통합을 강화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집적화에 주력

\* 사회적경제기업 간 노동·자본 및 지식·경험 공유(positive spillover)

### ① 지역별 소셜캠퍼스 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특화 사업모델 개발을 추진

\* (소셜캠퍼스 온) 창업 기업 인큐베이팅(1단계)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성장기 기업(2~3년차) 사업모델 개발(2단계)에 집중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별 일자리 특화 사업모델 개발 예시

- ▶ (경남) 판매·전시 특화 → 로컬푸드 기업 등 입주기업 확대 추진(‘20.下~)
- ▶ (전북) 컨설팅(업종전환 등) 특화 → 당사자조직 집적화 등 네트워크 구성(‘20.下~)
- ▶ (대전) 기술 사업화·상품화 특화 → 과학자협동조합 등을 위한 혁신공간 제공(‘21~)
- ▶ (대구) 문화예술 특화 → 노후산단 내 일반기업의 업종전환 유도(‘21~)
- ▶ (충남) 농식품업 특화 → 도내 농식품 물류·유통·가공·판매채널 구축에 집중(‘21~)

### ② 중간지원기관\*의 단계적 통합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 마련(‘20.下 관계부처 TF 구성, 세부실행계획 마련)

\* 현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지원기관(기재부·고용부·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 16개) + 마을기업지원센터(행안부·지자체 위탁 17개)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지자체 위탁 13개)

- 중간지원기관 간 공동사업(예: 창업설명회) 발굴·우선 추진(‘20.下)



## ②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활성화

□ **【그간의 대응】** 도시재생뉴딜, 생활 SOC 등 지역사업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사례 발굴에 집중

\* 지역사업으로 조성된 생활편의시설 사용·위탁관리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용하는 가이드라인 마련('19),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사업 참여 사례집 발간('20.上) 등

○ 지자체·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및 플랫폼 부족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사업 참여가 한정적인 상황

\* '18~'19년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한 지역사업은 전체의 15%(사업비 기준 0.1%)

⇒ **【향후 정책과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tool을 다양화

### (1) 지역의 일자리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 ①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하는 지역문제해결형 R&D 활성화

▪ (주민참여형) “SOS랩” 사업 평가시 “사회적가치” 항목을 신설해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참여에 가점 부여('21~)

\* 지역주민 스스로 대기환경·재난대비·아동안전 등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여 SW·ICT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프로젝트 조직(Solution in Our Society Lab)

\* 예: 대전,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소프트웨어 개발에 소셜벤처 참여

▪ (컨소시엄형) 지역별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주관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R&D 및 사업화 지원

\* 시도별 제조(8)·식품(7)·에너지(3)·IT·문화(10)·사회서비스(5) 33개 품목 선정

\* ('20) 21개(신규) → ('21) 25개 프로젝트 추진

#### ②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회적경제 특화사업 및 일자리 개발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 “지역자원뱅크” 시스템 구축(3차 추정)

\* 총 34개 기초지자체에 대해 지역경제 특성과 주민의 정책수요, 사회적경제 기업 조직·시설·서비스 현황 등을 조사해 공공데이터화(사회적기업진흥원)



**③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내 지역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내 사회적기업 취·창업 연계를 추진**

- \* 지역 사회적기업 탐방, 사회적경제 리빙랩 프로그램 신규 운영('20.下) → 프로그램 수료자 대상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추가 마련 검토('21~)

**(2)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발굴 확대**

**① 농업·산림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사업체 규모·성과 지속 확대**

▶ (농업) 사회적농장(現 30개소)의 수익창출 지원

- \* 사회적농업(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을 실천하는 농장
- \* 사회적농장 : ('20) 30개소 → ('21) 50개소(목표)

▶ (산림)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주민사업체 육성 확대("산림일자리발전소")

- \* ('19) 133개 → ('22) 250개(목표)

▶ (관광)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지역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관광사업체 (관광두레) 육성 확대

- \* (1년차) 발굴·사업계획 수립 (2년차) 창업·시범사업 운영 (3년차) 운영·경영 지원
- \* ('19) 113개(신규) → ('21) 215개

**②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역사업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지속 확대**

- \*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시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참여내용을 적시토록 유도

▶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지원 : (現) 10개소 → ('22) 48개(목표)

- \* 표준사업모델 마련, 운영매뉴얼 및 컨설팅 제공 등으로 사업고도화 지원

▶ (농촌신활력) 농촌 지역개발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를 의무화

(現) 60개 시·군, 300개소 → ('22) 100개, 500개소(목표)

- \*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커뮤니티 및 창업 공간 조성 등 지원

**③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개발 적극 검토**

- \* (예) ①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 그린

➢ 지역 내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실시

- ②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숲 등 도심녹지 조성 그린

➢ 민간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도시숲 관리체계** 마련



### ③ 상호금융 등을 통한 역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 **【그간의 대응】** 서울 등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사회적금융 여건·역량 차이가 크고 지자체 외 민간재원 활용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 "지방에는 사회적경제를 위한 자금이 턱없이 부족"(20.5월 현장간담회)

⇒ **【향후 정책과제】** 수도권·지방 및 지방 간 사회적금융 인프라 등 격차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상호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

#### ① 지역기금 조성 활성화 등 지자체의 사회적금융 역량 강화

- (사회적경제기금) 기금 설립·운영에 관한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확산(사례집 발간, '20.下)

\* 서울시·화성시 기금 既 조정·운영, 충남 조성 중, 경남 '20.6월 관련 조례 의결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자체 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 확산을 촉진하고 관련법 재입법 추진

\* 지자체가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발행, 민간투자로 공공 사업 수행 후 성과목표 달성시 사업비 등을 보전(現 서울시, 경기도 시행 중)

\* 「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20.8월 의원입법안 발의)

#### ② 지역 기반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역할 확대

- 지자체 협의기구(사회적경제위원회 등) 내 상호금융기관 참여를 제도화(조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20.下)

▶ (신협) 사회적경제기업 등 **他 법인에 대한 출자 근거 마련**(「신협법」 개정)

▶ (새마을금고)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대출상품** 개발·공급

\* 연차별 목표(억원, 누적) : (대출) ('19) 20 → ('20) 110 → ('21) 210

(기부) ('19) 13 → ('20) 23 → ('21) 33

▶ (농협) 비농업법인 중 농업 관련 서비스 제공 법인 대상 **여신지원상품** 개발 검토

▶ (수협) 지역 상호금융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여신상품** 개발·공급

\* (현행) 수협은행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전용상품 공급(5건 7억원 실적) → (개선) 수협은행 + 지역 상호금융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여신상품 개발·공급

▶ (신보·농협) 지역 내 유휴공간을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소유·운영**할 수 있도록 보증·대출 지원 → '20~'22년 총 375억원 공급(1년 거치 9년 상환 조건)



### 3 진출분야 다양화

- ❖ **인구·사회 구조변화** 및 「**한국판 뉴딜**」 등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유망분야 진출**을 지원

#### ① **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모델 발굴**

- **【그간의 대응】**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기반<sup>1)</sup>** 조성을 토대로 **업사이클** 등 부문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중<sup>2)</sup>

1) 창업·컨설팅·교육·홍보 지원, 민-관 협력(대기업·공공기관 업무협약 등) 등

2)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수('19) : 830개(사회적기업 425개, 소셜벤처형 405개)

- 환경서비스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특정분야에 치중해** 사회적경제기업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진출분야(%) : (업사이클) 48.8, (폐기물) 27, (환경교육) 8, (녹색제품) 7.3

- ⇒ **【향후 정책과제】** 환경서비스 수요, 미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산업** 등에의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다변화** 및 **육성기반 강화**

#### ① **녹색제품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확산,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수도 관리 등 환경·자원순환분야 진출을 촉진**

▸ **녹색제품 인증비용 지원 등 특화지원 강화('21~)**

▸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의 자활사업화**

: (기존) 마을이장 등에 시설 운영비 지원 → (개선) 자활기업에 운영·관리 위탁

⇒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확대 통해 **'22년까지 약 5,000명 일자리 창출**

#### ②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그린뉴딜과 연계한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촉진**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산 추진**

\* 국민주주 프로젝트('20년 추경 365억원, '20~'25년 예산 총 2,335억원)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투자시 장기 저리융자 지원

▸ **우리그린마을공동체**(마을 단위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하는 에너지 공동체) 확산 추진 ('21년 시범사업 실시)

\* (예) 서울 상도동, 에너지 협동조합 발족, 태양광 설비 주민공동 설치·운영



## ②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활성화

□ **【그간의 대응】**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입장벽 완화, 지역 특화 신사업 개발·시범사업 등 추진 중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일부 완화(유급 근로자 고용 등), 주민참여 돌봄조합('20) 및 식사·영양관리 지역투자서비스('20) 등 시범사업 실시

○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보육 등)에 대응한 진출 활성화 필요

⇒ **【향후 정책과제】**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공적돌봄 영역의 사각지대 해소, 대상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① 공적돌봄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확대

▶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복지부 지침 개정 '21~)

\* (현행) 참여시 우대 → (개정) 사업계획 제출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의무화

▶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로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촉진(운영비 등 인센티브 제공)

\*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수(개) : ('19) 14 → ('20) 150 → ('22년) 300(누적)

▶ **돌봄 수탁기관**(아동 등) 선정·평가지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반영 확대

\* (~'22)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개발 완료

### ② 설립·운영규제\* 완화 등을 통한 의료사협 설립 확산 검토

\* (예) 인적(개원의 참여허용 등) 및 자본(설립 이후 총자산 중 출자금 비율 완화) 규제 등

### ③ 사회적경제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예) 맞벌이 가정 아동 대상 식사 및 방과 후 체험활동 제공(식자재 공급·도시락 제조·배달 업체-교육서비스 제공 업체 등 컨소시엄 구성)

### ④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뉴딜 등 참여·활용방안 적극 검토

\* (예) ①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 IoT·AI 활용 디지털 돌봄 **디지털**

↳ **의료사협** 등이 참여하는 지역 내 **디지털 돌봄체계** 구축

②이러닝·가상훈련(VR·AR) 콘텐츠 개발 확대 **디지털**

↳ 보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상 **가상 현장실습** 기회 제공

⇒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향상방안'** 마련('20.3분기)



### ③ 소셜벤처 사업모델 고도화 지원

□ **【그간의 대응】** 소셜벤처 개념 정의, 판별기준 마련 및 공간·금융·판로 등 인프라 구축(「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18.5월)」)

○ 육성 초기단계로 **맞춤형 성장전략**과 지원체계 지속 정비 필요

\* 소셜벤처 정책개선 필요사항(% , ‘19) : 자금지원 60.6, 중간지원조직 확대 29.3,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27.0, 인식 개선 25.8

⇒ **【향후 정책과제】** 소셜벤처에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비대면·해외 판로 등을 통한 성장을 지원

① 소셜벤처 사업모델의 **비대면·온라인화**를 위해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20.下 시범사업 실시), **맞춤형 실무교육** 등 추진

\* (예) 은퇴 소방관을 연계해 복지시설 등에 소방안전 컨설팅 제공하는 소셜벤처  
→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 소방안전 관리 솔루션 등 온라인 연계

\* 의료·교육·오피스 등 비대면 분야 및 기본교육 프로그램 마련 추진

② 소셜벤처 스케일업을 위한 “**소셜임팩트보증**” 지원 확대(기보)

\* 소셜임팩트보증 연간 지원목표(억원) : (‘20) 1,150 → (‘21) 1,350 → (‘22) 1,500

③ 글로벌 역량을 가진 **청년인재**를 대상으로 **소셜벤처 창업교육<sup>1)</sup>**을 실시하고, **창업지원사업<sup>2)</sup>** 규모를 확대

1) “글로벌인재양성 프로그램”(KOICA) 참가자 대상 소셜벤처 창업교육 등 실시

2) 예비창업패키지 지원확대 : (‘19년) 1,500개 → (‘20년) 2,200개(3차 추경 포함)

④ 취약계층 등 대상 **디지털 콘텐츠 개발**, **일경험 지원** 등 **디지털·안전망**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소셜벤처 참여 확대 검토**

\* (예) 초중고 전체교실 WiFi 설치 등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디지털**

↳ 취약계층 학생이 방과 후 활용가능한 **디지털 교육콘텐츠** 제작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 지원 **후면**

↳ **발달장애인의 집중력을 활용하는 맞춤형 AI** 일자리 제공



#### 4 문화·교육·과학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 **【그간의 대응】** 각 업종 특성에 맞춘 사업모델 마련을 지원하고,  
학교 내 협동조합·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사업화 등 지원(컨설팅 등)

\* 문화·예술·관광 사회적기업 수 : 325개('19년말), 학교 협동조합 수 : 113개('20.4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수 : 375개('19년말)

○ 우수 사업모델 발굴·확산 등을 통한 자생력 지속 강화 필요

⇒ **【향후 정책과제】** 문화·교육·과학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모델  
고도화 등을 통한 지속 성장을 뒷받침

#### ① (문화) 문화예술 협동조합 육성,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에 대한 성장지원 및 한국판 뉴딜 유망 분야 사회적기업 적극 발굴

▶ (문화예술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사업전환 컨설팅 시행('20년 15개)

- 컨설팅 결과, 우수 협동조합은 초기 사업비 지원 연계('21~)

▶ (관광두레) (현행) 최대 5년간 육성 → (개선) 5년 경과 후 사회적기업 전환 등 지원

▶ (한국판 뉴딜 유망분야 육성) 실감콘텐츠, 원격 스포츠 지도, 온라인 예술활동  
등 비대면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되자될**

\* ('20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의 10%를 '유망분야'에서 지정 →  
( '21년) '유망분야' 지정 20%까지 확대

#### ② (교육) 교복 공동구매, 창업활동 활성화 등 학교 협동조합의 사업모델 다양화 지원(컨설팅, 우수사례 확산 등)

\* (예) 안전한 먹거리 매점 '먹고 가게'(유기농 식품 판매, 이익금 장학사업 등 활용),  
창업 프로그램 '봉봉마켓'(학생이 친환경 수익상품 직접 기획)

#### ③ (과학)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이공계생 대상 협동조합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한 맞춤형 교육·경영 컨설팅('20년 600명)

\* 크라우드펀딩 및 협동조합 간 협의회 구성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



## IV. 향후 추진계획

### ① 동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 및 성과도출을 위해 사회적경제 3법 (경제법·가치법·판로법) 등 관련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

- ①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은 의원입법안 발의\*, 「판로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중

\* (경제법) 윤호중(7.14)·강병원(7.30) 의원 발의, (가치법) 박광운(6.1) 의원 발의

- ② 정부 내 관계부처 입법 TF 운영을 통해 주요쟁점 검토 및 정부대안 마련 추진
- ③ 민간 전문가·사회적경제계 의견 수렴 및 당정청 간 긴밀한 소통·협의를 통해 효과적 입법전략 마련·추진

### ② 효과적 이행점검 및 국민들의 성과 체감도 제고 노력 강화

- ①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사회적경제 민간 전문위원회」에 분과위를 구성하고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논의

\* 분과위 구성(안) : ①혁신성장 ②지역공동체 활성화 ③진출분야 다양화

※ 既 발표 대책(19개) 중 미완료 과제를 관련 분과위에서 함께 점검

- ② 대국민 맞춤형·체감형 홍보 노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 확산과 국민들의 사회적경제 인지도 제고에 지속 노력

#### 【 참고 : 동 대책의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

◇ 세부과제들을 신속히 추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22년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약 6.4만명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 창업대책의 실효성 제고로 창업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그간 연평균 일자리가 4.6% 증가→ '22년까지 **약 4.1만명** 일자리 증가

○ 既 창업기업 중 유망기업의 스케일업과 진출분야 다양화 등으로 **약 2.3만명** 일자리 추가 창출 가능

▪ 진출분야 다양화 등을 통한 추가 창업 효과 : **0.9만명**

▪ 스케일업 통한 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 : **1.4만명**

※ 재정사업의 고용유발계수, 재정사업 고용창출 실적, 매출액당 고용 등 활용 추정



정책 과제	추진시기	협업 부처
<b>【혁신성장 기반 강화】</b>		
▪ 범부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21년~	중기부, 산업부 고용부
▪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조직 인턴십 지원	‘20.下	중기부, 고용부
▪ 청년창업가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 검토, 지역기반·업종특화 창업지원 확대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활성화	‘21년~	고용부
▪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확대 및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확충	~‘22년	고용부
▪ 재능기부뱅크 모집 등 활성화	‘20.下	고용부
▪ 이종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발굴 및 연합회 설립지원	‘20.10월	기재부
▪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공동 마케팅·브랜드 개발 지원	~‘22년	중기부
▪ 공공기관·대기업·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 우수사례 발굴	‘20.下	고용부
▪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확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강화	~‘22년	복지부
▪ 플랫폼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지원 및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 활성화 추진	‘20.下	기재부
▪ e-store 36.5+ 확대·개편 등 비대면 판로 개척 지원	‘20.下~	고용부
▪ 오프라인 유통채널별 전문벤더 양성 및 전문유통조직 발굴·육성	~‘22년	고용부
▪ 맞춤형 해외진출 패키지 마련·운영	‘21년~	산업부, 외교부
▪ Buy Social 계기 소비촉진 프로모션 실시	‘20.下	고용부
▪ 소비촉진 행사 및 대규모 유통채널 참여 기회 확대	‘20.下	고용부, 농식품부, 공정위, 고용부, 산업부, 기재부
▪ 공공기관 의무구매 관련규정 신설 추진	‘20.12월	기재부, 고용부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실적 등 반영 확대	‘21~	기재부
▪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수의계약 확대	‘20.12월	행안부
▪ 성장지원 특례보증 지원	‘21~	금융위
▪ 협동조합 우선출자 시행, 우수조합 보증한도 확대	‘20.下	기재부, 금융위
▪ 성장금융 출자금액 확대·민간 출자비율 상향조정을 통해 사회투자펀드 조성액 확대	~‘21년	금융위
▪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시스템 활용 확대	‘21년	금융위



정책 과제	추진시기	협업 부처
<b>【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b>		
▪ 소셜캠퍼스 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연계를 통한 지역별 일자리 특화 사업모델 개발	‘20.下~	고용부, 산업부
▪ 중간지원기관 단계적 통합 및 원스톱 서비스 창구 마련	‘20.下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 SOS랩 사업 평가시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참여에 가점 부여	‘21년~	과기부
▪ 지역별 중점사업 대상 산·학·연 컨소시엄 R&D·사업화 지원	~‘21년	산업부
▪ 지역자원뱅크 시스템 구축	‘20.下	고용부
▪ 소셜캠퍼스 온 내 지역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 내 사회적기업 취·창업 연계	‘20.下~	고용부
▪ 농업·산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주도의 사회적경제 사업체 규모·성과 지속 확대	~‘22년	농림부, 산림청, 문체부, 환경부
▪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사업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지속 확대	~‘22년	국토부, 농식품부
▪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 등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개발 적극 검토	~‘22년	행안부, 복지부, 문체부, 산림청
▪ 기금 설립·운영에 관한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확산	‘20.下	행안부
▪ 지자체 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 확산 촉진 및 관련법 재입법 추진	‘20.12월	행안부
▪ 지자체 협의기구 내 상호금융기관 참여 제도화 및 상호금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금융공급 확대	‘20.下	농식품부, 해수부, 금융위, 행안부
<b>【진출분야 다양화】</b>		
▪ 녹색제품 분야 사정기업 확산, 사정기업을 통한 수도관리 등 환경·자원순환분야 진출 촉진	~‘22년	환경부
▪ 그린뉴딜과 연계한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주민 참여 촉진	‘20년~	기재부, 환경부, 산업부, 고용부
▪ 공적돌봄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확대	~‘22년	복지부
▪ 설립규제 완화 등을 통한 의료사험 설립 확산 검토	‘20년	복지부, 기재부
▪ 사회적경제기업간 컨소시엄을 통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22년	복지부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뉴딜 참여·활용방안 적극 검토	~‘22년	복지부
▪ 소셜벤처 사업모델의 비대면·온라인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맞춤형 실무교육 등 지원	‘20.下~	중기부
▪ 소셜벤처 스케일업을 위한 소셜임팩트보증 지원 확대	~‘22년	중기부
▪ 글로벌 역량을 가진 청년인재 대상 소셜벤처 창업교육 실시 및 창업지원사업 규모 확대	~‘20년	중기부
▪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소셜벤처 참여 확대 검토	~‘22년	중기부
▪ 문화예술 협동조합 육성,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에 대한 성장지원 및 한국판 뉴딜 유망분야 사회적기업 적극 발굴	‘22년	문체부
▪ 학교 협동조합 사업모델 다양화 지원	‘22년	교육부
▪ 협동조합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한 맞춤형 교육·경영 컨설팅	‘22년	과기부







---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현상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

2020. 10. 15.

관계부처 합동







---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현상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

2020. 10. 15.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요 약]	555
Ⅰ. 추진배경	560
Ⅱ. 추진방향	563
Ⅲ. 중점 추진과제	564
1.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564
2.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	568
3.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	572
4.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	576
Ⅳ. 향후 추진계획	580
[붙임] 규제애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583





## 요 약





## 1. 추진배경

### □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이 주축이 되어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증가\* 등 성과 창출
  - \* 사회적경제기업 (개, '16→'19년) : 20,459→27,452  
취약계층 고용(천명, '16→'18년) : (협동조합) 7.7→11.2 (사회적기업) 23.8→26.1
-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과 여성기업·장애인기업·청년창업기업·시장상인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의 플레이어 역할 수행
  -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어업법인 등

### □ 현실에 맞는 종합적·체계적 규제개선으로 자생적 성장 지원 필요

- 그간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종합적 규제·제도 관점에서의 개선노력 및 혁신·지원 미흡
  - \* 특히 기존 규제·제도 환경이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성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해 관련기업은 일반 영리기업에 비해 불리한 여건과 애로를 호소
- 기업유형별 현장소통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및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할 필요

## 2. 추진방향

- ◆ (발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소통\* 등을 통해 규제애로 발굴(240건)
  - \* 현장소통 간담회('20.1~4월), 협·단체 애로청취 및 지자체·공공기관 협업발굴
- ◆ (개선) 기업현장 핵심규제 59건(4대 분야)을 일괄정비하여 기업 경영부담 완화 및 성장 촉진 도모

4대 중점 과제	규제 공정화	1.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12건)
	규제 포용화	2.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 (24건)
	규제 합리화	3.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 (12건)
	제도·정책 현실화	4.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 (11건)



### 3. 중점 추진과제 (주요사례)

#### ①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12건) : 사회적 가치를 모두 추구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기업 형태별 차별 완화 및 및 특성별 규제 개선

⇒ 사회적협동조합 인정·참여 확대, 장애인기업(전용보증상품)·청년상인(자부담 경감) 등 맞춤 개선

- ① (인정 범위) 해당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반 협동조합과 같이 여성기업·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하여 관련사업 참여 등 우대 혜택 부여 중기부
- ② (심사기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시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을 구분·심사하여 예비 사회적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고용부

#### ② 정부조달 진입 촉진 및 부담 경감(24건) :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조달 우대를 위한 우선구매 및 신인도 확대 등 조달 규제 개선

⇒ 사회적경제기업 의무구매비율 법제화, 각종 조달제도·기업유형별 신인도 가점 부여 등

- ① (계약절차) 지자체 수의계약(1인 견적) 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 체결하는 요건을 삭제, 계약 부담 완화 및 우선구매 활성화 행안부
- ② (신인도) 2억원 미만 소규모 물품, 중기간 경쟁제품 조달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에 대한 20개 조달 제도를 일괄 개선(신인도 가점 부여 및 낙찰 지원) 조달청 등

#### ③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12건) :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하여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의 경영·행정 부담 완화

⇒ 사회적 가치 기업·제품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규제개선, 서류제출 및 절차 간소화 등

- ① (상품 입점) 국·공립 박물관 문화상품 선정시 사회적 가치 항목 신설·가산점 부여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납품 및 입점 지원 문체부·지자체
- ② (수수료)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표준코드(바코드) 연회비 20% 감면 상의

#### ④ 성장촉진 기반 조성 및 지원 강화(11건)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판로 지원 등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세제 지원 강화

⇒ 통합플랫폼 운영, 지방공기업 구매실적 평가반영 확대, 지원기관 역량강화, 지방세 감면 확대 등

- ① (시스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인증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가능토록 개선 고용부
- ② (공유재산) 사회적경제기업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시 최대 사용 기간(5년) 보장 및 임대료 분할납부 확산 지자체(193곳/233곳)



### 3. 중점 추진과제 (주요사례)

#### ①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12건) : 사회적 가치를 모두 추구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각종 인정범위 확대 및 특성별 규제개선

⇒ 사회적협동조합 인정·참여확대, 장애인·청년창업·사회적기업 등 맞춤개선

- ① (인정범위) 일정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을 일반협동조합과 같이 여성기업·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하여 관련 지원사업 우대 중기부
- ② (심사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시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구분·심사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고용부

#### ②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24건) :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조달우대를 위한 우선구매 및 신인도 확대 등 조달규제 개선

⇒ 사회적기업 의무구매비율 법제화, 각종 조달제도·기업유형별 신인도 가점 부여 등

- ① (계약절차) 지자체 수의계약(1인 견적)시 가장 경제적인 가격 요건을 삭제하여 계약불편·부담 완화 행안부
- ② (신인도) 2억원 미만 소규모 물품조달, 중기간 경쟁제품 조달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부여 확대(20개) 조달청 등

#### ③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12건)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기준 및 절차 합리화

⇒ 사회적 가치 기업·제품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규제개선, 서류제출 및 절차 간소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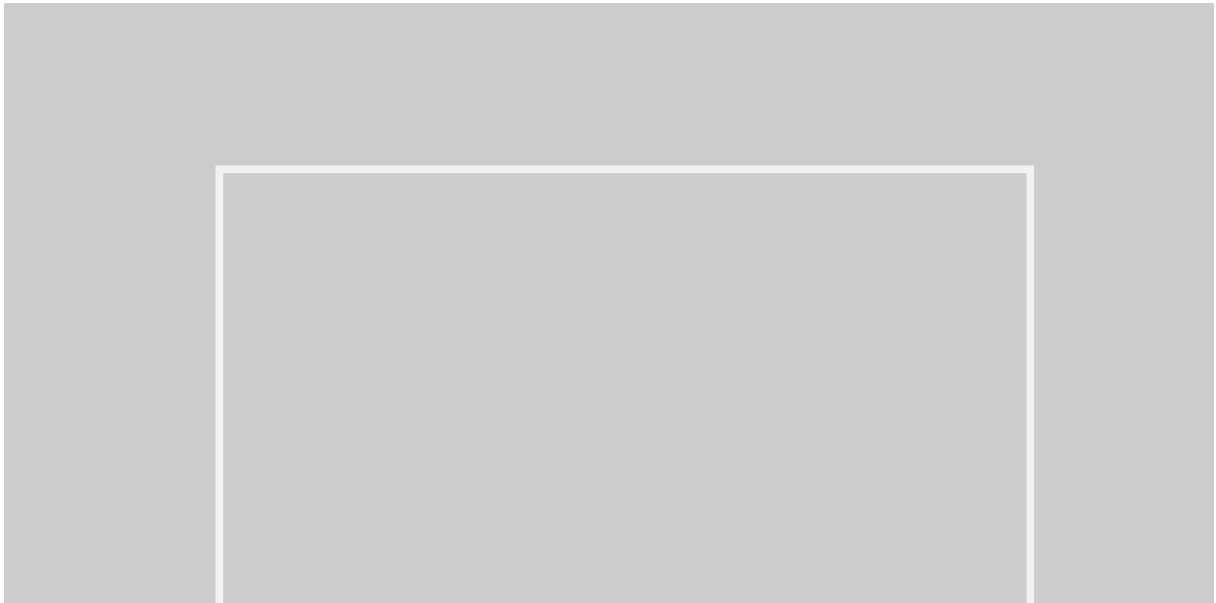
- ① (상품입점) 국·공립박물관 문화상품 선정시 사회적 가치 항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납품·입점지원 문체부·지자체
- ② (수수료)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표준코드(바코드) 연회비 20% 감면 상의

#### ④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11건)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정보시스템, 운영체계 등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세제 지원강화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구매실적 평가확대, 지원기관 역량제고, 지방세 감면 확대 등

- ① (시스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증여부를 전산으로 확인가능토록 개선 고용부
- ② (공유재산) 사회적경제기업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시 최대 사용기간(5년) 보장 및 임대료 분할납부 확산 지자체(193곳/233곳)





החל





## I. 추진배경

###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중

-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협력·포용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핵심 국정과제\*\*
  - \* 공공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경제 공헌, 사회적 약자 기회제공 등이 세부가치(OECD)
- \*\*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 정부는 그간 사회적경제 법·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입법추진)\*와 관련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분야별 정책마련\*\*에 적극 노력
  - \* 사회적가치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법
  - \*\* 사회적경제 활성화('17.10월), 금융('18.2월), 인재양성(7월), 자활기업(7월), 지역공동체('19.11월), 사회적 가치('20.1월), 일자리 창출(8월) 등
- 사회적경제 초기 생태계 구축 등 활성화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관련기업과 취약계층 고용이 증가\*
  - \* 취약계층 고용(천명, '16→'18년) : (협동조합) 7.7→11.2 (사회적기업) 23.8→26.1

### ②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기업군이 현장에서 역할 수행

-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에 있어 다양한 사회경제조직 및 일부 기업군은 일종의 '좋은기업'으로 현장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은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제 창출
    - \* 그 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어업법인, 지역산림조합 등도 포함(사회적경제 관련법률안)
  - 여성·장애인·청년창업기업과 시장상인 등은 영리활동과 함께 취약계층 기회제공, 공동체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병행 이행
- 즉 일반 영리기업 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회적경제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생존·성장이 특히 중요



### ③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규제정비 부족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기업특성\* 및 규모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일반 영리기업과의 시장경쟁에서 일부 취약한 부분 존재

\* 예 : 취약계층 고용으로 생산성 저하, 기업 의사결정구조에 따른 신속성 미흡 등

- 이에 소관부처·기업유형별로 직·간접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시장 진출은 활성화되나 기업의 생존·성장 등 자생력이 아직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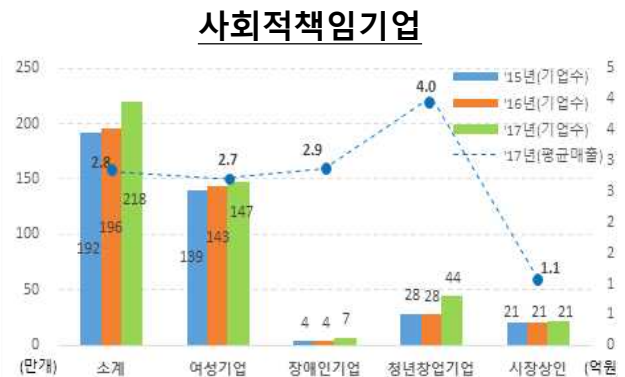
\* 평균 매출액 현황비교('17년, 억원) : (중소기업) 6.8억원,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3.6억원, (사회적책임기업-사회적경제기업 이외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2.8억원

- 또한 각종 규제·제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은 현장에서 상대적인 불만을 제기하거나 부담 토로\*

\* 예 : 기업유형별 차이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불가, 조달진입 및 판로확보 애로, 준조세(사용료·기술료 등) 규제기준·절차 애로, 행정부담 및 지원부족 등



\* 자료: 기업군별 실태조사 재가공



\* 자료: 통계청 및 기업군별 실태조사 재가공

### ④ 현실에 부합토록 규제·제도·정책 일괄정비 및 성장기반 조성

- 다양한 기업형태를 고려하여 세부 기업유형별 맞춤 현장소통을 실시하고 현실피리 규제애로를 기업시각에서 발굴
- 공정성·포용성·합리성 관점에서 각종 규제·제도·기업환경 등을 기업친화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순응과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생존·성장지원 도모



## <(참고)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현장 목소리>

⇒ 기업유형별 중기 옴부즈만 간담회 추진 및 소통(14회, '20.1~4월)

### 1. 대다수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정부노력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공감

- ☞ 정부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낀다.
- ☞ 와 정부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굉장히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좋아졌다.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2. 어려운 경영현실 및 기업특성 등에 따른 현장애로로 생존위협

- ☞ 사회적기업이라서 비영리와 영리 중간에 있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활동 자체가 영리냐 비영리인지를 따지지 않고 조직 자체가 영리냐, 비영리냐를 따져서 막고 있다
- ☞ 협동조합이 실제 살아남아서 조합원들이 월 200만원 이상 수익을 가지고 가는 협동조합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힘들다. 신선한 아이템이 없어요
- ☞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10년의 역사가 있지만 자활기업은 현 정부 들어 수면 위에 떠오르기 시작했고 조금 알려져서 자활기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진다
- ☞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권이나 혹은 가산점 같은 것을 부여하지 않는 한 정부나 산하기관 공모사업에 진입하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적도 없고 최저가입찰제를 극복할 수 없다

### 3. 자립 · 연대 및 성장을 이끄는 정부정책 및 지원 등에 대하여 불만

- ☞ 협동조합도 초기에는 잘 배려하는게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내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 주류 시장과 같이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성장지원을 하는 트랙이 없다
- ☞ 기존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조성이 미진하다
- ☞ 예전에 휠체어를 타고 일하는 장애인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은 두 손은 멀쩡하고 집중력도 더 좋아서 거기를 통해서 제품을 양산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정보망이 부족해선지 그런지 관련기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



## Ⅱ. 추진방향

◆ (발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만을 대상으로 현장소통\* 등을 실시하여 규제애로 발굴(240건) 및 처리\*\*

\* 현장소통 간담회('20.1~4월), 협·단체 애로청취 및 지자체·공공기관 협업발굴

\*\* 옴부즈만이 대안을 마련하고 소관기관과 적극협업(5~8월), 파급력이 높은 주요과제 우선발표

◆ (개선) 사회적경제기업 14건, 장애인기업 8건 등\* 기업현장 핵심 규제 59건(4대 분야)을 일괄정비\*\*하여 경영부담 완화

\* 그 외 청년창업기업(7건), 기업공동(6건), 협동조합(5건), 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 책임기업(각 4건), 시장상인(3건), 여성기업(2건), 자활기업·농어업경영체(각 1건)

\*\* 중기부(13건), 행안부(13건), 고용부·지자체(각 6건), 방사청(5건), 기재부(4건), 조달청(3건), 국방부·복지부(각 2건), 공정위·국토부·문체부·환경부·상의(각 1건)

### 추진 목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통해 생존·성장지원

### 4대 중점 추진과제

규제  
공정화

#### 1.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12건)

· 기업별 인정범위 확대, 특성별 규제맞춤 정비 등

규제  
포용화

#### 2.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 (24건)

· 우선구매 대상확대, 신인도 가점부여 등

규제  
합리화

#### 3.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 (12건)

· 문화상품 규제개선, 수수료 경감, 서류 간소화 등

제도·정책  
현실화

#### 4.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 (11건)

· 통합시스템 개선, 운영체계 보완, 지원강화 등



### Ⅲ. 중점 추진과제

#### 1.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12건)

◆ 기업간 규제 형평성을 높이고 기업특성에 따른 규제기준 정비

##### 1-1. 기업형태 등에 따른 차별 완화 및 참여확대 (6건)

⇒ 사회적 가치를 동일하게 추구하나 차별발생, 기업불만

##### ① 여성기업 인정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여성기업

- (현황) 여성기업으로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기업과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일반)\*은 인정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 ①조합원 과반수 여성, ②과반수 여성출자, ③여성이사장, ④이사 과반수 여성

[사례] '000 협동조합'은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 부모들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여성조합원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여성기업 인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타 여성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개선) 여성이 경영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여성기업 지위 부여, 여성기업 지원사업 참여 허용

☞ 행정조치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1.하/중기부)

##### ② 장애인기업 인정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장애인기업

- (현황)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기업과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일반)\*은 인정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 ①조합원 과반수 장애인, ②과반수 장애인출자, ③장애인이사장, ④장애인고용 30%이상(소기업은 제외)

- (개선)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에 장애인기업 지위 부여 및 지원사업 참여 허용

☞ 행정조치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21.하/중기부)



### ③ 전통시장 상인조직 유형에 협동조합 추가<sup>시장상인</sup>

- (현황) 전통시장의 상인조직을 상인회, 상인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상인이 설립한 법인만으로 한정
- (개선) 협동조합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 자격 또는 설립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인조직으로 인정하여 차별·불편 완화  
☞ 행정조치 :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21.상/중기부)

### ④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이중협동조합연합회 추가<sup>사회적기업</sup>

- (현황)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하나, 신규도입('20.3월)된 이중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기업 인증불가  
\*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타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한 연합회
- (개선)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에 이중협동조합연합회 추가  
☞ 행정조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21.하/고용부)

### ⑤ 안전교육 관련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참여허용<sup>사회적경제기업</sup>

- (현황) 안전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원대상을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여 일부 기업은 법인격에 따른 차별 발생
- (개선) 지원대상을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여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허용  
☞ 행정조치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21.하/행안부)

### ⑥ 청년 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요건 유연화<sup>마을기업</sup>

- (현황) 청년 마을기업\*은 출자자의 50% 이상을 청년으로 요구하여 청년이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 해당요건을 득하기 어려운 실정  
\* (도입) '18년, (현황) '20년 신규 마을기업의 14.5%, 전체 마을기업의 2.3%
- (개선) 지역별 인구분포나 여건을 반영하여 청년 출자자 비율을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청년 마을기업 활성화 도모  
☞ 행정조치 : 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개정('21.하/행안부)



## 1-2. 기업특성별 자생력 제고 [6건]

⇒ 기업특성에 맞지 않은 규제·지원 기준으로 기업부담

### 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방식 개선 사회적기업

- (현황)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매출성과(10점)\* 심사기준이 동일하여 예비기업은 지원사업 선정에 부담토로  
\* 해당기업 매출액을 동일업종 매출액 분포와 비교하여 2~10점 차등부여
- (개선)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하고 예비·인증기업 중 특정기업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실시  
☞ 행정조치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개선('21.상/고용부)

### ② 사회적경제기업 신용평가시 매출실적 부담완화 사회적경제기업

- (현황)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목적사업 수행특성상 신용등급이 낮아 기업가치가 부정적으로 왜곡되어 자금부담 초래

[사례] 신용도를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이 아직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며, 사회적기업의 기본취지는 취약계층한테 혜택이 가게 만드는 것으로 수익과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게 우선목표가 아니라고 불만

- (개선) 지역신보 평가모형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비재무적 요소(기업철학, 사회적가치지향, 사회환원 등) 판단기준 도입, 재정부담 완화  
☞ 행정조치 : 지역신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평가기준 개정('20.하/중기부)

### ③ 장애인기업 전용 특례보증상품 개발·운영 장애인기업

- (현황)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우대방안\*이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여성기업 등과 달리 전용 특례보증상품은 미운용  
\* 영업점별 장애인 전담자 지정, 보증료율 0.3% 감면 등
- (개선) 여성보증료율·보증비율 등을 우대한 장애인기업 맞춤형 전용 특례보증상품 마련·시행  
☞ 행정조치 : 장애인기업 전용보증상품 도입('20.하/중기부·기보)



#### 4 장애인 복지시설장의 자격기준 합리화 장애인기업

- (현황)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자격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아 장애인 복지관련 전문성, 감수성 등이 부족
  - \* 시설장 : 사회복지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3년 이상 종사자 등
- (개선) 시설장이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장애인복지사업 3년 이상 종사자로 개정
  - ☞ 행정조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하/복지부)

#### 5 청년몰 입주 청년상인의 자부담금 경감 시장상인

- (현황) 청년몰 입주 청년상인 자부담금\*이 총사업비의 10%에 달해 부담이 크며, 수제화 등 일부 업종은 자부담금 인정항목이 협소
  - \* 인정 항목 : 인테리어비 및 기타 창업비용으로 (일반음식판매점) 냉장고, 에어컨, 조리대, (빵집) 오븐, 조리대, (커피숍) 커피머신, 판매대 등, (제작소) 진열대, 가마, 물레 등임
- [사례] 인건비 위주의 수제화 공방 청년상인 A씨는 자부담금을 맞추지 못해 시장 운영주체가 영수증을 마련해 주거나 직접 영수증을 구매하기도 한다고 불만토로
- (개선) 청년상인 부담 경감을 위해 실태조사·의견수렴을 거쳐 자부담을 완화 등 개선방안 마련
  - ☞ 행정조치 : 청년상인 육성사업 개선방안 마련('21.하/중기부)

#### 6 소규모 농업법인의 폐기물 재활용 처리절차 간소화 농어업경영체

- (현황) 개인은 신고만 거치면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 재활용이 가능하나, 법인은 대상에서 원천 배제\*\*
  - \*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
  - \*\* 다만 법인은 타인의 폐기물을 위탁받아 1일 재활용용량 10톤 미만으로 비료 또는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에 한해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고 재활용 가능
- [사례] 농산물 소포장센터를 운영하는 (주)000농산은 식물성 잔재물을 법인 소유 농경지의 퇴비로 재활용코자 하였으나 법인이라는 이유로 신청불가하여 포기
- (개선) 일정 규모(1일 재활용 용량 10톤) 미만의 농업법인에 대해 폐기물 처리신고를 거쳐 재활용(퇴비 또는 가축 먹이)이 가능토록 개선
  - ☞ 행정조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하/환경부)



## 2.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 (24건)

◆ 조달규제 개선을 통해 판로문턱을 낮춰 기업의 포용성장 유도

### 2-1. 우선구매 확대 등 조달진입 촉진 (4건)

⇒ 사회적 가치 조달우대 제도가 원활히 기능토록 규제개선

#### 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격적정성 판단기준 합리화 기업공통

- (현황) 사회적기업 등과 1인 견적에 의한 지자체 수의계약\*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토록 하여 수의계약 활성화 저해\*\*

\* 사회적·마을·자활·여성·장애인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

\*\* 거래실례가격, 통계기관 조사공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검토한 후 최저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계약담당자의 수의계약 실무적용에 걸림돌

[사례] ○○시에서 사회적기업이 5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건에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담당자가 견적 타당성에 부담을 느껴 계약체결이 지연되었고, 결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2인 견적계약으로 타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개선) 가격적정성 판단시 최저가격 적용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법령내용('가장 경제적인 가격')을 삭제하여 계약불편·부담 완화

☞ 행정조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20.하/행안부)

#### ② 사회적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법제화 추진 사회적기업

- (현황) 공공기관에 대해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구매비율\*이 설정되지 않아 구매 이행력 부족\*\*

\* 장애인기업(전체의 1%), 여성기업(공사 3%, 물품·용역 5%), 인증신제품(해당품목 구매액의 20%), 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 물품의 15%),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우선구매 단순권고)

\*\* (공공기관 평가목표) 3%, (지방공기업 평가목표) 1%, (구매실적) '18년, 약 1조원

- (개선) 사회적기업 생산제품(용역·공사 포함)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무구매비율 법제화 및 구매촉진

☞ 행정조치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법 제정추진('20.하~/고용부)



### ③ 마을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근거마련 마을기업

- (현황)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처럼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됨에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부재로 판로 확보에 애로
  - \* 마을기업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정의규정은 있으나 일반적 마을기업에 대한 개별법 부재
- (개선) 마을기업 생산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근거 마련 추진
  - ☞ 행정조치 : 마을기업 육성지원 법령발의 및 제정추진('20.하~/행안부)

### ④ 창업기업 등 지자체 시설용역 실적인정기간 확대 청년창업기업

- (현황) 조달청 조달\*과 달리, 지자체 시설용역은 기업업력·규모에 대한 고려없이 **확일적으로 실적인정기간 부여\*\***, 관련기업 부담
  - \* 시설분야 일반용역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실적인정기간을 5년→7년으로 확대('20.4월)
  - \*\* (3년) 서울·부산·경기·인천·울산·세종·강원·충북·경남·제주, (5년) 대전·대구·광주·전북·전남
- (개선) 일정금액 이상 시설분야 일반용역 지자체 입찰시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실적인정기간 확대(예 : 5년→7년)
  - ☞ 행정조치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21.상/17개 광역지자체)

## 2-2. 조달제도별 기업 신인도 부여 확대 (20건)

⇒ 조달제도별 신인도가 일부 기업군에 대해 누락, 기업불만

### ① 소규모 물품구매시 사회적경제기업 신인도 가점 부여 사회적경제기업

- (현황) 2억미만 물품(중기간 경쟁제품 포함) 조달청 조달시 2억이상 물품계약 등\*과 달리 사회적경제기업에 신인도\*\* 가점 미부여
  - \* 사회적경제기업 신인도 부여 주요현황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규모제한 없음), 지방 물품계약(규모제한 없음), 2억원 이상 조달청 물품계약 등
  - \*\* 신인도 : 품질관리 등에 있어, 믿고 인정하여 의심하지 않는 정도
- (개선) 2억 미만 물품 조달청 조달시에도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의 경우 신인도 가점 부여
  - ☞ 행정조치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21.상/조달청)



## ② 중기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부여확대 사회적경제기업

- (현황) 중기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사회적기업에는 신인도 가점(0.5점)이 부여되나 타 사회적경제기업에는 미부여

\*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대·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212개 제품)

- (개선) 사회적기업과 같이, 신인도 가점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도 부여

☞ 행정조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개정('21.상/중기부)

## ③ 방사청 물품구매 입찰시 사회적 가치 신인도 가점 도입 사회적경제기업

- (현황) 방위사업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제조입찰 외 구매입찰은 사회적 가치 구현 관련 신인도 가점 미부여

- (개선) 제조입찰과 같이 구매입찰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해 신인도 가점부여

☞ 행정조치 : 물품 적격심사기준 개정('20.하/방사청)

## ④ 지자체 물품조달시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신인도 배점확대 장애인기업

- (현황) 지방계약법령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장애인고용기업 우대(신인도 항목 및 배점) 수준\*이 국가계약법령\*\*에 비해 미흡

\* 지방계약은 최대 1점이나 국가계약은 '약자기업 지원(1.5점)'과 '고용창출(2점)' 등 최대 3.5점

- (개선) 지자체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장애인고용우수기업 가점을 별도의 '고용창출' 항목에서 추가 부여(최대 2점)

☞ 행정조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20.하/행안부)

## ⑤ 지자체 물품조달시 창업기업 공동수급체 신인도 가점 부여 청년창업기업

- (현황) 지자체 등 지방계약 신인도 가점대상\*에 국가계약과 달리 창업기업 공동수급체가 미포함\*되어 청년창업기업 납품애로

\* 지방계약법령은 소기업(소상공인)·지역업체 공동수급체만 허용



○ (개선) 지방계약 물품조달 적격심사시 창업기업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 부여

☞ 행정조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20.하/행안부)

별첨 1

<신인도 가점관련 기타 개선과제>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기한)
01	군수물품조달시 장애인고용우수기업에 신인도 부여 <small>장애인기업</small>	<b>개선</b>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일정 수준 창출한 경우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점 부여 * 행정조치 : 물품 적격심사기준 개정	방사청 ('20.하)
02 ~ 03	청년고용 우수기업 신인도 가점 부여 <small>청년창업기업</small>	<b>개선</b> 물품 적격심사시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 부여 * 행정조치 :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물품 적격심사 기준	국방부 방사청 ('20.하)
04	취약계층 고용우수기업 신인도 가점 부여 <small>사회적책임기업</small>	<b>개선</b> 물품 적격심사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 부여 * 행정조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중기부 ('21.상)
05	지방계약 취약계층 고용우수기업 신인도 부여 검토추진 <small>사회적책임기업</small>	<b>개선</b> 지방계약 물품구매시 취약계층 고용여부 확인절차 마련 등 우수기업 신인도 부여 검토추진 * 행정조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행안부 ('21.하)
06	일반용역 취약계층 고용우수기업 신인도 부여 검토추진 <small>사회적책임기업</small>	<b>개선</b> 일반용역 조달시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전문 기관 확인 발급방안에 따라 신인도 부여 검토추진 * 행정조치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조달청 ('21.하)
07	지자체 일반용역 입찰시 사회적경제기업 가점 확대 <small>사회적경제기업</small>	<b>개선</b> 지자체 일반용역 입찰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부여 확대 * 행정조치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강원.경북. 대구.부산.세종.제주.충북)	광역 지자체 ('21.상)
08	벤처나라 조달상품 추천시 사회적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우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small>기업진흥</small>	<b>개선</b> 벤처나라 등록제품 추천기관 평가시 사회적경제기업, 여성·장애인 등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부여를 위하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공 * 행정조치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관리 규정 개정	조달청 ('20.하)
09 ~ 10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신인도 부여 <small>장애인기업</small>	<b>개선</b>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점 부여 * 행정조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 적격심사기준 개정	행안부 방사청 ('20.하)
11	지자체 물품조달시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신인도 부여 <small>여성기업</small>	<b>개선</b>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에 대한 지방계약 신인도 배점을 국가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조정 * 행정조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행안부 ('20.하)
12 ~ 13	군수분야 물품입찰시 실적평가시 창업기업 기본가점제 도입 <small>청년창업기업</small>	<b>개선</b> 군수 분야 물품 적격심사기준의 실적평가시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기본가점제 반영 * 행정조치 :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물품 적격심사기준 개정	국방부 방사청 ('20.하)
14	중기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시 창업기업 공동수급체 우대 <small>청년창업기업</small>	<b>개선</b> 중기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의 신인도 가점 대상에 창업기업 공동수급체 추가 * 행정조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중기부 ('21.상)
15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조달가점 부여 <small>기업공통</small>	<b>개선</b>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에 신인도 가점대상에 포함하여 출소자 등 고용촉진 및 사회정착 기대 * 행정조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행안부 ('20.하)



### 3.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 (12건)

◆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부담·불편 경감

#### 3-1. 규제현실화 및 비용·부담 경감 (6건)

⇒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감안하여 규제개선 및 경영부담 완화

##### ①~② 국·공립박물관 문화상품 선정시 사회적 가치 평가반영<sup>기업공통</sup>

- (현황) 국·공립박물관 문화상품은 공모평가나 자체기준 등\*으로 선정하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관련상품 입점이 어려움

\* (직영 국립) 우수성, 적합성, 판매성, 수수료 등으로 공모평가 (위탁 및 공립) 자체 기준 등

\*\* 해외 국립박물관은 재활용상품 등 사회적 가치 관련상품도 문화상품으로 정의·판매 실시

[사례] B시는 박물관마다 다르지만 위탁운영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공모전 수상을 해야 입점할 수 있다면서, 일부 박물관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팔리고 있다고 불만 제기

- (개선) 국립박물관 문화상품 공모평가지 사회적 가치\* 항목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국립박물관 사회적 가치 평가반영 확산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장애인·청년창업기업 생산제품 등

☞ 행정조치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상품관리규칙 개정('20.8월/문체부) 및 국립박물관 운영규정 및 지침 개정·반영 확산('21.상/20개 지자체)

##### ③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표준코드 회비납부 부담완화<sup>사회적경제기업</sup>

- (현황) 유통표준코드\* 연회비 산출시 표준코드 사용제품이 아닌 전체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농어업경영체·사회적기업 등 부담상당

\* 제품 유통·판매를 위해 부착하는 바코드로 회원가입 및 연회비 납부가 필수이며 연회비는 연간매출액 기준 12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부과(3년, 15만원~3천만원)

[사례] 농업법인 C사는 돼지가공품 외 체험관광, 식당운영 등으로 연 100억원 매출을 하는데, 이중 바코드는 돼지가공제품(매출비중 40%)에만 사용한다고 회비납부에 불만 토로

- (개선)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통표준코드 연회비 일부감면(약 20%)

☞ 행정조치 : 유통표준코드 회비체계 조정('21.상/대한상의)



#### ④ 연구개발성과 기술활용시 사회적 가치우대 기술료 감면 사회적경제기업

- (현황)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계없이 기술료를 일률적 부과\*\*

\* 사회적기업 등은 취약계층 문제 또는 사회적 가치를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코자 하나,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기술료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참고 : 과학기술분야는 '공공성'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술료 감면가능

- (개선) 기술개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공지원에 사용되는 경우 기술료 감면이 가능토록 법령화하고 세부 적용방안 마련

☞ 행정조치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개정('20.하/중기부)

#### ⑤ 사회적경제기업 등 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사회적경제기업

- (현황)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정책이 확산되나,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은 일부 지자체에 한정\*

\* 서울시 강남구 등에서 조례를 통해 공공 목적 광고물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시행

- (개선) 공공 목적 또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전부 또는 일부) 근거마련 및 적용

☞ 행정조치 : 옥외광고물 관련조례 개정 또는 지침마련('21.하/50개 지자체)

#### ⑥ 모태펀드 선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허용 청년창업기업

- (현황) 청년창업기업 등이 모태펀드에서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투자제한기업(기보)으로 분류되어 보증연계투자\* 유치에 제한

\* 기보가 기술에 대해 기업보증을 하고 이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투자방식(그간 3백개 기업, 3천억원 투자)

[사례] 스타트업 A사는 중기부 팁스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민간 엔젤투자사의 투자자금(모태펀드 포함)을 유치한 후, 우호지분 확대를 위해 기보의 보증연계 투자 공모를 준비하였으나 기보 내부 지침을 알게 되어 포기함

- (개선) 선 투자금액이 3억원 이하이거나 기관투자유치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기업은 추가 보증연계 후행투자 제한적 허용

☞ 행정조치 : 기술보증기금 투자업무취급요령 개정('20.하/중기부·기보)



## 3-2. 행정부담 감축 및 불편완화 (6건)

⇒ 서류제출 등 행정부담 상당 및 지원기준 현장불편 과다

### ① 사회적기업 인증 및 활동 관련 서류제출 부담완화 사회적기업

- (현황) 사회적기업은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 신청단계부터 인증 이후 제출해야 할 서류가 과다하고 복잡

[사례] 사회적기업 A사는 인증신청시 최대 10종 이상의 서류 작성·첨부에 인증 취득후 사업실적 및 현황 반기별 작성·보고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외부대행사를 활용한다고 토로

- (개선)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횟수를 축소하고 인증신청 및 제출단계에서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서류제출 부담완화

☞ 행정조치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개정('21.하/고용부)

### ②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 예산 사용항목 제한 완화 마을기업

- (현황) 예비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집행이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 경상적 경비로만 사용이 허용되는 등 비목별 사용제한 과다

\*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마을기업을 시도에서 발굴·지원 (최대 1천만원)한 뒤, 지자체·행안부 심사를 거쳐 마을기업으로 육성

- (개선) 예비마을기업에 대하여도 신규마을기업 수준(사업비의 20%)으로 재료비 사용 허용, 기업자율성 확대

☞ 행정조치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개정('21.상/행안부)

### ③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부담 완화 사회적경제기업

- (현황) 공공임대주택 제공 공간에 입주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 및 업종이 제한\*\*되어 다양한 사회적기업 성장에 애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의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등

\*\* 사업수행주체인 LH공사에서 근린상가 충돌가능성이 있는 업종 등을 제한

[사례] 문구·팬시류 등을 판매하는 A 사회적기업은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B임대단지 내 상가에 입점을 희망하였으나, 문의결과 단지 내 상가에 입점 가능성이 높은 문구점과의 업종충돌 소지로 인해 신청이 어렵다고 안내를 받음



- (개선) 입주가능 제한업종을 '업종 충돌가능성이 높은'에서 '기존 상가내 운영중인' 업종으로 완화하고 입주범위를 명확화\*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후 사회적경제기업이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지침개정

☞ 행정조치 : 사회적기업 입주공간 운영지침 개정('20.하/LH공사)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21.하/국토부)

#### 4 청년몰 입점대상자에 대한 합숙교육 운영 개선 시장상인

- (현황) 청년몰 입점대상자에 대한 필수교육이 합숙으로 진행되어 비정규직 등 교육일정을 내기 어려운 일부 대상자가 불참·탈락

[사례] 청년몰 입점 희망자 중 예술을 하는 젊은 청년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근로중으로, 면접 후 급박하게 교육대상자로 선정, 3일간 합숙교육 참여 연락을 받았지만 여건상 일을 그만둘 수 없어 합숙교육에 불참한 후 탈락

- (개선) 교육생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일정을 확정하고 온라인으로 대체가능한 교육내용은 비합숙 온라인 교육 시행

☞ 행정조치 : 온라인 교육시행 등 교육운영 개선('21.9월/중기부)

#### 5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기업 물품 관리기준 현실화 마을기업

- (현황) 마을기업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처분을 중요 재산 구분 없이 일괄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마을기업 부담 상당

\* 보조금관리법에는 부동산 등 중요재산에 한해서만 처분을 제한

- (개선) 보조금 관련법령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만 처분 제한 및 관리 실시

☞ 행정조치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개정('21.상/행안부)

#### 6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서 첨부서류 간소화 협동조합

- (현황)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임원정보로 결격사유 조희가 가능함에도 불필요한 임원이력서와 사진제출을 요구

- (개선) 협동조합 임원명부 서류에 임원이력서 및 사진 제출삭제

☞ 행정조치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하/기재부)



## 4.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 (11건)

◆ 기업의 성장기반인 시스템, 체계를 개편·보완하고 지원강화

### 4-1.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활성화 기반 조성 (5건)

⇒ 통합시스템, 운영체계 및 우선출자 등 기반조성 미흡

#### ①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등 정보확인 통합시스템 마련 사회적경제기업

- (현황) 사회적경제기업 인증확인, 서류발급, 세부품목 파악 등에 대한 일원화된 창구가 없어\* 부처별 개별확인 및 편의성 저하\*\*

\* 사회적기업(고용부) : 사회적기업진흥원(인증기업),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예비기업)  
사회적협동조합(기재부) : COOP협동조합 사이트, 품목별 검색 곤란  
마을기업(행안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마을기업 운영현황 확인  
자활기업(복지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별도 개별문의

\*\* 다만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고용부, estore36.5+)이 있어 일부품목 검색은 가능하나 타 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 부재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목록 미반영

[사례] C공단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중 사무용품 또는 위생용품 등 소모품 구매는 용이한 반면, 정작 공단에서 필요한 오페수처리장 운영 기계장치(펌프, 탈수기 등)를 구매하고 싶어도 해당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고 불만

- (개선)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개편·보완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증여부를 전산으로 확인가능토록 우선개선

☞ 행정조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개편('20.하/고용부)

####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온·오프라인 홍보·이용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 (현황) 사회적경제기업 상품판매 등을 종합지원하는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20.1월) 중이나 홍보·이용 부족
- (개선) 구글·페이스북·유튜브 온라인 광고, 공공기관 연계 기획전 및 구매설명회, 교육 등\* 온·오프라인 홍보강화 및 이용 활성화

☞ 행정조치 : 공공기관 연계 기획전('20.6월), 온라인 광고·기획전(7월), 제품 카탈로그 제작·배포(9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온라인 교육 및 홍보(11월) 등('20.하/고용부)



### ③ 지방공기업 경영시 좋은기업 생산품 구매 및 지원지표 추가 기업공통

- (현황)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및 지원을 유도하나 마을·자활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미포함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중증장애인 생산품·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과 청년·여성 채용비율을 평가하나 마을·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생산품 구매실적 지표 부재
- (개선) 경영항목에 '마을·자활·예비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실적과 청년창업기업 지원실적' 추가  
☞ 행정조치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정('20.하/행안부)

### ④ 협동조합 지원기관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협동조합

- (현황) 협동조합 지원업무 재위탁기관\* 간 업무통일성이 부족하고 일부 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져 원활한 협동조합 육성에 차질  
\* 사회적기업진흥원은 동 업무를 전국 17개 민간단체에 재위탁(최대 3년 연장)
- [사례] OO소재 A 협동조합은 재위탁기관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간단한 경영애로와 조직변경(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신입직원에게 하였으나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함
- (개선) 지원기관 평가지표 및 평가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평가를 강화하고 지역·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역량편차 완화  
☞ 행정조치 : 협동조합 지원기관 관리체계 개선('20.하/기재부)

### 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우선출자 도입방안 마련 협동조합

- (현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예외적 배당이 가능한 다른 개별협동조합\*과 달리 우선출자 규정이 없어 자금조달에 애로 발생  
\* 농업·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단,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와 조합원이 자연인이 아닌 중소기업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우선출자 규정이 없음)
- (개선) 우선출자 제도에 따른 장·단점을 종합검토\*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우선출자 도입방안 마련  
\* 내부자금 조달에는 도움이 되나, 조합원 간 상부상조가 아닌 수익성 위주 운영 우려 등
- ☞ 행정조치 : 우선출자 도입방안 마련 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21.하/공정위)



## 4-2. 지원강화 등 현장애로 해소 (6건)

⇒ 지원단가 인상, 지원범위 확대 등 사회적기업 생존지원

### ① 사회적경제기업 공유재산 활용부담 완화 사회적경제기업

- (현황) 사회적경제기업은 공유재산 사용·수익시 최대 5년(연장 10년) 까지 허가가 가능하나, 짧은 계약기간\* · 사용료 일시납\*\* 등 애로

\* 공정한 기회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개입찰 및 3~5년 입주기간 설정

\*\* 사용료 분할납부가 가능(연 100만원 초과시)함에도 일부 지자체는 일시납 강제

[사례] 서울소재 A 사회적기업은 공유재산 입주시 1회 계약기간이 2년이 안되며 임대료를 1년치 선납을 하게 하는데 기업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라고 불만토로

- (개선) 지자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하는 공유재산의 최대 사용·수익 허가기간(5년) 보장 및 임대료 분할납부 확산

☞ 행정 조치 : 공유재산 사용기간 보장(193곳) 및 임대료 분할납부(233곳) 확산('20.하/지자체)

### ②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협동조합

- (현황)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에도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이 제한적\*

\* 서울자치구, 대구달서구 등 일부 지자체(31개)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지방세를 일부 감면(약 25~50%)하나 대다수 지자체는 감면혜택 부재

- (개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마련 및 확대

☞ 행정 조치 : 광역시·도 및 시·군·구세 감면 조례 개정('21.하/80개 지자체)

### ③ 돌봄서비스 바우처사업 수가 현실화 자활기업

- (현황) 장애인 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돌봄서비스 바우처 수가가 낮아 이를 운영하는 자활기업의 어려움 가중

[사례] 작년까지 가사간병과 노인돌봄 두 사업을 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실무자 1명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계속 지출했었는데, 올해는 노인돌봄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실무자 인건비 보전이 안 되는 상황임



- (개선) 기 인상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수가에 뒤이어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도 인상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추진

☞ 행정조치 :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을 위한 예산 반영('21.상/복지부)

#### 4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을 소프트웨어 분야로 확대 장애인기업

- (현황)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분야가 모형, 금형 등 제조업 분야로 한정되어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마감 등 필수 투입비용 발생

- (개선) 시제품제작지원 사업에 소프트웨어 분야 지원 포함

☞ 행정조치 : '21년 장애인기업육성사업 공고 반영('21.상/중기부)

#### 5 사회적경제기업 정부 불용품 무상양여 허용 사회적경제기업

- (현황) 정부 불용품 양여대상이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영리기업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양여곤란

\* 불용품 무상 양여는 불용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한 것임을 고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무상 양여 허용 필요

- (개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시, 이와 연계하여 「물품관리법」 상 무상양여 범위 및 단체 확대

☞ 행정조치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후 물품관리법 개정('21.하~/기재부)

#### 6 일반협동조합 유사명칭 사용제재 권고 협동조합

- (현황)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역·업종명을 포함하여 명칭을 사용토록 규정한 반면, 일반협동조합은 제한이 없어 조합간 명칭혼동

[사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OO앨범인쇄협동조합'은 인쇄설비가 없는 일반협동조합임에도 명칭에 '인쇄'가 포함되어 각종 수요기관으로부터 불필요한 문의를 받게 되어 협동조합 및 수요자 불편초래

- (개선) 일반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타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 행정조치 : 협동조합 업무지침 개정('20.하/기재부)



## IV. 향후 추진계획

### ① 규제애로 개선과제 신속조치 및 기업홍보 적극실시

- (신속조치) 금번 규제혁신 개선과제가 조기에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신속조치 및 이행점검 실시('21.상)
  - \* 국회 입법과제(법률)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입법노력을 강화하고 정부 입법·추진과제는 목표시한 내 마무리
- (기업홍보)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세부 기업유형별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알려\* 기업현장 인지도·만족도 제고
  - \* 사례별 현황·문제점, 개선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포 추진

### ② 규제애로 협의개선 및 기업군별 현장소통 지속추진

- (협의과제) 장기검토, 수용곤란 등 쟁점사항이 잔존한 과제는 추가 심층검토를 거쳐 부처협의 및 개선추진
- (기업소통)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에 대해 상시적 기업소통을 실시하여 현장의 불요불급한 규제애로 지속발굴 및 정비 노력

### ③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 (59건)

연번	추진과제	일정	소관	대상
1.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12건)				
01	여성기업 인정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21.하	중기부	여성기업
02	장애인기업 인정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21.하	중기부	장애인기업
03	전통시장 상인조직 유형에 협동조합 추가	'21.상	중기부	시장상인
04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추가	'21.상	고용부	사회적기업
연번	추진과제	일정	소관	대상



05	안전교육 관련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참여허용	'21.하	행안부	사회적 경제기업
06	청년 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요건 유연화	'21.하	행안부	마을기업
07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방식 개선	'21.상	고용부	사회적 기업
08	사회적경제기업 신용평가지 매출실적 부담완화	'20.하	중기부(지역 신보)	사회적 경제기업
09	장애인기업 전용 특례보증상품 개발·운영	'20.하	중기부(기보)	장애인 기업
10	장애인 복지시설장의 자격기준 합리화	'20.하	복지부	장애인 기업
11	청년몰 입주 청년상인의 자부담금 경감	'21.하	중기부	시장상인
12	소규모 농업법인의 폐기물 재활용 처리절차 간소화	'20.하	환경부	농어업 경영체

## 2.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 (24건)

01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격적정성 판단기준 합리화	'20.하	행안부	기업공통
02	사회적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법제화 추진	'20.하~	고용부	사회적 기업
03	마을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근거마련	'20.하~	행안부	마을기업
04	창업기업 등 지자체 시설용역 실적인정기간 확대	'21.상	광역지자체	청년 창업기업
05	소규모 물품구매시 사회적경제기업 신인도 가점 부여	'21.상	조달청	사회적 경제기업
06	중기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부여확대	'21.상	중기부	사회적 경제기업
07	방사청 물품구매 입찰시 사회적 가치 신인도 가점 도입	'20.하	방사청	사회적 경제기업
08	지자체 물품조달시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신인도 배점확대	'20.하	행안부	장애인 기업
09	지자체 물품조달시 창업기업 공동수급체 신인도 가점 부여	'20.하	행안부	청년 창업기업
10	군수물품 조달시 장애인고용우수기업에 신인도 부여	'20.하	방사청	장애인 기업
11 ~12	청년고용 우수기업 신인도 가점 부여	'20.하	국방부·방사청	청년 창업기업
13	취약계층 고용우수기업 신인도 가점 부여	'21.상	중기부	사회적 책임기업
14	지방계약 취약계층 고용우수기업 신인도 부여 검토추진	'21.하	행안부	사회적 책임기업
15	일반용역 취약계층 고용우수기업 신인도 부여 검토추진	'21.하	조달청	사회적 책임기업
16	지자체 일반용역 입찰시 사회적경제기업 가점 확대	'21.상	광역지자체	사회적 경제기업
17	벤처나라 조달상품 추천시 사회적경제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우대 가이드라인 마련	'20.하	조달청	기업공통
18 ~19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신인도 부여	'20.하	행안부·방사청	장애인 기업
20	지자체 물품조달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신인도 부여	'20.하	행안부	여성기업
<b>연번</b>	<b>추진과제</b>	<b>일정</b>	<b>소관</b>	<b>대상</b>



21 ~22	군수분야 물품입찰 실적평가지 창업기업 기본가점제 도입	'20.하	국방부·방사청	청년 창업기업
23	중기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시 창업기업 공동수급체 우대	'21.상	중기부	청년 창업기업
24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조달가점 부여	'20.하	행안부	기업공통

### 3.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 (12건)

01 ~02	국·공립박물관 문화상품 선정시 사회적 가치 평가반영	'20.8월 '21.상	문체부· 지자체	기업공통
03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표준코드 회비납부 부담완화	'21.상	대한상의	사회적 경제기업
04	연구개발성과 기술활용시 사회적 가치우대 기술료 감면	'20.하	중기부	사회적 경제기업
05	사회적경제기업 등 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21.하	광역·기초 지자체	사회적 경제기업
06	모태펀드 선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허용	'20.하	중기부(기보)	청년 창업기업
07	사회적기업 인증 및 활동 관련 서류제출 부담완화	'21.하	고용부	사회적 기업
08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 예산 사용항목 제한 완화	'21.상	행안부	마을기업
09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부담 완화	'21.하	국토부(LH공 사)	사회적 경제기업
10	청년몰 입점대상자에 대한 합숙교육 운영 개선	'20.9월	중기부	시장상인
11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기업 물품 관리기준 현실화	'21.상	행안부	마을기업
12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서 첨부서류 간소화	'20.하	기재부	협동조합

### 4.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 (11건)

01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등 정보확인 통합시스템 마련	'20.하	고용부	사회적 경제기업
0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온·오프라인 홍보·이용 활성화	'20.하	고용부	사회적 경제기업
03	지방공기업 경쟁시 좋은기업 생산품 구매 및 지원지표 추가	'21.상	행안부	기업공통
04	협동조합 지원기관 역량 및 전문성 강화	'20.하	기재부	협동조합
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우선출자 도입방안 마련	'21.하	공정위	협동조합
06	사회적경제기업 공유재산 활용부담 완화	'20.하	기초지자체	사회적 경제기업
07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21.하	광역·기초 지자체	협동조합
08	돌봄서비스 바우처사업 수가 현실화	'21.상	복지부	자활기업
09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을 소프트웨어 분야로 확대	'21.상	중기부	장애인 기업
10	사회적경제기업 정부 불용품 무상양여 허용	'21.하~	기재부	사회적 경제기업
11	일반협동조합 유사명칭 사용제재 권고	'20.하	기재부	협동조합



## 사회적 가치 확산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애로 일괄정비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보고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에 대한 맞춤형 현장소통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 ① 사회적 기업, ② 협동조합, ③ 마을기업, ④ 자활기업, ⑤ 농어업경영체, ⑥ 여성기업, ⑦ 장애인기업, ⑧ 청년창업기업, ⑨ 시장상인 등

#### 규제 공정화

#####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12건)

사회적 가치를 모두 추구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기업형태별 차별완화 및 특성별 규제개선

###### 인정범위

해당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반협동조합과 같이 여성기업·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하여 관련사업 참여 등 우대 혜택 부여(중기부)

###### 심사기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시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을 구분·심사하여 예비 사회적기업의 참여기회 확대(고용부)

#### 규제 포용화

#####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 (24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조달 우대를 위한 우선구매 및 신인도 확대 등 조달규제 개선

###### 계약절차

지자체 수의계약(1인 견적)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 체결하는 요건을 삭제, 계약부담 완화 및 우선구매 활성화(행안부)

###### 신인도

2억원 미만 소규모 물품, 중기간 경쟁제품 조달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에 대한 20개 조달 제도를 일괄 개선(신인도 가점 부여 및 낙찰 지원) (조달청 등)

#### 규제 합리화

#####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 (12건)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하여 사회적가치 추구기업의 경영·행정 부담 완화

###### 상품입점

국·공립박물관 문화상품 선정시 사회적 가치 항목 신설·가산점 부여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납품 및 입점지원(문체부·지자체)

###### 수수료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표준코드(바코드) 연회비 20% 감면(상의)

#### 제도·정책 현실화

#####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 (11건)

사회적가치 추구기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판로지원 등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세제 지원강화

###### 시스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증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가능토록 개선(고용부)

###### 공유재산

사회적경제기업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시 최대 사용기간(5년) 보장 및 임대료 분할납부 확산(지자체\_193곳/233곳)

4대분야  
핵심규제  
59건  
개선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통해 생존·성장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옴부즈만 · 관계부처 합동







---

#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2020. 12. 28.



관계부처 합동







---

#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2020. 12. 28.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I. 추진배경 .....	589
II. 새로운 대안 .....	590
III. 목표 및 추진전략 .....	592
IV. 추진방안 .....	593
1.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2.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지원 및 연계 확대	
3. 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구축	
V. 사회서비스 분야별 진출방안 .....	597
1. 돌봄(도시형)	
2. 돌봄(농촌형)	
3. 건강/의료서비스	
4. 가사지원	
5. 영/유아 돌봄	
6. 장애인 돌봄	
VI. 과제별 추진일정 .....	603



## I. 추진배경 :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한계

□ (수요측면)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서비스(돌봄, 건강관리 등) 수요 급증

- 비용증가 대비 여전히 낮은 욕구 충족률 및 서비스 사각지대 존재
  -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재정투입은 매년 증가추세이나, 대상별·주체별 분절적 정책 추진으로 자원의 효과적 결합 및 시너지 제고 실패

□ (공급측면) 민간 위주 전달체계\*로 공공성 확보 미흡

\* 사업체 현황(%): 개인사업체 57.4, 법인·단체 45.1, 국가지자체 1.9 ('19년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 격리대상에 대한 돌봄제공 등 위기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사회서비스 공급방식 필요성 대두

\* 코로나19 유행 초기 격리대상자에 대한 돌봄제공자 확보 어려움으로 가족돌봄 사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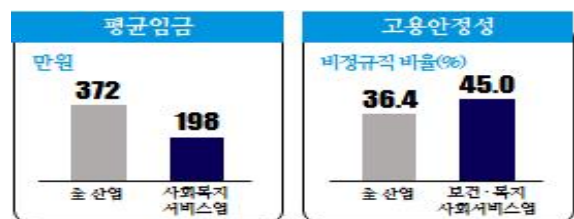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사업 종사자들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핵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필수 노동자), 열악한 처우 및 근로조건에 노출

- \* 전자바우처사업 제공인력 중 비정규직 57.1%, 시간외수당 수령 37%, 유급휴가 20.4%,
  - 사회서비스사업 종사자의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낮은 임금은 사회적 돌봄의 안정적 공급과 서비스질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

<사회서비스 예산 증가 추이 vs 만족도>



<사회서비스업 근무환경('19년)>



-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체계 미비

- 농촌지역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반면 서비스제공기관 부재
  - \* 병·의원 없는 면 단위 76%, 어린이집 없는 면 단위 37% (KREI, 2019)
  - \* 귀농귀촌의 저해요인이 되어 국가 균형발전에도 악영향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한계 극복을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구조적 변경 필요



## II. 새로운 대안: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공급 활성화

◆ 사회적경제조직은 국가와 시장의 경계영역에서 '연대와 협력', '사회적 가치 추구' 등 사회적경제 기본개념에 입각한 서비스 제공 → 기존 사회서비스 한계 극복

### □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장점

- (공공성 확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영리성 배제, 사회적가치 지향
- (사각지대 해소) 지역자원의 원활한 조달, 공동체 욕구 파악 용이
- (맞춤형 서비스) 수요자가 직접 서비스 디자인(다중이해관계자 사회적협동조합)
- (품질제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개인사업체가 할 수 없는 규모화 가능
  - \*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종사자 규모 : 평균 37.8명 / 프랑스 24.3명
- (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친밀도 기반 안정적 서비스 제공 가능
  - \* 돌봄서비스의 특성상 종전 교류 없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 곤란
  - \* 생협의 돌봄서비스 제공 사례 → 기존 조합원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에 기반
- (양질의 일자리) 여성·취약계층이 다수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 \* 사회적기업 전체 근로자 28,168명 중 여성 18,182명(64.6%)(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 \*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일자리가 시장경제 일자리보다 임금수준, 근속장려제도, 4대 보험 가입률, 일자리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방안 연구, 강현주 2015)

	월임금 100만원 이상 비율	근속장려제도	4대보험 가입률	일자리만족도
시장경제	23.5%	37.5%	78.4~83.7%	3.24점
사회적경제	39.5%	83.3%	91.6~95.7%	3.52점

⇒ 다양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비중은 전체 6% 내외에 불과(바우처 사업, '19.12), 특히 돌봄분야는 참여비율 매우 저조

\* (佛) 사회적경제가 전체 사회서비스 공급의 42%, (伊) 사회적기업 60%가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분야별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구분	노인 돌봄		영유아 돌봄			장애인		건강/의료	가사지원
	장기 요양	맞춤형 돌봄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활동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	의료사협	간병 방문지원
개소수	234 / 25,030	20 / 647	61 / 37,589	19 / 4,207	4 / 101	47 / 1,122	98 / 651	24개소 조합원	64 / 466
점유율	0.9%	3%	0.16%	0.4%	4%	4.2%	15%	48,596명	13.7%



##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미흡 원인 분석

- 기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이 일자리 수 위주 접근(바우처 등)으로 불안정 노동을 구조화
  - 바우처 제공기관 등록제('12) 시행이후 영세화, 영리화 경향\*
    - \* 바우처 사업 제공인력 고용형태 : 비정규직 57%, 월평균 보수 147만원('19)
  - 평가는 형식적·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체계적 질관리 미흡
    -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시 전체 제공기관의 약 40%에 대해서만 현장평가 진행
- 고착화된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전달체계 또는 시장에 진입한 제공기관들에 유리하여 후발적으로 진입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진입장벽으로 작용
    - \*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지역 기반 정책 설계시 지역내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미흡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참여율 : 장기요양 0.8%, 바우처 3.6%, 장애인 활동지원 4.2%)
-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 사례 부족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인지도 문제
  -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 (현장의견)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인식

☞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는

- ① 외부·환경적 요소(저출산 고령사회, 포스트 코로나, 국가재정 한계),
- ② 내부·주체적 요소(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및 경험 등)를 보여준 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수요자(국민) 및 공급자(정부)가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체제 구축 필요



### Ⅲ.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사회적경제형 사회서비스 모델**  
정립

#### 추진전략

- ① 사회서비스 문제해결 방식 전환
  - 사회적경제의 창의성 활용 + 사회서비스 제공주체의 다원화
    - ▶ 공동체 문제는 연대와 협력을 통한 주민참여에 의해 해결
    - ▶ 서비스 기획·집행·평가까지 사회적경제 참여 →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자화
- ②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
  - 서비스 융합 + 통합 커뮤니티 케어
    - ▶ 복합 공급조직 육성, 지역내 사회서비스 자원간 연계(사경조직이 Organizer 역할)
- ③ 중앙-지방-지역사회간 협업체계 구축
  - 농촌 등 지역여건이 반영된 사회서비스 제공구조 마련

#### 추진방안

- ①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 주민참여형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 기존 정책과의 연계 강화
  - 농촌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제공      ■ 자활영역과 협력 확대
- ②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지원 및 연계 확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 사회서비스 분야 컨소시엄 구축 지원
  -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전환 지원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평가체계 개선
- ③ 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구축
  - 지역 정책 수립과정 참여 강화      ■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인재양성 및 인력조달      ■ 소셜벤처 등 IT활용 사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 진출방안

#### 6대 시그니처 사업 추진

- ① 돌봄(도시형) : 사회적경제형·융합형 노인돌봄사업 추진
- ② 돌봄(농촌형) : 농협의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 확대
- ③ 건강의료 : 의료사협을 통한 종합적·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④ 가사지원 : 가사서비스의 新사회서비스화
- ⑤ 영·유아 돌봄 :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제공기관 확대
- ⑥ 장애인 돌봄 :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수단계에 걸친 지원



## Ⅳ. 추진방안

### ①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 ○ 주민참여형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 근거리 생활지역내 주민조합 구성을 통해 지역내 공적 돌봄 공백 (저녁, 휴일 등) 등 사회서비스 수요 대응 및 유휴인력 일자리 창출

▶ (사례) 주민참여형 돌봄조합(복지부) \* 6개 지자체 시범사업중

- ▶ 공적 돌봄 서비스 틈새 제공기관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 양성, 지역 유휴 일자리 창출
- ▶ (돌봄대상)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서비스 인력) 지역거주 돌봄조합원

- 다양한 성공사례 발굴 및 표준모델 개발·확산을 통해 사업지역 확대, 신규 조직 육성 및 조직화 지원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 ○ 농어촌 지역 특수성 반영을 위한 농촌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제공

\* 돌봄이 필요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돌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면지역 농업인 14만명 추산 (KREI, 2020)

- 농촌 공간계획 수립시 사회서비스 공급방안을 필수계획으로 추가
- 읍·면 단위 돌봄협의체\* 구성, 읍·면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주간 보호센터 등)에 돌봄 서비스 시설 배치 및 플랫폼 역할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시범 운영('21년 2개소),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향후 평가를 거쳐 전국적 확대 도입 추진

- 농협, 수협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제공자 역할 강화
- 사회적 농장을 복지자원 통합관리시스템상 돌봄자원으로 등록, 장애인·노인 등 대상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또는 협력기관)으로 연계·활용
- 사회적 농장을 민간위탁훈련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사회적 농업을 활용하여 농식품 분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기회 마련

\* 장애인 직업재활실시기관 훈련과정으로 선정된 경우 훈련비 및 참여훈련생 수당 지원(고용부)



## ○ 자활-사회적경제 간 연계 강화

- (자활기업) 돌봄 서비스 자활기업 등 사회서비스 분야 자활기업 시설 투자·법인 설립 등 규모화 지원

### < 사회서비스 분야 자활기업 규모화 지원방안 >

- ▲ 중앙자활기금으로 사회서비스분야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계속)
- ▲ 지역자활기금으로 자활기업 기계설비비 시설보강비 지원 홍보 규모화 컨설팅 등 지원 독려(계속)
- ▲ 근로자 인건비 한시적 지원(계속)
- ▲ 「사회서비스 분야 자활기업 구매율」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계속)

※ (지역자활기금 활성화) 중앙자활기금 사용시 지역자활기금 1:1 매칭 조건부 지원, 사회서비스 자활기업 지원방안 공문 발송 등 지역자활기금 사용 독려

※ (선도사례 발굴)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돌봄 서비스 제공) 전체 529명 중 취약계층 327명 채용, 매출 95억('17년)

- (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사업단 간 연계 활성화, 지역 사회적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 추진('23년까지 22→84개소 전환 목표)\*\*

\* '20년 내일키움 일자리 통해 광역자활센터-사회적경제조직 협력기반 구축

\*\*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자활개발원·광역자활센터를 통한 사업개발 및 네트워크 비용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고용촉진, 다양한 지역특화사업 수행 여건 조성 도모

## ○ 지역사회통합돌봄, 사회서비스원 등 기존 정책과의 연계 강화

- (통합돌봄) 참여중인 사회적경제조직\* 사례를 공유·확산하고, 향후 사업 확대시 사회적경제조직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지침 등 마련

\* 지역 자체 공모 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20년 14개 지자체, 42개 조직 참여)

- (사회서비스원) 지역거점 돌봄기관(사회서비스원)과 해당지역 사회적경제기업간 MOU\*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공적 돌봄기능 강화\*\*

\* 사회서비스원과 협력체계 구축, 직원교육, 매뉴얼 공동개발 등 추진(정보공유)

\*\* (예) 감염병 위기상황처럼 민간이 서비스 수행 곤란시, 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경험 인력 투입 → 위기상황에도 돌봄 서비스 공급 유지 가능



## ②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지원 및 연계 확대

### ○ 사회서비스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 자활기업,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등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확대

\* (지정현황) '17년 6개 → '18년 10개 → '19년 40개 → '20년 47개 기업 지정

### ○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전환 지원

-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을 원할 때 필요한 컨설팅 등 지원 실시

지역아동센터	개인시설 중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 또는 전환 예정인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전환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중 공모·심사로 선정된 곳에 운영비 인센티브 지원중('20년, 150개소)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모델 검토를 위한「유형다변화 지역자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모델 연구」(~20.12) 중으로, <b>지역자활센터 자율성확대·사회적경제 영역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b>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진입을 희망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b>맞춤형 지원체계* 구축</b> * 행정관리, 지침 내용 등 교육 → 지역별 시범사업 연계 → 수행기관 선정 지원

### ○ 사회서비스 분야 자원 연계·협력 확대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경제조직을 연계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 개발·확산**

\*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 시범사업 10개 지자체에서 실시 중

-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간 연계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빈틈없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가능

###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평가체계 개선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기준에 **사회적가치**(인권, 사회통합, 상생, 지역경제, 공동체, 참여 등) 기준을 반영하여 사회적 책임 강조



### ③ 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구축

-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과정 참여 확대
  - 지역 사회서비스 의제 발굴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지역보장협의체 (대표 또는 실무)에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및 실무분과 설치 추진
    - \* 담당부서가 요청할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및 실무분과 설치 등 적극 협조(2021년 사업안내 개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및 실무분과 운영 실적을 지역사회복지사업평가(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에 반영, 우수사례 발굴·전파
-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전국단위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협의체 구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 강화방안 모색
    - \*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의료사협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外 사회적금융 관련 기관, 교육/컨설팅 기관, 중간지원조직도 참여
  - 기업 CSR 부서, 종교계 등과 협력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추진
- 인재양성 및 인력조달
  - 사회적기업진흥원\*내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인식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강화
    - \* 전국 3개 운영기관에서 창업입문과정 교육중(사회서비스 포함)이며, 향후 여러 사회적경제 분야로 교육과정 확대 검토
  - 사회적경제조직 내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연구 및 매뉴얼 발간 등 추진(업종별 연합회와 협력)
  -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 자원봉사 수요처 정보란에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정보 추가
- 소셜벤처 등 IT 활용 사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 사회서비스 관련 플랫폼 운영\* 등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 지원 검토
    - \* 째깍악어 : 놀이부터 특기교육까지 분야별 돌봄 교사 매칭 앱(예비사회적기업)



## V. 사회서비스 분야별 진출 방안(6대 시그니처 사업 추진)

- (핵심사업 도출 원칙)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에 선택과 집중 + 사회적경제를 활용하여 서비스 향상이 가능한 분야 = 자생력 있는 사업모델 도출

\* 스웨덴은 돌봄 및 재활, 영국은 주택과 문화, 프랑스는 환경과 먹거리, 이탈리아는 돌봄과 교육부문을 사회적경제조직의 전략사업군으로 육성하여 성공

### 1] 돌봄(도시형) : 사회적경제형 · 융합형 노인 돌봄사업 추진

- (필요성) 주거+복지+건강+의료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적 돌봄 서비스 제공
  - 사회적경제조직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별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공공-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과 연계하여 자원활용, 새로운 서비스 제공모델 개발 및 확산
  - \* (서비스 예시) 지역기반 고령기 통합돌봄 서비스 : 돌봄(자활기업) + 의료서비스 (의료사협) + 장례(장례기업)
- (추진과제) 조직간·서비스간 연계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조직간 연계)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협력(컨소시엄)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 추진('22년까지 30개 목표)
    - 의료사협, 돌봄 등 사회적경제조직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지속가능한 모델 개발·확산

▶ (사례) 대전 대덕구 경증치매 어르신 웰라이프 돌봄 서비스

- (컨소시엄) 민들레의료사협(방문건강관리서비스) + 대덕돌봄협동조합(일상생활지원서비스) + 행복한밥상(건강먹거리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서비스) 경증치매노인 대상 방문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건강 먹거리지원 등

- (서비스간 연계) 주거-돌봄 서비스 연계, 고령자복지주택\* 내 프로그램 운영주체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역량을 지닌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유도

\* 저층부에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 상층부 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25년까지 1만호 공급계획,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2.0('20.3))



## ② 돌봄(농촌형) : 농협의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 확대

- (추진배경) 과소 농촌지역 증가로 시장에 의한 사회서비스 공급 실패, 원거리 거주로 인한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존재

→ 지역농협의 근접성 및 자원을 활용한 협력 모델 발굴 필요

\* 인구 2천명 미만 읍면 비율 ('00) 11.9% → ('15) 22.9% → ('19) 22.6%

- (추진방향) '방문요양-주간보호-요양원', 점진적 3단계 모델 발굴·확산으로 농촌 지역 맞춤형 돌봄 사업 추진

- 방문요양 모델을 기초로, 주간보호 시설 추가 등 사업확대

▶ (사례) 경북 상주 모서농협 : '17년 방문요양 시작 → '20년 주간보호 서비스 추가

\* 주간보호 정원 41명(현원 30명), 방문요양 27명

\* (前) 상주시내 시설까지 1~2시간 소요+교통비 3만원 → (後) 농협 시설까지 30분 이내 도착 + 교통비 자부담 해소

- 농협과 지자체 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상생 도모

▶ (사례) 충남 아산 인주농협(지자체 협력사업 모델) : 지역혁신모델 구축 사업으로

충청남도과 아산시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요양원 설립(정원 49명, 현원 41명)

- 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농촌 면·도서지역 등 돌봄 취약 지역 및 인구소멸 위기 지역 우선 추진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추진과제) 방문요양을 50개 농협으로 확대(도별 6~7개소 사업)하고, 장기적으로 입지가 불리한 3~4개 면 당 1개소 신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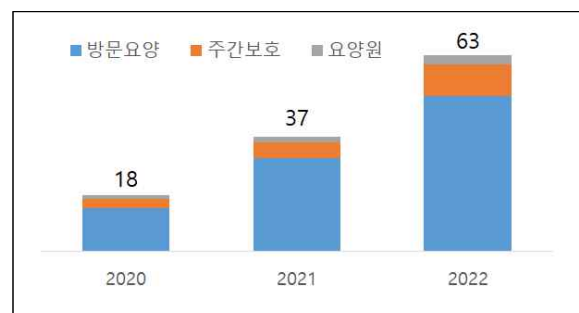
\* 방문요양/주간보호/요양원(누적) : ('20)14/3/1 → ('21)30/5/2 → ('22) 50/10/3개소

-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농촌형 생활 SOC 복합센터에 주간보호 시설 입주 허용 및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제공 등 협력 지원(농식품부)

- 지역별 돌봄수요 조사·매칭, 시설 설립 지원 등 협조(복지부·지자체)

- 농협의 직접 사업이 곤란한 경우, 농업·농촌 관련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우대 상품 개발·보급 검토

<농촌지역 농협 요양기관 설치 확대>





### ③ **건강의료서비스 : 의료사협을 통한 종합적·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필요성) 환자관리(일상적인 돌봄의 관계망 형성)\*, 환자교육, 건강소모임, 중장년층 자조모임 운영 등 정서적 측면 관리 가능

\* 코로나 시대 자살율(고독사)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안으로 부상

- (추진방향) 의료사협의 지역사회 건강 관련 사업 참여 유도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 맞춤형·종합적 건강관리서비스, 의료서비스 제공 등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 확대

- (추진과제)

- (규제완화) 탄력적 규제 적용으로 필요자금확보 및 의료인 참여 확대 촉진

- 시행령 단서조항을 근거로 출자금 한도 예외 승인절차 운영
- 의료사협 이사로 개원의 참여 제한적 허용(비상근, 무보수, 1인당 1개 사협)

- (참여확대)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건강증진사업\* 에 참여확대 적극 유도

\* (예시흥희망의료사협: 취약계층 주치의 사업,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사업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

\*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16개 지역 중 4개지역에서 의료사협 참여중('19)

- (교육·홍보) 의료인(연간 보수교육) 및 예비의료인 대상 교육·홍보 강화

- (성과연구) 의료사협의 진료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단위 성과 평가 등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를 통해 우수모델로 개발

#### ▶ (사례 1) 안산 의료사회적협동조합

- 2000년 발족, 조합원 6천세대, 의원, 한의원, 치과, 요양원, 장기요양센터 운영중
- 지역통합돌봄 사업 시작 전부터 의료와 돌봄의 통합서비스 실시

\* 건강리더(사전교육 이수후 질병예방 활동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의 주기적인 어르신 방문 프로그램 운영

#### ▶ (사례 2) 민들레 의료사회적협동조합

- 1차 의료기관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을 조합원 모두 이용 가능
- 가족중 한명만 조합원이어도 서비스 이용 가능 -> 가족단위 사회서비스 제공

\* 의원, 한의원, 치과, 건강검진센터, 심리상담센터 운영



#### 4 가사지원 : 가사서비스의 新사회서비스化

- (추진배경)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가사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 중심으로 운영 중

▶ (민간) 마포 올림두레 생협

- 생활응원단이란 이름으로 저비용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요양등급 외 노인 또는 일시적으로 아이돌봄 필요한 경우) / 시간당 12,000원~13,000원
- 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과 연계하면 시너지 가능 / 생협 등의 활용으로 新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가능

▶ (지자체) 서울시 돌봄 SOS 센터

- '19년 5개 자치구 시범실시(이동 지원, 주거 편의, 식사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시작 / 총 2만건 돌봄 서비스 제공 + 높은 서비스 만족도(평균 91점)

→ '20년 25개구,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 사회복지직 또는 간호직 공무원을 '돌봄매니저'로 배치 / 서비스 이용대상도 만50세 이상으로 확대

- (추진방향) 가사서비스 공식화 법안\* 발의를 계기로 가사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가사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20.7.7)

\*\*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분야('19년 종사자 16.8만명/ 임금총액 2.2조원) (노동연구원)

- (추진과제) 가사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및 공적영역 서비스 모델 개발

- (공급측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향상\* 도모

\*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기관은 사업주로서 4대 보험 가입 등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수요측면) 가사서비스를 새로운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확장, 가사서비스 현황분석 등 제공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델 개발

\*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5 아동 돌봄 : 돌봄 분야 주민 및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활성화

- (필요성) 아동돌봄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로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 수요가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확대
- (추진방향) 기존 서비스제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 전환지원, 서비스 위탁 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신규 진입 지원
  - \*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 기회 제공 및 프로그램 내실화, 지속가능성 확보
- (추진과제) 돌봄 제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14개소('19년) → 300개소로 확대('22년)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또는 전환 예정 센터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에서 전환한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과정 및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컨설팅 지원 등 내실화
    - \* 부모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 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2005년~)(150개소('20.11.))
  - (학교) 지역사회(사회적기업) 연계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발굴·확산
    - \* (우수사례) 충북 옥천소재 사회적기업인 '고래실'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각종 교육체험을 방과후, 토요일무일에 운영
  - (돌봄공동체)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 지역의 틈새 돌봄 활동 실시 및 향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
    - \* 2020년부터 돌봄공동체 지원 시범사업 실시('20년 10개 지역→'21년 12개지역)

### ▶ 숲속작은도서관(광주 남구)

- 아파트 빈공간을 이용하여 자원봉사, 재능기부, 후원, 물품기증을 통해 돌봄 공간 조성
- 지역상황에 맞는 다양한 돌봄 제공, 경력단절 선생님들이 유아 틈새돌봄, 초등방과후 돌봄, 점심제공, 야간돌봄 등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전문 도서관으로 발전

### ▶ 개개맘(서울구로구)

- 6개 다양한 배경의 맞벌이 가정(다문화, 장애인, 대가족 등)으로 결성, 돌봄공동체 운영
- 육아품앗이를 통한 육아부담 경감, 다문화 가족 참여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학습, 혼합연령 육아를 통해 사회성 증진, 지역 내 교류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 등



## ⑥ 장애인 돌봄 :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쏠단계에 걸친 지원

- (필요성) 장애인 활동보조 등 공적 돌봄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애특성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
- (추진방향) 장애인 돌봄 서비스 공급체계에 장애인·부모 등 참여를 활성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추진과제) 사회적경제조직의 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쏠단계에 걸친 지원으로 서비스 공급 참여 활성화
  - (수요자 참여 확대) 지역발달장애인센터 등을 활용한 공간 지원,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조직 전환 유도

※ (참고사례) 파파스윌(Papaswill) : 발달장애인 부모 자조모임에서 시작하여 발달 장애인 부모, 특수교사,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가들과 함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주요사업으로 직업재활사업, 당사자 자조모임지원 등 수행

- (사회적경제조직의 서비스 공급)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선 지정 대상에 추가 검토
  - \*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서비스 예시) 증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유치원 설치·운영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구성(부모 참여)
- (홍보 및 지원 강화) 장애인 돌봄 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정차, 시설 설치·운영에 요구되는 법적사항, 사업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 강화
- (사후지원 제공) 사회적경제조직이 주사업을 개시한 이후 운영상황 확인을 통한 사후지원으로 모범적 사업 수행 및 안정적 정착 유도



## Ⅶ. 과제별 추진 일정

추진과제	관련 부처	추진 시기
<b>I. 추진방안</b>		
<b>I - 1.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b>		
1. 기존 정책과의 연계 강화	복지부	'21.1~
2. 자활-사회적경제 간 연계 강화	복지부	'21.1~
3. 주민참여형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복지부	'20.~
4. 농어촌 지역 특수성 반영을 위한 농촌공동체 기반 사회 서비스 제공	농림부, 복지부, 고용부	'21.1~
<b>I - 2.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지원 및 연계 확대</b>		
1. 사회서비스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복지부	'20.~
2.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전환 지원	복지부	'21.1~
3. 사회서비스 분야 자원 연계·협력 확대	복지부	'21.1~
4.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평가체계 개선	복지부	'22~
<b>I - 3. 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구축</b>		
1.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 과정 참여 확대	복지부	'21.1~
2.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기재부, 복지부	'21.7~
3. 인재양성 및 인력조달	고용부, 복지부	'22~
4. 소셜벤처 등 IT 활용 사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중기부	'22~
<b>Ⅱ. 사회서비스 분야별 진출 방안(5대 시그니처사업 추진)</b>		
<b>Ⅱ-1. 돌봄(도시형) : 사회적경제형·융합형 노인돌봄사업 추진</b>		
1.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협력(컨소시엄) 확대	복지부	'21.1~
2. 고령자 주택 활용, 서비스와 공간 연계	국토부, 복지부	'21.1~



추진과제	관련 부처	추진 시기
<b>II-2. 돌봄(농촌형) : 농협의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 확대</b>		
1. 농협의 자원을 활용한 요양시설 설치	농식품부 (농협)	'21.1~
2.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에 주간보호 시설 입주 허용 및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 협력 지원	농식품부	'21.1~
3. 지역별 돌봄수요 조사·매칭, 시설 설립 지원 등 협조	복지부, 지자체	'21.1~
4. 농업·농촌 관련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우대 상품 개발·보급 검토	농식품부	'21.1~
<b>II-3. 건강의료서비스 : 의료사협을 통한 종합적·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b>		
1. 규제정비를 통해 필요자금확보 및 의료인 참여 확대 촉진	복지부, 기재부	'21.1~
2.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건강증진사업 참여확대	복지부	'21.1~
3.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대상 교육·홍보 강화	복지부	'21.1~
4. 의료사협의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 및 우수모델 개발	복지부	'21.6~
<b>II-4. 가사지원 : 가사서비스의 신사회서비스화</b>		
1. 가사서비스 종사자 근로조건 향상	고용부	'21.1~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델 개발	복지부	'21.1~
<b>II-5. 아동 돌봄 : 신규 사회적경제조직 양성, 내실화</b>		
1.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확대	복지부	'21.1~
2.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컨설팅 지원 등 내실화	복지부	'20~
3. 사회적기업 연계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발굴·확산	교육부	'20~
4.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활동 지원	여가부	'20~
<b>II-6. 장애인 돌봄 :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쏠단계에 걸친 지원</b>		
1.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조직 전환	복지부	'21~
2. 사회적협동조합 서비스 공급 참여	복지부	'21.3~
3. 서비스 공급체계 진입 홍보 및 지원 강화	복지부	'21~
4. 서비스 공급 참여 사후지원 제공	복지부	'21~